연구보고서 2009-16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

A study on indicators development and level measures of social crisis in Korea

김승권 · 장경섭 · 김호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9-16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

발 행 일 2009년 12월
저 자 김 승 권 외
발 행 인 김 용 하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 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 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 쇄 처 예원기획
가 격 13,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978-89-8187-591-6 93330

머리말

1960년대 이후의 정부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 제일주의 정책을 통해 나타난 압축적 근대화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렇지만 경제적 변화에 못지않게 동시에 다양한 사회갈등,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잠재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인의 삶은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불안을 동시에 노정시키며 극도로 복잡하고 가변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초래되었고, 그 충격이 완전히 가시기 전에 미국발 금융위기의 후폭풍으로 인하여 세계경제와 마찬가지로 한국경제도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위기는 사회위기로 연계됨으로서 고유한 사회위기 요인에 더하여 더욱 심각한 사회위기를 유발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한국사회는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살고 있으면서 부존자원이 없는 격심한 경쟁사회이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사회'가 도래되었고, 그 충격은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아울러 단기간의 급속한 산업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한 계층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세대별 갈등, 남녀 간 갈등, 노사갈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와 같은 다양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수행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사회의 위기를 관리하고 위기수준을 저하시키기 위한 노력의 시작이 될 것이다. 본 보고서의 1부는 서론 및 이론적 논의, 2부는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3부는 종합논의와 학문적 및 정책적 제언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당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의 책임으로 원내·외 연구진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진의 구체적 역할분담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김승권)
제2장 사회위기의 개념 및 특성과 담론 (김승권)
제3장 사회위기 관련 선행연구 (김승권)
제4장 한국사회의 압축적 근대성과 사회위기의 구조적 복합성 (장경섭)
제5장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 (김승권)
제6장 한국의 사회위기지표별 위기수준 측정 (김승권·김연우)
제7장 한국의 사회위기 영역 및 전체 위기수준 측정 (김승권·김연우)
제8장 종합논의 (김승권)
제9장 한국의 사회위기 관리를 위한 제언 (김승권·김호기)

본 연구의 「사회위기 영역 및 지표개발」을 위해 추진된 델파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관련 전문가 및 일반국민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본 연구의 외부 검토자인 이화여자대학교 조성남 교수, 성균관대학교 박승희 교수, 강남대학교 이성용 교수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며, 원내 검토자인 당원의 장영식 연구위원과 노대명 연구위원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또한 연구보조원으로서 본 연구에 참여한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연우 선생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한국사회가 보다 안정되고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로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그럼으로써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목 차

Contents

Abstract ····· 1

요약 ····· 3

[제1부: 서론 및 이론적 논의]

제1장 서론 ····· 19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2

제3절 연구의 제한점 ····· 34

제2장 사회위기의 개념 및 특성과 담론 ····· 39

제1절 사회위기의 개념 ····· 39

제2절 위기의 유형과 관리 ····· 43

제3절 사회위기관련 담론 ····· 45

제4절 사회위기의 개념 및 특성과 담론의 시사점 ····· 48

제3장 사회위기 관련 선행연구 ····· 53

제1절 사회주의체제 위기수준 측정 ····· 53

제2절 한국의 사회위기 관련 연구 ····· 57

제3절 사회위기 관련 각종 사회지표 ····· 62

제4절 사회위기 관련 선행연구의 시사점 ····· 71

제4장 한국사회의 압축적 근대성과 사회위기의 구조적 복합성 77

제1절 개요 ····· 77

제2절 압축적 근대성과 위기사회 ····· 78
제3절 이중적 위기사회로서의 한국 ····· 88
제4절 시사점: 사회위기 지표 개발을 위한 논의 ····· 95

[제2부: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제5장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 ····· 109
제1절 사회위기 지표(안) 개발 ····· 109
제2절 「사회위기 영역(안)」의 우선순위 및 영향도 ····· 111
제3절 「사회위기 지표(안)」의 우선순위 및 영향도 ····· 115
제4절 한국의 사회위기 영역 및 지표 확정 ····· 142

제6장 한국의 사회위기지표별 위기수준 ····· 153
제1절 고용영역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 153
제2절 교육영역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 170
제3절 주거영역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 183
제4절 인구·가족영역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 198
제5절 복지영역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 213
제6절 건강·안전영역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 232
제7절 사회갈등·문화영역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 268
제8절 불평등영역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 278
제9절 경제일반영역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 301
제10절 정치일반영역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 335

제7장 한국의 사회위기 영역 및 전체의 위기수준 측정 ····· 355
제1절 사회위기 영역 및 지표의 가중치 산출 ····· 355
제2절 위기영역별 사회위기 수준 ····· 362
제3절 한국의 사회위기 수준 ····· 388

[제3부: 종합논의와 제언]

제8장 종합논의 ····· 395
제1절 사회위기 영역 및 지표 개발의 논의 ····· 395
제2절 사회위기 수준 변화의 논의 ····· 398

제9장 한국의 사회위기 관리방안 ····· 411
제1절 학문적 제언 ····· 411
제2절 정책적 제언 ····· 415

참고문헌 ····· 435

부록 ····· 443

표 목차

〈표 1- 1〉 본 연구에 활용된 각종 통계자료 ·····24
〈표 1- 2〉 사회위기 측정의 세 단계 ·····25
〈표 1- 3〉 변화추세에 대한 위기점수 부여 방법 ·····28
〈표 1- 4〉 변화 증감폭에 대한 위기점수 부여 방법 ·····29
〈표 2- 1〉 체계별 위기분류 ·····44
〈표 3- 1〉 브레진스키의 사회주의체제 위기수준 측정지표 ·····54
〈표 3- 2〉 김성철 외의 북한 사회주의체제 위기수준 측정지표: RINU 지표 55
〈표 3- 3〉 RINU 지표에 준거한 분야 및 지표별 북한의 위기지수 추이 ·····56
〈표 3- 4〉 사회위기수준 측정을 위한 주요 분야와 지표 ·····58
〈표 3- 5〉 사회불안정 지표의 주요 분야와 지표 ·····61
〈표 3- 6〉 사회적 질 지표 활용에 의한 실태조사 문항 ·····70
〈표 5- 1〉 한국 사회위기 영역(안) 및 지표(안) ·····110
〈표 5- 2〉 사회위기 영역(안)의 우선순위 분포 ·····111
〈표 5- 3〉 사회위기 영역(안)의 영향도 분포 ·····112
〈표 5- 4〉 사회위기 영역(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113
〈표 5- 5〉 한국인의 특성별 사회위기 영역(안)의 평균 우선순위 ·····114
〈표 5- 6〉 한국인의 특성별 사회위기 영역(안)의 평균 영향도 ·····114
〈표 5- 7〉 고용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115
〈표 5- 8〉 고용영역 위기지표(안)의 영향도 분포 ·····116
〈표 5- 9〉 고용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116
〈표 5-10〉 한국인의 특성별 고용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117
〈표 5-11〉 한국인의 특성별 고용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영향도 ·····117
〈표 5-12〉 교육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118
〈표 5-13〉 교육영역 위기지표(안)의 영향도 분포 ·····118
〈표 5-14〉 교육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119
〈표 5-15〉 한국인의 특성별 교육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120
〈표 5-16〉 한국인의 특성별 교육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영향도 ·····120

〈표 5-17〉 주거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121
〈표 5-18〉 주거영역 위기지표(안)의 영향도 분포 ·····121
〈표 5-19〉 주거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122
〈표 5-20〉 한국인의 특성별 주거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122
〈표 5-21〉 한국인의 특성별 주거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영향도 ·····123
〈표 5-22〉 인구·가족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123
〈표 5-23〉 인구·가족영역 위기지표(안)의 영향도 분포 ·····124
〈표 5-24〉 인구·가족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124
〈표 5-25〉 한국인의 특성별 인구·가족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125
〈표 5-26〉 한국인의 특성별 인구·가족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영향도 ·125
〈표 5-27〉 복지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126
〈표 5-28〉 복지영역 위기지표(안)의 영향도 분포 ·····126
〈표 5-29〉 복지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127
〈표 5-30〉 한국인의 특성별 복지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127
〈표 5-31〉 한국인의 특성별 복지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영향도 ·····128
〈표 5-32〉 건강·안전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128
〈표 5-33〉 건강·안전영역 위기지표(안)의 영향도 분포 ·····129
〈표 5-34〉 건강·안전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129
〈표 5-35〉 한국인의 특성별 건강·안전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130
〈표 5-36〉 한국인의 특성별 건강·안전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영향도 ·131
〈표 5-37〉 사회갈등·문화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131
〈표 5-38〉 사회갈등·문화영역 위기지표(안)의 영향도 분포 ·····132
〈표 5-39〉 사회갈등·문화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132
〈표 5-40〉 한국인의 특성별 사회갈등·문화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133
〈표 5-41〉 한국인의 특성별 사회갈등·문화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영향도 ····133
〈표 5-42〉 불평등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134
〈표 5-43〉 불평등영역 위기지표(안)의 영향도 분포 ·····134
〈표 5-44〉 불평등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135

〈표 5-45〉 한국인의 특성별 불평등 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136
〈표 5-46〉 한국인의 특성별 불평등 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영향도 ····136
〈표 5-47〉 경제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137
〈표 5-48〉 경제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영향도 분포 ·····137
〈표 5-49〉 경제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138
〈표 5-50〉 한국인의 특성별 경제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139
〈표 5-51〉 한국인의 특성별 경제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영향도 ···139
〈표 5-52〉 정치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140
〈표 5-53〉 정치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영향도 분포 ·····140
〈표 5-54〉 정치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141
〈표 5-55〉 한국인의 특성별 정치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141
〈표 5-56〉 한국인의 특성별 정치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영향도 ···142
〈표 5-57〉 사회위기영역의 영향도 ·····143
〈표 5-58〉 사회위기지표의 영향도 ·····144
〈표 5-59〉 사회위기영역에 대한 보충의견 ·····146
〈표 5-60〉 사회위기지표에 대한 주요 보충의견 ·····148
〈표 5-61〉 한국의 사회위기지표 최종안 ·····149
〈표 6- 1〉 실업률의 추세값 산출 ·····155
〈표 6- 2〉 실업률의 증감폭 값 ·····156
〈표 6- 3〉 실업률의 위기점수 ·····157
〈표 6- 4〉 청년실업률의 추세값 산출 ·····159
〈표 6- 5〉 청년실업률의 증감폭 값 ·····160
〈표 6- 6〉 청년실업률의 위기점수 ·····161
〈표 6- 7〉 근로빈곤층의 추세값 산출 ·····164
〈표 6- 8〉 근로빈곤층의 증감폭 값 ·····165
〈표 6- 9〉 근로빈곤층의 위기점수 ·····165
〈표 6-10〉 비정규직 비율의 추세값 산출 ·····168
〈표 6-11〉 비정규직 비율의 증감폭 값 ·····169

〈표 6-12〉 비정규직 비율의 위기점수 ····· 170
〈표 6-13〉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의 추세값 산출 ····· 173
〈표 6-14〉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의 증감폭 값 ····· 174
〈표 6-15〉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의 위기점수 ····· 174
〈표 6-16〉 중고등학교 중퇴비율의 추세값 산출 ····· 177
〈표 6-17〉 중고등학교 중퇴비율의 증감폭 값 ····· 178
〈표 6-18〉 중고등학교 중퇴비율의 위기점수 ····· 178
〈표 6-19〉 학생범죄 인원의 추세값 산출 ····· 181
〈표 6-20〉 학생범죄 인원의 증감폭 값 ····· 182
〈표 6-21〉 학생범죄 인원의 위기점수 ····· 183
〈표 6-22〉 도시가구 주거비 지출률의 추세값 산출 ····· 186
〈표 6-23〉 도시가구 주거비 지출률의 증감폭 값 ····· 187
〈표 6-24〉 도시가구 주거비 지출률의 위기점수 ····· 187
〈표 6-25〉 농촌가구 주거비 지출률의 추세값 산출 ····· 188
〈표 6-26〉 농촌가구 주거비 지출률의 증감폭 값 ····· 189
〈표 6-27〉 농촌가구 주거비 지출률의 위기점수 ····· 190
〈표 6-28〉 전체가구 주거비 지출률의 위기점수 ····· 191
〈표 6-29〉 자가 보유율 위기점수 ····· 193
〈표 6-30〉 전세비 증감률의 추세값 산출 ····· 196
〈표 6-31〉 전세비 증감률의 증감폭 값 ····· 197
〈표 6-32〉 전세비 증감률의 위기점수 ····· 197
〈표 6-33〉 총부양비의 추세값 산출 ····· 200
〈표 6-34〉 총부양비의 증감폭 값 ····· 201
〈표 6-35〉 총부양비의 위기점수 ····· 202
〈표 6-36〉 고령화지수의 추세값 산출 ····· 205
〈표 6-37〉 고령화지수의 증감폭 값 ····· 206
〈표 6-38〉 고령화지수의 위기점수 ····· 206
〈표 6-39〉 수도권 인구집중도의 추세값 산출 ····· 209

〈표 6-40〉 수도권 인구집중도의 증감폭 값 ····· 210
〈표 6-41〉 수도권 인구집중도의 위기점수 ····· 211
〈표 6-42〉 출산율의 위기점수 ····· 213
〈표 6-43〉 위기수준의 추세값 산출 ····· 216
〈표 6-44〉 노후대비율의 증감폭 값 ····· 217
〈표 6-45〉 노후대비율의 위기점수 ····· 218
〈표 6-46〉 연금 수혜비율의 추세값 산출 ····· 221
〈표 6-47〉 연금수혜비율의 증감폭 값 ····· 222
〈표 6-48〉 연금수혜비율의 위기점수 ····· 222
〈표 6-49〉 요보호아동수의 추세값 산출 ····· 226
〈표 6-50〉 요보호아동수의 증감폭 값 ····· 227
〈표 6-51〉 요보호아동수의 위기점수 ····· 227
〈표 6-52〉 장애인 출현자수의 추세값 산출 ····· 230
〈표 6-53〉 장애인 출현의 증감폭 값 ····· 231
〈표 6-54〉 장애인 출현의 위기점수 ····· 232
〈표 6-55〉 평균수명의 추세값 산출 ····· 234
〈표 6-56〉 평균수명의 증감폭 값 ····· 235
〈표 6-57〉 평균수명의 위기점수 ····· 236
〈표 6-58〉 자살률의 추세값 산출 ····· 239
〈표 6-59〉 자살률의 증감폭 값 ····· 240
〈표 6-60〉 자살률의 위기점수 ····· 240
〈표 6-61〉 청소년 자살률의 추세값 산출 ····· 245
〈표 6-62〉 청소년 자살률의 증감폭 값 ····· 246
〈표 6-63〉 청소년 자살률의 위기점수 ····· 246
〈표 6-64〉 노인 자살률의 추세값 산출 ····· 247
〈표 6-65〉 노인 자살률의 증감폭 값 ····· 248
〈표 6-66〉 노인 자살률의 위기점수 ····· 248
〈표 6-67〉 청소년·노인 자살률의 평균 위기점수 ····· 249

〈표 6-68〉 부정식품 적발률의 추세값 산출 ····· 252
〈표 6-69〉 부정식품 적합률의 증감폭 값 ····· 253
〈표 6-70〉 부정식품 적발률의 위기점수 ····· 253
〈표 6-71〉 법정 전염병의 추세값 산출 ····· 257
〈표 6-72〉 법정 전염병의 증감폭 값 ····· 258
〈표 6-73〉 법정 전염병의 위기점수 ····· 258
〈표 6-74〉 교통사고 사망률의 추세값 산출 ····· 261
〈표 6-75〉 교통사고 사망률의 증감폭 값 ····· 262
〈표 6-76〉 교통사고 사망률의 위기점수 ····· 263
〈표 6-77〉 강력범죄 발생건수의 추세값 산출 ····· 266
〈표 6-78〉 강력범죄 발생건수의 증감폭 값 ····· 267
〈표 6-79〉 강력범죄 발생건수의 위기점수 ····· 267
〈표 6-80〉 노사분규 발생건수의 추세값 산출 ····· 271
〈표 6-81〉 노사분규 발생건수의 증감폭 값 ····· 272
〈표 6-82〉 노사분규 발생건수의 위기점수 ····· 272
〈표 6-83〉 파업 손실일수의 추세값 산출 ····· 276
〈표 6-84〉 파업 손실일수의 증감폭 값 ····· 277
〈표 6-85〉 파업 손실일수의 위기점수 ····· 277
〈표 6-86〉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의 추세값 산출 ····· 281
〈표 6-87〉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의 증감폭 값 ····· 282
〈표 6-88〉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의 위기점수 ····· 282
〈표 6-89〉 남녀 임금격차의 추세값 산출 ····· 286
〈표 6-90〉 남녀 임금격차의 증감폭 값 ····· 287
〈표 6-91〉 남녀 임금격차의 위기점수 ····· 287
〈표 6-92〉 소득불평등의 추세값 산출 ····· 290
〈표 6-93〉 소득불평등의 증감폭 값 ····· 291
〈표 6-94〉 소득불평등의 위기점수 ····· 292
〈표 6-95〉 중산층 귀속의식의 추세값 산출 ····· 295

〈표 6- 96〉 중산층 귀속의식의 증감폭 값 ····· 296
〈표 6- 97〉 중산층 귀속의식의 위기점수 ····· 296
〈표 6- 98〉 지역간 소득격차의 추세값 산출 ····· 299
〈표 6- 99〉 지역간 소득격차의 증감폭 값 ····· 300
〈표 6-100〉 지역간 소득격차의 위기점수 ····· 300
〈표 6-101〉 원유가의 추세값 산출 ····· 303
〈표 6-102〉 원유가의 증감폭 값 ····· 304
〈표 6-103〉 원유가의 위기점수 ····· 304
〈표 6-104〉 소비자물가지수의 추세값 산출 ····· 307
〈표 6-105〉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감폭 값 ····· 308
〈표 6-106〉 소비자물가지수의 위기점수 ····· 309
〈표 6-107〉 신용불량자수의 추세값 산출 ····· 312
〈표 6-108〉 신용불량자수의 증감폭 값 ····· 313
〈표 6-109〉 신용불량자수의 위기점수 ····· 313
〈표 6-110〉 경제성장률의 추세값 산출 ····· 317
〈표 6-111〉 경제성장률의 증감폭 값 ····· 318
〈표 6-112〉 경제성장률의 위기점수 ····· 318
〈표 6-113〉 환율의 위기점수 ····· 321
〈표 6-114〉 외채액 추세값 산출 ····· 324
〈표 6-115〉 외채액의 증감폭 값 ····· 325
〈표 6-116〉 외채액의 위기점수 ····· 326
〈표 6-117〉 개인부채액의 추세값 산출 ····· 329
〈표 6-118〉 개인부채액의 증감폭 값 ····· 330
〈표 6-119〉 개인부채액의 위기점수 ····· 330
〈표 6-120〉 기업부채액의 추세값 산출 ····· 333
〈표 6-121〉 기업부채액의 증감폭 값 ····· 334
〈표 6-122〉 기업부채액 위기점수 ····· 334
〈표 6-123〉 투표율의 추세값 산출 ····· 337

〈표 6-124〉 투표율의 증감폭 값 ····· 338
〈표 6-125〉 투표율의 위기점수 ····· 338
〈표 6-126〉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의 추세값 산출 ····· 342
〈표 6-127〉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의 증감폭 값 ····· 343
〈표 6-128〉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의 위기점수 ····· 343
〈표 6-129〉 부패인식지수의 추세값 산출 ····· 346
〈표 6-130〉 부패인식지수의 증감폭 값 ····· 347
〈표 6-131〉 부패인식지수의 위기점수 ····· 347
〈표 6-132〉 정부신뢰도의 추세값 산출 ····· 350
〈표 6-133〉 정부신뢰도의 증감폭 값 ····· 351
〈표 6-134〉 정부신뢰도의 위기점수 ····· 351
〈표 7- 1〉 고용영역의 영향도 및 가중치 ····· 356
〈표 7- 2〉 교육영역의 영향도 및 가중치 ····· 356
〈표 7- 3〉 주거영역의 영향도 및 가중치 ····· 357
〈표 7- 4〉 인구·가족영역의 영향도 및 가중치 ····· 357
〈표 7- 5〉 복지영역의 영향도 및 가중치 ····· 358
〈표 7- 6〉 건강·안전영역의 영향도 및 가중치 ····· 359
〈표 7- 7〉 사회갈등의 영향도 및 가중치 ····· 359
〈표 7- 8〉 불평등영역의 영향도 및 가중치 ····· 360
〈표 7- 9〉 경제일반영역의 영향도 및 가중치 ····· 360
〈표 7- 10〉 정치일반영역의 영향도 및 가중치 ····· 361
〈표 7- 11〉 위기영역별 영향도 및 가중치 ····· 362
〈표 7- 12〉 고용영역 사회위기 지표의 위기수준 및 가중치 ····· 363
〈표 7- 13〉 고용영역의 사회위기수준 ····· 364
〈표 7- 14〉 교육영역 사회위기 지표의 위기수준 및 가중치 ····· 366
〈표 7- 15〉 교육영역의 사회위기수준 ····· 367
〈표 7- 16〉 주거영역 사회위기 지표의 위기수준 및 가중치 ····· 368
〈표 7- 17〉 주거영역의 사회위기수준 ····· 369

〈표 7-18〉 인구·가족영역 사회위기 지표의 위기수준 및 가중치 ·····370
〈표 7-19〉 인구·가족영역의 사회위기수준 ·····371
〈표 7-20〉 복지영역 사회위기 지표의 위기수준 및 가중치 ·····373
〈표 7-21〉 복지영역의 사회위기수준 ·····374
〈표 7-22〉 건강·안전영역 사회위기 지표의 위기수준 및 가중치 ·····376
〈표 7-23〉 건강·안전영역의 사회위기수준 ·····377
〈표 7-24〉 사회갈등·문화영역 사회위기 지표의 위기수준 및 가중치 ·····378
〈표 7-25〉 사회갈등·문화영역의 사회위기수준 ·····379
〈표 7-26〉 불평등영역 사회위기 지표의 위기수준 및 가중치 ·····381
〈표 7-27〉 불평등영역의 사회위기수준 ·····381
〈표 7-28〉 경제일반영역 사회위기 지표의 위기수준 및 가중치 ·····383
〈표 7-29〉 경제일반영역의 사회위기수준 ·····384
〈표 7-30〉 정치일반영역 사회위기 지표의 위기수준 및 가중치 ·····386
〈표 7-31〉 정치일반영역의 사회위기수준 ·····387
〈표 7-32〉 영역별 사회위기 지표의 위기수준 및 가중치 ·····389
〈표 7-33〉 가중치 적용후 사회위기영역의 위기수준 ·····390
〈표 8- 1〉 사회위기 영역(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396
〈표 8- 2〉 사회위기 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397
〈표 8- 3〉 한국의 사회위기지표 최종안 ·····398
〈표 8- 4〉 지표별 위기수준 변화추이 ·····400
〈표 8- 5〉 지표의 가중치 종합 ·····401
〈표 8- 6〉 영역별 위기수준 변화추이 ·····402
〈표 8- 7〉 영역별 위기수준 변화추이의 백분율 환산 ·····403
〈표 8- 8〉 영역별 고(高)위기 지표(2008년 기준) ·····405
〈표 8- 9〉 영역의 가중치 종합 ·····406
〈표 8-10〉 한국의 사회위기수준 변화추이 ·····406

그림 목차

[그림 1- 1] 연구의 흐름도 ····· 34
[그림 3- 1] 한국 사회의 위기수준 측정을 위한 사회위기지표 개발과정 ····· 58
[그림 3- 2] 사회위기수준 측정단계 ····· 59
[그림 3- 3] 삶의 질 결정모형 ····· 66
[그림 3- 4] 사회적 질 모델 ····· 69
[그림 4- 1]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의 다섯 차원 · 79
[그림 6- 1] 실업률 변화 추이: 1990~2008년 ····· 154
[그림 6- 2] 청년실업률 변화추이: 1990~2008년 ····· 158
[그림 6- 3] 근로빈곤자수 변화추이: 1990~2008년 ····· 162
[그림 6- 4] 비정규직 비율의 변화추이: 1990~2008년 ····· 167
[그림 6- 5]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 변화추이: 1990~2008년 ····· 171
[그림 6- 6]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변화추이: 1990~2008년 ····· 175
[그림 6- 7] 학생범죄인원 변화추이: 1990~2008년 ····· 180
[그림 6- 8] 주거비 지출률 변화추이: 1990~2008년 ····· 184
[그림 6- 9] 자가 보유율 변화추이: 1990~2008년 ····· 192
[그림 6-10] 전세비 증감률 변화추이: 1990~2008년 ····· 194
[그림 6-11] 총부양비 변화추이: 1990~2008년 ····· 198
[그림 6-12] 고령화지수 변화추이: 1990~2008년 ····· 203
[그림 6-13] 수도권 인구 집중도 변화추이: 1990~2008년 ····· 207
[그림 6-14] 출산율 변화추이: 1990~2008년 ····· 212
[그림 6-15] 노후대비율 변화추이: 1988~2008년 ····· 214
[그림 6-16] 연금수혜비율 변화추이: 1990~2008년 ····· 219
[그림 6-17] 요보호아동수 변화추이: 1990~2008년 ····· 224
[그림 6-18] 장애인 출현자수 변화추이: 1990~2008년 ····· 228
[그림 6-19] 평균수명 변화추이: 1990~2008년 ····· 233
[그림 6-20] 자살률 변화추이: 1990~2008년 ····· 237
[그림 6-21] 청소년 자살률 변화추이: 1990~2008년 ····· 242

[그림 6-22] 노인 자살률 변화추이: 1990~2008년 ·····242
[그림 6-23] 부정식품 적발률 변화추이: 1990~2008년 ·····250
[그림 6-24]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 변화추이: 1990~2008년 ·····255
[그림 6-25] 교통사고 사망률 변화추이: 1990~2008년 ·····259
[그림 6-26] 강력범죄 변화추이: 1990~2008년 ·····264
[그림 6-27] 노사분규 발생건수 변화추이: 1990~2008년 ·····269
[그림 6-28] 파업 손실일수 변화추이: 1990~2008년 ·····274
[그림 6-29]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 변화추이: 1990~2008년 ·····279
[그림 6-30] 남녀 임금격차 변화추이: 1990~2008년 ·····284
[그림 6-31] 소득불평등 변화추이: 1990~2008년 ·····288
[그림 6-32]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변화추이: 1994~2009년 ·····293
[그림 6-33] 지역간 소득격차 변화추이: 1997~2008년 ·····297
[그림 6-34] 원유가 변화추이: 1990~2008년 ·····301
[그림 6-35]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 1990~2008년 ·····305
[그림 6-36] 신용불량자수 변화추이: 1994~2008년 ·····310
[그림 6-37] 경제성장률 변화추이: 1990~2008년 ·····315
[그림 6-38] 환율 변화추이: 1990~2008년 ·····319
[그림 6-39] 외채액 변화추이: 1990~2008년 ·····322
[그림 6-40] 개인부채액 변화추이: 1990~2008년 ·····327
[그림 6-41] 기업부채액 변화추이: 1990~2008년 ·····331
[그림 6-42] 투표율 변화추이: 1988~2008년 ·····335
[그림 6-43]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변화추이: 1990~2008년 ·····340
[그림 6-44] 부패인식 지수 변화추이: 1995~2008년 ·····344
[그림 6-45] 정부 신뢰도 변화추이: 1990~2008년 ·····348
[그림 7- 1] 고용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365
[그림 7- 2] 교육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367
[그림 7- 3] 주거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369
[그림 7- 4] 인구·가족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372

[그림 7- 5] 복지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374
[그림 7- 6] 건강·안전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377
[그림 7- 7] 사회갈등·문화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379
[그림 7- 8] 불평등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382
[그림 7- 9] 경제일반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384
[그림 7-10] 정치일반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387
[그림 7-11] 위기별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391
[그림 8- 1] 영역별 위기수준 변화추이 ·····402
[그림 8- 2] 한국의 사회위기수준 변화추이(백분율 환산) ·····407

부표 목차

〈부표 1- 1〉 한국인의 특성별 고용영역의 우선순위 분포 ·····443
〈부표 1- 2〉 한국인의 특성별 고용영역의 영향도 분포 ·····444
〈부표 1- 3〉 한국인의 특성별 교육영역의 우선순위 분포 ·····444
〈부표 1- 4〉 한국인의 특성별 교육영역의 영향도 분포 ·····445
〈부표 1- 5〉 한국인의 특성별 주거영역의 우선순위 분포 ·····445
〈부표 1- 6〉 한국인의 특성별 주거영역의 영향도 분포 ·····446
〈부표 1- 7〉 한국인의 특성별 인구·가족영역의 우선순위 분포 ·····446
〈부표 1- 8〉 한국인의 특성별 인구·가족영역의 영향도 분포 ·····447
〈부표 1- 9〉 한국인의 특성별 복지영역의 우선순위 분포 ·····447
〈부표 1-10〉 한국인의 특성별 복지영역의 영향도 분포 ·····448
〈부표 1-11〉 한국인의 특성별 건강·안전영역의 우선순위 분포 ·····448
〈부표 1-12〉 한국인의 특성별 건강·안전영역의 영향도 분포 ·····449
〈부표 1-13〉 한국인의 특성별 사회갈등·문화영역의 우선순위 분포 ·····449
〈부표 1-14〉 한국인의 특성별 사회갈등·문화영역의 영향도 분포 ·····450
〈부표 1-15〉 한국인의 특성별 불평등영역의 우선순위 분포 ·····450
〈부표 1-16〉 한국인의 특성별 불평등영역의 영향도 분포 ·····451
〈부표 1-17〉 한국인의 특성별 경제일반영역의 우선순위 분포 ·····451

〈부표 1-18〉 한국인의 특성별 경제일반영역의 영향도 분포 ·····452
〈부표 1-19〉 한국인의 특성별 정치일반영역의 우선순위 분포 ·····452
〈부표 1-20〉 한국인의 특성별 정치일반영역의 영향도 분포 ·····453
〈부표 2- 1〉 한국인의 특성별 실업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54
〈부표 2- 2〉 한국인의 특성별 실업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454
〈부표 2- 3〉 한국인의 특성별 청년실업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55
〈부표 2- 4〉 한국인의 특성별 청년실업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455
〈부표 2- 5〉 한국인의 특성별 근로빈곤자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56
〈부표 2- 6〉 한국인의 특성별 근로빈곤자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456
〈부표 2- 7〉 한국인의 특성별 비정규직 비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57
〈부표 2- 8〉 한국인의 특성별 비정규직 비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457
〈부표 2- 9〉 한국인의 특성별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58
〈부표 2-10〉 한국인의 특성별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458
〈부표 2-11〉 한국인의 특성별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59
〈부표 2-12〉 한국인의 특성별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459
〈부표 2-13〉 한국인의 특성별 중고등 학원폭력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60
〈부표 2-14〉 한국인의 특성별 중고등 학원폭력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460
〈부표 2-15〉 한국인의 특성별 조기유학자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61
〈부표 2-16〉 한국인의 특성별 조기유학자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461
〈부표 2-17〉 한국인의 특성별 주거비 지출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62
〈부표 2-18〉 한국인의 특성별 주거비 지출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462
〈부표 2-19〉 한국인의 특성별 자가 보유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63
〈부표 2-20〉 한국인의 특성별 자가 보유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463
〈부표 2-21〉 한국인의 특성별 전세비 증감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64
〈부표 2-22〉 한국인의 특성별 전세비 증감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464
〈부표 2-23〉 한국인의 특성별 총부양비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65
〈부표 2-24〉 한국인의 특성별 총부양비 지표의 영향도 분포 ·····465
〈부표 2-25〉 한국인의 특성별 고령화지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66

〈부표 2-26〉 한국인의 특성별 고령화지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466
〈부표 2-27〉 한국인의 특성별 수도권 인구집중도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67
〈부표 2-28〉 한국인의 특성별 수도권 인구집중도 지표의 영향도 분포 ·····467
〈부표 2-29〉 한국인의 특성별 출산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68
〈부표 2-30〉 한국인의 특성별 출산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468
〈부표 2-31〉 한국인의 특성별 노후대비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69
〈부표 2-32〉 한국인의 특성별 노후대비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469
〈부표 2-33〉 한국인의 특성별 연금수혜비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70
〈부표 2-34〉 한국인의 특성별 연금수혜비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470
〈부표 2-35〉 한국인의 특성별 요보호아동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71
〈부표 2-36〉 한국인의 특성별 요보호아동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471
〈부표 2-37〉 한국인의 특성별 장애인 출현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72
〈부표 2-38〉 한국인의 특성별 장애인 출현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472
〈부표 2-39〉 한국인의 특성별 평균수명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73
〈부표 2-40〉 한국인의 특성별 평균수명 지표의 영향도 분포 ·····473
〈부표 2-41〉 한국인의 특성별 자살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74
〈부표 2-42〉 한국인의 특성별 자살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474
〈부표 2-43〉 한국인의 특성별 청소년 자살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75
〈부표 2-44〉 한국인의 특성별 청소년 자살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475
〈부표 2-45〉 한국인의 특성별 부정식품 적발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76
〈부표 2-46〉 한국인의 특성별 부정식품 적발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476
〈부표 2-47〉 한국인의 특성별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77
〈부표 2-48〉 한국인의 특성별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지표의 영향도 분포 477
〈부표 2-49〉 한국인의 특성별 교통사고 사망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78
〈부표 2-50〉 한국인의 특성별 교통사고 사망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478
〈부표 2-51〉 한국인의 특성별 강력범죄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79
〈부표 2-52〉 한국인의 특성별 강력범죄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479
〈부표 2-53〉 한국인의 특성별 노사분규 발생건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80

〈부표 2-54〉 한국인의 특성별 노사분규 발생건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480
〈부표 2-55〉 한국인의 특성별 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81
〈부표 2-56〉 한국인의 특성별 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481
〈부표 2-57〉 한국인의 특성별 불법체류자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82
〈부표 2-58〉 한국인의 특성별 불법체류자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482
〈부표 2-59〉 한국인의 특성별 우리나라 갈등비용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83
〈부표 2-60〉 한국인의 특성별 우리나라 갈등비용 지표의 영향도 분포 ·····483
〈부표 2-61〉 한국인의 특성별 마약 및 밀수사범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84
〈부표 2-62〉 한국인의 특성별 마약 및 밀수사범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484
〈부표 2-63〉 한국인의 특성별 도박사범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85
〈부표 2-64〉 한국인의 특성별 도박사범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485
〈부표 2-65〉 한국인의 특성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86
〈부표 2-66〉 한국인의 특성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지표의 영향도 분포 ···486
〈부표 2-67〉 한국인의 특성별 남녀 임금격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87
〈부표 2-68〉 한국인의 특성별 남녀 임금격차 지표의 영향도 분포 ·····487
〈부표 2-69〉 한국인의 특성별 소득불평등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88
〈부표 2-70〉 한국인의 특성별 소득불평등 지표의 영향도 분포 ·····488
〈부표 2-71〉 한국인의 특성별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89
〈부표 2-72〉 한국인의 특성별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489
〈부표 2-73〉 한국인의 특성별 평균소득 75~150% 비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90
〈부표 2-74〉 한국인의 특성별 평균소득 75~150% 비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490
〈부표 2-75〉 한국인의 특성별 지역간 소득격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91
〈부표 2-76〉 한국인의 특성별 지역간 소득격차 지표의 영향도 분포 ·····491
〈부표 2-77〉 한국인의 특성별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92
〈부표 2-78〉 한국인의 특성별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 지표의 영향도 분포 ···492
〈부표 2-79〉 한국인의 특성별 영호남 지역격차 계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93
〈부표 2-80〉 한국인의 특성별 영호남 지역격차 계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493
〈부표 2-81〉 한국인의 특성별 원유가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94

Contents

〈부표 2- 82〉 한국인의 특성별 원유가 지표의 영향도 분포 ·····494
〈부표 2- 83〉 한국인의 특성별 소비자물가지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95
〈부표 2- 84〉 한국인의 특성별 소비자물가지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495
〈부표 2- 85〉 한국인의 특성별 신용불량자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96
〈부표 2- 86〉 한국인의 특성별 신용불량자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496
〈부표 2- 87〉 한국인의 특성별 경제성장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97
〈부표 2- 88〉 한국인의 특성별 경제성장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497
〈부표 2- 89〉 한국인의 특성별 환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98
〈부표 2- 90〉 한국인의 특성별 환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498
〈부표 2- 91〉 한국인의 특성별 외채비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499
〈부표 2- 92〉 한국인의 특성별 외채비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499
〈부표 2- 93〉 한국인의 특성별 가계 부채비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500
〈부표 2- 94〉 한국인의 특성별 가계 부채비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500
〈부표 2- 95〉 한국인의 특성별 기업 부채비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501
〈부표 2- 96〉 한국인의 특성별 기업 부채비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501
〈부표 2- 97〉 한국인의 특성별 투표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502
〈부표 2- 98〉 한국인의 특성별 투표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502
〈부표 2- 99〉 한국인의 특성별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503
〈부표 2-100〉 한국인의 특성별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503
〈부표 2-101〉 한국인의 특성별 세대별 정당득표집중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504
〈부표 2-102〉 한국인의 특성별 세대별 정당득표집중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504
〈부표 2-103〉 한국인의 특성별 국가기관별 신뢰지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505
〈부표 2-104〉 한국인의 특성별 국가기관별 신뢰지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505
〈부표 2-105〉 한국인의 특성별 부패인식지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506
〈부표 2-106〉 한국인의 특성별 부패인식지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506
〈부표 2-107〉 한국인의 특성별 행정소송건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507
〈부표 2-108〉 한국인의 특성별 행정소송건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507
〈부표 2-109〉 한국인의 특성별 정부신뢰도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508
〈부표 2-110〉 한국인의 특성별 정부신뢰도 지표의 영향도 분포 ·····508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social crisis indicators in Korea; to measure the time-series crisis level based upon these indicators; and to propose policy recommendations to reduce the crisis level according to the measurements. The final social crisis indicators ar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findings of Delphi survey and respondents' comments. A total of 10 areas and 44 indicators are selected. The analysis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Korean society experienced a moderate level of crisis (61~80 points) during 1996~2008, and the level of crisis was relatively low (41~60 points) in 1999, 2004, 2005, and 2007. The level of social crisis was at its lowest at 55.64 in 2005, rising in 2006 to 60.75 and remaining more or less the same thereafter. In 2009, despite of the immense effects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the level of social crisis increased only by 0.88 points from the previous year.

Based upon thes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academic and policy recommendations. At the academic dimension,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the definition and theoretical foundation of social crisis, and further multidisciplinary studies should be conducted as to social crisis. The study results bring to light many aspects of policy implications as follows: establishment of social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the concept of permanent job, prevention of middle and high school dropouts, and comprehensive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the current policies on low-fertility and aging.

요 약

제1장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 사회적 역동성(dynamic society)이 강해지고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향상되어 졌으나, 현대사회의 속성상 확실성(certainty)보다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 증가하게 되어 개인과 가족, 더 나아가 사회는 '위기'(crisis)를 보다 많이 인식하게 되었음.

– 지난 수십 년간 한국사회는 성장위주의 정책추진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사회적 측면에서의 개발이 미흡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이 결여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위기 관련 공식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접근은 전무(全無)하며, 문제로 다루어지는 개별과제만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뿐임.

– 한국사회의 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하나하나를 관리해 나감으로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위기가 증대되는 요소를 즉각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함.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의 위기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위기수준을 시계열적으로 측정하는데 있음.

– 한국의 사회위기 영역 및 지표를 개발함.

– 개발된 사회위기 영역 및 지표에 의하여 한국의 사회위기 수준을

위기지표, 위기영역, 전체적으로 측정함.

– 불모지(不毛地)인 사회위기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모색하고 위기수준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위기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안함.

□ 연구내용

○ 사회위기 관련 이론 및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 사회위기 지표를 개발함

○ 사회위기 수준을 측정함

○ 사회위기 지표개발 및 위기수준의 종합논의와 의미를 해석하고, 사회위기 관리방안을 학문적·정책적으로 제안

□ 연구방법

○ 사회위기 및 유사연구에 대한 국내·외 문헌연구

○ 지표개발과 지표의 가중치 부여를 위한 델파이 조사.

○ 기존 통계자료 수집 및 재분석

○ 절대평가법과 상대평가법에 의한 사회위기 수준 측정

– 절대평가법은 지표 값 자체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여 각 지표의 사회위기 수준을 산출

– 상대평가법은 지표 값의 변화추이가 사람들의 사회위기 체감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지표 값으로 위기를 판단하기보다는 변화방향 및 정도가 국민의 위기체감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로 위기를 판단

제2장 사회위기의 개념 및 특성과 담론

□ 사회위기의 개념

○ 광의의 위기개념은 한 사회에서 유지되어 오던 평형감(平衡感), 질서, 권위, 합의, 도덕성 등에 가해진 사회 내·외부의 충격으로 기존의 사회체제가 의문시되거나 변화 또는 해체되는 과정으로, 기존의 질서에

가해진 변화의 충격 자체 및 그 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집합

○ 협의의 위기개념은 상식적 수준에서 이해되는 개념으로 '외부 또는 내부의 적(enemy)'에 의한 위협이 있는 상황이거나 그러한 위협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혼란 상태를 의미

□ 위기관련 유사개념

○ 「위험(risk)」은 산업자본주의 사회가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른 필연적 상황으로 파악

○ 「갈등(conflicts)」은 여러 개인 및 집단이 동일한 가치대상 혹은 희소한 자원을 경쟁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상호 양립할 수 없는 목표 혹은 특정 쟁점을 둘러싼 상호 불용납(不容納)의 태도에 의해 나타나게 된 개인 및 집단 간 충돌적 관계

□ 위기의 유형과 관리

○ 일반적으로 위기라는 어휘는 국가적 위기,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사회문화적 위기, 기업의 위기, 개인의 위기와 같이 다양하게 사용됨.

○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란 다양한 위기를 슬기롭게 관리함으로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이는 고도로 전문성을 요하는 전략적 판단과 경험적 지혜의 영역에 관한 것이며, 뛰어난 리더십과 정책적 접근에 의해서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

□ 사회위기관련 담론

○ 오페(Offe)의 관점

– 기존체계와는 낯선 또는 체계 파괴적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체계의 정체성이 위태롭게 되는 과정을 위기로 이해함.

○ 구겐베르거(Gugenberger)의 관점

– '고삐가 풀린 채 아무런 반성 없이 터져 나온 시민의 탐욕'을 위기원인으로 지적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 조절능력 확보에 앞서 대중

의 지나친 욕심을 적당한 수준에서 통제할 것을 강조

○ 이스튼(David Easton)의 관점

– 변화는 권력엘리트, 체제, 총체로서의 체계라는 세 가지 수준에서 발생하는데, 변화를 수반할 때 위기의 증폭이 발생되는 것이라 하였음.

제3장 사회위기 관련 선행연구

□ 사회주의체제 위기수준 측정

○ 브레진스키(Brzezinski)의 사회주의체제 위기수준 측정

○ 김성철 외(1996)의 북한 사회주의체제 위기수준 측정

□ 한국의 사회위기 관련 연구

○ 한국 사회의 위기수준(2000. 2)

○ 한국의 사회안정수준 측정(2004. 9)

□ 사회위기 관련 각종 사회지표

○ 「삶의 질」 지표

○ 「사회적 질」 지표

제4장 한국사회의 압축적 근대성과 사회위기의 구조적 복합성

□ 압축적 근대성과 위기사회

○ 압축적 근대성은 시간·공간 영역과 단축·압착 과정의 두 축이 교차해 구성하는 다섯 가지 구체적 차원으로 구성됨.

○ 압축적 근대성 하의 한국사회는 반세기가 채 되지 않는 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변동을 집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이미 서구 중심의 선진산업사회권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됨.

□ 이중적 위기사회·복합위기사회로서의 한국

○ 폭증사회형 위험은 한국의 근대화가 '외연적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에 엄청난 경제·사회적 변화를 거친 데서 기인함.

○ 폭증하는 경제·사회 활동에 비례한 위험의 증가를 피하려면 이러한 활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과 장치의 확충에 덧붙여 조직·문화적 관리역량의 동반적 성장이 필수적임.

□ 사회위기 지표 개발을 위한 논의

○ 사회위기 지표개발을 위한 문제영역은 고용, 교육, 주거, 인구·가족, 복지, 안전 및 건강, 사회통합, 경제·사회적 형평성, 경제, 정치 등이라 하겠음.

제5장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

□ 사회위기 지표(안) 개발

○ 지표(안) 개발의 기본원칙

– 측정가능 또는 생산 가능한 통계를 지표로 개발

– 시계열 통계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지표를 선정한다. 가능하면 매년 생산, 적어도 5년 이내 주기적 생산이 되고 있는 통계를 선정

–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하여 생산되는 통계를 우선적으로 선정

– 영역별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최소 1개 이상 포함

○ 이론 및 선행연구에 의한 사회위기 영역(안) 및 지표(안) 개발

– 각 영역별 최저 3개, 최고 8개의 지표가 개발되었으며, 전체 10개 영역, 55개 사회위기지표가 개발되었음.

□ 「사회위기 영역(안)」의 우선순위 및 영향도

○ 「사회위기 영역(안)」의 우선순위 및 영향도

–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고용영역, 경제일반영역, 교육영역 등이었고,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는 정치일반영역, 인구·가족영역, 불평등 영역 등이었음.

○ 각 영역별 지표의 우선순위 및 영향도를 측정함.

□ 한국의 사회위기 영역 및 지표 확정

○ 델파이 조사결과에 의한 영향도 분석, 지표통계의 수집 및 특성분석 등에 근거하고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보충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의 사회위기지표 최종안을 확정(10개 영역 44개 지표)

– 고용영역은 실업률, 청년실업률, 근로빈곤자수, 비정규직 비율 등 4개 지표

– 교육영역은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학생범죄인원 등 3개 지표

– 주거영역은 주거비 지출률, 자가 보유율, 전세비 증감률 등 3개 지표

– 인구·가족영역은 총부양비, 고령화지수, 수도권 인구 집중도, 출산율 등 4개 지표

– 복지영역은 노후대비율, 연금수혜비율, 요보호아동수, 장애인 출현자수 등 4개 지표

– 건강·안전영역은 평균수명, 자살률, 청소년·노인 자살률, 부정식품 적발률,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 교통사고 사망률, 강력범죄율 등 7개 지표

– 사회갈등·문화영역은 노사분규 발생건수, 파업 손실일수 등 2개 지표

– 불평등영역은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남녀 임금격차, 소득불평등,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지역간 소득격차 등 5개 지표

– 경제일반영역은 원유가, 소비자물가지수, 신용불량자수, 경제성장률, 환율, 외채액, 개인부채액, 기업부채액 등 8개 지표

– 정치일반영역은 투표율,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부패인식지수, 정부신뢰도 등 4개 지표

제6장 한국의 사회위기지표별 위기수준

□ 44개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변화를 지표별 0~4점 기준으로 산출함.

○ 사회위기 지표별 가중치는 '지표 영향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

$$W_i = \frac{E_i}{\sum_{j=1}^{n} E_j}$$

W_i=지표i 가중치 E_i=지표i 영향력평균 j=영역내 지표번호

– 고용영역의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변화는 다음과 같음.

사회위기 지표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실업률	1.5	4.0	4.0	2.0	1.5	2.5	1.5	3.5	3.5	3.0	1.5	1.0	3.5
청년실업률	2.0	4.0	4.0	1.5	1.5	3.0	1.5	3.5	3.5	1.5	1.5	1.0	1.5
근로빈곤지수	4.0	1.5	4.0	1.5	3.5	1.5	3.5	4.0	1.5	2.5	2.5	2.5	2.5
비정규직 비율	4.0	4.0	3.5	4.0	3.5	1.5	3.5	1.0	1.5	1.5	1.5	1.0	1.0

– 교육영역의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변화는 다음과 같음.

사회위기 지표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	3.0	1.5	1.0	1.5	4.0	1.5	1.5	4.0	2.0	1.5	1.5	3.0	2.5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4.0	4.0	4.0	1.0	3.0	4.0	1.5	1.0	1.0	1.0	3.5	4.0	3.5
학생범죄인원	4.0	4.0	2.5	1.5	3.5	1.0	1.0	1.0	1.5	1.5	2.5	4.0	3.0

– 주거영역의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변화는 다음과 같음.

사회위기 지표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주거비 지출률	2.3	2.5	3.8	2.8	2.5	2.8	1.8	2.3	1.3	3.8	3.0	1.5	2.8
자가 보유율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전세비 증감률	4.0	1.5	1.0	4.0	4.0	4.0	3.5	1.5	1.5	2.0	3.5	1.5	1.5

– 인구·가족영역의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변화는 다음과 같음.

사회위기 지표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총부양비	1.0	1.0	2.0	3.0	3.5	3.5	3.5	3.5	3.0	3.0	3.0	2.5	1.0
고령화지수	3.5	3.0	3.0	3.0	2.5	2.5	3.0	3.0	3.0	3.5	3.5	3.5	3.5
수도권 인구집중도	1.5	1.5	1.5	1.5	2.5	3.5	3.5	4.0	2.0	3.0	1.5	2.0	2.0
출산율	3.0	3.0	3.0	3.0	3.0	4.0	4.0	4.0	4.0	4.0	4.0	4.0	4.0

– 복지영역의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변화는 다음과 같음.

사회위기 지표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노후대비율	3.5	3.5	3.5	3.5	4.0	4.0	4.0	3.5	3.5	3.5	1.0	1.0	2.0
연금수혜비율	3.0	3.5	1.0	3.5	4.0	3.5	3.5	3.5	1.0	2.5	4.0	3.0	3.0
요보호아동수	3.5	4.0	4.0	1.5	2.0	4.0	1.5	2.0	1.5	1.5	1.5	1.5	4.0
장애인 출현율	2.0	4.0	4.0	2.5	4.0	3.0	2.0	3.0	2.0	2.0	2.0	1.5	1.5

– 건강·안전영역의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변화는 다음과 같음.

사회위기 지표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평균수명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자살률	4.0	1.5	4.0	1.0	1.5	2.0	4.0	4.0	1.5	1.5	1.5	3.5	1.5
청소년·노인 자살률	4.0	1.3	4.0	1.8	1.5	2.8	3.8	4.0	2.0	2.8	1.3	2.5	2.0
부정식품 적발률	3.5	3.5	4.0	1.0	1.0	1.0	1.5	2.5	4.0	1.5	1.0	4.0	1.5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	1.5	1.0	4.0	1.5	4.0	3.0	1.0	2.0	3.5	3.5	4.0	3.5	3.0
교통사고 사망률	3.5	1.0	1.0	3.5	2.5	1.0	1.5	3.5	1.0	2.0	3.0	3.0	1.0
강력범죄율	3.5	2.0	4.0	4.0	4.0	2.0	1.0	3.0	1.5	1.5	1.0	1.5	1.5

– 사회갈등·문화영역의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변화는 다음과 같음.

사회위기 지표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노사분규 발생건수	2.5	1.5	4.0	4.0	3.5	2.0	4.0	2.5	4.0	1.0	1.0	1.5	1.5
파업 손실일수	4.0	1.5	4.0	2.0	3.5	1.5	3.5	1.5	1.5	1.5	4.0	1.0	4.0

– 불평등영역의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변화는 다음과 같음.

사회위기 지표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남녀경제활동참가율 격차	1.0	1.0	4.0	1.0	1.0	1.5	3.5	3.5	1.5	1.5	1.0	3.5	2.0
남녀 임금격차	3.0	3.5	2.5	3.0	3.5	2.0	1.5	1.5	2.0	2.5	1.5	1.5	1.5
소득불평등	3.5	1.5	4.0	3.5	1.0	4.0	1.5	1.5	3.5	1.5	4.0	4.0	1.5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4.0	4.0	2.0	2.0	1.5	1.5	1.5	1.0	4.0	4.0	4.0	1.5	1.5
지역간 소득격차	2.0	2.0	2.0	3.5	3.0	2.5	2.5	1.5	1.5	1.5	1.5	4.0	4.0

– 경제일반영역의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변화는 다음과 같음.

사회위기 지표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원유가	4.0	1.5	1.0	4.0	4.0	1.5	1.5	3.5	4.0	4.0	4.0	2.5	4.0
소비자물가지수	3.0	2.5	4.0	1.5	1.5	3.0	1.5	2.5	2.5	1.5	1.5	1.5	3.5
신용불량지수	3.5	2.5	3.5	1.5	2.5	1.5	2.5	3.5	1.5	1.5	1.5	2.0	1.5
경제성장률	3.0	4.0	4.0	1.0	2.0	3.0	1.5	3.5	1.5	1.5	1.5	1.5	4.0
환율	0.0	4.0	4.0	0.0	1.0	0.0	1.0	0.0	4.0	0.0	0.0	0.0	4.0
외채액	3.5	2.5	1.5	1.5	1.5	1.0	2.0	2.0	2.0	1.5	4.0	4.0	1.5
개인부채	3.5	3.5	1.5	1.5	2.0	4.0	4.0	1.5	1.5	2.0	2.0	2.0	1.5
기업부채	3.5	4.0	1.5	1.5	1.5	1.5	4.0	3.0	1.5	4.0	2.0	4.0	1.5

– 정치일반영역의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변화는 다음과 같음.

사회위기 지표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투표율	3.5	2.5	2.0	2.0	3.0	1.5	1.5	1.5	1.5	4.0	4.0	4.0	4.0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4.0	4.0	1.0	3.0	3.0	3.5	3.5	1.5	1.0	3.5	3.5	3.5	3.5
부패인식지수	2.0	3.5	3.5	3.5	1.5	1.5	1.5	3.5	1.5	1.0	3.0	3.5	1.0
정부신뢰도	2.0	4.0	3.5	1.0	3.0	3.0	2.5	2.0	3.0	3.5	3.5	3.5	1.0

제7장 한국의 사회위기 영역 및 전체의 위기수준 측정

□ 위기영역별 사회위기 수준

○ 위기영역별 사회위기수준은 각 지표별 위기수준과 지표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하며, 다음의 공식을 참조

단계	계산식
1단계	$PI_t = \sum_{i=1}^{n} I_i W_i$
2단계	$HPI_t = \frac{PI_t}{4} \times 100$

PI=영역 위기점수 HPI=(100점 환산)영역 위기점수

t=연도 W_i=지표i 가중치 I_i=지표i 위기점수

○ 10개 영역의 위기수준 변화를 0~4점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사회위기 영역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고용	2.81	3.42	3.88	2.23	2.44	2.16	2.44	3.02	2.56	2.13	1.73	1.35	2.15
교육	3.60	3.00	2.31	1.36	3.56	2.02	1.34	2.19	1.56	1.36	2.37	3.60	2.94
주거	3.08	2.31	2.57	3.26	3.17	3.26	2.74	2.22	1.88	2.92	3.17	1.96	2.40
인구·가족	2.28	2.15	2.40	2.66	2.89	3.38	3.50	3.62	3.04	3.39	3.05	3.04	2.66
복지	3.06	3.72	3.07	2.81	3.52	3.66	2.85	3.03	2.05	2.44	2.12	1.75	2.64
건강·안전	3.06	1.60	3.22	2.00	2.26	1.86	2.02	2.92	2.05	1.97	1.81	2.71	1.66
사회갈등·문화	3.24	1.50	4.00	3.02	3.50	1.75	3.75	2.01	2.77	1.25	2.47	1.25	2.73
불평등	2.75	2.36	2.95	2.66	1.96	2.39	2.06	1.78	2.55	2.16	2.48	2.95	2.07
경제일반	3.00	3.05	2.66	1.58	2.01	2.02	2.23	2.43	2.33	1.98	2.04	2.13	2.74
정치일반	2.79	3.52	2.60	2.33	2.61	2.36	2.22	2.17	1.82	2.96	3.49	3.62	2.25

□ 한국의 사회위기 수준

○ 한국의 사회위기수준은 각 영역별 위기수준과 영역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 '영역가중치 적용한 영역의 위기점수'를 산출한 후 모든 영역의 '영역가중치 적용한 영역의 위기점수'를 합한 값

○ 사회위기영역별 사회위기 수준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

$$SRI_t = \sum_{k=1}^{10} PI_{k,t} \cdot W_k$$

k = 영역번호 t = 연도

$$\sum_{k=1}^{10} W_k = 1$$

연도	위기수준	
	4점 기준	백분율 환산
1996	2.97	74.32
1997	2.69	67.30
1998	2.99	74.73
1999	2.36	58.94
2000	2.78	69.43
2001	2.46	61.46
2002	2.49	62.37
2003	2.55	63.68
2004	2.27	56.65
2005	2.23	55.64
2006	2.43	60.75
2007	2.39	59.82
2008	2.43	60.70

제8장 종합논의

□ 1996~2008년 기간 중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기(81~100점)를 맞은 경험은 없었음.

○ 그렇지만 대부분 비교적 위기(61~80점)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비교적 위기 중에서 심각한 위기에 가까이 접근한다고 판단되는 70점 이상의 위기상황이 1996년과 1998년에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경제위기의 직전·후 시기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음.

○ 60점 미만의 보통(41~60점)의 상황에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는 1999년, 2004년, 2005년, 2007년이었음.

□ 최근의 사회위기 경향을 살펴보면, 2005년 최저점(55.64점) 이후 2006

년에는 60.75점으로 상당히 상승했으나 이후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 지난 해 금융위기가 도래했음에도 통계상으로 전년도 위기점수와 비교했을 때는 위기지수가 약간(0.88점) 상승했을 뿐임.

제9장 한국의 사회위기 관리방안

□ 학문적 제언

○ 다학제적 접근에 의한 사회위기의 개념 및 이론 정립

– 한국사회에서 사회위기의 개념적 정의와 이론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다학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사회위기를 학문적으로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가칭 '사회위기학회'를 설립, 운영하고 학문적 측면에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함.

○ 사회위기지표의 지속적 개발 및 연구

– 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사회위기지표가 개발되고, 관리되어야 함.

– 개발된 사회위기지표의 통계생산과 계량화를 위한 노력이 학계에서 이루어져야 함.

– 사회위기 수준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정책적 제언

○ 사회위기 관리체계 구축: 조기대응체계

– 사회위기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예방 및 조기대응체계를 구축함.

–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사회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위기의 다양한 형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함.

– 국책연구기관에 사회위기 전담 연구부서를 설치, 운영하여 사회위기의 지표 개발과 개발된 지표의 지속적 관리, 사회위기 모니터링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함.

○ 「고용」 영역의 위기수준 저하 정책

– '평생직장'의 개념을 확립하고,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을 자제토록

권장함.

-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함.
- 비정규직 근로빈곤층을 감소하는 방안을 강구함.
-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함.

○ 「교육」 영역의 위기수준 저하 정책

- 중·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발생을 예방하고 복학을 지원함.
- 학생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문제학생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탈 청소년 보호체계를 내실화함.

○ 「주거」 영역의 위기수준 저하 정책

- 지역별 필요주택수를 감안한 적정량의 주택을 공급함.
- 주거비 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함.

○ 「인구·가족」 영역의 위기수준 저하 정책

- 고령사회대책의 효과성 검토와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함.
- 「저출산대책」 효과성 검토와 신규정책을 개발·추진함.
- 과밀인구 해소와 지역 균형적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는 대책을 강화함.

○ 「복지」 영역의 위기수준 저하 정책

-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아동의 부모양육 책임을 강화함.
- 노후의 생활안정 및 건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함.

○ 「건강·안전」 영역의 위기수준 저하 정책

- 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중심의 신속한 치료체계를 구축함.
- 신종바이러스 백신개발의 지원을 강화하고 적정량을 항시 비축토록 함.

○ 「사회갈등·문화」 영역의 위기수준 저하 정책

-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함.
- 대화중심의 노사문화를 확산시킴.

– 환경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강구함.
–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공동체 문화 형성을 모색함.

○ 「불평등」 영역의 위기수준 저하 정책
– 신빈곤과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함.
–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서의 성평등을 강화함.
–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강구함.

○ 「경제일반」 영역의 위기수준 저하 정책
– '국제유가 연동제' 및 '유류안정기금'을 적정수준에서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가안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부담을 감소토록 함.
– 물가관리를 강화하고, 물류의 유통단계를 과학화하며,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를 내실화함.
– 기업이 부담 가능한 환율을 유지토록 통화관리정책을 강화하여 기업경쟁력 약화를 방지함.

○ 「정치일반」 영역의 위기수준 저하 정책
–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정치인 스스로 노력함.
– 지역중심의 정당운영을 철폐하고 정책중심의 정당운영을 강화함.
– 정당의 리더십과 국민의 팔로십의 생산적인 결합을 모색함.

01

서 론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속성상 인간은 변화의 물결 속에 휩싸여 있다. 자본주의 사회, 시장경제, 민주주의 등으로 인하여 전제주의 사회나 전근대 사회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사회적 역동성(dynamic society)이 강해지고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향상되어 졌다. 반면에 과거사회에서 제공해주던 확실성(certainty)보다는 불확실성(uncertainty)이 증가하게 되어 개인과 가족, 더 나아가 사회는 '위기'(crisis)를 보다 많이 인식하게 되었다.

'위기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특징은 한국사회에서도 예외 없이 나타나는 현상일 수밖에 없다. 사실 한국사회에서 위기관리는 주로 주기적으로 한반도에 닥쳐오는 태풍 및 집중호우와 가뭄에 의한 자연재해, 대형 산불 등의 발생, 대구 지하철 참사, 서울 아현동 가스 폭발사고,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 인위적 재난(인재)이 발생했을 때 주로 이루어졌다. 즉, 재해 및 재난과 관련해서 국가위기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음이다.

그렇지만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초래되어 한국경제가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싸였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조기경보체계가 부재(不在)하였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수많은 경제학자와 경제 관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사전에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경제정책, 외

환관리정책을 마련,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국가경제가 위기를 맞이하였고, 전체 국민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물론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한 국가의 경제위기 관리가 결코 단순하거나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국(自國)의 경제와 국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는 지대하므로 이에 대비하는 조기경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인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사회위기의 관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는 전술(前述)한 현대사회의 속성 외에도 사회위기와 관련되는 특성을 다양하게 갖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사회는 성장위주의 정책추진으로 경제적 측면에서는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사회적 측면에서의 개발이 미흡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이 결여되어 있다. 즉, 경제성장 추진과정에서 다른 많은 주요한 가치가 희생되거나 무시 또는 등한시되었으며, 정치·사회·문화부문 등 주요 분야의 발전이 미흡하여 전체적으로 불균형적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반 영역의 불균형적 발전은 국가에 대한 신뢰 및 기대감을 저하시키고 사회구성원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며, 사회 전반적인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는 사회통합을 어렵게 하고 심각한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등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다.

또한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하여 살고 있는 세계 3위의 고(高)인구밀도 국가이면서 부존자원이 없는, 오로지 '인재(人才)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격심한 경쟁사회에 살고 있다. 이는 취업난, 주거비 부담, 사교육비 부담, 많은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고 개인과 가족, 더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더군다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도래됨으로서 자체 만으로서도 사회위기의 중요한 요소(factor)일 뿐만 아니라 그 충격은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점 외에도 단기간의 급속한 산업사회로의 이행으로 인한 계층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세대별 갈등, 남녀 간 갈등, 노사(勞使) 갈등이 복잡하

게 얽혀 있어, 이와 같은 다양한 갈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몇 개가 증폭될 경우 자칫 사회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위기 관련 공식적인 연구와 체계적인 접근은 전무(全無)하며, 문제로 다루어지는 개별과제만을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을 뿐이다. 물론 이러한 양상은 다른 선진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프랑스에서의 폭동이 발생한 것도 사회위기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접근 없이 다인종 또는 이민자 정책이라는 개별접근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많은 학문적 연구와 정책적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심각한 갈등이 표출된 것은 전체 사회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하나하나를 관리해 나감으로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위기가 증대되는 요소를 즉각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경험한 경제위기로 인하여 엄청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서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즉, 사회위기의 관리는 사전경보체계로서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제가 되는 것으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 하겠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의 위기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위기수준을 시계열적으로 측정하는데 있다. 연구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한국의 사회위기 영역 및 지표를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 있다. 둘째, 개발된 사회위기 영역 및 지표에 의하여 한국의 사회위기 수준을 위기지표, 위기영역, 전체적으로 측정하는데 이차적 목적이 있다. 셋째, 불모지(不毛地)인 사회위기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모색하고 위기수준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위기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

는 것이 최종 연구목적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함으로서 사회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안정을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본 연구결과는 상존하고 있는 사회불안정 요소를 파악하여 불안정수준의 저하를 위한 각종 국가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사회위기 관리시스템의 구축으로 한국사회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사회위기 수준을 낮추어 국민의 안정된 생활보장과 삶의 질을 제고하고 국가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이론 및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사회위기 지표개발, 사회위기 수준측정, 지표·영역·전체 위기수준의 해석과 위기관리방안 제안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보다 상세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위기 관련 이론 및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이다.

사회위기와 관련된 개념을 논의하고,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어서 한국 사회위기의 구조적 복합성 및 실태적 극단성을 논의한다. 즉, 압축적 근대성과 위기사회, 이중적 위기사회로서의 특성을 가진 한국사회에 대하여 논의하고, 본 연구를 위한 사회위기 지표개발을 논의한다. 이는 제1부의 제2장에서 제4장까지에서 제시된다.

둘째, 사회위기 지표를 개발한다.

먼저 연구진은 사회위기 및 사회불안정을 나타내는 사회위기 영역(안)

및 지표(안)를 개발한다. 이어서 개발된 영역(안) 및 지표(안)에 기초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회위기 영역 및 지표를 최종 확정한다. 이는 제2부의 제5장에서 제시된다.

셋째, 사회위기 수준을 측정한다.

이는 지표별, 영역별, 전체 위기수준을 측정하는 것이다. 먼저 개발된 사회위기 지표의 각각에 대하여 위기수준을 측정한다. 이는 0~4점의 5점 리커트(Likert) 척도에 의하여 산출된다. 각각의 위기지표는 시계열적으로 분석되어 연도별 위기수준을 측정하여 변화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는 1995~2008년 기간(14년)의 위기수준을 시계열적으로 제시한다. 이어서 영역 및 전체의 사회위기 수준을 측정한다. 특히, 영역 및 전체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델파이조사에 근거하여 지표 가중치와 영역 가중치를 적용한다. 이는 제2부의 제6장과 제7장에서 제시된다.

넷째, 사회위기지표개발 및 위기수준의 종합논의와 의미를 해석하고, 사회위기 관리방안을 학문적정책적으로 제안한다.

본 연구의 사회위기지표 개발과 측정된 위기지표, 위기영역, 전체의 위기수준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위기수준의 의미를 해석한다. 이어서 한국의 사회위기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위기수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위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기대응체계를 포함하며, 영역별 위기저하를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한다. 이는 제3부의 제8장과 제9장에서 제시된다.

2. 연구방법

가. 전반적 연구방법

본 연구의 수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위기 및 유사연구에 대한

국내·외 문헌연구, 둘째, 지표개발과 지표의 가중치 부여를 위한 델파이 조사, 셋째, 기존 통계자료 수집 및 재분석 등이다.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된 통계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표 1-1〉 본 연구에 활용된 각종 통계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 보건복지백서
• 도시가계조사	• 식약청 및 지자체 수거실적보고자료
• 가계조사	• 사망원인통계연보
• 교육통계연보	• 범죄분석통계
• 검찰연감	•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 농가경제통계	• 노동통계연감
• 인구총조사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가계동향조사
• 장래인구추계	• 한국통계연감
• 인구동태통계연보	• 대한석유협회 자료
• 사회통계조사	• 소비자물가지수
• 사회조사	• 국민소득
• 국민연금통계연보	• 통화별 환율조사통계
•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 등록장애인 현황자료	• 한국은행 개인/기업부채 자료
• 생명표	• 국제투명성기구 자료
• 사망원인통계연보	

1) 사회위기 측정단계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시계열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각 년도 사회위기 수준을 점수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1990년 이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각 지표의 사회위기 수준을 측정한다(1단계). 각 지표가 해당 영역의 사회위기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차등적용하기 위해, 지표 별 사회위기 점수에 '지표 가중치'를 적용한다. 지표 별 사회위기 점수에 지표 가중치를 적용한 후, 이들을 영역 별로 합한다. 이 값을 영역 별 사회위기 점수라고 정의한다(2단계). 마지막으로, 각 영역의 사회위기 점수에 ‘영역 가중치’를 적용

하고, 모든 영역의 가중화된 사회위기값을 모두 합한다. 이를 우리나라 사회위기 점수라고 말한다(3단계).

지표 별 사회위기 점수, 영역 별 사회위기 점수, 우리나라 사회위기 점수 모두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며 0~4점이 부여된다. 또한 영역 별 사회위기 점수와 우리나라 사회위기 점수는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100점으로 환산된 값도 함께 제시한다. 이를 도식으로 표현하면 <표 1-2>와 같다.

〈표 1-2〉 사회위기 측정의 세 단계

지표	지표의 위기점수					
	위기수준	매우 안정상태	비교적 안정상태	보통	비교적 위기상태	심각한 위기상태
	점수	0	1	2	3	4

⇩ (지표별 가중치 적용)

영역	영역의 위기점수					
	위기수준	매우 안정상태	비교적 안정상태	보통	비교적 위기상태	심각한 위기상태
	점수	0	1	2	3	4
	환산점수	0~20	21~40	41~60	61~80	81~100

⇩ (영역별 가중치 적용)

전체	전체 사회의 위기점수					
	위기수준	매우 안정상태	비교적 안정상태	보통	비교적 위기상태	심각한 위기상태
	점수	0	1	2	3	4
	환산점수	0~20	21~40	41~60	61~80	81~100

2) 세부지표의 사회위기 수준 측정방법

모든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점수는 0~4점 범위의 5점 척도값에 의하여 산출된다. 이들 지표의 사회위기 수준은 절대평가법 또는 상대평가법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각 지표의 특성에 따라 결정하였다.

가) 절대평가법

절대평가법은 지표 값 자체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여 각 지표의 사회위기 수준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지표의 수치 자체가 사회위기 수준을 의미할 때 사용한다. 각 지표별 사회위기 수준의 점수는 이론 및 관련 전문가의 견해에 근거하여 선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 '출산율'의 사회위기 점수를 절대평가법으로 산출하였는데, 출산율은 2.1명이 안정적 수치로 학술적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 상대평가법

상대평가법은 지표 값의 변화추이가 사람들의 사회위기 체감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지표 값 자체가 아닌 변화방향 및 정도가 국민의 위기체감도에 미치는 영향정도로 위기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지표에서 사용한다. 실제로, 마약사범수는 인구 10만 명당 일정한 수를 유지해야 안정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마약사범수는 특정시점에서 전년도보다 갑자기 마약사범수가 급증한 경우, 국민의 사회위기 체감도는 크게 증가한다. 즉, 마약사범수의 증가추세 자체가 사회위기 수준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전년도의 마약사범수 증가율이 매우 높고 금년의 증가율이 예년과 마찬가지의 보통 수준으로 떨어졌다면, 국민들은 상대적 안정감을 가져 사회위기 수준은 저하된다. 이와 같이, 상대평가법은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시계열 자료를 통해 산출한 각 년도의 평균 변화율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통해 사회위기 수준을 측정한다. 상대평가법에 의한 세부지표별 사회위기 점수 산출절차는 다음의 두 단계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변화추세에 대한 위기점수 부여

최근 5개년 변화율의 평균을 임계치로 하여 지표값의 변화 방향을 살펴본다. 지표값이 사회위기 수준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는지, 위기수준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했는지를 보고 추세값을 부여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전년도 대비 변화율과 최근 5개년 평균 변화율의 절대값을 구한다. 만약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5개년 평균 변화율의 절대값 범위 내에 있다면, 3점을 부여한다.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5개년 평균 변화율의 절대값 범위 내에 있다면 변화율이 다소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어도 3점을 부여하였는데, 이는 지표값은 매년 변화하는 가변적 성질의 수치로써 약간의 변화는 국민의 위기체감도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율만 위기수준 변화에 반영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최근 5개년 평균 변화율의 절대값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 위기수준이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보고 3점을 부여하였다. 만약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5개년 평균 변화율의 절대값 범위를 넘으면서 사회위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한 경우, '위기상태'의 4점을 부여하였고, 사회위기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화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의 식(式)은 다음과 같다.

〈표 1-3〉 변화추세에 대한 위기점수 부여 방법

위기점수		계산식
2점	지표값의 상승이 위기수준 증가를 의미하는 지표인 경우	$C_{kj,\,t+1} < -\lvert M(C_{kj})\rvert$
	위기수준 감소를 의미하는 지표인 경우	$C_{kj,\,t+1} \geq \lvert M(C_{kj})\rvert$
3점	지표값의 상승이 위기수준 증가를 의미하는 지표인 경우	$-\lvert M(C_{kj})\rvert \leq C_{kj,\,t+1} < \lvert M(C_{kj})\rvert$
	위기수준 감소를 의미하는 지표인 경우	
4점	지표값의 상승이 위기수준 증가를 의미하는 지표인 경우	$C_{kj,\,t+1} \geq \lvert M(C_{kj})\rvert$
	위기수준 감소를 의미하는 지표인 경우	$C_{kj,\,t+1} < -\lvert M(C_{kj})\rvert$

. $C_{kj,\,t+1} = \dfrac{I_{kj,\,t+1} - I_{kj,\,t}}{I_{kj,\,t}}$. $M(C_{kj}) = \dfrac{\sum_{i=1}^{5}(C_{kj,\,t-i})}{5}$

위의 방법을 통해, 최근 5개년 평균 변화율과 비교하여 지표값이 사회위기 수준에 긍정적으로 변화했는지, 부정적으로 변화했는지를 알 수 있다.

② 변화 증감폭에 대한 위기점수 부여

위의 변화추세에서 변화방향을 보았다면 이번에는 변화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최근 5개년 평균 변화율로부터 벗어난 정도를 위기점수로 환산하였다. 이를 위해, 최근 5개년 평균 변화율을 산출한다. 또한 1990년 이후 각 년도 변화율 중 상하(上下) 극단치를 제외한 나머지 년도의 평균 변화율을 구한 후, 이를 10으로 나누어 절대값을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5개년 평균 변화율을 중심으로 하여 10분위 절대값을 가감하여 위기점수 범위를 산출한다.

지표값 자체의 상승이 사회위기 증가를 의미하는 경우, 10분위 절대값을 더한 범위가 위기상태를 나타낸다. 만약 지표값의 상승이 사회위기 감소를 상징하는 경우, 10분위 절대값을 더한 범위가 안정상태를 의미한다.

〈표 1-4〉 변화 증감폭에 대한 위기점수 부여 방법

위기점수		계산식
0점	지표값의 상승이 위기수준 증가를 의미하는 지표인 경우	$C_{kj,\,t+1} < M(C_{kj}) - 3D(C_{kj})$
	위기수준 감소를 의미하는 지표인 경우	$M(C_{kj}) + 3D(C_{kj}) \le C_{kj,\,t+1}$
1점	지표값의 상승이 위기수준 증가를 의미하는 지표인 경우	$M(C_{kj}) - 3D(C_{kj}) \le C_{kj,\,t+1} < M(C_{kj}) - D(C_{kj})$
	위기수준 감소를 의미하는 지표인 경우	$M(C_{kj}) + D(C_{kj}) \le C_{kj,\,t+1} < M(C_{kj}) + 3D(C_{kj})$
2점	지표값의 상승이 위기수준 증가를 의미하는 지표인 경우 위기수준 감소를 의미하는 지표인 경우	$M(C_{kj}) - D(C_{kj}) \le C_{kj,\,t+1} < M(C_{kj}) + D(C_{kj})$
3점	지표값의 상승이 위기수준 증가를 의미하는 지표인 경우	$M(C_{kj}) + D(C_{kj}) \le C_{kj,\,t+1} < M(C_{kj}) + 3D(C_{kj})$
	위기수준 감소를 의미하는 지표인 경우	$M(C_{kj}) - 3D(C_{kj}) \le C_{kj,\,t+1} < M(C_{kj}) - D(C_{kj})$
4점	지표값의 상승이 위기수준 증가를 의미하는 지표인 경우	$M(C_{kj}) + 3D(C_{kj}) \le C_{kj,\,t+1}$
	위기수준 감소를 의미하는 지표인 경우	$C_{kj,\,t+1} < M(C_{kj}) - 3D(C_{kj})$

$$M(C_{kj}) = \frac{\sum_{i=1}^{5}(C_{kj,\,t-i})}{5} \qquad D(C_{kj}) = \left|\frac{M(C_{kj})}{10}\right| \qquad C_{kj,\,t+1} = \frac{I_{kj,\,t+1} - I_{kj,\,t}}{I_{kj,\,t}}$$

이를 통해 1990년 이후 평균 변화율 대비 각 년도 지표값의 증감폭에 따른 위기수준 점수를 알 수 있다.

③ 최종 지표의 위기수준 점수 산출

변화추세 및 변화 증감폭을 통해 산출한 값의 평균을 반올림한 값이 각 지표의 최종 위기수준 점수이다.

3) 영역별 위기점수 측정

앞서 측정된 각 지표의 위기점수에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영역별 위기점수를 측정할 수 있다. 영역별 위기점수는 지표별 위기점수와 마찬가지로 0~4점 범위 내에 있으며,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100점으로 지수화된 수치도 함께 제시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가) 지표별 가중치 산정

지표별 가중치는 각 지표의 위기수준이 해당 영역의 위기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차등적용하기 위한 값으로, 약 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에 얻어진 지표 및 영역별 영향력에 대한 응답결과에 근거하여 산출되었다.

각 지표가 해당 영역의 위기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0~10점의 범위 내에서 조사하였는데, 지표별 가중치를 구하기 위해 먼저 각 지표별 영향력의 평균을 산출한다. 즉, 각 지표별 응답된 영향력의 총합을 응답자수로 나눈다. 이를 해당 영역내 모든 지표 영향력의 합으로 나누어, 각 지표가 해당

영역의 영향력 중 각 지표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한다. 지표 가중치는 각 지표가 해당 영역의 위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상이한 값을 가지며, 각 영역내 모든 지표들의 가중치 합은 1.0이다.

$$W_i = \frac{E_i}{\sum_{j=1}^{n} E_j}$$

W_i=지표i 가중치 E_i=지표i 영향력평균 j=영역내 지표번호

나) 영역별 사회위기 점수 산정

각 지표의 사회위기 점수에 지표별 가중치를 곱한 후, 영역 내 모든 지표들의 가중치와 사회위기 점수 곱을 합한다. 이 값이 해당 영역의 사회위기 점수이다(1단계). 영역 내 모든 지표의 가중치 합이 1이기 때문에, 가중치를 적용했더라도 영역별 사회위기 점수는 가중치 적용 전과 마찬가지로 0~4점 범위 내에 있게 된다. 또한 영역 간 사회위기 점수 비교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각 영역의 사회위기 점수를 100점으로 지수화한 값도 함께 제시한다(2단계).

단계	계산식
1단계	$PI_t = \sum_{i=1}^{n} I_i W_i$
2단계	$HPI_t = \frac{PI_t}{4} \times 100$

PI=영역 위기점수 HPI=(100점 환산)영역 위기점수

t=연도 W_i=지표i 가중치 I_i=지표i 위기점수

4) 전체 사회위기수준 측정

영역별 위기수준 점수에 각 영역이 사회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부여된 가중치를 곱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위기 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위기 점수도 0~4점 범위로 산출되며, 100점으로 지수화된 사회위기 점수도 함께 제시된다. 이를 위한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영역별 가중치 산정

영역별 가중치는 각 영역의 위기수준이 전체 사회의 위기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차등적용하기 위한 값으로, 약 5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델파이 조사에 얻어진 영역별 영향력에 대한 응답결과를 활용하였다. 각 영역이 전체 사회의 위기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이 0~10점의 범위 내에서 조사되었으며, 영역별 가중치는 영역별 영향력의 평균을 모든 영역 영향력의 합으로 값이다. 즉, 영역별 가중치란, 모든 영역의 영향력의 합계에서 각 영역의 영향력 점수의 비율을 말한다.

$$W_p = \frac{E_p}{\sum_{k=1}^{10} E_k}$$

W_p=p영역 가중치 E_p=p영역 영향력평균 k=영역번호

$$\sum_{i=1}^{n} W_p = 1$$

나) 한국의 사회위기 점수 산정

한국의 사회위기 점수는 각 영역의 위기점수에 영역별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한 값이다(제1단계). 모든 영역의 가중치 합은 1이기 때문에, 가중

치를 적용했더라도 영역별 사회위기 점수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회위기 점수는 0~4점 범위 내에 있게 된다. 또한 영역별 사회위기 점수 산출에서와 동일하게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100점으로 지수화한 값을 함께 제시한다(2단계).

단계	계산식
1단계	$SPI_t = \sum_{k=1}^{10} PI_k W_p$
2단계	$PSRI_t = \frac{SPI_t}{4} \times 100$

SRI=사회위기점수 PSRI=(100점 환산)사회위기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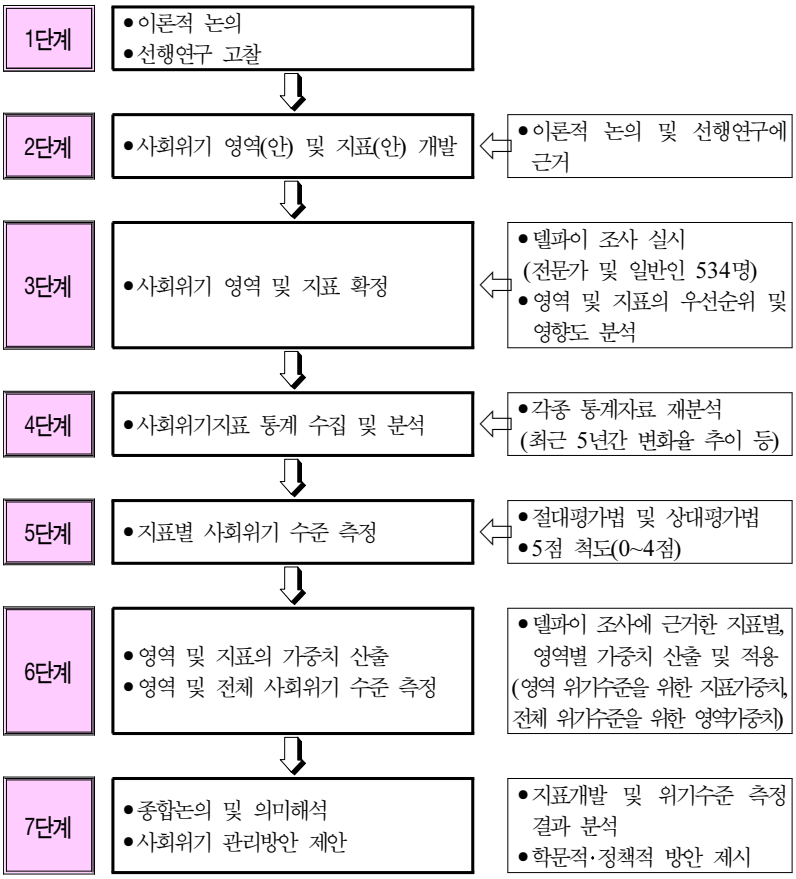
k=영역번호 t=연도 W_p=영역p 가중치 PI_k=k영역 위기점수

$$\sum_{k=1}^{10} W_k = 1$$

3. 연구체계

전체 연구의 흐름도는 7단계로 이루어졌다. 첫 단계는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고찰, 둘째 단계는 사회위기 영역(안) 및 지표(안) 개발, 셋째 단계는 사회위기 영역 및 지표 확정, 넷째 단계는 사회위기지표 통계 수집 및 분석, 다섯째 단계는 지표별 사회위기 수준 측정, 여섯째 단계는 영역 및 지표의 가중치 산출과 영역 및 전체 사회위기 수준 측정, 마지막으로 일곱째 단계는 종합논의 및 의미해석과 사회위기 관리방안 제안 등이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그림 1-1]과 같이 제시된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제3절 연구의 제한점

한 사회의 사회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생산 가능한 각종 지표가 시계열적으로 필요하다. 각 지표들이 사회위기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를 의미하는 「상관도」 또는 「기여도」의 이론적·실증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한계점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위기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그것을 다각도에서 반영하는 많은

지표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활용 가능한 지표가 충분치 않아 정확한 사회위기 수준의 측정이 곤란하다. 둘째, 비록 기존의 지표일지라도 규칙적 및 지속적으로 생산되어 있지 않아 「시계열 분석」에 장애가 있다. 셋째, 각 지표가 사회위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는 시대와 개인에 따라 달리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없어 현재의 준거틀에 의하여 사회위기 지표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넷째, 한국사회의 위기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물론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결과의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사회위기에 대한 국내 최초의 공식적 시도[1]로서 정책개발 및 관련 연구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1) 비공식적 시도는 본 연구자에 의하여 1998년과 2002년 두 차례 시도되었다. 이들 연구는 정보기관에서 활용하기 위하여 위탁으로 추진된 것이며,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결과물도 정보기관의 내부 자료로만 활용되었다.

02

사회위기의 개념 및 특성과 담론

제2장 사회위기의 개념 및 특성과 담론

제1절 사회위기의 개념

1. 위기의 개념

더글라스와 윌다브스키(Douglas & Wildavsky)의 『Risk and Culture』(1982)에 의하면,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은 위험에 대한 정의와 인지가 다르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위험수용성이 문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채경석(2007)은 위험수용성이 문화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지만, 문화는 세계관의 반영이고, 가치와 생활방식의 표출이기 때문에 위험수용성을 설명하는데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위험과 문화'의 관련성은 '위기와 문화'의 관련성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헤르만(Hermann)은 다음 세 가지를 '위기'가 갖는 특성이라 하였다. 첫째, 의사결정단위의 최우선 목표가 위협을 현저히 받고 있는 경우이다(high threat). 둘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응을 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이다(short time), 셋째, 위기발생으로 작게는 정책결정자들, 크게는 일반대중들이 놀라게 되는 상황발발의 충격성 또는 돌발성이 있다.

2. 사회위기의 개념

최근 현대사회에서 발생되고 있는 개인, 가족, 사회문제로 인한 위기적

상황에 대해 일반인의 관심과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문제의식의 공유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정당성의 위기, 국가권위의 위기, 법질서의 위기, 공권력의 위기, 환경의 위기, 가족위기, 10대 청소년 위기 등 「위기」에 대한 무수한 담론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위기」라는 용어는 문제에 대한 이성적 인식보다는 감정적 호소로서 작용하는 면이 지대하여 문제시 된다. 따라서 동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오히려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며, 「위기」의 의미는 상식적 수준이 아닌 보다 정교한 이론적 작업에 기초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추상적 수준에서의 위기의 개념은 광의의 위기개념과 협의의 위기개념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광의의 위기개념

광의의 위기개념은 한 사회에서 유지되어 오던 평형감(平衡感), 질서, 권위, 합의, 도덕성 등에 가해진 사회 내·외부의 충격으로 기존의 사회체제가 의문시되거나 변화 또는 해체되는 과정으로, 기존의 질서에 가해진 변화의 충격 자체 및 그 결과, 그리고 이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집합이다. 따라서 「위기」는 진보성과 보수성,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를 함께 지니며, 어떠한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가치해석이 완전히 상이하다. 즉, 한 사회의 「역사」가 '역사적 사실과 그 해석'의 결과이듯이, 「위기」도 '실제 상황과 인지적 해석'의 중복적 효과성을 의미한다.

나. 협의의 위기개념

협의의 위기개념은 광의의 위기개념과는 달리 상식적 수준에서 이해되는 개념으로 '외부 또는 내부의 적(enemy)'에 의한 위협이 있는 상황이거나 그러한 위협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혼란 상태를 의미한다. 여기서 '적(enemy)'이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기요소, 즉 위기를 유발하

는 요인으로 각종 유형 및 무형의, 물질적 및 비물질적 자원과 다양한 사회현상, 비정상적인 상태 등을 모두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이와 같은 협의의 위기는 그 추상성의 수준에 따라 재난(disaster), 위험(risk), 갈등(conflicts), 그리고 위기(crisis)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가장 추상성 수준이 높은 위기(crisis)개념은 광의의 위기개념과 거의 유사하게 보이나 해석 또는 사람들의 인식결과에 따른 위기의 측면보다 사회적 혼란의 가시적 양태를 더 중시한다는데 차이가 있다.

3. 위기관련 유사개념

가. 위험(risk)

「위험」은 산업자본주의 사회가 기술적으로 고도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른 필연적 상황으로 파악된다. 「재난」과 「위기」가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위험상황의 일회적 사건화가 바로 재난이다. 예를 들면, 구(舊) 소련의 체르노빌 폭발사건을 재난이라고 한다면, 핵발전소 안전문제는 대부분의 사회가 안고 있는 위험 요소라 하겠다.2)

울리히 벡(Ulrich Beck)은 현대 산업사회를 '위험사회'(risk society)로 규정하였으며, 산업자본주의사회에서의 「위험」은 일상적으로 구조화된 현상이라 하였다. 이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위험이 일상화되어 있고, 개개인은 그들의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그러한 위험에의 노출이 강제되며 또한 위험요소의 영향은 전 사회구성원에 보편적으로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주의적 합리화와 과학기술적 합리성의 역설, 즉 근대화에 대한 맹신이 빚어낸 부정적 위험성이 부수적 문제가 아닌 현 시대의 필연적 산물로 자리 잡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험은 한 사회 및 특정 계급에 한정되어 있지

2) Singer & Endreny(1993)는 위험을 자연재해, 에너지위험, 물질적 위험, 경제적 활동의 위험, 질병, 기술적 위험, 그리고 비용 관련 위험 등 7가지 형태로 나눈다.

않은 일종의 전 지구적 현상으로 판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결핍은 계급적 위계질서나 민족 간 차별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오염의 위험은 전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라 하겠다.

찰스 페로우(Charles Perrow)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위험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불충분하여 재해발생이 불가피함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위험발생의 확률은 계산하기 어려우며, 불확실성 속에서 위험에 대한 일반인의 의식은 민감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체념이나 냉소적 불감증으로 표출하게 된다.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이 보다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다는 식으로 객관화해버리는 경향인 「제3자적 효과」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위험적 요소들은 상호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들 중 어떤 것이 실제 위험과 인과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의 규명은 난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예측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고 효율적인 「통제 및 예방 메커니즘」을 마련하는 것은 산업복지국가의 핵심적 역할이라 하겠다.

나. 갈등(Conflicts)

갈등은 여러 개인 및 집단이 동일한 가치대상 혹은 희소한 자원을 경쟁적으로 추구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상호 양립할 수 없는 목표 혹은 특정 쟁점을 둘러싼 상호 불용납(不容納)의 태도에 의해 나타나게 된 개인 및 집단 간 충돌적 관계를 의미한다. 크리스버그(L. Kriesberg)는 이를 "차이에 따른 갈등(dissensual conflict)"이라 하였다. 즉, 「갈등」이란 한 집단이 추구하는 궁극적 가치가 상대집단에 의해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기본적 차이로 나타날 때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3].

「갈등」은 일반적으로 인식하는 것처럼 단순한 물리적 이익을 둘러싸고

3) 그 전형적인 예는 종교 갈등에서 찾을 수 있다. 종교적 가치의 기본적 차이 혹은 종교적 '루트 패러다임(Root Paradigm)'의 차이가 민족 간 또는 국가 간 갈등으로 확대된 경우는 인류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벌어진다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관점의 차이 혹은 시각의 불양립성(不兩立性)에서 발생한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지역갈등'은 한국 사회의 특수한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인식 전반의 이해관계로 인해 심화된 갈등의 형태이다. 이러한 성격을 갖는 지역갈등은 정치·경제적 자원의 불균형적 배치와 지역적 편견이 '지역감정'으로 정치이데올로기화 한 사회심리적 측면과 공존하게 된다. 따라서 그것은 객관적 원인과 주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다.

다. 재난(Disaster)

「재난」은 추상성이 가장 낮은 위기의 형태로, 특정사건에 의해 직접적으로 비롯된 사회적 결과로서의 피해상황을 의미한다. 프리츠(Fritz)는 「재난」을 '특정 시점에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여 그 전체 지역사회 또는 사회에 심각한 인명적 피해,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를 입혀 그 사회의 정상적인 기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사건'으로 정의하였다. 김영수(1993)는 「재난」을 '인간의 사회생활 및 인명이 자연현상 등 외력에 의해 급격히 교란되는 현상'으로 규정하여 예상치 못한 비의도적, 부정적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재난」은 자연적으로 비롯된 「재해」와 인위적으로 비롯된 「인재」로 구분되며, 그 범위는 대개 사회 전반적이기보다는 국지적(局地的)인 것으로 이해된다.

제2절 위기의 유형과 관리

1. 위기의 유형

일반적으로 위기라는 어휘는 국가적 위기, 정치적 위기, 경제적 위기, 사회문화적 위기, 기업의 위기, 개인의 위기와 같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국제적 위기는 "국가의 안위를 심각히 위협하는 대외적 사건이 예상치

못하는 가운데 충격적으로 발생하여 국가리더십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Charles F. Hermann, 1969).

「위기」는 내부 집단 간 부조화 현상이 심화되거나 외부에서 가해진 위협이 증대되어 사회총체적 불안으로 현재화함으로써 그 사회가 지닌 상황조절 능력을 크게 초과한 상태라 하겠다. 따라서 위기적 요인이 제거되면 안정을 되찾을 수 있고 또한 그러해야 한다는 규범적 시각이 존재한다. 다른 측면에서는 사회적 혹은 집단 내부의 연속성이 부정되면서 나타나는 '급진적 변화(rupture)의 상태'를 「위기」로 보는 가치중립적 해석도 존재한다. 즉, 기존의 체제나 질서가 지녀온 정당성 또는 힘이 상실되면서 비롯된 질서부재의 전복적 상황을 「위기」로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위기」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새로운 변화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 혹은 국면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는 의미를 함축하게 된다.

「위기」는 유동적 상황이면서 또한 과정을 의미하며 사회와 가족, 가치체계, 정치, 경제, 환경, 그리고 자연적 충돌 등 모든 영역에서 일어난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불안을 포함한다.

〈표 2-1〉 체계별 위기분류

체계	위기의 종류
정치체계	• 전쟁, 무력시위 • 쿠데타 • 테러 및 파괴활동 • 비행기 납치
경제·기술체계	• 위험물질 유출 • 해양오염 • 수질오염 • 대기오염 • 오존층 파괴 • 방사능 오염·유출 • 산성비 • 일반·핵폐기물 매립 • 구조물 붕괴, 폭발
사회·문화체계	• 인종·민족·지역간 갈등 • 전염병 • 괴질의 출현 • 폭력적 파업, 폭동
자연체계	• 홍수 • 태풍 • 지진 • 가뭄 • 폭염 • 냉해 • 한해 • 우박 • 해일 • 화산폭발

자료: 채경석, 『위기관리정책론』, 문왕사, 2007.

2. 위기관리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란 다양한 위기를 슬기롭게 관리함으로서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위기관리는 고도로 전문성을 요하는 전략적 판단과 경험적 지혜의 영역에 관한 것이며, 뛰어난 리더십과 정책적 접근에 의해서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위기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리더십의 안정과 정책결정과정의 효율성이 필요하다(채경석, 2007).

위기관리는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분야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의미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채경석, 2007). 모든 위기는 대내·외적 측면의 동시성 및 다발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내부요소는 곧 외부세력의 개입이나 도발로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외부로부터의 위험초래는 무능한 국가 리더십에 대한 내부로부터의 도전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즉, 모든 위기는 대내외적 상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기관리는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다.

국가의 위기관리의 목표는 위기발생으로부터 나타나는 피해의 범위와 강도를 최소화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위기를 예방(prevention and mitigation), 준비(preparedness), 대응(response), 복구(recovery)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사회위기의 관리도 국가차원에서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의미한다.

제3절 사회위기관련 담론

1. 정치사회학적 관점

본 연구에서는 「위기」관련 정치사회학적 이론을 살펴본다. 「위기」에 대한 두 가지 사회학적 입장으로서 오페(Offe)의 견해와 구겐베르거(Gugenberger)의 견해를 고찰한다.

가. 오페(Offe)의 관점

전통적 위기 개념은 사회체계 수준에서의 위기경향(Tendency towards Crisis)이나 위기편향성(Crisis-Proneness)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고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오페(Offe)는 사건의 수준이 아닌 '사건'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라는 보다 상위의 수준에서 「위기」를 개념화 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과정'을 중시하는 개념 정의를 내린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기존체계와는 낯선 또는 체계 파괴적 사건의 발생으로 인해 체계의 정체성이 위태롭게 되는 과정을 위기로 이해한다. 오페는 국가의 위기관리체계 부재에 따른 '위기관리의 위기(Crisis of Crisis Management)' 현상을 후기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나. 구겐베르거(Gugenberger)의 관점

보수적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도 현대사회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그렇지만 위기의 원인을 시민사회의 탓으로 돌려 아래로부터의 '기대의 과부하'에 따른 국가기구의 개입 및 조정능력 부족 현상으로 위기를 인식한다. 구겐베르거(Gugenberger)는 '고삐가 풀린 채 아무런 반성 없이 터져 나온 시민의 탐욕'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견해에서는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의 조절능력 확보에 앞서 대중의 지나친 욕심을 적당한 수준에서 통제할 것을 강조하게 된다.

오페(Offe)가 위기를 후기자본주의사회의 필연적 속성으로 파악한 반면, 구겐베르거(Gugenberger)는 대중의 무질서, 무책임성에서 그 본질을 찾는다. 예를 들면, 1998년 전후의 경제위기를 국민의 소비 지향적 의식에서, 현대사회의 교통위기를 질서 의식의 부재에서 찾는 많은 담론들이 이러한 관점과 동일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위기의 원인에 대한 많은 이론적 논의는 결국 그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모색이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국가 체계적 차원, 즉 재난·위기관리체제의 정비 및 개선방향과 병행하여 위기를 논의하는 경향을 갖는다.

2. 사회위기와 변화수준: 이스튼(David Easton)의 관점

이스튼(David Easton)에 의하면, 변화는 권력엘리트, 체제, 총체로서의 체계라는 세 가지 수준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때의 변화는 위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다. 즉, 변화를 수반할 때 위기의 증폭이 발생되는 것이라 하겠다. 이들 변화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변화인 권력엘리트의 교체는 체제속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다만 제도화된 방식(선거, 지명 등)에 의해서 또는 집단 간의 갈등을 통해서 발생된다는 것이다.

둘째, 체제의 변화는 권력엘리트의 교체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체제 구성원들 사이의 행동양식에 있어서 심대한 수정을 동반하게 된다. 이는 권력엘리트의 교체뿐만 아니라 체계의 구조가 변화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중동원과 집단적 폭력을 수반하는 고전적 의미의 혁명, 1980년대 중남미와 아시아에서의 민주화, 1980년대 말 동구 사회주의 대변혁은 체제변혁 등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총체적 변화로서 체계의 해체(disintegration) 또는 유사한 속성을 지닌 인접체계들의 통합(integration)을 통해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체계 구성원들이 공동체 유지를 위한 분업규칙을 따르지 않을 때, 두 체계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통합된 체계형성에 동의할 때, 그리고 한 체계가 다른 체계를 무력으로 병합할 때 발생한다.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 신생독립국가의 형성, 소련의 해체, 독일의 통일 등이 이에 해당된다. 특히, 총체적 변화는 권력엘리트의 교체나 체제변화 수준보다 포괄적이며, 매우 간헐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제4절 사회위기의 개념 및 특성과 담론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사회위기」는 협의의 개념에 기초하는 것이다. 즉, 이스튼(David Easton)에 의하여 논의된 세 가지 유형의 변화 중 「체제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가시적인 사회불안상태가 초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사회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서 체제변화와 관련된 지표가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사회위기」가 야기되는 상태를 국민의 비정상적 또는 일탈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큰 상태 또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한 집합적, 사회적 우려를 낳게 하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사회위기」 수준은 무엇보다 대중의 일탈적 행위와 불안 심리를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요인과 관련된 지표에 의하여 측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집합행동에 대한 사회심리학적 견해에 의하면, 사람들은 일정한 변화율의 수준에서 지속되는 변화에 대해서는 관성화(慣性化)하여 일상적인 것으로 내면화한다. 즉,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회변화에 대한 기대치가 일정수준에서 유지될 때 사회위기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국민의 기대치에서 벗어나는 수준의 변화는 보다 심각한 것으로 수용한다고 한다. 따라서 일상적 변화율의 정도를 벗어나는 급격한 사회변화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의 갑작스런 증폭으로 이어져 대중의 행동양식의 변화를 야기하며 기존 사회질서 유지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된다. 대폭적인 변화는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돌발 사태나 사회변화의 정도를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그 사회체제의 상황조절능력을 크게 초과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위기를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한 협의의 개념에 기초하면서, '변동성(變動性)'에 초점을 두고 위기수준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사회위기」를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서 파악하여 국가의 위기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

하기 위해서는 사회위기의 지표가 측정 가능(measurable)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정기적(定期的)으로 생산되는 객관화(客觀化)된 것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03

사회위기 관련 선행연구

제3장 사회위기 관련 선행연구

제1절 사회주의체제 위기수준 측정

서구 선진국에서 각 사회의 위기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측정한 연구는 전무하다. 다만,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측정을 위한 두 연구가 수행되었으므로 비록 '체제의 위기'에 관련 된 것이나 위기지표와 측정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석하였다. 아울러 한국사회에서 비공식적으로 수행한 것이긴 하지만 본 연구와 직결되는 것이므로 한국의 사회위기 관련 두 개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본 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1. 브레진스키(Brzezinski)의 사회주의체제 위기수준 측정

브레진스키(Brzezinski, 1989)는 사회주의제제들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1987년 10개 지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10개 지표는 <표 3-1>에 제시된다. 브레진스키의 위기지표에 의하여 측정한 위기지수가 16 이상인 폴란드(27), 헝가리(23), 유고(22), 모잠비크(21), 에티오피아(20), 앙골라(19), 루마니아(18), 체코(16) 등은 모두 붕괴되었고, 15인 소련과 쿠바 중 소련은 붕괴된 반면 쿠바는 존속하고 있으며, 그 외 위기가 낮은 국가인 베트남(12), 북한(8), 중국(8), 동독(7), 불가리아(6)는 사회주의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표 3-1〉 브레진스키의 사회주의체제 위기수준 측정지표

1	사회주의의 대중적 호소력 상실
2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
3	생활수준의 저하
4	공산당의 사기저하
5	종교활동의 증대
6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의 충돌
7	경제적 사유화의 증대
8	정치적 반대의 활성화
9	공개적인 정치적 다원화 요구
10	인권문제에 대한 수세적 대처

김성철 외(1996)는 브레진스키 지표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들 지표는 동구 및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위기수준을 평가하는데 상당히 높은 신뢰성(reliability)을 보여주었다. 1987년 당시 대부분의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 구소련은 모두 "위기" 또는 "심각한 위기" 범주 안에 있었으며, 실제로 1989~1991년 기간에 이들 국가의 체제 붕괴가 이루어졌다. 이는 체제의 내구력이라는 추상적 차원의 개념을 측정하는 적절한 도구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브레진스키 지표의 한계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독과 불가리아는 "위기" 또는 "심각한 위기" 범주 안에 있지 않았지만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었다, 둘째, 브레진스키 지표들은 내면적 세계 또는 이념분석에 너무 치우친 경향이 있다. 10개 지표 중 사회주의의 대중적 호소력 상실, 미래에 대한 비관주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의 충돌, 공산당의 사기저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러한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되풀이하여 측정할 수 있는 모사성 또는 복제성(replicability)의 정도가 낮다. 셋째, 서구식 시민사회를 경험한 체제를 분석하기에는 알맞지만 그렇지 않은 체제에 적용하기에는 부적절한 지표들이 있다. 예를 들면, 정치적 반대의 활성화, 공개적인 정치적 다원화 요구, 종교생활의 증대 등이 부적절한 지표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브레진스키 지표들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위기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 김성철 외(1996)의 북한 사회주의체제 위기수준 측정

김성철 외는 브레진스키 지표를 단점을 보완하여 5개 분야, 분야별 3개 지표인 전체 15개 지표, 각 지표당 1~5개의 측정항목으로 구성된 RINU 지표를 개발하였다. 5개 분야는 이념, 엘리트, 경제, 통제, 대외관계 등이다. 이를 제시하면 <표 3-2>와 같다. 이들 지표는 체제의 위기지수를 측정할 지표들이 이념, 정치, 경제, 사회, 대외관계라는 전통적 분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각 분야별로 3개씩 지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브레진스키의 지표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포함되지 않았던 대외관계를 보완하였음은 위기수준 측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라 하겠다.

〈표 3-2〉 김성철 외의 북한 사회주의체제 위기수준 측정지표: RINU 지표

분야	지표	측정항목
이념	공식이념의 기능	• 일상생활에서의 구속력 • 집단주의 명제 • 부자간 권력승계명제 • 김정일 지도자론 명제 • "우리식 사회주의"우월성 명제
	미래에 대한 비전	• 미래에 대한 희망, 실질적 대가
	공식이념의 민족개념 정당화	• 자주성 원칙에 대한 평가 • 자주성 원칙의 현실성
엘리트	엘리트의 사기	• 직위 및 역할에 대한 긍지감 • 사회주의 원칙에의 충실성
	엘리트 갈등	• 집단적 갈등 유무 • 제도간 이해갈등 유무 • 연고별 집단화 가능성
	관료기구의 기능	• 상부지침의 침투력 • 하위조직의 자의성
경제	사적 경제영역	• 사적 경제영역의 비중
	생활수준	• 식생활, 생필품 및 주거지 • GNP 증감추이
	대외경제관계	• 무역 • 외채
통제	사회통제	• 공안기구의 주민통제 • 공안기구의 범법행위 통제 • 이동 탈북자 증감추이
	정치적 반대	• 불만표출 • 비판세력 존재 가능성 • 체제비판 행위
	반문화의 형성	• 청소년 문화 • 종교활동 • 전통적 집단의식
대외관계	외부정보의 유입	• 남한변화의 인지도 • 중국변화의 인지도
	안보자원의 확보	• 곡물 생산량과 외부유입량 • 원유 도입량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난	•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

위기수준 측정을 위한 방법은 탈북자를 대상으로 '면접 체크리스트'에 의하여 심층면접에 의하였으며, 면접조사가 어려운 지표 및 항목은 기존의 통계자료 또는 기존 분석자료를 활용하였다.

먼저 탈북자 대상의 심층면접은 30명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중 유효한 29명의 응답결과가 통계 처리되었다. 각 측정항목에 대한 응답은 4점 척도(scale)에 의해 이루어졌다. 1점은 '체제에 전혀 위해하지 않고 매우 안정적임', 2점은 '체제에 위해하지 않고 대체로 안정적임', 3점은 '체제에 위해하지만 정도가 낮음', 4점은 '체제에 대한 위해정도가 매우 높음' 등이었다. 이러한 척도의 판단은 최근 10년 동안(1986~1995년)의 시기별 척도의 변화로 보았으며, 특히 사회주의 대변혁(1989년)과 김일성 사망(1994년)을 기점으로 한 변화여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되었다. 위기지수는 먼저 각 지표의 위기지수를 산출하고, 다음으로 이들을 평균하여 총 위기지수를 산출하는 근거로 하였다.

〈표 3-3〉 RINU 지표에 준거한 분야 및 지표별 북한의 위기지수 추이

분야	지표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이념	공식이념의 기능	2.0	2.0	2.1	2.2	2.4	2.4	2.5	2.5	2.4	2.2
	미래에 대한 비전	2.6	2.6	2.6	2.7	2.9	3.0	2.9	3.0	3.1	2.5
	민족개념 정당화	1.8	2.8	1.8	1.9	2.1	2.2	2.2	2.3	2.3	1.9
엘리트	엘리트 사기	2.4	2.4	2.5	2.5	2.6	2.6	2.6	2.6	2.6	2.5
	엘리트 갈등	1.6	1.6	1.7	1.7	1.7	1.7	1.7	1.8	1.8	1.7
	관료기구 기능	1.3	1.3	1.4	1.4	1.6	1.6	1.6	1.6	1.7	2.0
경제	사적 경제영역	2.6	2.7	2.7	2.7	3.0	3.0	3.1	3.1	3.2	2.8
	생활수준	2.0	2.0	2.1	2.1	2.5	2.5	2.9	3.2	3.1	2.7
	대외경제관계	1.0	1.5	1.5	2.5	2.5	3.0	3.0	3.5	4.0	4.0
통제	사회통제	1.7	1.7	1.7	1.7	1.9	2.1	2.1	2.3	2.4	2.4
	정치적 반대	2.2	2.2	2.3	2.3	2.4	2.4	2.6	2.6	2.7	3.1
	반문화의 형성	1.7	1.7	1.8	1.9	2.0	2.0	2.0	2.0	2.0	2.0
대외관계	외부정보 유입	2.4	2.4	2.5	2.6	2.7	2.8	2.8	2.8	2.9	3.1
	안보자원 확보	1.5	1.0	1.0	1.0	1.5	1.5	2.5	3.0	3.5	4.0
	인권문제 비난	2.0	2.0	3.0	3.0	3.0	3.0	3.0	3.0	4.0	4.0
전체 위기지수		1.9	1.9	2.0	2.1	2.3	2.3	2.5	2.6	2.8	2.7

자료: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6. 12.

또한 면접을 통해 정보를 얻기 어렵거나 위기지수 측정이 곤란한 지표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통계자료 또는 기존 분석자료를 활용하였다. 기존 통계자료 활용은 GNP 증감추이, 대외경제관계, 안보자원의 확보 등 경제부문이며, 기존 분석자료의 활용은 탈북자 증가추이, 인권문제 등이다.

제2절 한국의 사회위기 관련 연구

1. 한국 사회의 위기수준(200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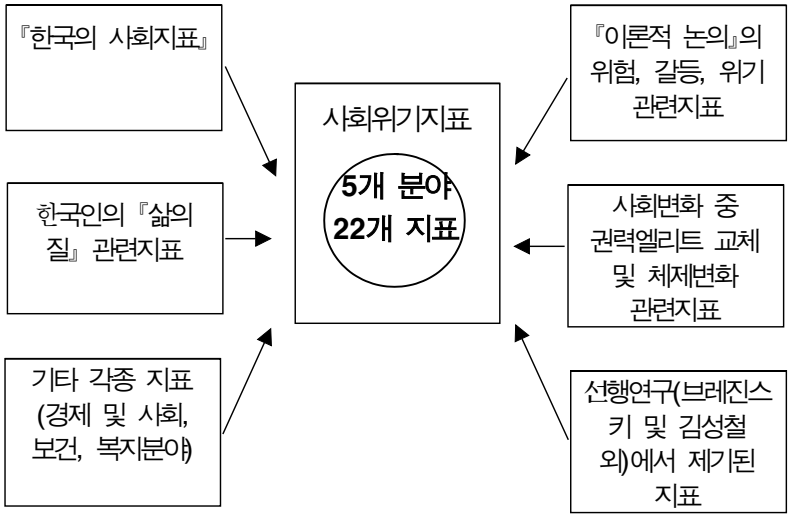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사회위기지표 개발을 위한 전략을 다음 두 가지로 하였다. 첫째, 기존의 각종 사회지표, 복지지표, 『삶의 질』 관련 지표 중 사회안정 및 사회통합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관련되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지표에는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지표』 중 일부지표, 한국인의 『삶의 질』 관련 지표, 위험·갈등·위기 관련 지표 등이 검토되었다. 둘째, 현재 생산되고 있지는 않으나 사회위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지표에 대해서는 조작적 정의에 의하여 대리지표를 작성하여 사회위기수준 측정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도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사회위기수준 측정을 위한 분야와 세부지표는 사회불안을 직접 야기하거나 또는 사회불안 및 해체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는 지표를 선정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즉, 가급적 사람들의 실제 생활에서 생존 또는 안정감과 관련하여 정보를 쉽게 접하고 경험하는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새로운 지표로 개발한 특기할 만한 지표는 고통지수, 불경기 체감지수, 영·호남 지역격차 지수 등이다. 고통지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실업률−경제성장률(GDP성장률)"로 산출된 복합지수이다. 불경기 체감지수는 "전국어음부도율+임금체불률"로 산출하였다. 여기서 전국어음부도율은 "(부도어음액/전체 어음교환액)×100"이고, 임금체불률은 "체불임금발생 근로자수/5인 이상 사업체 종사 총 근로자수)×100" 의하여 산출되었다. 또한 영·호남 지역격차 지수는 "1−[{ ㅣ총생산액비 ㅣ

+ | 실업률비 | + | 어음부도율비 | + | 예금보유액비 | } / 4]"에 의하여 산출되었다.

〔그림 3-1〕 한국 사회의 위기수준 측정을 위한 사회위기지표 개발과정



이 선행연구에서 선정한 사회위기의 분야 및 지표는 다음 <표 3-4>와 같다.

〈표 3-4〉 사회위기수준 측정을 위한 주요 분야와 지표

분야	지표
1. 부패 및 정책불신	• 부패지수 • 정치에 대한 불만족도 • 법 불신도 • 국민여론 정책반영도 • 행정소송건수
2. 국민경제 불안정	• 고통지수 • 불경기 체감지수 • 임시·일용직 비율 • 청년실업률 • 이민·역이민 비율
3. 사회갈등	• 소득집중도(지니계수) • 주관적 중산층 인식도, • 노사분규 참여지수 • 영·호남 지역격차지수
4. 가족 불안정	• 이혼율 • 요보호아동수 • 자살지수 • 비행학생률
5. 개인적 불안전	• 강력범죄비율 • 마약범죄계수 • 산업재해율 • 40대 사망률

이 연구에서의 사회위기수준 측정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 첫째, 시계열 자료에 따른 세부지표들의 위기수준을 측정, 둘째, 지표별 가중치에 의하여 분야별 사회위기수준 측정, 셋째, 각 분야의 사회위기 점수를 합산하고 분야별 가중치에 의하여 사회위기수준 측정에 의하였다.

지표의 위기점수 부여는 지표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지표값 자체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절대평가법), 둘째, 지표값의 변화추세를 고려하여 상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상대평가법)이다. 각 분야별 지표에 의한 사회위기수준 측정을 요약하면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된다. 특히, 상대평가법에서는 추세값(+ 또는 -의 방향성)과 증감폭 값을 중요시하게 다루었는데, 추세값은 2~4 값의 범주에 있도록 하였고, 증감폭 값은 0~4 값의 범주에 있도록 하였다. 이는 추세값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위기지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순위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야별 위기수준과 전체 사회위기수준을 측정하였다.

〔그림 3-2〕 사회위기수준 측정단계

세부지표 (22개)	지표의 위기점수					
	위기수준	매우 안정	비교적 안정	보 통	비교적 위기	심각한 위기
	점수	0	1	2	3	4

↓ ↓

분야별 위기수준 (5개)	지표 가중평균					
	위기수준	매우 안정	비교적 안정	보 통	비교적 위기	심각한 위기
	점수	0~20	21~40	41~60	61~80	81~100

↓ ↓

사회위기 수준	분야별 위기수준 가중평균					
	위기수준	매우 안정	비교적 안정	보 통	비교적 위기	심각한 위기
	점수	0~20	21~40	41~60	61~80	81~100

이 연구의 최종결과인 사회위기수준은 22개 세부지표에 의한 5개 분야별 위기수준을 측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전체 사회위기수준 및 그 수준에

대한 각 분야별 영향력을 연도별로 산출하였다.[4] 100점으로 환산한 위기수준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위기지수	의미
1~20	매우 안정
21~40	비교적 안정
41~60	보통
61~80	비교적 위기
81~100	심각한 위기

이 연구는 결론으로서 부패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정치개혁'의 추진이 요구되며, 법 준수 생활화 운동, '정책 및 입법예고제'의 철저한 실시 및 정책홍보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어서 가족을 안정시키는 정책의 초점을 모아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무엇보다도 가족보호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요구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화, 공보육제도 및 아동수당제도 도입,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엄중대처를 요구하였다. 국민경제적 측면에서 이 연구는 고용 안정화 대책의 추진, 장기실업자의 생활보호와 신규 대졸실업자를 위한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사회갈등과 관련해서는 중산층 세제지원 확대, 사회보험의 부담완화, 주거안정대책 등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 한국의 사회안정수준 측정(2004. 9)

이 연구는 전술한 '한국 사회의 위기수준(2000. 2)'과 유사한 형태에서 접근되었다.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하나는 '사회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대신 '사회안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사용안정'이라는 반대의미로서 '사회불안정'을 유추케 하였으며, 이를 '사회위기'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2000년의 연구와 표현상의 차이만을 보였다고 판단된다. 다른 하나는

4) 위기수준 측정결과는 본 연구가 대외비로 되어 있어 설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이 선행연구에서는 사회불안정 지표의 분야 및 지표로 전체 5개 분야, 23개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는 다음 <표 3-5>에 제시된다.

〈표 3-5〉 사회불안정 지표의 주요 분야와 지표

분야	지표
1. 국민경제 불안정	• 고통지수 • 불경기 체감지수 • 임시·일용직 비율 • 청년실업률 • 이민·역이민 비율
2. 사회갈등	• 소득집중도(지니계수) • 주관적 중산층 인식도, • 노사분규 참여자수 • 지역격차지수
3. 부패 및 정책불신	• 부패지수 • 정부 지지도 • 법 불신도 • 국민여론 정책반영도 • 행정소송건수
4. 가족 불안정	• 이혼율 • 요보호아동수 • 자살지수 • 비행학생률 • 30~40대 실업률
5. 개인적 불안전	• 강력범죄비율 • 마약범죄계수 • 산업재해율 • 40~50대 사망률

지표 중에서 특별히 관심을 주는 것은 지역격차지수이다. 이는 "(1인당 지역총생산량 비율 + 지역예금보유액 비율) / 2"에 의하여 산출되었다. 즉, 광역시와 그 외 지역의 1인당 지역총생산량비, 예금보유액비를 선정하여 그 평균을 지역격차지수로 한 것이다.

사회불안정 지표에 의하여 안정수준 및 불안정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은 전술한 2000년의 연구와 동일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최종결과인 사회불안정 수준은 23개 세부지표에 의한 5개 분야별로 측정하고, 이를 합산하여 전체 사회 불안정 수준을 연도별로 산출하였다.

이 연구는 미시적 측면에서의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갈등을 감소시키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감소에 의한 직장안정화 유도, 실질임금의 인상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21세기 희망찬 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통치권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접근이 요구되는 것이라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가치관적 차원에서 국민계몽을 통한 가족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장기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병행추진에 의

하여 효과를 달성할 것이라 하였다.

제3절 사회위기 관련 각종 사회지표

1. 「삶의 질」 지표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들은 삶의 질의 '정신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나 행복(happiness)을 「삶의 질」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삶의 질」이란 개인이 만족감과 기쁨을 얻고, 불만족과 걱정을 피하는데 있어 성공한 것을 의미(Shin et al., 1983)한다. 그리고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란 특정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느끼는 긍정적 사고정향을 의미한다(Myers & Diener, 1995).

에스핑-엔더슨(Esping-Anderson, 1999)은 사회경제정책(복지정책)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위한 좋은 삶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capabilities(가능성)' 접근은 Sen의 연구에서 유래되었는데, 그는 functioning(기능)과 capability(가능성)의 중요한 구분(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한 개인이 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한다. 그는 1993년도 그의 글에서 시민들의 삶의 상태의 주관적 이해를 고려하여 객관적인 생활상태의 기술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Sen(1979)에게 발전은 인간 가능성의 확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Sen의 연구는 여전히 실용주의적인 개인의 개념 속에 있으며 인간 가능성의 정의와 성취와 관련된 문화적 특성에 대해 중립적이다. Nussbaum(2000)은 문화적 상대주의를 비판하고, 정책과 사고의 가이드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수정되거나 적용될 수 있는 '기능'적 가능성들의 더 많은 리스트를 제공하는 비특이성 이론(non-specific theory)을 발전시켜 왔다(김승권 외, 2008. 재인용).

한편, 「삶의 질」의 정의는 다음의 세 가지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째, 삶의 질을 외부의 객관적 기준이나 조건에 의해 정의하는 것이다. 개인의 삶의 질이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구매능력·교육수준·여가시간·건강상태 등의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해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비교한다. 둘째, 「삶의 질」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상태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수입, 건강, 사회적 지위 등 사회·경제적 지위를 포함한 삶의 객관적 상황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셋째, 개인의 정서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정의는 인간의 삶의 질이 물질적·환경적 외부 요인을 대하는 내적인 태도나 정서 등의 성격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삶의 질」에 대한 개념 규정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용어로 「삶의 질」이라고 할 때는 경제수준·복지·의료·교통·범죄율 등 사회의 객관적인 지표와 개인이 느끼는 삶에 대한 만족감과 긍정적 심리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수는 '즐거움 지수'와 '복지지수'를 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즐거움 지수'는 주관적인 지표로 만족감·행복감 등을 나타내는 것인데, 지적·심미적 만족과 사랑 및 존경에의 욕구 실현에 관한 것이고, '복지지수'는 객관적인 지표로 경제적·물질적 조건과 관련된 주택·이웃·건강·재정형편·자녀양육·친구·여가·정부·교육 등과 관련된 것이다.

가. 삶의 질의 결정요소

1) 경제적 요소

경제적 요소와 관련하여 많은 의견들이 존재한다. 우선, 경제적 조건(개인소득 또는 GDP) 개선이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온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반론들도 많다. 첫째, 경제적 조건과 삶의 질은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호를 주어지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선호체계는 주어진

것이 아닌 시간, 국가, 개인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수입이 동일한 만족정도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Sen, 1979). 둘째, 경제적인 조건은 일정한 정도까지만 삶의 질을 결정한다. Frey & Stutzer(2002)의 연구에 의하면 GDP가 연간소득 US $10,000달러 이상이면 소득증가에 대비한 주관적 안녕감의 증가분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Diener 등(1993)의 연구에 따르면 수입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은 연간소득 US $15,000 이하인 집단에서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셋째, 경제적인 조건 보다 직업유무, 가족관계, 건강, 교육, 사회적 연대, 제도의 질, 소득 불평등 등과 같은 비경제적 변수들이 오히려 더 삶의 질을 결정한다.

2) 사회관계적 요소

사회적 지지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Rudnick & Kravetz, 2001). 가족, 친구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이런 관계가 많을수록 건강(Myers & Diener, 1995)하며, 한국사회에서도 공식적 단체가입 등과 같은 사회적 관계망 가입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박길성, 2002).

3) 사회심리적 요소

행복한 사람은 자기존중감이 높고, 삶에 대한 자기통제감이 높고, 긍정적 사고를 가지며, 외향적 성격을 가진다(Myers & Diener, 1995)는 것이다. Campbell(1981)은 심리적인 인간을 강조하면서 인간은 자신이 느끼는 욕구가 감소 또는 증가할 때 행복을 경험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각 국가마다 고유한 문화가 행복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집단주의 보다 개인주의 문화가 강한 국가에서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Diener & Suh, 1999).

4) 제도적 요소

사회주의적 복지체제(regime)에 속하는 국가에서는 다른 체제(자유주의, 보수주의)에 비해 실업자와 비실업간에 '주관적 복리(subjective well-being)'에서 격차가 없다는 연구(Lapinski et al., 1998)와 경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연구(Michalos, 2003)들이 이러한 제도적 요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Inglehart(1990)는 단순히 국부뿐만 아니라 특정국가에서 민주주의의 지속연수가 전체적인 삶의 질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5) 환경적 요소

Bubolz 등(1980)은 생태론적 시각에서 삶의 질이 사회적 측면뿐만 아니라 자연적 측면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사회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상호작용을 통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6) 신체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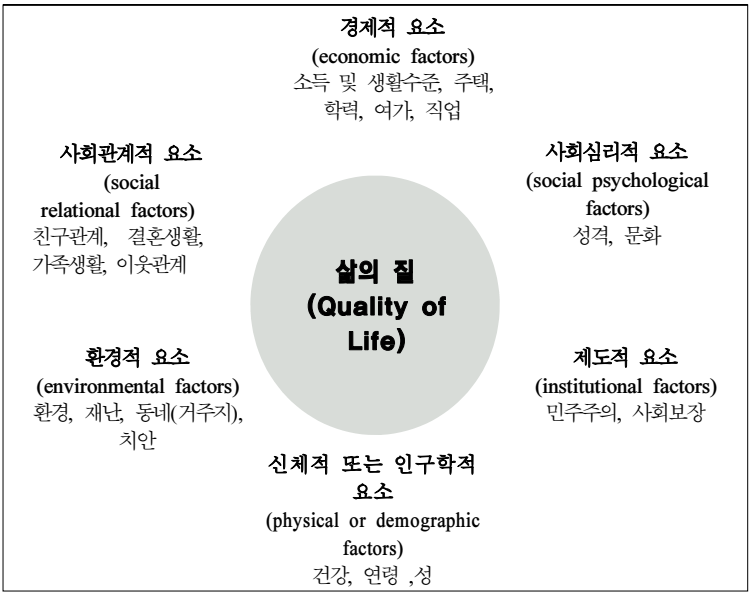
건강이 주관적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건강도 연령이나 애착(affect)에 의해 매개된다는 사실이 규명되었다(George & Landerman, 1984). 또 다른 연구는 국가수준에서 건강 관련 지출비용이 많은 국가일수록 국민들의 심리적, 신체적 안녕감이 높아짐을 보여 주었다(Kirkcaldy, Furnham & Veenhoven, 2002).

나. 삶의 질의 결정모형

삶의 질에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 [그림 3-3]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영향을 주는 6가지 요소는 경제적 요소(economic factors), 사회관계적 요소(social relational factors), 사회심리적 요소

(social psychological factors), 환경적 요소(environmental factors), 제도적 요소(institutional factors), 신체적 또는 인구학적 요소(physical or demographic factors) 등이다. 경제적인 것으로는 소득 및 생활수준, 주택, 학력, 여가, 직업 등이고, 사회관계로는 친구관계, 결혼생활, 가족생활, 이웃관계 등이며, 사회심리적인 것으로는 성격과 문화를 들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것에는 환경, 재난, 동네(거주지), 치안 등이, 제도적인 것으로는 민주주의와 사회보장을 들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신체적 또는 인구학적 요소로는 건강, 연령, 성 등이 포함된다.

〔그림 3-3〕 삶의 질 결정모형



2.「사회적 질」지표

가. 사회적 질의 개념

사회학적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일대기와 역사를 연관 짓고, 건강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조정을 실행하도록 하는 복지와 능력은 시간, 공간(지리적, 사회적), 일생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사회적 질 접근은 'the social(사회의)'이론에 기초한 삶의 질 접근과는 다르게, 매일의 삶의 사회적 환경의 질을 측정한다. 이 접근법은 독립된 개인을 궁극적 실체로 본다. 사회적 질 접근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지만, 개인을 사회상황의 발전 속에서 생활하는 활동적인 주체로써 파악한다. 'the social(사회의)'은 집합적 동일성의 형성과 인간주체로서의 자기-실현(self-realization) 사이의 대립관계 결과로 보인다(김승권 외, 2008).

이러한 관점에서 EFSQ는 사회적 질이란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복(well being)과 개인적 잠재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자신들의 커뮤니티에서의 사회적·경제적 삶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즉 사회적 질을 '사람들이 행복과 잠재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상황 하에서 사회, 경제, 문화적 생활과, 지역사회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사실상 '사회의 질'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유럽연합(EU)의 학자들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질을 포괄적으로 포착해내기 위해 제안한 개념이다. 바람직한 사회의 질에 대한 암스테르담 선언에 1,000명 이상의 유럽학자들이 서명하였으며, 네덜란드 보건복지부와 EU에서 사회적 의제로 채택하였다.

나. 사회적 질의 측정

사회적 질은 개인의 자기실현과 사회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다양한 집합적 정체성 간의 상시적인 긴장의 함수로서, 한편으로 개인의 생애사적 발전과 사회적 발전을 가르는 축(행위자와 구조)과, 다른 한편으로 조직화된 공식성과 친밀한 비공식적 세계를 가르는 축(체계와 생활세계)을 교차하여 다양한 목적을 설정하고 있다. 사회의 질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토대가 되는 다음 네 가지의 구성요소들(constitutional factors)로 이루어진다. 즉, ① 자원(resources), ② 연대감(solidarity), ③ 접근과 참여(access and

participation), ④ 역량강화(enabling) 등이다.

각 구성요소들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은 몇 가지 지표로 측정될 수 있다. 첫째, 사회경제 안전성(socio-economic security) 측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물질적, 환경적 자원 등에 접근가능한가?" 둘째, 사회응집성(social cohesion) 측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그 사회의 사회적 관계가 얼마나 공통의 정체성과 가치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셋째, 사회포용성(social inclusion) 측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사람들은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다양한 제도와 사회적 관계에 얼마나 접근가능한가?" 넷째, 사회역량강화(social empowerment) 측정과 관련되는 것으로 "개인의 역량과 능력발휘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얼마나 활성화되는가?" 그리고 이러한 네 가지 차원의 지표들을 종합하면 총체적인 사회의 질을 지수화(composite index of social quality)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영역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경제 안전성은 사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 토대가 되는 조건이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 인간적 삶을 위한 물질적 환경적 자원을 사회적인 수준에서 제대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빈곤으로부터의 안전, 질병과 재해, 실업으로부터의 안전 등을 포괄한다. 따라서 빈곤율, 주택보급률, 건강보험의 수혜범위, 고용안정성, 산재피해 등의 수준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사회응집성은 사회적 결속과 연대감을 측정하는데 중요하다. 연대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된 신뢰의 수준, 그리고 사회의 제도나 기관에 대한 신뢰의 수준, 이타심, 시민적 참여의식, 다원주의와 관용성 등의 수준을 고려한다. 셋째, 사회포용성은 사회구성원들이 지닌 가치나 신념과 무관하게 그가 단지 사회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사회의 다양한 제도나 기회구조에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규범적 판단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사회포용성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에 대한 가입률, 남녀 간 임금격차나 공직 진출률의 차이, 노동시장 내 장기실업자의 비율과 비자발적으로 차별받은 비정규직의 비율, 노숙자수, 사회보호시설 수감자수, 이웃이나 친구, 친지와의 접촉의

빈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넷째, 사회역량강화는 사회구성원이 정치적인 의무에 따르는 권리라는 형식적 차원보다 훨씬 더 나아가서, 자신이 정치적 과정 뿐 아니라 자기가 속한 공동체 차원에서도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개발하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지를 측정하는 개념이다. 문자해독률, 신문, 인터넷, 문화예술시설의 활용정도, 각종 투표율과 자발적 결사체의 참여정도, 그리고 다양한 정치적인 의사결정기제의 존재유무, 노조조직률과 단체협약의 포괄성,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의 규모, 정신병 유병률이나 자살률 등이 근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내용을 종합화하면 사회적 질의 수용 가능한 수준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하고, 그 네 가지 조건은 다음 [그림 3-4]와 같은 사회적 질의 네 가지 분면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림 3-4〕 사회적 질 모델

광범위한 프로세스

체제 조직 제도		커뮤니티 그룹 개인
[사회-경제적 보장] • 경제보장 • 물질보장 • 고용보장 • 주거보장 • 건강보장	**[응집력]** • 사회응집력 • 경제응집력 • 사회상태응집력 • 정치적 응집력 • 가치와 규범 • 공적 안정성 • 사회자본 네트워크 • 신뢰 • 연대성	
[포용] • 사회적 포용 • 시민권 • 커뮤니티와의 동일성 • 커뮤니티와 노동시장에의 참여 • 사회보장·교육·건강서비스 제공에의 포용 • 정치적 포용	**[역량강화]** • 사회적·문화적 역량강화 • 정치적 역량강화 • 경제적 역량강화 • 사회심리적 역량강화 • 정보역량 강화 • 사회적 유동성	

일대기적 프로세스

다. 사회적 질 지표의 활용

사회적 질 지표의 대표적인 활용사례로 최근 EU에서 행한 세계 주요도시 행복도 및 경쟁력 비교연구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 이는 세계의 주요

10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표본의 주관적 행복에 관심이 있었다. 18세 이상의 1,000명의 사람들의 대표적 표본들은 2006년 11월에 각 10개 도시에서 직접 인터뷰 되었다. 설문에 사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김승권 외, 2008. 재인용).

〈표 3-6〉 사회적 질 지표 활용에 의한 실태조사 문항

분야	질문항
경제	• 나의 도시에서는 많은 취업기회가 있다. • 나의 도시의 생활비는 비싸다.
문화와 교육	• 나의 도시에서는 문화. 여가 시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 • 나의 도시에는 방문객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 나는 나의 도시에서의 교육의 질에 만족한다.
복지	• 개인적 또는 가족의 위기 시, 나는 시의 공공기관이나 시설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나의 도시는 아동을 양육하고 보호하기에 좋은 곳이다. • 나의 도시는 노인, 장애인, 빈민들과 같이 사회적으로 불리한 사람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 • 나는 나의 도시에서의 건강보호의 질에 대해 만족한다.
안전	• 나는 밤에 도시를 걸어 다닐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 나는 교통사고, 화재, 건물붕괴와 같은 다양한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낀다.
환경	• 나는 공공으로 제공된 물을 마실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 나의 도시에서 대기오염은 심각한 문제이다.
생활조건	• 나의 도시에서 대중교통(지하철, 열차, 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은 용이하다. • 나의 주변(내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에는 앉거나 쉴 수 있거나 이웃이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많은 장소가 있다. • 나는 식료품들을 구입하러 쉽게 걸어서 상점에 갈 수 있다(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상점이 있다).
도시행정	• 인터넷을 통해 나의 도시에 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용이하다. • 시 정부는 시민의 문제와 요구를 잘 처리한다. • 시 행정은 투명하다.
지역사회 생활	• 나는 나의 친구나 이웃들이 가능한 한 자주 우리 집에 들르도록 한다. • 나의 도시에는 자원 활동의 기회가 많다.
기타	• 일반적으로 귀하의 건강은 어떠합니까? • 본인이 속한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 귀하는 현재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3.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산출지표

인간보장(human security) 개념은 1994년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 안보의 궁극적인 대상을 인간으로 보는 개념으로 새로운 안보개념이라 하

겠다. 이는 군사감축이나 군비축소 외에도 인권, 환경보호, 사회안정, 민주주의 등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개인의 삶에 대한 보장을 국가안보보다 우선시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군사적인 위협 뿐 아니라 경제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삶의 질, 자유와 인권보장 등이 포함된 것이다. 인간보장의 구성요인은 경제보장, 먹거리 보장, 건강보장, 개인보장, 환경보장, 공동체보장, 정치보장, 군사안보 등이다(http://www.humansecuritycentre.org).

이러한 의미에서 UNDP가 개발한 인간개발지수는 경제, 건강, 교육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에 기초하여 삶의 질과 사회적 질의 측정을 제공한다. 이에는 경제적 요소, 정치적 요소, 좋은 건강,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등 다양한 영역과 지표를 포함해 왔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매년 집계하여 발표하며, 평균수명, 문맹률, 교육수준, 1인당 GDP 등을 측정하여 표준화한 지수이다. 기본적으로 HDI는 인간개발의 수준별 국가의 순위를 나타내거나 국가가 선진국인지, 개발도상국인지, 저개발국가 인지도 제시하기도 한다.

HDI에서 이용하는 개별지표들의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 평균수명지수 = (평균수명－최소값)/(최대값－최소값)
- 교육지수 = 2/3(성인비문맹지수)+1/3(총진학률지수)

성인비문맹률지수는 "(성인비문맹률－최소값)/(최대값－최소값)"이고, 총진학률지수는 "(총진학률－최소값)/(최대값－최소값)"이다.

- GDP 지수 = [log(1인당 GDP)－log(최소값)]/[log(최대값)－log(최소값)]

이러한 지표에 의하여 최종 HDI의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HDI} = \frac{\text{평균수명지수}+\text{교육지수}+\text{GDP 지수}}{3}$$

제4절 사회위기 관련 선행연구의 시사점

본 장에서는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많은 지표들이 논의되었다. 체제의 위

기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검토되었는데, 이는 실증적인 결과와 연결되면서 신뢰도 검증이 가능할 수 있었다. 물론 체제위기와 관련된 두 선행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체제위기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지표로서 손색이 없음을 엿볼 수 있었다. 따라서 주관적인 측면의 지표는 개발하기 용이하지 않겠지만 객관적인 지표는 가능한 한 많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김성철 외(1996)의 RINU 지표는 이념, 정치, 경제, 사회, 대외관계라는 전통적 분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각 분야별로 3개씩 지표를 설정함으로써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는 각 분야의 중요성을 무시한 것으로 전체 모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특히, 사회를 단위로 한 지표뿐만 아니라 사회와 연관을 가지면서도 개인과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많은 지표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삶의 질과 관련된 지표, 사회적 질과 관련된 지표, 개인을 개발하고 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복합적 지표들이 많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지표들이 모두 객관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이며, 지속적으로 생산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는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표들은 사회위기 지표를 개발함에 있어서 주요한 준거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사회적 위험과 달리 사회위기는 변동성을 중요시한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지표를 선정하고, 이 지표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위기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연구가 있었지만 비공개로 수행된 것이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그렇지만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방법론적 측면에서 많은 시사점을 가진다. 먼저 지표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는 점이다. 지표값 자체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절대평가법과 지표값의 변화추세를 고려하여 상대적 의미를 부여하는 상대평가법이 본 연구를 위하여 큰 의미를 지닌다. 또한 상대평가법에서는 추세값(+ 또는 -의 방향성)과 증감폭 값을 중요시하게 다루었다는 점이 본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지표의 중요성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였다는 점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선순위의 설정은 우선순위와 후순위가 반드시 결정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수준의 중요성이 작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라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즉, 두 개의 지표가 동일한 수준에서 우선순위 또는 중요성이 있을 경우에 처리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면, 전문가 또는 일반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가중치가 산출될 수 있을 것이다.

04

한국사회의 압축적 근대성과 사회위기의 구조적 복합성

제4장 한국사회의 압축적 근대성과 사회위기의 구조적 복합성

제1절 개요

지난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는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으나,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제들이 경제적 변화에 못지않게 폭발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인의 삶은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불안을 동시에 노정시키며 극도로 복잡하고 가변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는 서구의 초기 근대화 과정에 준하는 자본주의 산업화 및 도시화에 수반된 사회구조 및 개인생활의 전환으로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갈수록 이러한 설명은 적합성이 떨어지고 있다.

우선 부문에 따라 한국사회의 현실이 서구와 초현대적 추세들을 공유하거나 오히려 서구를 앞서 나감에 따라 서구의 과거를 참고로 한국의 현재를 파악하는 노력은 무의미하게 되었다. 또한 지난 1997~1998년 미증유의 경제위기 및 이에 수반된 광범위한 사회해체 증후군은 서구의 장기적 사회변동 경험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경제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서 지적되고, 또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서 채택된 전방위의 경제·사회적 개방화(세계화)는 더 이상 독립된 한 국가의 차원에서 사회문제들의 원인 및 진행양태를 규명하기가 어렵게 만들고 있다.

사실 사회문제들의 이러한 최근 양상을 논의하기 전에 해방 이후 한국사회가 겪어온 초기 근대화 및 산업화 과정의 특수성에 수반된 복잡다기한

사회문제들의 고유한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에 관한 국가·사회적 대처를 해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특히 경제성장 지상주의적 국정과 시민생활에 수반되어 누적된 구조적 사회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 채 최근의 경제위기 및 세계화의 사회적 충격과 맞물려 한국인들의 삶을 상시적 위기상태로 내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장(章)에서는 한국사회의 이처럼 복합적이고 극단적인 위기상태에 관해 주요한 추세와 구조적 발생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할 수 있는 이론적 시각을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경험적 차원에서 공동연구자들이 고용위기, 교육위기, 주거위기, 인구·가족 위기, 복지위기, 안전·건강위기, 사회통합위기, 경제·사회적 형평성 위기, 경제위기, 정치위기를 파악하는데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2절 압축적 근대성과 위기사회

1. 압축적 근대성

이 연구의 핵심적 개념인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은 연구자가 현대 한국사회의 구조적 특질로서 상정하고, 이를 통해 여러 사회현상을 설명해 왔다. 별도의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한 압축적 근대성의 이론적·역사적 내용을 [그림 4-1]을 중심으로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장경섭, 2009 참조).[5)]

5) 장경섭,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2009; Chang, "Compressed Modernity and Its Discontents: South Korean Society in Transiton", 1999; Chang, "Compressed Modernity in Perspective: South Korean Instances and Beyond", 2009a. 참조.

〔그림 4-1〕 압축적 근대성(compressed modernity)의 다섯 차원

	시간(시대)	공간(지역)
단축(短縮; condensation)	[I] [V]	[II]
압착(壓搾; compression)	[III]	[IV]

압축적 근대성은 시간·공간 영역과 단축·압착 과정의 두 축이 교차해 구성하는 다섯 가지 구체적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시간영역은 물리적 시간(시점, 시량)과 역사적 시간대(시대)를 포괄하며, 공간영역은 물리적 공간(위치, 면적)과 문화적 장소(지역)를 포괄한다. 물리적으로 표준화된 추상적 시공간에 대비해 일정지역의 일정시대는 구체적 문명을 구성하거나 탐지하는 현실적 틀이 된다. 단축은 두 시점(시대)이나 위치(지역) 사이의 이동 혹은 변화에 필요한 물리적 과정이 축약되는 현상을 말한다.6) 압착은 서로 이질적인 시대나 장소에 존재했던 복수의 문명요소들이 일정한 제한적 시공간에 공존하며 상호 압박과 변화를 야기하는 현상을 말한다.7) 시간·공간과

6) 시간·공간의 압축 문제는 하베이(David Harvey, 1980)의 서구 모더니즘 및 포스트모더니즘 설명에서도 핵심적 사안으로 제시된다. 하베이에 따르면, 근원적으로 자본주의 축적 위기 및 그 극복 노력이 지배공간의 확장과 기계적 시간의 보편화로 이어졌고 궁극적으로 자본의 통제 하에 시간·공간의 압축(time-space compression)이 귀결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이 각각 설명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대상에는 근본적인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가 강조하는 "시간을 통한 공간의 파괴" (the annihilation of space through time)나 "시간의 공간화"(the spatialization of time)는 시간과 공간 사이의 복잡한 함수관계까지 감안한 문제의식이지만(Harvey, 1980), 단순화시켜 볼 때 필자가 제시하는 시간·공간의 단축 현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간·공간의 압축이 제 단계 자본주의의 축적 위기 및 공격적 극복노력에 수반된 것이라는 하베이의 주장에 비교해, 압축적 근대성에 있어서 시간·공간의 단축과 압착은 그 배경, 원인, 주체가 매우 다양하고 때로는 우발적이다.

7) 시간·공간의 압착 문제는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논자들이 거론하는 문화적 "잡종성"(hybridity), "혼합성"(syncreticity) 등의 현상(Ashcroft, Griffiths, & Tiffin, 2002)을 한 부분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주로 문예비평으로서 시작된 이 이론을 사회현상 일반에 대한 것으로 확장해 해석하면, 탈식민주의 논자들은 정치적으로 해방된 제3세계 민중과 지식인들에 대해 역사·사회적 주체(subject)로서의 지위를 일정 범위에서 인정하지만 이들의 정신적, 물질적, 제도적 삶은 식민지적(서구적) 문물과 가치를 근원적으로 극복하기보다는 다양한 양태로 토착적 요소들에 결합시킨 상태에서 영위된다고 본다. 물론 탈식민주

단축·압착이 교차해 구성하는 네 가지 차원의 현상들은 다시 서로 복잡한 상호작용을 거쳐 또 다른 종류의 사회현상들을 야기할 수 있다.

압축적 근대성의 제 측면을 한국사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I]는 한국사회가 경제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 농업경제에서 선진 산업경제로 이르는 시간을 다른 사회들에 비해 엄청나게 단축한 것이 실례가 된다. '압축적 경제성장', '압축적 사회 변동', '압축적 근대화' 등 세간에 회자되는 한국사회의 초고속 변화·발전이 이 차원에 속한다.[8] 이러한 압축적 변화는 문화·기술적 영역에서도 확연하여 심지어 이른바 탈현대적 혹은 탈산업사회적 변화의 징후들도 사회 곳곳에 확연하다. 그동안 한국사회가 서구에서 2~3세기에 걸쳐 겪은 근대적 경제·사회 변화를 불과 반세기 정도에 단축해 소화해냈다는 시민들의 자부심은 국가 차원으로 격상되어 지난 세기말에 "해방 이후", "대한민국 수립 이후" 등의 기간을 대상으로 다양한 격변상에 대한 화려한 통계자료집들을 연이어 쏟아내기도 했다.[9] 자동차를 이용해 서울-부산을 도로 체증으로 10시간 이상 걸려 갈 때, 평균 소요시간인 5시간 정도에 갈 때, 과속으로 3시간 만에 갈 때의 여행 기분은 서로 다를 것이며 여행 과정에서의 사고 확률, 도착 후의 피로감 등에서도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한국인들의 과속여행 경험은 과속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되어져야 한다.

의 문화가 (신)식민질서에 대해 "대항적"(oppositional) 혹은 "공모적"(complicit) 성격을 갖는 상황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Mishra & Hodge, 1994), 전자의 상황에서는 식민지적(서구적) 문물과 가치가 존속하더라도 비판과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될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 이러한 탈식민주의 논자들의 지적에 앞서, 여러 사회학자들은 제3세계 근대화 과정에 관한 연구에서 광범위한 잡종화(hybridization)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제기하는 압착 현상의 구체적 측면들에 있어서도, 시간·공간 두 축의 상이한 지점들에 위치하는 다양한 문물과 제도가 맞닥뜨리거나 뒤섞이는 과정이 역사·사회적 주체로서 구체적 한국인들의 이념과 의지에 의해 상당 부분 규정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다만 여기에서 압착 대상이 되는 문물과 제도들의 범위가 탈식민주의 논의에서 제기되는 것보다 훨씬 넓어 탈현대적, 범세계적 요소들까지 포괄하며, 압착 현상의 구성이 잡종화와 혼합화에 국한되지 않고 경쟁, 충돌, 접합, 화합 등 매우 다양한 과정을 포괄한다.

8) 필자의 '압축적 근대성' 이론을 종종 '압축적 근대화'와 혼동하는 분들이 있는데, 변화의 시간적 단축을 강조하는 후자는 시·공간의 단축과 압착을 모두 포괄하는 전자의 하위범주가 된다.

9) 예를 들어, 『통계로 본 대한민국 50년의 사회경제상 변화』(통계청, 1998).

[II]의 실례로 한국사회가 지난 세기 내내 다양한 양태의 외세 지배를 받으면서 정치제도에서부터 생활문화에 이르기까지 지리적 거리나 차이와 무관하게 다른 지역(사회)의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변화해 온 사실을 들 수 있다. 식민주의적 혹은 제국주의적 외세가 한국사회를 물리적으로 복속시킨 후 이질적인 지역환경에서 배태된 이념, 제도, 기술 등을 '실크로드'와 같은 문물교역 경로를 생략하고 한국인들에게 직접적으로 강요하는 가운데 공간(지역)의 단축이나 해체가 이루어졌다.[10] 특히 식민지 시대 및 산업화 시대의 한국 도시화는 제도적 대외모방성과 경제적 대외의존성의 심화과정이었으며 결과적인 공간 단축으로 생성된 현대도시들은 토착 문명과 전혀 무관한 이종(異種)공간이다.[11] 한국인들의 자체 의지에 의한 공간 단축은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정보화 및 세계화에 의해 한층 가속화되었다. 특히 정보통신산업의 획기적 발전에 힘입어 한국이 정보화 선도국 반열에 오름으로써 전자통신 수단에 의한 공간의 단축 혹은 극복은 21세기 발전전략의 화두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이 더해져, 불과 얼마 전까지도 해외여행 경험이 일부 엘리트층에 국한되었던 한국사회가 이제 그 내부에서 서구적 제도와 문물이 급속히 확장되어 가면서 한국인들은 움직이지 않고도 (유사)서구적 공간을 생활 속에서 체험하게 된 것이다.

[III]은 각 사회영역에서 [I]이나 [II]의 결과로 나타난 현대적 혹은 초(탈)현대적 문물과 제도들이 미처 변화하지 못했거나 인위적으로 유지·강화된 과거 문물들과 혼재하며, 제한된 존재입지 속에서 이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 충돌, 접합, 화합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이른바 "비동시성의

10) 이민족 사이의 식민지배에 의한 이러한 공간(지역) 단축(space·place condensation)은 미국이나 호주에서처럼 이민족이 아예 토착민족을 '인종청소'(ethnic cleansing)하고 본국의 지역 문물을 그대로 재현하는 공간 대체(space·place replacement)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공간 대체의 경우는 문물과 사람이 함께 오기 때문에 공간 압착(space·place compression)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물론 미국과 같은 경우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이 말해주듯이 신대륙 정복이 어느 정도 새로운 정치·사회·경제 체제의 창출과정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공간 창출(space·place creation)의 성격도 미국 역사(근대성)에 부여할 수 있다.

11) 예를 들어, 미국 대사관 및 미군기지 재배치 문제가 말해주듯이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의 공간적 정체성이 아직도 불확실하며, 전국 곳곳에 설치된 대학들이 서구문명의 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사실 역시 공간 단축의 핵심적 증거이다.

동시성"(the contemporaneity of the uncontemporary)으로 지칭되는 현상으로서 변화조건이 복잡한 문화나 이념 같은 비물질적 영역에서 흔히 관찰된다.[12] 특히, 한반도에서는 내생적 사회혁명을 통한 봉건적 사회체제의 철저한 극복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이후의 식민지화, 자본주의 산업화 등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가치와 문화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부정되어진 적이 없다. 또한 사회발전에 따른 노인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전통적 가치와 문화는 이를 견지하려는 장수 노인들과 함께 사회적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현대적·탈현대적 가치와 문화가 공존하며 이질적 시간대들의 문명적 압착이 이루어져 왔다. 시간적 압착은 문화·이념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영역에서도 관찰되었는데, 이른바 "불균형 성장"(unbalanced growth) 전략에 따라 현대적 도시제조업들의 급속한 성장 이면에 전통적 소생산체제가 강제된 농업은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상이한 역사적 시간대를 대표하는 이질적 생산체제들 사이의 이른바 접합(articulation)이 현대적 경제질서의 핵심적 측면이 되었다. 이처럼 역사적 시대들이 압착되어 공존하는 사회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일상생활이나 인생은 끊임없는 '시간여행'으로 채워져 왔다고 볼 수 있다.

[IV]는 [I]이나 [II]의 결과로 나타난 외래적, 다국적 혹은 범세계적(global) 문물과 제도들이 토착적 문물, 제도들과 혼재하며, 역시 제한된 존재입지 속에서 이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 충돌, 접합, 화합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역적 발생조건이 다른 문물과 제도들이 동일한 시공간에서 함께 존재하고 기능하는 과정에서 사이드(Edward Said)가 비판한 "동양주의"(orientalism)같은 종속적 혹은 식민적 위계구조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비슷한 위계구조가 제3세계 발전과정에서는 이른바 개발의 "도시편향성"(urban bias)으로 나타나 토착적 농촌·농업·농민의 희생이 강요된다고 립턴이 자세히 지적한 바 있다.[13] 토착사회의 자기비하를 강요한 초기 근대화(modernization) 이론도 결국 본적지를 떠나 침투한 서구 문물의 상대

12) Bloch, *Heritage of Our Times*, 1991. 참조.
13) Lipton(1977) 참조.

적 우월성을 세뇌하기 위한 정치적 시도였지만 한국인들에 의해 열렬히 환영받았다. 이러한 역사적 분위기 속에서 문화계나 의약계 등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토착 제도·문물과 외래 제도·문물 사이에 극도로 적대적인 갈등관계가 배태되기도 했다. 그러나 외세에 의해 산업자본주의 식민지로 병합되고 다시 외세의 개입으로 서구 표준의 정치·경제 질서를 받아들여야 했던 바로 그 역사적 맥락 때문에, 잔존하는 토착적 문물과 제도는 그 현실적 효용에 무관하게 (정치적 관점에서) 중대한 존재의 정당성을 갖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대외지향적인 발전노선을 걸으면서 명분상 민족주의자로 남아 있는 한국인들의 이중성은 그들이 추구한 근대성에 공간적 문명 압착이 만성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임을 짐작케 한다.

이러한 네 측면에서 발생하는 현상, 문물, 제도들은 다시 그 사이에서 활발한 경쟁, 충돌, 조합, 결합, 화합이 발생해 또 다른 현상이나 문물들을 파생시킨다. 이를 압축적 근대성의 제 [V]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 사회현상이 이 영역에 걸쳐 발생한다. 동서고금의 공존이 압축적 근대성 하에서 발생하는 사회현상의 보편적 성격이라고 보면 모든 문물과 제도는 다양한 혼합화(hybridization)의 과정을 거쳐서 현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인간들은 극히 복합적인 의식세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사회적 낙오의 가능성에 상시적으로 떨어야 한다. 시·공간을 단축해 대두되는 사회현상들을 그 자체로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도 엄청난 과업이지만 전통·토착적 사회현상들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마저 파악하고 조정해야 하는 과업은 더욱 힘겨운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학문적 분석도 비상한 재능과 노력을 요구할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사회적 가치와 이념 체계의 복잡성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가족, 기업, 대학, 시민사회 등 각 영역은 그야말로 가치와 이념의 파노라마로 존재한다. 동서고금의 다양한 가치와 이념이 그냥 병존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변종을 만들어내는 현실에서 굴러가는 가족, 기업, 대학, 시민사회는 한국을 바라보는 외신기자들 사이의 평가처럼 "너무 동적"(too dynamic)일 뿐 아니라 "너무 복합적"(too complex)이다.[14]

2. 세계화와 이차 압축적 근대성

압축적 근대성 하의 한국사회는 반세기가 채 되지 않는 기간에 고도의 경제성장과 사회변동을 집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이미 서구 중심의 선진산업사회권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성취)의 이면에 누적된 엄청난 사회적 비용, 갈등, 위험이 제대로 파악되고 적절한 대응이 모색되어 왔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그 자체로서 사회위기를 구성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엄청난 역사적 과업으로 남아 있는데, 문제는 한국인들이 이 과업을 고스란히 짊어진 채로 지난 세기말부터 전혀 새로운 시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심대한 시행착오와 혼란을 연속적으로 겪고 있다는 것이다. 흔히 세계사적으로 냉전 이후 시대, 팍스아메리카나 시대, 세계화 시대, 신자유주의 시대 등으로 불리어 온 이 기간에 한국인들은 전혀 새로운 정치경제적 세계질서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구호상의 혁신이 행동상의 혁신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고답적 대응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선진산업국들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경제·사회적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 타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로 수출대기업 회생에 초점을 두고) 취한 임기응변의 조치들이 사회의 여러 영역을 근원적으로 교란시킴으로써 또 다른 사회위기가 구조화되는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성격규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과 해석이 있지만 이 가운데 울리히 벡의 논의가 범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벡에 의하면, 그가 부르는 "반사적 범지구화"(reflexive cosmopolitanization)의 과정을 통해 세계 각국의 모든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과학·기술적, 정치·군사적 문명요소들이 동시적으로 지리(영토)적 경계를 넘어 자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15] 이러한 시대는 초국적 기업 등 일부 선도세력에게 엄청난 이윤 혹은 권력 창출 기회를 가져다주

14) 특히 노무현 정부 시대에 한국사회의 역동성에 관한 외신들의 경탄이 "too dynamic Korea"라는 표현을 회자시키기도 했다(한겨레21, 2004.4.6).

15) Beck & Grande, "Varieties of Second Modernity: Extra-European and European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2009. 참조.

지만, 그 이면에 사회·생태적 혼돈과 위험이 급속히 누적된다. 벡이 "이차 근대성"(second modernity)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문명적 상태에서는 이전의 (일차) 근대성을 담보하던 각종 사회제도들이 근본적인 기능적 교란과 약화를 겪게 되며, 이에 따라 일차 근대의 사회문제들이 잔존(악화)하는 가운데 이차 근대의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걷잡을 수 없이 폭발적으로 발생한다. 국가(정부), 시장경제, 복지체제, 기업, 학교, 군대, 핵가족(부모), 지역사회 등 오그번이 이른바 "이차조직"(secondary organizations)이라고 불렀던 현대사회의 기능적 주축들이 근대의 과업을 충분히 마치지 못한 상황에서 이차 근대의 도전에 직면하여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명적 난관에 처한 현대인들은 이제 기존의 사회제도들에 대한 기대와 의존을 점차적으로 접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능동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찾아 나서야 하고 또 찾아 나섬으로써 새로운 개인주의화(individualization)의 추세가 본격화된다.

이러한 이차 근대성의 현실에 주목하여, 벡은 "방법론적 범지구주의"(methodological cosmopolitanism)를 주창한다. 더 이상 '민족(국가)사회'(national society)를 기본 단위로 하는 사회현상 분석모형으로는 핵심적 사회변동 인자들을 포착해내기도 어렵고 사회변동의 양상과 귀결에 대한 이해도 근본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실제 범세계적 차원에서 민족(국가)사회의 자율성과 완결성을 전제로 한 역사인식은 상당 정도 20세기라는 특정 시대의 문명적 산물인 점이 크다. 제1차·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제국주의 시대가 종결되고 미국의 주도로 (소련과의 대결구도를 거치며) 확립된 (독립적) 국가 간 체계(inter-state system)로서의 세계질서는 서구 선진국 집단과 비서구 후진국 집단 사이의 확연한 국가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족)국가라는 제도적 틀 속에 모든 사회들이 각각 안착·형성되도록 만드는 작용을 했으며, (거의 모든 서구 사회들을 포함해) 수많은 (민족)사회들이 국가 단위의 경제성장과 문명발전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① 먼저 주요 산업국들의 경제구조가 초국적기업들의 주도로 탈산업화 및 국제연계화(international networking)

되고 개인·기업·국가의 금융자산이 범세계적으로 투자(투기)되면서 국민경제(national economy)의 개념 자체가 점차 무의미해지고, ② 중국, 인도를 필두로 일부 대형 빈곤국들이 자국의 엄청난 유휴노동력을 세계 전체의 자본과 기술에 결합시키고 나아가 전 세계를 자신의 시장으로 재편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③ 애초부터 민족국가라는 제도적 틀이 역사·사회적 토착현실에 들어맞지 않았던 수많은 사회들에서 거듭된 내전, 외세개입, 내외의 경제적 착취 등을 거치며 국가가 실질적으로 형해화된 현실로부터 벗어나려는 집단 탈출 혹은 이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④ 경제적 및 정치군사적 세계질서의 재편에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블록화가 가속화되어 유럽의 경우 아예 외교·군사·화폐 등 과거 국가 간 체계의 핵심적 국가기능들이 대륙 전체로 통합되었고, ⑤ 인터넷 체계의 공고화 등 과학·기술적인 혁신들로 인해 국가 간 경계가 무의미하게 되고 세계와 개인을 직접적으로 통합시키는 경제·사회적 체계들이 증가·확산되고 있으며, ⑥ 여러 사회들의 인구학적 불균형 혹은 (노동자, 신부 등의 부족으로 나타나는) 사회재생산의 교란에 맞물린 세계 인구의 지속적 재분포화 및 이에 수반된 세계의 문화·종교적 재구성이 진행되고 있고, ⑦ 민족(국가)사회를 제도적 틀로 하여 (그러나 구미의 선도로) 확립·발전해 온 예술, 대중문화, 생활양식 등의 사회별 정체성이 급속히 희석되는 등의 현상들이 파상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이제 민족(국가)사회를 배타적 단위로 한 현실인식과 사회분석은 확실히 그 적절성이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16] '반사적 범지구화'로 인해 다양한 사회위기 인자들이 급속히 확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인식론적 틀을 교정하지 않고 민족(국가)사회 단위에만 매달리면 관련 사회위기들의 원인, 과정, 결과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 의미나 파장을 불필요하게 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처럼 이차 근대성에 관한 벡의 이론적·방법론적 문제 제기는 매

16) 이러한 추세들에 관해, Beck(1999; 2006), Turner(1994), Turner and Khondker (2010), Mittelman(2000), Mittelman & Othman, eds.(2001), Jameson & Miyoshi, eds.(1998) 등을 참조. 호주의 경험에 관한 설득력 있는 논의로 Weiss, Thurbon, & Mathews(2007) 참조.

우 통찰력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민족(국가)사회 단위의 삶이 차지하는 절대적 중요성이 근본적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수많은 민족(국가)사회는 문명의 모든 측면에 걸친 '반사적 범지구화'의 주요 구성요소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 수용, 대응하려는 노력을 펼침으로써 최소한의 자체 생존조건을 확보하고 나아가 새로운 발전전기를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는 반사적 범지구화의 힘들을 각 민족(국가)사회가 내부화(internalization of reflexive cosmopolitanism)시킴을 의미하며, 이 과정에서 지구상의 모든 사회들은 서로에 대해 전면적인 구성력(constructing force)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모든 이차 근대 사회들은 또 다른 의미의 압축적 근대성을 체현하고 있다.[17]

그런데 반사적 범지구성의 내부화는 이전에 주로 국가(정부)가 중심이 되어 선진국 혹은 경쟁국의 기술·문화·자본·시장 등에 대해 선택적으로 접근·활용하려던 이른바 '대외 지향적 발전전략'과는 질적·차원적인 차이가 크다. 반사적 범지구성의 내부화는 우선 해당 영역이 무제한적이고, 이를 실행하는 주체들도 자격이 무제한적이며 많은 경우 아예 민족(국가)사회에 귀속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새로운 단계의 압축적 근대성은 문명적 내용이나 제도적 틀이 극도로 복합적이고 유동적이며, 이에 수반해 민족(국가)사회 단위의 삶도 이전보다 훨씬 복합적·유동적이 되었다.[18]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국가의 역할도 새로운 차원들로 확장되지만, 새로운 국가의 역할이 지금까지보다 결코 더 효율적일 수는 없다. 사실, 초국적 기업들로부터 개인들에 이르기까지 국가외적 제도·세력들에 대한 기능적 의존을 확대해 가고 있으며 나아가 스스로 국가에 대한 경쟁자적 지위를 증대시키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고려할 때, 압축적 근대성이 역사적 변화들의 결과 이상으로 과정을 포함한다는 점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사실 압축적

17) 이처럼 새로운 단계의 압축적 근대성에 관해, 필자의 "The Second Modern Condition? Compressed Modernity as Internalized Reflexive Cosmopolitanism"(Chang, 2010) 참조.

18) 예를 들어, 한국이 갑자기 다문화사회로서 인구학적·사회문화적 재탄생을 하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근대성의 핵심적 특질들은 두 단계 모두 변화 결과보다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그 변화 과정은 기존의 전통문명·현대문명·탈현대문명 혹은 토착문명·식민(외래)문명·세계(화)문명의 도식적 구분에 의거해 판단할 때는 매우 비체계적인 사회현상들로 가득 차 있다. 따라서 기존의 문명 구분에 기초한 역사학과 사회과학의 관점에서는 압축적 근대성 연구가 일종의 '비체계성의 체계과학'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19] 비체계성들의 체계적 정리와 분석을 시도함에 있어, 비체계적 관계나 질서에 포함되어 있는 전통·현대·탈현대 문명 혹은 토착·식민(외래)·세계(화) 문명의 요소들 각각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회과학이나 역사학의 논의로부터 연역적인 설명을 끌어낼 수 있을지 몰라도, 비체계적 관계나 질서 자체는 복합적 사회현실의 역사적 전개과정에 대한 '총체적 접근'(wholistic approach)에 기초한 이론적·경험적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처럼 압축적 근대성에 배태된 사회의 위험구조와 위기경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러한 총체적 접근의 중요성이 더욱 절실하다.

제3절 이중적 위기사회로서의 한국

장경섭(1998)은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론을 보완·확장하여 '복합위험사회'(complex risk society)라는 이론적 틀을 통해 한국사회의 대다수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만성적 사고·재난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설명한 바 있다.[20] 복합위험사회는 한국에서 실현된 압축적 근대성의 한 사회적 표현으로서 제시되었었다. 필자는 이 논의에서 복합위험사회가 단순히 일정 확률의 위험(risk)들의 다면·다층적 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19) 비체계성의 학문적 접근이나 정치적 선호는 탈현대론자(post-modernist)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이는 체계성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점에서 학문적 '체계성'을 연역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반면 압축적 근대성 연구의 경우는 이러한 연역의 기초를 인위적으로 분리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주로 역사적 변화의 사회적 특징들을 경험적으로 추출하는 작업이 중심이 된다.

20) 장경섭, 『압축적 근대성과 복합위험사회』, 1998. 참조.

실현과 사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회위기를 구성한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는 당시 연구에서는 주로 물리적 사고·재난에 초점을 두고 내려진 것이지만, 사실 같은 내용의 평가가 한국사회의 전면에 대해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압축적 근대성의 한 표현으로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구조화된 사회위기에 대한 적절한 처방과 치유가 이루어지기 전에, 1990년대 중반 경부터 가시화된 새로운 단계의 압축적 근대성 혹은 이차 근대성에 배태된 새로운 차원의 사회위기가 중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복합구조를 가진 사회위기는 그 현실적 표출에 있어서도 매우 극단적인 양태를 보이고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복합위험사회의 사회위기 성격에 관해 간략히 살펴본 이후 이차 근대의 압축적 근대성에 수반된 사회위기의 특성을 마저 살펴보고 이러한 사회위기의 복합성이 갖는 사회 현실적 및 인식론적 함의를 논의 한다.

1. 복합위험사회 경험의 사회위기적 함의

지난 2003년 무수한 대구시민의 인명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는 로또에 당첨되기만큼이나 어려운 확률적 가능성이 현실화된 것 같았다. 방화범의 문제는 접어두어도, 객차의 의자, 바닥, 천장 할 것 없이 가연재로 설치한 사실, 화재에 총체적으로 무방비이며 승객 대피를 오히려 차단하는 지하철 역사, 상황통제실의 화재경보 무시 행태, 화재 파악 이후에 기관사와 상황통제실이 함께 보여준 무대책, 화재 경고에도 불구한 또 다른 열차의 진입과 실질적 승객 감금 행위, 상황통제실의 계속된 무대책과 기관사 도주 유도 등 일련의 과정에서 어느 한 가지만 예방되었어도 거의 200명이 그것도 극도로 비참하게 목숨을 잃는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하나하나의 비상식적인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것은 그저 대구 시민들만의 불운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 한국인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비상식의 확률이 얼마나 높은 것인지는 이번 대구지하철 화재뿐 아니라 그동안 끊임없이 발생한 대·소형 안전사고들에 의해 입증되었다.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의 붕괴, 대구·서울 지하철 공사장의 폭발사고 등 초대형 구조물 사고가 잇따를 뿐 아니라 교통사고율, 산업재해율 등 일상적 안전사고율이 세계 최고 수준에 들어 있다. 일전에 씨랜드 화재참사로 어린 자녀를 잃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분노를 억누를 수 없어 메달을 반납하고 외국으로 이주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갖가지 위험요인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위협받는 상황이 닥치자,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risk society) 논의가 즉각적으로 한국 지식인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게 된 것이다. 서구에서 두 세기를 넘는 지속적 산업화와 경제성장으로 얻은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 사고와 재난의 일상화라는 반갑지 않은 현상이 나타났다. 서구인들은 원자력 관련 사고에서 유전자조작 식품의 해악에 이르기까지 발전의 결과로서 치러야 할 엄청난 비용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각종 사고와 재난은 더 이상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일정 확률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상성의 한 부분이라는 지적이 위험사회론이다.

기적으로 불리는 고속산업화를 통해 선진국 대열에 거의 합류한 한국은 위험사회 증후군 역시 앞당겨 경험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초보적 안전관리의 미비로 후진국형 재해들이 계속된다. 장마가 오면 하천관리가 소홀한 도시들이 수중에 잠기고 난개발로 인한 산사태로 마을들이 흙더미에 묻히는 일이 반복된다. 건설만 하고 관리는 않는 수많은 죽음의 도로들에서 만취 기사가 과속 운행한 대형버스들이 전복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는 일이 이어진다. 또 일상화된 비리와 탈법 속에서 부실 시공된 건축·구조물이 붕괴되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는 등 '날림 사회형' 재해가 증가하고 있고, 무엇이든지 단기간에 최대한 건설하고 생산하고 소비하려는 가운데 갖가지 재해도 압축적으로 경험하는 등 '폭증사회형' 재해가 잇따른다. 이러한 유형의 재해들은 한국의 독특한 발전경험과 결부된 '한국형' 재해이다. 한국은 이처럼 선진국형, 후진국형, 나아가 한국 특유형의 갖가지 위험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위험사회'(complex risk society)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형 재해들이 특히 문제이다.

폭증사회형 위험은 한국의 근대화가 '외연적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에 엄청난 경제·사회적 변화를 거친 데서 기인한다. 외연적 성장이란 생산과정의 효율성과 안전성의 개선보다는 노동력과 자연자원에 대한 동원(착취)을 강화하여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재난과 오염이 급증한다. 이 외연적 성장전략이 주효하여 생산, 건설, 소비, 교환 활동이 세계에서도 유례없이 급속하게 늘어났다. 일정량의 인간활동에 일정 확률의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경제활동이 늘어난 만큼 안전사고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안전문제 대처는 뒤로 미루고 경제성장에 따른 이윤, 소득, 세수 증가만 누리겠다는 일종의 "선성장, 후안전"의 태도가 만연해 있다.

폭증하는 경제·사회 활동에 비례한 위험의 증가를 피하려면 이러한 활동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과 장치의 확충에 덧붙여 조직·문화적 관리역량의 동반적 성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안전보장을 위한 조직·문화적 관리역량의 성장이 일종의 '문화지체'(cultural lag)처럼 답보 상태에 있다. 이 역량의 보강은 생산라인 가동시간을 늘이거나 가동속도를 높이는 것과는 달라 일시에 결정하고 달성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나 상당 기간의 학습, 훈련, 적응을 필요로 한다. 안전 관리를 위한 조직·문화적 역량이 갖추어진 상황에서도 인간활동이 증가하면 안전사고도 따라 늘 수밖에 없는데, 한국사회에서는 그 역량이 준비되지 못한 채 이루어진 인간활동의 폭증이 안전사고의 더욱 심각한 폭증을 유발해 왔다.

폭증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급격한 산업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 자체가 야기하는 위험과 재난의 폭증이 추가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가경제 및 기업 성장의 특징은 끊임없는 산업구조 다변화와 고도화였으며, 시민생활 변화의 특징으로는 새로운 서구 문물의 적극적인 소비였다. 사회·경제 환경의 지속적이고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인들은 부단한 적응과 변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초보자 혹은 미숙련자 노릇을 계속 반복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초보자로서의 높은 안전사고 확률을 늘 안고 다녔다. 더욱이 새로운 공정이나 재화는 기존의 것에 비해 성능과 효율이 좋지만 잘못 다루는 경우에 위험부담도 많은 것이 일반적이다. 미숙련자의

높은 안전사고 확률은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에서 가장 잘 드러나지만 이 문제가 해당되지 않는 부문이 거의 없다. 이와 같은 '반복적 미숙련'의 문제는 일반인과 전문가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날림사회형 위험은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속도효율(speed efficiency)' 문화의 이면에 국가와 기업의 안전문제에 대한 무책임성이 확산된 사실과 관련이 깊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집권정부가 업적을 내세울 때, 일정 수준의 국가경제 성장과 국민소득 향상, 나아가 특정한 국가시설의 건설을 최단 시일 이내에 이룩하는 것을 업적의 증표로 삼은 데서 속도효율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나타났다. 기업적 차원에서는,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해 가급적 개별 사업들을 최단 시일에 마무리 짓고 서둘러 다음 사업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는 기업 성장 전략 하에서 무모한 납기단축과 공기단축을 오히려 최선의 경영성과로 여기는 속도효율 문화가 나타났다. 정부와 기업의 이와 같은 속도효율에 대한 집착은 안전문제에 대한 담합적 부실을 야기했다. 국가적 수출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업체들이 산업안전규정을 어기면서까지 풀가동하는 것을 정부가 규제하기는커녕 은근히 독려했던 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대형교량 등 기간시설을 앞당겨 완공하기 위해 기업들을 재촉하는 것이 정부의 관행이었고, 기업들은 이를 싫지 않게 받아들였다. 설사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인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언제나 '산업유공자적 예우'를 갖춘 형식적인 것이었다. 편법·탈법의 사회현실과는 상관없이 법령만능주의의 풍토 속에서 주로 정부에 의해 만들어진 법령과 규정들은 실제 제대로 지켜진다면 산업 및 생활 현장에서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것들도 많다. 그러나 안전 법령과 규정들이 현실적으로 무시되거나 느슨하게만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굴러가는 기업조직과 사회체계는 그 법령과 규정들이 엄격하게 준수되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문제들을 안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업조직과 사회체계의 맹점을 파악한 버스 운전사, 지하철 노동자, 통신회사 노동자 등이 준법투쟁이라는 매우 상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투쟁전략을 통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했다. 그런데 준법투쟁을 통한 노

동자들의 목표가 작업 안전성의 제고 자체보다는 임금 인상 등 다른 권익의 확보에 더 치중한다는 데에 사회적 딜레마가 있다. 실제 버스나 지하철의 '준법 안전운행'과 대해 많은 시민들은 노동자 투쟁기간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을 표시했지만, 노사 타협 이후에는 다시 '위법 위험운행'이 재개되었다.

이처럼 한국인들은 지금 선진국형, 후진국형, 한국특유형 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아주 복합적인 위험사회에 살고 있으며, 그 위험들의 포괄성과 심각성 그리고 원인상의 비리구조와 폭력질서가 더해져 한국을 구조적·만성적으로 위기상황에 내몰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생산노동자, 농민, 여성, 아동, 노인 등 기존의 사회·경제적 약자로서 자기보호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안전사고의 피해도 집중적으로 입게 되는 이중적 불평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이들은 그동안의 보수적인 정치·경제적 질서 속에서 희생되어 온 자신들의 권익을 보상받기는커녕 최근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의 집중적 희생자가 되는 또 다른 고난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안전문제는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도 사회위기를 구성하고 있다.

이상에서 (주로 물리적 재난, 사고 등을 중심으로 파악한) 복합위험사회 문제는 그 자체로서 한국사회의 중대한 위기성을 구성하지만, 울리히 벡의 원래 문제의식처럼 위험 문제를 인간의 삶의 기본 조건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 확장 적용시키면 결과적으로 '복합적 위기사회'로서의 한국사회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 경제, 사회, 문화, 생태 등의 모든 차원에서 선진국형, 후진국형, 한국특유형의 위험구조가 복합적으로 동시 존재하고 각 위험의 심각성도 고도 경제성장과 같은 변화속도에 비례하여 강도가 커지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결국 복합적 사회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상존해 왔다. 더욱이 이러한 사회위기 구조에 대한 비판적 진단과 처방이 급속한 경제개발과 같은 전략적 목표를 위해 오히려 탄압받는 경우까지 생겨나, 사회위기가 여러 측면에서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2. 이중적 위기사회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 들어 이른바 '세계화' 정책을 신호탄으로 하여 가시화된 이차 근대성(second modernity)의 시대는 한국인들로 하여금 전대미문의 국가경제적 파산 경험에 거의 다가서게 만들었고, 신자유주의적 세계경제 지배세력이 긴급 금융지원의 조건으로 내건 신자유주의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을 통해 이차 근대는 사회적으로 더욱 공고화되었으며 이에 수반된 다양한 사회적 위험요인들의 확산과 만성적 사회위기의 구조화가 진행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은 흔히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표현을 통해 기술되지만, 이러한 정치경제적 전환뿐 아니라 생활양식, 소비문화, 과학기술, 노동양식, 매체질서, 정치문화, 계급관계 등 모든 사회영역에서 경천동지(驚天動地)의 격변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격변들은 부분적으로는 일 단계 압축적 근대성 시기의 문제들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앞서 지적한 '반사적 범지구성의 내부화'(internalization of reflexive cosmopolitanism)에 기인한 것이다. 즉, 세계 전체 차원에서 혹은 각 민족(국가)사회, (국제)지역, (국내)지방 등의 차원에서 발현되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생태적, 과학기술적 동인들이 이제 반사적 범지구화(reflexive cosmopolitanization) 과정을 통해 국경과 문화경계를 넘어 모든 사회와 개인들을 지배하게 된 현실에서, 차라리 적극적으로 그러한 동인들을 내부화함으로써 잠재적 기회들을 확대하려는 노력들이 본격화되었으며 동시에 이에 수반된 사회적 위험요인들의 급속한 확산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단계) 압축적 근대성이 범세계적 현상으로 발현되어 왔으며, 여기에 한국사회도 예외일 수 없다.

2단계 압축적 근대성 상황에서는 1단계 압축적 근대성 상황에서 나타났던 후진국형, 선진국형, 한국특유형의 위험(위기)요인들에 덧붙여 범지구형 위험(위기)요인들이 파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예를 들어, ① 범세계적인 금융화(financialization)의 흐름 속에 진행된 국경 없는 금융투기, ②

선진산업국들의 탈산업화와 인구밀집 대형개도국의 노동집약적 수출산업화가 맞물려 나타난 글로벌 노자(勞資)관계와 고용위기, ③ 생명공학적 조작농업에 기반을 둔 글로벌 농산업체의 지배 및 이에 맞물린 범세계적 가족농 위기와 식품소비의 불안전성, ④ 노동집약적 수출산업국들의 가격경쟁력 지상주의에 맞물린 허위·위해 제품의 글로벌 확산, ⑤ 에너지원 고갈 추세에 맞물린 글로벌 매점매석과 가격폭등이 초래하는 생활·산업 에너지 수급위기, ⑥ 지구 온난화, 사막화 등이 초래하는 범지구적 생태환경의 교란, ⑦ 공장제 화학 목축업과 글로벌 육류수급 체인이 초래하는 치명적 신종질병의 범세계적 확산, ⑧ 전파매체의 범세계적 연계화에 따른 저질 상업문화의 세계지배 공고화, ⑨ 지역전쟁 방지를 위한 대한 국가 간 협력체계의 와해와 미국 군산복합체의 헤게모니 재창출 노력에 맞물린 국지전쟁의 글로벌 문제화 및 이에 대응한 글로벌 테러리즘의 확산, ⑩ 선진국들의 인구·노동력 재생산 교란에 맞물린 빈곤국 인구의 유동 및 이에 수반된 문화적·종교적 갈등 심화, ⑪ 이상의 오프라인 상의 위기요인들을 사회·심리적으로 가속화시킬 뿐 아니라 별도의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을 급속히 확산시키고 있는 인터넷 체계의 공고화 등의 현상들은 이제 지구상의 모든 사회가 하루하루 고민해야 하는 대상이다.

특히, 한국은 이른바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무모할 정도로 전면적이고 급속하게 참여해 오면서, 동시에 경제외적 차원의 범지구형 위험(위기)요인들에도 아무런 사전대비책 없이 노출되어 왔다. 그 결과 위에서 열거한 모든 문제들과 관련해 이런저런 사회위기를 겪어 온 것이다.

제4절 시사점: 사회위기 지표 개발을 위한 논의

이상의 논의에 바탕을 두고 2009년도 사회위기 지표개발을 위한 문제영역들에 대한 의의를 평가하면 아래와 같다.

1. 고용위기

한국은 1960년대 중반 이후 30여 년간 세계를 괄목상대케 하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구가했고, 이에 수반해 인구(노동력)의 급격한 증가와 도시 유입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의 완전고용 상태를 유지했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보면 압축적 경제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인 산업구조 조정(고도화) 및 경직적 노무관리에 따라 일정 산업 혹은 기업에서 장기간의 안정적 고용을 보장받은 노동자들은 사실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1990년대 접어들면서 국가경제 및 기업활동의 공격적 세계화 전략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들을 대거 중국 등지로 이전하고, 국내 잔류산업들은 한편으로 기술적 고도화를 다른 한편으로 고용상 유연화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른바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 경제발전 전략의 실패보다는 성공에 수반해 전개되는 가운데, 일부 고기술·숙련 노동자들을 제외한 일반 노동자들은 평생 구조적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더욱이 1997년 경제위기와 이에 수반한 국가경제의 총체적 위기는 각 기업 차원에서 즉각적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대책으로서 대규모 정리해고를 야기했고, 장기적으로도 위에 지적한 고용체계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작용을 했다. 이른바 "선성장, (영구히 미뤄지는) 후분배" 경제체제 하에서 한국인들에게 고용은 사회·경제적 시민권의 실질적 골간에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고용위기는 즉각적으로 총체적 사회위기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21] 그리고 경제위기 이후 보편화된 이른바 비정규직 고용은 그 자체로서 불안정한 고용지위 및 저임금이 문제가 되지만, 나아가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수반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회복지체계의 위기까지 내포하였다.[22]

---

21) Chang, "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 2009b. 참조.

22) Chang, "Politics of Developmental Citizenship: The South Korean Impasse", 2007. 참조.

2. 교육위기

한국인들에게 교육은 엄청난 역사적, 사회구조적, 경제체제적 중요성을 갖는다. 해방 후 새로운 독립국가에서 한국인들에게 공교육은 토지개혁을 통해 균등하게 할당된 농지와 함께 시민적 권리의 두 축을 구성했으며, (대외지향적) 현대 문명체계에 통합될 수 있는 핵심적 통로였다. 이후 압축적으로 전개된 정치·사회적 근대화와 자본주의 산업화 과정에서 교육을 통해 얻어진 각종 자격과 지식은 한국인들의 사회·경제적 성공, 즉 출세에 핵심 관건이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시민들이 자녀형제의 혹은 자신의 교육투자에 공격적으로 임해 왔고 결국 입시지옥으로 대변되는 극단적 교육과잉사회가 되었다.[23)]

이처럼 한국사회에서 교육은 사회·경제적 발전을 인적자원으로 추동하고 이와 관련해 다양한 사회·경제적 자원을 기능적으로 차등 배분하는 장치로 작용해 왔지만, 극심한 교육경쟁과 비용낭비에 따라 그 자체가 사회위기를 구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경제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물려 한편으로 불안정 고용이 보편화되고 다른 한편으로 고기술·숙련 노동자에 대한 차등 보상이 과도해지면서 교육 경쟁과 투자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그 자체로서도 심각한 사회문제이지만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그러한 교육적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회위기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3. 주거위기

한국은 기본적으로 산악지형이 대부분이면서 절대적으로 좁은 영토 위에서 원래부터 조밀했던 인구가 20세기 중반 이후 그 규모가 폭증하고 급격한 도시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주택난이 심각한

23) 장경섭, 「사회투자가족과 교육정치」,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2009. 참조

사회 중의 하나가 되었다. 더욱이 현대에 이르러 이른바 가족중심적 사회·경제 질서가 더욱 공고화되면서 가족의 물리적 수용장치로서 주택의 중요성이 유별나게 두드러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과거 농민들에게 농지가 가졌던 도구적·감성적 중요성을 현대 도시인들에게는 주택이 가지게 되었지만, 막상 주택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 생태적 조건이 존재했으며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의 만성적 앙등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구조적 주택난을 오히려 개인적 치부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이른바 부동산투기꾼들의 준동에 의해 주택문제는 결국 그 자체만으로도 사회위기를 초래하는 사안이 되었고, 노태우 정부 시대에는 이에 대한 비상조처로서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대규모 베드타운들을 불과 수년 이내에 건설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 이후에는 부동산 투기가 중산층의 보편적 계급(계층)문화가 되다시피 하면서 주택난 자체가 갖는 사회위기성에 더해 가족의 보금자리 확보를 둘러싼 계급(계층)간 착취행위의 비도덕성이 또 다른 차원의 사회위기를 야기하게 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는 범세계적으로 진행된 저금리에 기반을 둔 부동산 투기 붐과 부동산 관련 금융(파생)상품의 확산에 수반된 신용위기가 한국사회에도 전개되어 가까스로 세기말의 경제난에 벗어난 한국인들에게 또 다른 충격을 안겨주었다.

4. 인구·가족 위기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압축적 근대성의 문명을 개인적으로 체현시키는 기본 장치였으며, 결과적으로 현대 한국인들은 선조들보다 오히려 더욱 가족중심적 존재가 되었다. 교육투자, 취업과 사업, 문화 계층적 지위 등 한국인들이 희구하는 대다수 가치나 목표들이 가족을 단위로 실현되어 왔고, 나아가 공적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의 부족을 가족 차원의 부양·보호·수발 노력으로 메워왔다. 이에 따라 대다수 한국인들의 가족은 만성적으로 기능적 과부하(functional overloading) 상태에 시달려 왔으며 개인들은 심각한

가족피로(family fatigue)를 호소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다수 한국인들은 여전히 가족중심(주의)적 삶을 영위하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조건으로 저출산, 만혼과 같은 역설적인 탈가족화(defamiliation)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24] 따라서 가족위기는 저출산이나 만혼 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극단적인 기능적 과부하 상태의 지속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1990년대 후반 이후 국가적 경제위기, 고용체제 교란, 부동산(주택) 가격 폭등이 겹치면서 급증하는 규모와 비율의 가족들이 최소한 물적 재생산 기반을 상실하는 또 다른 차원의 가족 위기가 확산되었으며, 이는 다시 저출산, 만혼, 이혼 등의 탈가족화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로 표출되었다. 이와 같은 탈가족화 추세는 장기적으로 전체 인구의 적정 규모 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듦으로써 국가경제 및 민족사회의 안위에 심각한 위기요인이라는 정치적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실, 이미 이에 관련된 사회·경제적 부작용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부분적 대책으로서 채택된 것이 외국인 임시노동자와 신부의 수입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적 고용관행 및 이들의 산업재해, 문화적 고립 등은 이제 그 자체로 한국사회의 주요한 사회문제가 되었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수십만 외국인 신부들의 한국 가족 내의 통합에 관련된 고통과 비극 그리고 혼혈 이세들이 겪는 소외감 등이 장기적인 파장을 갖고 한국사회를 교란시킬 가능성이다.

5. 복지위기

한국은 지난 196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한 (압축적)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으나 이를 위한 조건으로 “선성장 후분배” 전략을 내걸었고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경제발전에 수반된 사회문제들을 적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사회보장 장치들의 준비가 유기되거나 미루어져 왔다. 다만 1980년대 후반 들어 격렬한 민주화 투쟁과 노동자 계급운동의 압력 하에서 복지국가 건설

24) Chang,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Compressed Modernity and Obfuscated Family Crisis in East Asia", 2009d. 참조

이 국정목표로 선언되고 실제 사회복지 지출 확대와 사회보장 제도 보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이른바 선진국협의체인 OECD 가입 시점까지도 한국의 사회보장체계는 그 제도적·재정적 충실성에 있어서 대다수 선진국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심지어 여러 상대적 저소득국들과 비교해도 낙후된 수준이었다. 그 대신 이른바 경제성장 지상주의 국정이 지속되었으며 이를 위해 사회복지는 무기한 억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가 정치·행정·경제 엘리트 사이에 만연했다.[25)]

사회복지에 대한 이들의 일방적 보수성은 이른바 서구 신자유주의의 반(反)복지 이데올로기에 의해 한층 공고화되었다. 문제는 한국이라고 비껴갈 수 없는 각종 자본주의적 사회문제들이 압축적 경제발전에 비례하여 급속히 누적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맞게 된 1997~1998년 경제위기는 그 충격을 완충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적) 안전망 결여에 맞물려 시민들 전반에 엄청난 고통과 타격을 안겨 주었다. 이후 심지어 국제통화기금(IMF) 같은 신자유주의 세력까지도 원활한 경제 구조조정을 위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충고를 하는 분위기에서 매우 점진적이나마 사회보장제도의 제도적·재정적 확충이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선택되었던 천문학적인 공적 부채의 해결과 같은 재정적 제약, 한국 사회복지체계의 골간인 사회보험제도들에서 누락되기가 십상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증과 같은 경제구조적 난관, 세계기록을 갈아치우는 수준의 급속한 노령화 등에 맞물린 사회복지 수요의 급증과 같은 문제들은 한국이 유의미한 복지국가로 변신(발전)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지난할 지를 웅변하고 있다. 사회복지는 제도상으로 그 자체가 사회위기의 요인이기보다는 사회위기를 예방하거나 해소하는 수단으로 존재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대다수 선진민주주의 사회들에서 시민적 권리의 핵심요소로서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증진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의 이러한 사회복지 유기는 정치의 만성적 정당성 위기와 같은 정치위기의 구성요소가 되기도 한다.

25) Chang(2009c) 참조.

6. 안전 및 건강 위기

안전 및 건강 위기문제에 관해서는 앞서 복합위험사회로서의 한국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구체적인 배경과 유형을 적시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다만 1990년대 후반 이후 이른바 세계위험사회(world risk society) 시대 들어 대두된 범지구적 차원의 생태적, 병리적, 산업적, 과학기술적 위험(위기)요인들이 한국사회의 적극적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략 등에 맞물려 급속히 한국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이 추가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7. 사회통합 위기

모든 자본주의 사회가 사회집단들 사이의 이익갈등을 겪게 되고 급속한 경제·사회적 변동 과정에서 흔히 이러한 갈등이 증폭됨으로써 사회통합은 상시적인 과제로 대두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해방공간에서부터 시작된 시민사회와 국가의 근본적 갈등관계가 국가의 시민사회에 대한 분할통치(divide-and-rule) 전략에 의거해 정치적으로 유도·조장된 시민사회 내 갈등구조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 이익갈등에 정치적으로 초래된 인위적 사회갈등이 중첩되어 시민사회는 극도로 복잡하고 대립적인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집단들 사이의 갈등적 이해관계의 정치적 해소나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 선정적 혹은 극단적인 폭력에 의존해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행정적·사법적 개입이 (사적 주체들과의 유착관계 등으로 인해) 오히려 갈등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경우가 빈번하다. 즉, 이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위기가 공권력의 정당성 위기로 비화되는 다반사이며, 종국에는 갈등주체들의 사적 폭력수단에 대한 의존을 유도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물려 사회의 갈등적 이해관계가 한국 내 기층서민들과 해외에 부분적·전체적으로 기반을 둔 행위자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또 다른 차원에서 사회위기와 국가(정당성)위기의 동시 발생이 빈번해지고 있다.

8. 경제·사회적 형평성 위기

대한민국의 문명적 근대화는 주로 미국적 제도와 이념을 기초로 한 총합적이고 (시간)단축적 접근을 통해 추진되었으나, 막상 정치·사회적 자원배분과 국가경제의 발전은 매우 불균등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른바 "선도부문"(leading sector) 이론 등으로 정당화된 경제의 불균형성장(unbalanced growth) 전략은 곧 지역간(도·농간, 경부축과 이외 지역간) 현격한 산업적 격차를 구조화시켰고, 또한 권위주의 정치권력에 의해 국가가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선도하면서 중앙-지방간 경제·사회적 격차가 급속히 심화되었다. 아울러 국가가 주로 수출 주도 대기업(재벌)을 국가적 경제발전의 핵심 수단으로 삼으면서 한편으로 기업(자본)과 노동자 사이의 계급적 이익 다툼에 일방적으로 반(反)노동계급적 개입을 지속하고 다른 한편으로 거시적 국정 운영에 있어 극도의 친기업적 기조 하에서 사회복지의 억제와 산업(기업)지원의 확대를 견지해 오면서 노자(勞資)간 경제·사회적 불평등이 극심해졌다.[26] 그리고 미래세대의 이익이나 역사적 희생 세대(빈곤노년층)의 권익은 고려치 않는 극단적으로 현세대 중심적인 경제·사회적 발전을 추진해 오면서,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세계 최고수준이고 청년층에게는 안정된 일자리가 희소하고 미래세대가 치러야 할 환경비용은 급속히 누적되는 등 세대 간 불평등이 구조화되어 왔다.

또한 사회정책의 전반적 낙후성 및 정치·경제적 조직질서의 남성우월주의(chauvinism)는 민간(가족)의 보수적 양성관계(gender relations)와 맞물려, 여성을 경제·사회적 주류 영역에서 배제하는 대신 가정에서 이른바 사회재생산을 전담하도록 유도했고 이러한 가정적 역할의 부담으로 다시 여

26) Chang(2009c) 참조.

성에 대한 경제·사회적 차별이 확대되는 악순환이 지속되었다.[27]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질서가 확산됨에 따라 한국인들이 이상과 같은 다양한 불평등 구조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불평등을 공고화시킴으로써 일부 집단의 세계적 차원의 성공을 사회 양극화로 뒷받침하는 역설이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측면에서 발현된 불평등은 그 물질적 결과의 과도함만으로 사회위기를 초래하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그 불평등이 단순히 자유주의·자본주의 사회의 일반적 경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자의적 경제·사회·문화적 개입과 이에 의존하는 불평등 구조 수혜집단의 불공정한 행태에 의해 기본적 성격과 양태가 결정되어 왔다는 것이다. 즉, 한국의 지역간 갈등, 도시-농촌 갈등, 중앙-지방갈등, 노자(勞資) 갈등, 세대 간 갈등, 양성 갈등은 공통적으로 이중적 위기구조를 갖는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이른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는 이처럼 자본주의 체제의 일반적 토양 위에서 정치적으로 초래되고 사회적으로 확대 재생산된 갈등구조들을 종식시키거나 해소하는 것이지만, 이제는 정치권력(집권정부)의 형성 자체가 지역대립적 선거 등에 의해 그러한 사회적 갈등구조에 오히려 종속되는 현실이 전개되고 있다. 사회위기가 정치위기로 비화되고 다시 정치위기가 사회위기를 증폭시키는 것이다.

9. 경제위기

1990년대 한국경제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금융세계화 혹은 범지구적 금융화(global-scale financialization) 추세에 무도하게 편입된 결과였다.[28] 이에 따라, (이차)산업 경쟁력, 재정구조 건전성 등 전통적 의미의 "경제적 기초"(economic fundamentals)가 양호한 상태에서도 일순간 외환 유동성

27) Chang(1997) 참조.
28) 금융화에 관해 Fine, "Neo-Liberalism in Retrospect? –It's Financialisation, Stupid", 2009. 참조.

고갈에 맞물려 국가경제적 파산 상태에 직면했었다. 이른바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가 수출산업화를 주도한 업적에 대한 기억으로 한국인들에게 공공차원의 경제문제는 흔히 산업발전 촉진 정책,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과 동일시되지만, 근본적으로는 시민과 국가 사이의 재정적 관계가 핵심적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재정정책이 그동안 수출산업화의 이면에 공고화된 국가-대기업(재벌)의 금융적 유착관계에 종속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시민의 경제(재정)적 관계가 국가-재벌의 금융적 유착관계에 의해 유린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최근 세계경제 환경에서의 문제는, 한국 재벌들이 수출제조업자로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이미 확보했고 더욱 높여가고 있지만 국제적 금융주체로서는 경영·기술상 매우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한국 재벌들이 국가의 실질적 지급보증과 상호(순환)출자에 의한 가공자본에 의거한 과도한 부채구조를 가진 상태에서 성급하게 경쟁적으로 금융세계화에 뛰어 들어 (대부분 단기채무성 외화자금에 의존해) 투기적 금융이익을 챙겨보려던 시도가 세계 금융시장의 일시적이지만 파상적인 요동에 직면해 결국 국가경제 자체를 파산상태로 내모는 비극이 전개된 것이다.

이러한 경제위기의 해결을 위해 한편으로 ('고용위기'에서 살펴본 대로) 무수한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일자리를 내놓아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 기업에 대한 사회보장적 구호나 다름없는 국가의 "공적 자금" 지원을 시민들이 세금으로 뒷받침해야 했다.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위와 같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함정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지만 작금의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에 한국경제가 가장 먼저 요동친 사실을 통해 여전히 경제시스템상의 근본적 문제가 잠복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오히려 경제위기 이후시기에 금융화에 관련된 경제·사회적 위기요인이 범사회적으로 확산되는 추세가 드러난다. 한편으로 이제 금융산업을 개발국가적 산업정책을 통해 발전(확장)시켜 보려는 성급한 시도가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 전대미문의 대량 실업과 소득 감소로 인해 빈곤층의 상

대적·절대적 크기가 급증함에 따라, '빈곤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of poverty) 현상이 범사회적으로 대두되었다. 즉, 국가의 방조 하에 빈곤성인과 10대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간접적 외상구매에 의한 소비를 하고 실질적 고리채인 현금서비스를 받는 현상이 범사회적 열풍처럼 번져 일순간에 관련 금융회사들의 집단적 파산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 세대와 계층을 가리지 않고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사태가 전개되었다. 신용카드 사태가 표면적으로 정리되면서, (역시 국가의 실질적 방조 하에) 이제 사채산업의 폭발적 성장과 이에 직결된 개인파산, 장기매매, 성매매, 노예노동, 폭력행사, 자살 등 극단적 사회해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평균적 가계부채의 절대규모와 상환불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상황에서 사회정책이 아닌 금융화가 상황을 규정하는 현실은 사회위기를 촉진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나아가 국가경제의 시민적 기초가 붕괴되어 경제위기를 불러올 것이 분명하다.

10. 정치위기

전술(前述)한 "사회통합 위기" 및 "경제·사회적 형평성 위기"에서 설명되어졌으므로 여기서의 설명은 생략한다.

05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

제5장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

제1절 사회위기 지표(안) 개발

1. 지표(안) 개발의 기본원칙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위기 지표(안)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첫째, 측정가능 또는 생산 가능한 통계를 지표로 개발한다.
- 둘째, 시계열 통계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지표를 선정한다. 가능하면 매년 생산, 적어도 5년 이내 주기적 생산이 되고 있는 통계를 선정토록 한다.
- 셋째,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하여 생산되는 통계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 넷째, 영역별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최소 1개 이상 포함한다.

2. 이론 및 선행연구에 의한 사회위기 영역(안) 및 지표(안) 개발

가. 사회위기 영역(안) 개발

전술한 사회위기의 개념 및 특성과 담론(제2장), 사회위기 관련 선행연구(제3장), 한국 사회의 압축적 근대성과 사회위기의 구조적 복합성(제4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위기 영역(안)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한국의

사회위기 영역(안)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거시적 측면에서는 고용, 교육, 사회갈등·문화, 불평등, 경제일반, 정치일반 등 6개 영역이 개발되었고, 미시적 측면에서는 주거, 인구·가족, 복지, 건강·안전 등 4개 영역이 개발되었다.

나. 사회위기 지표(안) 개발

사회위기 지표(안)는 전술한 사회위기의 개념 및 특성과 담론(제2장), 사회위기 관련 선행연구(제3장), 한국 사회의 압축적 근대성과 사회위기의 구조적 복합성(제4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각 영역에 따라 최저 3개, 최고 8개의 지표가 개발되었는데, 전체 10개 영역, 55개 사회위기지표가 개발되었다. 영역별로 사회위기지표(안)를 제시하면 <표 5-1>과 같다.

〈표 5-1〉 한국 사회위기 영역(안) 및 지표(안)

사회위기 영역	사회위기 지표			지표수
① 고용	• 실업률 • 비정규직 비율	• 청년실업률	• 근로빈곤자수	4
② 교육	•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 • 조기유학자	•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 학원폭력률	4
③ 주거	• 주거비 지출률	• 자가 보유율	• 전세비 증감	3
④ 인구·가족	• 총부양비 • 출산율	• 고령화지수	• 수도권 인구 집중도	4
⑤ 복지	• 노후대비율 • 장애인 출현	• 연금수혜비율	• 요보호아동수	4
⑥ 건강·안전	• 평균수명 • 부정식품 적발률 • 강력범죄율	• 자살률 •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	• 청소년 자살률 • 교통사고사망률	7
⑦ 사회갈등·문화	• 노사분규 발생건수 • 우리나라 갈등 비용	• 파업 손실일수 • 마약 및 밀수사범수	• 불법체류자수 • 도박사범수	6
⑧ 불평등	•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 중산층 귀속의식지수 •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	• 남녀 임금격차 • 평균소득 75~150% 비율 • 영호남 지역격차 계수	• 소득불평등 • 지역간 소득격차	8
⑨ 경제일반	• 원유가 • 경제성장률 • 가계 부채비율	• 소비자물가지수 • 환율 • 기업 부채비율	• 신용불량자율 • 외채비율	8
⑩ 정치 일반	• 투표율 • 국가기관별 신뢰지수 • 정부 신뢰도	• 지역별정당득표집중률 • 부패인식지수	• 세대별정당득표집중률 • 행정소송건수	7
		계		55

제2절 「사회위기 영역(안)」의 우선순위 및 영향도

사회위기 영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들 영역의 우선순위와 영향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1. 「사회위기 영역(안)」의 우선순위 및 영향도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고용영역과 경제일반영역이었다. 우선순위 1위로 나타난 비율이 고용영역 33.5%, 경제일반영역 21.2%이었으며, 다음은 우선순위 3위가 가장 높은 비율인 교육영역으로 15.9%이었다.

반면에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는 정치일반영역, 인구·가족영역, 불평등 영역 등이었다. 즉, 정치일반영역은 33.9%가 가장 낮은 10위이었고, 인구·가족영역과 불평등 영역은 각각 14.2%, 12.7%가 9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사회위기 영역(안)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계(수)
고용	33.5	21.2	14.2	11.0	7.3	4.5	3.2	2.6	1.1	1.3	100.0(534)
교육	6.6	14.6	15.9	13.3	12.2	8.6	10.1	6.4	6.9	5.4	100.0(534)
주거	5.4	9.9	10.7	7.1	12.0	10.9	10.9	10.9	10.5	11.8	100.0(534)
인구·가족	6.7	5.1	8.2	8.2	8.6	12.7	11.6	14.0	14.2	10.5	100.0(534)
복지	2.6	6.4	9.0	11.2	9.9	12.9	15.2	13.7	12.0	7.1	100.0(534)
건강·안전	4.9	5.4	7.9	10.9	10.3	9.6	16.7	13.5	10.7	10.3	100.0(534)
사회갈등·문화	5.1	7.7	7.9	11.2	13.7	11.2	8.6	15.4	12.0	7.3	100.0(534)
불평등	7.3	7.1	6.6	11.8	10.5	12.0	11.6	11.0	12.7	9.4	100.0(534)
경제일반	21.2	14.8	12.7	8.2	9.0	9.7	5.8	5.6	10.1	2.8	100.0(534)
정치일반	6.7	7.9	7.3	7.1	6.6	7.7	6.4	7.3	9.2	33.9	100.0(534)

사회위기 각 영역의 우선순위는 영역의 영향도와 관련성을 갖는다. 즉, 우선순위가 높으면 사회위기에 미치는 영향도가 큰 결과를 보여준다. 전술한 바와 같이 고용영역과 경제일반영역의 우선순위가 높았듯이, 영향도에서

도 이들 영역은 가장 영향도가 높은 10점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즉, 10점의 영향도를 가진다는 비율이 고용역역 34.1%, 경제일반영역 22.1%이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도를 보이는 것은 복지영역과 정치일반영역으로 나타났는데, 영향도가 중간수준인 5점에 해당하는 비율이 이들 영역은 높았다. 즉, 복지영역의 18.9%, 정치일반영역의 15.9%가 영향도 5점으로 나타났다.

〈표 5-3〉 사회위기 영역(안)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계(수)
고용	-	1.1	.9	1.3	1.7	5.1	5.4	11.8	16.1	22.5	34.1	100.0(534)
교육	-	2.1	3.2	4.9	6.6	9.0	13.7	17.6	13.5	15.2	14.4	100.0(534)
주거	-	3.7	4.7	7.7	9.9	13.1	14.4	12.9	14.0	9.2	10.3	100.0(534)
인구·가족	-	3.7	6.2	9.7	9.7	13.5	12.4	15.4	14.8	7.9	6.7	100.0(534)
복지	-	2.1	5.1	7.3	10.1	18.9	10.9	16.1	15.2	9.6	4.9	100.0(534)
건강·안전	-	2.8	5.8	9.0	9.7	16.3	11.0	16.5	13.7	8.2	6.9	100.0(534)
사회갈등·문화	-	2.6	4.5	6.6	9.6	14.2	13.7	17.6	14.6	10.5	6.2	100.0(534)
불평등	-	3.0	5.4	9.7	8.2	13.9	13.3	14.4	13.1	9.7	9.2	100.0(534)
경제일반	-	1.5	3.6	3.6	5.4	7.9	8.6	14.2	15.5	17.6	22.1	100.0(534)
정치일반	-	11.4	7.1	8.1	8.1	15.9	10.5	12.5	10.1	9.0	7.3	100.0(534)

전술한 <표 5-2>와 <표 5-3>의 결과는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전체 10개 영역중 평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것은 고용영역(2.9270위)이었고, 다음은 경제일반영역(4.2996위), 교육영역(4.8764위)이었다. 이어서 주거영역, 사회갈등·문화영역, 불평등 영역 등이 중간수준에 있었다. 반면에 정치일반영역은 평균 우선순위가 가장 낮았고(6.7622위), 다음은 인구·가족영역(6.2060위), 건강·안전영역(6.1517위), 복지영역(6.0899위) 등의 순이었다.

0~10점 척도에 의하여 파악된 각 영역의 평균 영향도는 고용영역이 가장 높았고(8.2603점), 다음은 경제일반영역(7.3539점), 교육영역(6.8801점) 등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에 평균 영향도가 가장 낮은 것은 정치일반영역

(5.4719점)이었고, 다음은 인구·가족영역(5.8989점), 건강·안전영역(5.9625점) 등의 순이었다.

〈표 5-4〉 사회위기 영역(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단위: 위, 점)

지표	(분석대상수)	평균 우선순위		평균 영향도	
		우선순위	표준편차	영향도	표준편차
고용	(534)	2.9270	2.13878	8.2603	1.95004
교육	(534)	4.8764	2.58072	6.8801	2.33190
주거	(534)	5.8614	2.77138	6.1629	2.46050
인구·가족	(534)	6.2060	2.69436	5.8989	2.42042
복지	(534)	6.0899	2.43939	6.0300	2.23377
건강·안전	(534)	6.1517	2.57594	5.9625	2.35867
사회갈등·문화	(534)	5.8876	2.59501	6.1891	2.27058
불평등	(534)	5.9064	2.70893	6.1030	2.44463
경제일반	(534)	4.2996	2.82646	7.3539	2.37091
정치일반	(534)	6.7622	3.16133	5.4719	2.72817

한국인의 특성별 사회위기 영역(안)의 평균 우선순위와 평균 영향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우선순위는 성,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고용영역이 가장 높았고, 두 번째 우선순위는 농어촌 거주자만이 교육이었고, 그 외는 모두 경제일반이었다.

이어서 평균 영향도가 가장 높은 영역은 평균 우선순위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즉, 성,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고용영역의 영향도가 가장 높았다. 두 번째 높은 영향도는 농어촌 거주자는 교육영역이었던 반면 그 외의 특성을 가진 모든 응답자는 경제일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거주자의 평균 영향도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 교육, 복지, 건강·안전, 인구·가족, 경제일반 등의 순이었다.

〈표 5-5〉 한국인의 특성별 사회위기 영역(안)의 평균 우선순위

(단위: %, 명)

지표	영역									
	고용	교육	주거	인구·가족	복지	건강·안전	사회갈등·문화	불평등	경제일반	정치일반
전체	2.93	4.88	5.86	6.21	6.09	6.15	5.89	5.91	4.30	6.76
성별										
남성	3.03	4.73	5.61	6.29	5.98	6.42	5.86	5.94	4.43	6.66
여성	2.86	4.97	6.03	6.15	6.16	5.97	5.91	5.88	4.21	6.83
연령										
20대	3.01	5.00	5.88	6.62	5.82	6.24	5.74	5.81	4.41	6.47
30대	2.83	4.72	5.72	5.74	6.18	6.04	6.26	6.18	4.10	7.19
40대	2.41	4.54	6.13	6.43	6.79	6.54	5.71	5.46	4.35	6.49
50대 이상	3.40	5.17	5.90	5.60	6.20	5.72	5.62	6.00	4.38	7.02
교육수준										
대졸 이하	2.96	4.80	5.77	6.26	5.95	6.21	5.84	6.13	4.35	6.70
대학원 이상	2.86	5.03	6.13	6.05	6.45	5.99	5.99	5.27	4.21	7.01
거주지역										
대도시	2.97	4.90	5.80	6.09	6.21	6.23	5.89	5.96	4.27	6.66
중소도시	2.96	4.97	6.09	6.63	5.99	6.13	5.65	5.58	4.15	6.77
농어촌	2.20	4.12	5.64	5.52	4.92	5.20	7.08	6.84	5.40	8.08

〈표 5-6〉 한국인의 특성별 사회위기 영역(안)의 평균 영향도

(단위: %, 명)

지표	영역									
	고용	교육	주거	인구·가족	복지	건강·안전	사회갈등·문화	불평등	경제일반	정치일반
전체	8.26	6.88	6.16	5.90	6.03	5.96	6.19	6.10	7.35	5.47
성별										
남성	8.22	7.01	6.29	5.80	6.02	5.75	6.18	6.06	7.33	5.57
여성	8.29	6.79	6.08	5.97	6.04	6.10	6.19	6.13	7.37	5.41
연령										
20대	8.17	6.80	6.20	5.59	6.25	5.89	6.29	6.27	7.25	5.67
30대	8.43	7.02	6.31	6.32	5.98	6.10	5.90	5.76	7.56	5.07
40대	8.46	7.10	5.81	5.73	5.52	5.76	6.32	6.35	7.52	6.00
50대 이상	7.95	6.57	5.98	6.13	5.80	6.08	6.45	6.15	7.03	5.25
교육수준										
대졸 이하	8.27	6.95	6.26	5.87	6.14	5.91	6.21	5.95	7.27	5.44
대학원 이상	8.22	6.72	5.89	5.99	5.74	6.10	6.13	6.51	7.54	5.49
거주지역										
대도시	8.21	6.93	6.26	5.99	5.99	5.94	6.25	6.11	7.38	5.56
중소도시	8.26	6.64	5.90	5.59	5.98	5.92	6.22	6.26	7.53	5.42
농어촌	8.88	7.40	6.16	6.28	6.84	6.44	5.16	5.08	6.12	4.48

제3절 「사회위기 지표(안)」의 우선순위 및 영향도

사회위기 영역을 개발하기 위해 실시한 델파이 조사에 기초하여 사회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와 영향도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표의 분석결과는 영역별로 구분한다.

1. 고용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및 영향도

고용영역 4개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순위 1위의 비율은 실업률(45.9%)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청년실업률(33.1%)이 높았다. 반면에 비정규직 비율과 근로빈곤자수는 4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7.8%, 37.3%로 높게 나타났다.

〈표 5-7〉 고용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1위	2위	3위	4위	계(수)
실업률	45.9	27.2	13.1	13.9	100.0(534)
청년실업률	33.1	32.2	23.6	11.0	100.0(534)
근로빈곤자수	9.2	19.7	33.9	37.3	100.0(534)
비정규직 비율	11.8	21.2	29.2	37.8	100.0(534)

가장 높은 10점의 영향도를 가진다는 비율은 실업률이 3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청년실업률 31.1%이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보인 근로빈곤자수와 비정규직 비율도 영향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표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즉, 이들 두 지표 모두 8점의 상당히 높은 영향도를 갖는다고 주장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근로빈곤자수 26.2%, 비정규직 비율 22.1%). 이는 우선순위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기보다는 영향도의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이는 우선순위는 반드시 격차를 보여야 하지만 영향도는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표 5-8〉 고용영역 위기지표(안)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계(수)
실업률	-	0.2	0.4	0.9	2.6	3.6	4.1	10.9	17.8	21.9	37.6	100.0(534)
청년실업률	-	0.4	0.4	1.3	0.6	4.7	4.5	13.1	20.2	23.8	31.1	100.0(534)
근로빈곤자수	-	1.1	1.7	1.3	2.8	8.2	7.9	21.0	26.2	19.7	10.1	100.0(534)
비정규직 비율	-	0.4	2.2	2.6	3.0	5.2	10.1	18.9	22.1	21.3	14.0	100.0(534)

전술한 <표 5-7>과 <표 5-8>의 결과는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전체 4개 지표 중 평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표는 실업률(1.9494위)이었고, 다음은 청년실업률(2.1255위), 비정규직 비율(2.9307위), 근로빈곤자수(2.9925위)의 순이었다. 0~10점 척도에 의하여 파악된 각 지표의 평균 영향도는 실업률(8.4869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청년실업률(8.3614점), 비정규직 비율(7.5337점), 근로빈곤자수(7.4270점)의 순이었다.

〈표 5-9〉 고용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단위: 위, 점)

지표	(분석대상수)	평균 우선순위		평균 영향도	
		우선순위	표준편차	영향도	표준편차
실업률	(534)	1.9494	1.06948	8.4869	1.72250
청년실업률	(534)	2.1255	.99774	8.3614	1.68051
근로빈곤자수	(534)	2.9925	.96852	7.4270	1.86538
비정규직 비율	(534)	2.9307	1.02907	7.5337	1.93850

한국인의 특성별 고용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와 평균 영향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네 지표 중 첫 번째 우선순위는 20대만이 청년실업률이었고, 그 외의 특성을 가진 모든 응답자는 실업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 영향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20대만이 청년실업률의 영향도가 가장 높았고, 그 외의 특성을 가진 모두가 실업률이 가장 높았다.

〈표 5-10〉 한국인의 특성별 고용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단위: %, 명)

지표	지표			
	실업률	청년실업률	근로빈곤자수	비정규직 비율
전체	1.95	2.13	2.99	2.93
성별				
남성	2.03	2.20	2.97	2.80
여성	1.90	2.08	3.01	3.02
연령				
20대	2.23	1.95	2.99	2.83
30대	1.77	2.27	3.08	2.88
40대	1.63	2.41	2.86	3.10
50대 이상	1.65	2.15	2.90	3.30
교육수준				
대졸 이하	2.01	2.08	2.96	2.95
대학원 이상	1.80	2.27	3.06	2.88
거주지역				
대도시	1.99	2.12	2.98	2.91
중소도시	1.85	2.15	3.05	2.95
농어촌	1.92	2.12	2.88	3.08

〈표 5-11〉 한국인의 특성별 고용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영향도

(단위: %, 명)

지표	지표			
	실업률	청년실업률	근로빈곤자수	비정규직 비율
전체	8.49	8.36	7.43	7.53
성별				
남성	8.25	8.09	7.30	7.53
여성	8.65	8.54	7.51	7.54
연령				
20대	8.20	8.50	7.41	7.70
30대	8.70	8.28	7.51	7.51
40대	8.87	8.13	7.38	7.35
50대 이상	8.63	8.28	7.33	7.15
교육수준				
대졸 이하	8.45	8.39	7.38	7.47
대학원 이상	8.56	8.25	7.56	7.72
거주지역				
대도시	8.39	8.27	7.34	7.50
중소도시	8.72	8.62	7.60	7.69
농어촌	8.64	8.28	7.76	7.20

2. 교육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교육영역 4개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를 살펴보면,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은 1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79.0%), 중고등 학원폭력률은 2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49.6%). 반면에 조기유학자수와 중고등학교 중퇴비율은 4위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42.9%,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5-12〉 교육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1위	2위	3위	4위	계(수)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	79.0	11.4	6.7	2.8	100.0(534)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4.3	16.3	38.2	41.2	100.0(534)
중고등 학원폭력률	13.7	49.6	23.8	12.9	100.0(534)
조기유학자수	3.0	22.8	31.3	42.9	100.0(534)

가장 높은 10점의 영향도를 가진다는 비율은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이 5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고등 학원폭력률 12.5%이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낮은 우선순위를 보인 중고등학교 중퇴비율과 조기유학자수의 영향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표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즉, 이들 두 지표 모두 7~8점의 비교적 높은 영향도를 갖는다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중고등학교 중퇴비율의 8점 비율 24.5%, 조기유학자수의 7점 비율 19.3%).

〈표 5-13〉 교육영역 위기지표(안)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계(수)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	-	0.6	0.2	0.6	1.3	3.4	4.1	7.1	11.6	17.6	53.6	100.0(534)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	2.2	4.5	6.9	7.9	18.4	13.5	17.6	17.4	7.9	3.7	100.0(534)
중고등 학원폭력률	-	0.9	3.0	3.2	4.1	7.3	11.0	12.4	24.5	21.0	12.5	100.0(534)
조기유학자수	-	3.4	3.9	5.4	9.6	16.9	10.1	19.3	16.5	11.6	3.4	100.0(534)

전술한 <표 5-12>와 <표 5-13>의 결과는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전체 4개 지표 중 평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표는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1.3333위)이었고, 다음은 중고등 학원폭력률(2.3596위), 조기유학자수(3.1404위), 중고등학교 중퇴비율(3.1629위)의 순이었다. 0~10점 척도에 의하여 파악된 각 지표의 평균 영향도는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8.8614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고등 학원폭력률(7.3277점), 조기유학자수(6.1573점), 중고등학교 중퇴비율(6.0693점)의 순이었다.

〈표 5-14〉 교육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단위: 위, 점)

지표	(분석대상수)	평균 우선순위		평균 영향도	
		우선순위	표준편차	영향도	표준편차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	(534)	1.3333	.72566	8.8614	1.67743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534)	3.1629	.84971	6.0693	2.14154
중고등 학원폭력률	(534)	2.3596	.87381	7.3277	2.11740
조기유학자수	(534)	3.1404	.87112	6.1573	2.22082

한국인의 특성별 교육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와 평균 영향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네 지표 중 첫 번째 우선순위는 성,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평균 영향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런데 조기유학자수가 중고등학교 중퇴율보다 평균 영향도가 높은 계층은 여성, 20대 연령층, 대졸 이하 학력소지자, 대도시와 농어촌 거주자이었으며, 반대로 중고등학교 중퇴율이 조기유학자수보다 평균 영향도가 높은 계층은 남성, 30대 이상 연령층, 대학원 이상 고학력자, 중소도시 거주자이었다는 점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조기유학자수의 영향도는 아직까지는 자녀 사교육비와 학원폭력에 비하여 낮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표로 판단된다.

〈표 5-15〉 한국인의 특성별 교육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단위: %, 명)

지표	지표			
	자녀사교육비 지출률	중고등학교 중퇴율	중고등 학원폭력률	조기유학자수
전체	1.33	3.16	2.36	3.14
성별				
남성	1.29	3.10	2.44	3.17
여성	1.36	3.20	2.30	3.12
연령				
20대	1.37	3.23	2.40	3.00
30대	1.32	3.18	2.30	3.20
40대	1.27	3.05	2.44	3.24
50대 이상	1.30	2.97	2.30	3.43
교육수준				
대졸 이하	1.31	3.23	2.37	3.09
대학원 이상	1.40	2.97	2.33	3.30
거주지역				
대도시	1.32	3.16	2.37	3.14
중소도시	1.36	3.16	2.28	3.19
농어촌	1.28	3.20	2.60	2.92

〈표 5-16〉 한국인의 특성별 교육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영향도

(단위: %, 명)

지표	지표			
	자녀사교육비 지출률	중고등학교 중퇴율	중고등학원폭력률	조기유학자수
전체	8.86	6.07	7.33	6.16
성별				
남성	8.85	6.02	7.15	5.95
여성	8.87	6.10	7.45	6.30
연령				
20대	8.84	5.92	7.28	6.29
30대	8.85	5.99	7.29	5.96
40대	9.03	6.44	7.44	6.40
50대 이상	8.82	6.50	7.50	5.92
교육수준				
대졸 이하	8.95	6.02	7.39	6.20
대학원 이상	8.62	6.20	7.15	5.99
거주지역				
대도시	8.83	6.02	7.25	6.13
중소도시	8.94	6.17	7.61	6.13
농어촌	8.88	6.12	6.88	6.48

3. 주거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주거영역 3개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를 살펴보면, 주거비 지출률은 1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49.3%). 반면에 전세비 증감률은 2위(47.4%)가, 자가 보유율은 3위(60.1%)가 가장 높았다.

〈표 5-17〉 주거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1위	2위	3위	계(수)
주거비 지출률	49.3	31.5	19.3	100.0(534)
자가 보유율	18.9	21.0	60.1	100.0(534)
전세비 증감률	31.8	47.4	20.8	100.0(534)

전세비 증감률의 영향도는 9점(24.7%)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10점(24.2%)이었다. 주거비 지출률과 자가 보유율의 영향도도 유사한 양상을 보였는데, 영향도 8점이 가장 많았고(각각 24.2%, 20.2%), 다음으로 주거비 지출률은 10점(27.7%)이, 자가 보유율은 9점(16.9%)이 가장 많았다.

〈표 5-18〉 주거영역 위기지표(안)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계(수)
주거비 지출률	-	1.1	.9	1.1	1.7	4.9	7.7	10.5	24.2	20.2	27.7	100.0(534)
자가 보유율	-	1.9	1.3	4.1	4.7	11.2	9.9	15.0	20.2	16.9	14.8	100.0(534)
전세비 증감률	-	.6	1.1	1.3	2.2	5.8	5.8	14.2	20.2	24.7	24.2	100.0(534)

전술한 <표 5-17>과 <표 5-18>의 결과는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전체 3개 지표 중 평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표는 주거비 지출률(1.7004위)이었고, 다음은 전세비 증감률(1.8895위), 자가 보유율(2.4120위)의 순이었다. 0~10점 척도에 의하여 파악된 각 지표의 평균 영향도는 주거비 지출률(8.0936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세비 증감률(8.0356점), 자가 보유율(7.1760점)의 순이었다.

〈표 5-19〉 주거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단위: 위, 점)

지표	(분석대상수)	평균 우선순위		평균 영향도	
		우선순위	표준편차	영향도	표준편차
주거비 지출률	(534)	1.7004	.77249	8.0936	1.89663
자가 보유율	(534)	2.4120	.78848	7.1760	2.19476
전세비 증감률	(534)	1.8895	.71762	8.0356	1.86622

한국인의 특성별 주거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와 평균 영향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 지표 중 첫 번째 우선순위는 50대 연령층만이 전세비 증감률이었고, 그 외의 응답자는 성,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주거비 지출률이라고 하였다. 평균 영향도에서는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여성, 50대 이상 연령층, 농어촌 거주자는 전세비 증감률의 영향도가 가장 높았고, 그 외의 계층은 주거비 지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0〉 한국인의 특성별 주거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단위: %, 명)

지표	지표		
	주거비 지출률	자가 보유율	전세비 증감률
전체	1.70	2.41	1.89
성별			
남성	1.67	2.40	1.93
여성	1.72	2.42	1.86
연령			
20대	1.74	2.35	1.91
30대	1.60	2.52	1.88
40대	1.54	2.62	1.84
50대 이상	1.98	2.15	1.87
교육수준			
대졸 이하	1.74	2.38	1.88
대학원 이상	1.60	2.49	1.92
거주지역			
대도시	1.68	2.43	1.89
중소도시	1.74	2.35	1.91
농어촌	1.80	2.40	1.80

〈표 5-21〉 한국인의 특성별 주거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영향도

(단위: %, 명)

지표	지표		
	주거비 지출률	자가 보유율	전세비 증감률
전체	8.09	7.18	8.04
성별			
남성	8.17	7.20	7.96
여성	8.04	7.16	8.08
연령			
20대	8.08	7.34	8.07
30대	8.22	7.07	8.06
40대	8.14	6.68	7.90
50대 이상	7.75	7.35	7.98
교육수준			
대졸 이하	8.15	7.32	8.11
대학원 이상	7.93	6.76	7.82
거주지역			
대도시	8.11	7.12	8.05
중소도시	8.19	7.39	8.04
농어촌	7.32	6.72	7.76

4. 인구·가족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인구·가족영역 4개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를 살펴보면, 출산율은 1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34.8%). 반면에 고령화지수는 2위(32.6%)가, 총부양비는 3위(30.0%)가,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4위(46.6%)가 가장 높았다.

〈표 5-22〉 인구·가족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1위	2위	3위	4위	계(수)
총부양비	27.9	20.6	30.0	21.5	100.0(534)
고령화지수	23.0	32.6	27.9	16.5	100.0(534)
수도권 인구집중도	14.0	17.0	22.3	46.6	100.0(534)
출산율	34.8	29.8	20.0	15.4	100.0(534)

출산율의 영향도는 10점이 가장 많았고(29.2%), 총부양비와 고령화지수의 영향도는 8점이 가장 많았다(각각 21.9%, 22.5%). 반면에 수도권 인구

집중도의 영향도는 7점이 가장 많았다(21.2%)

〈표 5-23〉 인구·가족영역 위기지표(안)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계(수)
총부양비	-	.9	.7	1.7	2.8	7.1	8.6	14.0	21.9	21.0	21.2	100.0(534)
고령화지수	-	.2	.9	2.1	3.4	6.0	8.8	14.4	22.5	21.5	20.2	100.0(534)
수도권 인구집중도	-	1.5	2.1	2.1	4.5	13.1	11.8	21.2	17.8	16.1	9.9	100.0(534)
출산율	-	.6	1.5	.9	2.2	5.2	6.0	13.5	20.4	20.4	29.2	100.0(534)

전술한 <표 5-22>와 <표 5-23>의 결과는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전체 4개 지표 중 평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표는 출산율(2.1592위)이었고, 다음은 고령화지수(2.3783위), 총부양비(2.4513위)의 순이었다. 0~10점 척도에 의하여 파악된 각 지표의 평균 영향도는 출산율(8.1105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고령화지수(7.8127점), 총부양비(7.7996점)의 순이었다.

〈표 5-24〉 인구·가족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단위: 위, 점)

지표	(분석대상수)	평균 우선순위		평균 영향도	
		우선순위	표준편차	영향도	표준편차
총부양비	(534)	2.4513	1.11297	7.7996	1.93592
고령화지수	(534)	2.3783	1.01359	7.8127	1.87472
수도권 인구집중도	(534)	3.0150	1.09568	7.0075	2.03808
출산율	(534)	2.1592	1.06758	8.1105	1.90313

한국인의 특성별 인구·가족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와 평균 영향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네 지표 중 첫 번째 우선순위는 40~50대 이상 연령층만이 고령화 지수라고 응답하였고, 그 외의 응답자는 성, 교육수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출산율이라고 하였다. 평균 영향도에서도 50대 이상 연령층만이 고령화 지수의 영향도가 가장 높았고, 그 외의 모든 계층은 출산율의 영향도가 가장 높았다.

〈표 5-25〉 한국인의 특성별 인구·가족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단위: %, 명)

지표	지표			
	총부양비	고령화지수	수도권 인구집중도	출산율
전체	2.45	2.38	3.02	2.16
성별				
남성	2.45	2.45	3.01	2.09
여성	2.45	2.33	3.02	2.20
연령				
20대	2.55	2.37	2.86	2.23
30대	2.33	2.59	3.08	2.00
40대	2.29	2.25	3.17	2.29
50대 이상	2.57	1.97	3.32	2.18
교육수준				
대졸 이하	2.45	2.42	2.91	2.22
대학원 이상	2.43	2.28	3.28	2.02
거주지역				
대도시	2.45	2.40	3.01	2.13
중소도시	2.39	2.31	3.05	2.26
농어촌	2.84	2.32	2.88	2.04

〈표 5-26〉 한국인의 특성별 인구·가족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영향도

(단위: %, 명)

지표	지표			
	총부양비	고령화지수	수도권 인구집중도	출산율
전체	7.80	7.81	7.01	8.11
성별				
남성	7.69	7.65	6.85	8.09
여성	7.87	7.92	7.12	8.13
연령				
20대	7.67	7.77	7.27	7.97
30대	7.98	7.66	6.82	8.30
40대	7.97	7.87	6.90	8.13
50대 이상	7.63	8.33	6.58	8.13
교육수준				
대졸 이하	7.84	7.77	7.14	8.04
대학원 이상	7.72	7.92	6.63	8.29
거주지역				
대도시	7.78	7.80	7.01	8.16
중소도시	7.95	7.88	6.96	8.00
농어촌	7.20	7.76	7.12	8.04

5. 복지영역 위기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복지영역 4개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를 살펴보면, 노후대비율은 1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58.8%). 반면에 연금수혜비율은 2위(43.6%)가, 요보호아동수는 3위(47.8%)가, 장애인 출현율은 4위(62.5%)가 가장 높았다.

〈표 5-27〉 복지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1위	2위	3위	4위	계(수)
노후대비율	58.8	28.1	8.1	5.1	100.0(534)
연금수혜비율	22.7	43.6	18.2	15.5	100.0(534)
요보호아동수	14.4	21.3	47.8	16.5	100.0(534)
장애인 출현율	4.1	7.3	26.0	62.5	100.0(534)

노후대비율의 영향도는 가장 높은 10점(35.4%)이 가장 많았고, 다음은 8점(20.6%)이었다. 연금수혜비율은 9점과 8점이 동일한 비율(22.1%)로 많았으며, 반면에 장애인 출현율은 7점이 가장 많았다(22.5%).

〈표 5-28〉 복지영역 위기지표(안)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계(수)
노후대비율	-	.4	.4	.9	1.7	5.1	5.2	10.5	20.6	19.9	35.4	100.0(534)
연금수혜비율	-	.7	.9	2.2	2.1	8.1	9.7	16.3	22.1	22.1	15.7	100.0(534)
요보호아동수	-	.7	1.3	4.3	3.6	11.6	14.2	17.8	22.3	14.4	9.7	100.0(534)
장애인 출현율	-	3.2	2.8	8.2	9.4	12.9	14.0	22.5	16.9	6.7	3.4	100.0(534)

전술한 <표 5-27>과 <표 5-28>의 결과는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전체 4개 지표 중 평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표는 노후대비율(1.5936위)이었고, 다음은 연금수혜비율(2.2659위), 요보호아동수(2.6629위)의 순이었다. 0~10점 척도에 의하여 파악된 각 지표의 평균 영향도는 노후대비율(8.3820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연금수혜비율(7.6330점), 요보호아동수(7.0393점)의 순이었다.

〈표 5-29〉 복지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단위: 위, 점)

지표	(분석대상수)	평균 우선순위		평균 영향도	
		우선순위	표준편차	영향도	표준편차
노후대비율	(534)	1.5936	.84082	8.3820	1.75094
연금수혜비율	(534)	2.2659	.98033	7.6330	1.89601
요보호아동수	(534)	2.6629	.91816	7.0393	1.97364
장애인 출현율	(534)	3.4700	.80223	6.0637	2.13073

한국인의 특성별 복지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와 평균 영향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네 지표 중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응답자의 성,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노후대비율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평균 영향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급속한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한국인은 생활유지, 자녀교육 등에 치중한 나머지 자신의 노후준비에는 등한시 하였고, 이에 대한 우려가 높음을 짐작케 한다. 이는 사회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 5-30〉 한국인의 특성별 복지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단위: %, 명)

지표	지표			
	노후대비율	연금수혜비율	요보호아동수	장애인 출현율
전체	1.59	2.27	2.66	3.47
성별				
남성	1.60	2.18	2.72	3.51
여성	1.59	2.32	2.63	3.45
연령				
20대	1.70	2.32	2.59	3.40
30대	1.54	2.17	2.68	3.58
40대	1.44	2.52	2.65	3.38
50대 이상	1.48	2.07	2.90	3.55
교육수준				
대졸 이하	1.60	2.25	2.69	3.45
대학원 이상	1.56	2.31	2.58	3.52
거주지역				
대도시	1.56	2.29	2.70	3.44
중소도시	1.67	2.27	2.50	3.53
농어촌	1.68	1.88	2.92	3.52

〈표 5-31〉 한국인의 특성별 복지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영향도

(단위: %, 명)

지표	지표			
	노후대비율	연금수혜비율	요보호아동수	장애인 출현율
전체	8.38	7.63	7.04	6.06
성별				
남성	8.33	7.59	6.90	5.89
여성	8.41	7.66	7.13	6.18
연령				
20대	8.22	7.49	7.09	6.16
30대	8.46	7.79	6.91	5.81
40대	8.56	7.37	7.19	6.38
50대 이상	8.63	8.08	7.03	6.03
교육수준				
대졸 이하	8.42	7.72	7.12	6.18
대학원 이상	8.26	7.40	6.84	5.78
거주지역				
대도시	8.37	7.55	6.96	6.08
중소도시	8.43	7.78	7.28	5.99
농어촌	8.24	7.92	6.84	6.20

6. 건강·안전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건강·안전영역 7개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를 살펴보면, 자살률과 강력범죄율은 1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각각 26.4%, 24.1%). 청소년자살률은 2위의 비율(18.9%)이, 부정식품 적발률은 5위의 비율(20.4%)이,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과 교통사고 사망률은 6위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5-32〉 건강·안전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계(수)
평균수명	18.2	4.7	7.9	9.9	6.4	10.1	42.9	100.0(534)
자살률	26.4	21.2	17.0	13.5	11.2	8.4	2.2	100.0(534)
청소년자살률	6.4	18.9	17.6	19.7	19.1	13.1	5.2	100.0(534)
부정식품 적발률	5.2	8.6	12.2	16.3	20.4	18.7	18.5	100.0(534)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14.0	14.4	13.3	10.9	16.1	19.7	11.6	100.0(534)
교통사고 사망률	5.8	9.2	16.1	16.3	17.0	23.2	12.4	100.0(534)
강력범죄율	24.1	23.5	16.0	14.1	9.4	6.4	6.4	100.0(531)

자살률과 강력범죄율의 영향도는 10점이 가장 많았다(각각 24.0%, 25.4%).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은 8점의 영향도가 가장 많았고(15.5%), 청소년자살률과 교통사고 사망률은 7점의 영향도가 가장 많았다(각각 19.3%, 18.0%). 반면에 평균수명과 부정식품 적발률은 중간수준의 영향도를 나타내는 5점이 가장 많았다(각각 16.7%, 17.2%).

〈표 5-33〉 건강·안전영역 위기지표(안)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계(수)
평균수명	-	3.9	3.4	6.4	13.9	16.7	11.6	12.4	11.6	8.6	11.6	100.0(534)
자살률	-	.7	.9	1.1	2.6	9.4	9.0	15.0	19.7	17.6	24.0	100.0(534)
청소년자살률	-	.9	1.3	3.0	4.9	10.1	13.9	19.3	16.9	17.0	12.7	100.0(534)
부정식품 적발률	-	2.1	1.5	6.2	9.9	17.2	15.4	16.1	14.2	10.9	6.6	100.0(534)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	.4	2.2	4.1	8.8	14.4	12.7	13.7	15.5	12.7	15.4	100.0(534)
교통사고 사망률	-	.6	2.4	5.4	8.4	17.2	13.3	18.0	15.5	12.5	6.6	100.0(534)
강력범죄율	-	.8	1.1	1.7	4.0	6.0	9.6	14.5	16.9	20.0	25.4	100.0(531)

전술한 <표 5-32>와 <표 5-33>의 결과는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전체 7개 지표 중 평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표는 자살률(2.9625위)이었고, 다음은 강력범죄율(3.0603위), 청소년자살률(3.8652위)의 순이었다. 0~10점 척도에 의하여 파악된 각 영역의 평균 영향도는 강력범죄율(7.8267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살률(7.7753점), 청소년자살률(7.1629점)의 순이었다.

〈표 5-34〉 건강·안전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단위: 위, 점)

지표	(분석대상수)	평균 우선순위		평균 영향도	
		우선순위	표준편차	영향도	표준편차
평균수명	(534)	4.8352	2.35399	6.1124	2.45685
자살률	(534)	2.9625	1.72459	7.7753	1.96166
청소년자살률	(534)	3.8652	1.63699	7.1629	2.02555
부정식품 적발률	(534)	4.6835	1.76026	6.3146	2.13219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534)	4.0599	1.99252	6.8914	2.21275
교통사고 사망률	(534)	4.4869	1.74091	6.5000	2.06530
강력범죄율	(531)	3.0603	1.82233	7.8267	2.02441

한국인의 특성별 건강·안전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와 평균 영향도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곱 지표 중 첫 번째 우선순위는 여성, 20대 및 40대 이상 연령층,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자, 대도시 및 농어촌 거주자들은 자살률을 제시하였고, 남성, 30대 연령층, 대졸 이하 학력자, 중소도시 거주자는 강력범죄율을 제시하였다.

〈표 5-35〉 한국인의 특성별 건강·안전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단위: %, 명)

지표	지표						
	평균수명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부정식품 적발률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교통사고 사망률	강력 범죄율
전체	4.84	2.96	3.87	4.68	4.06	4.49	3.06
성별							
남성	4.69	3.08	3.97	4.82	4.19	4.27	2.97
여성	4.93	2.88	3.79	4.59	3.97	4.64	3.12
연령							
20대	5.14	2.70	3.60	4.69	4.25	4.57	2.98
30대	4.52	3.32	4.30	4.66	3.70	4.42	3.04
40대	4.92	3.02	3.48	4.76	4.38	4.33	3.11
50대 이상	4.37	3.00	4.12	4.63	3.95	4.48	3.39
교육수준							
대졸 이하	4.89	3.08	3.90	4.57	4.10	4.43	2.98
대학원 이상	4.65	2.67	3.78	4.97	3.96	4.63	3.30
거주지역							
대도시	4.88	2.88	3.87	4.79	4.09	4.42	3.03
중소도시	4.77	3.19	3.85	4.40	3.93	4.74	3.07
농어촌	4.44	2.84	3.80	4.64	4.48	4.24	3.56

평균 영향도는 여성, 20대 및 50대 이상 연령층, 대학원 이상 고학력자, 농어촌 거주자는 자살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남성, 30~40대 연령층, 대졸 이하 학력소지자, 대도시 및 중소도시 거주자는 강력범죄율의 영향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자살률은 여성, 40대 연령층, 대졸 이하 학력소지자, 농어촌 거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영향도를 보였다. 또한 강력범죄율은 도시지역 거주자가, 교통사고 사망률은 농어촌지역 거주자가 영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6〉 한국인의 특성별 건강·안전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영향도

(단위: %, 명)

지표	지표						
	평균수명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부정식품 적발률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교통사고 사망률	강력 범죄율
전체	6.11	7.78	7.16	6.31	6.89	6.50	7.83
성별							
남성	6.11	7.61	6.98	6.19	6.75	6.60	7.84
여성	6.11	7.89	7.29	6.40	6.98	6.43	7.82
연령							
20대	5.85	8.08	7.41	6.36	6.72	6.49	7.90
30대	6.29	7.42	6.73	6.20	7.15	6.47	7.83
40대	6.14	7.87	7.67	6.41	6.84	6.79	8.16
50대 이상	6.65	7.43	6.87	6.35	6.90	6.30	7.15
교육수준							
대졸 이하	6.16	7.72	7.18	6.48	6.89	6.62	7.95
대학원 이상	6.01	7.89	7.07	5.85	6.86	6.18	7.47
거주지역							
대도시	6.02	7.82	7.15	6.20	6.86	6.54	7.85
중소도시	6.28	7.62	7.15	6.60	7.03	6.26	7.81
농어촌	6.60	8.00	7.48	6.36	6.56	7.08	7.44

7. 사회갈등·문화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사회갈등·문화영역 6개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를 살펴보면, 노사분규 발생건수와 우리나라 갈등비용은 1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각각 39.5%, 30.7%). 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는 2위의 비율(38.2%)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불법체류자수는 4위의 비율(33.3%)이 가장 높았다, 마약 및 밀수사범수는 5위 비율(42.1%)이. 도박사범수는 6위의 비율(43.2%)이 높았다.

〈표 5-37〉 사회갈등·문화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계(수)
노사분규 발생건수	39.5	33.7	14.4	6.0	3.7	2.6	100.0(534)
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	20.0	38.2	25.7	6.7	6.4	3.0	100.0(534)
불법체류자수	3.9	4.3	15.9	33.3	13.7	28.8	100.0(534)
우리나라 갈등비용	30.7	13.9	28.7	15.9	6.0	4.9	100.0(534)
마약 및 밀수사범수	3.4	6.2	8.4	23.2	42.1	16.7	100.0(534)
도박사범수	2.3	4.0	7.2	15.2	28.2	43.2	100.0(528)

노사분규 발생건수의 영향도는 10점이 가장 많았고(29.0%), 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는 9점의 영향도가 가장 많았다(20.6%). 우리나라 갈등비용은 8점의 영향도(22.5%)가, 마약 및 밀수사범수는 7점의 영향도(18.9%)가 가장 많았다. 반면에 중간수준의 5점이 가장 많았던 지표는 도박사범수와 불법체류자수로 나타났다(각각 22.3%, 21.7%).

〈표 5-38〉 사회갈등·문화영역 위기지표(안)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계(수)
노사분규 발생건수	-	1.5	1.5	2.1	2.4	3.7	7.7	15.4	15.9	20.8	29.0	100.0(534)
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	-	1.1	2.1	2.1	1.3	7.1	10.7	15.0	19.9	20.6	20.2	100.0(534)
불법체류자수	-	1.7	4.5	9.4	8.8	21.7	14.8	19.1	10.1	6.0	3.9	100.0(534)
우리나라 갈등비용	-	.7	1.3	3.0	4.9	8.1	9.2	16.7	22.5	15.5	18.2	100.0(534)
마약 및 밀수사범수	-	3.2	4.7	8.4	11.2	17.6	18.7	18.9	9.9	5.6	1.7	100.0(534)
도박사범수	-	4.5	6.6	11.4	9.5	22.3	15.2	13.8	11.0	4.9	.9	100.0(528)

전술한 <표 5-37>과 <표 5-38>의 결과는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전체 6개 지표 중 평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표는 노사분규 발생건수(2.0861위)이었고, 다음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2.5019위), 우리나라 갈등비용(2.6723위)의 순이었다. 0~10점 척도에 의하여 파악된 각 영역의 평균 영향도는 노사분규 발생건수(7.9738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7.6760점), 우리나라 갈등비용(7.4513점)의 순이었다.

〈표 5-39〉 사회갈등·문화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단위: 위, 점)

지표	(분석대상수)	평균 우선순위		평균 영향도	
		우선순위	표준편차	영향도	표준편차
노사분규 발생건수	(534)	2.0861	1.23735	7.9738	2.08615
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	(534)	2.5019	1.23694	7.6760	2.03762
불법체류자수	(534)	4.3502	1.36253	5.7921	2.06913
우리나라 갈등비용	(534)	2.6723	1.44936	7.4513	2.05288
마약 및 밀수사범수	(534)	4.4457	1.23574	5.6236	2.03872
도박사범수	(528)	4.9261	1.26109	5.2917	2.11755

사회갈등·문화영역 위기지표(안)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모든 응답자가 노사분규 발생건수라고 제시하였다. 평균 영향도는 농어촌 거주자만이 파업 손실일수가, 다른 모든 응답자는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가장 높았다.

〈표 5-40〉 한국인의 특성별 사회갈등·문화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단위: %, 명)

지표	지표					
	노사분규 발생건수	파업 손실일수	불법체류자수	갈등비용	마약·밀수 사범수	도박사범수
전체	2.09	2.50	4.35	2.67	4.45	4.93
성별						
남성	2.10	2.58	4.37	2.57	4.38	4.98
여성	2.08	2.45	4.34	2.74	4.49	4.89
연령						
20대	2.12	2.56	4.26	2.68	4.49	4.88
30대	2.15	2.58	4.30	2.57	4.36	5.04
40대	2.10	2.25	4.67	2.76	4.37	4.82
50대 이상	1.77	2.32	4.55	2.85	4.60	4.92
교육수준						
대졸 이하	2.09	2.49	4.34	2.67	4.49	4.90
대학원 이상	2.06	2.53	4.38	2.61	4.36	5.05
거주지역						
대도시	2.19	2.57	4.39	2.63	4.33	4.87
중소도시	1.77	2.38	4.24	2.80	4.72	5.07
농어촌	2.20	2.24	4.44	2.60	4.60	4.92

〈표 5-41〉 한국인의 특성별 사회갈등·문화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영향도

(단위: %, 명)

지표	지표					
	노사분규 발생건수	파업 손실일수	불법체류자수	갈등비용	마약·밀수 사범수	도박사범수
전체	7.97	7.68	5.79	7.45	5.62	5.29
성별						
남성	7.90	7.61	5.61	7.49	5.52	5.07
여성	8.03	7.72	5.91	7.42	5.69	5.44
연령						
20대	8.06	7.79	6.02	7.61	5.81	5.46
30대	7.63	7.31	5.60	7.25	5.36	4.93
40대	8.14	7.97	5.49	7.62	5.73	5.48
50대 이상	8.40	7.95	5.72	7.18	5.48	5.42
교육수준						
대졸 이하	8.15	7.86	5.98	7.58	5.74	5.43
대학원 이상	7.49	7.17	5.30	7.15	5.29	4.87
거주지역						
대도시	7.85	7.60	5.75	7.51	5.70	5.32
중소도시	8.35	7.82	5.96	7.23	5.44	5.21
농어촌	7.80	8.00	5.48	7.72	5.52	5.36

8. 불평등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불평등 영역 8개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를 살펴보면, 소득불평등은 1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60.7%), 평균소득 75~150% 비율은 2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20.8%). 반면에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5위의 비율이, 지역간 소득격차는 6위의 비율이,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는 7위의 비율이, 영호남 지역격차 계수는 8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5-42〉 불평등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계(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7.3	12.5	16.5	12.4	18.0	12.4	12.5	8.4	100.0(534)
남녀 임금격차	8.8	16.5	14.8	18.0	14.6	12.7	9.7	4.9	100.0(534)
소득불평등	60.7	11.0	12.0	6.4	3.9	3.2	1.5	1.3	100.0(534)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6.6	15.0	12.7	18.0	16.5	13.7	9.9	7.7	100.0(534)
평균소득 75~150% 비율	6.2	20.8	16.3	14.6	20.2	10.1	7.3	4.5	100.0(534)
지역간 소득격차	6.9	16.7	13.7	17.2	9.6	25.8	8.1	2.1	100.0(534)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	2.4	6.2	9.6	8.8	12.2	15.9	38.6	6.4	100.0(534)
영호남 지역격차 계수	.9	1.3	4.5	4.7	5.3	6.3	12.3	64.6	100.0(528)

소득불평등의 영향도는 10점이 가장 많았다(54.1%). 평균소득 75~150% 비율,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지역간 소득격차는 8점의 영향도가 가장 많았고,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와 남녀 임금격차는 7점이 가장 많았다. 반면에 영호남 지역격차 계수는 3점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표 5-43〉 불평등영역 위기지표(안)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계(수)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	2.2	2.8	5.1	6.4	11.2	14.2	14.8	18.9	14.8	9.6	100.0(534)
남녀 임금격차	-	1.5	3.2	3.4	4.3	11.2	11.4	20.0	17.0	14.4	13.5	100.0(534)
소득불평등	-	.4	.6	2.4	1.7	1.1	3.9	6.7	14.8	14.2	54.1	100.0(534)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	2.1	2.6	3.0	5.6	9.7	14.4	20.6	19.7	13.9	8.4	100.0(534)
평균소득 75~150% 비율	-	1.3	.9	2.2	4.7	11.4	12.9	17.8	21.5	16.1	11.0	100.0(534)
지역간 소득격차	-	.6	.7	2.4	6.9	15.9	13.3	15.9	18.2	16.1	9.9	100.0(534)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	-	2.1	2.2	6.7	15.7	15.2	19.5	14.8	13.3	6.2	4.3	100.0(534)
영호남 지역격차 계수	-	6.6	9.7	21.6	11.6	16.5	11.7	10.4	7.4	2.7	1.9	100.0(528)

전술한 <표 5-42>와 <표 5-43>의 결과는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전체 8개 지표 중 평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표는 소득불평등(2.0393위)이었고, 다음은 평균소득 75~150% 비율(4.0393위)이었다. 마찬가지로 0~10점 척도에 의하여 파악된 각 영역의 평균 영향도는 소득불평등(8.7959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평균소득 75~150% 비율(7.1554점)이었다.

〈표 5-44〉 불평등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단위: 위, 점)

지표	(분석대상수)	평균 우선순위		평균 영향도	
		우선순위	표준편차	영향도	표준편차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534)	4.5056	2.05619	6.7360	2.25061
남녀 임금격차	(534)	4.1461	1.97385	7.0112	2.18983
소득불평등	(534)	2.0393	1.64150	8.7959	1.80823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534)	4.4195	1.99532	6.8446	2.09981
평균소득 75~150% 비율	(534)	4.0393	1.88117	7.1554	1.97740
지역간 소득격차	(534)	4.2584	1.88424	6.9738	1.97433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	(534)	5.5599	1.83952	5.9101	2.04622
영호남 지역격차 계수	(528)	7.0303	1.65846	4.6458	2.21122

한국인의 특성별 불평등영역 위기지표(안)의 여덟 지표 중 첫 번째 우선순위는 모든 응답자가 소득 불평등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와 동일하게 평균 영향도 역시 소득 불평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위기 하에서 빈부격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매우 큰 사회위기 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강력한 사회위기 지표임을 알 수 있다.

이와는 상반되게, 영호남 지역격차 계수와 시·도간 재정자립도 격차는 상대적으로 평균 우선순위가 낮았고, 평균 영향도 역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그 동안 지역 불평등, 지역간 갈등의 대표적 지표로 인식되어 왔던 이들 지표가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음은 매우 큰 변화로 받아들여지면서 한국의 사회문제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 5-45〉 한국인의 특성별 불평등 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단위: %, 명)

지표	지표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남녀 임금격차	소득 불평등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평균소득 75~150% 비율	지역간 소득격차	시·도간 재정자립도 격차	영호남 지역격차 계수
전체	4.51	4.15	2.04	4.42	4.04	4.26	5.56	7.03
성별								
남성	4.90	4.57	2.05	4.15	3.86	4.16	5.46	6.88
여성	4.24	3.86	2.03	4.60	4.16	4.32	5.63	7.13
연령								
20대	4.47	4.04	2.09	4.61	4.07	4.14	5.67	6.89
30대	4.54	4.29	2.15	4.17	3.92	4.28	5.54	7.14
40대	4.32	3.98	1.81	4.41	3.98	4.70	5.37	7.38
50대 이상	4.75	4.35	1.75	4.33	4.28	4.22	5.38	6.93
교육수준								
대졸 이하	4.45	4.12	2.11	4.36	4.05	4.30	5.59	7.01
대학원 이상	4.65	4.26	1.86	4.55	4.01	4.13	5.49	7.11
거주지역								
대도시	4.50	4.12	2.00	4.43	4.02	4.25	5.63	7.07
중소도시	4.47	4.15	2.05	4.36	3.91	4.31	5.63	7.10
농어촌	4.88	4.56	2.56	4.56	5.16	4.12	4.12	6.04

〈표 5-46〉 한국인의 특성별 불평등 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영향도

(단위: %, 명)

지표	지표							
	남녀 경제활동참 가율	남녀 임금격차	소득 불평등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평균소득 75~150% 비율	지역간 소득격차	시·도간 재정자립도 격차	영호남 지역격차 계수
전체	6.74	7.01	8.80	6.84	7.16	6.97	5.91	4.65
성별								
남성	6.25	6.56	8.69	6.96	7.22	6.97	5.85	4.49
여성	7.06	7.32	8.87	6.77	7.11	6.97	5.95	4.75
연령								
20대	6.81	7.10	8.89	6.83	7.20	7.16	5.93	4.97
30대	6.69	6.95	8.62	6.88	7.18	6.84	5.72	4.23
40대	6.87	7.16	8.87	6.87	7.19	6.71	6.17	4.56
50대 이상	6.43	6.65	8.83	6.78	6.88	6.87	6.07	4.60
교육수준								
대졸 이하	6.79	7.05	8.77	6.92	7.17	6.94	5.89	4.63
대학원 이상	6.62	6.87	8.86	6.67	7.12	7.07	5.99	4.67
거주지역								
대도시	6.77	7.06	8.84	6.82	7.16	6.98	5.84	4.64
중소도시	6.66	6.91	8.75	6.89	7.24	6.93	5.83	4.53
농어촌	6.68	6.76	8.40	6.84	6.44	7.16	7.32	5.20

9. 경제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경제일반영역 8개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를 살펴보면, 소비자물가지수, 가계 부채비율, 경제성장률은 1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각각 29.0%, 24.7%, 18.4%), 원유가는 3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16.3%). 그 외의 지표는 6위 이하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5-47〉 경제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계(수)
원유가	11.4	13.9	16.3	13.7	15.0	10.5	9.7	9.6	100.0(534)
소비자물가지수	29.0	23.2	17.2	10.5	6.6	6.2	5.4	1.9	100.0(534)
신용불량자율	4.9	11.4	14.0	12.0	13.1	14.8	10.1	19.7	100.0(534)
경제성장률	18.4	10.9	12.4	12.0	13.9	12.5	12.4	7.7	100.0(534)
환율	6.0	9.9	12.2	15.2	15.2	17.0	15.9	8.6	100.0(534)
외채비율	4.5	5.1	8.1	13.3	14.0	17.0	20.4	17.6	100.0(534)
가계 부채비율	24.7	18.4	9.9	13.3	10.3	9.7	9.2	4.5	100.0(534)
기업 부채비율	1.1	7.3	10.0	10.3	12.0	12.2	16.5	30.5	100.0(532)

소비자물가지수와 가계 부채비율의 영향도는 10점이 가장 많았고(각각 34.6%, 26.4%), 원유가와 경제성장률은 9점의 영향도가 가장 많았다(각각 18.5%, 18.0%). 그 외의 지표는 모두 7점의 영향도가 많았다. 따라서 경제일반영역의 위기지표는 전반적으로 영향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5-48〉 경제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계(수)
원유가	-	.2	.9	3.0	5.6	8.6	12.5	15.7	16.5	18.5	18.4	100.0(534)
소비자물가지수	-	.4	.4	.7	3.0	4.7	4.9	11.2	18.9	21.2	34.6	100.0(534)
신용불량자율	-	1.1	1.7	6.7	5.2	14.0	12.9	19.1	15.5	14.0	9.6	100.0(534)
경제성장률	-	.6	1.9	2.8	4.1	9.7	13.3	14.6	17.4	18.0	17.6	100.0(534)
환율	-	.6	1.1	2.6	8.4	10.3	14.6	19.7	19.5	11.4	11.8	100.0(534)
외채비율	-	.9	.7	7.7	8.4	13.7	17.0	20.0	16.3	9.2	6.0	100.0(534)
가계 부채비율	-	.4	.4	1.3	5.2	7.5	7.9	13.7	18.0	19.3	26.4	100.0(534)
기업 부채비율	-	2.1	3.2	7.7	9.0	16.4	12.8	17.3	14.7	9.4	7.3	100.0(531)

전술한 <표 5-47>과 <표 5-48>의 결과는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전체 8개 지표 중 평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표는 소비자물가지수(2.9195위)이었고, 다음은 가계 부채비율(3.5449위)이었다. 마찬가지로 0~10점 척도에 의하여 파악된 각 영역의 평균 영향도는 소비자물가지수(8.3483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계 부채비율(7.8783점)이었다.

〈표 5-49〉 경제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단위: 위, 점)

지표	(분석대상수)	평균 우선순위		평균 영향도	
		우선순위	표준편차	영향도	표준편차
원유가	(534)	4.2509	2.15983	7.4419	2.03151
소비자물가지수	(534)	2.9195	1.91152	8.3483	1.78760
신용불량자율	(534)	5.0019	2.19542	6.7341	2.14058
경제성장률	(534)	4.1760	2.27370	7.3708	2.08838
환율	(534)	4.8146	2.01153	6.9775	1.98481
외채비율	(534)	5.4813	1.99404	6.4288	1.99474
가계 부채비율	(534)	3.5449	2.21305	7.8783	1.96264
기업 부채비율	(532)	5.7989	2.05823	6.2354	2.23336

한국인의 특성별 경제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여덟 지표 중 첫 번째 우선순위는 모든 응답자가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제시하였다. 이와 동일하게 평균 영향도 역시 소비자 물가지수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음식료, 공산품, 교통통신비 등 필수적으로 소비해야하는 품목의 물가지수에 대한 걱정거리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평균 우선순위가 높고 평균 영향도에서 다음으로 큰 영향을 나타내는 것은 가계 부채비율이었다. 농어촌 거주자의 두 번째 평균 영향도가 높은 지표가 원유(8.04점)이었고, 그 외의 모든 특성에서 가계 부채비율의 우선순위가 영향도가 두 번째로 높다고 응답하였다.

〈표 5-50〉 한국인의 특성별 경제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단위: %, 명)

지표	지표							
	원유가	소비자 물가지수	신용불량자 율	경제 성장률	환율	외채비율	가계부채 비율	기업부채 비율
전체	4.25	2.92	5.00	4.1760	4.81	5.48	3.54	5.80
성별								
남성	4.39	2.99	4.99	4.42	4.71	5.28	3.36	5.85
여성	4.16	2.87	5.01	4.01	4.88	5.62	3.67	5.77
연령								
20대	4.26	2.90	4.98	4.05	4.79	5.43	3.90	5.69
30대	4.25	2.98	4.93	4.17	4.79	5.83	3.21	5.81
40대	4.30	2.70	5.37	4.49	4.75	5.11	3.40	5.89
50대 이상	4.18	3.07	4.93	4.37	5.03	5.08	3.22	6.12
교육수준								
대졸 이하	4.16	2.86	4.93	4.20	4.86	5.57	3.58	5.83
대학원 이상	4.50	3.10	5.21	4.11	4.67	5.26	3.42	5.70
거주지역								
대도시	4.32	2.91	5.02	4.13	4.72	5.50	3.67	5.72
중소도시	4.13	3.07	4.97	4.25	5.05	5.31	3.21	6.00
농어촌	3.68	2.36	4.96	4.36	4.84	6.24	3.56	5.92

〈표 5-51〉 한국인의 특성별 경제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영향도

(단위: %, 명)

지표	지표							
	원유가	소비자 물가지수	신용불량 자율	경제 성장률	환율	외채비율	가계부채 비율	기업부채 비율
전체	7.44	8.35	6.73	7.38	6.98	6.43	7.88	6.24
성별								
남성	7.29	8.33	6.59	7.09	6.92	6.41	7.93	6.13
여성	7.54	8.36	6.83	7.56	7.02	6.44	7.85	6.31
연령								
20대	7.54	8.46	6.90	7.56	7.07	6.51	7.66	6.35
30대	7.38	8.33	6.76	7.35	6.96	6.18	8.12	6.18
40대	7.35	8.32	6.48	7.10	7.02	6.71	7.95	6.37
50대 이상	7.30	8.00	6.27	6.93	6.60	6.47	8.00	5.78
교육수준								
대졸 이하	7.59	8.47	6.88	7.39	6.99	6.39	7.90	6.22
대학원 이상	7.06	8.01	6.31	7.28	6.92	6.51	7.83	6.27
거주지역								
대도시	7.37	8.39	6.77	7.36	7.00	6.36	7.84	6.26
중소도시	7.51	8.14	6.63	7.38	6.86	6.71	8.03	6.13
농어촌	8.04	8.88	6.68	7.44	7.20	5.84	7.60	6.38

10. 정치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정치일반영역 7개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를 살펴보면, 정부신뢰도와 투표율이 1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각각 46.1%, 17.6%), 부패인식지수는 2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28.8%). 반면에 행정소송건수는 가장 낮은 7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51.9%).

〈표 5-52〉 정치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계(수)
투표율	17.6	9.9	17.4	17.4	16.9	10.7	10.1	100.0(534)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6.4	9.6	13.1	17.8	26.2	20.0	6.9	100.0(534)
세대별 정당득표집중률	1.5	4.1	7.9	15.5	20.2	30.0	20.8	100.0(534)
국가기관별 신뢰지수	6.6	19.9	22.1	21.3	12.4	12.5	5.2	100.0(534)
부패인식지수	21.0	28.8	19.1	9.7	10.1	10.1	1.1	100.0(534)
행정소송건수	.9	2.8	7.9	10.5	11.2	14.8	51.9	100.0(534)
정부신뢰도	46.1	25.1	12.4	7.9	3.2	1.5	3.9	100.0(534)

정부신뢰도의 영향도는 10점이 가장 많았고(41.9%), 부패인식지수와 국가기관별 신뢰지수는 9위가 가장 많았다(각각 21.3%, 20.2%). 반면에 행정소송건수는 상대적으로 영향도가 낮아 5점이 가장 많았다(20.0%).

〈표 5-53〉 정치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계(수)
투표율	-	1.9	1.9	2.2	8.2	10.7	12.2	14.4	19.5	12.0	17.0	100.0(534)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	2.6	1.9	4.5	5.6	13.1	17.8	19.1	18.0	7.9	9.6	100.0(534)
세대별 정당득표집중률	-	3.9	2.8	5.2	8.1	20.2	15.9	22.8	12.0	7.1	1.9	100.0(534)
국가기관별 신뢰지수	-	1.1	1.3	1.9	4.7	8.8	13.3	16.7	19.5	20.2	12.5	100.0(534)
부패인식지수	-	.4	1.5	2.1	2.8	7.1	9.4	11.6	16.3	21.3	27.5	100.0(534)
행정소송건수	-	5.1	3.9	8.8	15.5	20.0	15.2	15.0	8.6	5.6	2.2	100.0(534)
정부신뢰도	-	-	.7	1.5	1.7	3.6	6.0	9.2	15.2	20.2	41.9	100.0(534)

전술한 <표 5-52>와 <표 5-53>의 결과는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전체 7개 지표 중 평균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지표는 정부신뢰도(2.1723위)이었고, 다음은 부패인식지수(2.9401위)

이었다. 마찬가지로 0~10점 척도에 의하여 파악된 각 영역의 평균 영향도는 정부신뢰도(8.5356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부패인식지수(7.9157점)이었다.

〈표 5-54〉 정치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단위: 위, 점)

지표	(분석대상수)	평균 우선순위		평균 영향도	
		우선순위	표준편차	영향도	표준편차
투표율	(534)	3.7846	1.90301	7.0674	2.23715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534)	4.3577	1.62802	6.5843	2.12803
세대별 정당득표집중률	(534)	5.2191	1.47230	5.9270	2.01967
국가기관별 신뢰지수	(534)	3.7172	1.62087	7.3184	1.99431
부패인식지수	(534)	2.9401	1.64943	7.9157	2.03313
행정소송건수	(534)	5.8015	1.55147	5.3951	2.12359
정부신뢰도	(534)	2.1723	1.54370	8.5356	1.77898

한국인의 특성별 정치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일곱 지표 중 첫 번째 우선순위는 모든 응답자가 정부 신뢰도라고 제시하였다. 이와 동일하게 평균 영향도 역시 정부 신뢰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5〉 한국인의 특성별 정치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단위: %, 명)

지표	지표						
	투표율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세대별 정당득표집중률	국가기관별 신뢰지수	부패인식 지수	행정소송 건수	정부 신뢰도
전체	3.78	4.36	5.22	3.72	2.94	5.80	2.17
성별							
남성	3.79	4.28	5.20	3.77	3.06	5.62	2.28
여성	3.78	4.41	5.23	3.68	2.86	5.92	2.10
연령							
20대	3.39	4.31	5.21	3.84	3.01	5.86	2.37
30대	4.13	4.55	5.32	3.65	2.75	5.61	1.99
40대	4.43	4.10	5.02	3.57	2.95	5.92	2.02
50대 이상	3.75	4.30	5.18	3.53	3.18	5.95	2.05
교육수준							
대졸 이하	3.74	4.30	5.16	3.77	2.96	5.77	2.29
대학원 이상	3.92	4.51	5.37	3.59	2.88	5.85	1.88
거주지역							
대도시	3.75	4.26	5.24	3.75	2.95	5.75	2.29
중소도시	3.87	4.63	5.15	3.64	2.89	5.89	1.93
농어촌	3.80	4.28	5.28	3.60	3.16	6.16	1.72

〈표 5-56〉 한국인의 특성별 정치일반영역 위기지표(안)의 평균 영향도

(단위: %, 명)

지표	지표						
	투표율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세대별 정당득표집중률	국가기관별 신뢰지수	부패인식 지수	행정소송 건수	정부 신뢰도
전체	7.0674	6.58	5.93	7.32	7.92	5.40	8.54
성별							
남성	7.02	6.53	5.80	7.28	7.83	5.47	8.40
여성	7.10	6.62	6.01	7.34	7.97	5.35	8.62
연령							
20대	7.47	6.79	6.12	7.32	7.96	5.42	8.43
30대	6.85	6.35	5.71	7.27	8.04	5.61	8.67
40대	6.51	6.57	5.98	7.54	7.75	5.14	8.63
50대 이상	6.63	6.45	5.70	7.20	7.55	4.95	8.48
교육수준							
대졸 이하	7.22	6.75	6.07	7.41	8.03	5.50	8.53
대학원 이상	6.64	6.12	5.57	7.05	7.60	5.13	8.53
거주지역							
대도시	7.13	6.68	5.94	7.29	7.89	5.50	8.43
중소도시	6.88	6.25	5.85	7.34	7.93	5.13	8.75
농어촌	7.32	7.08	6.20	7.56	8.08	5.20	8.96

제4절 한국의 사회위기 영역 및 지표 확정

1. 사회위기 영역(안) 및 지표(안)의 분석결과 논의

가. 영향도에 의한 영역 선정

사회위기 영역의 영향도는 0~10점의 11점 척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5점 미만은 중간 이하의 낮은 영향도를, 6점 이상은 높은 영향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영향도가 중간보다 높은 6점 이상의 9개 영역은 우선적으로 타당한 영역에 선정되었다. 그런데 영향도가 중간수준인 정치일반영역(5.4719)은 타당성이 높지는 않으나 민주주의 사회, 의회주의를 표방하는 한국사회에서 정치가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중간수준의 영향도를 보이긴 하였지만 후술(後述)하는 바와 같이 포함된 사회위기지표(안) 중에 영향도가 높은 것이 있으므로 지표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위하여 영역으로 포함토록 하였다.

〈표 5-57〉 사회위기영역의 영향도

영역	(분석대상수)	영향도 합	영향도 평균
고용	(534)	4,411	8.2603
교육	(534)	3,674	6.8801
주거	(534)	3,291	6.1629
인구·가족	(534)	3,150	5.8989
복지	(534)	3,220	6.0300
건강·안전	(534)	3,184	5.9625
사회갈등·문화	(534)	3,305	6.1891
불평등	(534)	3,259	6.1030
경제일반	(534)	3,927	7.3539
정치일반	(534)	2,922	5.4719

나. 영향도에 의한 지표 선정

사회위기 영역과 동일하게 사회위기지표의 영향도는 0~10점의 11점 척도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5점 미만은 중간 이하의 낮은 영향도를, 6점 이상은 높은 영향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위기지표로 타당한 것은 영향도가 중간 보다 높은 6점 이상으로 결정하였다.

사회갈등·문화영역의 불법체류자수, 마약 및 밀수사범수, 도박사범수 등 3개 지표, 불평등 영역의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 영호남 지역격차 계수 등 2개 지표, 정치일반 영역의 세대별 정당득표집중률, 행정소송건수 등 2개 지표이다. 따라서 전체 55개 지표 중 7개 지표가 일차로 탈락되고, 48개 지표가 선정되었다.

1차 선정에서 포함되었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된 지표가 4개 있었다. 첫 번째는 '조기유학자수'로서 이는 최근에 통계로 파악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초·중·고등학교 중퇴자로 처리되어 있어 지표개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 지표는 '우리나라 갈등비용'으로 이상적인 지표이긴 하지만 민간연구소의 연구결과에 의하여 일회성으로 파악되는데 불과한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표 5-58〉 사회위기지표의 영향도

영역	지표	(분석대상수)	영향도 합	영향도 평균	1차 선정	2차 선정
고용	실업률	(534)	4,532	8.4869	○	◎
	청년실업률	(534)	4,465	8.3614	○	◎
	근로빈곤자수	(534)	3,966	7.4270	○	◎
	비정규직 비율	(534)	4,023	7.5337	○	◎
교육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	(534)	4,732	8.8614	○	◎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534)	3,241	6.0693	○	◎
	학원폭력률	(534)	3,913	7.3277	○	◎
	조기유학자수	(534)	3,288	6.1573	○	X
주거	주거비 지출률	(534)	4,322	8.0936	○	◎
	자가 보유율	(534)	3,832	7.1760	○	◎
	전세비 증감률	(534)	4,291	8.0356	○	◎
인구·가족	총부양비	(534)	4,165	7.7996	○	◎
	고령화지수	(534)	4,172	7.8127	○	◎
	수도권 인구 집중도	(534)	3,742	7.0075	○	◎
	출산율	(534)	4,331	8.1105	○	◎
복지	노후대비율	(534)	4,476	8.3820	○	◎
	연금수혜비율	(534)	4,076	7.6330	○	◎
	요보호아동수	(534)	3,759	7.0393	○	◎
	장애인 출현율	(534)	3,238	6.0637	○	◎
건강·안전	평균수명	(534)	3,264	6.1124	○	◎
	자살률	(534)	4,152	7.7753	○	◎
	청소년 자살률	(534)	3,825	7.1629	○	◎
	부정식품 적발률	(534)	3,372	6.3146	○	◎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	(534)	3,680	6.8914	○	◎
	교통사고 사망률	(534)	3,471	6.5000	○	◎
	강력범죄율	(531)	4,156	7.8267	○	◎
사회갈등·문화	노사분규 발생건수	(534)	4,258	7.9738	○	◎
	파업 손실일수	(534)	4,099	7.6760	○	◎
	불법체류자수	(534)	3,093	5.7921	X	-
	우리나라 갈등비용	(534)	3,979	7.4513	○	X
	마약 및 밀수사범수	(534)	3,003	5.6236	X	-
	도박사범수	(528)	2,794	5.2917	X	-
불평등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534)	3,597	6.7360	○	◎
	남녀 임금격차	(534)	3,744	7.0112	○	◎
	소득불평등	(534)	4,697	8.7959	○	◎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534)	3,655	6.8446	○	◎
	평균소득 75~150% 비율	(534)	3,821	7.1554	○	X
	지역간 소득격차	(534)	3,724	6.9738	○	◎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	(534)	3,156	5.9101	X	-
	영호남 지역격차 계수	(528)	2,453	4.6458	X	-

〈표 5-58〉 계속

영역	지표	(분석대상수)	영향도 합	영향도 평균	1차 선정	2차 선정
경제일반	원유가	(534)	3,974	7.4419	○	◎
	소비자물가지수	(534)	4,458	8.3483	○	◎
	신용불량자율	(534)	3,596	6.7341	○	◎
	경제성장률	(534)	3,936	7.3708	○	◎
	환율	(534)	3,726	6.9775	○	◎
	외채비율	(534)	3,433	6.4288	○	◎
	가계 부채비율	(534)	4,207	7.8783	○	◎
	기업 부채비율	(531)	3,311	6.2354	○	◎
정치일반	투표율	(534)	3,774	7.0674	○	◎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534)	3,516	6.5843	○	◎
	세대별 정당득표집중률	(534)	3,165	5.9270	X	-
	국가기관별 신뢰지수	(534)	3,908	7.3184	○	X
	부패인식지수	(534)	4,227	7.9157	○	◎
	행정소송건수	(534)	2,881	5.3951	X	-
	정부신뢰도	(534)	4,558	8.5356	○	◎

세 번째는 '평균소득 75~150% 비율'로 이 지표는 1차 선정에 포함되어 있고, 영향도가 높은 '소득불평등'(8.7959)과 중복될 수 있어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기관별 신뢰지수'는 두 번째 지표와 마찬가지로 일회성으로 파악되는데 그치고 있어 2차 선정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영역(안) 및 지표(안)에 대한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보충의견

가. 영역에 대한 보충의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영역에 대한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한국의 사회위기 영역으로 새롭게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환경, 종교, 정보, 외교안보, 예술문화, 대중매체, 기술과학, 국제이동 등을 제안하였다.

〈표 5-59〉 사회위기영역에 대한 보충의견

사회위기영역	이유 또는 예시
대북관계	• 한반도 긴장도
환경영역	• 대기오염도, 지구온난화, 생태계파괴, 탄소배출량, 자연재해빈도 등
종교영역	• 종교갈등률 등
정보영역	• 인터넷인구비율, 지역별인터넷사용률, 인터넷중독현상, 인터넷 내 욕설비방
외교안보영역	• 북한의 핵보유, 남북갈등, 주변국가와의 경제적·정치적 관계, 병력충원자비율
예술문화영역	• 문화재 보존 및 관리
대중매체영역	• 특정소재의 의도된 이슈화
기술과학영역	• 연구비용증감률, 반도체
국제이동영역	• 다문화가족수

나. 지표에 대한 보충의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각 영역별로 사회위기지표에 대한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용영역의 보충의견으로는 고령자 및 장애인 취업·실업률, 평균근로시간, 고용기준 모호, 이직률, 법정 최저임금, 노사불평등, 고용시 필요 자격증 소지율, 노인일자리수, 직업만족도, 외국인근로자대우, 과로사, 구조조정, 고용불안, 조기퇴직·명예퇴직률, 평균 은퇴연령, 초기 취업연령, 평생직업의 비율, 청소년일자리 등을 사회위기지표로서 제안하였다.

교육영역의 보충의견으로는 대입선발기준의 획일화(수능중심교육), 학군구성비율, 학교서열화, 초중고생 학습시간량, 조기(영어)교육 열풍, 전인교육 부재, 교사폭력, 결식자녀비율, 교사의 자질, 교사권위 하락, 학자금 대출 증가, 공교육 만족도 및 신뢰도 저하, 특목고비율, 지역별 교육수준격차, 장기적 교육정책 부재 등을 사회위기지표로서 제안하였다.

주거영역의 보충의견으로는 1인 다세대보유, 아파트 분양가 상승, 노후주택비율, 이사 횟수, 주거환경 위험도, 노숙자 비율, 일부지역 수요 집중현상, 과도한 내집마련 대출, 부동산투기, 임대주택 보급률, 집값 상승률 등을 사회위기지표로서 제안하였다.

인구·가족영역의 보충의견으로는 한부모가족률, 인공임신중절률, 다문화

가족 비율, 독거노인 비율, 미혼모 차별 인식정도, 자녀양육문제, 가정폭력 발생률, 남아선호사상, 핵가족 증가, 혼인율 등을 사회위기지표로서 제안하였다.

복지영역의 보충의견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비율, 극빈곤층 노인, 노인요양비율, 아동성폭력발생률, 출산장려비 지급률, 복지전문인력의 확충 및 적정임금 보장수준, 신빈곤층 비율, 농어촌 빈곤가구율, 중증노인생활시설 부족, 출산육아휴직비율, 안정적인 보육지원정책, 건강보험가입비율 등을 사회위기지표로서 제안하였다.

건강·안전영역의 보충의견으로는 흡연율, 지역별 범죄율, 정신질환 발생 증가율, 재범률, 아동안전사고발생률, 국가보험부실·민간보험난립, 건강검진율,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률, 중고등생 체력저하, 성폭력 발생률, 노인자살률, 지역간 의료격차, 의료비 증가 등을 사회위기지표로서 제안하였다.

사회갈등·문화영역의 보충의견으로는 공권력남용, 보수·진보 갈등, 기업부패율, 대북지원 및 정책방향갈등, 지역갈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 다문화가정 소외, 외국인차별 등을 사회위기지표로서 제안하였다.

불평등 영역의 보충의견으로는 학력·지연차별, 직장 내 남녀불평등, 장애인 경제활동참여율, 학력 간 임금격차, 정규직·비정규직 소득격차, 인권관련지수, 세대 간 소득격차 등을 사회위기지표로서 제안하였다.

경제일반영역의 보충의견으로는 현 정부의 경제성향, 평당분양가, 노년에 대한 불안, 경제인프라 구축, 주식투자비율, 정부재정적자, 금리, 국민총소득, 시장개방압력, 기업투자비율, 외국자본의 투자율 등을 사회위기지표로서 제안하였다.

정치일반영역의 보충의견으로는 정치인 자질·청렴지수, 정치무관심, 국회파행·여야당 항쟁, 정책투명성, 정경유착정도, 삼권분립 와해 등을 사회위기지표로서 제안하였다.

〈표 5-60〉 사회위기지표에 대한 주요 보충의견

영역	사회위기 지표		
고용	• 고령자 및 장애인 취업·실업률 • 평균근로시간 • 고용기준 모호 • 이직률 • 법정 최저임금 • 노사불평등	• 고용시 필요 자격증 소지율 • 노인일자리수 • 직업만족도 • 외국인근로자대우 • 과로사 • 구조조정	• 고용불안 • 조기퇴직·명예퇴직률 • 평균 은퇴연령 • 초기 취업연령 • 평생직업의 비율 • 청소년일자리
교육	• 대입선발기준의 획일화 • 학군구성비율 • 학교서열화 • 초중고생 학습시간량 • 조기(영어)교육 열풍	• 전인교육 부재 • 교사폭력 • 결식자녀비율 • 교사의 자질 • 교사권위 하락	• 학자금 대출 증가 • 공교육만족도 및 신뢰도 • 특목고비율 • 지역별 교육수준격차 • 장기적 교육정책 부재
주거	• 1인 다세대보유 • 아파트 분양가 상승 • 노후주택비율 • 이사 횟수	• 주거환경위험도 • 노숙자비율 • 일부지역 수요 집중현상 • 과도한 내집마련 대출	• 부동산투기 • 임대주택 보급률 • 집값 상승률
인구·가족	• 한부모가족률 • 인공임신중절률 • 다문화가족 비율 • 독거노인비율	• 미혼모 차별 인식정도 • 자녀양육문제 • 가정폭력발생률	• 남아선호사상 • 핵가족증가 • 혼인율
복지	• 국민기초수급자 비율 • 극빈곤층 노인 • 노인요양비율 • 아동성폭력발생률 • 출산장려비 지급률	• 복지전문인력의 확충 및 적정임금 보장수준 • 신빈곤층 비율 • 농어촌 빈곤가구율	• 중증노인생활시설 부족 • 출산육아휴직 비율 • 안정적인 보육지원정책 • 건강보험가입비율
건강·안전	• 흡연율 • 지역별 범죄율 • 정신질환 발생증가율 • 재범률 • 아동안전사고발생률	• 국가보험부실·민간보험난립 • 건강검진율 •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률 • 중고등생 체력저하	• 성폭력 발생률 • 노인자살률 • 지역간 의료격차 • 의료비 증가
사회갈등·문화	• 공권력남용 • 보수·진보 갈등 • 기업부패율	• 대북지원 및 정책방향갈등 • 지역갈등 •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	• 다문화가정 소외 • 외국인차별
불평등	• 학력·지연차별 • 직장 내 남녀불평등 • 장애인 경제활동참여율	• 학력 간 임금격차 • 정규직·비정규직 소득격차	• 인권관련지수 • 세대간 소득격차
경제일반	• 현 정부의 경제성향 • 평당분양가 • 노년에 대한 불안 • 경제인프라구축	• 주식투자비율 • 정부재정적자 • 금리 • 국민총소득	• 시장개방압력 • 기업투자비율 • 외국자본의 투자율
정치일반	• 정치인 자질·청렴지수 • 정치무관심	• 국회파행·여야당 항쟁 • 정책투명성	• 정경유착정도 • 삼권분립 와해

2. 한국의「사회위기 지표」확정

델파이 조사결과에 의한 영향도 분석, 지표통계의 수집 및 특성분석 등에 근거하고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보충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의 사회위기지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당초 10개 영역 55개 지표에서 10개 영역 44개 지표이다. 그리고 통계수집의 용이성, 지속성, 통계의 신뢰성, 주요 보충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지표의 명칭을 다소 변경하였다.

〈표 5-61〉 한국의 사회위기지표 최종안

사회위기 영역	사회위기 지표		지표수
① 고용	• 실업률 • 근로빈곤자수	• 청년실업률 • 비정규직 비율	4
② 교육	•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 • 학생범죄인원	•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3
③ 주거	• 주거비 지출률 • 전세비 증감률	• 자가 보유율	3
④ 인구·가족	• 총부양비 • 수도권 인구 집중도	• 고령화지수 • 출산율	4
⑤ 복지	• 노후대비율 • 요보호아동수	• 연금수혜비율 • 장애인 출현지수	4
⑥ 건강·안전	• 평균수명 • 청소년·노인 자살률 •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 • 강력범죄율	• 자살률 • 부정식품 적발률 • 교통사고 사망률	7
⑦ 사회갈등·문화	• 노사분규 발생건수	• 파업 손실일수	2
⑧ 불평등	•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 소득불평등 • 지역간 소득격차	• 남녀 임금격차 •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5
⑨ 경제일반	• 원유가 • 신용불량지수 • 환율 • 개인부채액	• 소비자물가지수 • 경제성장률 • 외채액 • 기업부채액	8
⑩ 정치일반	• 투표율 • 부패인식지수	•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 정부신뢰도	4
계			44

이러한 지표들을 제시하면, '청소년 자살률'은 '청소년·노인자살률'로 변경하여 복합지표로 하였다. 즉, 청소년 자살률과 노인자살률을 모두 고려하는 지표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은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으로, '학원폭력률'은 '학생범죄인원'으로, '장애인 출현율'은 '장애인 출현자수'로, '신용불량자율'은 '신용불량자수'로, '외채비율'은 '외채액'으로, '가계 부채비율'은 '개인부채액'으로, '기업 부채비율'은 '기업 부채액'으로 변경하였다.

06

한국의 사회위기지표별 위기수준

제6장 한국의 사회위기지표별 위기수준

제1절 고용영역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1. 지표명: 실업률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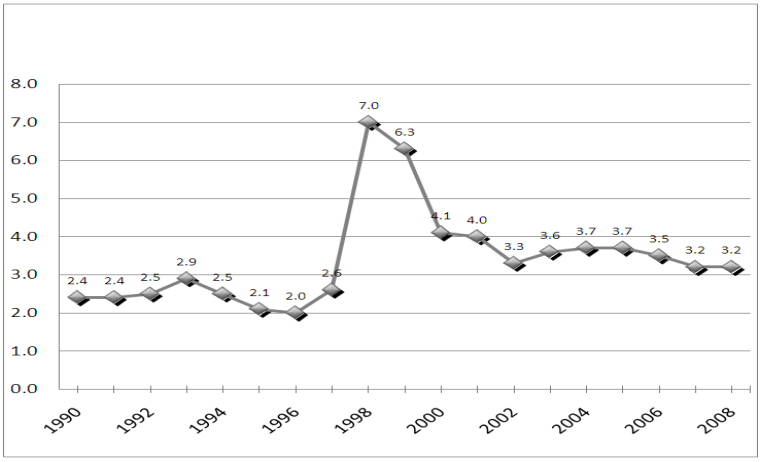
실업률은 취업을 희망하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 중 실업자의 비율을 말한다. 취업자는 1)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2) 동일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해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3)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를 말하며, 실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을 가리킨다. 실업률은 표본조사구 약 32,000가구 내에 상주하는 만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월 15일 고용관련 32개항목을 묻는 경제활동인구총조사로 산출한다.

$$\text{실업률} = \frac{\text{실업자}}{\text{경제활동인구}} \times 100$$

나. 통계

실업률은 1990년 2.4%에서 1997년 2.6%의 비율을 보였으나, 1998년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7.0%로 나타났다. 이는 1998년 IMF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조기퇴직자가 증가하였고 신규채용은 감소됨으로써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하지만 2002년에는 3.3%로 급격하게 하락하였으며, 2002년 이후부터 2008년까지 3%선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6-1] 실업률 변화 추이: 1990~2008년



자료: 심상용,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실증 연구, 2006, 재인용

다. 위기수준 측정

1996~2008년 실업률의 위기수준을 측정한 결과, 1997~1998년 4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3~2004년, 2008년에 실업률의 위기수준이 다시 상승하였다. 특히 2008년 실업률의 위기수준은 3점으로 상당수 국민들이 높은 실업률로 인해 위기를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또한 경제위기에 직면했던 연도에 실업률의 위기점수가 높아졌음을 보여준다. 즉, 경제위기 당시 기업의 구조조정 및 신규

채용 축소는 국민의 실업률 위기체감도를 증가시켰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위기 시기에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망 강화 및 일자리 확대 정책 등 각종 사회정책을 마련하여 경제위기로 인한 실업률 위기체감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표 6-1〉 실업률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2.4	-	-	-	-
1991년	2.4	0.0000	0.0000	-	-
1992년	2.5	0.0417	0.0417	-	-
1993년	2.9	0.1600	0.1600	-	-
1994년	2.5	-0.1379	0.1379	-	-
1995년	2.1	-0.1600	0.1600	-	-
1996년	2.0	-0.0476	0.0476	.0999	3
1997년	2.6	0.3000	0.3000	.1094	4
1998년	7.0	1.6923	1.6923	.1611	4
1999년	6.3	-0.1000	0.1000	.4676	3
2000년	4.1	-0.3492	0.3492	.4600	3
2001년	4.0	-0.0244	0.0244	.4978	3
2002년	3.3	-0.1750	0.1750	.4932	3
2003년	3.6	0.0909	0.0909	.4682	3
2004년	3.7	0.0278	0.0278	.1479	3
2005년	3.7	0.0000	0.0000	.1335	3
2006년	3.5	-0.0541	0.0541	.0636	3
2007년	3.2	-0.0857	0.0857	.0695	2
2008년	3.2	0.0000	0.0000	.0517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실업률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160	-0.0160	-0.0122	-0.0122	-0.0083	-0.0083	-0.0045	-0.0045
1997년	-0.0189	-0.0189	-0.0131	-0.0131	-0.0074	-0.0074	-0.0016	-0.0016
1998년	-0.0171	-0.0171	-0.0126	-0.0126	-0.0080	-0.0080	-0.0034	-0.0034
1999년	-0.1091	-0.1091	-0.0432	-0.0432	0.0227	0.0227	0.0885	0.0885
2000년	-0.1114	-0.1114	-0.0440	-0.0440	0.0234	0.0234	0.0908	0.0908
2001년	-0.1000	-0.1000	-0.0402	-0.0402	0.0196	0.0196	0.0795	0.0795
2002년	-0.1014	-0.1014	-0.0406	-0.0406	0.0201	0.0201	0.0809	0.0809
2003년	-0.0729	-0.0729	-0.0311	-0.0311	0.0106	0.0106	0.0524	0.0524
2004년	-0.0437	-0.0437	-0.0214	-0.0214	0.0009	0.0009	0.0232	0.0232
2005년	-0.0361	-0.0361	-0.0189	-0.0189	-0.0017	-0.0017	0.0155	0.0155
2006년	-0.0151	-0.0151	-0.0119	-0.0119	-0.0087	-0.0087	-0.0054	-0.0054
2007년	-0.0169	-0.0169	-0.0125	-0.0125	-0.0081	-0.0081	-0.0037	-0.0037
2008년	-0.0115	-0.0115	-0.0107	-0.0107	-0.0099	-0.0099	-0.0090	-0.0090

〈표 6-2〉 실업률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2.4	-		-	-
1991년	2.4	0.0000		-	-
1992년	2.5	0.0417		-	-
1993년	2.9	0.1600		-	-
1994년	2.5	-0.1379		-	-
1995년	2.1	-0.1600		-	-
1996년	2.0	-0.0476		.0019	0
1997년	2.6	0.3000		.0029	4
1998년	7.0	1.6923		.0023	4
1999년	6.3	-0.1000	-.0103	.0329	1
2000년	4.1	-0.3492		.0337	0
2001년	4.0	-0.0244		.0299	2
2002년	3.3	-0.1750		.0304	0
2003년	3.6	0.0909		.0209	4
2004년	3.7	0.0278		.0112	4
2005년	3.7	0.0000		.0086	3
2006년	3.5	-0.0541		.0016	0
2007년	3.2	-0.0857		.0022	0
2008년	3.2	0.0000		.0004	4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3〉 실업률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3	0	1.5
1997년	4	4	4
1998년	4	4	4
1999년	3	1	2
2000년	3	0	1.5
2001년	3	2	2.5
2002년	3	0	1.5
2003년	3	4	3.5
2004년	3	4	3.5
2005년	3	3	3
2006년	3	0	1.5
2007년	2	0	1
2008년	3	4	3.5

2. 지표명: 청년실업률

가. 개요

청년실업률은 15~29세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로, 조사대상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으며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15~29세 인구 비율을 말한다. 청년실업률은 실업률과 마찬가지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얻어지며, 취업자의 개념적 정의도 실업률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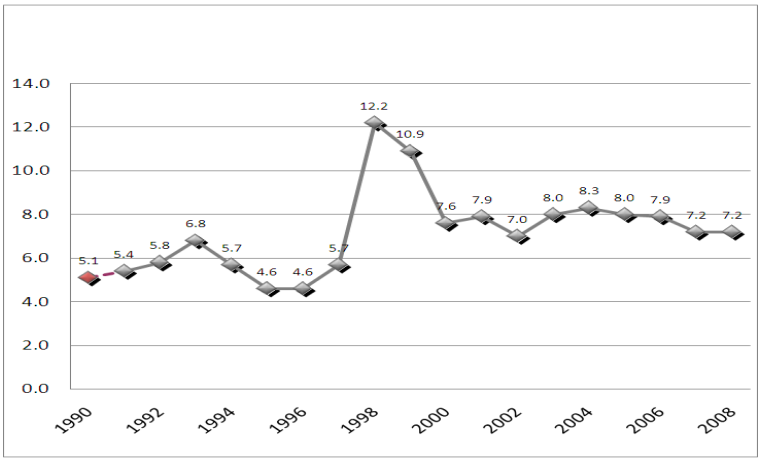
$$\text{청년실업률} = \frac{\text{15~29세 실업자}}{\text{15~29세 경제활동인구}} \times 100$$

나. 통계

청년실업률은 1990년 5.1%에서 1997년에는 5.7%의 비율을 나타냈다. 그러나 1998년에 청년실업률은 1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2000년

에는 7.6%로 다시 급격하게 낮아져 실업률과 비슷한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다. 2000년 이후 청년실업률은 7~8%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6-2] 청년실업률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청년실업률의 위기수준은 전년도 대비 변화율을 통해 측정하였다. 먼저,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 내에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추세값을 산출하였다. 1997~1998년 청년실업률의 변화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기준범위에서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 추세값은 4점으로 부여되었다. 그러나 1999년 이후 변화율은 큰 증감 없이 안정된 상태를 보이며 기준범위 내에 있어 2007년을 제외하고 모든 연도에서 추세값으로 3점이 부여되었다.

변화율의 증감정도에 따라 값이 부여되는 증감폭 값은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한 증감폭 값 산출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연도별 기준범위는 다음의 표와

같다. 1997~1998년과 2003~2004년의 변화율은 '평균값'에서 기준범위의 3배를 더한 값보다도 높기 때문에 4점을 부여하였으며, 2005~2008년의 변화율은 '평균값'에서 기준범위의 3배를 뺀 값보다도 낮아 0점을 부여하였다. 이같이 최근 상당히 큰 감소폭으로 청년실업률이 감소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값인 위기점수는 2005~2008년에 1.5~2.0점으로, 청년실업률이 국민의 위기체감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6-4〉 청년실업률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5.1	-	-	-	-
1991년	5.4	0.0489	0.0489	-	-
1992년	5.8	0.0741	0.0741	-	-
1993년	6.8	0.1724	0.1724	-	-
1994년	5.7	-0.1618	0.1618	-	-
1995년	4.6	-0.1930	0.1930	-	-
1996년	4.6	0.0000	0.0000	.1300	3
1997년	5.7	0.2391	0.2391	.1202	4
1998년	12.2	1.1404	1.1404	.1533	4
1999년	10.9	-0.1066	0.1066	.3468	3
2000년	7.6	-0.3028	0.3028	.3358	3
2001년	7.9	0.0395	0.0395	.3578	3
2002년	7.0	-0.1139	0.1139	.3657	3
2003년	8.0	0.1429	0.1429	.3406	3
2004년	8.3	0.0375	0.0375	.1411	3
2005년	8.0	-0.0361	0.0361	.1273	3
2006년	7.9	-0.0125	0.0125	.0740	3
2007년	7.2	-0.0886	0.0886	.0686	2
2008년	7.2	0.0000	0.0000	.0635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청년실업률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10	-.0010	.0014	.0014	.0038	.0038	.0062	.0062
1997년	-.0039	-.0039	.0004	.0004	.0048	.0048	.0091	.0091
1998년	-.0008	-.0008	.0015	.0015	.0038	.0038	.0060	.0060
1999년	-.0589	-.0589	-.0179	-.0179	.0231	.0231	.0641	.0641
2000년	-.0622	-.0622	-.0190	-.0190	.0242	.0242	.0674	.0674
2001년	-.0556	-.0556	-.0168	-.0168	.0220	.0220	.0608	.0608
2002년	-.0580	-.0580	-.0176	-.0176	.0228	.0228	.0632	.0632
2003년	-.0368	-.0368	-.0105	-.0105	.0157	.0157	.0420	.0420
2004년	-.0178	-.0178	-.0042	-.0042	.0094	.0094	.0231	.0231
2005년	-.0092	-.0092	-.0013	-.0013	.0066	.0066	.0144	.0144
2006년	-.0016	-.0016	.0012	.0012	.0040	.0040	.0068	.0068
2007년	.0015	.0015	.0023	.0023	.0030	.0030	.0037	.0037
2008년	.0000	.0000	.0018	.0018	.0035	.0035	.0052	.0052

〈표 6-5〉 청년실업률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5.1	-		-	-
1991년	5.4	.0489		-	-
1992년	5.8	.0741		-	-
1993년	6.8	.1724		-	-
1994년	5.7	-.1618		-	-
1995년	4.6	-.1930		-	-
1996년	4.6	.0000		.0012	1
1997년	5.7	.2391		.0022	4
1998년	12.2	1.1404		.0011	4
1999년	10.9	-.1066	.0026	.0205	0
2000년	7.6	-.3028		.0216	0
2001년	7.9	.0395		.0194	3
2002년	7.0	-.1139		.0202	0
2003년	8.0	.1429		.0131	4
2004년	8.3	.0375		.0068	4
2005년	8.0	-.0361		.0039	0
2006년	7.9	-.0125		.0014	0
2007년	7.2	-.0886		.0004	0
2008년	7.2	.0000		.0009	0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6〉 청년실업률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3	1	2.0
1997년	4	4	4.0
1998년	4	4	4.0
1999년	3	0	1.5
2000년	3	0	1.5
2001년	3	3	3.0
2002년	3	0	1.5
2003년	3	4	3.5
2004년	3	4	3.5
2005년	3	0	1.5
2006년	3	0	1.5
2007년	2	0	1.0
2008년	3	0	1.5

3. 지표명: 근로빈곤자(working poor) 수

가. 개요

근로빈곤자 수는 가구주가 만 18세부터 65세 미만인 가구 중에서 현재 가구주가 피용자로 취업상태에 있는 전체 근로가구 중 가구소득이 빈곤선에 미달하는 근로빈곤가구의 비율로 대체하여 지표값을 산출하였다. 근로빈곤가구의 산점기준인 빈곤선은 OECD가구 균등화 지수로 조정된 경상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근로빈곤자 수를 근로빈곤가구 비율로 대체하여 지표값을 산출한 이유는 자료의 한계로 인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 지표값은 심상용(2006) 연구에서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 가계조사 각 연도 원자료를 통해 추정한 을 재인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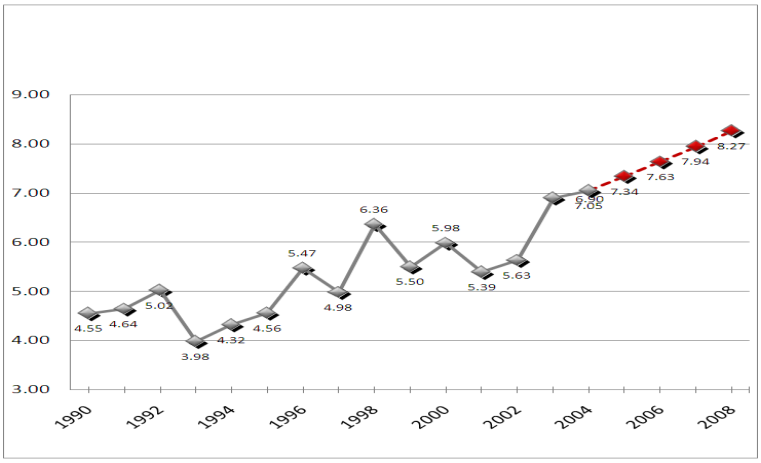
나. 통계

전체 근로가구 중 근로빈곤가구의 비율은 1990년 4.55%, 1998년 6.36% 그리고 2004년에는 7.05%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만, 2005~2008년은 원자료 분석이 어려워서, 1990~2004년의 기울기를 활용하여 근로빈곤가구 비율을 추정하였다.

다음의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1990년 이후 근로빈곤가구 비율이 꾸준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1998년 IMF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의 구조조정과 2003년 신용카드 유동성대란 등 지속적인 경제위기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그림 6-3] 근로빈곤자수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통계청, 『가계조사』,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근로빈곤자수의 위기수준은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추세와 증감정도를 통해 산출되었다. 먼저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추세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2점을 부여하도록 설정하였다. 그 결과, 1996년 이후 근로빈곤자수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1998년과 2003년에만 증가추세가 보이고 이들 2개년을 제외하고는 변화율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정도를 의미하는 증감폭 값은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개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한 증감폭 값 산출기준에 준하여 점수가 부여된다. 1996년, 1998년, 2000년, 2002~2003년에 근로빈곤자수의 변화율이 이전 연도보다 급격히 증가하여 증감폭 값으로 4점이 부여되었다. 이에 비해 1997년, 1999년, 2001년, 2004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은 급격히 감소하여 증감폭 값으로 0점이 부여되었다. 2005~2008년의 근로빈곤자수의 변화율은 큰 증감 없이 기준범위 내에 있어 2점이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근로빈곤자수의 위기점수는 매해 상이하였지만 1997년, 1999년, 2001년, 2004년을 제외한 모든 연도에서 근로빈곤자 수의 위기점수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1998년 IMF경제위기, 2003년 신용카드 유동성대란 당시 위기점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 2008년 실제 위기수준은 더 높을 수 있으나, 2005~2008년 지표값을 1990~2004년 지표값의 기울기 평균으로 추정하여 다소 낮은 위기점수가 부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지표의 위기점수는 경제위기의 도래가 근로빈곤층을 급속히 증가시킴을 보여주어, 경제위기 당시 근로빈곤층을 감소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매우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6-7〉 근로빈곤층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4.55	-	-	-	-
1991년	4.64	0.0198	0.0198	-	-
1992년	5.02	0.0819	0.0819	-	-
1993년	3.98	-0.2072	0.2072	-	-
1994년	4.32	0.0854	0.0854	-	-
1995년	4.56	0.0556	0.0556	-	-
1996년	5.47	0.1996	0.1996	.0900	4
1997년	4.98	-0.0896	0.0896	.1259	3
1998년	6.36	0.2771	0.2771	.1275	4
1999년	5.50	-0.1352	0.1352	.1414	3
2000년	5.98	0.0873	0.0873	.1514	3
2001년	5.39	-0.0987	0.0987	.1577	3
2002년	5.63	0.0445	0.0445	.1376	3
2003년	6.90	0.2256	0.2256	.1286	4
2004년	7.05	0.0217	0.0217	.1183	3
2005년	7.34	0.0406	0.0406	0.0956	3
2006년	7.63	0.0406	0.0406	0.0862	3
2007년	7.94	0.0406	0.0406	0.0746	3
2008년	8.27	0.0406	0.0406	0.0738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근로빈곤층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391	.0391	.0405	.0405	.0420	.0420	.0434	.0434
1997년	.0283	.0283	.0370	.0370	.0456	.0456	.0542	.0542
1998년	.0386	.0386	.0404	.0404	.0421	.0421	.0439	.0439
1999년	.0096	.0096	.0307	.0307	.0518	.0518	.0729	.0729
2000년	.0228	.0228	.0351	.0351	.0474	.0474	.0597	.0597
2001년	.0209	.0209	.0345	.0345	.0480	.0480	.0616	.0616
2002년	.0388	.0388	.0404	.0404	.0421	.0421	.0437	.0437
2003년	.0308	.0308	.0378	.0378	.0448	.0448	.0518	.0518
2004년	.0338	.0338	.0388	.0388	.0437	.0437	.0487	.0487
2005년	.0244	.0244	.0356	.0356	.0469	.0469	.0581	.0581
2006년	.0272	.0272	.0366	.0366	.0459	.0459	.0553	.0553
2007년	.0189	.0189	.0338	.0338	.0487	.0487	.0636	.0636
2008년	.0191	.0191	.0339	.0339	.0486	.0486	.0634	.0634

〈표 6-8〉 근로빈곤층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4.55	-		-	-
1991년	4.64	0.0198		-	-
1992년	5.02	0.0819		-	-
1993년	3.98	-0.2072		-	-
1994년	4.32	0.0854		-	-
1995년	4.56	0.0556		-	-
1996년	5.47	0.1996		0.0007	4
1997년	4.98	-0.0896		0.0043	0
1998년	6.36	0.2771		0.0009	4
1999년	5.50	-0.1352	0.0413	0.0106	0
2000년	5.98	0.0873		0.0061	4
2001년	5.39	-0.0987		0.0068	0
2002년	5.63	0.0445		0.0008	4
2003년	6.90	0.2256		0.0035	4
2004년	7.05	0.0217		0.0025	0
2005년	7.34	0.0406		0.0056	2
2006년	7.63	0.0406		0.0047	2
2007년	7.94	0.0406		0.0075	2
2008년	8.27	0.0406		0.0074	2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9〉 근로빈곤층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4	4	4.0
1997년	3	0	1.5
1998년	4	4	4.0
1999년	3	0	1.5
2000년	3	4	3.5
2001년	3	0	1.5
2002년	3	4	3.5
2003년	4	4	4.0
2004년	3	0	1.5
2005년	3	2	2.5
2006년	3	2	2.5
2007년	3	2	2.5
2008년	3	2	2.5

4. 지표명: 비정규직 비율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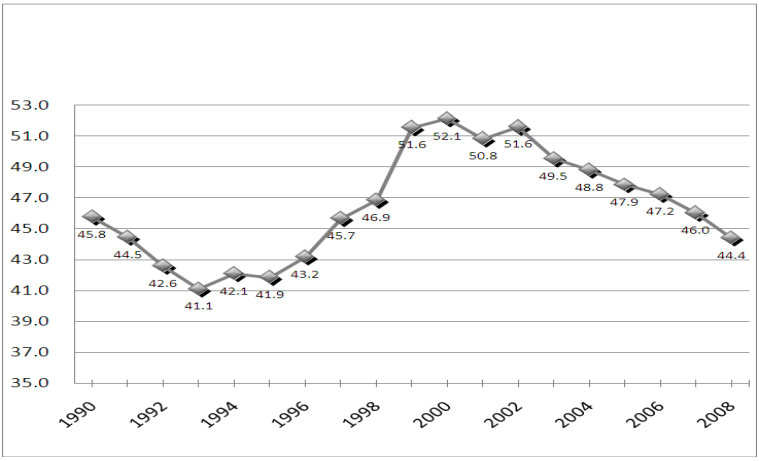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로 정의한다. 한시적 근로자는 고용의 지속성을 기준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시간제근로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파트타임 근로자를 의미하고, 비전형 근로자는 근로제공 방식을 기준으로 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특수고용 종사자·가정내 근로자·일일근로자를 가리킨다.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임시적 근로자(temporary worker), 시간제 근로자(part-time worker)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파악하고, 임시직 근로자에는 유기계약근로자(worker with fixed-term contact), 파견근로자(temporary agency worker), 계절근로자(seasonal worker), 호출근로자(on-call worker)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비율을 임금근로자 대비 비정규직의 비중으로 정의하였으며, 본 자료는 2001년부터 추가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통해 산출하였다.

$$\text{비정규직 비율} = \frac{(\text{임시근로자} + \text{일용근로자})}{\text{임금근로자}}$$

나. 통계

비정규직 비율은 1990년 45.8%에서 1993년 41.1%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1994년에 42.1%에서 2000년에는 52.1%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 비정규직 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44.4%를 나타냈다.

[그림 6-4] 비정규직 비율의 변화추이: 1990~2008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비정규직 비율의 위기수준은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추세와 증감정도를 통해 산출하였다. 추세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위기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기준범위를 벗어나면 4점, 위기를 감소시키고 사회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2점을 부여한다. 1996~1997년과 2007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은 기준값 범위보다 높아 추세값으로 4점을 부여하였고, 1998~2000년, 2004~2006년, 2008년에는 변화율이 기준범위 내에 존재하여 3점을 부여하였다. 2001~2003년은 변화율이 더 낮은 음의 값을 갖게 되어 이들의 추세값은 2점으로 나타났다.

증감폭 값은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한 증감폭 값 산출근거에 준하여 설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

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2001~2005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은 '평균변화율−3기준범위'보다도 낮아 이들의 증감폭 값은 0점이었다. 이에 비해 1996~1997년과 2002년은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평균변화율+3기준범위'보다 높아 증감폭 값으로 4점을 부여하였다.

비정규직 비율의 위기점수는 1996~2002년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2003년 이후에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에 2000년대에 들어서 국민의 비정규직 비율로 인한 위기체감도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0〉 비정규직 비율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0.46	-	-	-	-
1991년	0.44	-0.0283	0.0283	-	-
1992년	0.43	-0.0423	0.0423	-	-
1993년	0.41	-0.0345	0.0345	-	-
1994년	0.42	0.0240	0.0240	-	-
1995년	0.42	-0.0057	0.0057	-	-
1996년	0.43	0.0317	0.0317	0.0270	4
1997년	0.46	0.0575	0.0575	0.0276	4
1998년	0.47	0.0260	0.0260	0.0307	3
1999년	0.52	0.1003	0.1003	0.0290	3
2000년	0.52	0.0111	0.0111	0.0442	3
2001년	0.51	-0.0248	0.0248	0.0453	2
2002년	0.52	0.0152	0.0152	0.0439	2
2003년	0.50	-0.0402	0.0402	0.0355	2
2004년	0.49	-0.0146	0.0146	0.0383	3
2005년	0.48	-0.0194	0.0194	0.0212	3
2006년	0.47	-0.0129	0.0129	0.0229	3
2007년	0.46	-0.0258	0.0258	0.0205	4
2008년	0.44	-0.0347	0.0347	0.0226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비정규직 비율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087	-0.0087	0.0086	0.0086	0.0259	0.0259	0.0432	0.0432
1997년	-0.0138	-0.0138	0.0069	0.0069	0.0277	0.0277	0.0484	0.0484
1998년	-0.1731	-0.1731	-0.0462	-0.0462	0.0807	0.0807	0.2077	0.2077
1999년	-0.0092	-0.0092	0.0085	0.0085	0.0261	0.0261	0.0438	0.0438
2000년	-0.0013	-0.0013	0.0111	0.0111	0.0235	0.0235	0.0359	0.0359
2001년	0.0064	0.0064	0.0137	0.0137	0.0209	0.0209	0.0282	0.0282
2002년	0.0140	0.0140	0.0162	0.0162	0.0184	0.0184	0.0206	0.0206
2003년	0.0004	0.0004	0.0117	0.0117	0.0229	0.0229	0.0342	0.0342
2004년	-0.0037	-0.0037	0.0103	0.0103	0.0243	0.0243	0.0383	0.0383
2005년	-0.0033	-0.0033	0.0104	0.0104	0.0242	0.0242	0.0379	0.0379
2006년	-0.0120	-0.0120	0.0075	0.0075	0.0271	0.0271	0.0466	0.0466
2007년	-0.0041	-0.0041	0.0102	0.0102	0.0244	0.0244	0.0387	0.0387
2008년	0.0132	0.0132	0.0159	0.0159	0.0186	0.0186	0.0214	0.0214

〈표 6-11〉 비정규직 비율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0.46	-		-	-
1991년	0.44	-0.0283		-	-
1992년	0.43	-0.0423		-	-
1993년	0.41	-0.0345		-	-
1994년	0.42	0.0240		-	-
1995년	0.42	-0.0057		-	-
1996년	0.43	0.0317		0.0017	4
1997년	0.46	0.0575		0.0005	4
1998년	0.47	0.0260		0.0015	2
1999년	0.52	0.1003	-0.0047	0.0027	0
2000년	0.52	0.0111		0.0042	4
2001년	0.51	-0.0248		0.0045	0
2002년	0.52	0.0152		0.0034	0
2003년	0.50	-0.0402		0.0026	0
2004년	0.49	-0.0146		0.0012	0
2005년	0.48	-0.0194		0.0011	0
2006년	0.47	-0.0129		0.0017	2
2007년	0.46	-0.0258		0.0014	4
2008년	0.44	-0.0347		0.0023	3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12〉 비정규직 비율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4	4	4.0
1997년	4	4	4.0
1998년	3	2	2.5
1999년	3	0	1.5
2000년	3	4	3.5
2001년	2	0	1.0
2002년	2	0	1.0
2003년	2	0	1.0
2004년	3	0	1.5
2005년	3	0	1.5
2006년	3	2	2.5
2007년	4	4	4.0
2008년	3	3	3.0

제2절 교육영역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1. 지표명: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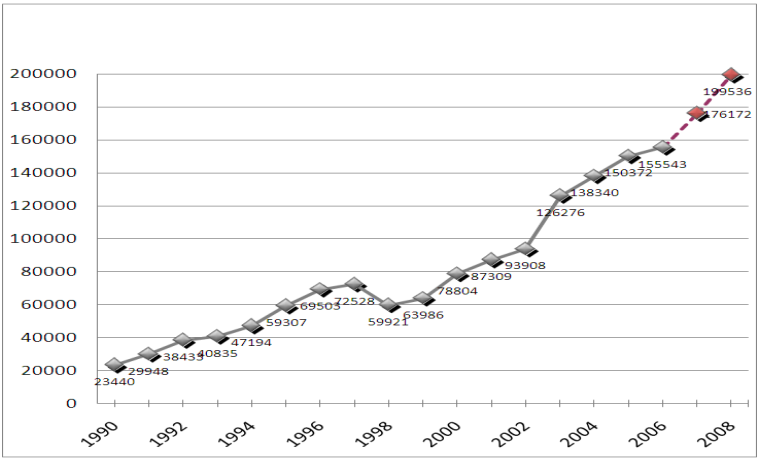
가. 개요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은 통계청 도시가계조사에서 유치원생부터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충교육비' 지출액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보충교육비는 학원 및 개인교습(입시 및 보습학원, 피아노학원,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전산학원, 예체능계학원, 개인교습비, 기타 학원비), 기타 보충교육비(독서실비, 기타교육비)를 포괄한다. 도시가계조사를 통한 사교육비 지출액 추정은 과외 사교육비를 포괄하지 않으며 표본가구가 학생의 분포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나, 현재 교육비 및 사교육비와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는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토대로 위기점수를 산출하였다.

나. 통계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은 1990년 23,440원에서 1997년 72,528원으로 증가하였으나, IMF경제위기가 발발한 1998년에는 59,921원으로 감소를 하였다. 그러나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 63,986원에서 2008년에는 199,536원으로 지출액수가 더 높아졌다. 이는 자녀의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가 사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사교육 증가를 통해 자녀의 교육성취를 보장하려는 사회풍조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특히 IMF 이후인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경제위기와 상관없이 지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사교육은 가정 내 경제적 형편의 변화에 민감한 지출분야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림 6-5]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의 위기수준은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추세값과 증감폭 값을 평균으로 한 수치다. 추세값은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최근 5년

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2점이다.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의 추세값을 산출한 결과, 2000년, 2003년, 2007년은 4점, 1998년은 2점, 그 나머지 연도는 3점으로 나타났다.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이 전년도 대비 증감한 정도에 따라 수치가 부여되는 증감폭 값은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설정한 증감폭 값 산출기준에 준하여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1996년, 2000년, 2003년을 제외하고 사교육비 지출액의 전년도 대비 증감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의 위기점수는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으로, 추세값이 높은 수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증가폭이 크지 않아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의 위기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2000년, 2003년, 2007년 위기점수는 증감폭 값의 증가와 함께 높은 위기수준을 의미하는 3.0~4.0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3년은 신용카드 유동성 대란 및 낮은 실업률로 경제가 어려웠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은 더 증가하여 본 지표의 위기점수가 4.0점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눈길을 끌만 하다. 즉, 2000년 이후 부터 자녀의 사교육을 위한 지출은 가구소비의 중요한 부분으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도 최대한 소비를 줄이지 않는 영역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7~2008년의 위기점수도 높은 수준을 보여, 최근 사교육비 지출액으로 인한 사회위기 체감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6-13〉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의 추세값 산출

(단위: 원,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23440.0	-	-	-	-
1991년	29948.0	.2776	.2776	-	-
1992년	38433.0	.2833	.2833	-	-
1993년	40835.0	.0625	.0625	-	-
1994년	47194.0	.1557	.1557	-	-
1995년	59307.0	.2567	.2567	-	-
1996년	69503.0	.1719	.1719	.2072	3
1997년	72528.0	.0435	.0435	.1860	3
1998년	59921.0	-.1738	.1738	.1381	2
1999년	63986.0	.0678	.0678	.1603	3
2000년	78804.0	.2316	.2316	.1428	4
2001년	87309.0	.1079	.1079	.1377	3
2002년	93908.0	.0756	.0756	.1249	3
2003년	126276.0	.3447	.3447	.1314	4
2004년	138340.0	.0955	.0955	.1655	3
2005년	150372.0	.0870	.0870	.1711	3
2006년	155543.0	.0344	.0344	.1421	3
2007년	176171.7	.1326	.1326	.1274	4
2008년	199536.3	.1326	.1326	.1388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764	.0764	.1178	.1178	.1592	.1592	.2007	.2007
1997년	.0827	.0827	.1199	.1199	.1571	.1571	.1943	.1943
1998년	.0971	.0971	.1247	.1247	.1523	.1523	.1799	.1799
1999년	.1113	.1113	.1294	.1294	.1476	.1476	.1658	.1658
2000년	.1166	.1166	.1312	.1312	.1458	.1458	.1605	.1605
2001년	.1181	.1181	.1317	.1317	.1453	.1453	.1590	.1590
2002년	.1219	.1219	.1330	.1330	.1441	.1441	.1551	.1551
2003년	.1200	.1200	.1323	.1323	.1447	.1447	.1571	.1571
2004년	.0889	.0889	.1220	.1220	.1551	.1551	.1882	.1882
2005년	.0872	.0872	.1214	.1214	.1556	.1556	.1898	.1898
2006년	.0959	.0959	.1243	.1243	.1527	.1527	.1812	.1812
2007년	.1003	.1003	.1258	.1258	.1513	.1513	.1768	.1768
2008년	.0969	.0969	.1246	.1246	.1524	.1524	.1802	.1802

〈표 6-14〉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의 증감폭 값

(단위: 원,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23440.0	-		-	-
1991년	29948.0	.2776		-	-
1992년	38433.0	.2833		-	-
1993년	40835.0	.0625		-	-
1994년	47194.0	.1557		-	-
1995년	59307.0	.2567		-	-
1996년	69503.0	.1719		.0207	3
1997년	72528.0	.0435		.0186	0
1998년	59921.0	-.1738		.0138	0
1999년	63986.0	.0678	.1385	.0091	0
2000년	78804.0	.2316		.0073	4
2001년	87309.0	.1079		.0068	0
2002년	93908.0	.0756		.0055	0
2003년	126276.0	.3447		.0062	4
2004년	138340.0	.0955		.0166	1
2005년	150372.0	.0870		.0171	0
2006년	155543.0	.0344		.0142	0
2007년	176171.7	.1326		.0127	2
2008년	199536.3	.1326		.0139	2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15〉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3	3	3.0
1997년	3	0	1.5
1998년	2	0	1.0
1999년	3	0	1.5
2000년	4	4	4.0
2001년	3	0	1.5
2002년	3	0	1.5
2003년	4	4	4.0
2004년	3	1	2.0
2005년	3	0	1.5
2006년	3	0	1.5
2007년	4	2	3.0
2008년	3	2	2.5

2. 지표명: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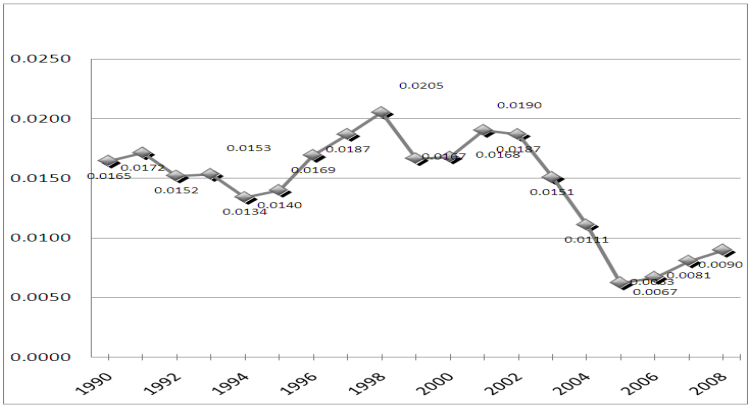
가. 개요

중고등학교 중퇴비율은 각 연도 학교중퇴자수를 전체 중고등학교 학생수로 나눈 값이다. 이는 각년도 교육통계연보를 통해 산출하였는데, 1990년부터 2003년까지는 학교중퇴자에 유학·이민, 사망자가 포함되었으나, 2004년부터는 이들을 제외한 수치이다.

나. 통계

중고등학교 중퇴비율은 1990년에는 1.6%에서 1998년 2.1%로 상승하였다. 특히 1998년 가장 높은 수준의 중퇴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1998년 IMF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형편 악화를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중고등학교 중퇴비율은 하락추세를 보였다. 유학·이민 및 사망으로 인한 중퇴자를 제외하여 지표값을 산출한 2004~2008년을 살펴보면, 2005년 0.6%로 하락한 후 2006~2008년에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림 6-6]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중고등학교 중퇴비율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추세값) 및 증감정도(증감폭 값)를 파악하였다. 먼저, 추세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여 산출하였다. 1996~2001년 변화율 증가로 인해 1996~1998년과 2000~2002년의 추세값은 3~4점이 부여되어, 중고등학교 중퇴비율은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03~2005년에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음의 값을 가지면서 추세값도 2점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2006년부터는 변화율이 다시 양의 방향으로 증가하면서 추세값으로 3점 또는 4점이 부여되어, 최근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증가로 인해 국민의 위기 체감도가 증가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증감폭 값은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설정한 증감폭 값 산출기준에 준하여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증감폭 값을 산출한 결과, 중고등학교 중퇴비율의 변화율이 매우 낮았던 1999년, 2002~2005년에 0점이, 그 밖의 연도에는 변화율이 매우 높아 3점 또는 4점이 부여되었다.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인 위기점수는 1996~2001년 높은 수치를 보였지만, 2002~2005년에 매우 안정화되어 2점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6년부터 위기점수가 다시 높아져, 중고등학교 중퇴비율이 2006~2008년 국민의 사회위기 체감도를 높였음을 알 수 있다.

〈표 6-16〉 중고등학교 중퇴비율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0165	-	-	-	-
1991년	.0172	.0422	.0422	-	-
1992년	.0152	-.1130	.1130	-	-
1993년	.0153	.0083	.0083	-	-
1994년	.0134	-.1251	.1251	-	-
1995년	.0140	.0432	.0432	-	-
1996년	.0169	.2098	.2098	.0663	4
1997년	.0187	.1036	.1036	.0999	4
1998년	.0205	.0988	.0988	.0980	4
1999년	.0167	-.1888	.1888	.1161	2
2000년	.0168	.0081	.0081	.1288	3
2001년	.0190	.1332	.1332	.1218	4
2002년	.0187	-.0180	.0180	.1065	3
2003년	.0151	-.1932	.1932	.0894	2
2004년	.0111	-.2630	.2630	.1082	2
2005년	.0063	-.4376	.4376	.1231	2
2006년	.0067	.0730	.0730	.2090	3
2007년	.0081	.2058	.2058	.1969	4
2008년	.0090	.1114	.1114	.2345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중고등학교 중퇴비율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133	-.0133	-.0075	-.0075	-.0017	-.0017	.0041	.0041
1997년	-.0060	-.0060	-.0051	-.0051	-.0041	-.0041	-.0032	-.0032
1998년	-.0190	-.0190	-.0094	-.0094	.0002	.0002	.0098	.0098
1999년	-.0244	-.0244	-.0112	-.0112	.0020	.0020	.0152	.0152
2000년	-.0206	-.0206	-.0099	-.0099	.0007	.0007	.0114	.0114
2001년	-.0185	-.0185	-.0092	-.0092	.0000	.0000	.0093	.0093
2002년	-.0139	-.0139	-.0077	-.0077	-.0015	-.0015	.0047	.0047
2003년	-.0066	-.0066	-.0053	-.0053	-.0039	-.0039	-.0026	-.0026
2004년	-.0201	-.0201	-.0098	-.0098	.0006	.0006	.0109	.0109
2005년	-.0246	-.0246	-.0112	-.0112	.0021	.0021	.0154	.0154
2006년	-.0513	-.0513	-.0202	-.0202	.0110	.0110	.0421	.0421
2007년	-.0549	-.0549	-.0214	-.0214	.0122	.0122	.0457	.0457
2008년	-.0415	-.0415	-.0169	-.0169	.0077	.0077	.0323	.0323

〈표 6-17〉 중고등학교 중퇴비율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0165	-		-	-
1991년	.0172	.0422		-	-
1992년	.0152	-.1130		-	-
1993년	.0153	.0083		-	-
1994년	.0134	-.1251		-	-
1995년	.0140	.0432		-	-
1996년	.0169	.2098		.0029	4
1997년	.0187	.1036		.0005	4
1998년	.0205	.0988		.0048	4
1999년	.0167	-.1888	-.0046	.0066	0
2000년	.0168	.0081		.0053	3
2001년	.0190	.1332		.0046	4
2002년	.0187	-.0180		.0031	0
2003년	.0151	-.1932		.0007	0
2004년	.0111	-.2630		.0052	0
2005년	.0063	-.4376		.0067	0
2006년	.0067	.0730		.0156	4
2007년	.0081	.2058		.0168	4
2008년	.0090	.1114		.0123	4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18〉 중고등학교 중퇴비율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4	4	4.0
1997년	4	4	4.0
1998년	4	4	4.0
1999년	2	0	1.0
2000년	3	3	3.0
2001년	4	4	4.0
2002년	3	0	1.5
2003년	2	0	1.0
2004년	2	0	1.0
2005년	2	0	1.0
2006년	3	4	3.5
2007년	4	4	4.0
2008년	3	4	3.5

3. 지표명: 학생범죄인원[29)]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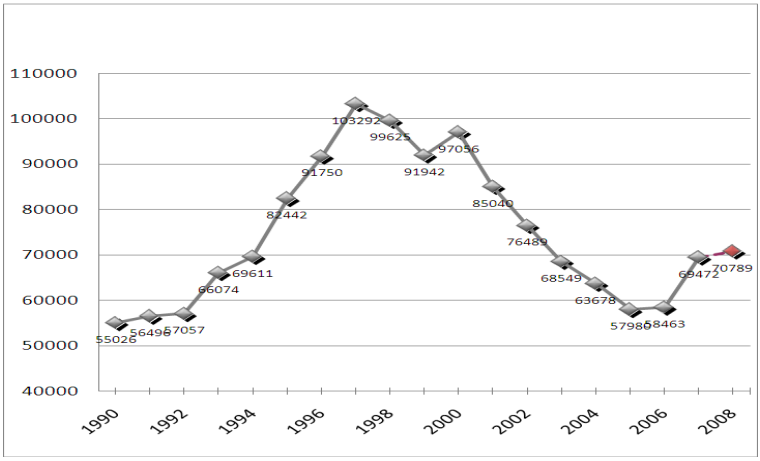
학생범죄인원은 전체 범죄인원 중 학생만을 산출한 것이다. 일부 연구에서는 소년범죄 중 학생범죄가 차지하는 비율로 파악하였지만, 이는 비학생 소년범죄가 증가하면 학생범죄인원 비율이 낮아져 사회위기를 줄이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사회위기 수준을 파악하는 본 연구는 학생범죄인원 수의 증감을 통해 위기점수 변화를 살펴볼 것이다.

나. 통계

학생범죄인원은 1990년 55,026명에서 1997년 103,292명으로 큰 폭으로 상승 하였다. 이후, 2005년 57,980명으로 하락하였으며, 2008년에는 70,789명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교 중퇴비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9) 델파이조사에서는 중고등학교 학원폭력률로 조사하였으나, 학교폭력 발생접수 건수 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이 전개된 2000년도 이후 통계치만 존재한다. 이에 비해 학생범죄율은 1990년 이후 자료가 모두 존재하여 추이를 파악하는 본 분석에는 학생범죄율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학교폭력 발생접수 건수의 통계치가 더 축적이 된다면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건수를 주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6-7] 학생범죄인원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대검찰청, 『검찰연감』,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학생범죄인원의 위기수준은 전년도 대비 변화율을 통해 측정한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으로 산출되었다. 먼저 추세값을 산출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 내에 있는지 살펴보았다. 만약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범위에서 양의 방향으로 벗어났으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벗어났으면 2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1996년과 2007년의 추세값이 4점으로 타 연도에 비해 학생범죄인원으로 인한 위기 추세값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증감폭 값은 학생범죄인원이 타 연도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증감하였는지를 파악하여 산출한 값이다. 증감폭 값은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설정한 증감폭 값 산출기준에 준하여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 ±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

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1996~2000년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학생범죄 인원의 증감폭 값이 2001~2005년 0점으로 낮아졌지만, 2006~2008년에는 학생범죄 인원이 증가하면서 2~4점의 증감폭 값을 갖게 되었다.

학생범죄 인원의 위기점수는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으로 산출되었는데, <표6-21>를 살펴보면, 1996~2000년까지 학생범죄의 위기점수는 높았지만 2001~2005년 다시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2006~2008년에 증감폭 값이 증가하면서 위기수준이 다시 증가하여 2.5점 이상의 위기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표 6-19〉 학생범죄 인원의 추세값 산출

(단위: 명,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55,026	-	-	-	-
1991년	56,496	.0267	.0267	-	-
1992년	57,057	.0099	.0099	-	-
1993년	66,074	.1580	.1580	-	-
1994년	69,611	.0535	.0535	-	-
1995년	82,442	.1843	.1843	-	-
1996년	91,750	.1129	.1129	.0865	4
1997년	103,292	.1258	.1258	.1037	3
1998년	99,625	-.0355	.0355	.1269	3
1999년	91,942	-.0771	.0771	.1024	3
2000년	97,056	.0556	.0556	.1071	3
2001년	85,040	-.1238	.1238	.0814	2
2002년	76,489	-.1006	.1006	.0836	2
2003년	68,549	-.1038	.1038	.0785	2
2004년	63,678	-.0711	.0711	.0922	3
2005년	57,980	-.0895	.0895	.0910	3
2006년	58,463	.0083	.0083	.0977	3
2007년	69,472	.1883	.1883	.0746	4
2008년	70,789	.0190	.0190	.0922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학생범죄 인원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087	-0.0087	0.0086	0.0086	0.0259	0.0259	0.0432	.
1997년	-0.0138	-0.0138	0.0069	0.0069	0.0277	0.0277	0.0484	0.0484
1998년	-0.1731	-0.1731	-0.0462	-0.0462	0.0807	0.0807	0.2077	0.2077
1999년	-0.0092	-0.0092	0.0085	0.0085	0.0261	0.0261	0.0438	0.0438
2000년	-0.0013	-0.0013	0.0111	0.0111	0.0235	0.0235	0.0359	0.0359
2001년	0.0064	0.0064	0.0137	0.0137	0.0209	0.0209	0.0282	0.0282
2002년	0.0140	0.0140	0.0162	0.0162	0.0184	0.0184	0.0206	0.0206
2003년	0.0004	0.0004	0.0117	0.0117	0.0229	0.0229	0.0342	0.0342
2004년	-0.0037	-0.0037	0.0103	0.0103	0.0243	0.0243	0.0383	0.0383
2005년	-0.0033	-0.0033	0.0104	0.0104	0.0242	0.0242	0.0379	0.0379
2006년	-0.0120	-0.0120	0.0075	0.0075	0.0271	0.0271	0.0466	0.0466
2007년	-0.0041	-0.0041	0.0102	0.0102	0.0244	0.0244	0.0387	0.0387
2008년	0.0132	0.0132	0.0159	0.0159	0.0186	0.0186	0.0214	0.0214

〈표 6-20〉 학생범죄 인원의 증감폭 값

(단위: 명,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55026	-		-	-
1991년	56496	.0267		-	-
1992년	57057	.0099		-	-
1993년	66074	.1580		-	-
1994년	69611	.0535		-	-
1995년	82442	.1843		-	-
1996년	91750	.1129		.0087	4
1997년	103292	.1258		.0104	4
1998년	99625	-.0355		.0635	2
1999년	91942	-.0771	.0173	.0088	0
2000년	97056	.0556		.0062	4
2001년	85040	-.1238		.0036	0
2002년	76489	-.1006		.0011	0
2003년	68549	-.1038		.0056	0
2004년	63678	-.0711		.0070	0
2005년	57980	-.0895		.0069	0
2006년	58463	.0083		.0098	2
2007년	69472	.1883		.0071	4
2008년	70789	.0190		.0014	3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21〉 학생범죄 인원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4	4	4.0
1997년	3	4	3.5
1998년	3	2	2.5
1999년	3	0	1.5
2000년	3	4	3.5
2001년	2	0	1.0
2002년	2	0	1.0
2003년	2	0	1.0
2004년	3	0	1.5
2005년	3	0	1.5
2006년	3	2	2.5
2007년	4	4	4.0
2008년	3	3	3.0

제3절 주거영역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1. 지표명: 주거비 지출률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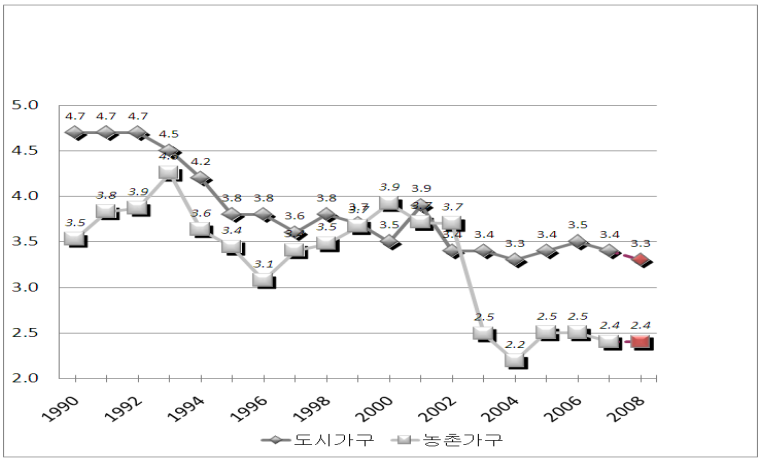
주거비 지출률은 연간 소비 지출액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 농가경제통계를 통해 각각 산출하였다. 다만 2008년 통계치를 산출하지 못하여 1990년~2007년 지출률의 기울기를 통해 2008년도 지출률을 추정하였다.

나. 통계

주거비 지출률은 도시가구의 경우 1990년 4.7%, 2000년 3.5% 그리고 2007년에는 3.4%로 나타났다. 농촌가구의 주거비 지출률은 1990년 3.5%

에서 2004년 2.2%로 하락하였으며, 2007년 2.4%로 나타났다. 또한 1990~2008년 증감비율을 감안하여 2008년의 도시가구의 주거비 지출률은 3.3%, 농촌가구 주거비 지출률은 2.4%로 추정하였다.

[그림 6-8] 주거비 지출률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통계청, 『도시가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주거비 지출률은 도시가구와 농촌가구의 위기점수의 평균값으로 설정하였다. 먼저 도시가구 주거비 지출률의 위기점수를 산출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주거비 지출률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도시가구 주거비 지출률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은 기준 범위 내에 있는 연도가 상당수였으며 1998년과 2001년에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 4점이, 1997년, 2000년, 2002년에는 음(−)의 방향으로 벗어

나 2점이 부여되었다.

증감폭 값은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한 증감폭 값 산출근거에 준하여 설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도시가구 주거비 지출률의 증감폭 값은 매우 불안정하여 매년 값이 달라졌는데 1996년, 1998년, 2001년, 2003년, 2005~2006년, 2008년 증감폭 값은 4점으로 측정되었지만, 1997년, 2000년, 2002년, 2004년, 2007년은 0점으로 측정되었다. 다만, 최근 6개년 중 4개년도 증감폭 값이 4점인 것을 보아 주거비 지출률이 급격히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값인 도시가구 주거비 지출률의 위기점수는 1996년, 1998년, 2001년, 2003년, 2005~2006년, 2008년에 3.5~4.0점으로 높은 수준의 위기상태를 보였다.

〈표 6-22〉 도시가구 주거비 지출률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4.7	-	-	-	-
1991년	4.7	.0000	.0000	-	-
1992년	4.7	.0000	.0000	-	-
1993년	4.5	-.0426	.0426	-	-
1994년	4.2	-.0667	.0667	-	-
1995년	3.8	-.0952	.0952	-	-
1996년	3.8	.0000	.0000	.0409	3
1997년	3.6	-.0526	.0526	.0409	2
1998년	3.8	.0556	.0556	.0514	4
1999년	3.7	-.0263	.0263	.0540	3
2000년	3.5	-.0541	.0541	.0459	2
2001년	3.9	.1143	.1143	.0377	4
2002년	3.4	-.1282	.1282	.0606	2
2003년	3.4	.0000	.0000	.0757	3
2004년	3.3	-.0294	.0294	.0646	3
2005년	3.4	.0303	.0303	.0652	3
2006년	3.5	.0294	.0294	.0604	3
2007년	3.4	-.0286	.0286	.0435	3
2008년	3.3	-.0173	.0173	.0235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도시가구 주거비 지출률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309	-.0309	-.0227	-.0227	-.0145	-.0145	-.0063	-.0063
1997년	-.0309	-.0309	-.0227	-.0227	-.0145	-.0145	-.0063	-.0063
1998년	-.0340	-.0340	-.0237	-.0237	-.0135	-.0135	-.0032	-.0032
1999년	-.0281	-.0281	-.0218	-.0218	-.0154	-.0154	-.0091	-.0091
2000년	-.0257	-.0257	-.0210	-.0210	-.0162	-.0162	-.0115	-.0115
2001년	-.0232	-.0232	-.0201	-.0201	-.0170	-.0170	-.0139	-.0139
2002년	-.0208	-.0208	-.0193	-.0193	-.0179	-.0179	-.0164	-.0164
2003년	-.0209	-.0209	-.0194	-.0194	-.0178	-.0178	-.0163	-.0163
2004년	-.0242	-.0242	-.0205	-.0205	-.0167	-.0167	-.0129	-.0129
2005년	-.0244	-.0244	-.0205	-.0205	-.0166	-.0166	-.0127	-.0127
2006년	-.0194	-.0194	-.0189	-.0189	-.0183	-.0183	-.0178	-.0178
2007년	-.0245	-.0245	-.0206	-.0206	-.0166	-.0166	-.0127	-.0127
2008년	-.0187	-.0187	-.0186	-.0186	-.0186	-.0186	-.0185	-.0185

〈표 6-23〉 도시가구 주거비 지출률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4.7	-		-	-
1991년	4.7	.0000		-	-
1992년	4.7	.0000		-	-
1993년	4.5	-.0426		-	-
1994년	4.2	-.0667		-	-
1995년	3.8	-.0952		-	-
1996년	3.8	.0000		.0041	4
1997년	3.6	-.0526		.0041	0
1998년	3.8	.0556		.0051	4
1999년	3.7	-.0263	-.0186	.0032	1
2000년	3.5	-.0541		.0024	0
2001년	3.9	.1143		.0015	4
2002년	3.4	-.1282		.0007	0
2003년	3.4	.0000		.0008	4
2004년	3.3	-.0294		.0019	0
2005년	3.4	.0303		.0019	4
2006년	3.5	.0294		.0003	4
2007년	3.4	-.0286		.0020	0
2008년	3.3	-.0173		.0000	4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24〉 도시가구 주거비 지출률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3	4	3.5
1997년	2	0	1.0
1998년	4	4	4.0
1999년	3	1	2.0
2000년	2	0	1.0
2001년	4	4	4.0
2002년	2	0	1.0
2003년	3	4	3.5
2004년	3	0	1.5
2005년	3	4	3.5
2006년	3	4	3.5
2007년	3	0	1.5
2008년	3	4	3.5

다음으로 농촌가구 주거비 지출률을 살펴보면, 1997년, 2000년, 2005년에 높은 추세값을 가졌으며, 2006~2008년 추세값도 3점으로 2003~2004년보다는 다소 상승된 수치이다. 그러나 농촌가구 주거비 지출률의 증감정도를 의미하는 증감폭 값을 통해 2006~2008년 주거비 지출률 증가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1997~2000년, 2005년 증감폭 값이 4점이었지만, 1996년, 20001년, 2003~2004년, 2007년에 0점, 2008년에는 1점으로 2000년대에 더 안정된 증감폭 값을 가졌다.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값인 농촌가구 주거비 지출률의 위기점수를 살펴보면 1997~2000년, 2005년에 3.5~4.0점으로, 그 당시 농촌가구는 주거비 지출로 인한 위기체감도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1996년, 2001~2004년, 2006~2008년은 비교적 안정적인 위기수준을 가졌는데, 이는 2005년을 제외하고 2000년대에 농촌가구는 주거비 지출로 인해 위기를 체감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 6-25〉 농촌가구 주거비 지출률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3.5	-	-	-	-
1991년	3.8	.0855	.0855	-	-
1992년	3.9	.0102	.0102	-	-
1993년	4.3	.1003	.1003	-	-
1994년	3.6	-.1460	.1460	-	-
1995년	3.4	-.0526	.0526	-	-
1996년	3.1	-.1064	.1064	.0789	2
1997년	3.4	.1065	.1065	.0831	4
1998년	3.5	.0222	.0222	.1024	3
1999년	3.7	.0543	.0543	.0867	3
2000년	3.9	.0688	.0688	.0684	4
2001년	3.7	-.0529	.0529	.0716	3
2002년	3.7	-.0030	.0030	.0609	3
2003년	2.5	-.3277	.3277	.0402	2
2004년	2.2	-.1193	.1193	.1013	2
2005년	2.5	.1406	.1406	.1143	4
2006년	2.5	.0000	.0000	.1287	3
2007년	2.4	-.0400	.0400	.1181	3
2008년	2.4	-.0153	.0153	.1255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농촌가구 주거비 지출률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056	-0.0056	-0.0055	-0.0055	-0.0054	-0.0054	-0.0053	-0.0053
1997년	-0.0172	-0.0172	-0.0094	-0.0094	-0.0016	-0.0016	0.0062	0.0062
1998년	-0.0114	-0.0114	-0.0074	-0.0074	-0.0035	-0.0035	0.0004	0.0004
1999년	-0.0161	-0.0161	-0.0090	-0.0090	-0.0020	-0.0020	0.0051	0.0051
2000년	-0.0069	-0.0069	-0.0060	-0.0060	-0.0050	-0.0050	-0.0040	-0.0040
2001년	-0.0142	-0.0142	-0.0084	-0.0084	-0.0026	-0.0026	0.0032	0.0032
2002년	-0.0174	-0.0174	-0.0095	-0.0095	-0.0015	-0.0015	0.0064	0.0064
2003년	-0.0108	-0.0108	-0.0073	-0.0073	-0.0037	-0.0037	-0.0001	-0.0001
2004년	-0.0211	-0.0211	-0.0107	-0.0107	-0.0003	-0.0003	0.0102	0.0102
2005년	-0.0315	-0.0315	-0.0142	-0.0142	0.0032	0.0032	0.0206	0.0206
2006년	-0.0272	-0.0272	-0.0127	-0.0127	0.0018	0.0018	0.0163	0.0163
2007년	-0.0240	-0.0240	-0.0117	-0.0117	0.0007	0.0007	0.0131	0.0131
2008년	-0.0263	-0.0263	-0.0124	-0.0124	0.0014	0.0014	0.0153	0.0153

〈표 6-26〉 농촌가구 주거비 지출률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3.5	-		-	-
1991년	3.8	.0855		-	-
1992년	3.9	.0102		-	-
1993년	4.3	.1003		-	-
1994년	3.6	-.1460		-	-
1995년	3.4	-.0526		-	-
1996년	3.1	-.1064		.0001	0
1997년	3.4	.1065		.0039	4
1998년	3.5	.0222		.0020	4
1999년	3.7	.0543	-.0055	.0035	4
2000년	3.9	.0688		.0005	4
2001년	3.7	-.0529		.0029	0
2002년	3.7	-.0030		.0040	2
2003년	2.5	-.3277		.0018	0
2004년	2.2	-.1193		.0052	0
2005년	2.5	.1406		.0087	4
2006년	2.5	.0000		.0072	2
2007년	2.4	-.0400		.0062	0
2008년	2.4	-.0153		.0069	1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27〉 농촌가구 주거비 지출률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2	0	1.0
1997년	4	4	4.0
1998년	3	4	3.5
1999년	3	4	3.5
2000년	4	4	4.0
2001년	3	0	1.5
2002년	3	2	2.5
2003년	2	0	1.0
2004년	2	0	1.0
2005년	4	4	4.0
2006년	3	2	2.5
2007년	3	0	1.5
2008년	3	1	2.0

도시지역의 위기점수와 농촌지역의 위기점수를 비교하면, 도시가구 주거비 지출률에 비해 농촌가구 주거비 지출률이 비교적 안정된 증감폭 값을 보였다. 특히 도시가구의 증감폭 값은 주거비 지출률의 급격한 감소를 의미하는 0~1점이 산출된 연도가 없었는데, 농촌가구의 경우 증감폭 값이 0~1점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도시가구의 주거비 지출률처럼 변화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증감폭 값이 3~4점인 경우는 드물었다. 또한 농촌가구 주거비 지출률의 위기점수는 1997~2000년, 2005년에 매우 높긴 했으나, 그 외의 연도에는 안정된 점수가 산출되어 주거비 지출로 인한 농촌의 위기체감도가 비교적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도시가구 위기점수는 1996~2008년 중 7개년동안 3.5~4.0점을 보여 도시에 거주하는 국민은 주거비 지출률로 인한 사회위기를 상당히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가구 위기점수는 도시가구 위기점수와 농촌가구 위기점수의 평균값으로, 1998년, 2005~2006년 3.0~4.0점으로 높은 수준의 위기상태를 보였다. 특히 최근 4개년 중 2007년을 제외하고는 높은 위기값을 보여, 최근 가구 소득 내 주거비 지출액 증가가 국민의 삶을 위협할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표 6-28〉 전체가구 주거비 지출률의 위기점수

연도	도시가구 위기점수	농촌가구 위기점수	전체가구 위기점수
1996년	3.5	1.0	2.25
1997년	1.0	4.0	2.50
1998년	4.0	3.5	3.75
1999년	2.0	3.5	2.75
2000년	1.0	4.0	2.50
2001년	4.0	1.5	2.75
2002년	1.0	2.5	1.75
2003년	3.5	1.0	2.25
2004년	1.5	1.0	1.25
2005년	3.5	4.0	3.75
2006년	3.5	2.5	3.00
2007년	1.5	1.5	1.50
2008년	3.5	2.0	2.75

2. 지표명: 자가 보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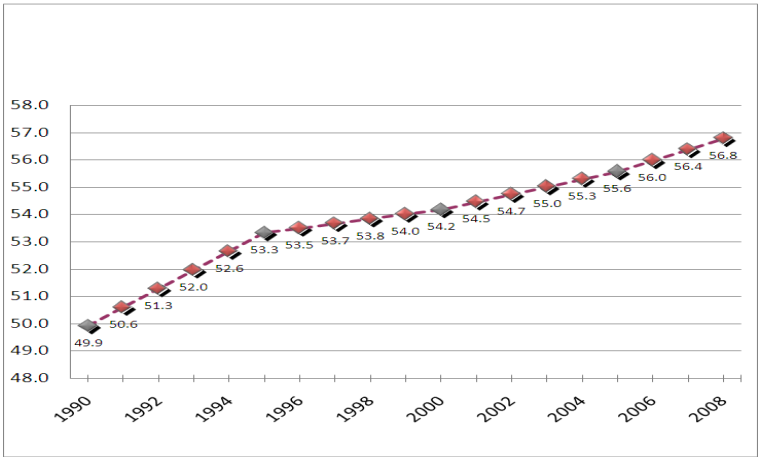
가. 개요

자가 보유율은 전체 가구수 중 자가 보유가구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산출하였다. 다만, 인구주택총조사가 5년에 한 번 이루어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해의 수치는 기울기를 통해 추정하였다. 즉, 1991~1994년, 1996~1999년, 2001~2004년, 2006~2008년은 각각 1990년과 1995년, 1995년과 2000년, 2000년과 2005년, 1990~2005년의 기울기를 통해 추세값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나. 통계

우리나라 자가 보유율은 1990년 49.9%에서 1995년 53.3% 그리고 2006년 56.0%로 나타났다. 즉, 1990년에 자가 보유율이 가장 낮았으나, 이후 계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에는 56.8%로 나타났다.

[그림 6-9] 자가 보유율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자가 보유율의 위기점수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내에 있으면 3점,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2점,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4점을 부여하였다. 자가 보유율 위기점수 산출방법이 타 지표와 달리 추세값을 다룬 것은 자가 보유율 경우 5년마다 한 번 조사되는 수치이므로 최근 5년의 평균값을 기준범위로 하는 증감폭 값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추세값 산출방식만을 활용하여 자가 보유율 위기점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모든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위기점수는 모두 3점이었다. 이는 1996~2008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에 급격한 증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표 6-29〉 자가 보유율 위기점수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위기점수[2]
1990년	49.9120	-	-	-	-
1991년	50.5946	.0137	.0137	-	-
1992년	51.2772	.0135	.0135	-	-
1993년	51.9598	.0133	.0133	-	-
1994년	52.6424	.0131	.0131	-	-
1995년	53.3250	.0130	.0130	-	-
1996년	53.4946	.0032	.0032	.0072	3
1997년	53.6641	.0032	.0032	.0072	3
1998년	53.8337	.0032	.0032	.0072	3
1999년	54.0032	.0031	.0031	.0072	3
2000년	54.1728	.0031	.0031	.0072	3
2001년	54.4517	.0051	.0051	.0072	3
2002년	54.7307	.0051	.0051	.0072	3
2003년	55.0097	.0051	.0051	.0072	3
2004년	55.2887	.0051	.0051	.0072	3
2005년	55.5676	.0050	.0050	.0072	3
2006년	55.9672	.0072	.0072	.0072	3
2007년	56.3697	.0072	.0072	.0072	3
2008년	56.7751	.0072	.0072	.0072	3

주: 1) 기준값은 1990~2008년 전년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임.
2) 자가 보유율의 위기점수는 기타 지표의 추세값 산출방법과 동일함. 기준값의 ±범위 내에 있으면 2,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0,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4임.

3. 지표명: 전세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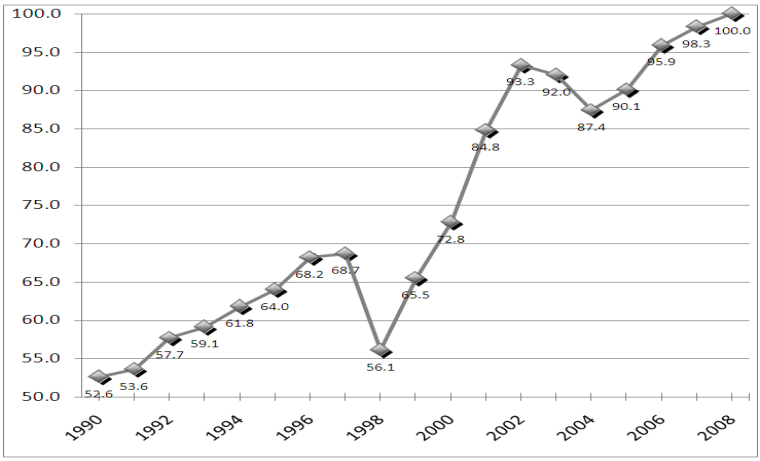
가. 개요

본 연구에서 전세비 증감률은 주택전세가격지수로 나타낸다. 주택전세가격지수는 2008년 12월의 주택전세가격을 기준으로 이전년도 가격의 증감정도를 비교하는 것으로, 2008년 12월의 값을 100으로 설정한다. 만약 이전년도의 지수가 100이상이라면 기준년도보다 주택전세가격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100이하라면 주택전세가격이 2008년보다 더 낮았음을 의미한다.

나. 통계

주택전세비 증감 비율은 2008년 100을 기준으로 1990년 52.6%를 시작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1998년 56.1%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1998년을 시작으로 주택전세비 증감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림 6-10] 전세비 증감률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전세비 증감률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전세비 증감률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전세비 증감률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

세비 증감률이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전세비 증감률이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추세값은 1996년, 1999~2001년에 4점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2002년 이후에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 기준값의 절대값 범위 내에 존재하여 추세값으로 3점이 부여되었다.

추세값이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증감폭 값도 추세값과 마찬가지로 1996년, 1999~2002년, 2006년에 전세비 증감률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평년보다 높아 높은 수치인 4점이 부여되었으나, 1997~1998년, 2003~2005년, 2007~2008년에는 전세비 증감률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낮은 값을 가지면서 증감폭 값 또한 감소하였다.

전세비 증감률의 위기점수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으로 산출되는데, 1996년, 1999~2002년, 2006년에는 3.5점 이상의 높은 위기점수를 보였지만 그 외의 연도에서는 낮은 위기상태를 유지하였다. 특히 2003~2008년 중 2006년에 위기점수가 다소 상승하긴 했으나 2003~2005년, 2007~2008년에 안정세를 유지하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표 6-30〉 전세비 증감률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52.6	-	-	-	-
1991년	53.6	.0190	.0190	-	-
1992년	57.7	.0765	.0765	-	-
1993년	59.1	.0243	.0243	-	-
1994년	61.8	.0457	.0457	-	-
1995년	64.0	.0356	.0356	-	-
1996년	68.2	.0656	.0656	.0402	4
1997년	68.7	.0073	.0073	.0495	3
1998년	56.1	-.1834	.1834	.0357	2
1999년	65.5	.1676	.1676	.0675	4
2000년	72.8	.1115	.1115	.0919	4
2001년	84.8	.1648	.1648	.1071	4
2002년	93.3	.1002	.1002	.1269	3
2003년	92.0	-.0139	.0139	.1455	3
2004년	87.4	-.0500	.0500	.1116	3
2005년	90.1	.0309	.0309	.0881	3
2006년	95.9	.0644	.0644	.0720	3
2007년	98.3	.0250	.0250	.0519	3
2008년	100.0	.0173	.0173	.0368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전세증감률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332	0.0332	0.0412	0.0412	0.0493	0.0493	0.0573	0.0573
1997년	0.0304	0.0304	0.0403	0.0403	0.0502	0.0502	0.0601	0.0601
1998년	0.0346	0.0346	0.0417	0.0417	0.0488	0.0488	0.0560	0.0560
1999년	0.0435	0.0435	0.0447	0.0447	0.0458	0.0458	0.0470	0.0470
2000년	0.0397	0.0397	0.0434	0.0434	0.0471	0.0471	0.0508	0.0508
2001년	0.0351	0.0351	0.0419	0.0419	0.0486	0.0486	0.0554	0.0554
2002년	0.0292	0.0292	0.0399	0.0399	0.0506	0.0506	0.0613	0.0613
2003년	0.0236	0.0236	0.0380	0.0380	0.0525	0.0525	0.0669	0.0669
2004년	0.0135	0.0135	0.0347	0.0347	0.0559	0.0559	0.0771	0.0771
2005년	0.0265	0.0265	0.0390	0.0390	0.0515	0.0515	0.0640	0.0640
2006년	0.0313	0.0313	0.0406	0.0406	0.0499	0.0499	0.0592	0.0592
2007년	0.0374	0.0374	0.0426	0.0426	0.0479	0.0479	0.0532	0.0532
2008년	0.0419	0.0419	0.0441	0.0441	0.0464	0.0464	0.0486	0.0486

〈표 6-31〉 전세비 증감률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52.6	-		-	-
1991년	53.6	.0190		-	-
1992년	57.7	.0765		-	-
1993년	59.1	.0243		-	-
1994년	61.8	.0457		-	-
1995년	64.0	.0356		-	-
1996년	68.2	.0656		.0040	4
1997년	68.7	.0073		.0050	0
1998년	56.1	-.1834		.0036	0
1999년	65.5	.1676	.0453	.0006	4
2000년	72.8	.1115		.0019	4
2001년	84.8	.1648		.0034	4
2002년	93.3	.1002		.0054	4
2003년	92.0	-.0139		.0072	0
2004년	87.4	-.0500		.0106	0
2005년	90.1	.0309		.0063	1
2006년	95.9	.0644		.0046	4
2007년	98.3	.0250		.0026	0
2008년	100.0	.0173		.0011	0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32〉 전세비 증감률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4	4	4.0
1997년	3	0	1.5
1998년	2	0	1.0
1999년	4	4	4.0
2000년	4	4	4.0
2001년	4	4	4.0
2002년	3	4	3.5
2003년	3	0	1.5
2004년	3	0	1.5
2005년	3	1	2.0
2006년	3	4	3.5
2007년	3	0	1.5
2008년	3	0	1.5

제4절 인구·가족영역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1. 지표명: 총부양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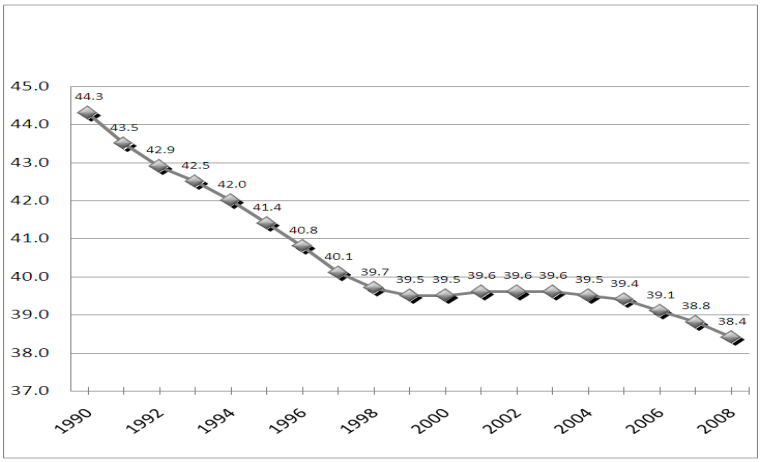
가. 개요

총 부양비는 총 인구 중에서 생산가능 연령층(15~64세) 인구에 대한 유년인구(만 14세 이하) 및 노년인구(만65세 이상)의 백분비이며, 이를 통해 부양인구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살펴볼 수 있다. 총부양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나. 통계

1990년 총부양비는 44.3%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1999년과 2000년에 39.5%로 급격하게 하락을 나타냈다. 그 이후 총부양비는 38%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6-11] 총부양비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총 부양비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총 부양비가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총 부양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총부양비가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총 부양비가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총 부양비의 추세값은 1996~1997년, 2004~2008년에 낮은 수준인 2점으로 측정되어 대체적으로 안정된 추세를 보였다.

추세값이 총 부양비가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변화율의 증감정도를 보여주는 증감폭 값은 1999~2006년에 높은 값인 4점을 가졌으나 그 전후인 1996~1998년, 2008년에는 다시 안정세를 찾았다.

총부양비의 위기수준은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값으로 산출되는데, 위기점수는 1996~1998년에 매우 안정적이었으나 1999~2006년에 높은 값

을 보여 총부양비로 인한 국민의 위기체감도가 그 시기에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8년에 다시 낮은 수준인 1.0점의 위기점수를 보였다.

〈표 6-33〉 총부양비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44.3	-	-	-	-
1991년	43.5	-.0181	.0181	-	-
1992년	42.9	-.0138	.0138	-	-
1993년	42.5	-.0093	.0093	-	-
1994년	42.0	-.0118	.0118	-	-
1995년	41.4	-.0143	.0143	-	-
1996년	40.8	-.0145	.0145	.0134	2
1997년	40.1	-.0172	.0172	.0127	2
1998년	39.7	-.0100	.0100	.0134	3
1999년	39.5	-.0050	.0050	.0135	3
2000년	39.5	.0000	.0000	.0122	3
2001년	39.6	.0025	.0025	.0093	3
2002년	39.6	.0000	.0000	.0069	3
2003년	39.6	.0000	.0000	.0035	3
2004년	39.5	-.0025	.0025	.0015	2
2005년	39.4	-.0025	.0025	.0010	2
2006년	39.1	-.0076	.0076	.0015	2
2007년	38.8	-.0077	.0077	.0025	2
2008년	38.4	-.0103	.0103	.0041	2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총부양비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119	-0.0119	-0.0092	-0.0092	-0.0066	-0.0066	-0.0039	-0.0039
1997년	-0.0117	-0.0117	-0.0092	-0.0092	-0.0066	-0.0066	-0.0041	-0.0041
1998년	-0.0119	-0.0119	-0.0092	-0.0092	-0.0066	-0.0066	-0.0039	-0.0039
1999년	-0.0120	-0.0120	-0.0093	-0.0093	-0.0066	-0.0066	-0.0038	-0.0038
2000년	-0.0116	-0.0116	-0.0091	-0.0091	-0.0067	-0.0067	-0.0042	-0.0042
2001년	-0.0107	-0.0107	-0.0088	-0.0088	-0.0070	-0.0070	-0.0051	-0.0051
2002년	-0.0097	-0.0097	-0.0085	-0.0085	-0.0073	-0.0073	-0.0061	-0.0061
2003년	-0.0087	-0.0087	-0.0082	-0.0082	-0.0077	-0.0077	-0.0072	-0.0072
2004년	-0.0081	-0.0081	-0.0080	-0.0080	-0.0079	-0.0079	-0.0078	-0.0078
2005년	-0.0079	-0.0079	-0.0079	-0.0079	-0.0079	-0.0079	-0.0079	-0.0079
2006년	-0.0081	-0.0081	-0.0080	-0.0080	-0.0079	-0.0079	-0.0078	-0.0078
2007년	-0.0087	-0.0087	-0.0082	-0.0082	-0.0077	-0.0077	-0.0071	-0.0071
2008년	-0.0091	-0.0091	-0.0083	-0.0083	-0.0075	-0.0075	-0.0067	-0.0067

〈표 6-34〉 총부양비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44.3	-		-	-
1991년	43.5	-.0181		-	-
1992년	42.9	-.0138		-	-
1993년	42.5	-.0093		-	-
1994년	42.0	-.0118		-	-
1995년	41.4	-.0143		-	-
1996년	40.8	-.0145		.0013	0
1997년	40.1	-.0172		.0013	0
1998년	39.7	-.0100		.0013	1
1999년	39.5	-.0050	-.0079	.0014	3
2000년	39.5	.0000		.0012	4
2001년	39.6	.0025		.0009	4
2002년	39.6	.0000		.0006	4
2003년	39.6	.0000		.0002	4
2004년	39.5	-.0025		.0001	4
2005년	39.4	-.0025		.0000	4
2006년	39.1	-.0076		.0001	4
2007년	38.8	-.0077		.0003	3
2008년	38.4	-.0103		.0004	0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35〉 총부양비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2	0	1.0
1997년	2	0	1.0
1998년	3	1	2.0
1999년	3	3	3.0
2000년	3	4	3.5
2001년	3	4	3.5
2002년	3	4	3.5
2003년	3	4	3.5
2004년	2	4	3.0
2005년	2	4	3.0
2006년	2	4	3.0
2007년	2	3	2.5
2008년	2	0	1.0

2. 지표명: 고령화지수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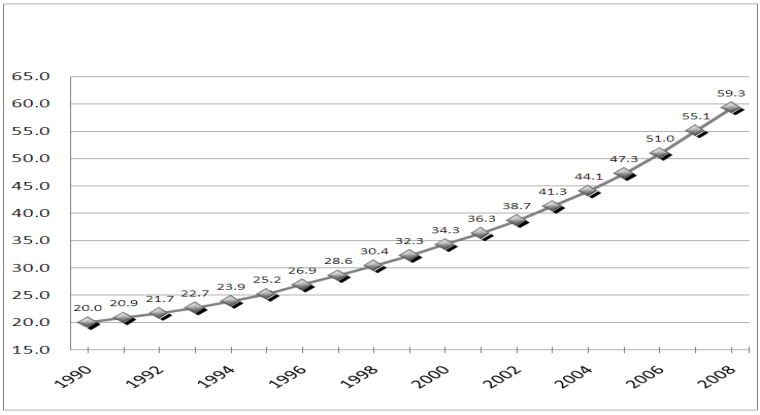
고령화지수는 유년인구(만 14세 이하) 100명당 노인인구(65세 이상)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령화 정도를 가늠하는 주요 척도이다. 고령화지수가 높을수록 청장년층이 노인층을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고령화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위기 수준역시 상승한다. 고령화지수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를 분석하였다.

$$\text{고령화지수} = \frac{\text{노년인구(65세이상)}}{\text{유년인구(14세이하)}} \times 100$$

나. 통계

고령화지수는 1990년 20.0에서 2008년 59.3로 2.97배 상승하였다. 지속적으로 고령화지수가 상승하는 것은 청장년층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노년층이 증가하는 현 추세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림 6-12] 고령화지수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7.11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고령화지수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고령화지수가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고령화지수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고령화지수가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고령화지수가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고령화지수의 추세값은 2000~2001년에 다소 안정적이었지만 그 전후 연도에는 최고치인 4점을 가져 고령화지수가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추세값이 고령화지수가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

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고령화지수의 증감폭 값을 보면, 1997~2004년에는 그다지 높지 않아 고령화지수의 완만한 증가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5~2008년에는 증감폭 값이 3점으로 고령화지수의 급격한 증가가 진행되었다.

고령화지수의 위기점수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 및 증감정도를 통해 측정한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으로 산출된다. 고령화지수의 위기점수는 1996~2008년에 위기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위기정도에는 연도별 차이가 다소 있는데 2000~2001년에는 비교적 안정적 상태에 있었지만 1997~1999년, 2002~2004년에 위기점수가 다소 높아졌으며 1996년, 2005~2008년의 위기점수는 매우 높은 수준인 3.5점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최근 2005~2008년에 위기점수가 높아져, 고령화지수로 인한 국민의 위기체감도가 최근 4년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6-36〉 고령화지수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20.0	-	-	-	-
1991년	20.9	.0450	.0450	-	-
1992년	21.7	.0383	.0383	-	-
1993년	22.7	.0461	.0461	-	-
1994년	23.9	.0529	.0529	-	-
1995년	25.2	.0544	.0544	-	-
1996년	26.9	.0675	.0675	.0473	4
1997년	28.6	.0632	.0632	.0518	4
1998년	30.4	.0629	.0629	.0568	4
1999년	32.3	.0625	.0625	.0602	4
2000년	34.3	.0619	.0619	.0621	3
2001년	36.3	.0583	.0583	.0636	3
2002년	38.7	.0661	.0661	.0618	4
2003년	41.3	.0672	.0672	.0624	4
2004년	44.1	.0678	.0678	.0632	4
2005년	47.3	.0726	.0726	.0643	4
2006년	51.0	.0782	.0782	.0664	4
2007년	55.1	.0804	.0804	.0704	4
2008년	59.3	.0762	.0762	.0732	4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고령화지수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485	0.0485	0.0579	0.0579	0.0674	0.0674	0.0769	0.0769
1997년	0.0471	0.0471	0.0575	0.0575	0.0679	0.0679	0.0782	0.0782
1998년	0.0456	0.0456	0.0570	0.0570	0.0684	0.0684	0.0797	0.0797
1999년	0.0446	0.0446	0.0567	0.0567	0.0687	0.0687	0.0807	0.0807
2000년	0.0440	0.0440	0.0565	0.0565	0.0689	0.0689	0.0813	0.0813
2001년	0.0436	0.0436	0.0563	0.0563	0.0690	0.0690	0.0818	0.0818
2002년	0.0441	0.0441	0.0565	0.0565	0.0689	0.0689	0.0812	0.0812
2003년	0.0440	0.0440	0.0564	0.0564	0.0689	0.0689	0.0814	0.0814
2004년	0.0437	0.0437	0.0564	0.0564	0.0690	0.0690	0.0816	0.0816
2005년	0.0434	0.0434	0.0562	0.0562	0.0691	0.0691	0.0820	0.0820
2006년	0.0428	0.0428	0.0560	0.0560	0.0693	0.0693	0.0826	0.0826
2007년	0.0416	0.0416	0.0556	0.0556	0.0697	0.0697	0.0838	0.0838
2008년	0.0407	0.0407	0.0553	0.0553	0.0700	0.0700	0.0846	0.0846

〈표 6-37〉 고령화지수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20.0	-		-	-
1991년	20.9	.0450		-	-
1992년	21.7	.0383		-	-
1993년	22.7	.0461		-	-
1994년	23.9	.0529		-	-
1995년	25.2	.0544		-	-
1996년	26.9	.0675		.0047	3
1997년	28.6	.0632		.0052	2
1998년	30.4	.0629		.0057	2
1999년	32.3	.0625	.0627	.0060	2
2000년	34.3	.0619		.0062	2
2001년	36.3	.0583		.0064	2
2002년	38.7	.0661		.0062	2
2003년	41.3	.0672		.0062	2
2004년	44.1	.0678		.0063	2
2005년	47.3	.0726		.0064	3
2006년	51.0	.0782		.0066	3
2007년	55.1	.0804		.0070	3
2008년	59.3	.0762		.0073	3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38〉 고령화지수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4	3	3.5
1997년	4	2	3.0
1998년	4	2	3.0
1999년	4	2	3.0
2000년	3	2	2.5
2001년	3	2	2.5
2002년	4	2	3.0
2003년	4	2	3.0
2004년	4	2	3.0
2005년	4	3	3.5
2006년	4	3	3.5
2007년	4	3	3.5
2008년	4	3	3.5

3. 지표명: 수도권 인구집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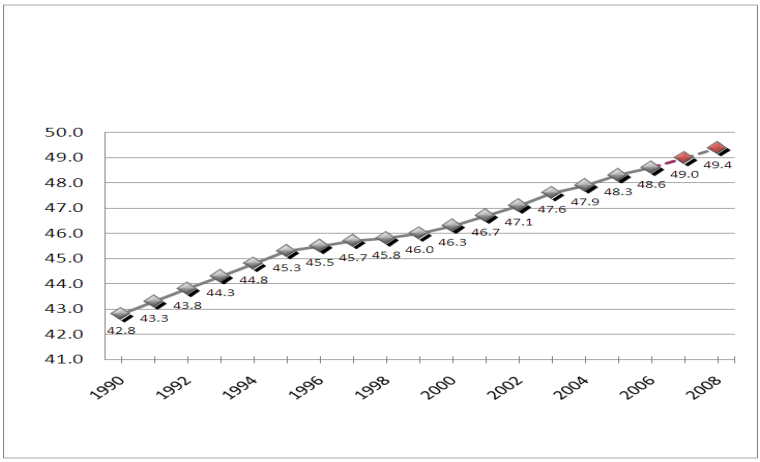
가. 개요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전체 인구 중 서울, 인천, 경기인구의 비중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기초하여 산출한 것으로, 2007~2008년의 통계치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1990~2006년의 기울기 값으로 추정하였다.

나. 통계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1990년 42.8%에서 2006년 48.6%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07년과 2008년에는 1990~2006년 증감 기울기를 통해 각각 49.0%, 49.4%로 추정하였다.

[그림 6-13] 수도권 인구 집중도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수도권 인구 집중도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수도권 인구 집중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수도권 인구집중도의 추세값 산출결과를 살펴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 대부분 연도에서 4점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1996~1999년보다 2000년대에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심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추세값이 수도권 인구 집중도가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증감폭 값은 2001~2003년, 2005년에 큰 증가를 보이면서 3.0~4.0점을 가졌으나, 그 전후 연도인 1996~2000년, 2004~2008년에는 낮은 수준의 증감폭 값을 가지면서 비교적 낮은 증감폭 값을 유지하고 있었다.

수도권 인구 집중도의 위기수준은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으로 측정되는데, 추세값과 증감폭 값이 모두 높았던 2001~2003년, 2005년에는 3.0~4.0점의 높은 위기점수가 산출되었다. 반면, 1996~2000년, 2004년, 2006~2008년은 1.5~2.5점의 위기점수를 가졌는데, 타 연도와 비교해서 비교적 낮은 수치이긴 하나 여전히 위기체감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1996~2008년에 국민은 수도권 인구집중도로 인해 지속적으로 위기를 체감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6-39〉 수도권 인구집중도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42.8	-	-	-	-
1991년	43.3	.0117	.0117	-	-
1992년	43.8	.0115	.0115	-	-
1993년	44.3	.0114	.0114	-	-
1994년	44.8	.0113	.0113	-	-
1995년	45.3	.0112	.0112	-	-
1996년	45.5	.0044	.0044	.0114	3
1997년	45.7	.0044	.0044	.0100	3
1998년	45.8	.0022	.0022	.0085	3
1999년	46.0	.0044	.0044	.0067	3
2000년	46.3	.0065	.0065	.0053	4
2001년	46.7	.0086	.0086	.0044	4
2002년	47.1	.0086	.0086	.0052	4
2003년	47.6	.0106	.0106	.0061	4
2004년	47.9	.0063	.0063	.0077	3
2005년	48.3	.0084	.0084	.0081	4
2006년	48.5	.0048	.0048	.0085	3
2007년	48.9	.0069	.0069	.0077	3
2008년	49.2	.0069	.0069	.0074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수도권 인구집중도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044	0.0044	0.0067	0.0067	0.0090	0.0090	0.0113	0.0113
1997년	0.0049	0.0049	0.0069	0.0069	0.0089	0.0089	0.0109	0.0109
1998년	0.0053	0.0053	0.0070	0.0070	0.0087	0.0087	0.0104	0.0104
1999년	0.0059	0.0059	0.0072	0.0072	0.0085	0.0085	0.0099	0.0099
2000년	0.0063	0.0063	0.0073	0.0073	0.0084	0.0084	0.0095	0.0095
2001년	0.0066	0.0066	0.0074	0.0074	0.0083	0.0083	0.0092	0.0092
2002년	0.0063	0.0063	0.0073	0.0073	0.0084	0.0084	0.0094	0.0094
2003년	0.0061	0.0061	0.0073	0.0073	0.0085	0.0085	0.0097	0.0097
2004년	0.0055	0.0055	0.0071	0.0071	0.0086	0.0086	0.0102	0.0102
2005년	0.0054	0.0054	0.0071	0.0071	0.0087	0.0087	0.0103	0.0103
2006년	0.0053	0.0053	0.0070	0.0070	0.0087	0.0087	0.0104	0.0104
2007년	0.0055	0.0055	0.0071	0.0071	0.0087	0.0087	0.0103	0.0103
2008년	0.0055	0.0055	0.0071	0.0071	0.0087	0.0087	0.0102	0.0102

〈표 6-40〉 수도권 인구집중도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42.8	-		-	-
1991년	43.3	.0117		-	-
1992년	43.8	.0115		-	-
1993년	44.3	.0114		-	-
1994년	44.8	.0113		-	-
1995년	45.3	.0112		-	-
1996년	45.5	.0044		.0011	0
1997년	45.7	.0044		.0010	0
1998년	45.8	.0022		.0009	0
1999년	46.0	.0044	.0079	.0007	0
2000년	46.3	.0065		.0005	1
2001년	46.7	.0086		.0004	3
2002년	47.1	.0086		.0005	3
2003년	47.6	.0106		.0006	4
2004년	47.9	.0063		.0008	1
2005년	48.3	.0084		.0008	2
2006년	48.5	.0048		.0008	0
2007년	48.9	.0069		.0008	1
2008년	49.2	.0069		.0008	1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41〉 수도권 인구집중도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3	0	1.5
1997년	3	0	1.5
1998년	3	0	1.5
1999년	3	0	1.5
2000년	4	1	2.5
2001년	4	3	3.5
2002년	4	3	3.5
2003년	4	4	4.0
2004년	3	1	2.0
2005년	4	2	3.0
2006년	3	0	1.5
2007년	3	1	2.0
2008년	3	1	2.0

4. 지표명: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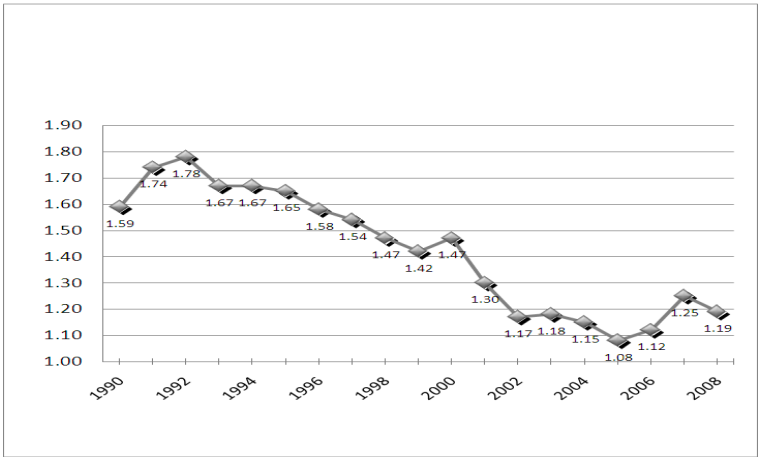
가. 개요

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평균 자녀수로, 출산율이 높을수록 여성 한 명이 출생하는 자녀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합계 출산율은 2.1명이며, 1.3명 이하일 경우 초저출산 사회라고 부른다.

나. 통계

출산율은 1990년 1.59명에서 2005년 1.08명 그리고 2008년 1.19명으로 나타났다. 출산율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01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초저출산 사회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림 6-14] 출산율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출산율의 경우에는 대체출산율 '2.1'이라는 합의된 수치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변화율을 사용하지 않고 절대평가방식으로 위기점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1996~2000년에는 출산율이 1.4~1.6명 범위에 속해 위기점수가 3점이었으나, 2001~2008년의 출산율은 1.4명보다도 낮은 수치로 4점의 위기점수가 부여되었다. 즉, 저출산으로 국민의 위기체감도는 매우 높아졌으며, 이는 1996년부터 지속된 현상이나 2001년에 초저출산 사회에 진입하면서 급격히 심화되었다.

위기점수 기준				
0	1	2	3	42,1
2.0~2.2	2.2~2.4 1.8~2.0	2.4~2.6 1.6~1.8	2.6~2.8 1.4~1.6	2.8 이상 1.4 미만

〈표 6-42〉 출산율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통계치	위기점수{(a+b)/2}
1990년	1.59	-
1991년	1.74	-
1992년	1.78	-
1993년	1.67	-
1994년	1.67	-
1995년	1.65	-
1996년	1.58	3
1997년	1.54	3
1998년	1.47	3
1999년	1.42	3
2000년	1.47	3
2001년	1.30	4
2002년	1.17	4
2003년	1.18	4
2004년	1.15	4
2005년	1.08	4
2006년	1.12	4
2007년	1.25	4
2008년	1.19	4

제5절 복지영역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1. 지표명: 노후대비율

가. 개요

노후준비는 노년기 생활에 대한 준비의식으로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 부양에 대한 준비를 말한다. 노후대비율은 노후준비율로 나타내며, 통계청 사회통계조사와 사회조사를 통해 산출하였다. 조사인구는 각 년도 15세 이상 인구 또는 18세 이상 인구이며, 노후대비율이 높을수록 사회적, 개인적으로 노후준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위기가 낮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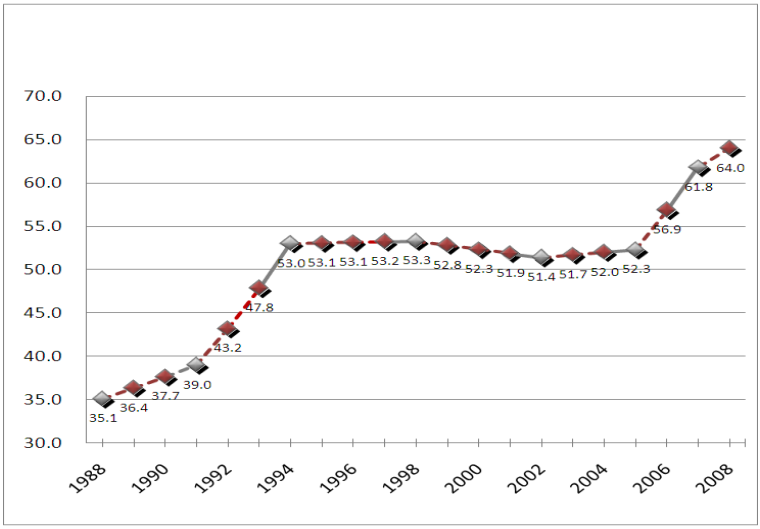
노후대비율은 매년 조사된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1988년과 1991년 지표값의 기울기를 통해 1989~1990년 지표값을 추정하였고, 1991년과 1994

년을 통해 1992~1993년을, 1994년과 1998년을 통해 1995~1997년을, 1998년과 2002년을 통해 1999~2001년을, 20002년과 2005년을 통해 2003~2004년을, 2005년과 2007년을 통해 2006년의 지표값을 추정하였다. 또한 2008년의 지표값은 1988~2007년 지표값의 기울기를 통해 추정된 것이다.

나. 통계

노후대비율은 1988~2008년에 걸쳐 전반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1994~2005년에는 전년도 지표값보다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5~2008년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여 보다 많은 국민이 노후 대비를 하고 있었다. 이는 2008년에 64.0%까지 증가되어 국민 100명 중 64명이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15] 노후대비율 변화추이: 1988~2008년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사회조사』,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노후대비율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2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4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노후대비율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노후대비율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노후대비율이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노후대비율이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노후대비율의 추세값은 2000~2003년에 4.0점으로, 노후대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이었으나, 1996~1999년, 2003~2005년, 2008년에는 3.0점, 2006~2007점에는 2.0점으로 대다수 연도에서 노후대비율이 감소하거나 평년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값이 노후대비율이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0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4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노후대비율의 증감폭 값은 1996~2005년도에 4.0점으로, 대다수 연도에서 큰 감소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6~2008년도에는 증감폭 값이 0.0~1.0점으로 매우 안정된 수치를 보였다.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추세값과 증감폭 값 평균으로 산출한 노후대비율의 위기점수는 1996~2005년에 높은 수준인 3.5~4.0점을 보였는데, 타 연도에서 노후대비율이 증가한 것에 비해 이 시기에는 노후대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후대비율이 증가한 시기인 2006~2008년에는 1.0~2.0점의 위기점수를 보이면서 비교적 안정상태로 나타났다.

〈표 6-43〉 위기수준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88년	35	-	-	-	-
1989년	36	0.0358	0.0358	-	-
1990년	38	0.0357	0.0357	-	-
1991년	39	0.0357	0.0357	-	-
1992년	43	0.1077	0.1077	-	-
1993년	48	0.1077	0.1077	-	-
1994년	53	0.1077	0.1077	-	-
1995년	53	0.0014	0.0014	-	-
1996년	53	0.0014	0.0014	0.0720	3
1997년	53	0.0014	0.0014	0.0652	3
1998년	53	0.0014	0.0014	0.0439	3
1999년	53	-0.0090	0.0090	0.0227	3
2000년	52	-0.0090	0.0090	0.0029	4
2001년	52	-0.0090	0.0090	0.0045	4
2002년	51	-0.0090	0.0090	0.0060	4
2003년	52	0.0058	0.0058	0.0075	3
2004년	52	0.0058	0.0058	0.0084	3
2005년	52	0.0058	0.0058	0.0077	3
2006년	57	0.0870	0.0870	0.0071	2
2007년	62	0.0870	0.0870	0.0227	2
2008년	64	0.0358	0.0358	0.0383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노후대비율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1996년	0.0460	0.0460	0.0316	0.0316	0.0172	0.0172	0.0028	0.0028
1997년	0.0440	0.0440	0.0309	0.0309	0.0179	0.0179	0.0049	0.0049
1998년	0.0376	0.0376	0.0288	0.0288	0.0200	0.0200	0.0112	0.0112
1999년	0.0312	0.0312	0.0267	0.0267	0.0222	0.0222	0.0176	0.0176
2000년	0.0246	0.0246	0.0245	0.0245	0.0244	0.0244	0.0242	0.0242
2001년	0.0252	0.0252	0.0247	0.0247	0.0241	0.0241	0.0236	0.0236
2002년	0.0259	0.0259	0.0249	0.0249	0.0239	0.0239	0.0230	0.0230
2003년	0.0265	0.0265	0.0251	0.0251	0.0237	0.0237	0.0223	0.0223
2004년	0.0262	0.0262	0.0250	0.0250	0.0238	0.0238	0.0226	0.0226
2005년	0.0253	0.0253	0.0247	0.0247	0.0241	0.0241	0.0235	0.0235
2006년	0.0245	0.0245	0.0244	0.0244	0.0244	0.0244	0.0244	0.0244
2007년	0.0301	0.0301	0.0263	0.0263	0.0225	0.0225	0.0187	0.0187
2008년	0.0359	0.0359	0.0282	0.0282	0.0206	0.0206	0.0129	0.0129

〈표 6-44〉 노후대비율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35	-		-	-
1991년	36	0.0358		-	-
1992년	38	0.0357		-	-
1993년	39	0.0357		-	-
1994년	43	0.1077		-	-
1995년	48	0.1077		-	-
1996년	53	0.1077		0.0072	4
1997년	53	0.0014		0.0065	4
1998년	53	0.0014		0.0044	4
1999년	53	0.0014	0.0244	0.0023	4
2000년	53	0.0014		0.0001	4
2001년	53	-0.0090		0.0003	4
2002년	52	-0.0090		0.0005	4
2003년	52	-0.0090		0.0007	4
2004년	51	-0.0090		0.0006	4
2005년	52	0.0058		0.0003	4
2006년	52	0.0058		0.0000	0
2007년	52	0.0058		0.0019	0
2008년	57	0.0870		0.0038	1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45〉 노후대비율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3	4	3.5
1997년	3	4	3.5
1998년	3	4	3.5
1999년	3	4	3.5
2000년	4	4	4.0
2001년	4	4	4.0
2002년	4	4	4.0
2003년	3	4	3.5
2004년	3	4	3.5
2005년	3	4	3.5
2006년	2	0	1.0
2007년	2	0	1.0
2008년	3	1	2.0

2. 지표명: 연금 수혜비율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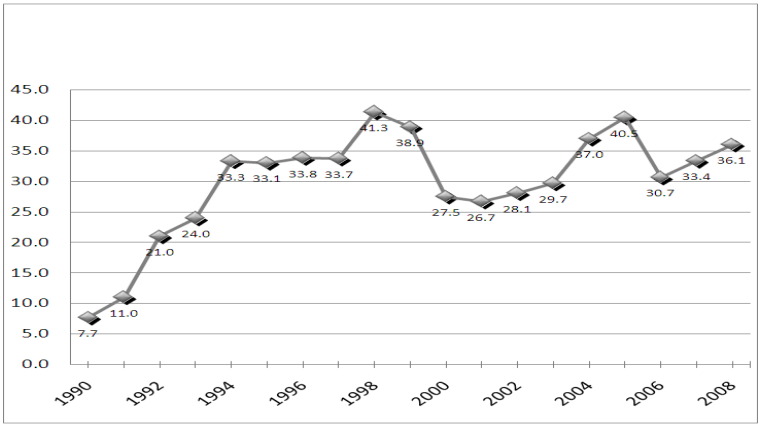
연금 수혜비율은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수혜자수의 비중으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각 년도 국민연금통계연보를 통해 산출되었다. 국민연금 수혜비율이 높을수록 많은 노인이 사회보장을 받기 때문에 사회위기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text{국민연금수혜비율} = \frac{\text{국민연금수혜자수}}{\text{노년인구수(만65세이상)}} \times 100$$

나. 통계

연금 수혜비율은 1990년 7.7%에서 1998년 41.3%이지만, 2000년에 27.5%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 후 다시 증가를 보여 2005년 40.5%가 되었지만 2006년 30.7%로 급감하였고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여 2008년 36.1%로 나타났다.

[그림 6-16] 연금수혜비율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연금수혜비율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2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4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연금수혜비율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연금수혜비율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연금수혜비율이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연금수혜비율이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연금수혜비율의 추세값은 1998년, 2004년에 2점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준의 연금 수혜비율 증가가 일어났으며, 반면에 2000년, 2006년에는 4점으로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수혜비율이 감소되었다.

추세값이 연금수혜비율이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0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4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연금 수혜비율의 증감폭 값은 1998년, 2004~2005년을 제외하고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이는 1990~2008년도의 평균 증감치와 비교했을 때, 급격한 상승이 일어난 1990~1994년, 1998년, 2004~2005년을 제외하고 대다수 연도에서 연금수혜비율이 평년도 유지 또는 감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2006~2008년도는 연금수혜비율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0~2001년 평균 증감률보다는 미약한 정도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증감폭 값으로 3.0~4.0점을 가졌다.

연금 수혜비율의 위기점수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 및 증감정도를 파악하여 측정한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연금수혜비율의 위기점수는 1998년, 2004~2005년을 제외하고 모두 높은 값을 가져 타 연도에 비해 1996~1997년, 1999~2003년, 2006~2008년에 연금수혜비율이 국민의 사회위기 체감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었다.

〈표 6-46〉 연금 수혜비율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7.7	-	-	-	-
1991년	11.0	.4377	.4377	-	-
1992년	21.0	.9049	.9049	-	-
1993년	24.0	.1402	.1402	-	-
1994년	33.3	.3900	.3900	-	-
1995년	33.1	-.0081	.0081	-	-
1996년	33.8	.0239	.0239	.3762	3
1997년	33.7	-.0035	.0035	.2934	3
1998년	41.3	.2261	.2261	.1131	2
1999년	38.9	-.0587	.0587	.1303	3
2000년	27.5	-.2933	.2933	.0640	4
2001년	26.7	-.0288	.0288	.1211	3
2002년	28.1	.0514	.0514	.1221	3
2003년	29.7	.0565	.0565	.1317	3
2004년	37.0	.2472	.2472	.0978	2
2005년	40.5	.0933	.0933	.1355	3
2006년	30.7	-.2422	.2422	.0954	4
2007년	33.4	.0889	.0889	.1381	3
2008년	36.1	.0800	.0800	.1456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연금 수혜비율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1996년	0.2052	0.2052	0.1307	0.1307	0.0561	0.0561	-0.0185	-0.0185
1997년	0.1805	0.1805	0.1224	0.1224	0.0644	0.0644	0.0063	0.0063
1998년	0.1260	0.1260	0.1043	0.1043	0.0825	0.0825	0.0608	0.0608
1999년	0.1311	0.1311	0.1060	0.1060	0.0808	0.0808	0.0557	0.0557
2000년	0.1042	0.1042	0.0970	0.0970	0.0898	0.0898	0.0826	0.0826
2001년	0.0997	0.0997	0.0955	0.0955	0.0913	0.0913	0.0871	0.0871
2002년	0.1029	0.1029	0.0966	0.0966	0.0902	0.0902	0.0839	0.0839
2003년	0.0996	0.0996	0.0955	0.0955	0.0913	0.0913	0.0872	0.0872
2004년	0.1098	0.1098	0.0989	0.0989	0.0879	0.0879	0.0770	0.0770
2005년	0.0954	0.0954	0.0941	0.0941	0.0927	0.0927	0.0914	0.0914
2006년	0.1186	0.1186	0.1018	0.1018	0.0850	0.0850	0.0682	0.0682
2007년	0.1058	0.1058	0.0975	0.0975	0.0893	0.0893	0.0810	0.0810
2008년	0.1080	0.1080	0.0983	0.0983	0.0885	0.0885	0.0788	0.0788

〈표 6-47〉 연금수혜비율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7.7	-		-	-
1991년	11.0	.4377		-	-
1992년	21.0	.9049		-	-
1993년	24.0	.1402		-	-
1994년	33.3	.3900		-	-
1995년	33.1	-.0081		-	-
1996년	33.8	.0239		.0373	3
1997년	33.7	-.0035		.0290	4
1998년	41.3	.2261		.0109	0
1999년	38.9	-.0587	.0934	.0126	4
2000년	27.5	-.2933		.0036	4
2001년	26.7	-.0288		.0021	4
2002년	28.1	.0514		.0032	4
2003년	29.7	.0565		.0021	4
2004년	37.0	.2472		.0055	0
2005년	40.5	.0933		.0007	2
2006년	30.7	-.2422		.0084	4
2007년	33.4	.0889		.0041	3
2008년	36.1	.0800		.0049	3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48〉 연금수혜비율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3	3	3.0
1997년	3	4	3.5
1998년	2	0	1.0
1999년	3	4	3.5
2000년	4	4	4.0
2001년	3	4	3.5
2002년	3	4	3.5
2003년	3	4	3.5
2004년	2	0	1.0
2005년	3	2	2.5
2006년	4	4	4.0
2007년	3	3	3.0
2008년	3	3	3.0

3. 지표명: 요보호아동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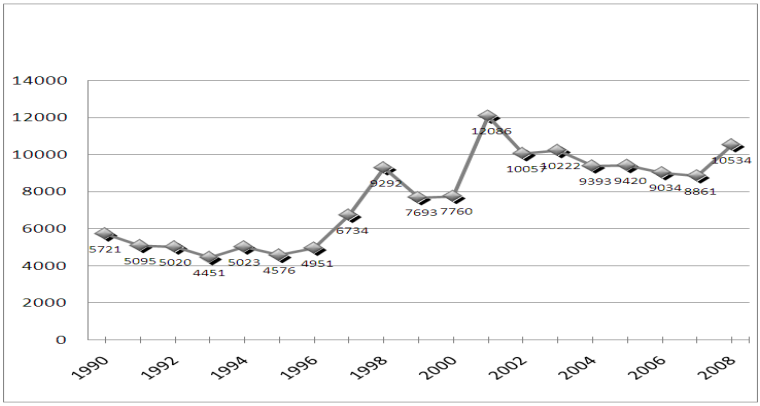
가. 개요

본 지표는 각 년도 요보호아동수를 가리키며, 요보호아동이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다만, 입양에 의한 요보호아동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요보호아동만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민법상의 입양(사인간의 입양)은 요보호아동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가정위탁사업은 2000년 이후의 사업으로 통계표상에 그 이전의 통계는 포함되지 않았다.

나. 통계

요보호아동은 1990년 5,721명에서 1998년 9,292명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1999~2000년 7,693명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1년 12,086명으로 급증하여 1990~2008년 중 최고치를 가졌다. 이후 요보호아동은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되었으며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발한 2008년에 다시 요보호 아동 수가 약 2,000명 증가하였다.

[그림 6-17] 요보호아동수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요보호아동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요보호아동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요보호아동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요보호아동수가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요보호아동이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요보호아동수의 추세값은 1997~1998년, 2001년, 2008년 4점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준으로 요보호아동의 수적 증가가 일어났다. 이외 연도에서는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요보호아동이 증가 또는 감소되지는 않았다.

추세값이 요보호아동이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

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요보호아동의 증감폭 값은 요호보아동수가 급격히 증가한 연도인 1996~1998년, 2001년, 2008년에 4점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치 또는 감소한 이외 연도에서는 0~1점으로 산출되었다.

국민이 체감하는 요보호아동수의 위기수준은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 및 증감정도로 파악하였는데, 1996~1998년, 2001년, 2008년도에 4.0점으로 측정되었다. 즉, 요보호아동 증가로 인한 국민의 위기체감도는 타 연도에 비해 1996~1998년, 2001년, 2008년에 증가하였다.

〈표 6-49〉 요보호아동수의 추세값 산출

(단위: 명,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5721	-	-	-	-
1991년	5095	-.1094	.1094	-	-
1992년	5020	-.0147	.0147	-	-
1993년	4451	-.1133	.1133	-	-
1994년	5023	.1285	.1285	-	-
1995년	4576	-.0890	.0890	-	-
1996년	4951	.0819	.0819	.0910	3
1997년	6734	.3601	.3601	.0855	4
1998년	9292	.3799	.3799	.1546	4
1999년	7693	-.1721	.1721	.2079	3
2000년	7760	.0087	.0087	.2166	3
2001년	12086	.5575	.5575	.2005	4
2002년	10057	-.1679	.1679	.2957	3
2003년	10222	.0164	.0164	.2572	3
2004년	9393	-.0811	.0811	.1845	3
2005년	9420	.0029	.0029	.1663	3
2006년	9034	-.0410	.0410	.1651	3
2007년	8861	-.0191	.0191	.0618	3
2008년	10534	.1888	.1888	.0321	4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요보호아동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214	0.0214	0.0293	0.0293	0.0372	0.0372	0.0451	0.0451
1997년	0.0328	0.0328	0.0331	0.0331	0.0334	0.0334	0.0336	0.0336
1998년	0.0111	0.0111	0.0259	0.0259	0.0406	0.0406	0.0553	0.0553
1999년	-0.0185	-0.0185	0.0160	0.0160	0.0505	0.0505	0.0849	0.0849
2000년	-0.0004	-0.0004	0.0220	0.0220	0.0444	0.0444	0.0669	0.0669
2001년	-0.0063	-0.0063	0.0201	0.0201	0.0464	0.0464	0.0727	0.0727
2002년	-0.0348	-0.0348	0.0105	0.0105	0.0559	0.0559	0.1013	0.1013
2003년	-0.0031	-0.0031	0.0211	0.0211	0.0454	0.0454	0.0696	0.0696
2004년	0.0187	0.0187	0.0284	0.0284	0.0381	0.0381	0.0478	0.0478
2005년	0.0132	0.0132	0.0266	0.0266	0.0399	0.0399	0.0532	0.0532
2006년	0.0136	0.0136	0.0267	0.0267	0.0398	0.0398	0.0529	0.0529
2007년	0.0170	0.0170	0.0278	0.0278	0.0386	0.0386	0.0495	0.0495
2008년	0.0259	0.0259	0.0308	0.0308	0.0357	0.0357	0.0405	0.0405

〈표 6-50〉 요보호아동수의 증감폭 값

(단위: 명,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5721	-		-	-
1991년	5095	-.1094		-	-
1992년	5020	-.0147		-	-
1993년	4451	-.1133		-	-
1994년	5023	.1285		-	-
1995년	4576	-.0890		-	-
1996년	4951	.0819		.0040	4
1997년	6734	.3601		.0001	4
1998년	9292	.3799		.0074	4
1999년	7693	-.1721	.0332	.0172	0
2000년	7760	.0087		.0112	1
2001년	12086	.5575		.0132	4
2002년	10057	-.1679		.0227	0
2003년	10222	.0164		.0121	1
2004년	9393	-.0811		.0049	0
2005년	9420	.0029		.0067	0
2006년	9034	-.0410		.0066	0
2007년	8861	-.0191		.0054	0
2008년	10534	.1888		.0024	4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51〉 요보호아동수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3	4	3.5
1997년	4	4	4.0
1998년	4	4	4.0
1999년	3	0	1.5
2000년	3	1	2.0
2001년	4	4	4.0
2002년	3	0	1.5
2003년	3	1	2.0
2004년	3	0	1.5
2005년	3	0	1.5
2006년	3	0	1.5
2007년	3	0	1.5
2008년	4	4	4.0

4. 지표명: 장애인 출현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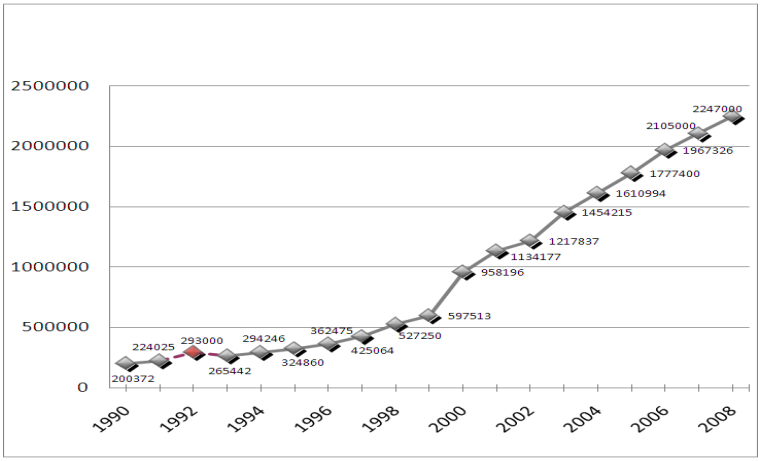
가. 개요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출현자수를 등록장애인의 수로 산출하였으며, 등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동 법 제29조에 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나. 통계

장애인 출현자수는 1990년 200,372명에서 2008년 2,247,000명으로 11.2배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과거에는 장애인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으나, 최근에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 및 서비스의 확대로 상당수 비등록장애인이 등록을 하였으며 2000년대 초에 장애인의 범위가 16종으로 확대됨으로써 등록 대상자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림 6-18] 장애인 출현자수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등록장애인현황』,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장애인 출현자수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장애인 출현자수가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장애인 출현자수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 출현자수가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 출현자수가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장애인 출현자수의 추세값은 1997~1998년, 2000년 4점으로,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등록장애인 수는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상승했음을 보여주었다. 최근 8개년의 추세값은 3점으로, 평년도와 비교했을 때 장애인 출현자수가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증감하지는 않았다.

추세값이 장애인 출현자수가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 ±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장애인 출현자수의 증감폭 값은 1997~1998년, 2000~2001년, 2003년 3.0~4.0점으로, 이 시기의 장애인 출현자수는 국민이 수적 증가에 대한 심

각성을 느낄 만큼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6년, 2002년, 2004~2008년에는 증감폭 값이 매우 낮아 2003년 이후 장애인 출현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음을 보여준다.

장애인 출현자수의 위기점수는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값으로, 1997~1998년, 2000~2001년, 2003년에는 3.0~4.0점의 위기값을 가졌다. 이 시기에는 추세값뿐만 아니라 증감폭 값도 높아 장애인 출현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시기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이외 연도에는 추세값과 증감폭 값이 매우 안정적이면서 위기점수 또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즉, 2003년 이후 장애인 출현자수는 큰 증감없이 계속 유지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52〉 장애인 출현자수의 추세값 산출

(단위: 명,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200,372	-	-	-	-
1991년	224,025	.1180	.1180	-	-
1992년	293,000	.3079	.3079	-	-
1993년	265,442	-.0941	.0941	-	-
1994년	294,246	.1085	.1085	-	-
1995년	324,860	.1040	.1040	-	-
1996년	362,475	.1158	.1158	.1465	3
1997년	425,064	.1727	.1727	.1461	4
1998년	527,250	.2404	.2404	.1190	4
1999년	597,513	.1333	.1333	.1483	3
2000년	958,196	.6036	.6036	.1532	4
2001년	1,134,177	.1837	.1837	.2532	3
2002년	1,217,837	.0738	.0738	.2667	3
2003년	1,454,215	.1941	.1941	.2469	3
2004년	1,610,994	.1078	.1078	.2377	3
2005년	1,777,400	.1033	.1033	.2326	3
2006년	1,967,326	.1069	.1069	.1325	3
2007년	2,105,000	.0700	.0700	.1172	3
2008년	2,247,000	.0675	.0675	.1164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장애인 출현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1053	0.1053	0.1271	0.1271	0.1489	0.1489	0.1706	0.1706
1997년	0.1054	0.1054	0.1271	0.1271	0.1488	0.1488	0.1705	0.1705
1998년	0.1136	0.1136	0.1298	0.1298	0.1461	0.1461	0.1624	0.1624
1999년	0.0935	0.0935	0.1231	0.1231	0.1528	0.1528	0.1825	0.1825
2000년	0.0920	0.0920	0.1226	0.1226	0.1533	0.1533	0.1839	0.1839
2001년	0.0620	0.0620	0.1127	0.1127	0.1633	0.1633	0.2139	0.2139
2002년	0.0580	0.0580	0.1113	0.1113	0.1646	0.1646	0.2180	0.2180
2003년	0.0639	0.0639	0.1133	0.1133	0.1627	0.1627	0.2121	0.2121
2004년	0.0667	0.0667	0.1142	0.1142	0.1617	0.1617	0.2093	0.2093
2005년	0.0682	0.0682	0.1147	0.1147	0.1612	0.1612	0.2077	0.2077
2006년	0.0982	0.0982	0.1247	0.1247	0.1512	0.1512	0.1777	0.1777
2007년	0.1028	0.1028	0.1263	0.1263	0.1497	0.1497	0.1731	0.1731
2008년	0.1030	0.1030	0.1263	0.1263	0.1496	0.1496	0.1729	0.1729

〈표 6-53〉 장애인 출현의 증감폭 값

(단위: 명,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200,372	-		-	-
1991년	224,025	.1180		-	-
1992년	293,000	.3079		-	-
1993년	265,442	-.0941		-	-
1994년	294,246	.1085		-	-
1995년	324,860	.1040		-	-
1996년	362,475	.1158		.0109	1
1997년	425,064	.1727		.0108	4
1998년	527,250	.2404		.0081	4
1999년	597,513	.1333	.1380	.0148	2
2000년	958,196	.6036		.0153	4
2001년	1,134,177	.1837		.0253	3
2002년	1,217,837	.0738		.0267	1
2003년	1,454,215	.1941		.0247	3
2004년	1,610,994	.1078		.0238	1
2005년	1,777,400	.1033		.0233	1
2006년	1,967,326	.1069		.0133	1
2007년	2,105,000	.0700		.0117	0
2008년	2,247,000	.0675		.0116	0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54〉 장애인 출현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3	1	2.0
1997년	4	4	4.0
1998년	4	4	4.0
1999년	3	2	2.5
2000년	4	4	4.0
2001년	3	3	3.0
2002년	3	1	2.0
2003년	3	3	3.0
2004년	3	1	2.0
2005년	3	1	2.0
2006년	3	1	2.0
2007년	3	0	1.5
2008년	3	0	1.5

제6절 건강·안전영역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1. 지표명: 평균수명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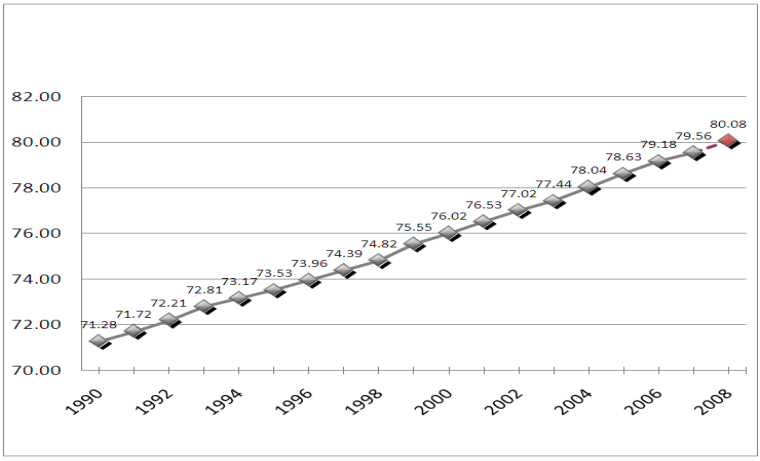
평균수명은 출생 시 기대여명으로, 신생아가 그 이후 몇 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는가를 계산한 평균 생존년수이다. 평균수명은 통계청의 생명표로 조사하였다. 단, 2008년 평균수명은 자료의 한계로 1990~2007년 평균수명의 기울기로 추정하였다.

나. 통계

평균수명은 1990년 71.28세에서 2007년 80.08세로 8.8세 증가하였으며, 1990~2008년 평균수명의 기울기를 통해 2008년에는 80.08세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점차적으로 경제사회발전으로 인한 영양 및 의료 환경의

개선 등 보건수준의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19] 평균수명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통계청, 『생명표』,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평균수명의 위기점수는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이때 모든 기준값은 각년도 전체 OECD국가의 평균수명의 평균값으로 하였다. 먼저,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최근 5년간 전체 OECD국가 평균수명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 내에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추세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1996~2008년 평균수명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은 기준범위에서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 전체 연도의 추세값은 2점으로 측정되었다. 평균수명의 추세값을 산출한 결과, 1996~2008년 모두 2점으로, OECD국가 평균수명보다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상당 수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변화율의 증감정도에 따라 값이 부여되는 증감폭 값은 1991~2008년의 전체 OECD국가 평균수명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전체 OECD국가 평균수명의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

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한 증감폭 값 산출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0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4점을 부여하였다.

평균수명의 증감폭 값을 산출한 결과, 1996~2008년의 증감폭 값은 0점으로, 전체 OECD국가 평균수명의 최근 변화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으로 위기점수를 산출한 결과, 1996~2008년 위기점수가 모두 1.0점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OECD 국가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55〉 평균수명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71.28	-	-	-	-
1991년	71.72	.0062	.0062	-	-
1992년	72.21	.0068	.0068	-	-
1993년	72.81	.0083	.0083	-	-
1994년	73.17	.0049	.0049	-	-
1995년	73.53	.0049	.0049	-	-
1996년	73.96	.0058	.0058	0.0028	2
1997년	74.39	.0058	.0058	0.0031	2
1998년	74.82	.0058	.0058	0.0031	2
1999년	75.55	.0098	.0098	0.0032	2
2000년	76.02	.0062	.0062	0.0027	2
2001년	76.53	.0067	.0067	0.0035	2
2002년	77.02	.0064	.0064	0.0035	2
2003년	77.44	.0055	.0055	0.0033	2
2004년	78.04	.0077	.0077	0.0031	2
2005년	78.63	.0076	.0076	0.0039	2
2006년	79.18	.0070	.0070	0.0034	2
2007년	79.56	.0048	.0048	0.0035	2
2008년	8.08	.0065	.0065	0.0036	2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체 OECD국가 평균수명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임.

연도	평균수명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1996년	0.0040	0.0040	0.0034	0.0034	0.0029	0.0029	0.0023	0.0023
1997년	0.0041	0.0041	0.0035	0.0035	0.0028	0.0028	0.0022	0.0022
1998년	0.0041	0.0041	0.0035	0.0035	0.0028	0.0028	0.0022	0.0022
1999년	0.0041	0.0041	0.0035	0.0035	0.0028	0.0028	0.0022	0.0022
2000년	0.0040	0.0040	0.0034	0.0034	0.0029	0.0029	0.0023	0.0023
2001년	0.0042	0.0042	0.0035	0.0035	0.0028	0.0028	0.0021	0.0021
2002년	0.0042	0.0042	0.0035	0.0035	0.0028	0.0028	0.0021	0.0021
2003년	0.0041	0.0041	0.0035	0.0035	0.0028	0.0028	0.0022	0.0022
2004년	0.0041	0.0041	0.0035	0.0035	0.0028	0.0028	0.0022	0.0022
2005년	0.0043	0.0043	0.0035	0.0035	0.0028	0.0028	0.0020	0.0020
2006년	0.0042	0.0042	0.0035	0.0035	0.0028	0.0028	0.0021	0.0021
2007년	0.0042	0.0042	0.0035	0.0035	0.0028	0.0028	0.0021	0.0021
2008년	0.0042	0.0042	0.0035	0.0035	0.0028	0.0028	0.0021	0.0021

〈표 6-56〉 평균수명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1]	기준범위[2]	증감폭 값(b)
1990년	71.28	-		-	-
1991년	71.72	.0062		-	-
1992년	72.21	.0068		-	-
1993년	72.81	.0083		-	-
1994년	73.17	.0049		-	-
1995년	73.53	.0049		-	-
1996년	73.96	.0058		0.0003	0
1997년	74.39	.0058		0.0003	0
1998년	74.82	.0058		0.0003	0
1999년	75.55	.0098	0.00315	0.0003	0
2000년	76.02	.0062		0.0003	0
2001년	76.53	.0067		0.0004	0
2002년	77.02	.0064		0.0003	0
2003년	77.44	.0055		0.0003	0
2004년	78.04	.0077		0.0003	0
2005년	78.63	.0076		0.0004	0
2006년	79.18	.0070		0.0003	0
2007년	79.56	.0048		0.0003	0
2008년	80.08	.0065		0.0004	0

주: 1) 이는 전체 OECD국가 평균수명의 양 극단치를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을 말함.
2) 기준범위는 전체 OECD국가 평균수명의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57〉 평균수명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2	0	1.0
1997년	2	0	1.0
1998년	2	0	1.0
1999년	2	0	1.0
2000년	2	0	1.0
2001년	2	0	1.0
2002년	2	0	1.0
2003년	2	0	1.0
2004년	2	0	1.0
2005년	2	0	1.0
2006년	2	0	1.0
2007년	2	0	1.0
2008년	2	0	1.0

2. 지표명: 자살률

가. 개요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국제질병사인분류체계(WHO)에서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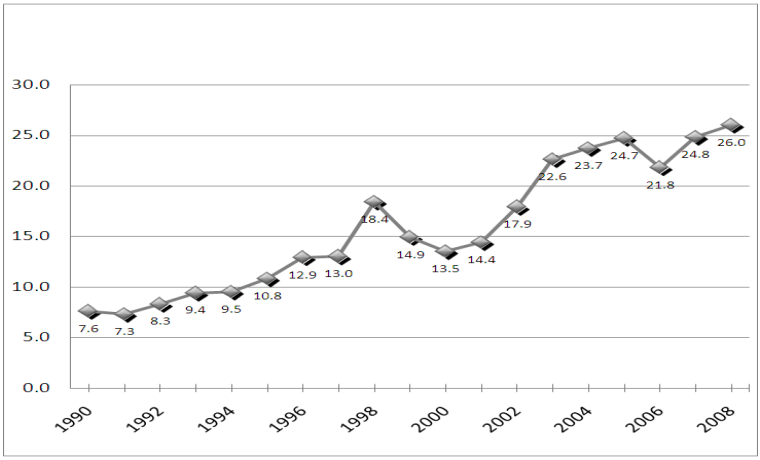
$$\text{자살률} = \frac{\text{자살로 인한 사망자수}}{\text{주민등록연앙인구}} \times 100000$$

나. 통계

자살률은 1990년 7.6%에서 1998년 18.4%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26.0%로 나타났다. 1998년 자살률이 급증한 것은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2001년까지 낮은 수치를 보이다가 신용카드 유동성 대란이 일어난 2003년 다시 급증하여 2008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 몇 년간 자살률이 감소하지 않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경제의 위기가 국민의 삶을 위협할 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는 단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림 6-20] 자살률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자살률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자살률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자살률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자살률이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자살률이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자살률의 추세값은 1996년, 1998년, 2002~2003년 4점으로, 이 당시 자살률은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98년은 IMF 경제위기, 2003년은 신용카드 유동성 대란이 일어난 시기로 경제위기가 자살률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에 1999년을 제외하고는 자살률이 감소한 연도는 존재하지 않아, 최근 12년간 자살률은 증가하기만 할 뿐 국민이 체감할 만큼 감소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값이 자살률이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자살률의 증감폭 값은 1996년, 1998년, 2002~2003년, 2007년에 4점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 이 시기에 국민이 느끼기에 매우 큰 폭으로 자살률이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연도에는 증감폭 값이 0~1점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이진 않았다.

자살률의 위기점수는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으로 산출된다. 자살률의 위기점수는 1996년, 1998년, 2002~2003년, 2007년에 높은 수치인 4.0점으로 산출되었다. 특히 1998년과 2002~2003년의 높은 위기점수는 경제적 상태와도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국가의 경제적 악화는 국민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게끔 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제적 위기에 당면했을 때 국가는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책이 신속히 마련되어 모든 국민이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6-58〉 자살률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7.6	-	-	-	-
1991년	7.3	-.0395	.0395	-	-
1992년	8.3	.1370	.1370	-	-
1993년	9.4	.1325	.1325	-	-
1994년	9.5	.0106	.0106	-	-
1995년	10.8	.1368	.1368	-	-
1996년	12.9	.1944	.1944	0.0913	4
1997년	13.0	.0078	.0078	0.1223	3
1998년	18.4	.4154	.4154	0.0964	4
1999년	14.9	-.1902	.1902	0.1530	2
2000년	13.5	-.0940	.0940	0.1889	3
2001년	14.4	.0667	.0667	0.1804	3
2002년	17.9	.2431	.2431	0.1548	4
2003년	22.6	.2626	.2626	0.2019	4
2004년	23.7	.0487	.0487	0.1713	3
2005년	24.7	.0422	.0422	0.1430	3
2006년	21.8	-.1174	.1174	0.1326	3
2007년	24.8	.1376	.1376	0.1428	3
2008년	26.0	.0484	.0484	0.1217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자살률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534	0.0534	0.0685	0.0685	0.0836	0.0836	0.0987	0.0987
1997년	0.0394	0.0394	0.0639	0.0639	0.0883	0.0883	0.1128	0.1128
1998년	0.0472	0.0472	0.0665	0.0665	0.0857	0.0857	0.1050	0.1050
1999년	0.0302	0.0302	0.0608	0.0608	0.0914	0.0914	0.1220	0.1220
2000년	0.0422	0.0422	0.0648	0.0648	0.0874	0.0874	0.1099	0.1099
2001년	0.0561	0.0561	0.0694	0.0694	0.0828	0.0828	0.0961	0.0961
2002년	0.0638	0.0638	0.0720	0.0720	0.0802	0.0802	0.0884	0.0884
2003년	0.0496	0.0496	0.0673	0.0673	0.0849	0.0849	0.1026	0.1026
2004년	0.0588	0.0588	0.0703	0.0703	0.0819	0.0819	0.0934	0.0934
2005년	0.0445	0.0445	0.0656	0.0656	0.0866	0.0866	0.1077	0.1077
2006년	0.0363	0.0363	0.0628	0.0628	0.0894	0.0894	0.1159	0.1159
2007년	0.0473	0.0473	0.0665	0.0665	0.0857	0.0857	0.1048	0.1048
2008년	0.0537	0.0537	0.0686	0.0686	0.0836	0.0836	0.0985	0.0985

〈표 6-59〉 자살률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7.6	-		-	-
1991년	7.3	-.0395		-	-
1992년	8.3	.1370		-	-
1993년	9.4	.1325		-	-
1994년	9.5	.0106		-	-
1995년	10.8	.1368		-	-
1996년	12.9	.1944		0.0076	4
1997년	13.0	.0078		0.0122	0
1998년	18.4	.4154		0.0096	4
1999년	14.9	-.1902	0.0761	0.0153	0
2000년	13.5	-.0940		0.0113	0
2001년	14.4	.0667		0.0067	1
2002년	17.9	.2431		0.0041	4
2003년	22.6	.2626		0.0088	4
2004년	23.7	.0487		0.0058	0
2005년	24.7	.0422		0.0105	0
2006년	21.8	-.1174		0.0133	0
2007년	24.8	.1376		0.0096	4
2008년	26.0	.0484		0.0075	0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60〉 자살률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4	4	4.0
1997년	3	0	1.5
1998년	4	4	4.0
1999년	2	0	1.0
2000년	3	0	1.5
2001년	3	1	2.0
2002년	4	4	4.0
2003년	4	4	4.0
2004년	3	0	1.5
2005년	3	0	1.5
2006년	3	0	1.5
2007년	3	4	3.5
2008년	3	0	1.5

3. 지표명: 청소년·노인 자살률

가. 개요

청소년 자살률은 만 15~24세 인구 10만 명당 국제질병사인분류체계(WHO)에서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를 의미하며, 노인 자살률은 만 60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국제질병사인분류체계(WHO)에서 고의적 자해(자살)로 인한 사망자수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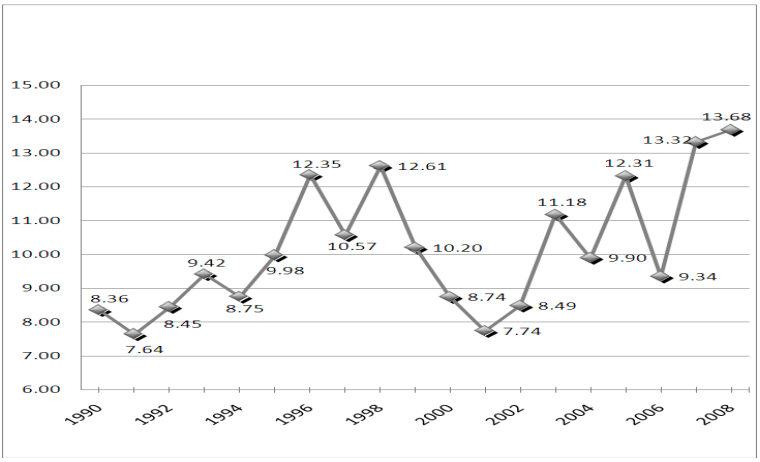
$$\text{청소년자살률} = \frac{\text{자살로 인한 만15~24세 사망자수}}{\text{만 15~24세 인구}} \times 100000$$

$$\text{노인자살률} = \frac{\text{자살로 인한 만60세 이상 사망자수}}{\text{만 60세이상 인구}} \times 100000$$

나. 통계

청소년 자살률은 1990년 8.36%에서 1998년 12.61%까지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1998년부터 2001년까지 급격히 감소하여 2001년 7.74%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1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8년 청소년 자살률은 19년 중 최고치인 13.68%로 측정되었다. 1996~1998년에 일어난 청소년 자살률의 급증은 IMF 경제위기로 인해 발생된 사회적 불안과 가정의 불안과 높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03년 신용카드 유동성 대란과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2000년대에 청소년 자살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였고 2008년 최고치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체적으로 사회변화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경쟁적인 교육제도, 매스미디어를 통한 자살정보에 의한 영향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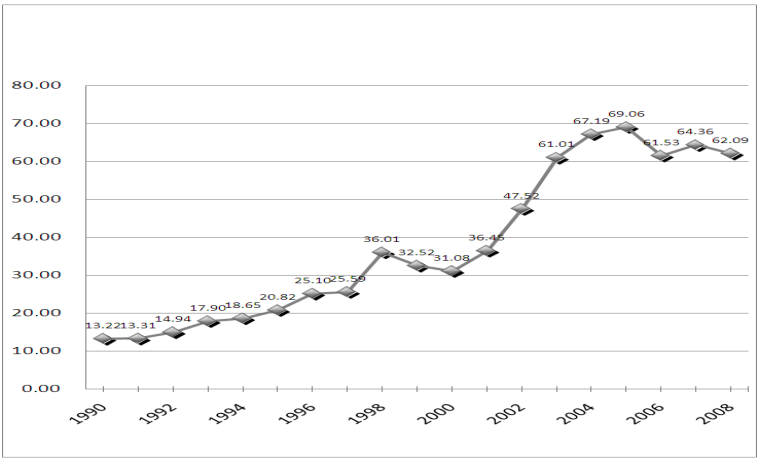
[그림 6-21] 청소년 자살률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년도.

노인자살률은 1990년 13.12%에서 1998년 36.01%로 상승하였으나, 2000년에는 31.08%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자살률이 증가하여, 2008년의 자살률은 2008년 62.09%로 1990년도 4.7배나 증가하였다.

[그림 6-22] 노인 자살률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소년·노인 자살률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청소년·노인 자살률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청소년·노인 자살률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청소년·노인 자살률이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청소년·노인 자살률이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 자살률의 추세값은 1996년, 1998년, 1999년, 2003년, 2005년 4점으로, 이는 이 시기에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청소년 자살률이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1997년, 2006년은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청소년 자살률이 감소하여 2점의 추세값을 부여하였다.

노인 자살률의 추세값은 1996년, 1998년, 2001~2003년 4점으로,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8년과 신용카드 유동성이 일어난 2003년에 청소년 자살률의 추세값과 마찬가지로 높은 추세값이 측정되었다. 즉, 사회적 경제위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노인에게도 삶의 포기를 일으키는 주요한 사건으로 작용한다.

추세값이 청소년·노인 자살률이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 ±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먼저, 청소년 자살률의 증감폭 값은 1996년, 1998년, 2002~2003년, 2007년에 4점으로 청소년 자살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며, 이외 연도에서는 큰 폭의 증가를 보이지는 않았다. 노인 자살률의 증감폭 값은 1996년, 1998년, 2001~2003년에 4점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시기는 IMF 경제위기 및 신용카드 유동성 대란이 일어났을 때로 청소년 자살률보다 노인 자살률이 사회경제적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노인 자살률의 위기수준은 각각의 추세값과 증감폭 값을 청소년 자살률의 위기점수와 노인 자살률의 위기점수를 산출한 후 이들의 평균값을 청소년·노인 자살률의 위기점수로 하여 측정하였다. 청소년 자살률의 위기점수는 최근까지 높은 수치를 보여 청소년의 자살문제에 대한 사회정책 및 서비스가 시급히 실시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에 비해 노인 자살률의 위기점수는 1996~2004년까지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2005~2008년에 다소 감소하여, 최근 4~5년간 노인 자살률로 인한 국민의 위기체감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인 자살률은 국가에 경제적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노인의 자살을 막고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대책이 반드시 강구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청소년 자살률의 위기점수와 노인 자살률의 위기점수의 평균값인 청소년·노인 자살률의 위기점수는 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1996년, 1998년, 2002~2003년에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 시기는 청소년 자살률과 노인자살률이 모두 높았던 시기로써 국가의 경제적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한 노인 자살률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경제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는 청소년·노인이 삶의 희망을 놓지 않도록 사회적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표 6-61〉 청소년 자살률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8.36	-	-	-	-
1991년	7.64	-.0852	.0852	-	-
1992년	8.45	.1049	.1049	-	-
1993년	9.42	.1149	.1149	-	-
1994년	8.75	-.0708	.0708	-	-
1995년	9.98	.1404	.1404	-	-
1996년	12.35	.2380	.2380	.1033	4
1997년	10.57	-.1444	.1444	.1338	2
1998년	12.61	.1936	.1936	.1417	4
1999년	10.20	-.1914	.1914	.1575	4
2000년	8.74	-.1428	.1428	.1816	3
2001년	7.74	-.1150	.1150	.1820	3
2002년	8.49	.0971	.0971	.1575	3
2003년	11.18	.3170	.3170	.1480	4
2004년	9.90	-.1148	.1148	.1727	3
2005년	12.31	.2441	.2441	.1573	4
2006년	9.34	-.2411	.2411	.1776	2
2007년	13.32	.4256	.4256	.2028	3
2008년	13.68	.0269	.0269	.2685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청소년 자살률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260	0.0260	0.0342	0.0342	0.0424	0.0424	0.0505	0.0505
1997년	0.0066	0.0066	0.0277	0.0277	0.0488	0.0488	0.0699	0.0699
1998년	0.0216	0.0216	0.0327	0.0327	0.0438	0.0438	0.0550	0.0550
1999년	0.0169	0.0169	0.0311	0.0311	0.0454	0.0454	0.0597	0.0597
2000년	0.0241	0.0241	0.0336	0.0336	0.0430	0.0430	0.0525	0.0525
2001년	0.0355	0.0355	0.0373	0.0373	0.0392	0.0392	0.0411	0.0411
2002년	0.0143	0.0143	0.0303	0.0303	0.0463	0.0463	0.0623	0.0623
2003년	0.0288	0.0288	0.0351	0.0351	0.0414	0.0414	0.0478	0.0478
2004년	0.0362	0.0362	0.0376	0.0376	0.0390	0.0390	0.0404	0.0404
2005년	0.0358	0.0358	0.0375	0.0375	0.0391	0.0391	0.0408	0.0408
2006년	0.0126	0.0126	0.0297	0.0297	0.0468	0.0468	0.0640	0.0640
2007년	0.0201	0.0201	0.0322	0.0322	0.0443	0.0443	0.0564	0.0564
2008년	0.0004	0.0004	0.0257	0.0257	0.0509	0.0509	0.0761	0.0761

〈표 6-62〉 청소년 자살률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8.36	-		-	-
1991년	7.64	-.0852		-	-
1992년	8.45	.1049		-	-
1993년	9.42	.1149		-	-
1994년	8.75	-.0708		-	-
1995년	9.98	.1404		-	-
1996년	12.35	.2380		.0041	4
1997년	10.57	-.1444		.0105	0
1998년	12.61	.1936		.0056	4
1999년	10.20	-.1914	.0383	.0071	0
2000년	8.74	-.1428		.0047	0
2001년	7.74	-.1150		.0009	0
2002년	8.49	.0971		.0080	4
2003년	11.18	.3170		.0032	4
2004년	9.90	-.1148		.0007	0
2005년	12.31	.2441		.0008	4
2006년	9.34	-.2411		.0086	0
2007년	13.32	.4256		.0060	4
2008년	13.68	.0269		.0126	2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63〉 청소년 자살률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4	4	4.0
1997년	2	0	1.0
1998년	4	4	4.0
1999년	4	0	2.0
2000년	3	0	1.5
2001년	3	0	1.5
2002년	3	4	3.5
2003년	4	4	4.0
2004년	3	0	1.5
2005년	4	4	4.0
2006년	2	0	1.0
2007년	3	4	3.5
2008년	3	2	2.5

〈표 6-64〉 노인 자살률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13.22	-	-	-	-
1991년	13.31	.0067	.0067	-	-
1992년	14.94	.1232	.1232	-	-
1993년	17.90	.1981	.1981	-	-
1994년	18.65	.0415	.0415	-	-
1995년	20.82	.1164	.1164	-	-
1996년	25.10	.2056	.2056	.0972	4
1997년	25.59	.0194	.0194	.1370	3
1998년	36.01	.4073	.4073	.1162	4
1999년	32.52	-.0969	.0969	.1581	3
2000년	31.08	-.0442	.0442	.1691	3
2001년	36.45	.1726	.1726	.1547	4
2002년	47.52	.3038	.3038	.1481	4
2003년	61.01	.2839	.2839	.2050	4
2004년	67.19	.1013	.1013	.1803	3
2005년	69.06	.0277	.0277	.1812	3
2006년	61.53	-.1090	.1090	.1779	3
2007년	64.36	.0459	.0459	.1652	3
2008년	62.09	-.0353	.0353	.1136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노인 자살률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627	0.0627	0.0821	0.0821	0.1016	0.1016	0.1210	0.1210
1997년	0.0508	0.0508	0.0782	0.0782	0.1056	0.1056	0.1330	0.1330
1998년	0.0570	0.0570	0.0802	0.0802	0.1035	0.1035	0.1267	0.1267
1999년	0.0445	0.0445	0.0761	0.0761	0.1077	0.1077	0.1393	0.1393
2000년	0.0528	0.0528	0.0788	0.0788	0.1049	0.1049	0.1310	0.1310
2001년	0.0624	0.0624	0.0820	0.0820	0.1017	0.1017	0.1213	0.1213
2002년	0.0644	0.0644	0.0827	0.0827	0.1010	0.1010	0.1194	0.1194
2003년	0.0473	0.0473	0.0770	0.0770	0.1067	0.1067	0.1364	0.1364
2004년	0.0547	0.0547	0.0795	0.0795	0.1043	0.1043	0.1290	0.1290
2005년	0.0428	0.0428	0.0755	0.0755	0.1082	0.1082	0.1409	0.1409
2006년	0.0385	0.0385	0.0741	0.0741	0.1097	0.1097	0.1452	0.1452
2007년	0.0554	0.0554	0.0797	0.0797	0.1040	0.1040	0.1283	0.1283
2008년	0.0709	0.0709	0.0849	0.0849	0.0989	0.0989	0.1129	0.1129

〈표 6-65〉 노인 자살률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13.22	-		-	-
1991년	13.31	.0067		-	-
1992년	14.94	.1232		-	-
1993년	17.90	.1981		-	-
1994년	18.65	.0415		-	-
1995년	20.82	.1164		-	-
1996년	25.10	.2056		.0097	4
1997년	25.59	.0194		.0137	0
1998년	36.01	.4073		.0116	4
1999년	32.52	-.0969	.0919	.0158	0
2000년	31.08	-.0442		.0130	0
2001년	36.45	.1726		.0098	4
2002년	47.52	.3038		.0092	4
2003년	61.01	.2839		.0149	4
2004년	67.19	.1013		.0124	2
2005년	69.06	.0277		.0163	0
2006년	61.53	-.1090		.0178	0
2007년	64.36	.0459		.0122	0
2008년	62.09	-.0353		.0070	0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66〉 노인 자살률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4	4	4.0
1997년	3	0	1.5
1998년	4	4	4.0
1999년	3	0	1.5
2000년	3	0	1.5
2001년	4	4	4.0
2002년	4	4	4.0
2003년	4	4	4.0
2004년	3	2	2.5
2005년	3	0	1.5
2006년	3	0	1.5
2007년	3	0	1.5
2008년	3	0	1.5

〈표 6-67〉 청소년·노인 자살률의 평균 위기점수

연도	청소년자살률의 위기점수	노인자살률의 위기점수	청소년·노인자살률 평균 위기점수
1996년	4.0	4.0	4.00
1997년	1.0	1.5	1.25
1998년	4.0	4.0	4.00
1999년	2.0	1.5	1.75
2000년	1.5	1.5	1.50
2001년	1.5	4.0	2.75
2002년	3.5	4.0	3.75
2003년	4.0	4.0	4.00
2004년	1.5	2.5	2.00
2005년	4.0	1.5	2.75
2006년	1.0	1.5	1.25
2007년	3.5	1.5	2.50
2008년	2.5	1.5	2.00

4. 지표명: 부정식품 적발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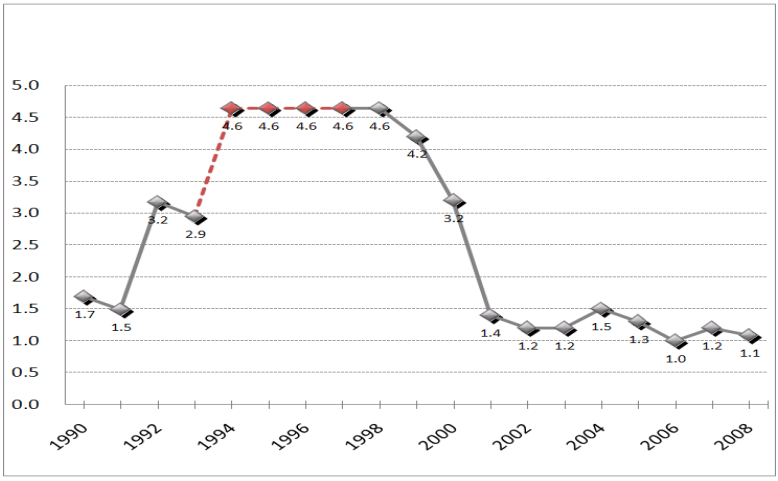
가. 개요

부정식품 적발률은 유통식품 수거검사 부적발률로 추정하였는데, 식약청이 지자체에서 수거하여 정밀 검사한 건수 대비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된 건수를 의미한다. 이 지표의 수치가 높을수록 우리나라 유통식품의 안전성은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1994~1997년 지표값은 자료의 한계로 인해 1993년과 1998년 지표값의 기울기를 활용하여 추정한 값이다.

나. 통계

부정식품 적발률은 1990년 1.7%에서 1998년 4.6%로 급증하여 1990~2008년 중 가장 높은 적발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2008년 부정식품 적발률은 1.1%로 나타나 식품의 안정성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23] 부정식품 적발률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백서』, 『식약청 및 지자체 수거실적보고자료』,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부정식품 적발률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부정식품 적발률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부정식품 적발률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부정식품 적발률이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부정식품 적발률이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부정식품 적발률의 추세값이 1998년, 2004년, 2007년에 4점으로, 부정식품 적발률이 이 시기에 국민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에 비해 1999~2001년, 2006년 추세값은 2점으로, 부정식품 적발률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추세값이 부정식품 적발률이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부정식품 적발률의 증감폭 값은 1996~1998년, 2004년, 2007년에 4점으로 나타나 부정식품 적발률의 증가가 매우 큰 폭으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의 연도에서는 증감폭 값이 매우 낮았다.

부정식품 적발률의 위기점수는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위기점수를 산출한 결과, 1996~1998년, 2004년, 2007년의 위기점수가 3.5~4.0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여 부정식품 적발률의 증가가 국민의 위기체감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밖의 연도에서는 부정식품 적발률의 위기점수가 1.0~1.5점 수준으로 나타나, 부정식품 적발률이 오히려 국민의 체감위기를 감소시키기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표 6-68〉 부정식품 적발률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1.7	-	-	-	-
1991년	1.5	-0.1195	0.1195	-	-
1992년	3.2	1.1298	1.1298	-	-
1993년	2.9	-0.0712	0.0712	-	-
1994년	3.2	0.0951	0.0951	-	-
1995년	3.5	0.0951	0.0951	-	-
1996년	3.9	0.0951	0.0951	0.3021	3
1997년	4.2	0.0951	0.0951	0.2973	3
1998년	4.6	0.0951	0.0951	0.0904	4
1999년	4.2	-0.0953	0.0953	0.0951	2
2000년	3.2	-0.2381	0.2381	0.0952	2
2001년	1.4	-0.5625	0.5625	0.1238	2
2002년	1.2	-0.1429	0.1429	0.2172	3
2003년	1.2	0.0000	0.0000	0.2268	3
2004년	1.5	0.2500	0.2500	0.2077	4
2005년	1.3	-0.1333	0.1333	0.2387	3
2006년	1.0	-0.2308	0.2308	0.2177	2
2007년	1.2	0.2000	0.2000	0.1514	4
2008년	1.1	-0.0953	0.0953	0.1628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부정식품 적발률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803	-0.0803	-0.0351	-0.0351	0.0100	0.0100	0.0552	0.0552
1997년	-0.0932	-0.0932	-0.0394	-0.0394	0.0143	0.0143	0.0681	0.0681
1998년	-0.0311	-0.0311	-0.0187	-0.0187	-0.0064	-0.0064	0.0060	0.0060
1999년	-0.0411	-0.0411	-0.0221	-0.0221	-0.0030	-0.0030	0.0160	0.0160
2000년	-0.0297	-0.0297	-0.0182	-0.0182	-0.0068	-0.0068	0.0046	0.0046
2001년	-0.0154	-0.0154	-0.0135	-0.0135	-0.0116	-0.0116	-0.0097	-0.0097
2002년	-0.0549	-0.0549	-0.0267	-0.0267	0.0016	0.0016	0.0298	0.0298
2003년	-0.0692	-0.0692	-0.0314	-0.0314	0.0063	0.0063	0.0441	0.0441
2004년	-0.0749	-0.0749	-0.0333	-0.0333	0.0082	0.0082	0.0498	0.0498
2005년	-0.0541	-0.0541	-0.0264	-0.0264	0.0013	0.0013	0.0291	0.0291
2006년	-0.0479	-0.0479	-0.0243	-0.0243	-0.0008	-0.0008	0.0228	0.0228
2007년	-0.0280	-0.0280	-0.0177	-0.0177	-0.0074	-0.0074	0.0029	0.0029
2008년	-0.0177	-0.0177	-0.0143	-0.0143	-0.0108	-0.0108	-0.0074	-0.0074

〈표 6-69〉 부정식품 적합률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
1990년	1.7	-		-	-
1991년	1.5	-0.1195		-	-
1992년	3.2	1.1298		-	-
1993년	2.9	-0.0712		-	-
1994년	3.2	0.0951		-	-
1995년	3.5	0.0951		-	-
1996년	3.9	0.0951		0.0226	4
1997년	4.2	0.0951		0.0269	4
1998년	4.6	0.0951		0.0062	4
1999년	4.2	-0.0953	-0.0125	0.0095	0
2000년	3.2	-0.2381		0.0057	0
2001년	1.4	-0.5625		0.0010	0
2002년	1.2	-0.1429		0.0141	0
2003년	1.2	0.0000		0.0189	2
2004년	1.5	0.2500		0.0208	4
2005년	1.3	-0.1333		0.0139	0
2006년	1.0	-0.2308		0.0118	0
2007년	1.2	0.2000		0.0051	4
2008년	1.1	-0.0953		0.0017	0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70〉 부정식품 적발률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3	4	3.5
1997년	3	4	3.5
1998년	4	4	4.0
1999년	2	0	1.0
2000년	2	0	1.0
2001년	2	0	1.0
2002년	3	0	1.5
2003년	3	2	2.5
2004년	4	4	4.0
2005년	3	0	1.5
2006년	2	0	1.0
2007년	4	4	4.0
2008년	3	0	1.5

5. 지표명: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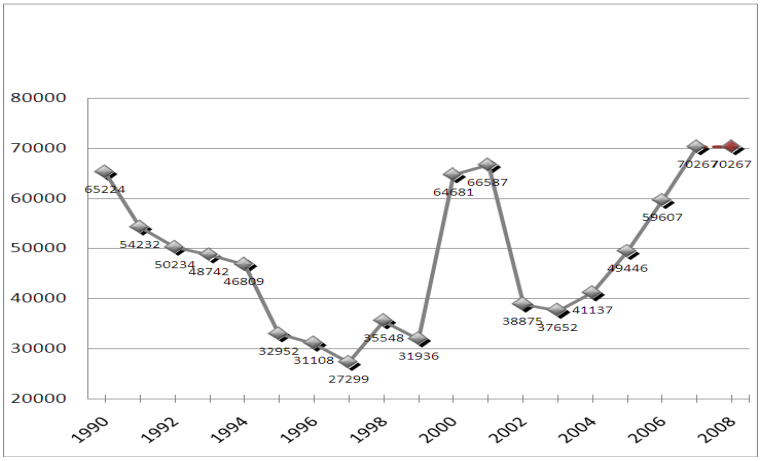
가. 개요

법정 전염병이란 전염병예방법 제2조 1항 규정에 명시된 전염병을 의미하며, 제1군 전염병, 제2군 전염병, 제3군 전염병, 제4군 전염병 및 지정전염병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집계한 법정 전염병 발생건수에는 표본감시 전염병(바이러스성 간염, 성병, 인플루엔자,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감염증,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해외유행전염병)은 제외되었다.

나. 통계

법정 전염병 건수는 1990~2008년 증감을 반복하였다. 자세히 설명하면, 1990년 65,224건에서 1997년 27,299건으로 감소,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2001년 66,587건으로 급증, 2001~2003년에는 하락세를 보이며 2003년 37,652건으로 기록, 2003~2008년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며 2008년 73,163건으로 19개년 중 최고건수로 기록되었다. 다만, 2008년 법정 전염병 건수는 자료의 한계로 1990~2007년 법정 전염병 건수의 기울기를 통해 추정된 값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최고 건수는 2007년 70,267건 이다.

[그림 6-24]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법정 전염병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법정 전염병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법정 전염병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법정 전염병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법정 전염병이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법정 전염병의 추세값은 1998년, 2000년, 2006년 4점으로,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법정 전염병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1997년, 2002년의 추세값은 2점으로, 국민이 법정 전염병의 감소를 체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추세값이 법정 전염병이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법정 전염병의 증감폭 값은 1998년, 2000~2001년, 2004~2008년 3~4점으로 2000년대에 법정 전염병이 급속도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최근 5개년간 증감폭 값이 매우 높은 것을 보아 국민은 최근 일어나는 법정 전염병의 빠른 확산을 직접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전염병의 위기점수는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법정 전염병의 위기점수는 1998년, 2000~2001년, 2004~2008년 3.0~4.0점을 보여, 많은 국민이 법정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체감하고 전염병 확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1〉 법정 전염병의 추세값 산출

(단위: 건,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65224	-	-	-	-
1991년	54232	-0.1685	0.1685	-	-
1992년	50234	-0.0737	0.0737	-	-
1993년	48742	-0.0297	0.0297	-	-
1994년	46809	-0.0397	0.0397	-	-
1995년	32952	-0.2960	0.2960	-	-
1996년	31108	-0.0560	0.0560	0.1215	3
1997년	27299	-0.1224	0.1224	0.0990	2
1998년	35548	0.3022	0.3022	0.1088	4
1999년	31936	-0.1016	0.1016	0.1633	3
2000년	64681	1.0253	1.0253	0.1756	4
2001년	66587	0.0295	0.0295	0.3215	3
2002년	38875	-0.4162	0.4162	0.3162	2
2003년	37652	-0.0315	0.0315	0.3750	3
2004년	41137	0.0926	0.0926	0.3208	3
2005년	49446	0.2020	0.2020	0.3190	3
2006년	59607	0.2055	0.2055	0.1543	4
2007년	70267	0.1788	0.1788	0.1895	3
2008년	73163	0.0412	0.0412	0.1421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법정 전염병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282	-0.0282	-0.0039	-0.0039	0.0205	0.0205	0.0448	0.0448
1997년	-0.0214	-0.0214	-0.0016	-0.0016	0.0182	0.0182	0.0380	0.0380
1998년	-0.0243	-0.0243	-0.0026	-0.0026	0.0192	0.0192	0.0409	0.0409
1999년	-0.0044	-0.0044	0.0041	0.0041	0.0125	0.0125	0.0210	0.0210
2000년	-0.0081	-0.0081	0.0028	0.0028	0.0138	0.0138	0.0247	0.0247
2001년	-0.0545	-0.0545	-0.0126	-0.0126	0.0292	0.0292	0.0711	0.0711
2002년	-0.0597	-0.0597	-0.0144	-0.0144	0.0310	0.0310	0.0763	0.0763
2003년	-0.0421	-0.0421	-0.0085	-0.0085	0.0251	0.0251	0.0587	0.0587
2004년	-0.0220	-0.0220	-0.0018	-0.0018	0.0184	0.0184	0.0386	0.0386
2005년	-0.0337	-0.0337	-0.0057	-0.0057	0.0223	0.0223	0.0503	0.0503
2006년	0.0009	0.0009	0.0058	0.0058	0.0108	0.0108	0.0157	0.0157
2007년	0.0052	0.0052	0.0073	0.0073	0.0093	0.0093	0.0114	0.0114
2008년	-0.0305	-0.0305	-0.0046	-0.0046	0.0212	0.0212	0.0471	0.0471

〈표 6-72〉 법정 전염병의 증감폭 값

(단위: 건,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65224	-		-	-
1991년	54232	-0.1685		-	-
1992년	50234	-0.0737		-	-
1993년	48742	-0.0297		-	-
1994년	46809	-0.0397		-	-
1995년	32952	-0.2960		-	-
1996년	31108	-0.0560		0.0122	0
1997년	27299	-0.1224		0.0099	0
1998년	35548	0.3022		0.0109	4
1999년	31936	-0.1016	0.0083	0.0042	0
2000년	64681	1.0253		0.0055	4
2001년	66587	0.0295		0.0209	3
2002년	38875	-0.4162		0.0227	0
2003년	37652	-0.0315		0.0168	1
2004년	41137	0.0926		0.0101	4
2005년	49446	0.2020		0.0140	4
2006년	59607	0.2055		0.0025	4
2007년	70267	0.1788		0.0010	4
2008년	73163	0.0412		0.0129	3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73〉 법정 전염병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3	0	1.5
1997년	2	0	1.0
1998년	4	4	4.0
1999년	3	0	1.5
2000년	4	4	4.0
2001년	3	3	3.0
2002년	2	0	1.0
2003년	3	1	2.0
2004년	3	4	3.5
2005년	3	4	3.5
2006년	4	4	4.0
2007년	3	4	3.5
2008년	3	3	3.0

6. 지표명: 교통사고 사망률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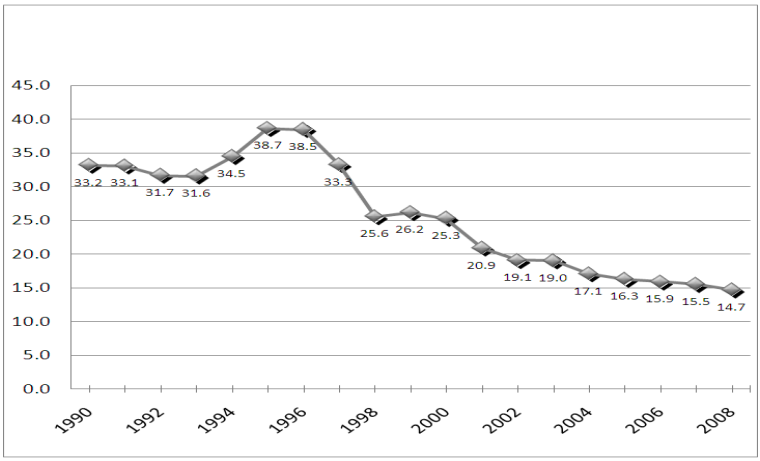
교통사고 사망률은 국제질병사인분류체계(WHO)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인구 10만 명당 운수사고 사망자수를 의미한다.

$$\text{교통사고사망률} = \frac{\text{운수사고로 인한 사망자수}}{\text{주민등록연앙인구}} \times 100000$$

나. 통계

교통사고 사망률은 1996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즉, 1990년 33.2%에서 1996년 38.5%로 증가하였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 14.7%로 나타났다.

[그림 6-25] 교통사고 사망률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교통사고 사망률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한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교통사고 사망률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 사망률이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 사망률이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교통사고 사망률의 추세값을 산출한 결과, 1996~2008년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증가한 연도는 없었다. 오히려 1997~1998년, 2001년, 2004년, 2008년에 국민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률의 감소가 이루어져 추세값으로 2점이 부여되었다.

추세값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 ±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교통사고 사망률의 증감폭 값은 1996년, 1999년, 2003년, 2006~2007년 3~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0~2008년 중 교통사고 사망률의 감소가 완만하게 이루어진 연도이기 때문이다. 증감폭 값은 1990~2008년의 전년

도 대비 변화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도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감소했더라도 타 연도와 비교했을 때 완만한 감소가 일어난 1996년, 1999년, 2003년, 2006~2007년의 증감폭 값은 높은 수치를 가지게 된다.

교통사고 사망률의 위기수준은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1996년, 1999년, 2003년, 2006~2007년의 위기점수는 3.0~4.0점으로 높은 위기값을 가졌다. 이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변화추세를 의미하는 추세값의 경우 그다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변화정도를 나타내는 증감폭 값이 1996년, 1999년, 2003년, 2006~2007년에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즉, 타 연도와 비교했을 때 교통사고 사망률의 완만한 감소가 이루어진 5개년의 경우, 국민이 기대한 만큼 교통사고 사망률의 감소가 일어나지 않아 타 연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교통사고 사망률로 인한 위기가 체감된다.

〈표 6-74〉 교통사고 사망률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33.2	-	-	-	-
1991년	33.1	-.0030	.0030	-	-
1992년	31.7	-.0423	.0423	-	-
1993년	31.6	-.0032	.0032	-	-
1994년	34.5	.0918	.0918	-	-
1995년	38.7	.1217	.1217	-	-
1996년	38.5	-.0052	.0052	.0524	3
1997년	33.3	-.1351	.1351	.0528	2
1998년	25.6	-.2312	.2312	.0714	2
1999년	26.2	.0234	.0234	.1170	3
2000년	25.3	-.0344	.0344	.1033	3
2001년	20.9	-.1739	.1739	.0859	2
2002년	19.1	-.0861	.0861	.1196	3
2003년	19.0	-.0052	.0052	.1098	3
2004년	17.1	-.1000	.1000	.0646	2
2005년	16.3	-.0468	.0468	.0799	3
2006년	15.9	-.0245	.0245	.0824	3
2007년	15.5	-.0252	.0252	.0525	3
2008년	14.7	-.0516	.0516	.0403	2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교통사고 사망률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487	-0.0487	-0.0421	-0.0421	-0.0355	-0.0355	-0.0289	-0.0289
1997년	-0.0486	-0.0486	-0.0421	-0.0421	-0.0356	-0.0356	-0.0291	-0.0291
1998년	-0.0430	-0.0430	-0.0402	-0.0402	-0.0374	-0.0374	-0.0346	-0.0346
1999년	-0.0483	-0.0483	-0.0420	-0.0420	-0.0357	-0.0357	-0.0293	-0.0293
2000년	-0.0524	-0.0524	-0.0434	-0.0434	-0.0343	-0.0343	-0.0252	-0.0252
2001년	-0.0618	-0.0618	-0.0465	-0.0465	-0.0312	-0.0312	-0.0159	-0.0159
2002년	-0.0719	-0.0719	-0.0498	-0.0498	-0.0278	-0.0278	-0.0058	-0.0058
2003년	-0.0690	-0.0690	-0.0489	-0.0489	-0.0288	-0.0288	-0.0087	-0.0087
2004년	-0.0554	-0.0554	-0.0443	-0.0443	-0.0333	-0.0333	-0.0223	-0.0223
2005년	-0.0628	-0.0628	-0.0468	-0.0468	-0.0308	-0.0308	-0.0148	-0.0148
2006년	-0.0635	-0.0635	-0.0471	-0.0471	-0.0306	-0.0306	-0.0141	-0.0141
2007년	-0.0546	-0.0546	-0.0441	-0.0441	-0.0336	-0.0336	-0.0231	-0.0231
2008년	-0.0509	-0.0509	-0.0429	-0.0429	-0.0348	-0.0348	-0.0267	-0.0267

〈표 6-75〉 교통사고 사망률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33.2	-		-	-
1991년	33.1	-.0030		-	-
1992년	31.7	-.0423		-	-
1993년	31.6	-.0032		-	-
1994년	34.5	.0918		-	-
1995년	38.7	.1217		-	-
1996년	38.5	-.0052		.0033	4
1997년	33.3	-.1351		.0033	0
1998년	25.6	-.2312		.0014	0
1999년	26.2	.0234	-.0388	.0032	4
2000년	25.3	-.0344		.0045	2
2001년	20.9	-.1739		.0076	0
2002년	19.1	-.0861		.0110	0
2003년	19.0	-.0052		.0100	4
2004년	17.1	-.1000		.0055	0
2005년	16.3	-.0468		.0080	1
2006년	15.9	-.0245		.0082	3
2007년	15.5	-.0252		.0053	3
2008년	14.7	-.0516		.0040	0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76〉 교통사고 사망률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3	4	3.5
1997년	2	0	1.0
1998년	2	0	1.0
1999년	3	4	3.5
2000년	3	2	2.5
2001년	2	0	1.0
2002년	3	0	1.5
2003년	3	4	3.5
2004년	2	0	1.0
2005년	3	1	2.0
2006년	3	3	3.0
2007년	3	3	3.0
2008년	2	0	1.0

7. 지표명: 강력범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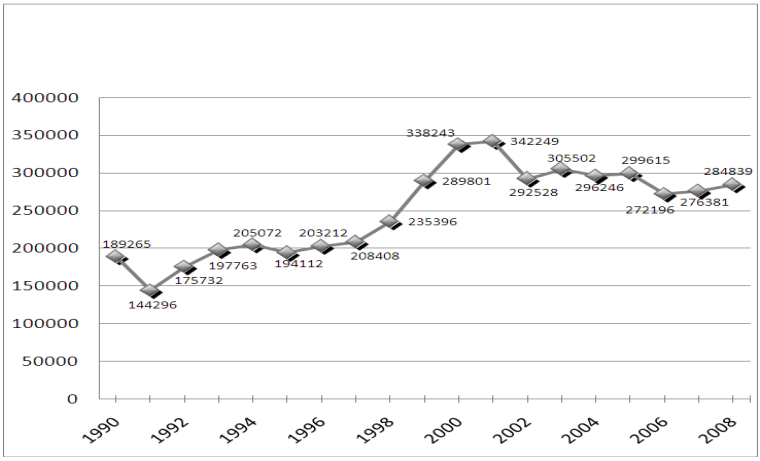
가. 개요

강력범죄는 살인, 강도, 강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유인, 체포, 감금을 말하며, 강력범죄의 발생건수는 대검찰청의 각년도 범죄분석통계를 통해 산출되었다.

나. 통계

강력범죄는 1990~2001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01년을 기점으로 상승세가 멈추고 2008년까지 270,000~300,000건을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990년 189,265건에서 1991년에는 144,296건으로 하락하였다가 1992년 175,732건에서 2001년에 342,249건으로 상승하였다. 이후 2002~2008년에는 270,000~300,000건 범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2008년 284,839건은 1990년보다 1.5배 증가한 수치임을 보아, 1990년대와 비교했을 때 강력범죄 건수가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26] 강력범죄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강력범죄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강력범죄가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강력범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강력범죄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강력범죄가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강력범죄의 추세값은 1998~2000년 4점으로, 이 시기에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강력범죄 건수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2006년의 추세값은 2점으로, 이 시기는 강력범죄 건수가 감소하였다. 특히 2002년은 1997~2000년 강력범죄 건수가 급증하던 추세에 있다가 사회의 안정화로

인해 반동효과로써 다소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추세값이 강력범죄가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강력범죄의 증감폭 값은 1996년, 1998~2000년, 2003년 3~4점으로, 국민이 체감하기에 강력범죄가 매우 급증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세값과 거의 비슷한 추세인데, 19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에 강력범죄가 매우 큰 폭으로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강력범죄의 위기수준은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값으로 측정되었다. 위기점수 산출결과, 1996년, 1998~2000년, 2003년의 위기점수는 3.0~4.0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8년은 IMF 경제위기, 2003년은 신용카드 유동성 대란이 일어났던 시기로, 국가의 경제적 위기와 강력범죄 증가가 높은 연관성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2004~2008년의 위기점수는 비교적 낮아 최근 5년간 강력범죄로 인한 국민의 위기체감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77〉 강력범죄 발생건수의 추세값 산출

(단위: 건,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189,265	-	-	-	-
1991년	144,296	-.2376	.2376	-	-
1992년	175,732	.2179	.2179	-	-
1993년	197,763	.1254	.1254	-	-
1994년	205,072	.0370	.0370	-	-
1995년	194,112	-.0534	.0534	-	-
1996년	203,212	.0469	.0469	.1342	3
1997년	208,408	.0256	.0256	.0961	3
1998년	235,396	.1295	.1295	.0576	4
1999년	289,801	.2311	.2311	.0585	4
2000년	338,243	.1672	.1672	.0973	4
2001년	342,249	.0118	.0118	.1200	3
2002년	292,528	-.1453	.1453	.1130	2
2003년	305,502	.0444	.0444	.1370	3
2004년	296,246	-.0303	.0303	.1199	3
2005년	299,615	.0114	.0114	.0798	3
2006년	272,196	-.0915	.0915	.0486	2
2007년	276,381	.0154	.0154	.0646	3
2008년	284,839	.0306	.0306	.0386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강력범죄 발생건수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294	0.0294	0.0329	0.0329	0.0365	0.0365	0.0401	0.0401
1997년	0.0123	0.0123	0.0273	0.0273	0.0422	0.0422	0.0571	0.0571
1998년	0.0238	0.0238	0.0311	0.0311	0.0383	0.0383	0.0456	0.0456
1999년	0.0236	0.0236	0.0310	0.0310	0.0384	0.0384	0.0459	0.0459
2000년	0.0119	0.0119	0.0271	0.0271	0.0423	0.0423	0.0575	0.0575
2001년	-0.0013	-0.0013	0.0227	0.0227	0.0467	0.0467	0.0707	0.0707
2002년	0.0008	0.0008	0.0234	0.0234	0.0460	0.0460	0.0686	0.0686
2003년	0.0111	0.0111	0.0268	0.0268	0.0426	0.0426	0.0584	0.0584
2004년	0.0162	0.0162	0.0285	0.0285	0.0409	0.0409	0.0533	0.0533
2005년	0.0319	0.0319	0.0338	0.0338	0.0357	0.0357	0.0376	0.0376
2006년	0.0282	0.0282	0.0326	0.0326	0.0369	0.0369	0.0412	0.0412
2007년	0.0220	0.0220	0.0305	0.0305	0.0389	0.0389	0.0474	0.0474
2008년	0.0317	0.0317	0.0337	0.0337	0.0357	0.0357	0.0378	0.0378

〈표 6-78〉 강력범죄 발생건수의 증감폭 값

(단위: 건,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189,265	-		-	-
1991년	144,296	-.2376		-	-
1992년	175,732	.2179		-	-
1993년	197,763	.1254		-	-
1994년	205,072	.0370		-	-
1995년	194,112	-.0534		-	-
1996년	203,212	.0469		.0018	4
1997년	208,408	.0256		.0075	1
1998년	235,396	.1295		.0036	4
1999년	289,801	.2311	.0347	.0037	4
2000년	338,243	.1672		.0076	4
2001년	342,249	.0118		.0120	1
2002년	292,528	-.1453		.0113	0
2003년	305,502	.0444		.0079	3
2004년	296,246	-.0303		.0062	0
2005년	299,615	.0114		.0010	0
2006년	272,196	-.0915		.0022	0
2007년	276,381	.0154		.0042	0
2008년	284,839	.0306		.0010	0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79〉 강력범죄 발생건수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3	4	3.5
1997년	3	1	2.0
1998년	4	4	4.0
1999년	4	4	4.0
2000년	4	4	4.0
2001년	3	1	2.0
2002년	2	0	1.0
2003년	3	3	3.0
2004년	3	0	1.5
2005년	3	0	1.5
2006년	2	0	1.0
2007년	3	0	1.5
2008년	3	0	1.5

제7절 사회갈등·문화영역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30]

1. 지표명: 노사분규 발생건수

가. 개요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단체)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의견의 불일치로 인해 노동조합측이 작업거부 등에 돌입함으로써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작업이 중단된 경우 노사분규 발생사업장의 수로 본다. 노사분규 발생원인은 임협, 단협, 임담협, 기타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 부분파업 등을 누계해서 1일 근로시간(8시간)이 되지 않거나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이른바 정치파업은 노사분규발생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노사분규건수는 단위 사업장별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파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참여할 경우 파업돌입 사업장수와 교섭단위수간에 격차가 발생하여 파업돌입 파업장수를 기준으로 분규건수를 산정하는 것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노사분규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ILO(국제노동기구) 기준 등에 부합되도록 금속노조 등 산별노조 파업에 다수의 사업장이 참여 시 종전에는 사업장수대로 측정하였으나 2006년부터는 1건으로 측정하였다. 노사분규건수가 0건에 가까울수록 노사관계가 안정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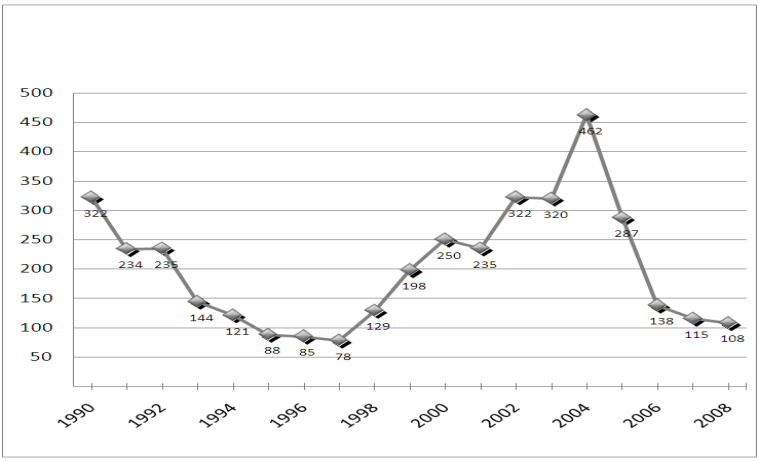
나. 통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1990년 332건에서 1998년 78건으로 9년간 지속적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1999~2004년에 급증하여 2004년에 462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1998년 IMF 경제위기와 2004년 비정규직법의 개정으로 인

30) 우리나라 갈등비용은 통계치가 6년 이상 축적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의 분석에는 포함하지 못하나, 자료축적 후 후속연구에서 가능하기를 기대한다.

해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2005~2008년 노사분규 발생은 감소추세를 보이며 2008년 발생건수는 108건으로 나타났다.

[그림 6-27] 노사분규 발생건수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각년도.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노사분규 발생건수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노사분규 발생건수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노사분규 발생건수의 추세값은 1998~1999년, 2002년, 2004년에 4점으로, 국민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증가한 연도이다. 이와 반대로 추세값으로 2점이 산출된 2005~2006년은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감소한 연도로써 국민은 노사분규의 감소로 사회적 안정을 느낄 수 있던 해였다.

추세값이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노사분규 발생건수의 증감폭 값은 1998~2000년, 2002년, 2004년에 4점으로, 추세값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즉,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노사분규 발생건수가 증가한 1998~2000년, 2002년, 2004년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매우 큰 폭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노사분규 발생건수의 위기수준은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 및 증감정도를 파악한 후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1998~2000년, 2002년, 2004년 위기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2005~2008년 노사분규 발생건수로 인한 위기점수는 안정적 수치를 보이고 있다. 1998~2000년, 2002년, 2004년은 IMF 경제위기로 인한 구조조정 및 신규채용 감소, 비정규직법 개정이라는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존재한 연도라는 점을 볼 때, 노사관련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는 노사의 갈등이 좁혀지지 않아 노사분규가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80〉 노사분규 발생건수의 추세값 산출

(단위: 건,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322	-	-	-	-
1991년	234	-.2733	.2733	-	-
1992년	235	.0043	.0043	-	-
1993년	144	-.3872	.3872	-	-
1994년	121	-.1597	.1597	-	-
1995년	88	-.2727	.2727	-	-
1996년	85	-.0341	.0341	.2194	3
1997년	78	-.0824	.0824	.1716	3
1998년	129	.6538	.6538	.1872	4
1999년	198	.5349	.5349	.2405	4
2000년	250	.2626	.2626	.3156	3
2001년	235	-.0600	.0600	.3136	3
2002년	322	.3702	.3702	.3187	4
2003년	320	-.0062	.0062	.3763	3
2004년	462	.4438	.4438	.2468	4
2005년	287	-.3788	.3788	.2286	2
2006년	138	-.5192	.5192	.2518	2
2007년	115	-.1667	.1667	.3436	3
2008년	108	-.0609	.0609	.3029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노사분규 발생건수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820	-0.0820	-0.0384	-0.0384	0.0051	0.0051	0.0487	0.0487
1997년	-0.0676	-0.0676	-0.0336	-0.0336	0.0004	0.0004	0.0343	0.0343
1998년	-0.0728	-0.0728	-0.0354	-0.0354	0.0021	0.0021	0.0395	0.0395
1999년	-0.0229	-0.0229	-0.0187	-0.0187	-0.0145	-0.0145	-0.0103	-0.0103
2000년	-0.0646	-0.0646	-0.0326	-0.0326	-0.0006	-0.0006	0.0313	0.0313
2001년	-0.0967	-0.0967	-0.0433	-0.0433	0.0101	0.0101	0.0635	0.0635
2002년	-0.0952	-0.0952	-0.0428	-0.0428	0.0095	0.0095	0.0619	0.0619
2003년	-0.1223	-0.1223	-0.0519	-0.0519	0.0186	0.0186	0.0891	0.0891
2004년	-0.0827	-0.0827	-0.0387	-0.0387	0.0054	0.0054	0.0495	0.0495
2005년	-0.0773	-0.0773	-0.0368	-0.0368	0.0036	0.0036	0.0440	0.0440
2006년	-0.0388	-0.0388	-0.0240	-0.0240	-0.0093	-0.0093	0.0055	0.0055
2007년	-0.0221	-0.0221	-0.0184	-0.0184	-0.0148	-0.0148	-0.0112	-0.0112
2008년	-0.0543	-0.0543	-0.0292	-0.0292	-0.0041	-0.0041	0.0210	0.0210

〈표 6-81〉 노사분규 발생건수의 증감폭 값

(단위: 건,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322	-		-	-
1991년	234	-.2733		-	-
1992년	235	.0043		-	-
1993년	144	-.3872		-	-
1994년	121	-.1597		-	-
1995년	88	-.2727		-	-
1996년	85	-.0341		.0218	2
1997년	78	-.0824		.0170	0
1998년	129	.6538		.0187	4
1999년	198	.5349	-.0166	.0021	4
2000년	250	.2626		.0160	4
2001년	235	-.0600		.0267	1
2002년	322	.3702		.0262	4
2003년	320	-.0062		.0352	2
2004년	462	.4438		.0220	4
2005년	287	-.3788		.0202	0
2006년	138	-.5192		.0074	0
2007년	115	-.1667		.0018	0
2008년	108	-.0609		.0125	0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82〉 노사분규 발생건수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3	2	2.5
1997년	3	0	1.5
1998년	4	4	4.0
1999년	4	4	4.0
2000년	3	4	3.5
2001년	3	1	2.0
2002년	4	4	4.0
2003년	3	2	2.5
2004년	4	4	4.0
2005년	2	0	1.0
2006년	2	0	1.0
2007년	3	0	1.5
2008년	3	0	1.5

2. 지표명: 파업 손실일수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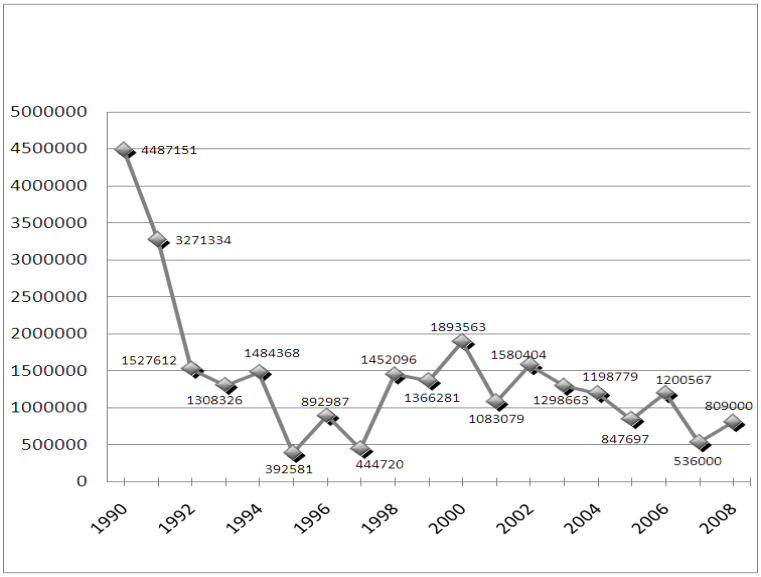
파업 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1일 근로시간(8시간) 이상 조업 중단된 노사분규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출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파업손실일수가 0일에 가까울수록 노사관계가 안정됨을 의미한다.

$$\text{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 = \frac{\text{파업시간}}{\text{1일 근로시간 (8시간)}} \times \text{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나. 통계

파업 손실일수는 1990~1997년 감소하다가, 1998~2000년 증가추세로 변하였으며 이후 2001~2008년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1990년 4,487,151일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다가 1997년 444,720일로 감소하였고, 2000년 1,893,563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감소하면서 2008년 파업 손실일수는 809,000일로 나타났다. 노사분규 발생건수와 같이 IMF 경제위기 이후 파업 손실일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28] 파업 손실일수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각년도;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파업 손실일수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파업 손실일수가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파업 손실일수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파업 손실일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파업 손실일수가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파업 손실일수의 추세값은 1996년, 1998년, 2006년, 2008년 4점으로,

이 시기에 국민은 파업 손실일수의 증가를 체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07년도에는 국민이 파업 손실일수의 감소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파업 손실일수가 감소하였다.

추세값이 파업 손실일수가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파업 손실일수의 증감폭 값은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6년, 2008년 4점으로, 1990~2008년 평균 파업 손실일수보다 이 시기의 파업 손실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감폭 값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1990~2008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도에서 파업 손실일수가 감소하였을 때 조금이라도 파업 손실일수가 증가한 해인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6년, 2008년의 증감폭 값은 높은 수치를 가지게 된다. 즉, 국민은 파업 손실일수가 감소할 것이라 기대했으나 이와 반대로 파업 손실일수가 약간 증가하였기 때문에 높은 수치의 증감폭 값을 가지게 된다.

파업 손실일수의 위기점수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6년, 2008년의 위기점수가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현 사회가 파업 손실일수로 인한 위기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개년 중 2년 동안 파업 손실일수로 인해 국민은 위기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83〉 파업 손실일수의 추세값 산출

(단위: 일,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4,487,151	-	-	-	-
1991년	3,271,334	-.2710	.2710	-	-
1992년	1,527,612	-.5330	.5330	-	-
1993년	1,308,326	-.1435	.1435	-	-
1994년	1,484,368	.1346	.1346	-	-
1995년	392,581	-.7355	.7355	-	-
1996년	892,987	1.2747	1.2747	.3635	4
1997년	444,720	-.5020	.5020	.5643	3
1998년	1,452,096	2.2652	2.2652	.5581	4
1999년	1,366,281	-.0591	.0591	.9824	3
2000년	1,893,563	.3859	.3859	.9673	3
2001년	1,083,079	-.4280	.4280	.8974	3
2002년	1,580,404	.4592	.4592	.7280	3
2003년	1,298,663	-.1783	.1783	.7195	3
2004년	1,198,779	-.0769	.0769	.3021	3
2005년	847,697	-.2929	.2929	.3057	3
2006년	1,200,567	.4163	.4163	.2870	4
2007년	536,000	-.5535	.5535	.2847	2
2008년	809,000	.5093	.5093	.3036	4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파업 손실일수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841	-0.0841	-0.0221	-0.0221	0.0398	0.0398	0.1018	0.1018
1997년	0.0087	0.0087	0.0088	0.0088	0.0089	0.0089	0.0090	0.0090
1998년	0.0072	0.0072	0.0083	0.0083	0.0094	0.0094	0.0105	0.0105
1999년	-0.1374	-0.1374	-0.0399	-0.0399	0.0576	0.0576	0.1551	0.1551
2000년	-0.1257	-0.1257	-0.0360	-0.0360	0.0537	0.0537	0.1434	0.1434
2001년	-0.1930	-0.1930	-0.0584	-0.0584	0.0761	0.0761	0.2107	0.2107
2002년	-0.0909	-0.0909	-0.0244	-0.0244	0.0421	0.0421	0.1086	0.1086
2003년	-0.1485	-0.1485	-0.0436	-0.0436	0.0613	0.0613	0.1662	0.1662
2004년	-0.0019	-0.0019	0.0053	0.0053	0.0124	0.0124	0.0196	0.0196
2005년	-0.0009	-0.0009	0.0056	0.0056	0.0121	0.0121	0.0186	0.0186
2006년	-0.0222	-0.0222	-0.0015	-0.0015	0.0192	0.0192	0.0399	0.0399
2007년	-0.0108	-0.0108	0.0023	0.0023	0.0154	0.0154	0.0285	0.0285
2008년	-0.0323	-0.0323	-0.0049	-0.0049	0.0226	0.0226	0.0500	0.0500

〈표 6-84〉 파업 손실일수의 증감폭 값

(단위: 일,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4487151	-		-	-
1991년	3271334	-.2710		-	-
1992년	1527612	-.5330		-	-
1993년	1308326	-.1435		-	-
1994년	1484368	.1346		-	-
1995년	392581	-.7355		-	-
1996년	892987	1.2747		.0310	4
1997년	444720	-.5020		.0001	0
1998년	1452096	2.2652		.0006	4
1999년	1366281	-.0591	.0089	.0487	1
2000년	1893563	.3859		.0449	4
2001년	1083079	-.4280		.0673	0
2002년	1580404	.4592		.0332	4
2003년	1298663	-.1783		.0525	0
2004년	1198779	-.0769		.0036	0
2005년	847697	-.2929		.0032	0
2006년	1200567	.4163		.0103	4
2007년	536000	-.5535		.0065	0
2008년	809000	.5093		.0137	4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85〉 파업 손실일수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4	4	4.0
1997년	3	0	1.5
1998년	4	4	4.0
1999년	3	1	2.0
2000년	3	4	3.5
2001년	3	0	1.5
2002년	3	4	3.5
2003년	3	0	1.5
2004년	3	0	1.5
2005년	3	0	1.5
2006년	4	4	4.0
2007년	2	0	1.0
2008년	4	4	4.0

제8절 불평등영역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1. 지표명: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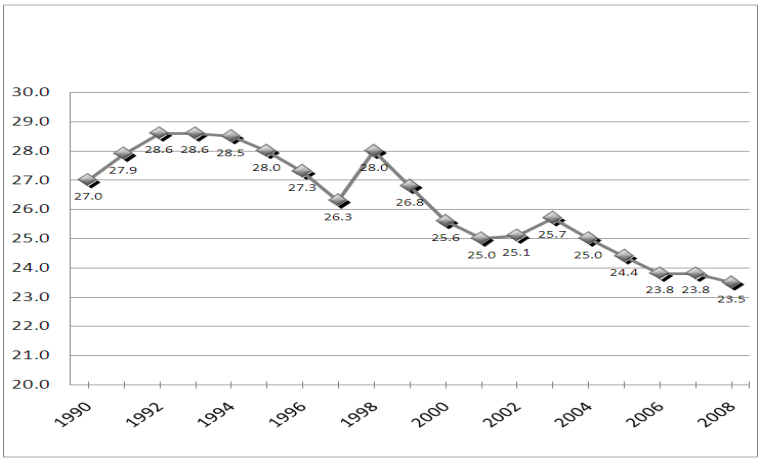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에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뺀 값이다. 경제활동인구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개념이며,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취업자는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를 의미한다. 실업자는 조사대상 주간 중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클수록 남녀불평등이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나. 통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1990~1993년 증가하다가 1994~1997년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이후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8년 격차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이후 다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신용카드 유동성 대란이 발생한 2003년 다소 증가한 후 2008년까지 감소추세를 계속하였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0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7.0이었으며 1993년에 28.6을 보였다. 이후 1997년 26.3%까지 감소하였고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8년 28.0%로 증가하였지만 다시 감소하여 2003년 25.1%로 나타났다. 신용카드 유동성 대란이 발생한 2003년 25.7%로 증가하였지만 다시

감소하여 2008년 23.5%로 나타났다. 1990년도와 비교했을 때 2008년 현재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감소된 것은 남녀평등의식 강화, 여성의 고학력,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29]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연보』,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급격히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의 추세값은 1998년 4점으로,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이 큰 격차를 보였는데 이는 IMF 경제위기와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 1996~1997년, 2000년, 2006년은 낮은 추세값을 보이면서 이 시기에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의 격차가 국민이 체감할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값이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의 증감폭 값은 1998년, 2002~2003년, 2007년 4점으로, 1990~2008년 평균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 변화율과 비교했을 때 이 시기에는 격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98년, 2003년은 각각 IMF 경제위기, 신용카드 유동성 대란이 일어난 연도로써 사회경제 위기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의 위기점수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추세값 및 증감폭 값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1998년, 2002~2003년, 2007년에 높은 수준의 위기점수가 나타났다. 이는 국가의 경제위기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를 억제함으로써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를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표 6-86〉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27.0	-	-	-	-
1991년	27.9	.0333	.0333	-	-
1992년	28.6	.0251	.0251	-	-
1993년	28.6	.0000	.0000	-	-
1994년	28.5	-.0035	.0035	-	-
1995년	28.0	-.0175	.0175	-	-
1996년	27.3	-.0250	.0250	.0159	2
1997년	26.3	-.0366	.0366	.0142	2
1998년	28.0	.0646	.0646	.0165	4
1999년	26.8	-.0429	.0429	.0295	2
2000년	25.6	-.0448	.0448	.0373	2
2001년	25.0	-.0234	.0234	.0428	3
2002년	25.1	.0040	.0040	.0425	3
2003년	25.7	.0239	.0239	.0359	3
2004년	25.0	-.0272	.0272	.0278	3
2005년	24.4	-.0240	.0240	.0247	3
2006년	23.8	-.0246	.0246	.0205	2
2007년	23.8	.0000	.0000	.0207	3
2008년	23.5	-.0126	.0126	.0199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117	-0.0117	-0.0102	-0.0102	-0.0087	-0.0087	-0.0072	-0.0072
1997년	-0.0107	-0.0107	-0.0099	-0.0099	-0.0090	-0.0090	-0.0082	-0.0082
1998년	-0.0144	-0.0144	-0.0111	-0.0111	-0.0078	-0.0078	-0.0045	-0.0045
1999년	-0.0105	-0.0105	-0.0098	-0.0098	-0.0091	-0.0091	-0.0084	-0.0084
2000년	-0.0129	-0.0129	-0.0106	-0.0106	-0.0083	-0.0083	-0.0060	-0.0060
2001년	-0.0145	-0.0145	-0.0111	-0.0111	-0.0077	-0.0077	-0.0044	-0.0044
2002년	-0.0144	-0.0144	-0.0111	-0.0111	-0.0078	-0.0078	-0.0045	-0.0045
2003년	-0.0120	-0.0120	-0.0103	-0.0103	-0.0086	-0.0086	-0.0069	-0.0069
2004년	-0.0144	-0.0144	-0.0111	-0.0111	-0.0078	-0.0078	-0.0045	-0.0045
2005년	-0.0135	-0.0135	-0.0108	-0.0108	-0.0081	-0.0081	-0.0054	-0.0054
2006년	-0.0122	-0.0122	-0.0104	-0.0104	-0.0085	-0.0085	-0.0066	-0.0066
2007년	-0.0123	-0.0123	-0.0104	-0.0104	-0.0085	-0.0085	-0.0066	-0.0066
2008년	-0.0126	-0.0126	-0.0105	-0.0105	-0.0084	-0.0084	-0.0063	-0.0063

〈표 6-87〉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27.0	-		-	-
1991년	27.9	.0333		-	-
1992년	28.6	.0251		-	-
1993년	28.6	.0000		-	-
1994년	28.5	-.0035		-	-
1995년	28.0	-.0175		-	-
1996년	27.3	-.0250		.0007	0
1997년	26.3	-.0366		.0004	0
1998년	28.0	.0646		.0017	4
1999년	26.8	-.0429	-.0094	.0004	0
2000년	25.6	-.0448		.0011	0
2001년	25.0	-.0234		.0017	0
2002년	25.1	.0040		.0017	4
2003년	25.7	.0239		.0008	4
2004년	25.0	-.0272		.0017	0
2005년	24.4	-.0240		.0014	0
2006년	23.8	-.0246		.0009	0
2007년	23.8	.0000		.0010	4
2008년	23.5	-.0126		.0010	1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88〉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2	0	1.0
1997년	2	0	1.0
1998년	4	4	4.0
1999년	2	0	1.0
2000년	2	0	1.0
2001년	3	0	1.5
2002년	3	4	3.5
2003년	3	4	3.5
2004년	3	0	1.5
2005년	3	0	1.5
2006년	2	0	1.0
2007년	3	4	3.5
2008년	3	1	2.0

2. 지표명: 남녀 임금격차

가. 개요

남녀 임금격차는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비율로써 남성 근로자의 임금을 100으로 볼 때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비율은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UNDP 여성권한척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상용근로자[31] 1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정규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급여액을 분석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결과이다.

$$\text{월급여액} = \text{정액급여} + \text{초과급여(특별급여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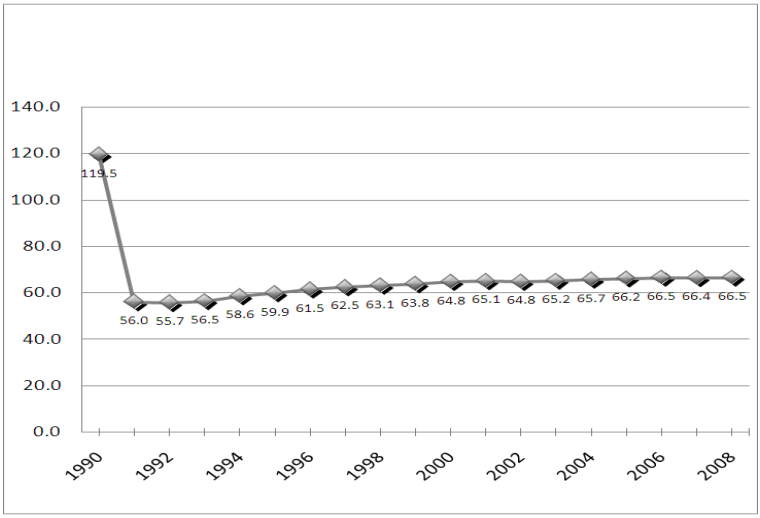
$$\text{남성대비여성임금비율} = \frac{\text{여성월급액}}{\text{남성월급액}} \times 100$$

나. 통계

남녀 임금격차는 1990년 119.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나, 1991년 이후 급속히 감소하여 56.0%이었다. 그러나 1992년 이후부터 완만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 남녀 임금격차는 1991년보다 10.5 높은 값인 66.5%인 것으로 나타났다.

31) 상용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또는 특별한 고용계약이 없어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더라도 계속 정규직원으로 일하면서 상여금, 퇴직금 등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그림 6-30] 남녀 임금격차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남녀 임금격차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남녀 임금격차가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남녀 임금격차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남녀 임금격차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남녀 임금격차가 급격히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남녀 임금격차의 추세값은 2005년을 제외한 1996~2008년 동안 3점으로 산출되었다. 즉, 남녀 임금격차가 국민의 위기체감도에 영향을 줄 만큼

증감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 다만 2005년 추세값은 4점으로 남녀 임금격차가 국민이 체감할 만큼 심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추세값이 남녀 임금격차가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남녀 임금격차의 증감폭 값은 1996~1997년, 1999~2000년 3~4점으로 산출되었다. 이는 1990~2008년 중 남녀 임금격차의 증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이루어진 연도이기 때문이다. 증감폭 값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1990~2008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대부분 연도에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증가했더라도, 타 연도와 비교했을 때 큰 폭의 증가가 일어난 일부 연도의 증감폭 값만 높은 수치를 가지게 된다. 이에 비교적 큰 폭의 증가가 일어난 1996~1997년, 1999~2000년의 증감폭 값은 3~4점으로 측정된 것이다.

남녀 임금격차의 위기점수는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치다. 남녀 임금격차의 위기점수는 1996~1997년, 1999~2000년에 3.0~3.5점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국민은 남녀 임금격차로 인한 사회적 위기를 어느 정도 체감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6-89〉 남녀 임금격차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119.5	-	-	-	-
1991년	56.0	-.5309	.5309	-	-
1992년	55.7	-.0057	.0057	-	-
1993년	56.5	.0143	.0143	-	-
1994년	58.6	.0376	.0376	-	-
1995년	59.9	.0207	.0207	-	-
1996년	61.5	.0272	.0272	0.1218	3
1997년	62.5	.0170	.0170	0.0211	3
1998년	63.1	.0091	.0091	0.0234	3
1999년	63.8	.0111	.0111	0.0223	3
2000년	64.8	.0150	.0150	0.0170	3
2001년	65.1	.0057	.0057	0.0159	3
2002년	64.8	-.0045	.0045	0.0116	3
2003년	65.2	.0062	.0062	0.0091	3
2004년	65.7	.0071	.0071	0.0085	3
2005년	66.2	.0077	.0077	0.0077	4
2006년	66.5	.0052	.0052	0.0062	3
2007년	66.4	-.0016	.0016	0.0061	3
2008년	66.5	.0013	.0013	0.0056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남녀 임금격차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193	-0.0193	-0.0008	-0.0008	0.0178	0.0178	0.0363	0.0363
1997년	0.0029	0.0029	0.0066	0.0066	0.0104	0.0104	0.0141	0.0141
1998년	0.0015	0.0015	0.0062	0.0062	0.0108	0.0108	0.0155	0.0155
1999년	0.0018	0.0018	0.0063	0.0063	0.0107	0.0107	0.0152	0.0152
2000년	0.0034	0.0034	0.0068	0.0068	0.0102	0.0102	0.0136	0.0136
2001년	0.0037	0.0037	0.0069	0.0069	0.0101	0.0101	0.0133	0.0133
2002년	0.0050	0.0050	0.0073	0.0073	0.0097	0.0097	0.0120	0.0120
2003년	0.0063	0.0063	0.0078	0.0078	0.0092	0.0092	0.0107	0.0107
2004년	0.0065	0.0065	0.0078	0.0078	0.0092	0.0092	0.0105	0.0105
2005년	0.0067	0.0067	0.0079	0.0079	0.0091	0.0091	0.0103	0.0103
2006년	0.0072	0.0072	0.0081	0.0081	0.0089	0.0089	0.0098	0.0098
2007년	0.0072	0.0072	0.0081	0.0081	0.0089	0.0089	0.0098	0.0098
2008년	0.0070	0.0070	0.0080	0.0080	0.0090	0.0090	0.0100	0.0100

〈표 6-90〉 남녀 임금격차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119.5	-		-	-
1991년	56.0	-.5309		-	-
1992년	55.7	-.0057		-	-
1993년	56.5	.0143		-	-
1994년	58.6	.0376		-	-
1995년	59.9	.0207		-	-
1996년	61.5	.0272		0.0093	3
1997년	62.5	.0170		0.0019	4
1998년	63.1	.0091		0.0023	2
1999년	63.8	.0111	.0085	0.0022	3
2000년	64.8	.0150		0.0017	4
2001년	65.1	.0057		0.0016	1
2002년	64.8	-.0045		0.0012	0
2003년	65.2	.0062		0.0007	0
2004년	65.7	.0071		0.0007	1
2005년	66.2	.0077		0.0006	1
2006년	66.5	.0052		0.0004	0
2007년	66.4	-.0016		0.0004	0
2008년	66.5	.0013		0.0005	0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91〉 남녀 임금격차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3	3	3.0
1997년	3	4	3.5
1998년	3	2	2.5
1999년	3	3	3.0
2000년	3	4	3.5
2001년	3	1	2.0
2002년	3	0	1.5
2003년	3	0	1.5
2004년	3	1	2.0
2005년	4	1	2.5
2006년	3	0	1.5
2007년	3	0	1.5
2008년	3	0	1.5

3. 지표명: 소득불평등(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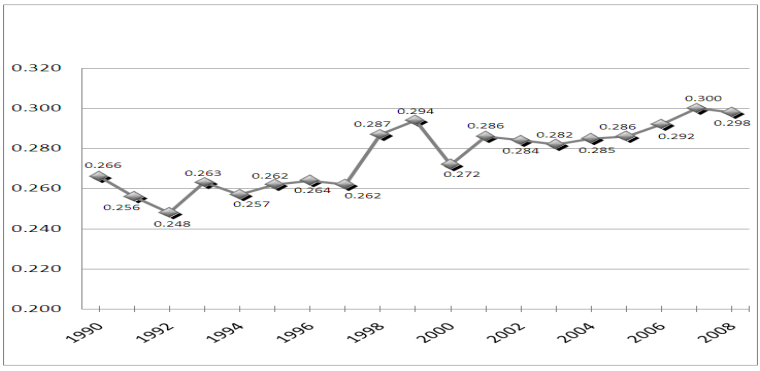
가. 개요

본 연구에서 소득불평등은 지니계수로 측정하였다. 지니계수는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소득불평등 측정지표로, 0(완전평등 상태)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 상태)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지니계수는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소득에서 개인의 세금과 세외 부담, 즉 이자지급 등 비소비지출을 공제하고 여기에 이전소득(사회보장금, 연금 등)을 더한 값이다.

나. 통계

지니계수는 1990년 0.266에서 1999년에는 0.294로 증가하였으나, 2000년에는 0.272로 감소하였다. 2001년 이후 지니계수는 점차 증가하여 2008년 0.298의 지니계수를 나타냈다. 이는 0에 가까운 수치로 비교적으로 평등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IMF 직후 급증하였고 2000년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6-31] 소득불평등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통계청, KOSIS,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소득 불평등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소득 불평등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소득 불평등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소득 불평등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소득 불평등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소득불평등의 추세값은 1998년, 2001년, 2006~2007년 4점으로,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었던 시기이다. 이와 다르게 2000년은 국민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소득불평등이 완화된 연도이다.

추세값이 소득 불평등이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소득불평등의 증감폭 값은 1996년, 1998~1999년, 2001년, 2004년, 2006~2007년 4점으로, 이 시기에 소득불평등이 크게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불평등의 위기점수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소득불평등의 위기점수는 1996년, 1998~1999년, 2004년, 2006~2007년 3.5~4.0점으로 측정되었다. 특히 최근 5개년 중 3년 동안 위기점수가 높아 최근 소득불평등으로 인해 국민이 느끼는 사회위기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났다.

〈표 6-92〉 소득불평등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0.2660	-	-	-	-
1991년	0.2560	-.0376	.0376	-	-
1992년	0.2480	-.0313	.0313	-	-
1993년	0.2630	.0605	.0605	-	-
1994년	0.2570	-.0228	.0228	-	-
1995년	0.2620	.0195	.0195	-	-
1996년	0.2640	.0076	.0076	.0343	3
1997년	0.2620	-.0076	.0076	.0283	3
1998년	0.2870	.0954	.0954	.0236	4
1999년	0.2940	.0244	.0244	.0306	3
2000년	0.2720	-.0748	.0748	.0309	2
2001년	0.2860	.0515	.0515	.0420	4
2002년	0.2840	-.0070	.0070	.0507	3
2003년	0.2820	-.0070	.0070	.0506	3
2004년	0.2850	.0106	.0106	.0329	3
2005년	0.2860	.0035	.0035	.0302	3
2006년	0.2920	.0210	.0210	.0159	4
2007년	0.3000	.0274	.0274	.0098	4
2008년	0.2980	-.0067	.0067	.0139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소득불평등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059	0.0059	0.0064	0.0064	0.0069	0.0069	0.0073	0.0073
1997년	0.0046	0.0046	0.0060	0.0060	0.0073	0.0073	0.0086	0.0086
1998년	0.0032	0.0032	0.0055	0.0055	0.0078	0.0078	0.0101	0.0101
1999년	0.0011	0.0011	0.0048	0.0048	0.0085	0.0085	0.0122	0.0122
2000년	0.0039	0.0002	0.0057	0.0038	0.0094	0.0075	0.0131	0.0093
2001년	0.0039	0.0039	0.0057	0.0057	0.0075	0.0075	0.0093	0.0093
2002년	0.0013	0.0013	0.0048	0.0048	0.0084	0.0084	0.0120	0.0120
2003년	0.0013	0.0013	0.0048	0.0048	0.0084	0.0084	0.0120	0.0120
2004년	0.0058	0.0058	0.0064	0.0064	0.0069	0.0069	0.0074	0.0074
2005년	0.0050	0.0050	0.0061	0.0061	0.0072	0.0072	0.0082	0.0082
2006년	0.0035	0.0035	0.0056	0.0056	0.0077	0.0077	0.0097	0.0097
2007년	0.0054	0.0054	0.0062	0.0062	0.0070	0.0070	0.0079	0.0079
2008년	0.0033	0.0033	0.0055	0.0055	0.0077	0.0077	0.0100	0.0100

〈표 6-93〉 소득불평등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266	-		-	-
1991년	.256	-.0376		-	-
1992년	.248	-.0313		-	-
1993년	.263	.0605		-	-
1994년	.257	-.0228		-	-
1995년	.262	.0195		-	-
1996년	.264	.0076		.0002	4
1997년	.262	-.0076		.0007	0
1998년	.287	.0954		.0011	4
1999년	.294	.0244	.0066	.0018	4
2000년	.272	-.0748		.0028	0
2001년	.286	.0515		.0009	4
2002년	.284	-.0070		.0018	0
2003년	.282	-.0070		.0018	0
2004년	.285	.0106		.0003	4
2005년	.286	.0035		.0005	0
2006년	.292	.0210		.0010	4
2007년	.300	.0274		.0004	4
2008년	.298	-.0067		.0011	0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94〉 소득불평등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3	4	3.5
1997년	3	0	1.5
1998년	4	4	4.0
1999년	3	4	3.5
2000년	2	0	1.0
2001년	4	4	4.0
2002년	3	0	1.5
2003년	3	0	1.5
2004년	3	4	3.5
2005년	3	0	1.5
2006년	4	4	4.0
2007년	4	4	4.0
2008년	3	0	1.5

4. 지표명: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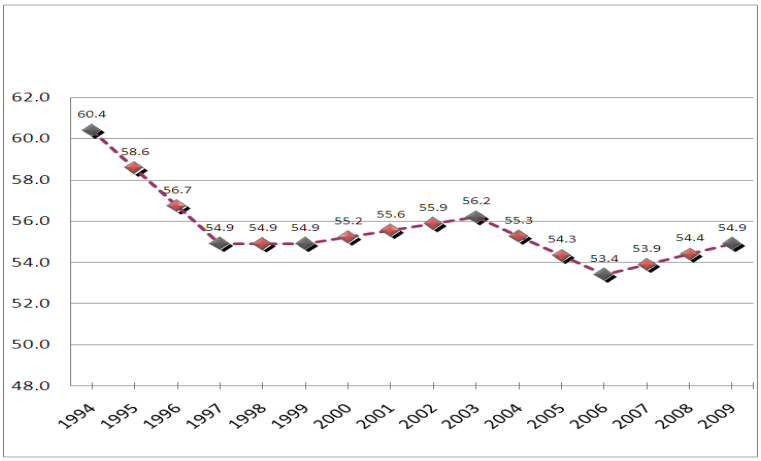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는 주관적 중산층 인식도로 측정하였다. 주관적 중산층 인식도란 가구주를 대상으로 '귀하는 우리사회에서 소득, 직업, 재산, 교육수준 등을 감안했을 때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여 중산층이라고 답한 비율을 말하며, 이는 통계청에서 전국 약 17,000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각년도 사회통계조사보고서를 통해 산출하였다. 단, 일부 연도는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후연도 기울기를 통해 추정하였다.

나. 통계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는 1994~1997년 감소하다가 1998~2003년 증가하였다. 이후 2004~2006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 후 2007~2009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4년 60.4%로 가장 높

은 비율을 보인 후, 1997년에 54.9%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03년에는 56.2%로 다소 증가하다가, 2006년 53.4%로 감소하여 최저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값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2009년에는 54.9%를 나타냈다.

[그림 6-32]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변화추이: 1994~2009년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2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4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가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가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가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중산층 귀속의식의 추세값은 1996~1997년, 2004~2006년 4점으로, 이 시기에 중산층 귀속의식이 국민이 체감가능한 정도로 감소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2003년은 2점으로 국민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중산층 귀속의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값이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가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5~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0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4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중산층 귀속의식의 증감폭 값은 1996~1997년, 2004~2006년 4점으로, 이 시기에 중산층 귀속의식이 크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 및 증감정도로 파악한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치를 국민이 체감하는 중산층 귀속의식의 위기점수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1996~1997년과 2004~2006년 중산층 귀속의식의 위기수준이 매우 높았으며 그 외의 연도에는 낮은 위기수준을 보였다.

〈표 6-95〉 중산층 귀속의식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4년	60.4	-	-	-	-
1995년	58.6	-.0304	.0304	0.0304	-
1996년	56.7	-.0313	.0313	0.0308	4
1997년	54.9	-.0323	.0323	0.0313	4
1998년	54.9	.0000	.0000	0.0235	3
1999년	54.9	.0000	.0000	0.0188	3
2000년	55.2	.0059	.0059	0.0139	3
2001년	55.6	.0059	.0059	0.0088	3
2002년	55.9	.0059	.0059	0.0035	3
2003년	56.2	.0058	.0058	0.0047	2
2004년	55.3	-.0166	.0166	0.0080	4
2005년	54.3	-.0169	.0169	0.0102	4
2006년	53.4	-.0172	.0172	0.0125	4
2007년	53.9	.0094	.0094	0.0132	3
2008년	54.4	.0093	.0093	0.0132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단, 자료의 한계로 1996년은 이전 1개년, 1997년은 2개년, 1998년은 3개년, 1999년은 4개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을 기준값으로 정함.

연도	중산층 귀속의식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1996년	-0.0010	-0.0010	-0.0047	-0.0047	-0.0085	-0.0085	-0.0122	-0.0122
1997년	-0.0031	-0.0031	-0.0054	-0.0054	-0.0078	-0.0078	-0.0101	-0.0101
1998년	-0.0054	-0.0054	-0.0062	-0.0062	-0.0070	-0.0070	-0.0078	-0.0078
1999년	-0.0055	-0.0055	-0.0062	-0.0062	-0.0070	-0.0070	-0.0077	-0.0077
2000년	-0.0052	-0.0052	-0.0061	-0.0061	-0.0071	-0.0071	-0.0080	-0.0080
2001년	-0.0062	-0.0062	-0.0065	-0.0065	-0.0067	-0.0067	-0.0070	-0.0070
2002년	-0.0056	-0.0056	-0.0063	-0.0063	-0.0069	-0.0069	-0.0076	-0.0076
2003년	-0.0043	-0.0043	-0.0058	-0.0058	-0.0074	-0.0074	-0.0089	-0.0089
2004년	-0.0045	-0.0045	-0.0059	-0.0059	-0.0073	-0.0073	-0.0087	-0.0087
2005년	0.0028	0.0026	-0.0035	-0.0036	-0.0096	-0.0097	-0.0158	-0.0158
2006년	0.0026	0.0026	-0.0035	-0.0035	-0.0097	-0.0097	-0.0158	-0.0158
2007년	0.0028	0.0028	-0.0035	-0.0035	-0.0097	-0.0097	-0.0160	-0.0160
2008년	0.0004	0.0004	-0.0043	-0.0043	-0.0089	-0.0089	-0.0136	-0.0136

〈표 6-96〉 중산층 귀속의식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4년	60.4	-		-	-
1995년	58.6	-.0304		0.0019	-
1996년	56.7	-.0313		0.0012	4
1997년	54.9	-.0323		0.0004	4
1998년	54.9	.0000		0.0004	1
1999년	54.9	.0000		0.0005	1
2000년	55.2	.0059		0.0001	0
2001년	55.6	.0059	-.0066	0.0003	0
2002년	55.9	.0059		0.0008	0
2003년	56.2	.0058		0.0007	0
2004년	55.3	-.0166		0.0030	4
2005년	54.3	-.0169		0.0031	4
2006년	53.4	-.0172		0.0031	4
2007년	53.9	.0094		0.0023	0
2008년	54.4	.0093		.0007	0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단, 자료의 한계로 1996년은 이전 1개년, 1997년은 2개년, 1998년은 3개년, 1999년은 4개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을 기준값으로 정함.

〈표 6-97〉 중산층 귀속의식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4	4	4.0
1997년	4	4	4.0
1998년	3	1	2.0
1999년	3	1	2.0
2000년	3	0	1.5
2001년	3	0	1.5
2002년	3	0	1.5
2003년	2	0	1.0
2004년	4	4	4.0
2005년	4	4	4.0
2006년	4	4	4.0
2007년	3	0	1.5
2008년	3	0	1.5

5. 지표명: 지역간 소득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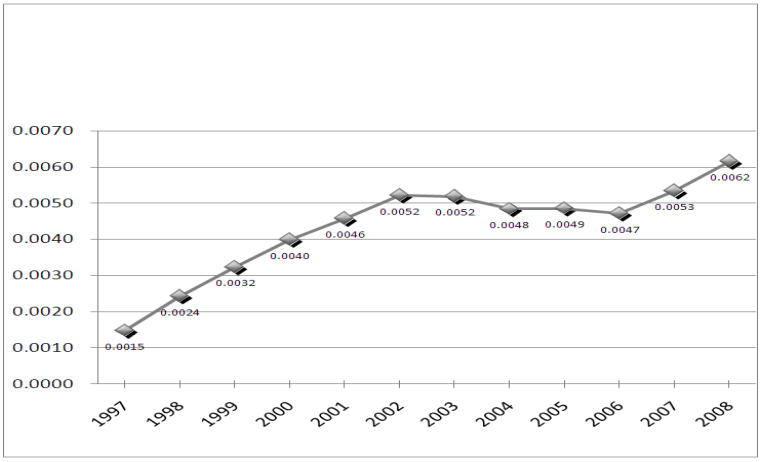
가. 개요

지역간 소득격차란 둘 이상의 지역간에 나타나는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차이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간의 소득은 한국통계연감을 통해 지역을 광역시 소득률과 비광역시 소득률의 차이를 산출하였다. 지역간 소득은 광역시와 비광역시의 소득률을 인구수로 나누어 그 차이를 산출하였다. 시·도별 구분은 취급점포 소재지 기준으로 울산시는 1997년 7월 광역시로 승격되어 광역시에 포함되었으며, 외화예금 및 동업자계금은 제외되었다.

나. 통계

지역간 소득격차는 1997년 0.0015에서 2002년 0.0052로 증가하다가 2003~2006년 완만한 감소를 보였다. 그 후 다시 증가하여 2008년에는 0.0062로 나타났다.

[그림 6-33] 지역간 소득격차 변화추이: 1997~2008년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간 소득격차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지역간 소득격차가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지역간 소득격차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역간 소득격차가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역간 소득격차가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지역간 소득격차의 추세값은 2007~2008년 4점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준으로 지역간 소득격차가 심화되었다. 또한 1997~2008년 중 국민이 체감할 만큼 지역간 소득격차가 완화된 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값이 지역간 소득격차가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8~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지역간 소득격차의 증감폭 값은 1999~2000년, 2007~2008년 3~4점으로, 이는 1997~2008년 중 지역간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급증한 연도이기 때문이다. 증감폭 값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1990~2008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도에서 지역간 소득격차가 증가했더

라도 타 연도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급증한 1999~2000년, 2007~2008년의 증감폭 값은 높은 수치를 가지게 된다.

지역간 소득격차의 위기점수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지역간 소득격차의 위기점수는 IMF 당시인 1999년 증가하였으나 이후 다소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경제위기에 직면한 2007~2008년 다시 위기점수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6-98〉 지역간 소득격차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7년	.0015	-	-	-	-
1998년	.0024	.6462	.6462	-	-
1999년	.0032	.3315	.3315	0.6462	3
2000년	.0040	.2328	.2328	0.4889	3
2001년	.0046	.1463	.1463	0.4035	3
2002년	.0052	.1413	.1413	0.3392	3
2003년	.0052	-.0064	.0064	0.2996	3
2004년	.0048	-.0666	.0666	0.1717	3
2005년	.0049	.0034	.0034	0.1187	3
2006년	.0047	-.0291	.0291	0.0728	3
2007년	.0053	.1316	.1316	0.0494	4
2008년	.0062	.1531	.1531	0.0474	4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단, 자료의 한계로 1998년은 이전 1개년, 1999년은 2개년, 2000년은 3개년, 2001년은 4개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을 기준값으로 정함.

연도	지역간 소득격차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9년	-0.0711	-0.0711	0.0581	0.0581	0.1874	0.1874	0.3166	0.3166
2000년	-0.0239	-0.0239	0.0738	0.0738	0.1716	0.1716	0.2694	0.2694
2001년	0.0017	0.0017	0.0824	0.0824	0.1631	0.1631	0.2438	0.2438
2002년	0.0210	0.0210	0.0888	0.0888	0.1567	0.1567	0.2245	0.2245
2003년	0.0328	0.0328	0.0928	0.0928	0.1527	0.1527	0.2126	0.2126
2004년	0.0720	0.0720	0.1058	0.1058	0.1396	0.1396	0.1735	0.1735
2005년	0.0959	0.0959	0.1138	0.1138	0.1317	0.1317	0.1496	0.1496
2006년	0.1097	0.1097	0.1184	0.1184	0.1271	0.1271	0.1358	0.1358
2007년	0.1202	0.1202	0.1219	0.1219	0.1236	0.1236	0.1253	0.1253
2008년	0.1208	0.1208	0.1221	0.1221	0.1234	0.1234	0.1247	0.1247

〈표 6-99〉 지역간 소득격차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7년	.0015	-		-	-
1998년	.0024	.6462		-	-
1999년	.0032	.3315		0.0646	4
2000년	.0040	.2328		0.0489	3
2001년	.0046	.1463		0.0404	2
2002년	.0052	.1413	.1227	0.0339	2
2003년	.0052	-.0064		0.0300	0
2004년	.0048	-.0666		0.0169	0
2005년	.0049	.0034		0.0089	0
2006년	.0047	-.0291		0.0044	0
2007년	.0053	.1316		0.0009	4
2008년	.0062	.1531		0.0007	4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단, 자료의 한계로 1998년은 이전 1개년, 1999년은 2개년, 2000년은 3개년, 2001년은 4개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을 기준값으로 정함.

〈표 6-100〉 지역간 소득격차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	-	2.0
1997년	-	-	2.0
1998년	-	-	2.0
1999년	3	4	3.5
2000년	3	3	3.0
2001년	3	2	2.5
2002년	3	2	2.5
2003년	3	0	1.5
2004년	3	0	1.5
2005년	3	0	1.5
2006년	3	0	1.5
2007년	4	4	4.0
2008년	4	4	4.0

제9절 경제일반영역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1. 지표명: 원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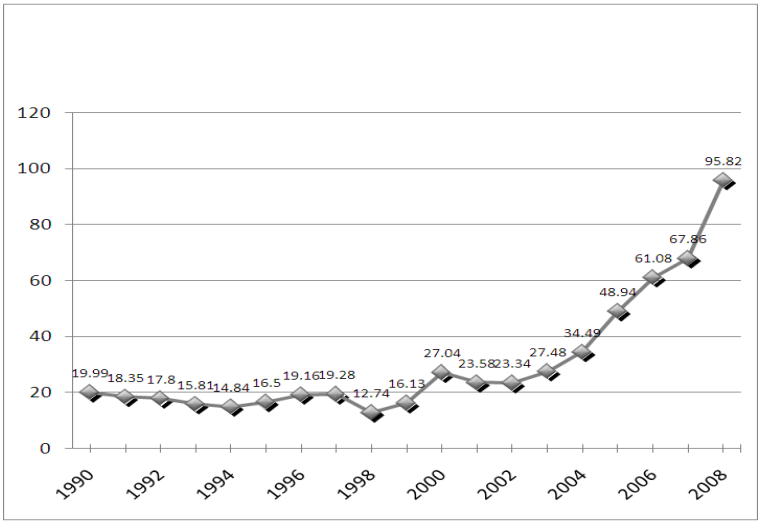
가. 개요

원유가는 석유의 판매가격으로, 본 연구에서는 원유가를 FOB기준으로 1Bbl당 미 달러 단가를 산출하였다.

나. 통계

원유가는 1990년 19.99에서 1997년까지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1998년에 12.74로 감소하였다. 그 이후 다시 상승하면서 2008년에는 95.82로 최근 19년 중 최고치를 보인 해였다.

[그림 6-34] 원유가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대한석유협회 홈페이지(http://www.petroleum.or.kr).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원유가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원유가가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원유가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원유가가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원유가가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원유가의 추세값은 1996년, 1999~2000년, 2004~2006년, 2008년 4점으로, 이 시기에 원유가는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값이 원유가가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원유가의 증감폭 값은 1996년, 1999~2000년, 2003~2006년, 2008년 4점으로, 이 시기에 원유가의 증가가 큰 폭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유가의 위기점수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 및 증감정도를 통해 산출한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으로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위기점수는 1999~2000년, 2004~2006년, 2008년에 4.0점으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특히 2004~2008년에 원유가의 위기점수가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최근 원유가가 국민의 사회위기 체감도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6-101〉 원유가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20.0				
1991년	18.4	-0.0820	0.0820		
1992년	17.8	-0.0300	0.0300		
1993년	15.8	-0.1118	0.1118		
1994년	14.8	-0.0614	0.0614		
1995년	16.5	0.1119	0.1119		
1996년	19.2	0.1612	0.1612	0.0794	4
1997년	19.3	0.0063	0.0063	0.0952	3
1998년	12.7	-0.3392	0.3392	0.0905	2
1999년	16.1	0.2661	0.2661	0.1360	4
2000년	27.0	0.6764	0.6764	0.1769	4
2001년	23.6	-0.1280	0.1280	0.2898	3
2002년	23.3	-0.0102	0.0102	0.2832	3
2003년	27.5	0.1774	0.1774	0.2840	3
2004년	34.5	0.2551	0.2551	0.2516	4
2005년	48.9	0.4190	0.4190	0.2494	4
2006년	61.1	0.2481	0.2481	0.1979	4
2007년	67.9	0.1110	0.1110	0.2219	3
2008년	95.8	0.4120	0.4120	0.2421	4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원유가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986	0.0986	0.1056	0.1056	0.1125	0.1125	0.1194	0.1194
1997년	0.1048	0.1048	0.1076	0.1076	0.1104	0.1104	0.1132	0.1132
1998년	0.1027	0.1027	0.1069	0.1069	0.1112	0.1112	0.1154	0.1154
1999년	0.1018	0.1018	0.1066	0.1066	0.1115	0.1115	0.1163	0.1163
2000년	0.0967	0.0967	0.1049	0.1049	0.1132	0.1132	0.1214	0.1214
2001년	0.0628	0.0628	0.0936	0.0936	0.1245	0.1245	0.1553	0.1553
2002년	0.0801	0.0801	0.0994	0.0994	0.1187	0.1187	0.1379	0.1379
2003년	0.0811	0.0811	0.0997	0.0997	0.1183	0.1183	0.1369	0.1369
2004년	0.0501	0.0501	0.0894	0.0894	0.1287	0.1287	0.1679	0.1679
2005년	0.0508	0.0508	0.0896	0.0896	0.1285	0.1285	0.1673	0.1673
2006년	0.0662	0.0662	0.0948	0.0948	0.1233	0.1233	0.1518	0.1518
2007년	0.0437	0.0437	0.0873	0.0873	0.1308	0.1308	0.1744	0.1744
2008년	0.0364	0.0364	0.0848	0.0848	0.1333	0.1333	0.1817	0.1817

〈표 6-102〉 원유가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20.0				
1991년	18.4	-0.0820			
1992년	17.8	-0.0300			
1993년	15.8	-0.1118			
1994년	14.8	-0.0614			
1995년	16.5	0.1119			
1996년	19.2	0.1612		0.0035	4
1997년	19.3	0.0063		0.0014	0
1998년	12.7	-0.3392		0.0021	0
1999년	16.1	0.2661	0.1090	0.0024	4
2000년	27.0	0.6764		0.0041	4
2001년	23.6	-0.1280		0.0154	0
2002년	23.3	-0.0102		0.0096	0
2003년	27.5	0.1774		0.0093	4
2004년	34.5	0.2551		0.0196	4
2005년	48.9	0.4190		0.0194	4
2006년	61.1	0.2481		0.0143	4
2007년	67.9	0.1110		0.0218	2
2008년	95.8	0.4120		0.0242	4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103〉 원유가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4	4	4.0
1997년	3	0	1.5
1998년	2	0	1.0
1999년	4	4	4.0
2000년	4	4	4.0
2001년	3	0	1.5
2002년	3	0	1.5
2003년	3	4	3.5
2004년	4	4	4.0
2005년	4	4	4.0
2006년	4	4	4.0
2007년	3	2	2.5
2008년	4	4	4.0

2. 지표명: 소비자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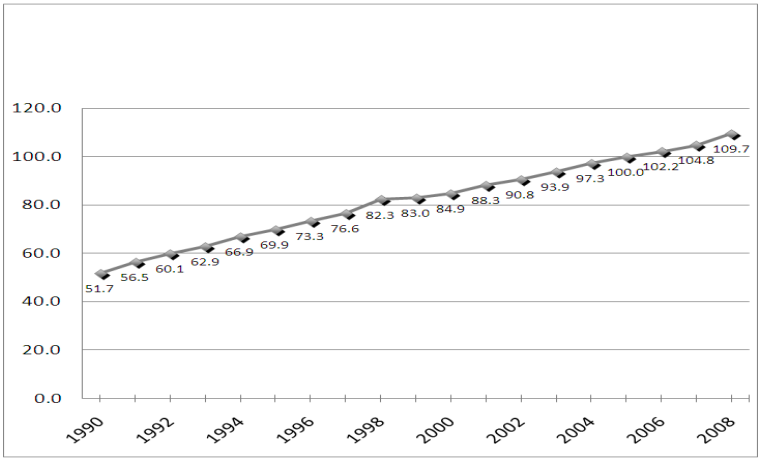
가. 개요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계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 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로, 물가변동이 전체 도시가구의 소비생활에 미치는 평균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년을 100으로 489개 조사항목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매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한다.

나. 통계

소비자물가지수는 1990년 51.7%, 1998년 82.3%, 그리고 2008년 109.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국제유가 및 기타 원자재가격의 오름세, 원화환율의 하락폭 축소, 경기상승 지속에 따른 수요압력 가시화 등에 기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35] 소비자물가지수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소비자물가지수가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소비자물가지수가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소비자물가지수가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추세값은 1998년, 2001년, 2003~2004년, 2008년 4점으로 사회위기가 발생한 이 시기에 국민은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을 체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소비자물가지수가 국민이 체감가능한 정도로 감소한 해년 최근 19년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값이 소비자물가지수가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감폭 값은 1996년, 1998년, 2008년 3~4점으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가가 큰 폭으로 이루어졌던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위기점수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전반적으로 위기점수는 안정적이었으나 가장 최근 위기점수 값인 2008년의 위기점수가 3.5점으로 증가되어 최근 소비자물가지수의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위기체감도가 증가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1998년 위기점수에서와 같이 사회경제 위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1998년은 IMF 경제위기, 2008년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가로 인한 사회위기 점수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표 6-104〉 소비자물가지수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51.7	-	-	-	-
1991년	56.5	.0933	.0933	-	-
1992년	60.1	.0621	.0621	-	-
1993년	62.9	.0480	.0480	-	-
1994년	66.9	.0627	.0627	-	-
1995년	69.9	.0448	.0448	-	-
1996년	73.3	.0492	.0492	.0622	3
1997년	76.6	.0444	.0444	.0534	3
1998년	82.3	.0751	.0751	.0498	4
1999년	83.0	.0081	.0081	.0552	3
2000년	84.9	.0226	.0226	.0443	3
2001년	88.3	.0407	.0407	.0399	4
2002년	90.8	.0276	.0276	.0382	3
2003년	93.9	.0351	.0351	.0348	4
2004년	97.3	.0359	.0359	.0268	4
2005년	100.0	.0275	.0275	.0324	3
2006년	102.2	.0220	.0220	.0334	3
2007년	104.8	.0254	.0254	.0296	3
2008년	109.7	.0468	.0468	.0292	4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232	0.0232	0.0357	0.0357	0.0481	0.0481	0.0605	0.0605
1997년	0.0259	0.0259	0.0365	0.0365	0.0472	0.0472	0.0579	0.0579
1998년	0.0269	0.0269	0.0369	0.0369	0.0469	0.0469	0.0568	0.0568
1999년	0.0253	0.0253	0.0364	0.0364	0.0474	0.0474	0.0585	0.0585
2000년	0.0286	0.0286	0.0374	0.0374	0.0463	0.0463	0.0552	0.0552
2001년	0.0299	0.0299	0.0379	0.0379	0.0459	0.0459	0.0538	0.0538
2002년	0.0304	0.0304	0.0381	0.0381	0.0457	0.0457	0.0533	0.0533
2003년	0.0314	0.0314	0.0384	0.0384	0.0454	0.0454	0.0523	0.0523
2004년	0.0338	0.0338	0.0392	0.0392	0.0446	0.0446	0.0499	0.0499
2005년	0.0322	0.0322	0.0386	0.0386	0.0451	0.0451	0.0516	0.0516
2006년	0.0319	0.0319	0.0385	0.0385	0.0452	0.0452	0.0519	0.0519
2007년	0.0330	0.0330	0.0389	0.0389	0.0448	0.0448	0.0508	0.0508
2008년	0.0331	0.0331	0.0390	0.0390	0.0448	0.0448	0.0506	0.0506

〈표 6-105〉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51.7	-		-	-
1991년	56.5	.0933		-	-
1992년	60.1	.0621		-	-
1993년	62.9	.0480		-	-
1994년	66.9	.0627		-	-
1995년	69.9	.0448		-	-
1996년	73.3	.0492		.0062	3
1997년	76.6	.0444		.0053	2
1998년	82.3	.0751		.0050	4
1999년	83.0	.0081	.0419	.0055	0
2000년	84.9	.0226		.0044	0
2001년	88.3	.0407		.0040	2
2002년	90.8	.0276		.0038	0
2003년	93.9	.0351		.0035	1
2004년	97.3	.0359		.0027	1
2005년	100.0	.0275		.0032	0
2006년	102.2	.0220		.0033	0
2007년	104.8	.0254		.0030	0
2008년	109.7	.0468		.0029	3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106〉 소비자물가지수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3	3	3.0
1997년	3	2	2.5
1998년	4	4	4.0
1999년	3	0	1.5
2000년	3	0	1.5
2001년	4	2	3.0
2002년	3	0	1.5
2003년	4	1	2.5
2004년	4	1	2.5
2005년	3	0	1.5
2006년	3	0	1.5
2007년	3	0	1.5
2008년	4	3	3.5

3. 지표명: 신용불량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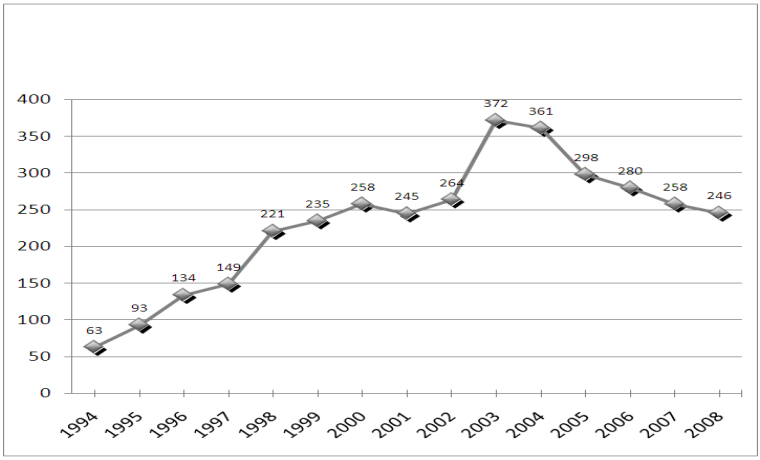
가. 개요

신용불량자란 금융회사 대출금이나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을 제때 내지 못해 일정기간 대출, 카드 발급 등 각종 금융거래 때 제재를 받게 되는 사람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는 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카드론, 할부금융 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 500만원 이상 국세,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용불량자율은 매년 연말기준으로 1994년에서 1997년 자료는 자유기업원 『한국의 씀씀이』에서 재인용하였으며, 1998년부터 2000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 『2002년 Trend 10』에서 재인용하였다. 신용불량자율 중 2005년 4월 28일 이후는 연체자 등록기준이 변경되어 산출되었다.

나. 통계

신용불량자수는 1994년 63만 명에서 2003년 372만 명으로 증가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2008년 246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2003년 신용카드 유동성 대란으로 2003년 최고치를 보이다가 이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발표로 신용불량자수를 일부 감소시켰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6-36] 신용불량자수 변화추이: 1994~2008년



자료: 자유기업원, 『한국의 씀씀이』, 1997 재인용. 삼성경제연구소, 『2002년 Trend 10』, 2002 재인용.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신용불량자수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신용불량자수가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신용불량자수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신용불량자수가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신용불량자수가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신용불량자수의 추세값은 1998년, 2003년 4점으로 IMF 경제위기와 신용카드 유동성대란이 일어난 해에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신용불량자 수가 증가하였다. 이후 2005년에는 국민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신용불량자 수 감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값이 신용불량자수가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5~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신용불량자수의 증감폭 값은 1996년, 1998년, 2003년 4점으로, IMF 경제위기, 신용카드 유동성 대란으로 신용불량자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수의 위기점수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 및 증감정도를 통해 산출한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치다. 그 결과, IMF 경제위기 전후인 1996년, 1998년, 신용카드 유동성 대란이 일어난 2003년의 위기점수는 3.5~4.0으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2004~2008년의 위기점수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최근 국민의 신용불량자수의 위기체감도가 비교적 안정적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107〉 신용불량자수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4년	63	-	-	-	-
1995년	93	0.4762	0.4762	-	-
1996년	134	0.4409	0.4409	0.4762	3
1997년	149	0.1119	0.1119	0.4585	3
1998년	221	0.4832	0.4832	0.3430	4
1999년	235	0.0633	0.0633	0.3781	3
2000년	258	0.0979	0.0979	0.3151	3
2001년	245	-0.0504	0.0504	0.2394	3
2002년	264	0.0776	0.0776	0.1614	3
2003년	372	0.4091	0.4091	0.1545	4
2004년	361	-0.0296	0.0296	0.1397	3
2005년	298	-0.1745	0.1745	0.1329	2
2006년	280	-0.0604	0.0604	0.1482	3
2007년	258	-0.0786	0.0786	0.1502	3
2008년	246	-0.0465	0.0465	0.1504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단, 자료의 한계로 1996년은 이전 1개년, 1997년은 2개년, 1998년은 3개년, 1999년은 4개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으로 정함.

연도	신용불량자수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252	-0.0252	0.0700	0.0700	0.1652	0.1652	0.2605	0.2605
1997년	-0.0199	-0.0199	0.0718	0.0718	0.1635	0.1635	0.2552	0.2552
1998년	0.0147	0.0147	0.0833	0.0833	0.1519	0.1519	0.2205	0.2205
1999년	0.0042	0.0042	0.0798	0.0798	0.1554	0.1554	0.2310	0.2310
2000년	0.0231	0.0231	0.0861	0.0861	0.1491	0.1491	0.2122	0.2122
2001년	0.0458	0.0458	0.0937	0.0937	0.1416	0.1416	0.1895	0.1895
2002년	0.0753	0.0753	0.1035	0.1035	0.1317	0.1317	0.1600	0.1600
2003년	0.0773	0.0773	0.1042	0.1042	0.1310	0.1310	0.1579	0.1579
2004년	0.0818	0.0818	0.1057	0.1057	0.1296	0.1296	0.1535	0.1535
2005년	0.0873	0.0873	0.1075	0.1075	0.1277	0.1277	0.1479	0.1479
2006년	0.1037	0.1037	0.1130	0.1130	0.1223	0.1223	0.1315	0.1315
2007년	0.1043	0.1043	0.1132	0.1132	0.1221	0.1221	0.1309	0.1309
2008년	0.1137	0.1137	0.1163	0.1163	0.1189	0.1189	0.1216	0.1216

〈표 6-108〉 신용불량자수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4년	63	-		-	-
1995년	93	0.4762		-	-
1996년	134	0.4409		0.0476	4
1997년	149	0.1119		0.0459	2
1998년	221	0.4832		0.0343	4
1999년	235	0.0633		0.0378	1
2000년	258	0.0979		0.0315	2
2001년	245	-0.0504	0.1176	0.0239	0
2002년	264	0.0776		0.0141	1
2003년	372	0.4091		0.0134	4
2004년	361	-0.0296		0.0119	0
2005년	298	-0.1745		0.0101	0
2006년	280	-0.0604		0.0046	0
2007년	258	-0.0786		0.0044	0
2008년	246	-0.0465		0.0013	0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단, 자료의 한계로 1996년은 이전 1개년, 1997년은 2개년, 1998년은 3개년, 1999년은 4개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을 기준값으로 정함.

〈표 6-109〉 신용불량자수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3	4	3.5
1997년	3	2	2.5
1998년	4	4	4.0
1999년	3	1	2.0
2000년	3	2	2.5
2001년	3	0	1.5
2002년	3	1	2.0
2003년	4	4	4.0
2004년	3	0	1.5
2005년	2	0	1.0
2006년	3	0	1.5
2007년	3	0	1.5
2008년	3	0	1.5

4. 지표명: 경제성장률

가.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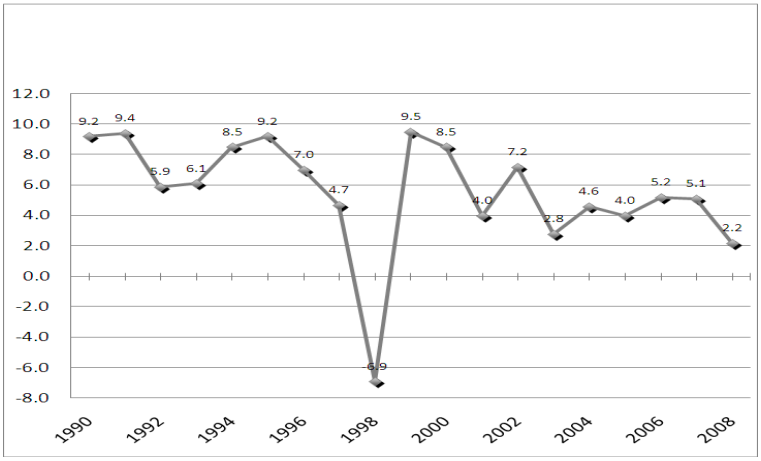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이란 일정기간 동안 각 경제활동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로써, 한 나라의 경제가 이룩한 경제의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다. 본 연구는 경제성자률 지표로 실질 GDP를 사용하는데, 실질 GDP는 소유에 관계없이 한 나라에 있는 노동, 자본 등 모든 생산요소를 결합하여 만들어낸 최종생산물의 합인 생산활동지표인 명목 GDP를 특정 연도의 물가를 기준으로 하여 환산한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0년을 기준으로 각 년도 실질 GDP값을 구하였다.

$$\text{경제성장률} = \frac{\text{금년도실질GDP} - \text{전년도실질GDP}}{\text{전년도실질GDP}} \times 100$$

나. 통계

경제성장률은 1990년 9.2%에서 IMF 경제위기가 발생한 1998년에 -6.9%로 하락하였다. 그 후 1999년 9.5%까지 상승하였지만 신용카드 유동성 대란과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3년, 2008년에 2%대로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2003년, 2008년을 제외한 2000년대에는 4~5%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였다.

[그림 6-37] 경제성장률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한국은행, 『국민소득』,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 성장률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2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4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경제 성장률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경제 성장률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경제 성장률의 추세값은 1996~1998년, 2008년 4점으로, IMF경제위기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성장률의 감소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다르게 경제 성장률이 국민이 체

감가능한 정도로 상승한 연도는 1999년으로 IMF 경제위기를 빠르게 극복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998년 경제성장률이 음의 값을, 1999년 경제성장률이 양의 값을 가져 1999년 경제성장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변화율은 음의 값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의적으로 1999년만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을 근거로 하여 2점의 추세값을 1999년도에 부여하였다.

추세값이 경제 성장률이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0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4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경제 성장률의 증감폭 값은 1997~1998년, 2003년, 2008년 4점으로, IMF 경제위기, 신용카드 유동성 대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999년 증감폭 값은 위의 추세값에서와 같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을 근거로 하여 0점의 증감폭 값을 부여하였다.

경제 성장률의 위기점수는 경제성장률의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치로 산출하였다. 그 결과, IMF 당시인 1997~1998년, 신용카드 유동성 대란이 일어난 2003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했던 2008년의 위기점수가 3.5~4.0점으로 높은 수준의 위기상태를 나타냈다.

〈표 6-110〉 경제성장률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9.2	-	-	-	-
1991년	9.4	0.0217	0.0217	-	-
1992년	5.9	-0.3723	0.3723	-	-
1993년	6.1	0.0339	0.0339	-	-
1994년	8.5	0.3934	0.3934	-	-
1995년	9.2	0.0824	0.0824	-	-
1996년	7.0	-0.2391	0.2391	0.1808	4
1997년	4.7	-0.3286	0.3286	0.2242	4
1998년	-6.9	-2.4681	2.4681	0.2155	2
1999년	9.5	-2.3768	2.3768	0.7023	2
2000년	8.5	-0.1053	0.1053	1.0990	3
2001년	4.0	-0.5294	0.5294	1.1036	3
2002년	7.2	0.8000	0.8000	1.1616	3
2003년	2.8	-0.6111	0.6111	1.2559	3
2004년	4.6	0.6429	0.6429	0.8845	3
2005년	4.0	-0.1304	0.1304	0.5377	3
2006년	5.2	0.3000	0.3000	0.5428	3
2007년	5.1	-0.0192	0.0192	0.4969	3
2008년	2.2	-0.5686	0.5686	0.3407	4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경제성장률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이상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2284	-0.2284	-0.2347	-0.2347	-0.2411	-0.2411	-0.2475	-0.2475
1997년	-0.2318	-0.2318	-0.2359	-0.2359	-0.2400	-0.2400	-0.2440	-0.2440
1998년	-0.2344	-0.2344	-0.2368	-0.2368	-0.2391	-0.2391	-0.2414	-0.2414
1999년	-0.0843	-0.0843	-0.1867	-0.1867	-0.2891	-0.2891	-0.3915	-0.3915
2000년	0.0819	0.0819	-0.1313	-0.1313	-0.3445	-0.3445	-0.5577	-0.5577
2001년	0.0932	0.0932	-0.1276	-0.1276	-0.3483	-0.3483	-0.5690	-0.5690
2002년	0.1106	0.1106	-0.1218	-0.1218	-0.3541	-0.3541	-0.5864	-0.5864
2003년	0.0429	0.0429	-0.1443	-0.1443	-0.3315	-0.3315	-0.5187	-0.5187
2004년	-0.0686	-0.0686	-0.1815	-0.1815	-0.2944	-0.2944	-0.4073	-0.4073
2005년	-0.2261	-0.2261	-0.2340	-0.2340	-0.2419	-0.2419	-0.2497	-0.2497
2006년	-0.2276	-0.2276	-0.2345	-0.2345	-0.2414	-0.2414	-0.2482	-0.2482
2007년	-0.1778	-0.1778	-0.2179	-0.2179	-0.2579	-0.2579	-0.2980	-0.2980
2008년	-0.2270	-0.2270	-0.2343	-0.2343	-0.2416	-0.2416	-0.2488	-0.2488

〈표 6-111〉 경제성장률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9.2	-		-	-
1991년	9.4	.0217		-	-
1992년	5.9	-.3723		-	-
1993년	6.1	.0339		-	-
1994년	8.5	.3934		-	-
1995년	9.2	.0824		-	-
1996년	7.0	-.2391		.0032	2
1997년	4.7	-.3286		.0020	4
1998년	-6.9	-2.4681		.0012	4
1999년	9.5	-2.3768	-.2379	.0512	0
2000년	8.5	-.1053		.1066	1
2001년	4.0	-.5294		.1104	3
2002년	7.2	.8000		.1162	0
2003년	2.8	-.6111		.0936	4
2004년	4.6	.6429		.0565	0
2005년	4.0	-.1304		.0039	0
2006년	5.2	.3000		.0034	0
2007년	5.1	-.0192		.0200	0
2008년	2.2	-.5686		.0036	4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112〉 경제성장률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4	2	3.0
1997년	4	4	4.0
1998년	4	4	4.0
1999년	2	0	1.0
2000년	3	1	2.0
2001년	3	3	3.0
2002년	3	0	1.5
2003년	3	4	3.5
2004년	3	0	1.5
2005년	3	0	1.5
2006년	3	0	1.5
2007년	3	0	1.5
2008년	4	4	4.0

5. 지표명: 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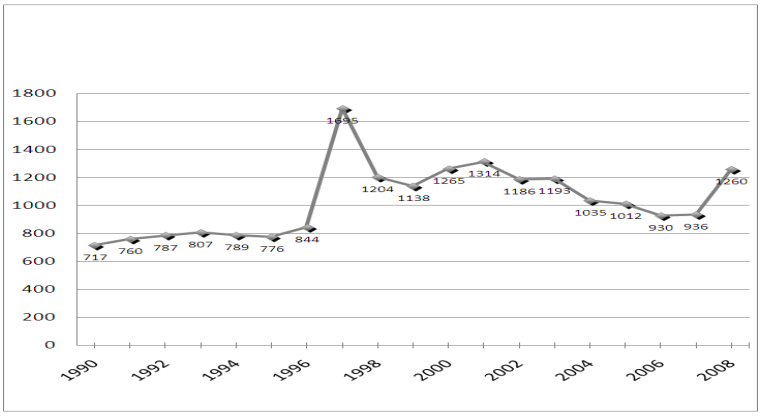
가. 개요

환율은 우리 원화와 외국통화의 교환비율로, 다른 통화로 표시된 재화가격간 단일 척도평가를 가능하게 해줄 뿐 아니라 서로 다른 재화간 교환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며, 넓게는 국가 간 경상/자본거래와 거시경제변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방경제하에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한 판단과 예측의 지표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원·달러 환율을 기준으로 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다.

나. 통계

우리나라 환율은 1990년 717원에서 1997년 1,695원으로 상승하여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1998년 1,204원으로 하락한 후 2001년까지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2002~2007년 차츰 하락하여 2007년 환율은 936원이었다. 그러나 2008년에 다시 상승하여 1,260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6-38] 환율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e-나라지표 홈페이지(www.index.go.kr) 재인용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환율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파악하였다. 환율의 위기점수 산출방식은 타 지표와 다소 상이하다. 이는 환율의 증감이 사회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 모두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율의 위기점수에서는 증감방향을 준거로 하는 추세값은 산출하지 않으며, 증감정도를 통해 산출하는 증감폭 값은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을 기준으로 하여 위기점수를 측정한다. 변화율의 '절대값'은 증감 방향은 변화율과 달리 변화방향은 고려하지 않고 변화정도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값의 10분위수(기준범위)를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은 0점, '평균변화율~평균변화율+2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2기준범위~평균변화율+4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4기준범위 이상은 4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위기점수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환율의 위기점수를 산출한 결과, 1997~1998년, 2004년, 2008년의 위기점수는 최고값인 4.0이었으며 그 외 연도에서는 안정적 상태를 의미하는 0.0~1.0점대를 유지하였다.

연도	환율의 위기점수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893	0.0893	0.0957	0.0957	0.1022	0.1022	0.1086	0.1086
1997년	0.0893	0.0893	0.0969	0.0969	0.1045	0.1045	0.1120	0.1120
1998년	0.0893	0.0893	0.1358	0.1358	0.1822	0.1822	0.2287	0.2287
1999년	0.0893	0.0893	0.1463	0.1463	0.2033	0.2033	0.2603	0.2603
2000년	0.0893	0.0893	0.1476	0.1476	0.2058	0.2058	0.2641	0.2641
2001년	0.0893	0.0893	0.1514	0.1514	0.2134	0.2134	0.2755	0.2755
2002년	0.0893	0.0893	0.1494	0.1494	0.2095	0.2095	0.2696	0.2696
2003년	0.0893	0.0893	0.1130	0.1130	0.1366	0.1366	0.1603	0.1603
2004년	0.0893	0.0893	0.1016	0.1016	0.1139	0.1139	0.1261	0.1261
2005년	0.0893	0.0893	0.1047	0.1047	0.1200	0.1200	0.1354	0.1354
2006년	0.0893	0.0893	0.1011	0.1011	0.1130	0.1130	0.1248	0.1248
2007년	0.0893	0.0893	0.1028	0.1028	0.1163	0.1163	0.1299	0.1299
2008년	0.0893	0.0893	0.0992	0.0992	0.1091	0.1091	0.1190	0.1190

〈표 6-113〉 환율의 위기점수

(단위: 원,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절대값의 평균값	기준범위1)	위기점수
1990년	716.7			-	-
1991년	759.5	0.0597		-	-
1992년	786.5	0.0355		-	-
1993년	807.2	0.0263		-	-
1994년	788.5	0.0232		-	-
1995년	775.7	0.0162		-	-
1996년	844.2	0.0883		0.0032	0
1997년	1695.0	1.0078		0.0038	4
1998년	1204.0	0.2897		0.0232	4
1999년	1138.0	0.0548	0.0893	0.0285	0
2000년	1264.5	0.1112		0.0291	1
2001년	1313.5	0.0388		0.0310	0
2002년	1186.2	0.0969		0.0300	1
2003년	1192.6	0.0054		0.0118	0
2004년	1035.1	0.1321		0.0061	4
2005년	1011.6	0.0227		0.0077	0
2006년	929.8	0.0809		0.0059	0
2007년	936.1	0.0068		0.0068	0
2008년	1259.5	0.3455		0.0050	4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6. 지표명: 외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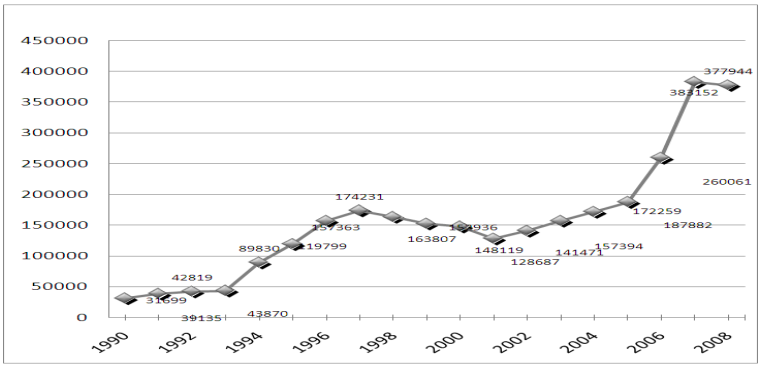
가. 개요

대외채무는 계약만기 기준으로 1년 이하인 단기채무와 1년 초과인 장기채무가 있으며, 본 연구는 이를 합한 총 외채액을 조사·분석한다. 이는 재정경제부, 한국은행의 각 년도 원자료에서 추정되었다. 다만, 1990년은 국내외국환은행의 보유외환을 제외한 공정보유액을 기준으로 한 반면, 1994년 이후는 IMF 기준, 2003년 9월부터는 외채통계 편제가 새로운 기준에 따라 개편됨에 따라 새 기준에 준하여 지표값을 설정하였다.

나. 통계

외채액은 1990~1993년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1993~1997년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다시 2001년까지 완만한 감소를 보였으며 2001~2005년까지 조금씩 증가하던 외채액은 2007년에 급증하여 2007~2008년 최근 19년 중 최고액을 보이고 있다.

[그림 6-39] 외채액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각년도.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외채액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외채액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외채액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외채액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외채액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외채액의 추세값은 2002~2004년, 2006~2007년 4점으로 이 시기에 외채액은 국민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2001년의 추세값은 2점으로, 외채액의 감소가 일어났으며 이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였다.

추세값이 외채액이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외채액의 증감폭 값은 1996년, 2006~2007년 4점으로, 1990~2008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과 비교하였을 때 이 시기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은 타 연도와 달리 기준범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국민이 체감하는 외채액의 위기수준은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외채액의 위기점수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1996년, 2006~2007년 높은 위기수준을 나타냈다. 즉, 외채의 증가로 인한 국민의 위기체감도가 1996년, 2006~2007년에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표 6-114〉 외채액 추세값 산출

(단위: 100만 달러,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31699	-	-	-	-
1991년	39135	0.2346	0.2346	-	-
1992년	42819	0.0941	0.0941	-	-
1993년	43870	0.0245	0.0245	-	-
1994년	89830	1.0476	1.0476	-	-
1995년	119799	0.3336	0.3336	-	-
1996년	157363	0.3136	0.3136	0.3469	3
1997년	174231	0.1072	0.1072	0.3627	3
1998년	163807	-0.0598	0.0598	0.3653	3
1999년	152936	-0.0664	0.0664	0.3724	3
2000년	148119	-0.0315	0.0315	0.1761	3
2001년	128687	-0.1312	0.1312	0.1157	2
2002년	141471	0.0993	0.0993	0.0792	4
2003년	157394	0.1126	0.1126	0.0776	4
2004년	172259	0.0944	0.0944	0.0882	4
2005년	187882	0.0907	0.0907	0.0938	3
2006년	260061	0.3842	0.3842	0.1056	4
2007년	383152	0.4733	0.4733	0.1562	4
2008년	377944	-0.0136	0.0136	0.2310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외채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328	0.0328	0.1022	0.1022	0.1716	0.1716	0.2410	0.2410
1997년	0.0281	0.0281	0.1006	0.1006	0.1732	0.1732	0.2457	0.2457
1998년	0.0273	0.0273	0.1004	0.1004	0.1734	0.1734	0.2465	0.2465
1999년	0.0324	0.0324	0.1021	0.1021	0.1717	0.1717	0.2414	0.2414
2000년	0.0992	0.0992	0.1243	0.1243	0.1495	0.1495	0.1746	0.1746
2001년	0.1211	0.1211	0.1316	0.1316	0.1422	0.1422	0.1527	0.1527
2002년	0.1260	0.1260	0.1333	0.1333	0.1405	0.1405	0.1478	0.1478
2003년	0.1255	0.1255	0.1331	0.1331	0.1407	0.1407	0.1483	0.1483
2004년	0.1359	0.1359	0.1366	0.1366	0.1372	0.1372	0.1379	0.1379
2005년	0.1283	0.1283	0.1340	0.1340	0.1398	0.1398	0.1455	0.1455
2006년	0.1209	0.1209	0.1316	0.1316	0.1422	0.1422	0.1529	0.1529
2007년	0.0900	0.0900	0.1213	0.1213	0.1525	0.1525	0.1838	0.1838
2008년	0.0676	0.0676	0.1138	0.1138	0.1600	0.1600	0.2062	0.2062

〈표 6-115〉 외채액의 증감폭 값

(단위: 100만 달러,%,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31699	-		-	-
1991년	39135	0.2346		-	-
1992년	42819	0.0941		-	-
1993년	43870	0.0245		-	-
1994년	89830	1.0476		-	-
1995년	119799	0.3336		-	-
1996년	157363	0.3136		0.0347	4
1997년	174231	0.1072		0.0363	2
1998년	163807	-0.0598		0.0365	0
1999년	152936	-0.0664	0.1369	0.0348	0
2000년	148119	-0.0315		0.0126	0
2001년	128687	-0.1312		0.0053	0
2002년	141471	0.0993		0.0036	0
2003년	157394	0.1126		0.0038	0
2004년	172259	0.0944		0.0003	0
2005년	187882	0.0907		0.0029	0
2006년	260061	0.3842		0.0053	4
2007년	383152	0.4733		0.0156	4
2008년	377944	-0.0136		0.0231	0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116〉 외채액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3	4	3.5
1997년	3	2	2.5
1998년	3	0	1.5
1999년	3	0	1.5
2000년	3	0	1.5
2001년	2	0	1.0
2002년	4	0	2.0
2003년	4	0	2.0
2004년	4	0	2.0
2005년	3	0	1.5
2006년	4	4	4.0
2007년	4	4	4.0
2008년	3	0	1.5

7. 지표명: 개인부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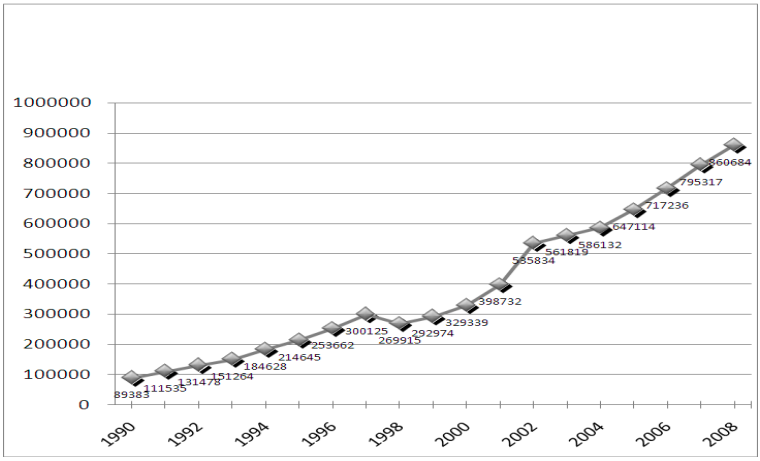
가. 개요

개인부채액은 개인이 1, 2금융권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를 말하며, 대차대조표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인부채비율에서 개인은 순수가계, 소규모 개인사업자, 민간비영리단체를 포함하는 개념이며, 한국은행의 금융자산부채장액표를 통해 산출하였다.

나. 통계

개인부채액은 1990년 89,383십억원에서 1997년까지 300,125십억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1998년 269,915십억원으로 다소 감소하긴 하였으나 이후에도 그 상승세가 지속되어 2008년에는 860,684십억원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6-40] 개인부채액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개인부채액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개인부채액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개인부채액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개인부채액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개인부채액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개인부채액의 추세값은 1997년, 2001~2002년 4점으로, 이 시기에 개인부채액은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였다. 반면, 개인부채액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한 연도는 1996~2008년 동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값이 개인부채액이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개인부채액의 증감폭 값은 1996~1997년, 2001~2002년 3~4점으로 높은 수준을 가졌다. 즉, 1996~1997년, 2001~2002년에 개인부채액은 평년도와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부채액의 위기점수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 및 증감정도를 통해 파악한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치다. 위기점수를 산출한 결과, 1996~1997년, 2001~2002년은 3.5~4.0점으로 국민은 개인부채액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위기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117〉 개인부채액의 추세값 산출

(단위: 십억원,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89,383.0			-	-
1991년	111,534.6	0.2478	0.2478		
1992년	131,477.5	0.1788	0.1788	-	-
1993년	151,264.2	0.1505	0.1505		
1994년	184,628.0	0.2206	0.2206		
1995년	214,645.4	0.1626	0.1626		
1996년	253,661.6	0.1818	0.1818	0.1921	3
1997년	300,125.4	0.1832	0.1832	0.1788	4
1998년	269,914.6	-0.1007	0.1007	0.1797	3
1999년	292,974.2	0.0854	0.0854	0.1698	3
2000년	329,339.3	0.1241	0.1241	0.1427	3
2001년	398,732.1	0.2107	0.2107	0.1350	4
2002년	535,834	0.3438	0.3438	0.1408	4
2003년	561,819	0.0485	0.0485	0.1730	3
2004년	586,132	0.0433	0.0433	0.1625	3
2005년	647,114	0.1040	0.1040	0.1541	3
2006년	717,236	0.1084	0.1084	0.1501	3
2007년	795,317	0.1089	0.1089	0.1296	3
2008년	860,684	0.0822	0.0822	0.0826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개인부채액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1349	0.1349	0.1383	0.1383	0.1417	0.1417	0.1451	0.1451
1997년	0.0863	0.0863	0.1221	0.1221	0.1579	0.1579	0.1937	0.1937
1998년	0.0861	0.0861	0.1220	0.1220	0.1580	0.1580	0.1939	0.1939
1999년	0.1012	0.1012	0.1271	0.1271	0.1529	0.1529	0.1788	0.1788
2000년	0.1093	0.1093	0.1298	0.1298	0.1502	0.1502	0.1707	0.1707
2001년	0.1116	0.1116	0.1305	0.1305	0.1495	0.1495	0.1684	0.1684
2002년	0.1098	0.1098	0.1299	0.1299	0.1501	0.1501	0.1702	0.1702
2003년	0.1002	0.1002	0.1267	0.1267	0.1533	0.1533	0.1798	0.1798
2004년	0.0912	0.0912	0.1237	0.1237	0.1563	0.1563	0.1888	0.1888
2005년	0.0938	0.0938	0.1246	0.1246	0.1554	0.1554	0.1862	0.1862
2006년	0.0950	0.0950	0.1250	0.1250	0.1550	0.1550	0.1850	0.1850
2007년	0.1011	0.1011	0.1270	0.1270	0.1530	0.1530	0.1789	0.1789
2008년	0.1152	0.1152	0.1317	0.1317	0.1483	0.1483	0.1648	0.1648

〈표 6-118〉 개인부채액의 증감폭 값

(단위: 십억원,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89,383.0			-	-
1991년	111,534.6	0.2478		-	-
1992년	131,477.5	0.1788			
1993년	151,264.2	0.1505			
1994년	184,628.0	0.2206			
1995년	214,645.4	0.1626			
1996년	253,661.6	0.1818		0.0017	4
1997년	300,125.4	0.1832		0.0179	3
1998년	269,914.6	-0.1007		0.0180	0
1999년	292,974.2	0.0854	0.1400	0.0129	0
2000년	329,339.3	0.1241		0.0102	1
2001년	398,732.1	0.2107		0.0095	4
2002년	535,834	0.3438		0.0101	4
2003년	561,819	0.0485		0.0133	0
2004년	586,132	0.0433		0.0163	0
2005년	647,114	0.1040		0.0154	1
2006년	717,236	0.1084		0.0150	1
2007년	795,317	0.1089		0.0130	1
2008년	860,684	0.0822		0.0083	0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119〉 개인부채액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3	4	3.5
1997년	4	3	3.5
1998년	3	0	1.5
1999년	3	0	1.5
2000년	3	1	2.0
2001년	4	4	4.0
2002년	4	4	4.0
2003년	3	0	1.5
2004년	3	0	1.5
2005년	3	1	2.0
2006년	3	1	2.0
2007년	3	1	2.0
2008년	3	0	1.5

7. 지표명: 기업부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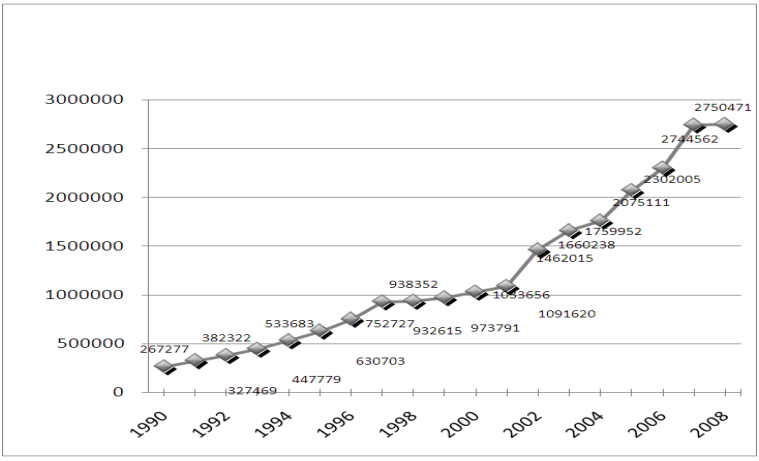
가. 개요

기업부채는 기업자본 구성의 안전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업 재무 구조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기업부채비율은 공기업, 민간기업 포함하며, 한국은행의 금융자산부채장액표를 통해 산출하였다.

나. 통계

기업 부채액은 1990년 267,277십억원에서 2001년 1,033,656십억원으로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2001년부터 급증하여 2008년 2,750,471십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6-41] 기업부채액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기업부채액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기업부채액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기업부채액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기업부채액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기업부채액이 급격히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기업부채액의 추세값은 1996~1997년, 2002~2003년, 2005년, 2007년 4점으로, 이 시기에 기업부채액은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기업부채액이 국민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한 연도는 1996~2008년 중 존재하지 않았다.

추세값이 기업부채액이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기업부채액의 증감폭 값 산출결과, 1996~1997년, 2002년, 2005년, 2007년에 3~4점으로 기업부채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기업부채액의 위기점수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치다. 기업부채액의 증가로 인한 국민의 위기체감도는 1996~1997년,

2002~2003년, 2005년, 2007년에 상승하였다. 특히, 2000년대에 기업부채액으로 인한 위기점수가 높아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요구된다.

〈표 6-120〉 기업부채액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267277.1			-	-
1991년	327468.6	0.2252	0.2252	-	-
1992년	382321.9	0.1675	0.1675	-	-
1993년	447779.3	0.1712	0.1712	-	-
1994년	533683.3	0.1918	0.1918	-	-
1995년	630703.3	0.1818	0.1818	-	-
1996년	752727	0.1935	0.1935	0.1875	4
1997년	932614.8	0.2390	0.2390	0.1812	4
1998년	938351.9	0.0062	0.0062	0.1955	3
1999년	973790.5	0.0378	0.0378	0.1624	3
2000년	1033656.3	0.0615	0.0615	0.1316	3
2001년	1091620.1	0.0561	0.0561	0.1076	3
2002년	1,462,015.2	0.3393	0.3393	0.0801	4
2003년	1,660,237.8	0.1356	0.1356	0.1002	4
2004년	1,759,952.1	0.0601	0.0601	0.1260	3
2005년	2,075,111.3	0.1791	0.1791	0.1305	4
2006년	2,302,005.1	0.1093	0.1093	0.1540	3
2007년	2,744,561.8	0.1922	0.1922	0.1647	4
2008년	2,750,471.1	0.0022	0.0022	0.1353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기업부채액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817	0.0817	0.1192	0.1192	0.1567	0.1567	0.1942	0.1942
1997년	0.0836	0.0836	0.1199	0.1199	0.1561	0.1561	0.1923	0.1923
1998년	0.0793	0.0793	0.1184	0.1184	0.1575	0.1575	0.1966	0.1966
1999년	0.0892	0.0892	0.1217	0.1217	0.1542	0.1542	0.1867	0.1867
2000년	0.0985	0.0985	0.1248	0.1248	0.1511	0.1511	0.1775	0.1775
2001년	0.1057	0.1057	0.1272	0.1272	0.1487	0.1487	0.1703	0.1703
2002년	0.1140	0.1140	0.1300	0.1300	0.1460	0.1460	0.1620	0.1620
2003년	0.1079	0.1079	0.1280	0.1280	0.1480	0.1480	0.1680	0.1680
2004년	0.1002	0.1002	0.1254	0.1254	0.1506	0.1506	0.1758	0.1758
2005년	0.0988	0.0988	0.1249	0.1249	0.1510	0.1510	0.1771	0.1771
2006년	0.0918	0.0918	0.1226	0.1226	0.1534	0.1534	0.1842	0.1842
2007년	0.0886	0.0886	0.1215	0.1215	0.1544	0.1544	0.1874	0.1874
2008년	0.0974	0.0974	0.1245	0.1245	0.1515	0.1515	0.1786	0.1786

〈표 6-121〉 기업부채액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267277.1			-	-
1991년	327468.6	0.2252		-	-
1992년	382321.9	0.1675		-	-
1993년	447779.3	0.1712		-	-
1994년	533683.3	0.1918		-	-
1995년	630703.3	0.1818		-	-
1996년	752727	0.1935		0.0188	3
1997년	932614.8	0.2390		0.0181	4
1998년	938351.9	0.0062		0.0195	0
1999년	973790.5	0.0378	0.1380	0.0162	0
2000년	1033656.3	0.0615		0.0132	0
2001년	1091620.1	0.0561		0.0108	0
2002년	1,462,015.2	0.3393		0.0080	4
2003년	1,660,237.8	0.1356		0.0100	2
2004년	1,759,952.1	0.0601		0.0126	0
2005년	2,075,111.3	0.1791		0.0131	4
2006년	2,302,005.1	0.1093		0.0154	1
2007년	2,744,561.8	0.1922		0.0165	4
2008년	2,750,471.1	0.0022		0.0135	0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122〉 기업부채액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4	3	3.5
1997년	4	4	4.0
1998년	3	0	1.5
1999년	3	0	1.5
2000년	3	0	1.5
2001년	3	0	1.5
2002년	4	4	4.0
2003년	4	2	3.0
2004년	3	0	1.5
2005년	4	4	4.0
2006년	3	1	2.0
2007년	4	4	4.0
2008년	3	0	1.5

제10절 정치일반영역 사회위기지표의 위기수준

1. 지표명: 투표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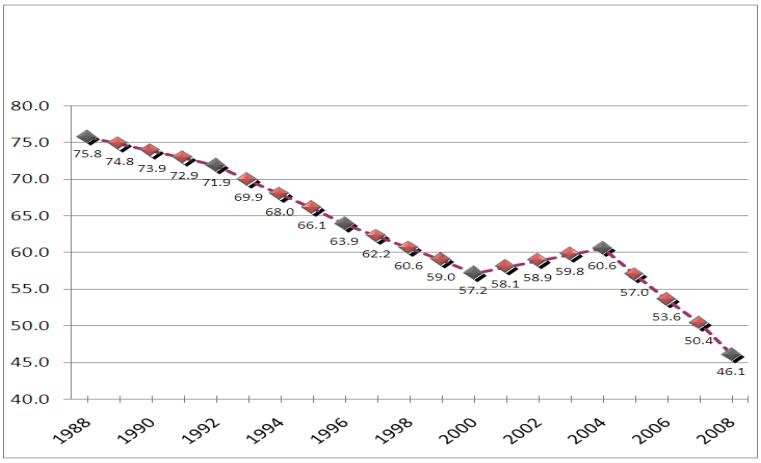
가. 개요

투표율은 각년도의 국회의원 선거투표율로 산출하였다. 이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1990년 이후 단 3차례 이루어져 변화추이 추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국회의원선거도 매년 있지 않지만 대통령선거보다는 그 빈도가 더 높기 때문에 기울기를 활용한 미실시 연도의 투표율 추정에 보다 적합하다.

나. 통계

투표율은 1990년 73.9%에서 2000년 57.2%로 지속적 감소를 보인 후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2004년 60.6%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4년 이후에 투표율은 다시 급락하여 2008년 46.1%로 최저 투표율을 보였다.

[그림 6-42] 투표율 변화추이: 1988~2008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투표율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2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4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투표율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투표율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투표율이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투표율이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투표율의 추세값은 1996~1997년, 2000년, 2005~2008년 4점으로,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1996~2008년 중 투표율이 국민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상승한 연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값이 투표율이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0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4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투표율의 증감폭 값은 2005~2008년 4점으로, 최근 4년 동안 투표율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투표율의 위기점수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추세 및 증감폭을 통해

산출한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치로 측정한다. 투표율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난 2005~2008년 위기점수는 4.0점으로 나타났다.

〈표 6-123〉 투표율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73.9	-	-	-	-
1991년	72.9	-.0129	.0129	-	-
1992년	71.9	-.0139	.0139	-	-
1993년	69.9	-.0278	.0278	-	-
1994년	68.0	-.0278	.0278	-	-
1995년	66.1	-.0278	.0278	-	-
1996년	63.9	-.0328	.0328	.0220	4
1997년	62.2	-.0262	.0262	.0260	4
1998년	60.6	-.0262	.0262	.0285	3
1999년	59.0	-.0262	.0262	.0282	3
2000년	57.2	-.0306	.0306	.0278	4
2001년	58.1	.0149	.0149	.0284	3
2002년	58.9	.0149	.0149	.0248	3
2003년	59.8	.0149	.0149	.0225	3
2004년	60.6	.0136	.0136	.0203	3
2005년	57.0	-.0598	.0598	.0178	4
2006년	53.6	-.0598	.0598	.0236	4
2007년	50.4	-.0598	.0598	.0326	4
2008년	46.1	-.0846	.0846	.0416	4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투표율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1996년	-0.0233	-0.0233	-0.0277	-0.0277	-0.0321	-0.0321	-0.0365	-0.0365
1997년	-0.0221	-0.0221	-0.0273	-0.0273	-0.0325	-0.0325	-0.0377	-0.0377
1998년	-0.0213	-0.0213	-0.0270	-0.0270	-0.0327	-0.0327	-0.0384	-0.0384
1999년	-0.0214	-0.0214	-0.0270	-0.0270	-0.0327	-0.0327	-0.0383	-0.0383
2000년	-0.0215	-0.0215	-0.0271	-0.0271	-0.0326	-0.0326	-0.0382	-0.0382
2001년	-0.0213	-0.0213	-0.0270	-0.0270	-0.0327	-0.0327	-0.0384	-0.0384
2002년	-0.0242	-0.0242	-0.0280	-0.0280	-0.0318	-0.0318	-0.0355	-0.0355
2003년	-0.0267	-0.0267	-0.0288	-0.0288	-0.0309	-0.0309	-0.0331	-0.0331
2004년	-0.0291	-0.0291	-0.0296	-0.0296	-0.0301	-0.0301	-0.0306	-0.0306
2005년	-0.0282	-0.0282	-0.0293	-0.0293	-0.0304	-0.0304	-0.0315	-0.0315
2006년	-0.0298	-0.0298	-0.0298	-0.0298	-0.0299	-0.0299	-0.0300	-0.0300
2007년	-0.0253	-0.0253	-0.0283	-0.0283	-0.0314	-0.0314	-0.0344	-0.0344
2008년	-0.0208	-0.0208	-0.0268	-0.0268	-0.0329	-0.0329	-0.0389	-0.0389

〈표 6-124〉 투표율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75.8	-		-	-
1991년	74.8	-.0129		-	-
1992년	73.9	-.0129		-	-
1993년	72.9	-.0129		-	-
1994년	71.9	-.0139		-	-
1995년	69.9	-.0278		-	-
1996년	68.0	-.0278		.0022	3
1997년	66.1	-.0278		.0026	1
1998년	63.9	-.0328		.0028	1
1999년	62.2	-.0262	-.0299	.0028	1
2000년	60.6	-.0262		.0028	2
2001년	59.0	-.0262		.0028	0
2002년	57.2	-.0306		.0019	0
2003년	58.1	.0149		.0011	0
2004년	58.9	.0149		.0002	0
2005년	59.8	.0149		.0006	4
2006년	60.6	.0136		.0000	4
2007년	57.0	-.0598		.0015	4
2008년	53.6	-.0598		.0030	4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125〉 투표율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4	3	3.5
1997년	4	1	2.5
1998년	3	1	2.0
1999년	3	1	2.0
2000년	4	2	3.0
2001년	3	0	1.5
2002년	3	0	1.5
2003년	3	0	1.5
2004년	3	0	1.5
2005년	4	4	4.0
2006년	4	4	4.0
2007년	4	4	4.0
2008년	4	4	4.0

2. 지표명: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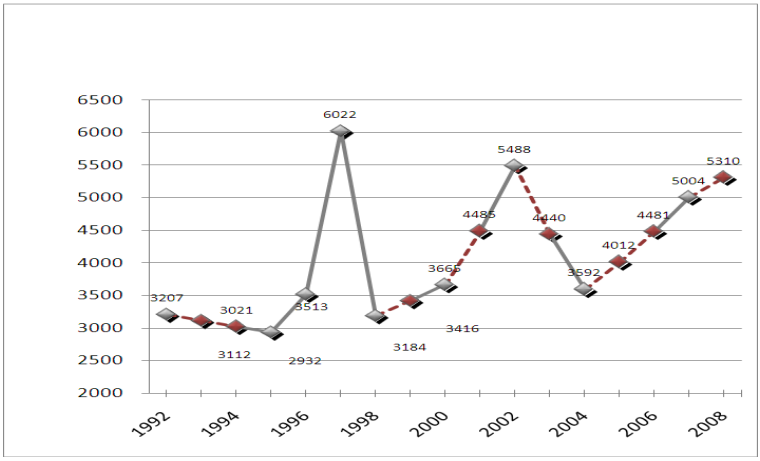
가. 개요

지역별 정당득표률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호남지역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산의 영남지역으로 구분하여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표 차이를 구한 후 호남지역과 영남지역의 표 차이의 차로 설정하였다. 즉, 1988년 제 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정당과 민주당의 차, 1992년 제 14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자당과 민주당의 차, 1995년 제 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에서 민자당과 민주당의 차, 1996년 제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의 차, 1997년 제 15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과 국민회의의 차, 1998년 제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에서 한나라당과 국민회의의 차, 2000년 제 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 2002년 제 16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 2004년 제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차, 2007년 제 17대 대통령선거에서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의 차를 구한 후, 영남지방에서의 표 차이를 호남지방의 표 차이로 뺀 값을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이라고 설정하였다. 단, 선거가 이루어 지지 않은 1993년~1994년, 1999년, 2001년, 2005년~2006년, 2008년은 기울기를 통해 추정하였다.

나. 통계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은 1992~1995년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다가 1997년 6,022천표로 급증하였다. 다음 해인 1998년 3,184천표로 다시 급락하였지만 2002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02~2004년 일시적으로 감소하면서 2004년 3,593천표가 되었지만 다시 증가하여 2008년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도는 5,310천표로 나타났다.

[그림 6-43]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4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2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이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이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이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의 추세값은 1996~1997년 4점, 1998년, 2004년 2점으로, 1996~1997년에는 국민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지역별 정당득표집중이 심화되었던 반면, 2004년에는 지역별 정당득표집중이 완화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세값이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이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3~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4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0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의 증감폭 값은 1996~1997년, 2001~2002년, 2005~2008년 4점으로, 이 시기에 지역별 정당득표집중이 평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의 위기점수는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과 증감정도를 반영한 추세값과 증감폭 값의 평균으로 산출하였다.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의 위기점수는 1996~1997년, 2001~2002년, 2005~2008년에 3.5~4.0점대로 나타나, 국민은 이 시기에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로 인한 사회위기 체감이 심각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6-126〉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2년	3206829			-	-
1993년	3112406	-0.0294	0.0294	-	-
1994년	3020932	-0.0294	0.0294	-	-
1995년	2932147	-0.0294	0.0294	-	-
1996년	3513076	0.1981	0.1981	0.0294	4
1997년	6022485	0.7143	0.7143	0.0716	4
1998년	3183642	-0.4714	0.4714	0.2001	2
1999년	3415676	0.0729	0.0729	0.2885	3
2000년	3664643	0.0729	0.0729	0.2972	3
2001년	4484683	0.2238	0.2238	0.3059	3
2002년	5488221	0.2238	0.2238	0.3110	3
2003년	4439959	-0.1910	0.1910	0.2129	3
2004년	3591918	-0.1910	0.1910	0.1569	2
2005년	4011656	0.1169	0.1169	0.1805	3
2006년	4480619	0.1169	0.1169	0.1893	3
2007년	5004403	0.1169	0.1169	0.1679	3
2008년	5309604	0.0610	0.0610	0.1465	3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단, 자료의 한계로 1996년은 이전 3개년, 1997년은 4개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을 기준값으로 정함.

연도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6년	0.0435	0.0435	0.0494	0.0494	0.0552	0.0552	0.0611	0.0611
1997년	0.0441	0.0441	0.0496	0.0496	0.0550	0.0550	0.0605	0.0605
1998년	0.0029	0.0029	0.0359	0.0359	0.0688	0.0688	0.1018	0.1018
1999년	0.0294	0.0294	0.0447	0.0447	0.0600	0.0600	0.0753	0.0753
2000년	0.0233	0.0233	0.0427	0.0427	0.0620	0.0620	0.0814	0.0814
2001년	0.0171	0.0171	0.0406	0.0406	0.0641	0.0641	0.0876	0.0876
2002년	0.0156	0.0156	0.0401	0.0401	0.0646	0.0646	0.0891	0.0891
2003년	0.0450	0.0450	0.0499	0.0499	0.0548	0.0548	0.0597	0.0597
2004년	0.0282	0.0282	0.0443	0.0443	0.0604	0.0604	0.0765	0.0765
2005년	0.0440	0.0440	0.0496	0.0496	0.0551	0.0551	0.0607	0.0607
2006년	0.0414	0.0414	0.0487	0.0487	0.0560	0.0560	0.0633	0.0633
2007년	0.0478	0.0478	0.0508	0.0508	0.0539	0.0539	0.0569	0.0569
2008년	0.0505	0.0505	0.0517	0.0517	0.0530	0.0530	0.0542	0.0542

〈표 6-127〉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2년	3206829			-	-
1993년	3112406	-0.0294		-	-
1994년	3020932	-0.0294		-	-
1995년	2932147	-0.0294		-	-
1996년	3513076	0.1981		0.0029	4
1997년	6022485	0.7143		0.0027	4
1998년	3183642	-0.4714		0.0165	0
1999년	3415676	0.0729		0.0076	3
2000년	3664643	0.0729	0.0523	0.0097	3
2001년	4484683	0.2238		0.0117	4
2002년	5488221	0.2238		0.0122	4
2003년	4439959	-0.1910		0.0024	0
2004년	3591918	-0.1910		0.0080	0
2005년	4011656	0.1169		0.0028	4
2006년	4480619	0.1169		0.0036	4
2007년	5004403	0.1169		0.0015	4
2008년	5309604	0.0610		0.0006	4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단, 자료의 한계로 1996년은 이전 3개년, 1997년은 4개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을 기준값으로 정함.

〈표 6-128〉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4	4	4.0
1997년	4	4	4.0
1998년	2	0	1.0
1999년	3	3	3.0
2000년	3	3	3.0
2001년	3	4	3.5
2002년	3	4	3.5
2003년	3	0	1.5
2004년	2	0	1.0
2005년	3	4	3.5
2006년	3	4	3.5
2007년	3	4	3.5
2008년	3	4	3.5

3. 지표명: 부패인식지수(C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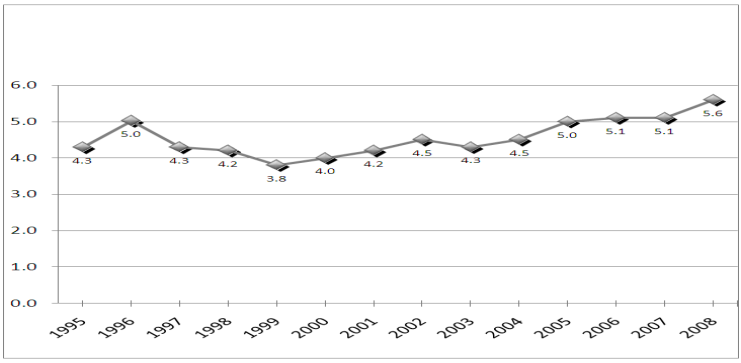
가. 개요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서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에서 1995년부터 180개국을 조사대상국으로 하여 국내외 기업경영자, 국가분석전문가(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부패 관련 인시조사를 실시한 후 이를 집계하여 매년 발표한다. CPI는 공공부문에서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패를 '사적 이익을 위한 공적 직위의 남용'으로 정의한다. CPI는 10점 만점이며 지표값이 높을수록 부패가 적음을 의미한다.

나. 통계

부패인식지수는 1995년 4.3에서 1996년 5.0으로 상승하였으나, 3년 동안 지속적 하락을 보이며 1999년 3.8점이 되었다.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이면서 2008년 CPI는 5.6점으로 나타났다.

[그림 6-44] 부패인식 지수 변화추이: 1995~2008년



자료: 국제투명성기구 홈페이지(http://www.transparency.org/).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부패인식지수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2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4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부패인식지수가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부패인식지수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부패인식지수가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부패인식지수가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부패인식지수의 추세값은 2005년, 2008년은 2점으로, 최근 4년 동안 부패인식지수는 국민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추세값이 부패인식지수가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6~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0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4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부패인식지수의 증감폭 값은 1996~1998년, 2003년, 2006~2007년 3~4점으로, 이 시기에 부패인식지수가 평년보다 큰 폭으로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부패인식지수의 위기값은 부패인식지수의 추세값 및 증감폭 값의 평균값이다. 부패인식지수는 1997~1999년, 2003년, 2007년에 높은 수치를 보

여, 중간 기간 동안 부패인식지수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되었음을 보여준다. 2008년의 위기점수는 1.0점으로 부패인식지수의 위기점수가 감소한 상태이다.

〈표 6-129〉 부패인식지수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5년	4.3	-	-	-	-
1996년	5.0	.1702	.1702	-	-
1997년	4.3	-.1454	.1454	0.1702	3
1998년	4.2	-.0210	.0210	0.1578	3
1999년	3.8	-.0952	.0952	0.1122	3
2000년	4.0	.0526	.0526	0.1079	3
2001년	4.2	.0500	.0500	0.0969	3
2002년	4.5	.0714	.0714	0.0729	3
2003년	4.3	-.0444	.0444	0.0581	3
2004년	4.5	.0465	.0465	0.0627	3
2005년	5.0	.1111	.1111	0.0530	2
2006년	5.1	.0200	.0200	0.0647	3
2007년	5.1	.0000	.0000	0.0587	3
2008년	5.6	.0980	.0980	0.0444	2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부패인식지수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1997년	0.0773	0.0773	0.0433	0.0433	0.0093	0.0093	-0.0248	-0.0248
1998년	0.0300	0.0300	0.0275	0.0275	0.0250	0.0250	0.0226	0.0226
1999년	0.0267	0.0267	0.0264	0.0264	0.0262	0.0262	0.0259	0.0259
2000년	0.0331	0.0331	0.0286	0.0286	0.0240	0.0240	0.0194	0.0194
2001년	0.0286	0.0286	0.0271	0.0271	0.0255	0.0255	0.0239	0.0239
2002년	0.0358	0.0358	0.0295	0.0295	0.0231	0.0231	0.0167	0.0167
2003년	0.0297	0.0297	0.0274	0.0274	0.0251	0.0251	0.0228	0.0228
2004년	0.0283	0.0283	0.0270	0.0270	0.0256	0.0256	0.0242	0.0242
2005년	0.0368	0.0368	0.0298	0.0298	0.0228	0.0228	0.0157	0.0157
2006년	0.0404	0.0404	0.0310	0.0310	0.0216	0.0216	0.0122	0.0122
2007년	0.0386	0.0386	0.0304	0.0304	0.0222	0.0222	0.0140	0.0140
2008년	0.0343	0.0343	0.0289	0.0289	0.0236	0.0236	0.0183	0.0183

〈표 6-130〉 부패인식지수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5년	4.3	-		-	-
1996년	5.0	.1702		-	-
1997년	4.3	-.1454		0.0170	4
1998년	4.2	-.0210		0.0012	4
1999년	3.8	-.0952		0.0001	4
2000년	4.0	.0526		0.0023	0
2001년	4.2	.0500	0.0263	0.0008	0
2002년	4.5	.0714		0.0032	0
2003년	4.3	-.0444		0.0012	4
2004년	4.5	.0465		0.0007	0
2005년	5.0	.1111		0.0035	0
2006년	5.1	.0200		0.0047	3
2007년	5.1	.0000		0.0041	4
2008년	5.6	.0980		0.0027	0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131〉 부패인식지수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	-	2.0
1997년	3	4	3.5
1998년	3	4	3.5
1999년	3	4	3.5
2000년	3	0	1.5
2001년	3	0	1.5
2002년	3	0	1.5
2003년	3	4	3.5
2004년	3	0	1.5
2005년	2	0	1.0
2006년	3	3	3.0
2007년	3	4	3.5
2008년	2	0	1.0

4. 지표명: 정부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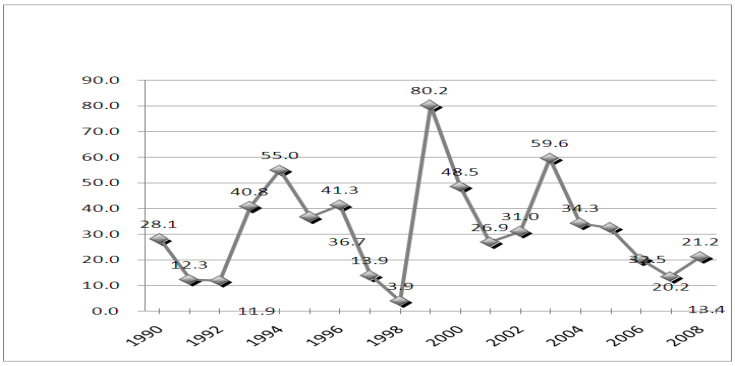
가. 개요

정부 신뢰도는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에서 매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조사되었으며, 1998년에는 동아일보와 한길리서치에서 조사되었다. 정부신뢰도에 대한 질문은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는가?” 또는 “현재 대통령은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는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부 신뢰도가 높아 사회적 위기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통계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의 정부 신뢰도는 급격한 변화를 나타냈다. 우선, 1990년에는 28.1%를 나타냈으나, 1992년 11.9%로 하락하였으며, 1994년에는 55.0%로 다시 상승하였다. 그 후 1998년 3.9%로 다시 급격하게 하락한 후, 1999년 80.2%로 상승하였으며, 2001년에 다시 하락하여 26.9%의 정부신뢰도를 보였다. 이후 다시 상승추세를 보이면서 2003년 59.6%로 측정되었지만 다시 하락하여 2008년 정부신뢰도는 21.2%로 나타났다.

[그림 6-45] 정부 신뢰도 변화추이: 1990~2008년



자료: 조선일보·한국갤럽, 1988~2008. 동아일보·한길리서치, 1998.

다. 위기수준 측정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신뢰도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증감방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평균'의 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 내에 있으면 3점, 양(+)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나면 2점, 음(-)의 방향으로 범위를 벗어난 경우 4점을 부여하였다. 이는 최근 5년의 변화추세와 비교했을 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정부신뢰도가 상승 또는 하락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분석방법이다. 만약 정부신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이 기준값 범위를 양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이는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정부신뢰도가 급격히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반대로 기준값 범위를 음의 방향으로 벗어나면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정부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정부신뢰도의 추세값은 1997년에 4점으로, 1997년 정부신뢰도는 국민이 체감 가능한 수준으로 하락한 하였음을 보여준다.

추세값이 정부신뢰도가 증감하는 방향을 보여주는 수치라면, 증감폭 값은 전세비 증감률이 증감한 정도를 반영한 값이다. 1991~2008년의 각 연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중 양 극단치를 제외한 평균값에 최근 5년간의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의 10분위수 절대값(기준범위)을 가감하여 증감폭 값 산출기준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2점, '평균변화율+1기준범위~평균변화율+3기준범위'는 1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이상'은 0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평균변화율−1기준범위'는 3점, '평균변화율−3기준범위 미만'은 4점을 부여하였다. 각 연도별 증감폭 값 산출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정부신뢰도의 증감폭 값은 1997~1998년, 2005~2007년 4점으로, 이 시기에 정부신뢰도가 평년보다 큰 폭으로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정부신뢰도의 위기값은 부패인식지수의 추세값 및 증감폭 값의 평균값으로, 1997~1998년, 2005~2007년에 높은 수치를 보였으나 1999년, 2008년을 제외한 이외 연도에서도 위기상태를 의미하는 2.0~3.0점 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약 13년 동안 국민은 낮은 정부신뢰도로 인해 사회적 위기를 체감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표 6-132〉 정부신뢰도의 추세값 산출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	기준값1)	추세값(a)
1990년	28.1			-	-
1991년	12.3	-0.5623	0.5623	-	-
1992년	11.9	-0.0325	0.0325	-	-
1993년	40.8	2.4286	2.4286	-	-
1994년	55.0	0.3480	0.3480	-	-
1995년	36.7	-0.3327	0.3327	-	-
1996년	41.3	0.1253	0.1253	0.7408	3
1997년	13.9	-0.6634	0.6634	0.6534	4
1998년	3.9	-0.7194	0.7194	0.7796	3
1999년	80.2	19.5641	19.5641	0.4378	2
2000년	48.5	-0.3953	0.3953	4.2810	3
2001년	26.9	-0.4454	0.4454	4.2935	3
2002년	31.0	0.1524	0.1524	4.3575	3
2003년	59.6	0.9226	0.9226	4.2553	3
2004년	34.3	-0.4245	0.4245	4.2959	3
2005년	32.5	-0.0525	0.0525	0.4680	3
2006년	20.2	-0.3785	0.3785	0.3995	3
2007년	13.4	-0.3366	0.3366	0.3861	3
2008년	21.2	0.5821	0.5821	0.4229	2

주: 1) 기준값은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절대값'의 평균임.

연도	정부신뢰도의 증감폭 값 기준							
	0		1		2		3	4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이상	미만
1996년	0.1694	0.1694	0.0954	0.0954	0.0215	0.0215	-0.0525	-0.0525
1997년	0.2107	0.2107	0.1092	0.1092	0.0077	0.0077	-0.0937	-0.0937
1998년	0.1728	0.1728	0.0966	0.0966	0.0203	0.0203	-0.0559	-0.0559
1999년	0.1330	0.1330	0.0833	0.0833	0.0336	0.0336	-0.0161	-0.0161
2000년	1.1369	1.1369	0.4179	0.4179	-0.3010	-0.3010	-1.0200	-1.0200
2001년	1.1331	1.1331	0.4167	0.4167	-0.2998	-0.2998	-1.0162	-1.0162
2002년	1.0989	1.0989	0.4053	0.4053	-0.2884	-0.2884	-0.9820	-0.9820
2003년	1.1478	1.1478	0.4216	0.4216	-0.3047	-0.3047	-1.0309	-1.0309
2004년	1.2464	1.2464	0.4544	0.4544	-0.3375	-0.3375	-1.1294	-1.1294
2005년	0.0699	0.0699	0.0623	0.0623	0.0547	0.0547	0.0471	0.0471
2006년	0.0676	0.0676	0.0615	0.0615	0.0554	0.0554	0.0493	0.0493
2007년	0.0716	0.0716	0.0629	0.0629	0.0541	0.0541	0.0453	0.0453
2008년	0.0746	0.0746	0.0639	0.0639	0.0531	0.0531	0.0423	0.0423

〈표 6-133〉 정부신뢰도의 증감폭 값

(단위: %, 점)

연도	통계치	전년도 대비 변화율	양 극단치 제외한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값	기준범위1)	증감폭 값(b)
1990년	28.1			-	-
1991년	12.3	-0.5623		-	-
1992년	11.9	-0.0325		-	-
1993년	40.8	2.4286		-	-
1994년	55.0	0.3480		-	-
1995년	36.7	-0.3327		-	-
1996년	41.3	0.1253		0.0370	1
1997년	13.9	-0.6634		0.0507	4
1998년	3.9	-0.7194		0.0381	4
1999년	80.2	19.5641	0.0585	0.0248	0
2000년	48.5	-0.3953		0.3595	3
2001년	26.9	-0.4454		0.3582	3
2002년	31.0	0.1524		0.3468	2
2003년	59.6	0.9226		0.3631	1
2004년	34.3	-0.4245		0.3960	3
2005년	32.5	-0.0525		0.0038	4
2006년	20.2	-0.3785		0.0031	4
2007년	13.4	-0.3366		0.0044	4
2008년	21.2	0.5821		0.0054	0

주: 1) 기준범위는 최근 5년간 '전년도 대비 변화율'의 평균의 '10분위수 절대값임.

〈표 6-134〉 정부신뢰도의 위기점수

(단위: 점)

연도	추세값(a)	증감폭 값(b)	위기점수{(a+b)/2}
1996년	3	1	2.0
1997년	4	4	4.0
1998년	3	4	3.5
1999년	2	0	1.0
2000년	3	3	3.0
2001년	3	3	3.0
2002년	3	2	2.5
2003년	3	1	2.0
2004년	3	3	3.0
2005년	3	4	3.5
2006년	3	4	3.5
2007년	3	4	3.5
2008년	2	0	1.0

07

한국의 사회위기 영역 및 전체의 위기수준 측정

제7장 한국의 사회위기 영역 및 전체의 위기수준 측정

제1절 사회위기 영역 및 지표의 가중치 산출

1. 지표의 가중치

사회위기 지표별 가중치는 '지표 영향도'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각 지표의 영향도 점수를 영역 내 모든 지표의 영향도 점수 총 합계로 나눈 값이 각 지표별 가중치이다. 따라서 각 지표가 해당 영역의 위기수준에 미치는 영향도가 클수록 지표의 가중치는 높은 값을 가지며 영역 내 모든 지표의 가중치 합은 1.00점이다. 영역 내 지표의 가중치 합계가 1.00점이기 때문에,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한 지표 위기점수의 영역별 최고점은 4.00점이다.

$$W_i = \frac{E_i}{\sum_{j=1}^{n} E_j}$$

W_i=지표i 가중치 E_i=지표i 영향력평균 j=영역내 지표번호

고용영역의 지표는 실업률, 청년실업률, 근로빈곤자수, 비정규직 비율이다. 델파이조사에서 분석된 실업률의 영향도 평균은 8.4869, 청년실업률은 8.3614, 근로빈곤자수는 7.4270, 비정규직 비율은 7.5337이며 고용영역 내 4개 지표의 영향도 평균의 합은 31.8090이다. 각 지표의 영향도 평균을 영

역 내 영향도 평균의 합으로 나누면, 실업률은 .2668, 청년실업률은 .2629, 근로빈곤자수는 .2335, 비정규직 비율은 .2368이며 이들이 지표별 가중치다. 가중치의 크기는 실업률, 청년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근로빈곤자수 순이다.

〈표 7-1〉 고용영역의 영향도 및 가중치

(단위: 점)

지표	(분석대상수)	영향도 합	영향도 평균(a)	영향도 평균의 합(b)	가중치(a/b)
실업률	(534)	4,532	8.4869	31.8090	.2668
청년실업률	(534)	4,465	8.3614		.2629
근로빈곤자수	(534)	3,966	7.4270		.2335
비정규직 비율	(534)	4,023	7.5337		.2368
계					1.0000

교육영역의 지표는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학생범죄인원이다. 델파이조사에서 분석된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의 영향도 평균은 8.8614, 중고등학교 중퇴비율은 6.0693, 학생범죄인원은 7.3277이며 교육영역 내 3개지표의 영향도 평균의 합은 22.2584이다. 각 지표의 영향도 평균을 영역 내 영향도 평균의 합으로 나누어 구한 지표별 가중치는 실업률 .3981, 중고등학교 중퇴비율은 .2727, 학생 범죄인원은 .3292이다. 가중치의 크기는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이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학생범죄인원,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순이다.

〈표 7-2〉 교육영역의 영향도 및 가중치

(단위: 점)

지표	(분석대상수)	영향도 합	영향도 평균(a)	영향도 평균의 합(b)	가중치(a/b)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	(534)	4,732	8.8614	22.2584	.3981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534)	3,241	6.0693		.2727
학생범죄인원	(534)	3,913	7.3277		.3292
계					1.0000

주거영역의 지표는 주거비 지출률, 자가 보유율, 전세비 증감률이다. 델파이조사에서 분석된 주거비 지출률의 영향도 평균은 8.0936, 자가 보유율

은 7.1760, 전세비 증감률은 8.0356이며 주거영역 내 3개지표의 영향도 평균의 합은 23.3052이다. 각 지표의 영향도 평균을 영역 내 영향도 평균의 합으로 나누어 구한 지표별 가중치는 주거비 지출률 .3473, 자가 보유율은 .3079, 전세비 증감률은 .3448이다. 주거비 지출률이 가장 큰 수치의 가중치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세비 증감률, 자가 보유율 순이다.

〈표 7-3〉 주거영역의 영향도 및 가중치

(단위: 점)

지표	(분석대상수)	영향도 합	영향도 평균(a)	영향도 평균의 합(b)	가중치(a/b)
주거비 지출률	(534)	4,322	8.0936		.3473
자가 보유율	(534)	3,832	7.1760	23.3052	.3079
전세비 증감률	(534)	4,291	8.0356		.3448
계					1.0000

인구·가족영역의 지표는 총부양비, 고령화지수, 수도권 인구집중도, 출산율 등이다. 델파이조사에서 분석된 총부양비의 영향도 평균은 7.7996, 고령화지수는 7.8127, 수도권 인구집중도은 7.0075, 출산율은 8.1105이며 인구·가족영역 내 4개지표의 영향도 평균의 합은 30.7303이다. 각 지표의 영향도 평균을 영역 내 영향도 평균의 합으로 나누어 구한 각각의 지표별 가중치는 .2538(총부양비), .2542(고령화지수), .2280(수도권 인구집중도), .2639(출산율)이다. 즉, 인구·가족영역에서 출산율이 가장 큰 가중치를 가졌으며, 다음은 고령화지수, 총부양비, 수도권 인구집중도의 순이다.

〈표 7-4〉 인구·가족영역의 영향도 및 가중치

(단위: 점)

지표	(분석대상수)	영향도 합	영향도 평균(a)	영향도 평균의 합(b)	가중치(a/b)
총부양비	(534)	4,165	7.7996		.2538
고령화지수	(534)	4,172	7.8127	30.7303	.2542
수도권 인구집중도	(534)	3,742	7.0075		.2280
출산율	(534)	4,331	8.1105		.2639
계					1.0000

복지영역의 지표는 노후대비율, 연금수혜비율, 요보호아동수, 장애인 출현자수 등이다. 델파이조사에서 분석된 노후대비율의 영향도 평균은 8.3820, 연금수혜비율은 7.6330, 요보호아동수는 7.0393, 장애인 출현자수는 6.0637이며 복지영역 내 4개지표의 영향도 평균의 합은 29.1180이다. 각 지표의 영향도 평균을 영역 내 영향도 평균의 합으로 나누어 구한 각각의 지표별 가중치는 .2879(노후대비율), .2621(연금수혜비율), .2418(요보호아동수), .2082(장애인 출현자수)이다.

〈표 7-5〉 복지영역의 영향도 및 가중치

(단위: 점)

지표	(분석대상수)	영향도 합	영향도 평균(a)	영향도 평균의 합(b)	가중치(a/b)
노후대비율	(534)	4,476	8.3820	29.1180	.2879
연금수혜비율	(534)	4,076	7.6330		.2621
요보호아동수	(534)	3,759	7.0393		.2418
장애인 출현자수	(534)	3,238	6.0637		.2082
		계			1.0000

건강·안전영역의 지표는 평균수명, 자살률, 청소년·노인자살률, 부정식품적발률,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교통사고사망률, 강력범죄율이다. 델파이조사에서 분석된 각 지표의 영향도 평균을 살펴보면 평균수명 6.1124, 자살률 7.7753, 청소년·노인자살률 7.1629, 부정식품적발률 6.3146,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6.8914, 교통사고사망률 6.5000, 강력범죄율 7.8267이며, 건강·안전영역의 7개 지표의 영향도 평균의 합은 48.5833이다. 각 지표의 영향도 평균을 영역 내 영향도 평균의 합으로 나누어 구한 각각의 지표별 가중치는 .1258(평균수명), .1600(자살률), .1474(청소년·노인자살률), .1300(부정식품적발률), .1418(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1338(교통사고사망률), .1611(강력범죄율) 등으로 강력범죄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자살률, 청소년·노인 자살률,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교통사고사망률, 부정식품 적발률, 평균수명 등의 순이었다.

〈표 7-6〉 건강·안전영역의 영향도 및 가중치

(단위: 점)

지표	(분석대상수)	영향도 합	영향도 평균(a)	영향도 평균의 합(b)	가중치(a/b)
평균수명	(534)	3,264	6.1124		.1258
자살률	(534)	4,152	7.7753		.1600
청소년·노인 자살률	(534)	3,825	7.1629		.1474
부정식품적발률	(534)	3,372	6.3146	48.5833	.1300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534)	3,680	6.8914		.1418
교통사고사망률	(534)	3,471	6.5000		.1338
강력범죄율	(531)	4,156	7.8267		.1611
계					1.0000

사회갈등의 지표는 노사분규 발생건수, 파업 손실일수로 총 2개 지표다. 각 지표의 영향도 평균은 노사분규 발생건수 7.9738, 파업 손실일수 7.6760이며, 사회갈등 영역 2개 지표의 영향도 평균의 합은 15.6498이다. 각 지표의 영향도 평균을 영역 내 영향도 평균의 합으로 나누어 구한 지표별 가중치는 .5095(노사분규 발생건수), .4905(파업 손실일수)이다.

〈표 7-7〉 사회갈등의 영향도 및 가중치

(단위: 점)

지표	(분석대상수)	영향도 합	영향도 평균(a)	영향도 평균의 합(b)	가중치(a/b)
노사분규 발생건수	(534)	4,258	7.9738	15.6498	.5095
파업 손실일수	(534)	4,099	7.6760		.4905
계					1.0000

불평등영역의 지표는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남녀 임금격차, 소득불평등,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지역간 소득격차이다. 델파이조사에서 분석된 각 지표의 영향도 평균을 살펴보면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6.7360, 남녀 임금격차 7.0112, 소득불평등 8.7959, 중산층 귀속의식지수 6.8446, 지역간 소득격차 6.9738이며, 불평등영역 5개 지표의 영향도 평균의 합은 36.3614이다. 각 지표의 영향도 평균을 영역 내 영향도 평균의 합으로 나누어 구한 지표별 가중치는 .1853(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1928(남녀 임금격차), .2419(소득불평등), .1882(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1912(지역간 소득격차)이다.

〈표 7-8〉 불평등영역의 영향도 및 가중치

(단위: 점)

지표	(분석대상수)	영향도 합	영향도 평균(a)	영향도 평균의 합(b)	가중치(a/b)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534)	3,597	6.7360		.1853
남녀 임금격차	(534)	3,744	7.0112		.1928
소득불평등	(534)	4,697	8.7959	36.3614	.2419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534)	3,655	6.8446		.1882
지역간 소득격차	(534)	3,724	6.9738		.1912
계					1.0000

경제일반영역의 지표는 원유가, 소비자물가지수, 신용불량자수, 경제성장률, 환율, 외채액, 개인부채액, 기업부채액이다. 델파이조사에서 분석된 각 지표의 영향도 평균을 살펴보면 원유가 7.4419, 소비자물가지수 8.3483, 신용불량자수 6.7341, 경제성장률 7.3708, 환율 6.9775, 외채액 6.4288, 개인부채액 7.8783, 기업부채액 6.2354이며, 경제일반영역 8개 지표의 영향도 평균의 합은 57.4152이다. 각 지표의 영향도 평균을 영역 내 영향도 평균의 합으로 나누어 구한 지표별 가중치는 .1296(원유가), .1454(소비자물가지수), .1173(신용불량자수), .1284(경제성장률), .1215(환율), .1120(외채액), .1372(개인부채액), .1086(기업부채액)이다.

〈표 7-9〉 경제일반영역의 영향도 및 가중치

(단위: 점)

지표	(분석대상수)	영향도 합	영향도 평균(a)	영향도 평균의 합(b)	가중치(a/b)
원유가	(534)	3,974	7.4419		.1296
소비자물가지수	(534)	4,458	8.3483		.1454
신용불량자수	(534)	3,596	6.7341		.1173
경제성장률	(534)	3,936	7.3708	57.4152	.1284
환율	(534)	3,726	6.9775		.1215
외채액	(534)	3,433	6.4288		.1120
개인부채액	(534)	4,207	7.8783		.1372
기업부채액	(531)	3,311	6.2354		.1086
계					1.0000

정치일반영역의 지표는 투표율,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부패인식지수, 정부신뢰도 등이다. 델파이조사에서 분석된 각 지표의 영향도 평균을 살펴보면 투표율 7.0674,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6.5873, 부패인식지수 7.9157, 정부신뢰도 8.5356이며, 정치일반영역 4개 지표의 영향도 평균의 합은 30.1030이다. 각 지표의 영향도 평균을 영역 내 영향도 평균의 합으로 나누어 구한 각각의 지표별 가중치는 .2348(투표율), .2187(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2630(부패인식지수), .2835(정부신뢰도)이다.

〈표 7-10〉 정치일반영역의 영향도 및 가중치

(단위: 점)

지표	(분석대상수)	영향도 합	영향도 평균(a)	영향도 평균의 합(b)	가중치(a/b)
투표율	(534)	3,774	7.0674	30.1030	.2348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534)	3,516	6.5843		.2187
부패인식지수	(534)	4,227	7.9157		.2630
정부신뢰도	(534)	4,558	8.5356		.2835
계					1.0000

2. 영역의 가중치

영역의 가중치는 '영역 영향도'를 고려하여 위의 수식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각 영역의 영향도 점수를 영역 내 모든 영역의 영향도 점수 총 합계로 나눈 값이 각 영역의 가중치다. 따라서 각 영역이 전체사회의 위기수준에 미치는 영향도가 클수록 영역의 가중치는 높은 값을 가지며 모든 영역의 가중치 합은 1.00점이다. 모든 영역의 가중치 합이 1.00이기 때문에, 영역 가중치를 적용한 후 산출한 사회위기점수의 최고점은 4.00점이다.

$$W_p = \frac{E_p}{\sum_{k=1}^{10} E_k}$$

W_p=p영역 가중치 E_p=p영역 영향력평균 k=영역번호

각 영역의 영향도 평균은 고용영역 8.2603, 교육영역, 6.8801, 주거영역 6.1629, 인구·가족영역 5.8989, 복지영역 6.0300, 건강·안전영역 5.9625, 사회갈등·문화영역 6.1891, 불평등영역 6.1030, 경제일반영역 7.3539, 정치일반영역 5.4719이다.

〈표 7-11〉 위기영역별 영향도 및 가중치

(단위: 점)

영역	(분석대상수)	영향도 합	영향도 평균(a)	영향도 평균의 합(b)	가중치(a/b)
고용	(534)	4,411	8.2603	64.3127	.1284
교육	(534)	3,674	6.8801		.1070
주거	(534)	3,291	6.1629		.0958
인구·가족	(534)	3,150	5.8989		.0917
복지	(534)	3,220	6.0300		.0938
건강·안전	(534)	3,184	5.9625		.0927
사회갈등·문화	(534)	3,305	6.1891		.0962
불평등	(534)	3,259	6.1030		.0949
경제일반	(534)	3,927	7.3539		.1143
정치일반	(534)	2,922	5.4719		.0851
계					1.0000

제2절 위기영역별 사회위기 수준

단계	계산식
1단계	$PI_t = \sum_{i=1}^{n} I_i W_i$
2단계	$HPI_t = \frac{PI_t}{4} \times 100$

PI=영역 위기점수 HPI=(100점 환산)영역 위기점수

t=연도 W_i=지표i 가중치 I_i=지표i 위기점수

1. 고용영역의 사회위기수준

고용영역의 각 지표별 위기수준은 <표 7-12>와 같다. 실업률의 위기점수는 1997~1998년, 2003~2004년, 2008년에, 청년 실업률은 1997~1998년, 2003~2004년, 근로빈곤자수는 1996년, 1998년, 2000년, 2002~2003년, 비정규직 비율은 1996~2000년, 2002년에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고용영역의 4개 지표는 공통적으로 IMF경제위기가 일어난 1998년, 신용카드 유동성대란이 발생한 2003년에 높은 위기점수를 보여 국가의 경제위기가 국민의 위기체감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을 보여주었다.

<표 7-12>에 제시된 지표별 가중치는 각 지표가 영역의 위기수준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영역 내 지표별 가중치가 각각 .2668(실업률), .2629(청년실업률), .2335(근로빈곤자수), .2368(비정규직 비율)이다. 이를 지표의 위기점수에 곱하여 각 지표가 영역 내 위기수준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반영한 지표별 위기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표 7-12〉 고용영역 사회위기 지표의 위기수준 및 가중치

(단위: 점)

연도	실업률		청년실업률		근로빈곤자수		비정규직 비율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1996	1.50		2.00		4.00		4.00	
1997	4.00		4.00		1.50		4.00	
1998	4.00		4.00		4.00		3.50	
1999	2.00		1.50		1.50		4.00	
2000	1.50		1.50		3.50		3.50	
2001	2.50		3.00		1.50		1.50	
2002	1.50	.2668	1.50	.2629	3.50	.2335	3.50	.2368
2003	3.50		3.50		4.00		1.00	
2004	3.50		3.50		1.50		1.50	
2005	3.00		1.50		2.50		1.50	
2006	1.50		1.50		2.50		1.50	
2007	1.00		1.00		2.50		1.00	
2008	3.50		1.50		2.5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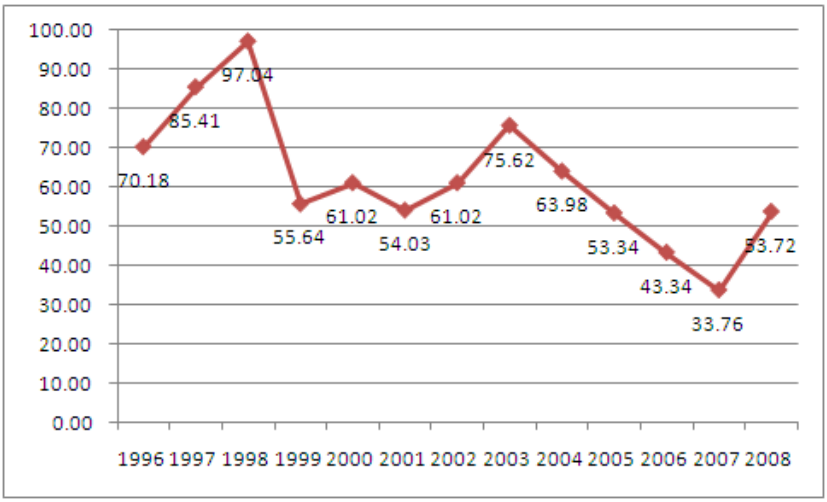
각 지표별 위기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가중치반영 지표별 위기점수'는 위 <표 7-13>과 같다. 각 연도의 지표별 위기점수를 합하면 연도별 영역내 위기점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4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또한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100점을 최고점으로 환산한 값도 제시하였다. 고용영역의 사회위기수준은 1997~1998년 IMF 경제위기 전후로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8년에는 97.04점을 나타냈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를 빠른 속도로 극복하면서 1999년 위기점수는 55.64점이었다. 이후 4년 동안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2003년 신용카드 유동성 대란을 계기로 2003년 위기점수는 75.62점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만에 안정세를 찾아 2005~2007년의 위기점수는 최근 13년 동안의 위기점수는 최저점을 보였다. 특히, 2007년 고용영역의 위기점수는 33.76점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국민의 위기체감도는 매우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최근인 2008년에 약 20점이 상승한 위기점수를 가져, 고용영역의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7-13〉 고용영역의 사회위기수준

(단위: 점, %)

연도	실업률	청년실업률	근로빈곤자수	비정규직 비율	합계	백분율 환산
1996	0.40	0.53	0.93	0.95	2.81	70.18
1997	1.07	1.05	0.35	0.95	3.42	85.41
1998	1.07	1.05	0.93	0.83	3.88	97.04
1999	0.53	0.39	0.35	0.95	2.23	55.64
2000	0.40	0.39	0.82	0.83	2.44	61.02
2001	0.67	0.79	0.35	0.36	2.16	54.03
2002	0.40	0.39	0.82	0.83	2.44	61.02
2003	0.93	0.92	0.93	0.24	3.02	75.62
2004	0.93	0.92	0.35	0.36	2.56	63.98
2005	0.80	0.39	0.58	0.36	2.13	53.34
2006	0.40	0.39	0.58	0.36	1.73	43.34
2007	0.27	0.26	0.58	0.24	1.35	33.76
2008	0.93	0.39	0.58	0.24	2.15	53.72

[그림 7-1] 고용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2. 교육영역의 사회위기수준

교육영역의 각 지표별 위기수준은 <표 7-14>와 같다.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의 위기점수는 2000년, 2003년에, 중·고등학교 중퇴비율은 1996~1998년, 2001년, 2006~2008년, 학생범죄인원은 1996~1998년, 2000년, 2007년에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특히 중·고등학교 중퇴비율과 학생범죄인원의 위기점수는 2003~2005년에 비교적 낮은 수준의 위기상태를 보이다가 2006년부터 위기점수가 급격히 상승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표 7-14>에 제시된 지표별 가중치는 각 지표가 영역의 위기수준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영역 내 지표별 가중치가 각각 .3981(자녀 사교육비 지출액), .2727(중·고등학교 중퇴비율), .3292(학생범죄인원)다. 이를 지표의 위기점수에 곱하여 각 지표가 영역 내 위기수준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반영한 지표별 위기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표 7-14〉 교육영역 사회위기 지표의 위기수준 및 가중치

(단위: 점)

연도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학생범죄인원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1996	3.00		4.00		4.00	
1997	1.50		4.00		4.00	
1998	1.00		4.00		2.50	
1999	1.50		1.00		1.50	
2000	4.00		3.00		3.50	
2001	1.50		4.00		1.00	
2002	1.50	.3981	1.50	.2727	1.00	.3292
2003	4.00		1.00		1.00	
2004	2.00		1.00		1.50	
2005	1.50		1.00		1.50	
2006	1.50		3.50		2.50	
2007	3.00		4.00		4.00	
2008	2.50		3.50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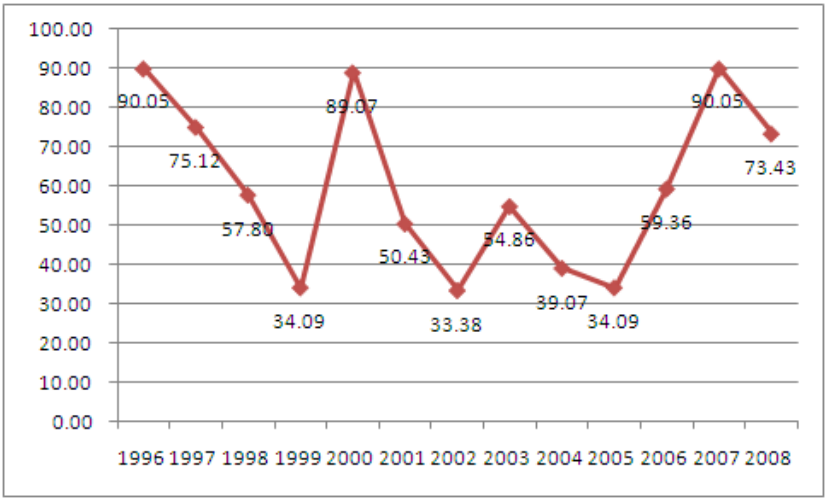
각 지표별 위기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가중치반영 지표별 위기점수'는 위 <표 7-15>와 같다. 각 연도의 지표별 위기점수를 합하면 연도별 영역내 위기점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4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또한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100점을 최고점으로 환산한 값도 제시하였다. 교육영역의 사회위기수준은 1996년, 2000년, 2007년 급속도로 증가하여 89.05~90.05점을 나타냈다. 특히, 2001~2006년 교육영역의 위기점수는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2007~2008년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근 2년 동안 국민은 교육영역으로 인한 사회위기를 체감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표 7-15〉 교육영역의 사회위기수준

(단위: 점, %)

연도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학생범죄인원	합계	백분율 환산
1996	1.19	1.09	1.32	3.60	90.05
1997	0.60	1.09	1.32	3.00	75.12
1998	0.40	1.09	0.82	2.31	57.80
1999	0.60	0.27	0.49	1.36	34.09
2000	1.59	0.82	1.15	3.56	89.07
2001	0.60	1.09	0.33	2.02	50.43
2002	0.60	0.41	0.33	1.34	33.38
2003	1.59	0.27	0.33	2.19	54.86
2004	0.80	0.27	0.49	1.56	39.07
2005	0.60	0.27	0.49	1.36	34.09
2006	0.60	0.95	0.82	2.37	59.36
2007	1.19	1.09	1.32	3.60	90.05
2008	1.00	0.95	0.99	2.94	73.43

[그림 7-2] 교육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3. 주거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주거영역의 각 지표별 위기수준은 <표 7-16>과 같다. 주거비 지출률의 위기점수는 1998년, 2005년 전세비 증감률은 1996년, 1999~2002년,

2006년에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자가 보유율은 최근 13년 동안 3.0점의 위기점수를 유지하고 있었다. 주거영역의 3개 지표 중 전세비 증감률이 비교적 높은 위기상태를 보였다. 특히, IMF 경제위기때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던 전세비 증감률이 IMF 경제위기를 회복하면서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9~2003년 동안 전세비 증감률의 위기점수는 최고치를 보였다.

<표 7-16>에 제시된 지표별 가중치는 각 지표가 영역의 위기수준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거영역 내 지표별 가중치가 각각 .3473(주거비 지출률), .3079(자가 보유율), .3448(전세비 증감률)이다. 이를 지표의 위기점수에 곱하여 각 지표가 영역 내 위기수준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반영한 지표별 위기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표 7-16〉 주거영역 사회위기 지표의 위기수준 및 가중치

(단위: 점)

연도	주거비 지출률		자가 보유율		전세비 증감률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1996	2.25		3.00		4.00	
1997	2.50		3.00		1.50	
1998	3.75		3.00		1.00	
1999	2.75		3.00		4.00	
2000	2.50		3.00		4.00	
2001	2.75		3.00		4.00	
2002	1.75	.3473	3.00	.3079	3.50	.3448
2003	2.25		3.00		1.50	
2004	1.25		3.00		1.50	
2005	3.75		3.00		2.00	
2006	3.00		3.00		3.50	
2007	1.50		3.00		1.50	
2008	2.75		3.00		1.50	

각 지표별 위기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가중치반영 지표별 위기점수'는 위 <표 7-17>과 같다. 각 연도의 지표별 위기점수를 합하면 연도별 영역내 위기점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4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또한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100점을 최고점으로 환산한 값도 제시하였다. 주거영역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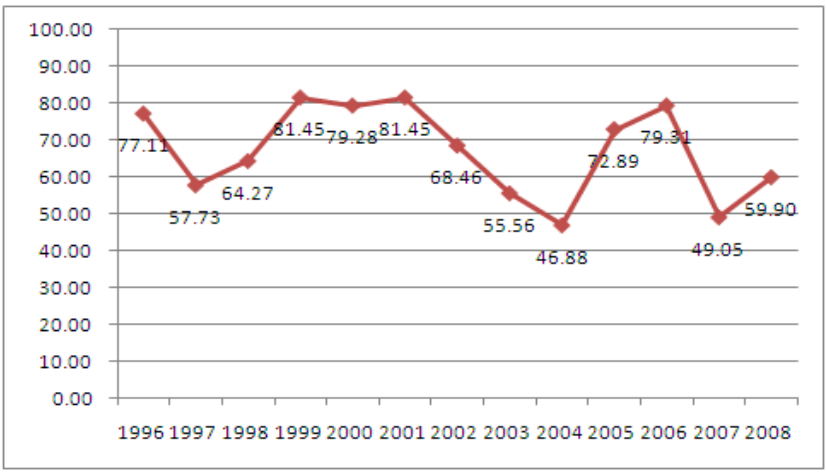
사회위기점수는 1999년 IMF 경제위기 직후에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1년까지 높은 수준의 위기점수를 유지하였다. 이후 다시 감소하다여 2004년 46.88점의 위기점수를 보이면서 주거영역의 위기점수는 매우 안정적인 상태를 보였으나 2004~2005년 다시 급증하여 72.89~79.31점을 나타냈다. 2007~2008년에는 다시 감소된 값인 49~59점을 나타내면서 최근 국민의 위기체감도는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7-17〉 주거영역의 사회위기수준

(단위: 점, %)

연도	주거비 지출률	자가 보유율	전세비 증감률	합계	백분율 환산
1996	0.78	0.92	1.38	3.08	77.11
1997	0.87	0.92	0.52	2.31	57.73
1998	1.30	0.92	0.34	2.57	64.27
1999	0.96	0.92	1.38	3.26	81.45
2000	0.87	0.92	1.38	3.17	79.28
2001	0.96	0.92	1.38	3.26	81.45
2002	0.61	0.92	1.21	2.74	68.46
2003	0.78	0.92	0.52	2.22	55.56
2004	0.43	0.92	0.52	1.88	46.88
2005	1.30	0.92	0.69	2.92	72.89
2006	1.04	0.92	1.21	3.17	79.31
2007	0.52	0.92	0.52	1.96	49.05
2008	0.96	0.92	0.52	2.40	59.90

[그림 7-3] 주거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4. 인구·가족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인구·가족영역의 각 지표별 위기수준은 <표 7-18>과 같다. 총부양비의 위기점수는 2000~2003년, 고령화지수는 1996년, 2005~2008년에,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2001~2003년, 출산율은 2001~2008년에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인구·가족영역의 4개 지표는 공통적으로 2000년대에 더 높은 위기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년층의 증대 및 최근 급속도로 감소된 출산율의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수도권 인구집중도의 위기수준이 2001~2003년에도 높았다는 사실을 통해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7-18>에 제시된 지표별 가중치는 각 지표가 영역의 위기수준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가족영역 내 지표별 가중치가 각각 .2538(총부양비), .2542(고령화지수), .2280(수도권 인구 집중도), .2639(출산율)이다. 이를 지표의 위기점수에 곱하여 각 지표가 영역 내 위기수준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반영한 지표별 위기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표 7-18〉 인구·가족영역 사회위기 지표의 위기수준 및 가중치

(단위: 점)

연도	총부양비		고령화지수		수도권 인구 집중도		출산율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1996	1.00		3.50		1.50		3.00	
1997	1.00		3.00		1.50		3.00	
1998	2.00		3.00		1.50		3.00	
1999	3.00		3.00		1.50		3.00	
2000	3.50		2.50		2.50		3.00	
2001	3.50		2.50		3.50		4.00	
2002	3.50	.2538	3.00	.2542	3.50	.2280	4.00	.2639
2003	3.50		3.00		4.00		4.00	
2004	3.00		3.00		2.00		4.00	
2005	3.00		3.50		3.00		4.00	
2006	3.00		3.50		1.50		4.00	
2007	2.50		3.50		2.00		4.00	
2008	1.00		3.50		2.00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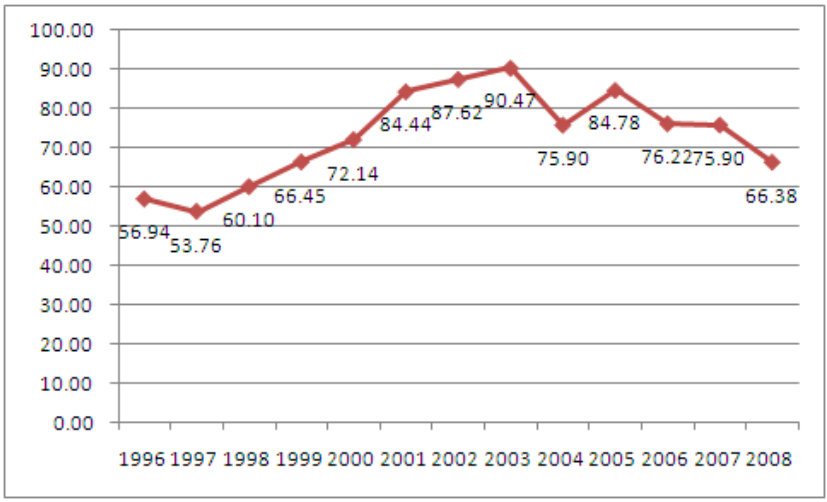
각 지표별 위기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가중치반영 지표별 위기점수'는 위 <표 7-19>과 같다. 각 연도의 지표별 위기점수를 합하면 연도별 영역내 위기점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4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또한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100점을 최고점으로 환산한 값도 제시하였다. 인구·가족영역의 사회위기수준은 2001~2003년, 2005년에 84.44~90.47점으로 나타나 인구·가족영역으로 인한 국민의 위기체감이 상당하였던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낮은 출산율로 인해 유년인구가 급속히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총부양비의 위기점수가 낮아져 2006~2008년 인구·가족영역의 위기점수는 66.38~75.90점으로 비교적 안정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고령화지수, 출산율의 위기점수가 매우 높아, 낮은 출산율에 대한 정부의 보육서비스 등 각종 정책 및 서비스가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7-19〉 인구·가족영역의 사회위기수준

(단위: 점, %)

연도	총부양비	고령화지수	수도권 인구집중도	출산율	합계	백분율 환산
1996	0.25	0.89	0.34	0.79	2.28	56.94
1997	0.25	0.76	0.34	0.79	2.15	53.76
1998	0.51	0.76	0.34	0.79	2.40	60.10
1999	0.76	0.76	0.34	0.79	2.66	66.45
2000	0.89	0.64	0.57	0.79	2.89	72.14
2001	0.89	0.64	0.80	1.06	3.38	84.44
2002	0.89	0.76	0.80	1.06	3.50	87.62
2003	0.89	0.76	0.91	1.06	3.62	90.47
2004	0.76	0.76	0.46	1.06	3.04	75.90
2005	0.76	0.89	0.68	1.06	3.39	84.78
2006	0.76	0.89	0.34	1.06	3.05	76.22
2007	0.63	0.89	0.46	1.06	3.04	75.90
2008	0.25	0.89	0.46	1.06	2.66	66.38

[그림 7-4] 인구·가족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5. 복지영역의 사회위기수준

복지영역의 각 지표별 위기수준은 <표 7-20>과 같다. 노후대비율의 위기점수는 1996~2005년에, 연금수혜비율은 1997년, 1999~2003년, 2006년 요보호아동수는 1996~1998년, 2001년, 2008년, 장애인 출현자수는 1997~1998년, 2000년에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복지영역의 4개 지표는 타 영역과는 다르게 오히려 1990년대보다 2000년대에 안정적 상태를 보이고 있다. 모든 지표가 1990년대에는 높은 위기수준을 보인 반면, 2000년대부터 위기점수가 낮아져 복지영역에서의 위기체감도는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0>에 제시된 지표별 가중치는 각 지표가 영역의 위기수준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영역 내 지표별 가중치가 각각 .2879(노후대비율), .2621(연금수혜비율), .2418(요보호아동수), .2082(장애인 출현자수)다. 이를 지표의 위기점수에 곱하여 각 지표가 영역 내 위기수준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반영한 지표별 위기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표 7-20〉 복지영역 사회위기 지표의 위기수준 및 가중치

(단위: 점)

연도	노후대비율		연금수혜비율		요보호아동수		장애인 출현자수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1996	3.50		3.00		3.50		2.00	
1997	3.50		3.50		4.00		4.00	
1998	3.50		1.00		4.00		4.00	
1999	3.50		3.50		1.50		2.50	
2000	4.00		4.00		2.00		4.00	
2001	4.00		3.50		4.00		3.00	
2002	4.00	.2879	3.50	.2621	1.50	.2418	2.00	.2082
2003	3.50		3.50		2.00		3.00	
2004	3.50		1.00		1.50		2.00	
2005	3.50		2.50		1.50		2.00	
2006	1.00		4.00		1.50		2.00	
2007	1.00		3.00		1.50		1.50	
2008	2.00		3.00		4.00		1.50	

각 지표별 위기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가중치반영 지표별 위기점수'는 위 <표 7-21>과 같다. 각 연도의 지표별 위기점수를 합하면 연도별 영역내 위기점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4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또한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100점을 최고점으로 환산한 값도 제시하였다. 복지영역의 사회위기수준은 1997년, 2000~2001년 급속도로 증가하여 2001년에는 91.52점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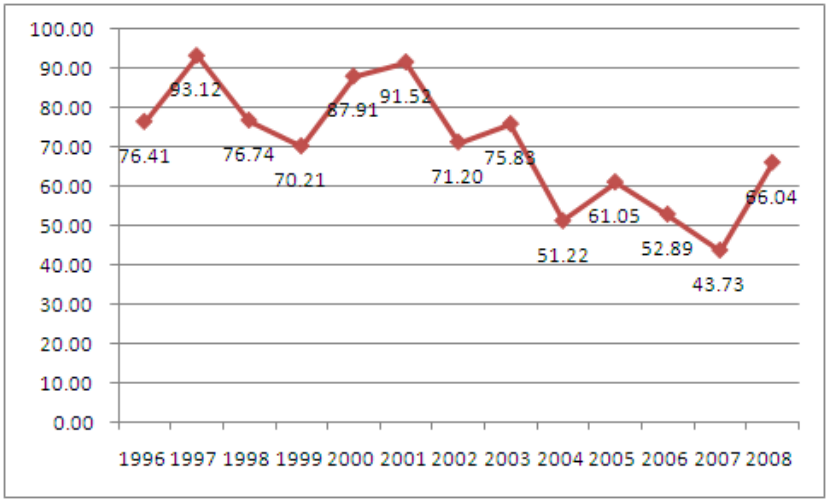
그러나 이후에는 위기점수가 안정화되면서 2007년 위기점수는 13년 만에 처음으로 1점대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이는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사회의 준비가 2000년에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고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2000년대에 강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2001~2003년에 걸친 등록장애인 범위의 확대와 장애인 대상 서비스·정책의 증가로 2003년까지 등록장애인 수가 급증하였던 것에 비해, 2004~2008년 등록장애인 수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완만하였던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표 7-21〉 복지영역의 사회위기수준

(단위: 점, %)

연도	노후대비율	연금수혜비율	요보호아동수	장애인 출현자수	합계	백분율 환산
1996	1.01	0.79	0.85	0.42	3.06	76.41
1997	1.01	0.92	0.97	0.83	3.72	93.12
1998	1.01	0.26	0.97	0.83	3.07	76.74
1999	1.01	0.92	0.36	0.52	2.81	70.21
2000	1.15	1.05	0.48	0.83	3.52	87.91
2001	1.15	0.92	0.97	0.62	3.66	91.52
2002	1.15	0.92	0.36	0.42	2.85	71.20
2003	1.01	0.92	0.48	0.62	3.03	75.83
2004	1.01	0.26	0.36	0.42	2.05	51.22
2005	1.01	0.66	0.36	0.42	2.44	61.05
2006	0.29	1.05	0.36	0.42	2.12	52.89
2007	0.29	0.79	0.36	0.31	1.75	43.73
2008	0.58	0.79	0.97	0.31	2.64	66.04

[그림 7-5] 복지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6. 건강·안전영역의 사회위기수준

건강·안전영역의 각 지표별 위기수준은 <표 7-22>와 같다. 자살률은 1996년, 1998년, 2002~2003년, 2007년, 청소년·노인 자살률은 1996년,

1998년, 2002~2003년, 부정식품 적발률은 1996~1998년, 2007년,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은 1998년, 2000년, 2004~2007년, 교통사고 사망률은 1996년, 1999년, 2003년, 강력범죄율은 1996년, 1998~2000년에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건강·안전영역의 7개 지표는 공통적으로 IMF경제위기가 일어난 1998년, 신용카드 유동성대란이 발생한 2003년에 높은 위기점수를 보여 국가의 경제위기가 국민의 건강·안전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특히 대한민국이 맞이한 가장 큰 위기였던 1998년 IMF경제위기때는 자살률, 청소년·노인자살률, 부정식품 적발률,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 강력범죄율이 모두 4.0점으로 나타나, IMF경제위기가 개인을 위협하여 각종 위법 및 삶의 포기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22>에 제시된 지표별 가중치는 각 지표가 영역의 위기수준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건강·안전영역 내 지표별 가중치가 각각 .1258(평균수명), .1600(자살률), .1474(청소년·노인 자살률), .1300(부정식품 적발률), .1418(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 .1338(교통사고 사망률), 그리고 .1611(강력범죄율)이다. 이를 지표의 위기점수에 곱하여 각 지표가 영역 내 위기수준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반영한 지표별 위기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표 7-22〉 건강·안전영역 사회위기 지표의 위기수준 및 가중치

(단위: 점)

연도	평균수명		자살률		청소년·노인 자살률		부정식품 적발률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		교통사고 사망률		강력범죄율	
	위기 수준	가중치	위기 수준	가중치	위기 수준	가중치	위기 수준	가중치	위기 수준	가중치	위기 수준	가중치	위기 수준	가중치
1996	1.00		4.00		4.00		3.50		1.50		3.50		3.50	
1997	1.00		1.50		1.25		3.50		1.00		1.00		2.00	
1998	1.00		4.00		4.00		4.00		4.00		1.00		4.00	
1999	1.00		1.00		1.75		1.00		1.50		3.50		4.00	
2000	1.00		1.50		1.50		1.00		4.00		2.50		4.00	
2001	1.00		2.00		2.75		1.00		3.00		1.00		2.00	
2002	1.00	.1258	4.00	.1600	3.75	.1474	1.50	.1300	1.00	.1418	1.50	.1338	1.00	.1611
2003	1.00		4.00		4.00		2.50		2.00		3.50		3.00	
2004	1.00		1.50		2.00		4.00		3.50		1.00		1.50	
2005	1.00		1.50		2.75		1.50		3.50		2.00		1.50	
2006	1.00		1.50		1.25		1.00		4.00		3.00		1.00	
2007	1.00		3.50		2.50		4.00		3.50		3.00		1.50	
2008	1.00		1.50		2.00		1.50		3.00		1.00		1.50	

각 지표별 위기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가중치반영 지표별 위기점수'는 위 <표 7-23>과 같다. 각 연도의 지표별 위기점수를 합하면 연도별 영역내 위기점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4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또한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100점을 최고점으로 환산한 값도 제시하였다. 건강·안전영역의 사회위기수준은 1998년 IMF 경제위기 당시에 급속도로 증가하여 80.53점을 나타냈다. 그러나 IMF전인 1997년,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매우 안정적 상태를 보여 40점대 초반의 위기점수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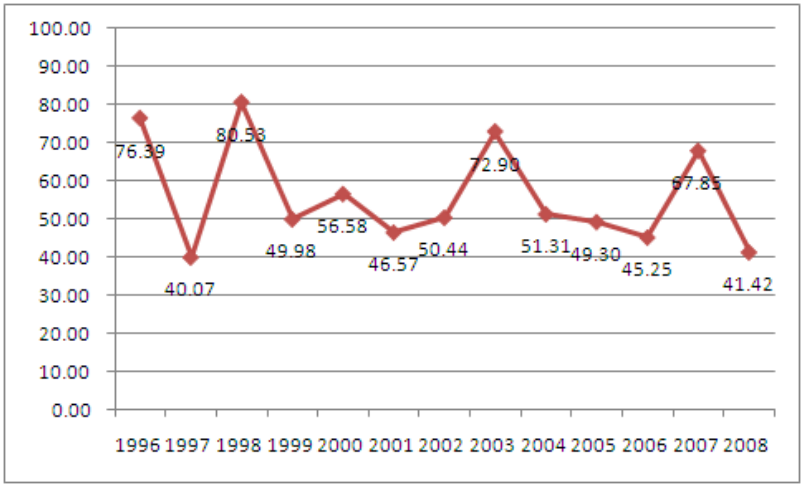
지표별 위기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가중치반영 지표별 위기점수'는 <표 7-23>과 같다. 각 연도의 지표별 위기점수를 합하면 연도별 영역 내 위기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또한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백분율 환산 수치로 풀이하면, 1999~2002년에 비교적 보통 이하 수준이며, 이후 2003년과 2007년에 70%이상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3〉 건강·안전영역의 사회위기수준

(단위: 점, %)

연도	평균 수명	자살률	청소년·노인 자살률	부정식품 적발률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	교통사고 사망률	강력 범죄율	합계	백분율 환산
1996	0.13	0.64	0.59	0.45	0.21	0.47	0.56	3.06	76.39
1997	0.13	0.24	0.18	0.45	0.14	0.13	0.32	1.60	40.07
1998	0.13	0.64	0.59	0.52	0.57	0.13	0.64	3.22	80.53
1999	0.13	0.16	0.26	0.13	0.21	0.47	0.64	2.00	49.98
2000	0.13	0.24	0.22	0.13	0.57	0.33	0.64	2.26	56.58
2001	0.13	0.32	0.41	0.13	0.43	0.13	0.32	1.86	46.57
2002	0.13	0.64	0.55	0.19	0.14	0.20	0.16	2.02	50.44
2003	0.13	0.64	0.59	0.32	0.28	0.47	0.48	2.92	72.90
2004	0.13	0.24	0.29	0.52	0.50	0.13	0.24	2.05	51.31
2005	0.13	0.24	0.41	0.19	0.50	0.27	0.24	1.97	49.30
2006	0.13	0.24	0.18	0.13	0.57	0.40	0.16	1.81	45.25
2007	0.13	0.56	0.37	0.52	0.50	0.40	0.24	2.71	67.85
2008	0.13	0.24	0.29	0.19	0.43	0.13	0.24	1.66	41.42

[그림 7-6] 건강·안전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7. 사회갈등·문화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사회갈등·문화영역의 각 지표별 위기수준은 <표 7-24>와 같다. 노사분규 발생건수의 위기점수는 1998~2000년, 2002년, 2004년에, 파업 손실일

수는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 2006년, 2008년에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사회갈등·문화영역의 2개 지표는 IMF경제위기가 일어난 1998년에 높은 위기상태를 보이면서 이 당시에 노사간 갈등이 심각하였다는 공통점 외에는 서로 다른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표 7-24>에 제시된 지표별 가중치는 각 지표가 영역의 위기수준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갈등·문화영역 내 지표별 가중치가 각각 .5095(노사분규 발생건수)와 .4905(파업 손실일수)이다. 이를 지표의 위기점수에 곱하여 각 지표가 영역 내 위기수준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반영한 지표별 위기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표 7-24〉 사회갈등·문화영역 사회위기 지표의 위기수준 및 가중치

(단위: 점)

연도	노사분규 발생건수		파업 손실일수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1996	2.50		4.00	
1997	1.50		1.50	
1998	4.00		4.00	
1999	4.00		2.00	
2000	3.50		3.50	
2001	2.00		1.50	
2002	4.00	.5095	3.50	.4905
2003	2.50		1.50	
2004	4.00		1.50	
2005	1.00		1.50	
2006	1.00		4.00	
2007	1.50		1.00	
2008	1.50		4.00	

각 지표별 위기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가중치반영 지표별 위기점수'는 위 <표 7-24>와 같다. 각 연도의 지표별 위기점수를 합하면 연도별 영역내 위기점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4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또한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100점을 최고점으로 환산한 값도 제시하였다. 사회갈등·문화영역의 사회위기수준은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에 높은 수준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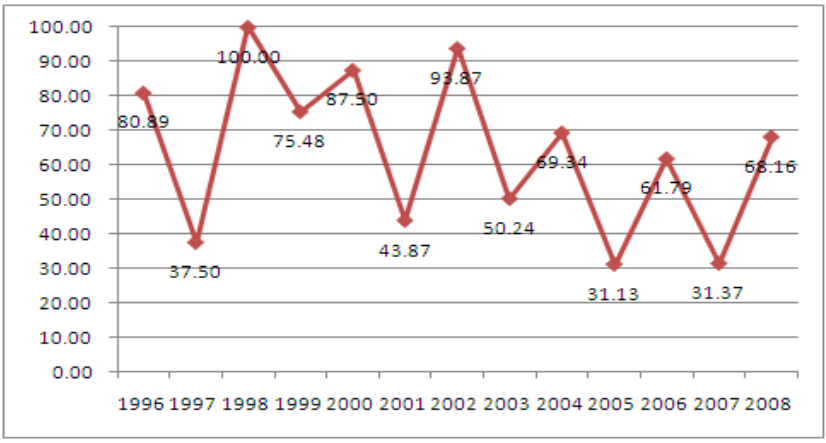
보였다. 특히 1998년 위기점수는 100.00점으로, IMF시기 노사간 갈등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회갈등·문화영역의 위기점수가 지난 13년 동안 특정한 추세를 보이지 않아, 정부가 노사갈등 중재역할을 일관적으로 하지 않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사갈등의 완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정부는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

〈표 7-25〉 사회갈등·문화영역의 사회위기수준

(단위: 점, %)

연도	노사분규 발생건수	파업 손실일수	합계	백분율 환산
1996	1.27	1.96	3.24	80.89
1997	0.76	0.74	1.50	37.50
1998	2.04	1.96	4.00	100.00
1999	2.04	0.98	3.02	75.48
2000	1.78	1.72	3.50	87.50
2001	1.02	0.74	1.75	43.87
2002	2.04	1.72	3.75	93.87
2003	1.27	0.74	2.01	50.24
2004	2.04	0.74	2.77	69.34
2005	0.51	0.74	1.25	31.13
2006	0.51	1.96	2.47	61.79
2007	0.76	0.49	1.25	31.37
2008	0.76	1.96	2.73	68.16

[그림 7-7] 사회갈등·문화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8. 불평등영역의 사회위기수준

불평등영역의 각 지표별 위기수준은 <표 7-26>과 같다.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의 위기점수는 1998년, 2002~2003년, 2007년, 남녀 임금격차는 1997년과 2000년, 소득불평등 1996년, 1998~1999년, 2001년, 2004년, 2006~2007년,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는 1996~1997년, 2004~2006년, 지역간 소득격차는 1999년, 2007~2008년에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불평등영역의 5개 지표 중 남녀 임금격차는 2000년대 들어서 비교적 안정적 추세를 보였던 것에 비해, 소득불평등은 1996~2008년 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위기상태를 보였다.

<표 7-26>에 제시된 지표별 가중치는 각 지표가 영역의 위기수준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불평등영역 내 지표별 가중치는 각각 .1853(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 .1928(남녀 임금격차), .2419(소득불평등), .1882(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그리고 .1912(지역간 소득격차)이다. 이를 지표의 위기점수에 곱하여 각 지표가 영역 내 위기수준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반영한 지표별 위기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각 지표별 위기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가중치반영 지표별 위기점수'는 위 <표 7-27>과 같다. 각 연도의 지표별 위기점수를 합하면 연도별 영역내 위기점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4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또한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100점을 최고점으로 환산한 값도 제시하였다. 불평등영역의 사회위기수준은 1996~1999년, 2004~2008년에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시기에도 심각한 위기상태를 보인 연도는 없었다. 1996~2008년 중 가장 높은 위기수준은 2007년 73.87점으로 나타났다.

〈표 7-26〉 불평등영역 사회위기 지표의 위기수준 및 가중치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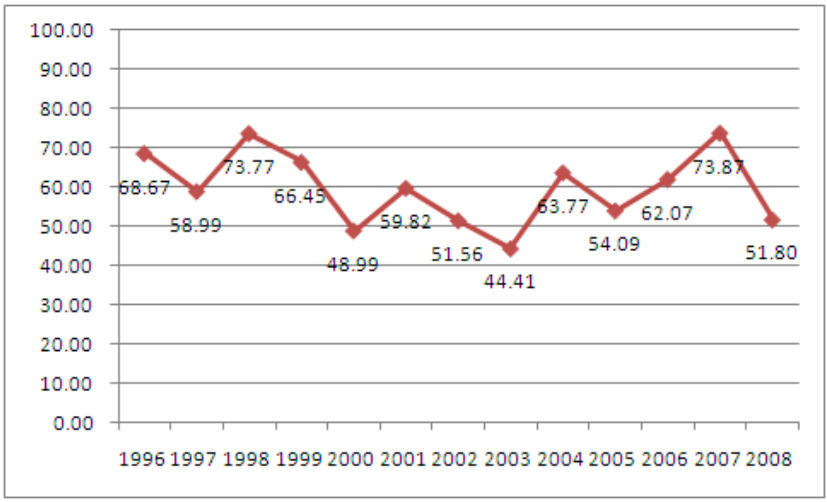
연도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		남녀 임금격차		소득불평등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지역간 소득격차	
	위기 수준	가중치	위기 수준	가중치	위기 수준	가중치	위기 수준	가중치	위기 수준	가중치
1996	1.00		3.00		3.50		4.00		2.00	
1997	1.00		3.50		1.50		4.00		2.00	
1998	4.00		2.50		4.00		2.00		2.00	
1999	1.00		3.00		3.50		2.00		3.50	
2000	1.00		3.50		1.00		1.50		3.00	
2001	1.50		2.00		4.00		1.50		2.50	
2002	3.50	.1853	1.50	.1928	1.50	.2419	1.50	.1882	2.50	.1912
2003	3.50		1.50		1.50		1.00		1.50	
2004	1.50		2.00		3.50		4.00		1.50	
2005	1.50		2.50		1.50		4.00		1.50	
2006	1.00		1.50		4.00		4.00		1.50	
2007	3.50		1.50		4.00		1.50		4.00	
2008	2.00		1.50		1.50		1.50		4.00	

〈표 7-27〉 불평등영역의 사회위기수준

(단위: 점, %)

연도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	남녀 임금격차	소득 불평등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지역간 소득격차	합계	백분율환산
1996	0.19	0.58	0.85	0.75	0.38	2.75	68.67
1997	0.19	0.67	0.36	0.75	0.38	2.36	58.99
1998	0.74	0.48	0.97	0.38	0.38	2.95	73.77
1999	0.19	0.58	0.85	0.38	0.67	2.66	66.45
2000	0.19	0.67	0.24	0.28	0.58	1.96	48.99
2001	0.28	0.39	0.97	0.28	0.48	2.39	59.82
2002	0.65	0.29	0.36	0.28	0.48	2.06	51.56
2003	0.65	0.29	0.36	0.19	0.29	1.78	44.41
2004	0.28	0.39	0.85	0.75	0.29	2.55	63.77
2005	0.28	0.48	0.36	0.75	0.29	2.16	54.09
2006	0.19	0.29	0.97	0.75	0.29	2.48	62.07
2007	0.65	0.29	0.97	0.28	0.77	2.95	73.87
2008	0.37	0.29	0.36	0.28	0.77	2.07	51.80

[그림 7-8] 불평등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9. 경제일반영역의 사회위기수준

경제일반영역의 각 지표별 위기수준은 <표 7-28>와 같다. 원유가의 위기점수는 1996년, 1999~2000년, 2003~2006년, 2008년에, 소비자물가지수는 1998년과 2008년, 신용불량자수는 1996년, 1998년, 2003년, 경제성장률은 1997~1998년, 2003년, 2008년, 환율은 1997~1008년, 2004년, 2008년, 외채액은 1996년, 2006~2007년, 개인부채액은 1996~1997년, 2001~2002년, 기업부채액은 1996~1997년, 2002년, 2005년, 2007년에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제일반영역의 8개 지표는 공통적으로 IMF경제위기 전후인 1997~1998년, 신용카드 유동성대란이 발생한 2003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에 높은 위기점수를 보여 국가의 경제위기로 인한 국민의 위기체감도가 매우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표 7-28>에 제시된 지표별 가중치는 각 지표가 영역의 위기수준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경제일반영역 내 지표별 가중치가 각각 .1296(원유가), .1454(소비자물가지수), .1173(신용불량자수), .1284(경제성자률), .1215(환율), .1120(외채액), .1372(개인부

채액), .1086(기업부채액)이다. 이를 지표의 위기점수에 곱하여 각 지표가 영역 내 위기수준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반영한 지표별 위기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표 7-28〉 경제일반영역 사회위기 지표의 위기수준 및 가중치

(단위: 점)

연도	원유가		소비자 물가지수		신용 불량자수		경제 성장률		환율		외채액		개인부채액		기업부채액	
	위기 수준	가중치	위기 수준	가중치	위기 수준	가중치	위기 수준	가중치	위기 수준	가중치	위기 수준	가중치	위기 수준	가중치	위기 수준	가중치
1996	4.00		3.00		3.50		3.00		0.00		3.50		3.50		3.50	
1997	1.50		2.50		2.50		4.00		4.00		2.50		3.50		4.00	
1998	1.00		4.00		3.50		4.00		4.00		1.50		1.50		1.50	
1999	4.00		1.50		1.50		1.00		0.00		1.50		1.50		1.50	
2000	4.00		1.50		2.50		2.00		1.00		1.50		2.00		1.50	
2001	1.50		3.00		1.50		3.00		0.00		1.00		4.00		1.50	
2002	1.50	.1296	1.50	.1454	2.50	.1173	1.50	.1284	1.00	.1215	2.00	.1120	4.00	.1372	4.00	.1086
2003	3.50		2.50		3.50		3.50		0.00		2.00		1.50		3.00	
2004	4.00		2.50		1.50		1.50		4.00		2.00		1.50		1.50	
2005	4.00		1.50		1.50		1.50		0.00		1.50		2.00		4.00	
2006	4.00		1.50		1.50		1.50		0.00		4.00		2.00		2.00	
2007	2.50		1.50		2.00		1.50		0.00		4.00		2.00		4.00	
2008	4.00		3.50		1.50		4.00		4.00		1.50		1.50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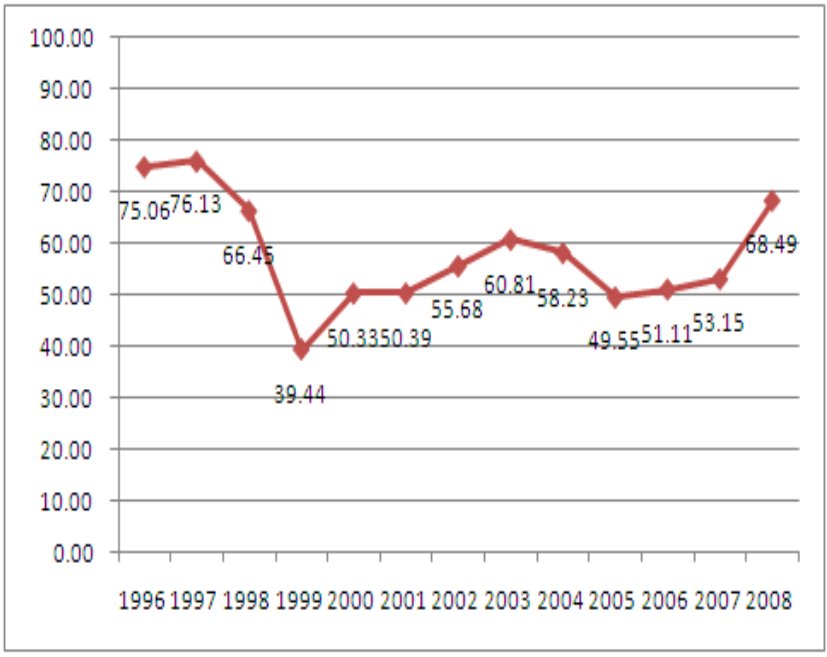
각 지표별 위기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가중치반영 지표별 위기점수'는 위 <표 7-29>와 같다. 각 연도의 지표별 위기점수를 합하면 연도별 영역내 위기점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4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또한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100점을 최고점으로 환산한 값도 제시하였다. 경제일반영역의 사회위기수준은 1996~1997년에 비교적 높은 위기상태를 보였으나 이후 급격히 안정화되어 1999년에는 39.44점의 위기점수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2003년과 2008년에는 위기점수가 증가하여 각각 60.81점과 68.49점을 보였는데, 특히 2008년의 위기점수는 1996~1997년을 제외하였을 때 최고치였다. 일단, 2003년에 증가한 이유는 원유가, 신용불량자수, 경제성장률의 위기점수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며, 2008년은 원유가,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이다.

〈표 7-29〉 경제일반영역의 사회위기수준

(단위: 점, %)

연도	원유가	소비자 물가지수	신용 불량자수	경제 성장률	환율	외채액	개인 부채액	기업 부채액	합계	백분율 환산
1996	0.52	0.44	0.41	0.39	0.00	0.39	0.48	0.38	3.00	75.06
1997	0.19	0.36	0.29	0.51	0.49	0.28	0.48	0.43	3.05	76.13
1998	0.13	0.58	0.41	0.51	0.49	0.17	0.21	0.16	2.66	66.45
1999	0.52	0.22	0.18	0.13	0.00	0.17	0.21	0.16	1.58	39.44
2000	0.52	0.22	0.29	0.26	0.12	0.17	0.27	0.16	2.01	50.33
2001	0.19	0.44	0.18	0.39	0.00	0.11	0.55	0.16	2.02	50.39
2002	0.19	0.22	0.29	0.19	0.12	0.22	0.55	0.43	2.23	55.68
2003	0.45	0.36	0.41	0.45	0.00	0.22	0.21	0.33	2.43	60.81
2004	0.52	0.36	0.18	0.19	0.49	0.22	0.21	0.16	2.33	58.23
2005	0.52	0.22	0.18	0.19	0.00	0.17	0.27	0.43	1.98	49.55
2006	0.52	0.22	0.18	0.19	0.00	0.45	0.27	0.22	2.04	51.11
2007	0.32	0.22	0.23	0.19	0.00	0.45	0.27	0.43	2.13	53.15
2008	0.52	0.51	0.18	0.51	0.49	0.17	0.21	0.16	2.74	68.49

[그림 7-9] 경제일반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10. 정치일반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정치일반영역의 각 지표별 위기수준은 <표 7-30>과 같다. 투표율의 위기점수는 1996년, 2005~2008년에,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은 1996~1997년, 2001~2002년, 2005~2008년, 부패인식지수는 1997~1999년, 2003년, 2007년, 정부신뢰도는 1997~1998년, 2005~2007년에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정치일반영역의 4개 지표는 공통적으로 2005년 이후 높은 위기점수를 보여 정치영역의 위기수준이 최근 더 심화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각 지표별로 살펴보면, 투표율은 2001~2004년에 1.5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것에 비해, 2005년 이후의 위기수준은 4.00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은 1998년과 2003~2004년을 제외하고는 1996~2008년의 위기수준이 대체로 높은 수치를 보여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의 한국의 사회위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부패인식지수의 위기수준은 1997~1999년, 2003년, 2007년 높은 수치의 위기점수를 보였으나 그 외 연도에는 위기점수가 낮았다. 마지막으로 정부신뢰도는 1999년에는 낮은 위기점수를 보였으나 1997~1998년, 2005~2007년의 위기점수를 보통(2.00점)이상으로 나타났다.

<표 7-30>에 제시된 지표별 가중치는 각 지표가 영역의 위기수준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일반영역 내 지표별 가중치가 각각 .2348(투표율), .2187(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2630(부패인식지수), .2835(정부신뢰도)이다. 이를 지표의 위기점수에 곱하여 각 지표가 영역 내 위기수준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반영한 지표별 위기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표 7-30〉 정치일반영역 사회위기 지표의 위기수준 및 가중치

(단위: 점)

연도	투표율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부패인식지수		정부신뢰도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1996	3.50		4.00		2.00		2.00	
1997	2.50		4.00		3.50		4.00	
1998	2.00		1.00		3.50		3.50	
1999	2.00		3.00		3.50		1.00	
2000	3.00		3.00		1.50		3.00	
2001	1.50		3.50		1.50		3.00	
2002	1.50	0.2348	3.50	0.2187	1.50	0.2630	2.50	0.2835
2003	1.50		1.50		3.50		2.00	
2004	1.50		1.00		1.50		3.00	
2005	4.00		3.50		1.00		3.50	
2006	4.00		3.50		3.00		3.50	
2007	4.00		3.50		3.50		3.50	
2008	4.00		3.5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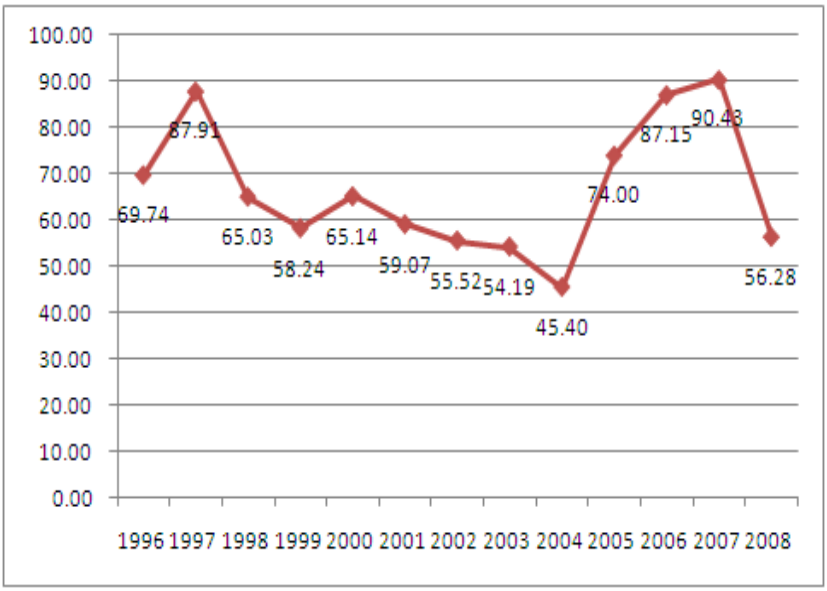
각 지표별 위기점수와 가중치를 곱한 '가중치반영 지표별 위기점수'는 위 <표 7-30>과 같다. 각 연도의 지표별 위기점수를 합하면 연도별 영역내 위기점수를 산출할 수 있으며 이는 4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또한 해석의 용이함을 위해 100점을 최고점으로 환산한 값도 제시하였다. 정치일반영역의 사회위기수준은 1997년, 2006~2007년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2007년의 위기점수는 90.43점으로 최근 13년 중 최고치로 나타났다. 이는 1997년과 2006~20077년도의 부패인식지수와 정부신뢰도에 대한 높은 위기수준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투표율과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도 2005년 이후 높은 수준의 위기점수를 유지하여 2005~2008년 영역의 위기점수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

〈표 7-31〉 정치일반영역의 사회위기수준

(단위: 점, %)

연도	투표율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부패인식지수	정부신뢰도	합계	백분율환산
1996	0.82	0.87	0.53	0.57	2.79	69.74
1997	0.59	0.87	0.92	1.13	3.52	87.91
1998	0.47	0.22	0.92	0.99	2.60	65.03
1999	0.47	0.66	0.92	0.28	2.33	58.24
2000	0.70	0.66	0.39	0.85	2.61	65.14
2001	0.35	0.77	0.39	0.85	2.36	59.07
2002	0.35	0.77	0.39	0.71	2.22	55.52
2003	0.35	0.33	0.92	0.57	2.17	54.19
2004	0.35	0.22	0.39	0.85	1.82	45.40
2005	0.94	0.77	0.26	0.99	2.96	74.00
2006	0.94	0.77	0.79	0.99	3.49	87.15
2007	0.94	0.77	0.92	0.99	3.62	90.43
2008	0.94	0.77	0.26	0.28	2.25	56.28

[그림 7-10] 정치일반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제3절 한국의 사회위기 수준

한국의 사회위기수준은 각 영역별로 영역별 위기수준과 영역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출한'영역가중치 적용한 영역의 위기점수'를 산출한 후 모든 영역의 '영역가중치 적용한 영역의 위기점수'를 합한 값이다. 4.00점이 최고점인 영역의 위기점수에 모든 영역의 가중치 합이 1.00점인 가중치를 곱하였기 때문에 영역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한 '한국의 사회위기 점수'도 4.00점 만점으로 산출된다.

$$SRI_t = \sum_{k=1}^{10} PI_{k,t} \cdot W_k$$

k = 영역번호 t = 연도

$$\sum_{k=1}^{10} W_k = 1$$

위에서 각 영역별 위기점수와 가중치를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7-32>와 같다. 각 영역이 한국의 사회위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영역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한국의 사회위기 수준에 미치는 영향도에 따라 영역의 위기점수를 조정하였다.

모든 영역의 가중치 합은 1.00점이고 각 영역의 위기점수는 4.00점이 최고점이기 때문에 영역의 위기점수와 영역 가중치의 곱을 합하여 산출한 한국의 사회위기 점수의 최고점도 4.00점이다.

〈표 7-32〉 영역별 사회위기 지표의 위기수준 및 가중치

(단위: 점)

연도	고용		교육		주거		인구·가족		복지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1996	2.81		3.60		3.08		2.28		3.06	
1997	3.42		3.00		2.31		2.15		3.72	
1998	3.88		2.31		2.57		2.40		3.07	
1999	2.23		1.36		3.26		2.66		2.81	
2000	2.44		3.56		3.17		2.89		3.52	
2001	2.16		2.02		3.26		3.38		3.66	
2002	2.44	.1284	1.34	.1070	2.74	.0958	3.50	.0917	2.85	.0938
2003	3.02		2.19		2.22		3.62		3.03	
2004	2.56		1.56		1.88		3.04		2.05	
2005	2.13		1.36		2.92		3.39		2.44	
2006	1.73		2.37		3.17		3.05		2.12	
2007	1.35		3.60		1.96		3.04		1.75	
2008	2.15		2.94		2.40		2.66		2.64	

〈표 7-32〉 계속

연도	건강·안전		사회갈등		불평등		경제일반		정치일반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위기수준	가중치
1996	3.06		3.24		2.75		3.00		2.79	
1997	1.60		1.50		2.36		3.05		3.52	
1998	3.22		4.00		2.95		2.66		2.60	
1999	2.00		3.02		2.66		1.58		2.33	
2000	2.26		3.50		1.96		2.01		2.61	
2001	1.86		1.75		2.39		2.02		2.36	
2002	2.02	.0927	3.75	.0962	2.06	.0949	2.23	.1143	2.22	.0851
2003	2.92		2.01		1.78		2.43		2.17	
2004	2.05		2.77		2.55		2.33		1.82	
2005	1.97		1.25		2.16		1.98		2.96	
2006	1.81		2.47		2.48		2.04		3.49	
2007	2.71		1.25		2.95		2.13		3.62	
2008	1.66		2.73		2.07		2.74		2.25	

영역별 위기점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연도별 사회위기점수를 산출한 결과, 1996~1998년, 2000년에 우리나라는 높은 위기상태에 직면하였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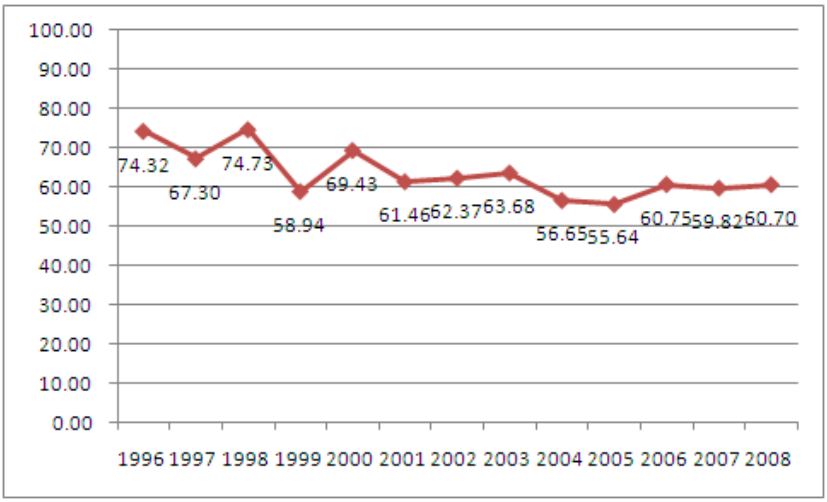
2001~2008년에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8년간 유지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4~2005년 위기점수는 55~56점으로 1996~2008년 중 최저점수로, 국민의 사회위기체감도는 1990년대 후반보다 2000년에 들어서 낮아졌다. 다만,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전년도보다 약 1점의 위기점수가 증가하였는데, 특히 상당수 영역의 위기점수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영역, 주거영역, 복지영역, 사회갈등영역, 경제영역에서 위기수준이 증가하여, 2008년에 국민은 전년도 보다 높은 위기상태를 체감하였다.

〈표 7-33〉 가중치 적용후 사회위기영역의 위기수준

(단위: 점, %)

연도	가중치 적용후 영역별 위기수준										합계 (4점 기준)	백분율 환산
	고용	교육	주거	인구 및 가족	복지	건강 ·안전	사회 갈등	불평등	경제 일반	정치 일반		
1996	0.36	0.39	0.30	0.21	0.29	0.28	0.31	0.26	0.34	0.24	2.97	74.32
1997	0.44	0.32	0.22	0.20	0.35	0.15	0.14	0.22	0.35	0.30	2.69	67.30
1998	0.50	0.25	0.25	0.22	0.29	0.30	0.38	0.28	0.30	0.22	2.99	74.73
1999	0.29	0.15	0.31	0.24	0.26	0.19	0.29	0.25	0.18	0.20	2.36	58.94
2000	0.31	0.38	0.30	0.26	0.33	0.21	0.34	0.19	0.23	0.22	2.78	69.43
2001	0.28	0.22	0.31	0.31	0.34	0.17	0.17	0.23	0.23	0.20	2.46	61.46
2002	0.31	0.14	0.26	0.32	0.27	0.19	0.36	0.20	0.25	0.19	2.49	62.37
2003	0.39	0.23	0.21	0.33	0.28	0.27	0.19	0.17	0.28	0.18	2.55	63.68
2004	0.33	0.17	0.18	0.28	0.19	0.19	0.27	0.24	0.27	0.15	2.27	56.65
2005	0.27	0.15	0.28	0.31	0.23	0.18	0.12	0.21	0.23	0.25	2.23	55.64
2006	0.22	0.25	0.30	0.28	0.20	0.17	0.24	0.24	0.23	0.30	2.43	60.75
2007	0.17	0.39	0.19	0.28	0.16	0.25	0.12	0.28	0.24	0.31	2.39	59.82
2008	0.28	0.31	0.23	0.24	0.25	0.15	0.26	0.20	0.31	0.19	2.43	60.70

[그림 7-11] 위기별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08

종합논의

제8장 종합논의

제1절 사회위기 영역 및 지표 개발의 논의

1.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에 의한 영역(안) 및 지표(안) 개발

본 연구의 첫 번째 핵심 이슈인 사회위기지표 개발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첫째, 측정가능 또는 생산 가능한 통계를 지표로 개발, 둘째, 시계열 통계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지표 선정, 셋째,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하여 생산되는 통계를 우선적 선정, 넷째, 영역별로 국제비교가 가능한 지표를 최소 1개 이상 포함 등이다.

이러한 원칙 아래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를 반영하여 사회위기 영역(안) 및 지표(안)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는 10개 영역의 55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2. 델파이 조사에 의한 영역(안) 및 지표(안) 타당도 검토

개발된 지표(안)를 534명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영역(안) 및 지표(안)에 대하여 우선순위와 영향도를 파악하는 조사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사회위기 영역(안)의 평균 우선순위와 영향도는 고용, 경제일반, 교육, 주거, 사회갈등·문화, 불평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 영향도(8.2603점)와 최저 영향도(5.4719점)의 차이는 현저하였다.

〈표 8-1〉 사회위기 영역(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단위: 위, 점)

지표	영역									
	고용	교육	주거	인구·가족	복지	건강·안전	사회갈등·문화	불평등	경제일반	정치일반
우선순위	2.9270	4.8764	5.8614	6.2060	6.0899	6.1517	5.8876	5.9064	4.2996	6.7622
영향도	8.2603	6.8801	6.1629	5.8989	6.0300	5.9625	6.1891	6.1030	7.3539	5.4719

주: 우선순위는 1~10위, 영향도는 0~10점의 범위에 있음.

사회위기 지표(안)의 평균 영향도는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도는 10점 기준으로 자녀사교육비 지출률 8.8614점, 소득불평등 8.7959점, 실업률 8.4869점, 청년실업률 8.3614, 노후대비율 8.3820점, 소비자 물가지수 8.3483점, 출산율 8.1105점, 주거비 지출률 8.0936점, 전세비 증감률 8.0356점 등이었다. 이들 9개 지표는 11점 척도에서 영향도가 매우 높은 8점 이상에 위치하고 있어 사회위기를 나타내는 대표지표로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영향도는 영호남 지역격차 계수 4.6458점, 도박사범수 5.2917점, 행정소송건수 5.3951점, 마약·밀수사범수 5.6236점, 시·도간 재정자립도 격차 5.9101점, 세대별 정당득표집중률 5.9270점 등이었다. 0~10점의 11점 척도에서 평균보다 낮은 지표는 '영호남 지역격차 계수'이어서 지표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보겠으며, 그 외 5개 지표도 영향도가 중간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지 못함을 보여 주었다.

아울러 델파이조사 응답자의 보충의견을 고려하였다. 이들의 의견은 사회위기 영역에 대한 의견과 사회위기 지표에 대한 의견이 함께 제시되었다. 사회위기 영역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환경, 종교, 정보, 외교안보, 예술문화, 대중매체, 기술과학, 국제이동 등이 제안되었다. 추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재확인하여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특히 노인자살률은 지표에 반영하였다.

〈표 8-2〉 사회위기 지표(안)의 평균 우선순위 및 평균 영향도

(단위: 위, 점)

영역 및 지표	평균 우선순위	평균 영향도	영역 및 지표	평균 우선순위	평균 영향도
고용			**교육**		
실업률	1.9494	8.4869	자녀사교육비 지출률	1.3333	8.8614
청년실업률	2.1255	8.3614	중고등학교 중퇴율	3.1629	6.0693
근로빈곤자수	2.9925	7.4270	중고등 학원폭력률	2.3596	7.3277
비정규직 비율	2.9307	7.5337	조기유학자수	3.1404	6.1573
주거			**인구·가족**		
주거비 지출률	1.7004	8.0936	총부양비	2.4513	7.7996
자가 보유율	2.4120	7.1760	고령화지수	2.3783	7.8127
전세비 증감률	1.8895	8.0356	수도권 인구집중도	3.0150	7.0075
			출산율	2.1592	8.1105
복지			**건강·안전**		
노후대비율	1.5936	8.3820	평균수명	4.8352	6.1124
연금수혜비율	2.2659	7.6330	자살률	2.9625	7.7753
요보호아동수	2.6629	7.0393	청소년자살률	3.8652	7.1629
장애인 출현율	3.4700	6.0637	부정식품적발률	4.6835	6.3146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4.0599	6.8914
			교통사고사망률	4.4869	6.5000
			강력범죄율	3.0603	7.8267
사회갈등·문화			**불평등**		
노사분규 발생건수	2.0861	7.9738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4.5056	6.7360
파업 손실일수	2.5019	7.6760	남녀 임금격차	4.1461	7.0112
불법체류자수	4.3502	5.7921	소득불평등	2.0393	8.7959
갈등비용	2.6723	7.4513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4.4195	6.8446
마약·밀수사범수	4.4457	5.6236	평균소득 75~150% 비율	4.0393	7.1554
도박사범수	4.9261	5.2917	지역간 소득격차	4.2584	6.9738
			시·도간 재정자립도 격차	5.5599	5.9101
			영호남 지역격차 계수	7.0303	4.6458
경제일반			**정치일반**		
원유가	4.2509	7.4419	투표율	3.7846	7.0674
소비자 물가지수	2.9195	8.3483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4.3577	6.5843
신용불량자율	5.0019	6.7341	세대별 정당득표집중률	5.2191	5.9270
경제성장률	4.1760	7.3708	국가기관별 신뢰지수	3.7172	7.3184
환율	4.8146	6.9775	부패인식지수	2.9401	7.9157
외채비율	5.4813	6.4288	행정소송건수	5.8015	5.3951
가계부채비율	3.5449	7.8783	정부신뢰도	2.1723	8.5356
기업부채비율	5.7989	6.2354			

3. 사회위기 영역 및 지표의 확정

이와 같은 델파이 조사 분석결과에 의한 영향도, 델파이 조사 응답자의 보충의견, 통계의 수집 및 특성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의 사회위기지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당초 10개 영역 55개 지표에서 10개 영역 44개 지표이다. 그리고 통계수집의 용이성, 지속성, 통계의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지표의 명칭을 다소 변경하였다.

〈표 8-3〉 한국의 사회위기지표 최종안

영역	지표
고용	• 실업률 • 근로빈곤자수 • 청년실업률 • 비정규직 비율
교육	• 자녀 사교육비 지출액 •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 학생범죄인원
주거	• 주거비 지출률 • 전세비 증감률 • 자가 보유율
인구·가족	• 총부양비 • 수도권 인구 집중도 • 고령화지수 • 출산율
복지	• 노후대비율 • 요보호아동수 • 연금수혜비율 • 장애인 출현지수
건강·안전	• 평균수명 • 청소년·노인자살률 • 교통사고사망률 • 자살률 •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 • 강력범죄율
사회갈등·문화	• 노사분규 발생건수 • 파업 손실일수
불평등	•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 소득불평등 • 지역간 소득격차 • 남녀 임금격차 • 중산층 귀속의식지수
경제일반	• 원유가 • 소비자물가지수 • 신용불량지수 • 경제성장률 • 환율 • 외채액 • 개인부채액 • 기업부채액
정치일반	• 투표율 • 지역별정당득표집중률 • 부패인식지수 • 정부 신뢰도
10개 영역	44개 지표

제2절 사회위기 수준 변화의 논의

1. 지표별 위기수준 변화의 논의

지표별 위기수준의 최근(2008년)을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4점의 위기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전체 44개 지표 중 8개 지표나 되었다. 출산율, 요보호아동수, 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 지역간 소득

격차, 원유가, 경제성장률, 환율, 투표율 등이다. 즉, 경제위기와 함께 정치위기, 지역불평등, 노사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3점의 위기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전체 44개 지표 중 9개 지표나 되었다. 이들 지표는 실업률,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학생범죄인원, 자가보유율, 고령화지수, 연금수혜비율,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등이다.

셋째, 위기와 안정의 중간수준(보통)을 나타내는 2점대는 7개 지표로 전체 44개 지표 중 15.9%이었다.

넷째,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나타내는 1점대는 44개 지표 중 20개 지표로 청년실업률, 비정규직 비율, 전세비 증감률, 총부양비, 장애인 출현율, 평균수명, 자살률, 부정식품적발률, 교통사고 사망률, 강력범죄율, 노사분규 발생건수, 남녀임금 격차, 소득불평등,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신용불량자수, 외채액, 개인부채, 기업부채, 부패인식지수, 정부신뢰도 등이다.

다섯째, 매우 안정된 수준을 나타내는 0점대, 즉 1점 미만은 전체 44개 지표 중 해당되는 지표가 없었다. 따라서 모든 지표가 어느 정도의 위기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3점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표는 44개 지표 중 무려 17개 지표로 38.6%에 해당되었고, 1점 이하의 (매우) 안정된 수준에 있는 지표는 44개 지표 중 20개 지표로 45.5%에 해당되었다.

〈표 8-4〉 지표별 위기수준 변화추이

사회위기 지표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실업률	1.5	4.0	4.0	2.0	1.5	2.5	1.5	3.5	3.5	3.0	1.5	1.0	3.5
청년실업률	2.0	4.0	4.0	1.5	1.5	3.0	1.5	3.5	3.5	1.5	1.5	1.0	1.5
근로빈곤지수	4.0	1.5	4.0	1.5	3.5	1.5	3.5	4.0	1.5	2.5	2.5	2.5	2.5
비정규직 비율	4.0	4.0	3.5	4.0	3.5	1.5	3.5	1.0	1.5	1.5	1.5	1.0	1.0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	3.0	1.5	1.0	1.5	4.0	1.5	1.5	4.0	2.0	1.5	1.5	3.0	2.5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4.0	4.0	4.0	1.0	3.0	4.0	1.5	1.0	1.0	1.0	3.5	4.0	3.5
학생범죄인원	4.0	4.0	2.5	1.5	3.5	1.0	1.0	1.0	1.5	1.5	2.5	4.0	3.0
주거비 지출률	2.3	2.5	3.8	2.8	2.5	2.8	1.8	2.3	1.3	3.8	3.0	1.5	2.8
자가 보유율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전세비 증감률	4.0	1.5	1.0	4.0	4.0	4.0	3.5	1.5	1.5	2.0	3.5	1.5	1.5
총부양비	1.0	1.0	2.0	3.0	3.5	3.5	3.5	3.5	3.0	3.0	3.0	2.5	1.0
고령화지수	3.5	3.0	3.0	3.0	2.5	2.5	3.0	3.0	3.0	3.5	3.5	3.5	3.5
수도권 인구집중도	1.5	1.5	1.5	1.5	2.5	3.5	3.5	4.0	2.0	3.0	1.5	2.0	2.0
출산율	3.0	3.0	3.0	3.0	3.0	4.0	4.0	4.0	4.0	4.0	4.0	4.0	4.0
노후대비율	3.5	3.5	3.5	3.5	4.0	4.0	4.0	3.5	3.5	3.5	1.0	1.0	2.0
연금수혜비율	3.0	3.5	1.0	3.5	4.0	3.5	3.5	3.5	1.0	2.5	4.0	3.0	3.0
요보호아동수	3.5	4.0	4.0	1.5	2.0	4.0	1.5	2.0	1.5	1.5	1.5	1.5	4.0
장애인 출현율	2.0	4.0	4.0	2.5	4.0	3.0	2.0	3.0	2.0	2.0	2.0	1.5	1.5
평균수명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자살률	4.0	1.5	4.0	1.0	1.5	2.0	4.0	4.0	1.5	1.5	1.5	3.5	1.5
청소년·노인 자살률	4.0	1.3	4.0	1.8	1.5	2.8	3.8	4.0	2.0	2.8	1.3	2.5	2.0
부정식품 적발률	3.5	3.5	4.0	1.0	1.0	1.0	1.5	2.5	4.0	1.5	1.0	4.0	1.5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	1.5	1.0	4.0	1.5	4.0	3.0	1.0	2.0	3.5	3.5	4.0	3.5	3.0
교통사고 사망률	3.5	1.0	1.0	3.5	2.5	1.0	1.5	3.5	1.0	2.0	3.0	3.0	1.0
강력범죄율	3.5	2.0	4.0	4.0	4.0	2.0	1.0	3.0	1.5	1.5	1.0	1.5	1.5
노사분규 발생건수	2.5	1.5	4.0	4.0	3.5	2.0	4.0	2.5	4.0	1.0	1.0	1.5	1.5
파업 손실일수	4.0	1.5	4.0	2.0	3.5	1.5	3.5	1.5	1.5	1.5	4.0	1.0	4.0
남녀경제활동참가율 격차	1.0	1.0	4.0	1.0	1.0	1.5	3.5	3.5	1.5	1.5	1.0	3.5	2.0
남녀 임금격차	3.0	3.5	2.5	3.0	3.5	2.0	1.5	1.5	2.0	2.5	1.5	1.5	1.5
소득불평등	3.5	1.5	4.0	3.5	1.0	4.0	1.5	1.5	3.5	1.5	4.0	4.0	1.5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4.0	4.0	2.0	2.0	1.5	1.5	1.5	1.0	4.0	4.0	4.0	1.5	1.5
지역간 소득격차	2.0	2.0	2.0	3.5	3.0	2.5	2.5	1.5	1.5	1.5	1.5	4.0	4.0
원유가	4.0	1.5	1.0	4.0	4.0	1.5	1.5	3.5	4.0	4.0	4.0	2.5	4.0
소비자물가지수	3.0	2.5	4.0	1.5	1.5	3.0	1.5	2.5	2.5	1.5	1.5	1.5	3.5
신용불량지수	3.5	2.5	3.5	1.5	2.5	1.5	2.5	3.5	1.5	1.5	1.5	2.0	1.5
경제성장률	3.0	4.0	4.0	1.0	2.0	3.0	1.5	3.5	1.5	1.5	1.5	1.5	4.0
환율	0.0	4.0	4.0	0.0	1.0	0.0	1.0	0.0	4.0	0.0	0.0	0.0	4.0
외채액	3.5	2.5	1.5	1.5	1.5	1.0	2.0	2.0	2.0	1.5	4.0	4.0	1.5
개인부채	3.5	3.5	1.5	1.5	2.0	4.0	4.0	1.5	1.5	2.0	2.0	2.0	1.5
기업부채	3.5	4.0	1.5	1.5	1.5	1.5	4.0	3.0	1.5	4.0	2.0	4.0	1.5
투표율	3.5	2.5	2.0	2.0	3.0	1.5	1.5	1.5	1.5	4.0	4.0	4.0	4.0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4.0	4.0	1.0	3.0	3.0	3.5	3.5	1.5	1.0	3.5	3.5	3.5	3.5
부패인식지수	2.0	3.5	3.5	3.5	1.5	1.5	1.5	3.5	1.5	1.0	3.0	3.5	1.0
정부신뢰도	2.0	4.0	3.5	1.0	3.0	3.0	2.5	2.0	3.0	3.5	3.5	3.5	1.0

주: 지표별 4점 기준임

2. 영역별 위기수준 변화의 논의

영역의 위기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표별 가중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델파이 조사의 영향도 분석결과에 의한 것으로, 사회위기 지표별 가중치는 '지표 영향도'를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이는 각 지표의 영향도 점수를 영역 내 모든 지표의 영향도 점수 총 합계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각 지표가 해당 영역의 위기수준에 미치는 영향도가 클수록 지표의 가중치는 높은 값을 가진다.

$$W_{ki} = \frac{E_{ki}}{\sum_{j=1}^{n} E_{kj}}$$

W_{ki} = k영역 i지표가중치 k = 영역번호 j = 지표번호

이러한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지표별 가중치를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8-5>와 같다. 이는 전술(前述)한 지표 영향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다.

〈표 8-5〉 지표의 가중치 종합

사회위기 지표	가중치	사회위기지표	가중치	사회위기지표	가중치
실업률	.2668	연금수혜비율	.2621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1882
청년실업률	.2629	요보호아동수	.2418	지역간 소득격차	.1912
근로빈곤자수	.2335	장애인 출현율	.2082	원유가	.1296
비정규직 비율	.2368	평균수명	.1258	소비자물가지수	.1454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	.3981	자살률	.1600	신용불량자수	.1173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2727	청소년·노인 자살률	.1474	경제성장률	.1284
학생범죄인원	.3292	부정식품 적발률	.1300	환율	.1215
주거비 지출률	.3473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	.1418	외채액	.1120
자가 보유율	.3079	교통사고 사망률	.1338	개인부채	.1372
전세비 증감률	.3448	강력범죄율	.1611	기업부채	.1086
총부양비	.2538	노사분규 발생건수	.5095	투표율	.2348
고령화지수	.2542	파업 손실일수	.4905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2187
수도권 인구집중도	.2280	남녀경제활동참가율 격차	.1853	부패인식지수	.2630
출산율	.2639	남녀 임금격차	.1928	정부신뢰도	.2835
노후대비율	.2879	소득불평등	.2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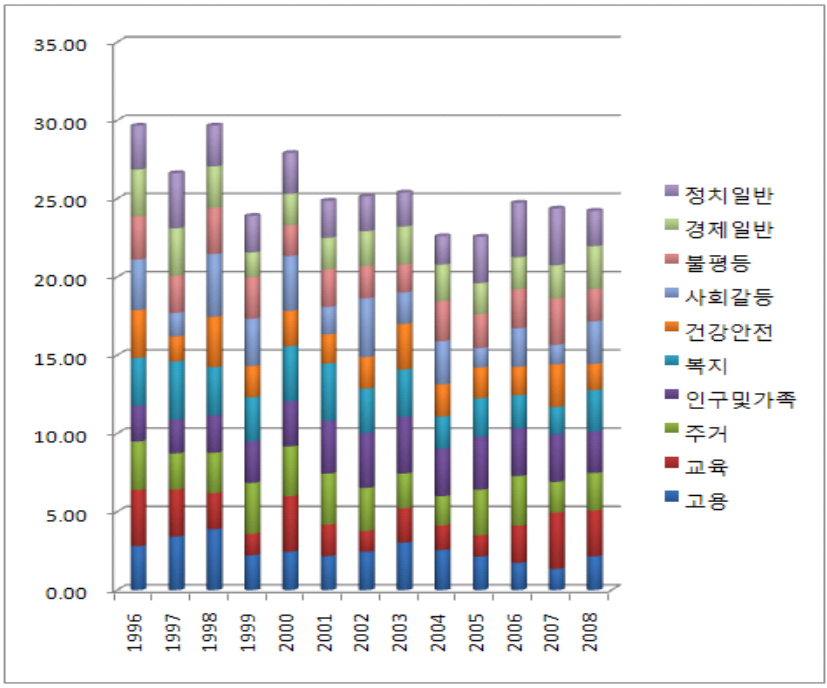
지표의 가중치(표 8-5)와 지표별 위기수준(표 8-4)에 의하여 영역별 위기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이는 <표 8-6>에 제시된다.

〈표 8-6〉 영역별 위기수준 변화추이

사회위기 영역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07	' 08
고용	2.81	3.42	3.88	2.23	2.44	2.16	2.44	3.02	2.56	2.13	1.73	1.35	2.15
교육	3.60	3.00	2.31	1.36	3.56	2.02	1.34	2.19	1.56	1.36	2.37	3.60	2.94
주거	3.08	2.31	2.57	3.26	3.17	3.26	2.74	2.22	1.88	2.92	3.17	1.96	2.40
인구·가족	2.28	2.15	2.40	2.66	2.89	3.38	3.50	3.62	3.04	3.39	3.05	3.04	2.66
복지	3.06	3.72	3.07	2.81	3.52	3.66	2.85	3.03	2.05	2.44	2.12	1.75	2.64
건강·안전	3.06	1.60	3.22	2.00	2.26	1.86	2.02	2.92	2.05	1.97	1.81	2.71	1.66
사회갈등·문화	3.24	1.50	4.00	3.02	3.50	1.75	3.75	2.01	2.77	1.25	2.47	1.25	2.73
불평등	2.75	2.36	2.95	2.66	1.96	2.39	2.06	1.78	2.55	2.16	2.48	2.95	2.07
경제일반	3.00	3.05	2.66	1.58	2.01	2.02	2.23	2.43	2.33	1.98	2.04	2.13	2.74
정치일반	2.79	3.52	2.60	2.33	2.61	2.36	2.22	2.17	1.82	2.96	3.49	3.62	2.25

주: 영역별 4점 기준임

[그림 8-1] 영역별 위기수준 변화추이



보다 쉽게 판단하기 위하여 위기수준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표 8-7>과 같다.

〈표 8-7〉 영역별 위기수준 변화추이의 백분율 환산

사회위기 영역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고용	70.18	85.41	97.04	55.64	61.02	54.03	61.02	75.62	63.98	53.34	43.34	33.76	53.72
교육	90.05	75.12	57.80	34.09	89.07	50.43	33.38	54.86	39.07	34.09	59.36	90.05	73.43
주거	77.11	57.73	64.27	81.45	79.28	81.45	68.46	55.56	46.88	72.89	79.31	49.05	59.90
인구·가족	56.94	53.76	60.10	66.45	72.14	84.44	87.62	90.47	75.90	84.78	76.22	75.90	66.38
복지	76.41	93.12	76.74	70.21	87.91	91.52	71.20	75.83	51.22	61.05	52.89	43.73	66.04
건강·안전	76.39	40.07	80.53	49.98	56.58	46.57	50.44	72.90	51.31	49.30	45.25	67.85	41.42
사회갈등·문화	80.89	37.50	100.00	75.48	87.50	43.87	93.87	50.24	69.34	31.13	61.79	31.37	68.16
불평등	68.67	58.99	73.77	66.45	48.99	59.82	51.56	44.41	63.77	54.09	62.07	73.87	51.80
경제일반	75.06	76.13	66.45	39.44	50.33	50.39	55.68	60.81	58.23	49.55	51.11	53.15	68.49
정치일반	69.74	87.91	65.03	58.24	65.14	59.07	55.52	54.19	45.40	74.00	87.15	90.43	56.28

여기서 측정된 위기수준의 지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위기지수를 설명코자 한다.

위기지수	의미
1~20	매우 안정
21~40	비교적 안정
41~60	보통
61~80	비교적 위기
81~100	심각한 위기

가장 최근(2008년)의 영역별 위기수준을 살펴보면, 매우 안정(1~20점)과 비교적 안정(21~40점)으로 나타난 영역은 없었다. 보통(41~60점)으로 나타난 영역은 고용(53.72점), 주거(59.90점), 건강·안전(41.42점), 불평등(51.80점), 정치일반(56.28점) 등 5개 영역이었다. 이와 반대로 비교적 위기(61~80점)로 나타나는 영역은 교육(73.43점), 인구·가족(66.38점), 복지(66.04점), 사회갈등·문화(68.16점), 경제일반(68.49점) 등으로 전체 10개 영역 중 5개 영역이나 되었다. 다행스럽게 심각한 위기로 나타나는 영역은 없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위기는 영역에 따라 큰 격차를 보였으며, 대부분의 영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위기수준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교육영역, 인구·가족영역, 복지영역, 사회갈등·문화영역, 경제일반 등에서 보다 과감한 재정투자와 획기적인 정책개발 및 추진이 요구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영역별 위기수준이 높은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제일반영역이 가장 많은 4개 지표로서 원유가, 소비자 물가지수, 경제성장률, 환율 등에서 위기상황에 있다. 교육영역은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학생범죄인원 등 3개 지표가 위기상황에 있었다. 다음은 2개 지표가 있는 영역으로 고용영역의 실업률과 근로빈곤자수, 주거영역의 주거비지출률과 자가보유율, 인구·가족영역의 고령화지수와 출산율, 복지영역의 요보호아동수와 연금수혜비율 정치일반영역의 투표율과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1개의 지표가 위기상황에 있는 것으로는 건강·안전영역의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사회갈등·문화영역의 파업손실일수, 불평등 영역의 지역간 소득격차 등이다.

〈표 8-8〉 영역별 고(高)위기 지표(2008년 기준)

사회위기 영역	심각한 위기 (81~100점; 4점 기준 3.2점 이상)	비교적 위기 (61~80점; 4점 기준 2.4점 이상)
고용	•실업률	•근로빈곤자수
교육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자녀사교육비 지출률 •학생범죄인원
주거	-	•주거비 지출률 •자가 보유율
인구·가족	•고령화지수 •출산율	-
복지	•요보호아동수	•연금수혜비율
건강·안전	-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사회갈등·문화	•파업손실일수	-
불평등	•지역간 소득격차	-
경제일반	•원유가 •소비자물가지수 •경제성장률 •환율	-
정치일반	•투표율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

3. 한국의 전체 사회위기수준 변화의 논의

사회위기 영역별 가중치는 '영역 영향도'를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이는 각 영역의 영향도 점수를 전체 영역의 영향도 점수 총 합계로 나눈 값이다. 따라서 각 영역이 전체 위기수준에 미치는 영향도가 클수록 영역의 가중치는 높은 값을 가진다.

$$W_p = \frac{E_p}{\sum_{k=1}^{10} E_k}$$

W_p=p영역 가중치 E_p=p영역 영향력평균 k=영역번호

$$\sum_{i=1}^{n} W_p = 1$$

〈표 8-9〉 영역의 가중치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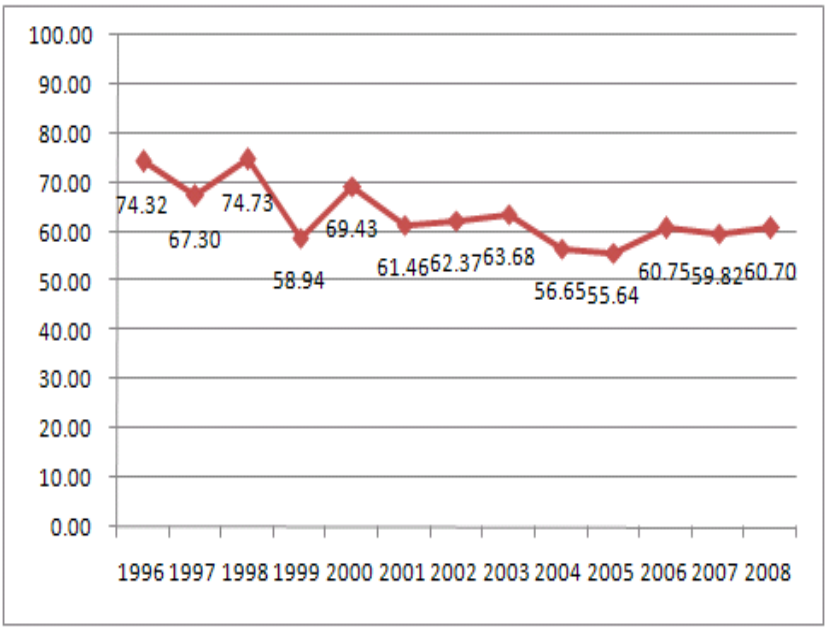
사회위기 영역	가중치	사회위기 영역	가중치
고용	.1284	교육	.1070
주거	.0958	인구·가족	.0917
복지	.0938	건강·안전	.0927
사회갈등·문화	.0962	불평등	.0949
경제일반	.1143	정치일반	.0851

영역의 가중치(표 8-9)와 영역별 위기수준(표 8-7)에 의하여 한국 사회위기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이는 <표 8-10>에 제시된다. 아울러 보다 쉽게 판단하기 위하여 위기수준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제시하였다.

〈표 8-10〉 한국의 사회위기수준 변화추이

연도	위기수준	
	4점 기준	백분율 환산
1996	2.97	74.32
1997	2.69	67.30
1998	2.99	74.73
1999	2.36	58.94
2000	2.78	69.43
2001	2.46	61.46
2002	2.49	62.37
2003	2.55	63.68
2004	2.27	56.65
2005	2.23	55.64
2006	2.43	60.75
2007	2.39	59.82
2008	2.43	60.70

[그림 8-2] 한국의 사회위기수준 변화추이(백분율 환산)



여기서 측정된 위기수준의 지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위기지수를 설명코자 한다.

1996~2008년 기간 중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기(81~100점)를 맞은 경험은 없었다. 그렇지만 대부분 비교적 위기(61~80점)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교적 위기 중에서 심각한 위기에 가까이 접근한다고 판단되는 70점 이상의 위기상황이 1996년과 1998년에 경험한 적이 있다. 이는 경제위기의 직전·후 시기로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또한 60점미만의 보통(41~60점)의 상황에 있었던 적도 있었는데, 이는 1999년, 2004년, 2005년, 2007년이었다.

최근을 살펴보면, 2005년 최저점(55.64점) 이후 2006년에는 60.75점으로 상당히 상승했으나 이후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 해 금융위기가 도래했음에도 통계상으로 전년도 위기점수와 비교했을 때는 위기지수가 약간(0.88점) 상승했을 뿐이다.

09

한국의 사회위기 관리방안

제9장 한국의 사회위기 관리방안

제1절 학문적 제언

사회의 위험(risk)에 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나 사회의 위기(crisis)에 대한 연구는 한국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매우 부족하다. 이는 한국사회에서만의 문제점은 아니며, 서구 선진사회에서도 불모지(不毛地)나 다름없는 영역이라 하겠다. 다만, 사회주의 국가의 체제(regime)의 붕괴를 예견하거나 감지하기 위하여 또는 스스로 체제(regime)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회위기를 접근하는 연구가 있을 뿐이다.

경제의 복잡성보다 오히려 더 복합적으로 사회가 얽혀 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는 개인의 관계성 속에서 더욱 복합성을 띠게 된다. 더군다나 '사회'라는 개념 속에는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심리적 차원 등 다양한 영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기'(crisis)는 매우 다층적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역동성은 이러한 위기에 쉽게 취약하다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 또한 사회위기에 대한 학문적 접근의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회안정의 대립개념인 사회불안의 측면에서 사회위기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학문적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련 학자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문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다학제적 접근에 의한 사회위기의 개념 및 이론 정립

복합성, 역동성을 지닌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위기를 느끼는 것은 개인에 따라, 그리고 사회의 속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현대인은, 현대사회는 과연 어떤 요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위기를 인식하게 되는지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상이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학문적 발전을 위한 제안은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사회위기의 개념적 정의와 이론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다학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위기관리는 주로 재난에 초점을 두고, 국가위기관리 차원에서 학문적 기여를 하고 있다. 이제 '사회(society)'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모든 관련 학문의 전문가들이 사회위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위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제와 행정의 합리성 위기가 생활세계에 영향을 미쳐 사회통합의 자율적 기제들이 침식되는 측면이며, 두 번째는 이러한 체계의 과잉 발전에 따른 생활세계의 식민화에서의 사회통합의 위기가 집단적 정체감의 불확실성(문화), 아노미(사회), 소외(인성)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측면이다(Habermas, 1984, 1987).

요컨대, 사회위기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문화학은 물론 심리학, 인류학, 역사학, 철학, 나아가 자연과학과도 긴밀한 협업이 이루어져 한다. 인간에 대한 인문학적, 자연과학적 이해와 사회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가 생산적으로 결합할 때 사회위기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이론적 틀 및 분석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여기에 행정학, 경영학, 사회복지학, 신문방송학 등의 용용사회과학적 접근과 결합할 때 적절한 위기 대처 및 관리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회위기를 학문적으로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가칭 '사회위기학회'를 설립, 운영하고 학문적 측면에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의 위기요인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각 분야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 판단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사회위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관련 학자들이 인문사회과학을 포괄하여 (가칭) '사회위기학회'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사회위기에 직접적 관심을 갖고 있는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문화학 연구자들이 주축을 이루고, 사회위기에 연관된 인문학과 자연과학, 그리고 응용사회과학 전문가들이 동참하여 사회위기를 다학제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미시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현대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이른바 분화와 복합성의 이중적 증대에 있다. 한편에서는 사회체계 및 하위 사회체계의 지속적인 분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개별 체계 사이의 상호의존성 역시 증가한다. 사회위기 역시 이러한 분화와 복합성의 이중적 증대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미시적 영역에서의 위기는 거시적 영역에서의 위기와 긴밀히 연관되다. 이것은 사회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다학제적 접근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연구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학회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오늘날 사회위기가 갖는 세계적 성격을 고려한 국제적 대응 또한 중요하다. 벡이 제시한 세계 위험사회(global risk society)라는 개념에서 볼 수 있듯이(Beck, 1999), 오늘날 위기가 전 지구적이며, 이러한 위기의 세계화에 대한 국제적 연구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국의 관련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국사회의 향후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2. 사회위기지표의 지속적 개발 및 연구

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특히, 한국사회의 변화는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향후 사회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새로운 사회위기요인을 발굴하고 이를 억제·예방하는 노력과 위기증대시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사회위기지표 개발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첫째, 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사회위기지표가 개발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사회위기지표가 필요한 이유는 위기에 대한 더욱 객관적인 인식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위기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심층적인 이해가 요구되며, 사회위기지표 개발은 바로 이러한 요구에 부응한다. 더욱이 사회변동의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변화된 상황과 위기에 대한 신속하면서도 정확한 이해가 요청되는 것에 대응하여 새로운 사회위기지표가 개발되는 동시에 관리되어야 한다.

둘째, 개발된 사회위기지표의 통계생산과 계량화를 위한 노력이 학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위기를 측정할 수 있는 이상적인 지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생산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위기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 본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났다.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객관화하고 계량화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별 학문분야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시에 협력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위기 수준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표의 위기수준은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상대적 평가법을 주로 사용하였고, 절대적 평가는 지표의 특성을 감안하여 사용하였다. 이는 절대적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기'의 속성상 '관성'(慣性)은 배제되기 때문이다. 이어서 지표의 중요성, 즉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程度)를 적용하기 위하여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향후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보다 더 바람직한 방법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2절 정책적 제언

사회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대안 모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예방관리 및 조기대응체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위기 관리체계 구축이 그 하나라면, 영역에 따른 사회위기 관리방안 모색이 다른 하나이다. 전자가 위기관리의 주체에 주목하고 있다면, 후자는 위기관리의 대상을 검토하는 것이다.

주체적 관점에서 볼 때 사회 위기의 관리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만큼 정부는 정당 및 공공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사회위기의 예방적 관리 및 능동적 대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비정부 조직들과의 유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사회갈등에 대한 전사회적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김호기, 2007).

영역별에 따른 사회위기 대응 방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의 한국사회는 세계화의 충격, 정보사회의 진전, 저출산·고령사회의 강화 등 새로운 사회변동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과거와는 다른 사회위기 대처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1. 사회위기 관리체계 구축: 조기대응체계

사회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위기를 사전예방하고 위기발생시 조기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방관리 및 조기대응체계가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위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위기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예방 및 조기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오늘날 사회위기는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영역들 사이의 상호관련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대응을 넘어서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정부의 부서 설치가 필수적이다. 사회위기는 사안에 따른 개별적 대응과 사안의 상호의존성을 주목하는 전체적 대응을 동시에 요구한다. 따라서 전체 부처를 총괄하는 기능을 가진 국무총리실에 사회위기관리 전담부서를 두고, 관계부처와 정기적으로 정책조정회의를 실시하여 사회위기 수준의 지속적인 측정과 모니터링으로 위기발생을 예방하도록 하며 특정분야의 위기발생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둘째,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사회위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위기의 다양한 형태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가칭) '사회위기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두고, 사회위기관리 전담부서는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동 위원회는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위기발생 우려시 수시로 운영토록 함으로써 형식적 운영에 그치는 각종 위원회와 차별화한다. 민간전문가는 인력 풀(pool)을 광범위하게 구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협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셋째, 국책연구기관에 사회위기 전담 연구부서를 설치, 운영하여 사회위기의 지표 개발과 개발된 지표의 지속적 관리, 사회위기 모니터링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의 사회위기관리 전담부서와 협조하여 전술한 (가칭) '사회위기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위기 관련 기존 정책의 평가와 새로운 정책개발을 실시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유사한 사회위기를 경험한 또는 경험하고 있는 사회의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에 적용토록 노력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영역별 사회위기 관리방안

세계화 시대에 어느 사회이건 불안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이러한 불안과 위기는 가시화되어 왔다. 여기에는 특히 고용, 교육, 주거, 인구 및 가족, 복지, 건강 및 안전으로 대표되는 주요 사회 불안과 사회갈등, 불평등, 경제일반, 정치일반으로 대표되는 거시적 위기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해 왔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관찰되는 위기는 개인의 생애 주기를 돌아볼 때 모든 지점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저출산 문제부터 시작해 유년 세대의 교육문제와 청년 세대의 고용문제, 청장년 세대의 주거문제, 그리고 노년 세대의 노후문제에 더하여 전 세대에 걸친 복지, 건강 및 안전문제가 있다. 여기에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사회갈등과 불평등, 경제와 정치문제가 결합되어 있다.

여기서는 전술한 영역별 높은 위기지수를 가진 지표를 중심으로 영역별 사회위기 관리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비교적 심각한 위기수준에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정책대안들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가. 「고용」 영역의 위기수준 저하 정책

고용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다. 청년 실업, 구조조정 불안, 과도한 비정규직 등은 사회통합을 약화시킴으로써 사회위기를 강화시킨다.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시민사회 사이의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요구되며, 이러한 사회적 합의 아래서 구체적인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평생직장'의 개념을 확립하고,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을 자제토록 권장한다.

중장년층의 조기퇴직, 명예퇴직을 자제토록 권장하고 '평생직장'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업무능률을 증진시킨다. 이는 생애주기에서 가장 지출이 많은 연령층에서 퇴직함으로써 가족위기와 사회위기를 동시에 유발하는 폐해가 노동시장의 효율화로 얻는 이익보다 더 크기 때문에 국가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여야 한다. 더군다나 한국사회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평균수명이 80세인 상황에서는 매우 중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한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s)를 확대하면서, 임금인상을 억제하여 일자리 나누기사업을 강화한다. 고용창출은 글로벌 경제 및 거시경제와 연관되므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또한 그 주체가 어디까지나 기업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고용창출에 유리한 경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병행하여 최대한 일자리 창출을 강화하되, 다만 이를 위한 정부, 기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간의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비정규직 근로빈곤층을 감소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비정규직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한국사회 고용문제의 최대 그늘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약하는 장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 사회적 측면에서는 노동생산성과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가계는 물론 거시경제의 지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세계화가 강제하는 구조적 압박을 고려할 때 그 해법을 마련하지 쉽지 않더라도, 노동의 유연성 못지않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장기적 개혁을 모색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빈곤근로자의 자녀보호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동시에 강구한다. 근로빈곤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방안으로는 정부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기본 복지를 강화하는 것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그 동안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기존 프로그램들의 효과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각한 만큼 괜찮은 일자리를 늘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임시직 고용으로는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청년실업자들의 추가 고용을 의무화한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 같은 프로그램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이를 수용한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 「교육」 영역의 위기수준 저하 정책

한국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의미는 유별나다. 사교육비 지출이 매우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수월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민 여

론도 아주 예민하다. 세계화 시대에서 교육의 경쟁력은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구조적 조건이라 하더라도, 경쟁의 사다리에서 탈락한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교육 영역에서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첫째, 중·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발생을 예방하고 복학을 지원한다.

많은 학업 중단자는 청소년 일탈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먼저 중·고등학교 학생의 중퇴 이유를 규명하고 학업지속 방안을 학교와 가족이 함께 강구토록 한다. 이어서 학업중단자의 가족상담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복학을 적극 유도하며, 복학시 학비 등을 지원토록 한다. 또한 학업 중단자의 예방을 위한 장학제도를 확대하고, 학교사회사업을 강화한다. 다른 한편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대안학교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생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문제학생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탈청소년 보호체계를 내실화한다.

문제학생에 대한 상담을 강화하고, 가족과 연계하여 학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특히, 학생을 둘러싼 가족, 친구, 지역사회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함께 하는 생태학적 접근(ecological approach)으로 효과성을 높인다. 이러한 접근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청소년관련 기관과의 연계강화가 필수적이다. 학교 내외에서의 학생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피해학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폭력피해학생에 대한 상담서비스의 강화 및 요구를 파악하여 충족하도록 한다. 예를 들면, 전학 등 폭력피해 학생의 요구를 파악하여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다. 「주거」 영역의 위기수준 저하 정책

주거문제는 최근 도시 재개발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운동으로 촉발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정책 사안이다. 압축 성장에 따른 빠른 도시화에 대응하여 그 동안 신도시 개발 등을 포함해 적극적인 주거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부동산이 재산 증식의 주요 수단이 됨에 따라 여전히 사회위기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정책 기조를 검토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주택 보급과 주거비 대책을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별 필요주택수를 감안한 적정량의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별 균형적인 자가 보유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을 마련한다. 자가 보유율이 낮은 지역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리의 자금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 또한 재개발 사업에서 원주민 정착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현재 원주민 정착률은 30%도 되지 않는데 이러한 현실은 재개발을 둘러싼 사회운동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더불어 논란이 되고 있는 세입자의 영업권 및 주거권에 대한 보상체계 역시 개선하도록 한다.

둘째, 주거비 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집값 및 전세 값을 안정토록 하는 중장기 대책을 강구한다. 또한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크기의 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건설하여 공급한다. 특히, 수요자 욕구에 맞춘 주거공급이 요구된다는 점을 주목해 가구원수에 따른 다양한 주거를 건축하여 공급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는 1인 가구, 1~2인 가구의 수요자를 위한 지역별 주거공급과 확대가족의 수요자를 위한 지역별 주거공급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라. 「인구·가족」 영역의 위기수준 저하 정책

저출산과 고령사회는 현재 한국사회의 최대 뇌관 중 하나이다. 저출산의 경우 최근의 경향이 지속되면 2200년이 되기 전에 인구가 사라진다. 더불어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인데, 2050년경에는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율이 40%대를 넘어서게 된다. 현재의 위기이자 미래의 위기라 할 수 있는 저출산과 고령사회, 그리고 이와 연관된 가족의 위기에 대한 정책 대안 모색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고령사회대책의 효과성 검토와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고령사회에 대한 그 동안의 정책 기조를 검토하여 소극적 방향에서 적극적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2002년 이후 추진된 모든 고령사회대책의 효과성을 평가하여 지속여부를 판단하고, 아울러 고효율의 정책을 신규로 개발하여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연령에 의한 노인개념에서 능력에 의한 노인개념으로 전환하고, 노인동거부양 가족에 대한 현금지원 및 과감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다.

둘째, 「저출산대책」 효과성 검토와 신규 정책개발·추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대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검토 대상의 저출산대책에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특히, 인기에 영합하여 비효과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중단해야 한다. 또한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저출산대책이 지속적으로 개발·추진되어야 한다. 단기적인 처방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출산율 제고를 모색하도록 한다.

셋째, 과밀인구 해소와 지역 균형적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는 대책을 강화한다.

수도권 과밀인구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인구의 강제적 분산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 발전이 모두가 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정책과 인센티브의 제공으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균형적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마. 「복지」 영역의 위기수준 저하 정책

사회복지의 기본 목표는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의 경제적, 사회적 기본 생활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다. 최근 한국사회의 복지정책은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통적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그 하나라면, 세계화에 대응하여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시키는 적극적 복지를 추진하는 것이 다른 하나다. 사회위기의 측면에서 주목할 복지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아동의 부모양육 책임을 강화한다.

아동에 대한 복지정책은 교육 및 청소년 문제와 연관해 볼 때 좁게는 가족의 위기, 넓게는 사회위기의 관점에서 매우 중대한 과제이다. 따라서 미혼부모, 이혼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을 무한대로 확대한다. 동거의 유무에 상관없이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혼부모의 자녀양육책임 의무화를 위시하여 필요한 법제도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둘째, 노후의 생활안정 및 건강을 위한 정책을 강화한다.

공적 연금 및 개인에 의한 노후준비와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필요재정과의 괴리 감소를 위한 국가와 개인(부부)의 노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더불어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후기고령 인구의 증가가 치매, 중풍 등 노인수발을 필요로 하는 고령 인구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요양보호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 이는 가족이 담당하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가족 내지 사회 차원에서의 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

바. 「건강·안전」 영역의 위기수준 저하 정책

최근 한국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어 왔다는 데 있다. 식품에서 질병에 이르기까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욕구는 그만큼 국민 다수의 삶이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2008년 광우병을 둘러싼 논란이나 2009년 '신종플루 현상'에서 볼 수 있듯이 건강 및 안전 영역에서 새로운 정책의 수립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첫째, 법정 전염병 및 유행성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중심의 신속한 치료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해 발생한 '신종플루 현상'은 한국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사회가 전염병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준다. 경제, 문화뿐만 아니라 질병 역시 빠른 속도로 세계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연관해 전염병 예방지침의 홍보와 집단 생활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조기경보체계 마련을 통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더불어 질병 예방과 대처에 국제 협력 역시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신종바이러스 백신개발의 지원을 강화하고 적정량을 항시 비축토록 한다.

질병은 사전 예방이 가장 바람직한 대처 방안이지만, 일단 발생을 하면 이에 대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하다. 따라서 비상시에 대비해 질병을 담당하는 제약회사, 병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신종바이러스 백신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증대하고, 재정수혜 제약회사에서는 백신의 수량을 항상 적정수준에서 확보하도록 한다.

사. 「사회갈등·문화」 영역의 위기수준 저하 정책

사회갈등은 일견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갈등을 해소하는 비용이 과다하게 지불될 경우 그것이 사회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위기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한국사회의 갈등지수는 OECD 국가 중 4위이며, 갈등비용은 GDP의 27%에 달하고 있다(박준, 2009). 사회갈등이 노사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을 주목하여 다각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첫째,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갈등의 권위적 조정이라는 낡은 모델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합의와 시스템에 의한 갈등조정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요구되며, 여기에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공동 의사결정을 모색하는 거버넌스를 새로운 갈등조정 방식으로 도입해야 한다.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시민사회 거버넌스 모색, 예방적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 사회적 합의형성 제도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대화중심의 노사문화를 확산시킨다.

노사갈등이 계층갈등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노사관계의 기본 구도를 대결에서 대화로 전환시킴으로써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아울러 사용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한다. 더불어 준법 노동쟁의를 위해 노력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노사협상 타결시 화합차원에서의 불법파업 주동자에 대한 법적 제재 철회 및 취소는 전향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환경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을 강구한다.

새만금 방조제나 천성산 터널 공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환경갈등의 기본 원인이 지역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대립에 있다는 점에서 그 갈등은 격렬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상이한 가치가 충돌하는 만큼 그 해법을 찾기가 매우 어렵지만, 심의민주주의, 주민투표 등의 제도를 도입하거나 활성화함으로써 환경갈등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선행 갈등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갈등해소 프로세스를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최근 한국사회의 주요 사회변동의 하나는 다문화사회의 진전이다. 이주노동자와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사회는 다인종 사회로 나가고 있으며, 이들의 사회 및 문화통합의 제고가 중대한 사회과제로 부상해 왔다. 구체적으로 이들을 위한 언어·문화·사회교육을 확대하고, 복지를 강화하며,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증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간의 협력 네트워크 역시 더욱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공동체 문화 형성을 모색한다.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데 다양한 행위주체들은 자신의 입장과 견해를 단지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상호교류의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신의 가치와 도덕성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열린 토론 및 공론 조성의 노력, 타협과 공존을 위한 문화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대화민주주의'를 중장기적으로 강화한다.

아. 「불평등」 영역의 위기수준 저하 정책

세계화 시대에 불평등의 확산은 어느 사회이건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지만, 한국사회에서 그것은 사회통합을 작지 않게 훼손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불평등의 구체적인 현상인 사회 양극화는 특히 소득 양극화, 고용 양극화, 성별에 따른 양극화, 지역에 따른 양극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는 소득 양극화, 성별 양극화, 지역에 따른 양극화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신빈곤과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최근 중대한 사회문제로 부상해 온 신빈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소득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빈부격차 확대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이는 정치·사회·문화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최저생계비 수준을 상향 조정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부분급여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강화하도록 한다.

둘째,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서의 성평등을 강화한다.

성평등지표에 의한 지속적 모니터링 및 문제점을 개선토록 한다. 또한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동일직종-동일임금의 원칙이 지켜지는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권장한다. 아울러 승진 등의 인사에서의 불이익으로 인한 실질적 근로조건 저하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공직 분야에서 적극적인 여성할당제를 적용하여 양성평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강구한다.

지역간 불균형은 압축산업화가 가져온 대표적인 그늘 가운데 하나이며, 잠재적, 현재적 갈등 요인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 불평등적 요소의 발굴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노력으로 추진한다. 특히, 시·도별 차이가 큰 재정, 소득, 보건복지, 취업률 등의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자. 「경제일반」 영역의 위기수준 저하 정책

경제는 국민의 실생활을 이루는 영역인 만큼 경제위기가 사회위기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다. 한국사회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 등 경제위기의 위력을 크게 체험한 바 있다. 경제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정부는 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적절한 개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유지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첫째, '국제유가 연동제' 및 '유류안정기금'을 적정수준에서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가안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부담을 감소토록 한다.

국민 경제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국민 경제수준을 감안하여 최저유가제 및 최고유가제를 병행하여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유가를 안정화한다. 특히, 취업난, 실질소득 감소 등으로 가구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이고 편리한 에너지 절감대책을 강화하고 저탄소, 저비용 에너지를 적극 개발하도록 한다.

둘째, 물가관리를 강화하고, 물류의 유통단계를 과학화하며,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를 내실화한다.

사회위기와 연관된 경제 영역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물가 안정이며, 이는 특히 중산층과 하층계급의 경제적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물가관리를 위해서는 업체 간의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유통단계를 축소하는 등 물류의 선진화를 도모함으로써 물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 생산자의 부당한 정관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감소하기 위한 모니터링 역시 강화하도록 한다.

셋째, 기업이 부담 가능한 환율을 유지토록 통화관리정책을 강화하여 기업경쟁력 약화를 방지한다.

한국경제의 대외의존성을 고려할 때 세계경제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매우 중대한 경제적 과제이다. 이런 대외 경제정책에서 무엇보다 환율에 대한 적절한 관리는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경쟁력을 감안한 적정 환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수출 및 수입이 많은 기업의 경쟁

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환율변동과 재정지원을 연계하도록 한다.

차. 「정치 일반」 영역의 위기수준 저하 정책

정치에 부여된 과제 중 하나가 사회갈등의 조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정치가 오히려 사회갈등의 조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정치에 대한 국민적 무관심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이는 무당파층의 증가로 구체화되어 왔다. 사회위기를 해소하는 데 정치는 그 최종 의사결정 단위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구심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새롭게 혁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정치인 스스로 노력한다.

정치인이 법을 준수하고, 범법행위에서 특별히 우대받지 않아야 한다. 다시 말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여야 한다. 또한 정치개혁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은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정치인의 도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고 문화적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개혁은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높은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지역중심의 정당운영을 철폐하고 정책중심의 정당운영을 강화한다.

지역갈등의 가장 큰 수혜자는 정치인이고,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다. 현재와 같은 지역주의 정당체제 아래서 정치인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주의 정당체제가 갖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천과정을 포함한 정당운영을 민주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특정정당과 특정지역

이 강하게 결속되어 있을 경우, 그 지역에서는 30% 선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개혁을 추진하도록 한다.

셋째, 정당의 리더십과 국민의 팔로십의 생산적인 결합을 모색한다.

사회의 거의 모든 사안들이 정치 영역에서 최종 결정된다는 점에서 정당의 역량은 갈수록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정당의 역량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리더십(leadership)과 국민의 펠로워십(followership) 간의 생산적인 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연관해 정부와 시민사회의 거버넌스에 병행하여 정당과 시민사회의 거버넌스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정당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허용하고 장려할 수 있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성철 외,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민족통일연구원, 1996. 12.

김승권 외,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김호기, “사회갈등과 거버넌스,” 『현대사회와 문화』, 25권, 2007.

박길성, 사회적 자본과 삶의 질. 아세아연구, 45(2), 2002.

박준 외,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 비용,” 삼성경제연구소, 2009.

심상용, 우리나라 근로빈곤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대한 실증연구(1982-2004): 거시경제, 노동시장, 분배제도가 근로자가구의 빈곤에 미친 영향의 검증. 한국사회복지학, 58(4), 2006.

장경섭, “압축적 근대성과 복합위험사회.” 한국비교사회연구회 편, [동아시아의 성공과 좌절] ([비교사회], 2호), pp.373-414. 서울: 전통과 현대, 1998.

장경섭, 『가족·생애·정치경제: 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서울: 창비, 2009.

채경석, 『위기관리정책론』, 문왕사, 2007.

통계청, 『통계로 본 대한민국 50년의 사회경제상 변화』, 199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사회의 위기수준』, 2002. 2.(대외비, 미발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사회안정수준 측정』, 2004. 9.(대외비, 미발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각년도
통계청, 『가계조사』,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각년도
통계청, 『2006년 농가경제통계』, 2006
통계청, 『인구총조사』, 각년도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각년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7.11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2005
통계청, 『2008년 출산통계』, 2008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연보』, 각년도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통계연보』, 각년도
보건복지가족부, 『등록장애인현황 및 내부행정자료』, 각년도
통계청, 『2007년 생명표』, 2007
통계청, 『2008년 사망원인통계』, 2008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백서』, 각년도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2008년 사망원인통계』, 2008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노동부,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각년도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년도
노동부, 『지방노동관서의 노동동향보고서(일보) 및 근로손실일수 보고서(주보)』,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통계청,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각년도
통계청, 『사회통계조사보고서』, 각년도
대한석유협회 홈페이지(http://www.petroleum.or.kr)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각년도
자유기업원, 『한국의 씀씀이』, 1997
삼성경제연구소, 『2002년 Trend 10』, 2002
한국은행, 『국민소득』, 각년도
기획재정부, 『통화별 환율조사통계』, 각년도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각년도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국제투명성기구 홈페이지 (http://www.transparency.org/)
조선일보·한국갤럽, 1988~2008
동아일보·한길리서치, 1998
Ashcroft, Bill, Gareth Griffiths, & Helen Tiffin, The Empire Writes Back: Theory and Practice in Post-Colonial Literatures, 2nd ed. New York: Routledge, 2002.
Beck, Ulrich, & Edgar Grande, "Varieties of Second Modernity: Extra-European and European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Paper prepared for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Varieties of Second Modernity: Extra-European and European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rganized by the Special Research Programme on "Reflexive Modernization"at the University of Munich, 16~18 April 2009, 2009.
Beck, Ulrich, World Risk Society. Cambridge: Polity, 1999.
Beck & Grande, "Varieties of Second Modernity: Extra-European and

European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2009.

Beck, Ulrich, "Living in the World Risk Society", *Economy and Society,* 35(3), 2006.

Bloch, Ernst, Heritage of Our Tim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35]1991.

Brzezinski, Zbigniew,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Charles Scribener's Sons, 1989.

Bubolz M, Eicher JB, Evers SJ, Sontag MS. A., Human Ecological Approach to QoL: Conceptual Framework and Results of a Preliminary Study. SocIndicators Res, 1980.

Campbell, A., The Sense of Well-being in America. New York: McGraw-Hill, 1981.

Chang, Kyung-Sup. "The Neo-Confucian Right and Family Politics in South Korea: The Nuclear Family as an Ideological Construct", *Economy and Society,* 26(1): 22~42, 1997.

Chang, Kyung-Sup, “Compressed Modernity and Its Discontent: South Korean Society in Transition”, *Economy and Society,* 28(1): 30~55, 1999.

Chang Kyung-Sup, "Politics of Developmental Citizenship: The South Korean Impasse." Citizen in East Asia: Between State Ally and Critical Observer (organized by the Centre for Development Studies, 14 December 2007, University of Groningen), 2007.

Chang, Kyung-Sup, "Compressed Modernity in Perspective: South Korean Instances and Beyond."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Workshop on "Varieties of Second Modernity: Extra-European and European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rganized by the Special Research Programme on "Reflexive

Modernization"at the University of Munich, 16~18 April 2009, 2009a.

Chang Kyung-Sup, "Developmental Citizenship in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Case and Beyond."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Contested Citizenship in East Asia", organized by the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the Institute of State Governance, Yonsei University, 28~29 May 2009, 2009b.

Chang, Kyung-Sup,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Compressed Modernity and Obfuscated Family Crisis in East Asia", Paper delivered as the keynote speech at the Global COE Symposium on "Family and Intimacy in Asia", Kyoto University, 23 November 2009, 2009d.

Chang, Kyung-Sup, "Predicaments of Neoliberalism in the Post-Developmental Liberal Context."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velopmental Politics in the Neoliberal Era and Beyond", organized by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2-23 October 2009, 2009c.

Chang Kyung-Sup, “The Second Modern Condition? Compressed Modernity as Internalized Reflexive Cosmopolitanism",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2010. (근간)

Dirlik, Arif. "Global Modernity: Modernity in an Age of Global Capitalism", *European Journal of Social Theory*, vol. 6(3): 274-292, 2003.

Easton, David, "Systems Analysis and Its Classical Critics", Political Science Reviewer, Vol. 3, 1973.

Fine, Ben, "Neo-Liberalism in Retrospect? – It’s Financialisation,

Stupid."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velopmental Politics in the Neoliberal Era and Beyond", organized by the Center for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22-23 October 2009, 2009.

George, L. K. & Landerman, R., *Health and Subjective Well-being: a Replicated Secondary Data Analysis,* Int J Aging Hum Dev., 19(2), 1984.

Habermas, Juergen,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1, Boston: Beacon Press, 1984.

Habermas, Juergen,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2, Boston: Beacon Press, 1987.

Harvey, David,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Oxford: Blackwell, 1980.

Inglehart, R.,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Jameson, Fredric, and Masao Miyoshi (eds.), *The Cultures of Globaliza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1998.

Kirkcaldy, Furnham & Veenhoven, Health Car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Nations in Antoniou, A. S. G., & Cooper, C. L. (eds), *Research Companion to Organizational Health Psychology,* Cheltenham: Edward Elgar Publisher, 2002.

Lapinski, J. S., Riemann, C. R., Shapiro, R. Y., Stevens, M. F., & Jacobs, L. R., Welfare State Regimes And Subjective Well-Being: A Cross-National Study. Int.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0, 1998.

Lipton, Michael, *Why Poor People Stay Poor: Urban Bias in World Developmen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7.

Mishra, Vijay & Bob Hodge, "What is Post(-)colonialism?" Patrick

Williams & Laura Chrisman, eds., *Colonial Discource and Post-Colonial Theory: A Reader*, pp.276-290.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4.

Mittelman, James H. The Globalization Syndrome: Transformation and Resistanc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Mittelman, James H., & Norani Othman (eds.), Capturing Globalization. London: Routledge, 2001.

Myers, D. G. & Diener, E.,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s 6(1), 1995.

Esping-Anderson, 1999

Rudnick & Kravetz, *The Relation of Social Support-seeking to Quality of Life in Schizophrenia,* J Nerv Ment Dis.: 189(4), 2001.

Sen, A., The Welfare Basis of Real Income Comparison: A Surv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xⅦ, 1979.

Turner, Bryan S., *Orientalism, Postmodernism, and Globalism,* London: Routledge, 1994.

Turner, Bryan S., & Habibul Haque Khondker, Globalization: East / West (forthcoming), 2010.

Weiss, Linda, Elizabeth Thurbon, & John Mathews, *National Insecurity: The Howard Government's Betrayal of Australia,* Crows Nest: Allen & Unwin, 2007.

http://www. humansecuritycentre.org

부 록

부록

〔부록 1〕 응답자 특성별 사회위기영역 우선순위 및 영향도

〈부표 1-1〉 한국인의 특성별 고용영역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평균	F
성별														
남성	30.7	19.5	16.7	10.7	9.3	4.7	3.7	2.8	0.9	0.9	100.0(215)	5.81	3.03	0.08
여성	35.4	22.3	12.5	11.3	6.0	4.4	2.8	2.5	1.3	1.6	100.0(319)		2.86	
연령														
20대	32.1	21.8	13.6	11.1	7.0	4.9	3.7	3.7	0.4	1.6	100.0(243)	20.04	3.01	2.46#
30대	32.7	22.0	14.9	11.3	9.5	4.2	1.8	1.8	1.2	0.6	100.0(168)		2.83	
40대	42.9	19.0	17.5	9.5	4.8	1.6	3.2	0.0	1.6	0.0	100.0(63)		2.41	
50대 이상	31.7	18.3	11.7	11.7	5.0	6.7	5.0	3.3	3.3	3.3	100.0(60)		3.40	
교육수준														
대졸 이하	33.1	19.9	15.5	11.1	7.8	4.1	3.6	2.6	0.5	1.8	100.0(387)	12.17	2.96	0.02
대학원 이상	34.0	25.0	10.4	11.1	6.3	5.6	2.1	2.8	2.8	0.0	100.0(144)		2.86	
거주지역														
대도시	32.3	21.6	13.2	11.9	8.4	4.6	3.2	2.4	1.3	1.1	100.0(371)	11.07	2.97	1.53
중소도시	35.0	18.2	16.8	10.2	5.1	5.1	3.6	2.9	0.7	2.2	100.0(137)		2.96	
농어촌	40.0	32.0	16.0	4.0	4.0	0.0	0.0	4.0	0.0	0.0	100.0(25)		2.20	

주: # $p<.10$

〈부표 1-2〉 한국인의 특성별 고용영역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9	0.5	1.9	1.9	6.5	5.1	12.1	16.3	19.5	35.3	100.0(215)	5.03	8.22	0.43
여성	1.3	1.3	0.9	1.6	4.1	5.6	11.6	16.0	24.5	33.2	100.0(319)		8.29	
연령														
20대	1.6	0.4	1.6	1.6	7.0	5.8	11.9	14.8	20.2	35.0	100.0(243)	22.79	8.17	1.33
30대	0.0	1.8	0.6	0.6	4.2	5.4	11.3	17.3	24.4	34.5	100.0(168)		8.43	
40대	0.0	1.6	1.6	1.6	1.6	6.3	11.1	14.3	25.4	36.5	100.0(63)		8.46	
50대 이상	3.3	0.0	1.7	5.0	3.3	3.3	13.3	20.0	23.3	26.7	100.0(60)		7.95	
교육수준														
대졸 이하	1.6	0.5	1.6	2.1	4.7	5.4	11.4	15.8	21.2	35.9	100.0(387)	10.50	8.27	1.20
대학원 이상	0.0	2.1	0.7	0.7	6.3	5.6	12.5	17.4	26.4	28.5	100.0(144)		8.22	
거주지역														
대도시	0.8	1.3	1.1	1.6	4.6	7.3	12.7	16.2	21.0	33.4	100.0(371)	25.12	8.21	1.37
중소도시	2.2	0.0	2.2	2.2	7.3	0.7	8.8	18.2	23.4	35.0	100.0(137)		8.26	
농어촌	0.0	0.0	0.0	0.0	0.0	4.0	16.0	4.0	40.0	36.0	100.0(25)		8.88	

〈부표 1-3〉 한국인의 특성별 교육영역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평균	*F*
성별														
남성	8.4	15.3	17.2	11.2	11.6	8.8	10.2	4.7	7.4	5.1	100.0(215)	5.54	4.73	0.48
여성	5.3	14.1	15.0	14.7	12.5	8.5	10.0	7.5	6.6	5.6	100.0(319)		4.97	
연령														
20대	6.6	10.3	18.5	13.6	13.6	7.0	11.1	5.3	7.4	6.6	100.0(243)	23.98	5.00	1.00
30대	6.5	17.9	14.3	14.3	11.3	8.9	8.9	7.7	6.0	4.2	100.0(168)		4.72	
40대	4.8	25.4	14.3	9.5	11.1	11.1	6.3	9.5	4.8	3.2	100.0(63)		4.54	
50대 이상	8.3	11.7	11.7	13.3	10.0	11.7	13.3	3.3	10.0	6.7	100.0(60)		5.17	
교육수준														
대졸 이하	6.7	13.7	18.1	13.2	11.6	9.0	10.3	5.7	7.5	4.1	100.0(387)	11.02	4.80	0.52
대학원 이상	6.3	16.7	10.4	13.9	13.9	7.6	9.7	8.3	4.9	8.3	100.0(144)		5.03	
거주지역														
대도시	6.5	14.6	15.4	13.2	13.5	7.3	10.0	7.5	7.0	5.1	100.0(371)	12.32	4.90	1.18
중소도시	5.8	13.9	16.8	13.1	9.5	12.4	10.2	4.4	6.6	7.3	100.0(137)		4.97	
농어촌	12.0	16.0	20.0	16.0	8.0	8.0	12.0	0.0	8.0	0.0	100.0(25)		4.12	

〈부표 1-4〉 한국인의 특성별 교육영역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3.3	3.3	1.9	7.9	10.2	10.2	15.8	13.5	16.7	17.2	100.0(215)	17.12*	7.01	1.22
여성	1.3	3.1	6.9	5.6	8.2	16.0	18.8	13.5	14.1	12.5	100.0(319)		6.79	
연령														
20대	1.6	3.3	4.1	7.8	8.6	16.0	17.3	14.4	14.8	11.9	100.0(243)	18.73	6.80	0.84
30대	2.4	2.4	5.4	4.8	8.3	12.5	17.9	14.3	17.3	14.9	100.0(168)		7.02	
40대	1.6	3.2	6.3	1.6	11.1	14.3	17.5	7.9	15.9	20.6	100.0(63)		7.10	
50대 이상	3.3	5.0	5.0	11.7	10.0	6.7	18.3	13.3	10.0	16.7	100.0(60)		6.57	
교육수준														
대졸 이하	1.6	3.6	3.6	7.8	8.8	13.2	17.1	13.7	15.2	15.5	100.0(387)	12.93	6.95	0.01
대학원 이상	3.5	1.4	8.3	3.5	9.7	15.3	18.8	13.2	14.6	11.8	100.0(144)		6.72	
거주지역														
대도시	1.3	3.5	5.1	6.2	9.2	13.7	16.7	13.5	16.2	14.6	100.0(371)	11.62	6.93	1.46
중소도시	4.4	2.9	5.1	7.3	8.8	13.9	18.2	13.1	13.9	12.4	100.0(137)		6.64	
농어촌	0.0	0.0	0.0	8.0	8.0	12.0	28.0	16.0	8.0	20.0	100.0(25)		7.40	

주: * p 〈.05

〈부표 1-5〉 한국인의 특성별 주거영역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평균	*F*
성별														
남성	7.4	10.7	10.7	6.5	10.7	11.6	11.6	13.5	10.2	7.0	100.0(215)	13.37	5.61	0.05
여성	4.1	9.4	10.7	7.5	12.9	10.3	10.3	9.1	10.7	15.0	100.0(319)		6.03	
연령														
20대	5.3	12.8	10.7	5.3	9.5	11.1	8.6	13.6	9.9	13.2	100.0(243)	36.03	5.88	0.34
30대	5.4	9.5	11.9	8.3	10.7	11.3	14.9	8.3	10.1	9.5	100.0(168)		5.72	
40대	0.0	3.2	11.1	11.1	20.6	12.7	12.7	6.3	12.7	9.5	100.0(63)		6.13	
50대 이상	11.7	6.7	6.7	6.7	16.7	6.7	6.7	11.7	11.7	15.0	100.0(60)		5.90	
교육수준														
대졸 이하	5.9	10.9	10.6	7.0	11.9	11.4	10.1	10.9	10.1	11.4	100.0(387)	3.64	5.77	0.31
대학원 이상	4.2	7.6	11.1	6.3	12.5	9.7	13.2	10.4	11.8	13.2	100.0(144)		6.13	
거주지역														
대도시	5.7	10.0	12.7	6.5	10.5	10.8	11.3	11.6	9.4	11.6	100.0(371)	16.52	5.80	0.64
중소도시	5.8	8.0	5.8	8.8	14.6	10.9	10.2	9.5	14.6	11.7	100.0(137)		6.09	
농어촌	0.0	20.0	8.0	8.0	16.0	12.0	8.0	8.0	4.0	16.0	100.0(25)		5.64	

〈부표 1-6〉 한국인의 특성별 주거영역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3.7	5.6	7.0	9.8	12.6	13.0	12.1	10.7	12.6	13.0	100.0(215)	11.57	6.29	3.87#
여성	3.8	4.1	8.2	10.0	13.5	15.4	13.5	16.3	6.9	8.5	100.0(319)		6.08	
연령														
20대	2.1	4.5	9.5	11.9	11.9	11.9	13.2	14.8	11.1	9.1	100.0(243)	24.17	6.20	0.75
30대	4.2	4.8	6.0	8.9	11.9	16.1	13.1	13.7	7.7	13.7	100.0(168)		6.31	
40대	4.8	6.3	7.9	4.8	20.6	17.5	9.5	15.9	7.9	4.8	100.0(63)		5.81	
50대 이상	8.3	3.3	5.0	10.0	13.3	16.7	15.0	10.0	6.7	11.7	100.0(60)		5.98	
교육수준														
대졸 이하	3.1	4.7	8.3	11.1	11.4	12.7	12.9	13.4	11.1	11.4	100.0(387)	19.87*	6.26	4.83*
대학원 이상	5.6	4.9	5.6	6.9	18.1	19.4	13.2	15.3	3.5	7.6	100.0(144)		5.89	
거주지역														
대도시	3.2	3.8	7.5	11.3	11.6	15.1	12.7	14.6	8.6	11.6	100.0(371)	22.28	6.26	1.08
중소도시	5.1	8.0	7.3	5.8	18.2	13.1	11.7	13.1	8.8	8.8	100.0(137)		5.90	
농어촌	4.0	0.0	12.0	12.0	8.0	12.0	20.0	12.0	20.0	0.0	100.0(25)		6.16	

주: # p<.10, * p 〈.05

〈부표 1-7〉 한국인의 특성별 인구·가족영역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평균	*F*
성별														
남성	4.2	4.7	7.4	10.7	10.2	13.0	11.2	15.3	12.1	11.2	100.0(215)	9.45	6.29	2.37
여성	8.5	5.3	8.8	6.6	7.5	12.5	11.9	13.2	15.7	10.0	100.0(319)		6.15	
연령														
20대	4.5	2.9	7.0	9.9	7.4	12.8	9.5	15.2	18.9	11.9	100.0(243)	48.56**	6.62	4.87**
30대	9.5	6.5	8.9	8.9	10.7	11.3	11.9	13.1	11.3	7.7	100.0(168)		5.74	
40대	7.9	4.8	1.6	6.3	6.3	20.6	19.0	9.5	7.9	15.9	100.0(63)		6.43	
50대 이상	6.7	10.0	18.3	1.7	10.0	8.3	11.7	16.7	10.0	6.7	100.0(60)		5.60	
교육수준														
대졸 이하	6.2	5.9	8.0	7.8	8.8	11.9	11.1	14.0	15.5	10.9	100.0(387)	6.33	6.26	0.78
대학원 이상	8.3	2.8	9.0	9.7	7.6	14.6	13.2	14.6	11.1	9.0	100.0(144)		6.05	
거주지역														
대도시	7.3	5.9	6.7	10.0	9.2	12.4	11.3	13.7	14.0	9.4	100.0(371)	22.80	6.09	2.84#
중소도시	4.4	2.9	10.9	4.4	7.3	13.9	10.2	16.1	16.8	13.1	100.0(137)		6.63	
농어촌	12.0	4.0	16.0	4.0	8.0	12.0	24.0	4.0	4.0	12.0	100.0(25)		5.52	

주: # p<.10, ** p 〈.01

〈부표 1-8〉 한국인의 특성별 인구·가족영역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3.7	5.6	12.6	9.8	13.0	12.1	12.6	18.6	7.0	5.1	100.0(215)	10.36	5.80	0.09
여성	3.8	6.6	7.8	9.7	13.8	12.5	17.2	12.2	8.5	7.8	100.0(319)		5.97	
연령														
20대	4.1	7.8	11.5	9.1	15.2	12.3	17.3	11.5	5.8	5.3	100.0(243)	51.27**	5.59	3.34*
30대	2.4	4.8	7.1	10.1	11.9	11.9	15.5	18.5	7.1	10.7	100.0(168)		6.32	
40대	4.8	6.3	6.3	15.9	14.3	4.8	22.2	14.3	7.9	3.2	100.0(63)		5.73	
50대 이상	5.0	3.3	13.3	5.0	10.0	21.7	0.0	18.3	18.3	5.0	100.0(60)		6.13	
교육수준														
대졸 이하	3.6	7.0	10.1	9.3	13.4	12.7	14.0	15.0	8.5	6.5	100.0(387)	5.07	5.87	0.79
대학원 이상	3.5	4.2	9.0	11.1	13.9	11.1	19.4	13.9	6.3	7.6	100.0(144)		5.99	
거주지역														
대도시	3.5	5.7	9.7	10.0	14.8	10.2	14.0	15.4	8.9	7.8	100.0(371)	23.21	5.99	1.66
중소도시	5.1	8.0	10.9	9.5	8.0	16.8	20.4	11.7	5.1	4.4	100.0(137)		5.59	
농어촌	0.0	4.0	4.0	8.0	24.0	16.0	8.0	24.0	8.0	4.0	100.0(25)		6.28	

주: * p 〈.05, ** p 〈.01

〈부표 1-9〉 한국인의 특성별 복지영역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평균	*F*
성별														
남성	3.3	8.4	10.2	10.7	7.4	12.6	15.8	12.1	10.7	8.8	100.0(215)	8.56	5.98	2.91#
여성	2.2	5.0	8.2	11.6	11.6	13.2	14.7	14.7	12.9	6.0	100.0(319)		6.16	
연령														
20대	3.7	7.8	9.9	13.6	8.6	12.3	12.8	15.2	10.3	5.8	100.0(243)	29.81	5.82	2.89*
30대	1.8	4.2	9.5	10.7	11.3	16.1	16.1	10.1	12.5	7.7	100.0(168)		6.18	
40대	0.0	4.8	6.3	4.8	12.7	4.8	27.0	15.9	14.3	9.5	100.0(63)		6.79	
50대 이상	3.3	8.3	6.7	10.0	8.3	15.0	10.0	15.0	15.0	8.3	100.0(60)		6.20	
교육수준														
대졸 이하	3.1	7.8	8.8	11.4	10.1	13.2	14.2	14.5	10.6	6.5	100.0(387)	11.07	5.95	0.36
대학원 이상	1.4	2.8	9.7	11.1	9.7	11.1	18.1	11.1	16.0	9.0	100.0(144)		6.45	
거주지역														
대도시	2.7	5.9	9.7	10.0	8.4	12.4	15.4	14.6	12.7	8.4	100.0(371)	19.06	6.21	3.49*
중소도시	2.2	7.3	6.6	11.7	13.1	13.9	16.1	13.1	10.9	5.1	100.0(137)		5.99	
농어촌	4.0	8.0	8.0	28.0	16.0	16.0	8.0	4.0	8.0	0.0	100.0(25)		4.92	

주: # p<.10, * p 〈.05

〈부표 1-10〉 한국인의 특성별 복지영역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2.8	5.6	9.3	11.6	14.4	8.4	13.5	17.7	12.1	4.7	100.0(215)	15.31#	6.02	8.96**
여성	1.6	4.7	6.0	9.1	21.9	12.5	17.9	13.5	7.8	5.0	100.0(319)		6.04	
연령														
20대	1.6	3.3	6.6	11.1	17.3	11.5	14.8	15.6	12.8	5.3	100.0(243)	34.82	6.25	2.12#
30대	1.2	6.5	6.0	8.3	20.8	14.3	16.1	15.5	6.5	4.8	100.0(168)		5.98	
40대	3.2	4.8	14.3	15.9	12.7	6.3	22.2	12.7	4.8	3.2	100.0(63)		5.52	
50대 이상	5.0	8.3	6.7	5.0	26.7	3.3	15.0	15.0	10.0	5.0	100.0(60)		5.80	
교육수준														
대졸 이하	1.8	4.7	6.7	9.6	19.9	10.9	14.7	14.7	11.6	5.4	100.0(387)	11.52	6.14	0.07
대학원 이상	2.8	6.3	9.0	11.1	16.7	10.4	20.1	16.0	4.2	3.5	100.0(144)		5.74	
거주지역														
대도시	2.2	5.1	8.6	9.7	19.1	9.7	16.7	14.0	9.7	5.1	100.0(371)	15.95	5.99	1.76
중소도시	2.2	5.8	5.1	12.4	19.0	12.4	13.1	16.1	9.5	4.4	100.0(137)		5.98	
농어촌	0.0	0.0	0.0	4.0	16.0	20.0	24.0	28.0	4.0	4.0	100.0(25)		6.84	

주: # p<.10, ** p 〈.01

〈부표 1-11〉 한국인의 특성별 건강·안전영역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평균	*F*
성별														
남성	1.9	4.7	7.9	12.1	8.8	9.8	17.7	14.0	12.1	11.2	100.0(215)	9.58	6.42	1.97
여성	6.9	6.0	7.8	10.0	11.3	9.4	16.0	13.2	9.7	9.7	100.0(319)		5.97	
연령														
20대	6.2	5.8	6.2	10.7	10.7	6.2	16.9	13.6	11.1	12.8	100.0(243)	35.65	6.24	1.25
30대	4.8	5.4	8.9	8.9	11.3	14.3	14.3	14.3	9.5	8.3	100.0(168)		6.04	
40대	1.6	3.2	6.3	14.3	9.5	12.7	9.5	15.9	17.5	9.5	100.0(63)		6.54	
50대 이상	3.3	6.7	13.3	13.3	6.7	6.7	30.0	8.3	5.0	6.7	100.0(60)		5.72	
교육수준														
대졸 이하	5.2	4.9	7.5	10.9	9.8	9.0	17.3	13.7	10.9	10.9	100.0(387)	3.09	6.21	0.03
대학원 이상	4.2	6.9	9.0	11.1	11.1	11.1	13.9	13.2	10.4	9.0	100.0(144)		5.99	
거주지역														
대도시	4.9	6.2	7.3	10.0	9.4	9.7	16.2	13.5	11.6	11.3	100.0(371)	13.07	6.23	1.88
중소도시	4.4	2.9	10.2	10.9	11.7	8.8	19.0	13.9	8.8	9.5	100.0(137)		6.13	
농어촌	8.0	8.0	4.0	20.0	16.0	12.0	12.0	12.0	8.0	0.0	100.0(25)		5.20	

〈부표 1-12〉 한국인의 특성별 건강·안전영역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3.3	8.4	9.3	8.4	15.8	10.7	18.1	13.5	9.8	2.8	100.0(215)	15.68#	5.75	0.01
여성	2.5	4.1	8.8	10.7	16.6	11.3	15.4	13.8	7.2	9.7	100.0(319)		6.10	
연령														
20대	4.1	5.8	9.9	9.1	15.6	11.5	16.0	12.3	7.4	8.2	100.0(243)	22.54	5.89	0.48
30대	1.2	4.2	9.5	9.5	18.5	10.7	16.7	14.9	7.1	7.7	100.0(168)		6.10	
40대	3.2	12.7	4.8	11.1	9.5	12.7	19.0	12.7	12.7	1.6	100.0(63)		5.76	
50대 이상	1.7	3.3	8.3	11.7	20.0	8.3	15.0	16.7	10.0	5.0	100.0(60)		6.08	
교육수준														
대졸 이하	2.8	6.5	9.0	9.6	17.1	10.6	15.8	13.7	8.5	6.5	100.0(387)	2.80	5.91	0.27
대학원 이상	2.8	4.2	8.3	10.4	14.6	12.5	18.1	13.2	7.6	8.3	100.0(144)		6.10	
거주지역														
대도시	3.0	6.7	8.6	10.2	15.9	10.0	16.7	12.7	8.9	7.3	100.0(371)	14.78	5.94	0.55
중소도시	2.9	4.4	11.7	8.0	16.1	12.4	15.3	17.5	5.8	5.8	100.0(137)		5.92	
농어촌	0.0	0.0	0.0	12.0	24.0	20.0	20.0	8.0	8.0	8.0	100.0(25)		6.44	

주: # p<.10

〈부표 1-13〉 한국인의 특성별 사회갈등·문화영역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평균	*F*
성별														
남성	7.0	7.9	8.8	9.3	12.6	11.2	7.0	15.3	11.2	9.8	100.0(215)	8.92	5.86	4.11*
여성	3.8	7.5	7.2	12.5	14.4	11.3	9.7	15.4	12.5	5.6	100.0(319)		5.91	
연령														
20대	4.9	10.3	6.6	10.3	12.8	15.6	9.9	13.2	9.1	7.4	100.0(243)	32.75	5.74	1.74
30대	4.2	4.2	7.1	10.1	15.5	7.7	9.5	20.2	14.9	6.5	100.0(168)		6.26	
40대	6.3	7.9	11.1	15.9	9.5	7.9	3.2	17.5	11.1	9.5	100.0(63)		5.71	
50대 이상	6.7	6.7	11.7	13.3	16.7	6.7	6.7	8.3	16.7	6.7	100.0(60)		5.62	
교육수준														
대졸 이하	4.9	8.8	6.7	11.9	14.0	11.9	9.0	13.7	11.6	7.5	100.0(387)	9.35	5.84	0.04
대학원 이상	5.6	4.9	11.1	9.0	13.2	9.7	7.6	20.1	12.5	6.3	100.0(144)		5.99	
거주지역														
대도시	4.9	7.8	8.6	10.2	14.0	11.6	8.6	13.7	12.7	7.8	100.0(371)	16.56	5.89	3.24*
중소도시	6.6	8.0	5.8	15.3	14.6	9.5	7.3	18.2	9.5	5.1	100.0(137)		5.65	
농어촌	0.0	4.0	8.0	4.0	4.0	12.0	16.0	24.0	16.0	12.0	100.0(25)		7.08	

주: * p 〈.05

〈부표 1-14〉 한국인의 특성별 사회갈등·문화영역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4.2	5.1	6.0	9.8	10.7	14.9	17.7	13.0	10.2	8.4	100.0(215)	10.82	6.18	2.40
여성	1.6	4.1	6.9	9.4	16.6	12.9	17.6	15.7	10.7	4.7	100.0(319)		6.19	
연령														
20대	2.5	3.7	5.3	10.7	14.8	12.8	17.7	14.4	10.3	7.8	100.0(243)	24.90	6.29	1.42
30대	2.4	5.4	9.5	11.9	12.5	16.1	15.5	11.9	10.7	4.2	100.0(168)		5.90	
40대	3.2	3.2	3.2	7.9	17.5	11.1	25.4	14.3	7.9	6.3	100.0(63)		6.32	
50대 이상	3.3	6.7	6.7	0.0	13.3	13.3	15.0	23.3	13.3	5.0	100.0(60)		6.45	
교육수준														
대졸 이하	3.1	4.7	5.2	9.3	13.4	15.2	17.8	15.0	10.1	6.2	100.0(387)	9.14	6.21	0.84
대학원 이상	1.4	4.2	10.4	10.4	16.0	9.7	16.0	13.9	11.8	6.3	100.0(144)		6.13	
거주지역														
대도시	2.4	4.6	5.9	9.4	15.6	13.2	14.8	15.4	12.7	5.9	100.0(371)	30.31**	6.25	2.71#
중소도시	3.6	2.2	8.0	9.5	9.5	13.9	25.5	14.6	5.8	7.3	100.0(137)		6.22	
농어촌	0.0	16.0	8.0	12.0	20.0	20.0	12.0	4.0	4.0	4.0	100.0(25)		5.16	

주: # p<.10, ** p 〈.01

〈부표 1-15〉 한국인의 특성별 불평등영역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평균	*F*
성별														
남성	10.2	6.0	4.7	11.2	11.2	9.8	10.7	12.1	14.4	9.8	100.0(215)	10.03	5.94	2.27
여성	5.3	7.8	7.8	12.2	10.0	13.5	12.2	10.3	11.6	9.1	100.0(319)		5.88	
연령														
20대	8.2	8.2	6.2	10.3	12.3	11.9	12.3	7.0	13.6	9.9	100.0(243)	23.19	5.81	1.26
30대	6.0	6.0	4.8	12.5	9.5	11.3	12.5	14.9	12.5	10.1	100.0(168)		6.18	
40대	12.7	4.8	11.1	14.3	6.3	12.7	6.3	12.7	11.1	7.9	100.0(63)		5.46	
50대 이상	1.7	8.3	8.3	13.3	10.0	13.3	11.7	15.0	11.7	6.7	100.0(60)		6.00	
교육수준														
대졸 이하	6.2	6.5	4.9	12.4	10.6	11.1	11.9	12.1	13.2	11.1	100.0(387)	17.82*	6.13	0.04
대학원 이상	10.4	9.0	11.1	10.4	9.7	14.6	11.1	7.6	11.1	4.9	100.0(144)		5.27	
거주지역														
대도시	7.5	6.7	5.9	11.6	10.5	12.1	11.9	10.8	12.9	10.0	100.0(371)	19.56	5.96	2.54#
중소도시	5.8	9.5	9.5	13.9	10.9	10.9	11.7	10.2	9.5	8.0	100.0(137)		5.58	
농어촌	12.0	0.0	0.0	4.0	8.0	16.0	4.0	20.0	28.0	8.0	100.0(25)		6.84	

주: # p<.10, * p 〈.05

〈부표 1-16〉 한국인의 특성별 불평등영역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3.3	6.5	9.8	9.8	12.1	13.5	13.0	11.2	9.8	11.2	100.0(215)	5.77	6.06	1.85
여성	2.8	4.7	9.7	7.2	15.0	13.2	15.4	14.4	9.7	7.8	100.0(319)		6.13	
연령														
20대	2.5	4.5	9.9	7.8	11.9	15.2	13.6	12.3	12.8	9.5	100.0(243)	23.43	6.27	1.72
30대	4.2	6.5	11.3	8.9	17.9	11.9	12.5	11.3	4.8	10.7	100.0(168)		5.76	
40대	3.2	7.9	6.3	6.3	9.5	9.5	19.0	17.5	12.7	7.9	100.0(63)		6.35	
50대 이상	1.7	3.3	8.3	10.0	15.0	13.3	18.3	16.7	8.3	5.0	100.0(60)		6.15	
교육수준														
대졸 이하	3.1	5.7	11.9	8.8	12.9	14.5	14.0	10.9	9.6	8.8	100.0(387)	15.20#	5.95	0.38
대학원 이상	2.8	4.9	4.2	6.9	16.0	9.7	16.0	18.8	10.4	10.4	100.0(144)		6.51	
거주지역														
대도시	3.2	5.1	10.5	7.3	14.3	13.2	14.0	12.7	9.7	10.0	100.0(371)	20.87	6.11	2.47#
중소도시	2.9	5.1	6.6	9.5	10.9	14.6	15.3	16.8	11.7	6.6	100.0(137)		6.26	
농어촌	0.0	12.0	16.0	16.0	24.0	8.0	12.0	0.0	0.0	12.0	100.0(25)		5.08	

주: # p<.10

〈부표 1-17〉 한국인의 특성별 경제일반영역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평균	F
성별														
남성	21.4	12.6	10.7	8.8	10.7	10.2	6.0	6.0	11.6	1.9	100.0(215)	5.94	4.43	0.01
여성	21.0	16.3	14.1	7.8	7.8	9.4	5.6	5.3	9.1	3.4	100.0(319)		4.21	
연령														
20대	19.3	11.9	14.8	9.1	11.1	8.6	6.6	5.3	11.1	2.1	100.0(243)	23.26	4.41	0.43
30대	25.6	16.7	11.9	8.3	3.6	10.1	4.8	5.4	10.1	3.6	100.0(168)		4.10	
40대	17.5	19.0	9.5	7.9	12.7	7.9	7.9	6.3	9.5	1.6	100.0(63)		4.35	
50대 이상	20.0	16.7	10.0	5.0	11.7	15.0	3.3	6.7	6.7	5.0	100.0(60)		4.38	
교육수준														
대졸 이하	21.2	13.2	13.2	8.5	8.8	10.3	6.2	5.7	10.3	2.6	100.0(387)	3.37	4.35	0.04
대학원 이상	21.5	18.1	11.1	7.6	9.7	8.3	4.9	5.6	9.7	3.5	100.0(144)		4.21	
거주지역														
대도시	21.8	13.7	12.7	8.4	10.0	10.0	6.2	5.1	9.4	2.7	100.0(371)	15.94	4.27	2.12
중소도시	21.9	19.7	11.7	7.3	6.6	8.8	4.4	5.8	11.7	2.2	100.0(137)		4.15	
농어촌	8.0	4.0	20.0	12.0	8.0	12.0	8.0	12.0	8.0	8.0	100.0(25)		5.40	

〈부표 1-18〉 한국인의 특성별 경제일반영역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1.4	3.3	3.7	6.5	7.4	9.8	12.6	15.8	18.1	21.4	100.0(215)	2.42	7.33	0.05
여성	1.6	3.8	3.4	4.7	8.2	7.8	15.4	15.4	17.2	22.6	100.0(319)		7.37	
연령														
20대	1.2	4.1	4.5	4.9	7.4	8.6	16.0	16.0	18.1	18.9	100.0(243)	27.84	7.25	1.06
30대	0.6	4.2	3.6	5.4	7.7	8.9	8.9	16.1	14.9	29.8	100.0(168)		7.56	
40대	1.6	0.0	1.6	6.3	7.9	6.3	22.2	14.3	23.8	15.9	100.0(63)		7.52	
50대 이상	5.0	3.3	1.7	6.7	10.0	10.0	13.3	13.3	16.7	20.0	100.0(60)		7.03	
교육수준														
대졸 이하	1.6	4.7	4.1	5.7	6.7	9.3	12.9	15.8	17.6	21.7	100.0(387)	11.31	7.27	3.81
대학원 이상	1.4	0.7	2.1	4.9	11.1	6.9	18.1	14.6	17.4	22.9	100.0(144)		7.54	
거주지역														
대도시	1.1	4.3	3.2	5.1	7.0	9.7	14.3	15.1	17.8	22.4	100.0(371)	27.06	7.38	3.83*
중소도시	1.5	2.2	3.6	4.4	8.0	7.3	15.3	15.3	18.2	24.1	100.0(137)		7.53	
농어촌	8.0	0.0	8.0	16.0	16.0	0.0	8.0	24.0	12.0	8.0	100.0(25)		6.12	

주: * p 〈.05

〈부표 1-19〉 한국인의 특성별 정치일반영역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평균	*F*
성별														
남성	5.6	10.2	6.0	8.8	7.4	7.9	6.5	5.1	7.9	34.4	100.0(215)	9.05	6.66	0.24
여성	7.5	6.3	8.2	6.0	6.0	7.5	6.3	8.8	10.0	33.5	100.0(319)		6.83	
연령														
20대	9.1	8.2	6.6	6.2	6.6	9.5	9.1	8.2	7.8	28.8	100.0(243)	32.21	6.47	2.00
30대	3.6	7.7	8.3	6.5	7.1	4.2	5.4	4.8	11.3	41.1	100.0(168)		7.19	
40대	6.3	7.9	12.7	7.9	6.3	7.9	3.2	6.3	7.9	33.3	100.0(63)		6.49	
50대 이상	6.7	6.7	1.7	11.7	5.0	10.0	1.7	11.7	10.0	35.0	100.0(60)		7.02	
교육수준														
대졸 이하	7.5	8.5	7.0	6.2	6.7	8.0	6.2	7.8	9.0	33.1	100.0(387)	5.33	6.70	0.85
대학원 이상	4.2	6.3	7.6	9.7	6.3	6.9	6.3	6.3	9.7	36.8	100.0(144)		7.01	
거주지역														
대도시	6.5	7.5	7.8	8.4	6.2	9.4	6.2	7.3	8.4	32.3	100.0(371)	17.32	6.66	2.37#
중소도시	8.0	9.5	7.3	5.1	6.6	4.4	6.6	6.6	10.2	35.8	100.0(137)		6.77	
농어촌	4.0	4.0	0.0	0.0	12.0	0.0	8.0	12.0	16.0	44.0	100.0(25)		8.08	

주: # p<.10

〈부표 1-20〉 한국인의 특성별 정치일반영역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13.0	5.6	8.4	5.6	14.9	9.8	14.0	11.2	11.6	6.0	100.0(215)	9.72	5.57	0.70
여성	10.3	8.2	7.8	9.7	16.6	11.0	11.6	9.4	7.2	8.2	100.0(319)		5.41	
연령														
20대	8.6	6.6	8.6	6.6	19.3	11.1	11.5	8.2	10.3	9.1	100.0(243)	29.94	5.67	2.62
30대	16.7	7.1	8.3	10.1	14.3	8.3	10.7	10.7	8.9	4.8	100.0(168)		5.07	
40대	7.9	6.3	6.3	6.3	9.5	9.5	23.8	15.9	6.3	7.9	100.0(63)		6.00	
50대 이상	11.7	10.0	6.7	10.0	13.3	15.0	10.0	10.0	6.7	6.7	100.0(60)		5.25	
교육수준														
대졸 이하	12.4	7.5	9.3	6.5	15.8	9.0	12.1	9.6	9.6	8.3	100.0(387)	15.04#	5.44	7.15
대학원 이상	9.0	6.3	4.9	12.5	16.7	13.9	13.9	11.8	6.9	4.2	100.0(144)		5.49	
거주지역														
대도시	11.9	5.1	7.8	7.3	16.4	11.6	13.2	10.2	9.4	7.0	100.0(371)	20.69	5.56	1.86
중소도시	10.2	10.9	6.6	10.2	13.9	9.5	11.7	9.5	9.5	8.0	100.0(137)		5.42	
농어촌	12.0	16.0	20.0	8.0	16.0	0.0	8.0	12.0	0.0	8.0	100.0(25)		4.48	

주: # p<.10

〔부록 2〕 응답자 특성별 사회위기지표의 우선순위 및 영향도

〈부표 2-1〉 한국인의 특성별 실업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평균	*F*
성별								
남성	43.3	27.9	11.6	17.2	100.0(215)	4.13	2.03	0.88
여성	47.6	26.6	14.1	11.6	100.0(319)		1.90	
연령								
20대	33.3	30.9	15.6	20.2	100.0(243)	36.17***	2.23	10.90***
30대	54.2	23.2	13.7	8.9	100.0(168)		1.77	
40대	61.9	22.2	6.3	9.5	100.0(63)		1.63	
50대 이상	56.7	28.3	8.3	6.7	100.0(60)		1.65	
교육수준								
대졸 이하	41.9	30.0	14.0	14.2	100.0(387)	11.96**	2.01	1.55
대학원 이상	57.6	18.1	11.1	13.2	100.0(144)		1.80	
거주지역								
대도시	44.2	28.0	12.7	15.1	100.0(371)	5.10	1.99	0.78
중소도시	51.8	22.6	13.9	11.7	100.0(137)		1.85	
농어촌	40.0	36.0	16.0	8.0	100.0(25)		1.92	

주: ** p 〈.01, *** p 〈.001

〈부표 2-2〉 한국인의 특성별 실업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0	0.5	0.5	3.7	7.4	5.6	9.3	17.7	22.8	32.6	100.0(215)	23.79**	8.25	5.53*
여성	0.3	0.3	1.3	1.9	0.9	3.1	11.9	17.9	21.3	41.1	100.0(319)		8.65	
연령														
20대	0.4	0.4	1.6	4.1	3.7	4.9	11.9	20.6	21.4	30.9	100.0(243)	24.75	8.20	4.38**
30대	0.0	0.6	0.6	0.6	4.8	3.6	9.5	14.9	20.8	44.6	100.0(168)		8.70	
40대	0.0	0.0	0.0	1.6	3.2	3.2	6.3	15.9	23.8	46.0	100.0(63)		8.87	
50대 이상	0.0	0.0	0.0	3.3	0.0	3.3	15.0	16.7	25.0	36.7	100.0(60)		8.63	
교육수준														
대졸 이하	0.3	0.5	1.0	3.1	3.1	3.6	10.6	19.4	21.7	36.7	100.0(387)	6.54	8.45	0.02
대학원 이상	0.0	0.0	0.7	1.4	4.9	5.6	11.8	13.9	21.5	40.3	100.0(144)		8.56	
거주지역														
대도시	0.3	0.5	1.3	2.7	3.5	5.4	11.1	17.8	20.8	36.7	100.0(371)	12.93	8.39	1.96
중소도시	0.0	0.0	0.0	2.2	4.4	0.7	10.9	16.8	23.4	41.6	100.0(137)		8.72	
농어촌	0.0	0.0	0.0	4.0	0.0	4.0	8.0	20.0	32.0	32.0	100.0(25)		8.64	

주: * p 〈.05, ** p 〈.01

〈부표 2-3〉 한국인의 특성별 청년실업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평균	*F*
성별								
남성	32.1	30.2	23.7	14.0	100.0(215)	3.01	2.20	4.36*
여성	33.9	33.5	23.5	9.1	100.0(319)		2.08	
연령								
20대	40.3	31.3	21.8	6.6	100.0(243)	18.96*	1.95	5.64**
30대	27.4	33.3	24.4	14.9	100.0(168)		2.27	
40대	22.2	33.3	25.4	19.0	100.0(63)		2.41	
50대 이상	31.7	31.7	26.7	10.0	100.0(60)		2.15	
교육수준								
대졸 이하	36.2	30.2	23.0	10.6	100.0(387)	7.77#	2.08	0.18
대학원 이상	23.6	38.2	25.7	12.5	100.0(144)		2.27	
거주지역								
대도시	44.2	28.0	12.7	15.1	100.0(371)	0.45	2.12	0.03
중소도시	51.8	22.6	13.9	11.7	100.0(137)		2.15	
농어촌	40.0	36.0	16.0	8.0	100.0(25)		2.12	

주: # p<.10, * p 〈.05, ** p 〈.01

〈부표 2-4〉 한국인의 특성별 청년실업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9	0.9	1.9	1.4	5.1	5.6	16.3	15.8	25.1	27.0	100.0(215)	20.75**	8.09	10.33**
여성	0.0	0.0	0.9	0.0	4.4	3.8	11.0	23.2	22.9	33.9	100.0(319)		8.54	
연령														
20대	0.8	0.0	1.6	0.4	5.3	2.9	11.5	16.9	22.2	38.3	100.0(243)	29.40	8.50	1.12
30대	0.0	0.6	1.8	1.2	3.6	5.4	12.5	22.0	26.8	26.2	100.0(168)		8.28	
40대	0.0	0.0	0.0	0.0	6.3	6.3	19.0	27.0	19.0	22.2	100.0(63)		8.13	
50대 이상	0.0	1.7	0.0	0.0	3.3	6.7	15.0	21.7	26.7	25.0	100.0(60)		8.28	
교육수준														
대졸 이하	0.5	0.5	1.3	0.5	4.9	3.9	13.4	18.3	23.0	33.6	100.0(387)	10.24	8.39	2.62
대학원 이상	0.0	0.0	1.4	0.7	4.2	6.3	12.5	25.7	26.4	22.9	100.0(144)		8.25	
거주지역														
대도시	0.5	0.3	1.6	0.5	5.7	4.9	14.0	19.9	22.1	30.5	100.0(371)	19.66	8.27	2.25
중소도시	0.0	0.0	0.7	0.7	1.5	3.6	11.7	21.2	29.2	31.4	100.0(137)		8.62	
농어촌	0.0	4.0	0.0	0.0	8.0	4.0	8.0	20.0	20.0	36.0	100.0(25)		8.28	

주: ** p 〈.01

〈부표 2-5〉 한국인의 특성별 근로빈곤자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평균	*F*
성별								
남성	10.2	19.1	34.0	36.7	100.0(215)	0.53	2.97	0.25
여성	8.5	20.1	33.9	37.6	100.0(319)		3.01	
연령								
20대	10.7	18.1	32.5	38.7	100.0(243)	6.90	2.99	1.02
30대	6.5	19.6	33.3	40.5	100.0(168)		3.08	
40대	9.5	23.8	38.1	28.6	100.0(63)		2.86	
50대 이상	10.0	21.7	36.7	31.7	100.0(60)		2.90	
교육수준								
대졸 이하	9.8	19.9	34.6	35.7	100.0(387)	1.28	2.96	0.01
대학원 이상	7.6	19.4	32.6	40.3	100.0(144)		3.06	
거주지역								
대도시	9.4	19.1	35.8	35.6	100.0(371)	4.71	2.98	0.47
중소도시	7.3	21.9	29.2	41.6	100.0(137)		3.05	
농어촌	16.0	16.0	32.0	36.0	100.0(25)		2.88	

〈부표 2-6〉 한국인의 특성별 근로빈곤자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1.9	2.3	0.9	3.3	6.5	8.8	22.8	26.5	19.5	7.4	100.0(215)	8.12	7.30	0.01
여성	0.6	1.3	1.6	2.5	9.4	7.2	19.7	26.0	19.7	11.9	100.0(319)		7.51	
연령														
20대	1.2	2.1	1.6	2.9	7.4	8.6	19.8	27.2	17.7	11.5	100.0(243)	23.79	7.41	0.17
30대	0.6	1.8	0.0	3.6	7.7	5.4	25.0	27.4	18.5	10.1	100.0(168)		7.51	
40대	1.6	0.0	1.6	3.2	11.1	9.5	22.2	14.3	28.6	7.9	100.0(63)		7.38	
50대 이상	1.7	1.7	3.3	0.0	10.0	10.0	13.3	31.7	21.7	6.7	100.0(60)		7.33	
교육수준														
대졸 이하	1.6	1.8	1.3	3.1	8.5	7.8	19.6	27.1	19.4	9.8	100.0(387)	4.45	7.38	1.66
대학원 이상	0.0	1.4	1.4	2.1	7.6	7.6	24.3	24.3	20.1	11.1	100.0(144)		7.56	
거주지역														
대도시	1.1	1.6	1.6	3.5	8.6	9.4	19.1	27.0	18.6	9.4	100.0(371)	19.40	7.34	1.36
중소도시	0.7	2.2	0.7	1.5	6.6	4.4	25.5	26.3	22.6	9.5	100.0(137)		7.60	
농어촌	4.0	0.0	0.0	0.0	12.0	4.0	20.0	16.0	20.0	24.0	100.0(25)		7.76	

〈부표 2-7〉 한국인의 특성별 비정규직 비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평균	*F*
성별								
남성	14.4	22.8	30.7	32.1	100.0(215)	5.95	2.80	1.73
여성	10.0	20.1	28.2	41.7	100.0(319)		3.02	
연령								
20대	15.6	20.2	29.6	34.6	100.0(243)	15.16#	2.83	4.07**
30대	11.9	23.8	28.6	35.7	100.0(168)		2.88	
40대	6.3	20.6	30.2	42.9	100.0(63)		3.10	
50대 이상	1.7	18.3	28.3	51.7	100.0(60)		3.30	
교육수준								
대졸 이하	12.1	20.2	28.2	39.5	100.0(387)	1.99	2.95	0.07
대학원 이상	11.1	24.3	30.6	34.0	100.0(144)		2.88	
거주지역								
대도시	12.9	21.0	27.8	38.3	100.0(371)	2.71	2.91	0.33
중소도시	9.5	21.9	32.8	35.8	100.0(137)		2.95	
농어촌	8.0	20.0	28.0	44.0	100.0(25)		3.08	

주: # p<.10, ** p 〈.01

〈부표 2-8〉 한국인의 특성별 비정규직 비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9	1.9	2.8	2.8	4.2	10.2	20.5	22.8	18.6	15.3	100.0(215)	6.21	7.53	0.01
여성	0.0	2.5	2.5	3.1	6.0	10.0	17.9	21.6	23.2	13.2	100.0(319)		7.54	
연령														
20대	0.0	3.7	1.6	2.1	6.2	9.1	14.0	21.8	24.3	17.3	100.0(243)	37.93#	7.70	1.55
30대	1.2	1.2	3.6	3.0	4.2	8.9	20.8	22.6	22.0	12.5	100.0(168)		7.51	
40대	0.0	0.0	3.2	7.9	4.8	12.7	20.6	22.2	14.3	14.3	100.0(63)		7.35	
50대 이상	0.0	1.7	3.3	1.7	5.0	15.0	31.7	21.7	15.0	5.0	100.0(60)		7.15	
교육수준														
대졸 이하	0.3	2.8	3.1	2.8	6.2	8.5	19.9	22.5	19.9	14.0	100.0(387)	11.35	7.47	1.26
대학원 이상	0.7	0.7	1.4	3.5	2.8	13.9	16.7	20.8	25.0	14.6	100.0(144)		7.72	
거주지역														
대도시	0.5	3.0	2.2	3.0	5.9	10.5	18.9	21.0	18.6	16.4	100.0(371)	20.85	7.50	0.90
중소도시	0.0	0.0	3.6	2.2	3.6	8.8	20.4	24.8	27.7	8.8	100.0(137)		7.69	
농어촌	0.0	4.0	4.0	8.0	4.0	12.0	12.0	20.0	28.0	8.0	100.0(25)		7.20	

주: # p<.10

〈부표 2-9〉 한국인의 특성별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평균	*F*
성별								
남성	80.9	11.2	6.0	1.9	100.0(215)	1.60	1.29	5.07*
여성	77.7	11.6	7.2	3.4	100.0(319)		1.36	
연령								
20대	76.1	14.0	6.6	3.3	100.0(243)	6.33	1.37	0.45
30대	80.4	10.7	6.0	3.0	100.0(168)		1.32	
40대	82.5	9.5	6.3	1.6	100.0(63)		1.27	
50대 이상	83.3	5.0	10.0	1.7	100.0(60)		1.30	
교육수준								
대졸 이하	80.1	12.1	4.7	3.1	100.0(387)	11.01*	1.31	6.40*
대학원 이상	76.4	9.0	12.5	2.1	100.0(144)		1.40	
거주지역								
대도시	79.2	12.1	5.7	3.0	100.0(371)	4.68	1.32	0.23
중소도시	78.1	9.5	10.2	2.2	100.0(137)		1.36	
농어촌	84.0	8.0	4.0	4.0	100.0(25)		1.28	

주: * p 〈.05

〈부표 2-10〉 한국인의 특성별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9	0.0	0.5	0.9	4.7	4.2	6.0	12.1	15.8	54.9	100.0(215)	5.18	8.85	0.64
여성	0.3	0.3	0.6	1.6	2.5	4.1	7.8	11.3	18.8	52.7	100.0(319)		8.87	
연령														
20대	0.4	0.4	0.4	1.2	2.5	4.5	9.1	11.9	17.7	51.9	100.0(243)	27.47	8.84	0.25
30대	0.6	0.0	1.2	2.4	5.4	2.4	4.8	11.3	13.7	58.3	100.0(168)		8.85	
40대	1.6	0.0	0.0	0.0	1.6	1.6	4.8	14.3	25.4	50.8	100.0(63)		9.03	
50대 이상	0.0	0.0	0.0	0.0	3.3	10.0	8.3	8.3	20.0	50.0	100.0(60)		8.82	
교육수준														
대졸 이하	0.5	0.3	0.5	1.3	2.8	3.6	7.2	10.1	16.8	56.8	100.0(387)	9.28	8.95	2.22
대학원 이상	0.7	0.0	0.7	1.4	4.9	5.6	6.9	16.0	19.4	44.4	100.0(144)		8.62	
거주지역														
대도시	0.3	0.3	0.8	1.3	3.2	4.6	8.1	11.9	15.9	53.6	100.0(371)	13.60	8.83	0.21
중소도시	1.5	0.0	0.0	1.5	2.9	3.6	5.1	9.5	20.4	55.5	100.0(137)		8.94	
농어촌	0.0	0.0	0.0	0.0	8.0	0.0	4.0	16.0	28.0	44.0	100.0(25)		8.88	

〈부표 2-11〉 한국인의 특성별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평균	*F*
성별								
남성	3.7	19.1	40.5	36.7	100.0(215)	4.21	3.10	1.01
여성	4.7	14.4	36.7	44.2	100.0(319)		3.20	
연령								
20대	4.5	11.5	40.3	43.6	100.0(243)	12.97	3.23	2.00
30대	3.6	17.9	35.7	42.9	100.0(168)		3.18	
40대	6.3	19.0	38.1	36.5	100.0(63)		3.05	
50대 이상	3.3	28.3	36.7	31.7	100.0(60)		2.97	
교육수준								
대졸 이하	3.6	13.4	39.3	43.7	100.0(387)	12.03**	3.23	0.95
대학원 이상	6.3	24.3	35.4	34.0	100.0(144)		2.97	
거주지역								
대도시	4.3	15.6	39.6	40.4	100.0(371)	2.72	3.16	0.02
중소도시	4.4	19.0	32.8	43.8	100.0(137)		3.16	
농어촌	4.0	12.0	44.0	40.0	100.0(25)		3.20	

주: ** p 〈.01

〈부표 2-12〉 한국인의 특성별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2.3	4.2	8.4	8.4	18.1	12.6	16.3	19.5	6.0	4.2	100.0(215)	4.51	6.02	0.25
여성	2.2	4.7	6.0	7.5	18.5	14.1	18.5	16.0	9.1	3.4	100.0(319)		6.10	
연령														
20대	2.1	5.3	8.6	10.7	16.0	11.1	21.0	13.2	7.8	4.1	100.0(243)	42.87*	5.92	1.93
30대	3.0	5.4	6.5	4.8	21.4	16.1	13.7	19.0	6.5	3.6	100.0(168)		5.99	
40대	0.0	1.6	7.9	1.6	25.4	15.9	12.7	17.5	14.3	3.2	100.0(63)		6.44	
50대 이상	3.3	1.7	0.0	11.7	11.7	13.3	20.0	30.0	5.0	3.3	100.0(60)		6.50	
교육수준														
대졸 이하	2.3	4.7	7.8	7.8	18.3	11.6	19.9	17.1	7.2	3.4	100.0(387)	10.02	6.02	0.01
대학원 이상	2.1	4.2	4.9	8.3	18.1	18.1	11.8	18.1	9.7	4.9	100.0(144)		6.20	
거주지역														
대도시	1.9	5.7	7.3	7.0	19.4	13.5	16.2	17.8	7.3	4.0	100.0(371)	11.07	6.02	0.23
중소도시	2.9	1.5	5.8	10.2	17.5	13.1	20.4	16.1	9.5	2.9	100.0(137)		6.17	
농어촌	4.0	4.0	8.0	8.0	8.0	16.0	24.0	16.0	8.0	4.0	100.0(25)		6.12	

주: * p 〈.05

〈부표 2-13〉 한국인의 특성별 중고등 학원폭력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평균	F
성별								
남성	10.7	49.8	24.2	15.3	100.0(215)	3.99	2.44	0.81
여성	15.7	49.5	23.5	11.3	100.0(319)		2.30	
연령								
20대	15.6	45.7	22.2	16.5	100.0(243)	9.00	2.40	0.71
30대	12.5	54.2	24.4	8.9	100.0(168)		2.30	
40대	9.5	49.2	28.6	12.7	100.0(63)		2.44	
50대 이상	13.3	53.3	23.3	10.0	100.0(60)		2.30	
교육수준								
대졸 이하	12.9	50.9	22.7	13.4	100.0(387)	2.15	2.37	0.00
대학원 이상	16.0	46.5	26.4	11.1	100.0(144)		2.33	
거주지역								
대도시	13.2	49.6	24.5	12.7	100.0(371)	3.25	2.37	1.47
중소도시	16.1	51.1	21.2	11.7	100.0(137)		2.28	
농어촌	8.0	44.0	28.0	20.0	100.0(25)		2.60	

〈부표 2-14〉 한국인의 특성별 중고등 학원폭력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1.4	2.8	3.7	5.6	7.0	11.6	14.0	24.2	19.1	10.7	100.0(215)	5.58	7.15	0.29
여성	0.6	3.1	2.8	3.1	7.5	10.7	11.3	24.8	22.3	13.8	100.0(319)		7.45	
연령														
20대	0.8	3.7	4.1	4.1	6.6	11.9	9.1	26.7	20.2	12.8	100.0(243)	30.85	7.28	0.25
30대	1.2	3.0	3.6	4.2	8.3	6.0	16.1	25.6	21.4	10.7	100.0(168)		7.29	
40대	1.6	0.0	1.6	3.2	12.7	14.3	12.7	17.5	17.5	19.0	100.0(63)		7.44	
50대 이상	0.0	3.3	0.0	5.0	1.7	18.3	15.0	20.0	26.7	10.0	100.0(60)		7.50	
교육수준														
대졸 이하	0.8	3.4	3.1	4.1	6.7	11.1	10.3	24.8	22.2	13.4	100.0(387)	8.03	7.39	0.51
대학원 이상	1.4	2.1	3.5	4.2	9.0	11.1	17.4	23.6	17.4	10.4	100.0(144)		7.15	
거주지역														
대도시	1.1	3.2	3.2	4.6	7.8	11.6	12.1	23.5	20.2	12.7	100.0(371)	11.00	7.25	2.04
중소도시	0.0	1.5	2.9	3.6	5.8	10.2	12.4	27.0	23.4	13.1	100.0(137)		7.61	
농어촌	4.0	8.0	4.0	0.0	8.0	8.0	12.0	28.0	20.0	8.0	100.0(25)		6.88	

〈부표 2-15〉 한국인의 특성별 조기유학자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평균	*F*
성별								
남성	4.7	20.0	29.3	46.0	100.0(215)	5.85	3.17	1.57
여성	1.9	24.8	32.6	40.8	100.0(319)		3.12	
연령								
20대	3.7	28.8	30.9	36.6	100.0(243)	17.18*	3.00	4.84**
30대	3.6	17.9	33.9	44.6	100.0(168)		3.20	
40대	1.6	22.2	27.0	49.2	100.0(63)		3.24	
50대 이상	0.0	13.3	30.0	56.7	100.0(60)		3.43	
교육수준								
대졸 이하	3.4	23.8	33.3	39.5	100.0(387)	8.28*	3.09	0.22
대학원 이상	1.4	20.1	25.7	52.8	100.0(144)		3.30	
거주지역								
대도시	3.2	22.9	30.2	43.7	100.0(371)	5.27	3.14	1.03
중소도시	1.5	20.4	35.8	42.3	100.0(137)		3.19	
농어촌	4.0	36.0	24.0	36.0	100.0(25)		2.92	

주: * p 〈.05, ** p 〈.01

〈부표 2-16〉 한국인의 특성별 조기유학자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4.7	4.7	7.0	8.8	17.7	9.8	18.1	15.3	11.6	2.3	100.0(215)	5.88	5.95	1.28
여성	2.5	3.4	4.4	10.0	16.3	10.3	20.1	17.2	11.6	4.1	100.0(319)		6.30	
연령														
20대	2.1	4.1	5.8	8.2	17.7	11.5	16.9	15.2	14.4	4.1	100.0(243)	23.63	6.29	1.18
30대	4.8	3.6	4.8	11.9	16.7	7.1	25.0	16.7	7.1	2.4	100.0(168)		5.96	
40대	4.8	3.2	4.8	7.9	12.7	14.3	11.1	20.6	15.9	4.8	100.0(63)		6.40	
50대 이상	3.3	5.0	6.7	10.0	18.3	8.3	21.7	16.7	8.3	1.7	100.0(60)		5.92	
교육수준														
대졸 이하	2.1	3.9	6.2	9.8	18.6	9.0	17.6	17.1	11.9	3.9	100.0(387)	16.60#	6.20	0.01
대학원 이상	6.9	4.2	3.5	9.0	12.5	13.2	23.6	15.3	9.7	2.1	100.0(144)		5.99	
거주지역														
대도시	3.8	3.5	6.2	8.4	17.5	10.2	19.1	17.0	11.1	3.2	100.0(371)	8.18	6.13	0.29
중소도시	2.9	4.4	3.6	12.4	16.8	10.2	19.7	14.6	12.4	2.9	100.0(137)		6.13	
농어촌	0.0	8.0	4.0	12.0	8.0	8.0	20.0	20.0	16.0	4.0	100.0(25)		6.48	

주: # p<.10

〈부표 2-17〉 한국인의 특성별 주거비 지출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평균	*F*
성별							
남성	51.6	29.8	18.6	100.0(215)	0.83	1.67	0.02
여성	47.6	32.6	19.7	100.0(319)		1.72	
연령							
20대	45.3	35.4	19.3	100.0(243)	17.54**	1.74	4.84**
30대	55.4	29.2	15.5	100.0(168)		1.60	
40대	61.9	22.2	15.9	100.0(63)		1.54	
50대 이상	35.0	31.7	33.3	100.0(60)		1.98	
교육수준							
대졸 이하	47.0	32.0	20.9	100.0(387)	3.58	1.74	1.37
대학원 이상	54.9	30.6	14.6	100.0(144)		1.60	
거주지역							
대도시	49.9	32.6	17.5	100.0(371)	5.42	1.68	0.61
중소도시	47.4	30.7	21.9	100.0(137)		1.74	
농어촌	52.0	16.0	32.0	100.0(25)		1.80	

주: ** p〈.01

〈부표 2-18〉 한국인의 특성별 주거비 지출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1.4	1.9	0.9	0.5	3.7	6.5	9.8	24.2	23.7	27.4	100.0(215)	10.8	8.17	0.13
여성	0.9	0.3	1.3	2.5	5.6	8.5	11.0	24.1	17.9	27.9	100.0(319)		8.04	
연령														
20대	1.2	0.8	2.1	1.2	4.1	7.4	9.5	25.5	23.0	25.1	100.0(243)	33.0	8.08	0.93
30대	0.6	1.8	0.6	3.0	3.0	7.1	11.9	18.5	20.2	33.3	100.0(168)		8.22	
40대	0.0	0.0	0.0	0.0	11.1	9.5	7.9	25.4	17.5	28.6	100.0(63)		8.14	
50대 이상	3.3	0.0	0.0	1.7	6.7	8.3	13.3	33.3	11.7	21.7	100.0(60)		7.75	
교육수준														
대졸 이하	1.3	0.8	1.3	1.8	3.1	8.8	9.0	24.3	20.9	28.7	100.0(387)	16.01#	8.15	0.09
대학원 이상	0.7	1.4	0.7	1.4	9.7	4.9	13.9	24.3	18.1	25.0	100.0(144)		7.93	
거주지역														
대도시	0.5	0.8	1.6	1.9	4.9	7.8	9.7	25.3	19.9	27.5	100.0(371)	24.67	8.11	2.27
중소도시	1.5	1.5	0.0	0.7	5.1	6.6	10.9	21.9	23.4	28.5	100.0(137)		8.19	
농어촌	8.0	0.0	0.0	4.0	4.0	12.0	20.0	20.0	4.0	28.0	100.0(25)		7.32	

주: # p<.10

〈부표 2-19〉 한국인의 특성별 자가 보유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평균	*F*
성별							
남성	19.5	21.4	59.1	100.0(215)	0.17	2.40	0.17
여성	18.5	20.7	60.8	100.0(319)		2.42	
연령							
20대	21.4	22.6	56.0	100.0(243)	16.58*	2.35	5.49**
30대	14.3	19.0	66.7	100.0(168)		2.52	
40대	9.5	19.0	71.4	100.0(63)		2.62	
50대 이상	31.7	21.7	46.7	100.0(60)		2.15	
교육수준							
대졸 이하	20.2	21.4	58.4	100.0(387)	1.84	2.38	2.84#
대학원 이상	16.0	19.4	64.6	100.0(144)		2.49	
거주지역							
대도시	17.8	21.0	61.2	100.0(371)	2.33	2.43	0.56
중소도시	22.6	19.7	57.7	100.0(137)		2.35	
농어촌	16.0	28.0	56.0	100.0(25)		2.40	

주: # p<.10, * p 〈.05, ** p 〈.01

〈부표 2-20〉 한국인의 특성별 자가 보유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1.9	1.9	3.3	4.7	11.6	9.8	15.8	17.7	18.1	15.3	100.0(215)	3.3	7.20	0.06
여성	1.9	0.9	4.7	4.7	11.0	10.0	14.4	21.9	16.0	14.4	100.0(319)		7.16	
연령														
20대	2.5	0.8	3.3	4.1	7.8	12.3	15.2	17.7	20.2	16.0	100.0(243)	30.7	7.34	1.78
30대	1.8	2.4	3.6	4.8	14.3	6.5	14.9	23.8	14.9	13.1	100.0(168)		7.07	
40대	0.0	0.0	9.5	6.3	17.5	7.9	17.5	22.2	11.1	7.9	100.0(63)		6.68	
50대 이상	1.7	1.7	3.3	5.0	10.0	11.7	11.7	18.3	15.0	21.7	100.0(60)		7.35	
교육수준														
대졸 이하	2.1	1.3	2.8	4.9	9.0	9.6	15.8	20.2	18.3	16.0	100.0(387)	17.16*	7.32	1.00
대학원 이상	1.4	1.4	7.6	4.2	17.4	10.4	13.2	20.8	11.8	11.8	100.0(144)		6.76	
거주지역														
대도시	2.2	1.1	3.5	4.6	12.1	10.2	17.3	18.9	16.7	13.5	100.0(371)	17.28	7.12	1.33
중소도시	1.5	2.2	4.4	4.4	8.8	8.8	10.2	22.6	18.2	19.0	100.0(137)		7.39	
농어촌	0.0	0.0	12.0	8.0	12.0	12.0	8.0	28.0	8.0	12.0	100.0(25)		6.72	

주: * p 〈.05

〈부표 2-21〉 한국인의 특성별 전세비 증감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평균	*F*
성별							
남성	28.8	48.8	22.3	100.0(215)	1.59	1.93	1.19
여성	33.9	46.4	19.7	100.0(319)		1.86	
연령							
20대	33.3	42.0	24.7	100.0(243)	8.50	1.91	0.21
30대	30.4	51.2	18.5	100.0(168)		1.88	
40대	28.6	58.7	12.7	100.0(63)		1.84	
50대 이상	33.3	46.7	20.0	100.0(60)		1.87	
교육수준							
대졸 이하	32.8	46.5	20.7	100.0(387)	0.65	1.88	0.77
대학원 이상	29.2	49.3	21.5	100.0(144)		1.92	
거주지역							
대도시	32.3	46.1	21.6	100.0(371)	1.89	1.89	0.23
중소도시	29.9	49.6	20.4	100.0(137)		1.91	
농어촌	32.0	56.0	12.0	100.0(25)		1.80	

〈부표 2-22〉 한국인의 특성별 전세비 증감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9	0.5	2.8	1.9	5.1	7.0	13.0	22.3	23.7	22.8	100.0(215)	11.4	7.96	0.01
여성	0.3	1.6	0.3	2.5	6.3	5.0	15.0	18.5	25.4	25.1	100.0(319)		8.08	
연령														
20대	0.0	1.2	1.2	1.6	5.3	6.2	16.9	19.8	23.5	24.3	100.0(243)	21.0	8.07	0.15
30대	1.2	0.6	1.8	2.4	5.4	5.4	11.9	22.0	23.8	25.6	100.0(168)		8.06	
40대	1.6	0.0	0.0	4.8	9.5	3.2	12.7	17.5	33.3	17.5	100.0(63)		7.90	
50대 이상	0.0	3.3	1.7	1.7	5.0	8.3	11.7	18.3	23.3	26.7	100.0(60)		7.98	
교육수준														
대졸 이하	0.5	1.6	1.0	1.6	5.4	5.7	12.9	20.9	24.8	25.6	100.0(387)	10.46	8.11	1.10
대학원 이상	0.7	0.0	2.1	4.2	6.9	6.3	18.1	17.4	23.6	20.8	100.0(144)		7.82	
거주지역														
대도시	0.3	0.8	1.3	1.6	5.9	6.5	15.9	19.7	24.8	23.2	100.0(371)	15.86	8.05	0.28
중소도시	1.5	1.5	0.7	3.6	5.8	4.4	10.2	21.9	22.6	27.7	100.0(137)		8.04	
농어촌	0.0	4.0	4.0	4.0	4.0	4.0	12.0	16.0	36.0	16.0	100.0(25)		7.76	

〈부표 2-23〉 한국인의 특성별 총부양비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평균	*F*
성별								
남성	27.9	21.4	28.4	22.3	100.0(215)	0.52	2.45	0.08
여성	27.9	20.1	31.0	21.0	100.0(319)		2.45	
연령								
20대	25.1	19.3	31.3	24.3	100.0(243)	23.14**	2.55	1.92
30대	36.3	16.1	25.6	22.0	100.0(168)		2.33	
40대	23.8	36.5	27.0	12.7	100.0(63)		2.29	
50대 이상	20.0	21.7	40.0	18.3	100.0(60)		2.57	
교육수준								
대졸 이하	29.5	19.4	27.9	23.3	100.0(387)	6.81#	2.45	6.63*
대학원 이상	24.3	24.3	35.4	16.0	100.0(144)		2.43	
거주지역								
대도시	28.3	18.6	32.6	20.5	100.0(371)	11.17#	2.45	1.76
중소도시	27.7	27.0	24.1	21.2	100.0(137)		2.39	
농어촌	20.0	16.0	24.0	40.0	100.0(25)		2.84	

주: # p<.10, * p 〈.05, ** p 〈.01

〈부표 2-24〉 한국인의 특성별 총부양비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1.4	1.4	1.4	4.2	7.9	7.9	14.0	20.9	17.7	23.3	100.0(215)	8.73	7.69	5.72*
여성	0.6	0.3	1.9	1.9	6.6	9.1	14.1	22.6	23.2	19.7	100.0(319)		7.87	
연령														
20대	1.2	0.8	2.5	3.7	5.3	10.3	14.8	21.4	20.2	19.8	100.0(243)	32.96	7.67	1.11
30대	0.6	0.6	1.2	3.6	7.1	7.7	13.7	18.5	17.9	29.2	100.0(168)		7.98	
40대	0.0	0.0	0.0	0.0	9.5	9.5	12.7	23.8	31.7	12.7	100.0(63)		7.97	
50대 이상	1.7	1.7	1.7	0.0	11.7	3.3	13.3	31.7	21.7	13.3	100.0(60)		7.63	
교육수준														
대졸 이하	1.3	0.8	1.8	2.8	7.0	7.8	14.0	19.6	21.2	23.8	100.0(387)	11.12	7.84	3.99*
대학원 이상	0.0	0.7	1.4	2.1	7.6	10.4	14.6	28.5	20.1	14.6	100.0(144)		7.72	
거주지역														
대도시	0.5	1.1	2.2	2.7	7.0	9.7	13.7	21.0	20.2	21.8	100.0(371)	17.11	7.78	1.63
중소도시	1.5	0.0	0.0	2.9	8.0	5.1	13.1	25.5	23.4	20.4	100.0(137)		7.95	
농어촌	4.0	0.0	4.0	4.0	4.0	12.0	24.0	16.0	20.0	12.0	100.0(25)		7.20	

주: * p 〈.05

〈부표 2-25〉 한국인의 특성별 고령화지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평균	*F*
성별								
남성	19.5	32.6	31.2	16.7	100.0(215)	3.30	2.45	0.43
여성	25.4	32.6	25.7	16.3	100.0(319)		2.33	
연령								
20대	23.9	31.7	28.4	16.0	100.0(243)	26.12**	2.37	6.23***
30대	13.7	35.1	29.8	21.4	100.0(168)		2.59	
40대	27.0	30.2	33.3	9.5	100.0(63)		2.25	
50대 이상	41.7	31.7	15.0	11.7	100.0(60)		1.97	
교육수준								
대졸 이하	22.5	31.3	28.2	18.1	100.0(387)	2.93	2.42	2.53
대학원 이상	24.3	36.1	27.1	12.5	100.0(144)		2.28	
거주지역								
대도시	21.8	33.2	27.8	17.3	100.0(371)	3.52	2.40	0.50
중소도시	27.0	30.7	27.0	15.3	100.0(137)		2.31	
농어촌	20.0	36.0	36.0	8.0	100.0(25)		2.32	

주: ** p〈.01, *** p〈.001

〈부표 2-26〉 한국인의 특성별 고령화지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5	1.4	1.9	2.3	7.4	10.2	15.3	23.3	21.9	15.8	100.0(215)	9.42	7.65	0.13
여성	0.0	0.6	2.2	4.1	5.0	7.8	13.8	21.9	21.3	23.2	100.0(319)		7.92	
연령														
20대	0.4	0.8	2.9	2.5	6.2	9.5	11.9	25.5	21.8	18.5	100.0(243)	27.78	7.77	1.98
30대	0.0	1.2	1.8	6.0	6.5	7.1	16.1	21.4	23.8	16.1	100.0(168)		7.66	
40대	0.0	1.6	0.0	3.2	4.8	9.5	22.2	19.0	14.3	25.4	100.0(63)		7.87	
50대 이상	0.0	0.0	1.7	0.0	5.0	10.0	11.7	16.7	21.7	33.3	100.0(60)		8.33	
교육수준														
대졸 이하	0.3	1.0	2.6	3.1	6.7	8.3	14.5	23.0	19.4	21.2	100.0(387)	7.08	7.77	2.14
대학원 이상	0.0	0.7	0.7	4.2	4.2	9.7	14.6	21.5	26.4	18.1	100.0(144)		7.92	
거주지역														
대도시	0.0	0.5	2.4	3.2	7.3	8.9	14.3	20.5	24.0	18.9	100.0(371)	18.31	7.80	0.10
중소도시	0.7	2.2	0.7	3.6	2.9	8.8	13.9	27.0	16.1	24.1	100.0(137)		7.88	
농어촌	0.0	0.0	4.0	4.0	4.0	8.0	16.0	28.0	16.0	20.0	100.0(25)		7.76	

〈부표 2-27〉 한국인의 특성별 수도권 인구집중도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평균	*F*
성별								
남성	13.5	18.6	20.9	47.0	100.0(215)	0.90	3.01	0.06
여성	14.4	16.0	23.2	46.4	100.0(319)		3.02	
연령								
20대	17.7	20.2	21.0	41.2	100.0(243)	15.95#	2.86	3.91**
30대	12.5	15.5	23.8	48.2	100.0(168)		3.08	
40대	12.7	14.3	15.9	57.1	100.0(63)		3.17	
50대 이상	5.0	11.7	30.0	53.3	100.0(60)		3.32	
교육수준								
대졸 이하	15.2	19.6	23.5	41.6	100.0(387)	16.38**	2.91	2.01
대학원 이상	11.1	9.7	18.8	60.4	100.0(144)		3.28	
거주지역								
대도시	15.4	15.1	22.4	47.2	100.0(371)	4.97	3.01	0.26
중소도시	10.9	19.7	22.6	46.7	100.0(137)		3.05	
농어촌	12.0	28.0	20.0	40.0	100.0(25)		2.88	

주: # p<.10, ** p 〈.01

〈부표 2-28〉 한국인의 특성별 수도권 인구집중도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2.8	2.8	1.9	4.2	14.9	10.7	20.0	19.1	14.4	9.3	100.0(215)	7.66	6.85	2.24
여성	0.6	1.6	2.2	4.7	11.9	12.5	21.9	16.9	17.2	10.3	100.0(319)		7.12	
연령														
20대	0.8	1.6	0.4	3.3	13.2	14.4	16.9	18.5	18.5	12.3	100.0(243)	31.23	7.27	2.81*
30대	2.4	2.4	3.0	5.4	13.7	9.5	22.6	18.5	13.7	8.9	100.0(168)		6.82	
40대	0.0	3.2	3.2	6.3	12.7	12.7	22.2	14.3	14.3	11.1	100.0(63)		6.90	
50대 이상	3.3	1.7	5.0	5.0	11.7	6.7	33.3	16.7	15.0	1.7	100.0(60)		6.58	
교육수준														
대졸 이하	1.3	2.6	0.8	3.9	13.7	11.9	17.8	18.3	18.3	11.4	100.0(387)	29.03**	7.14	0.43
대학원 이상	2.1	0.7	5.6	6.3	11.8	11.8	29.2	16.0	10.4	6.3	100.0(144)		6.63	
거주지역														
대도시	1.3	2.2	1.3	4.9	14.3	11.6	21.0	17.3	15.9	10.2	100.0(371)	16.71	7.01	0.07
중소도시	2.2	1.5	2.9	4.4	9.5	13.1	22.6	20.4	16.8	6.6	100.0(137)		6.96	
농어촌	0.0	4.0	8.0	0.0	16.0	8.0	16.0	12.0	16.0	20.0	100.0(25)		7.12	

주: * p 〈.05, ** p 〈.01

〈부표 2-29〉 한국인의 특성별 출산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평균	*F*
성별								
남성	38.6	27.4	20.0	14.0	100.0(215)	2.59	2.09	0.04
여성	32.3	31.3	20.1	16.3	100.0(319)		2.20	
연령								
20대	33.3	28.8	19.3	18.5	100.0(243)	13.59	2.23	1.92
30대	37.5	33.3	20.8	8.3	100.0(168)		2.00	
40대	36.5	19.0	23.8	20.6	100.0(63)		2.29	
50대 이상	31.7	35.0	16.7	16.7	100.0(60)		2.18	
교육수준								
대졸 이하	32.8	29.7	20.4	17.1	100.0(387)	3.84	2.22	3.74#
대학원 이상	39.6	29.9	19.4	11.1	100.0(144)		2.02	
거주지역								
대도시	34.5	33.2	17.3	15.1	100.0(371)	9.89	2.13	0.86
중소도시	34.3	22.6	26.3	16.8	100.0(137)		2.26	
농어촌	44.0	20.0	24.0	12.0	100.0(25)		2.04	

주: # p<.10

〈부표 2-30〉 한국인의 특성별 출산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9	1.9	1.9	1.9	6.0	6.0	8.8	20.9	20.9	30.7	100.0(215)	11.28	8.09	1.89
여성	0.3	1.3	0.3	2.5	4.7	6.0	16.6	20.1	20.1	28.2	100.0(319)		8.13	
연령														
20대	0.4	2.1	1.6	2.9	6.6	4.1	14.8	19.8	21.0	26.7	100.0(243)	35.71	7.97	1.04
30대	1.2	1.2	0.6	1.8	4.8	3.6	12.5	20.8	17.3	36.3	100.0(168)		8.30	
40대	0.0	1.6	0.0	0.0	4.8	9.5	15.9	19.0	27.0	22.2	100.0(63)		8.13	
50대 이상	0.0	0.0	0.0	3.3	1.7	16.7	8.3	23.3	20.0	26.7	100.0(60)		8.13	
교육수준														
대졸 이하	0.5	2.1	1.3	2.3	6.2	4.7	12.9	21.4	20.9	27.6	100.0(387)	14.43	8.04	0.52
대학원 이상	0.7	0.0	0.0	2.1	2.8	9.7	15.3	17.4	18.8	33.3	100.0(144)		8.29	
거주지역														
대도시	0.3	1.3	1.1	1.9	5.4	5.9	13.5	19.4	22.4	28.8	100.0(371)	10.95	8.16	0.35
중소도시	1.5	2.2	0.7	2.9	4.4	5.8	12.4	23.4	17.5	29.2	100.0(137)		8.00	
농어촌	0.0	0.0	0.0	4.0	8.0	8.0	20.0	16.0	8.0	36.0	100.0(25)		8.04	

〈부표 2-31〉 한국인의 특성별 노후대비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평균	*F*
성별								
남성	58.1	28.8	8.4	4.7	100.0(215)	0.26	1.60	0.06
여성	59.2	27.6	7.8	5.3	100.0(319)		1.59	
연령								
20대	54.3	28.4	10.7	6.6	100.0(243)	10.27	1.70	2.43#
30대	59.5	30.4	6.5	3.6	100.0(168)		1.54	
40대	69.8	20.6	4.8	4.8	100.0(63)		1.44	
50대 이상	63.3	28.3	5.0	3.3	100.0(60)		1.48	
교육수준								
대졸 이하	58.4	27.9	8.5	5.2	100.0(387)	0.80	1.60	0.56
대학원 이상	59.7	29.2	6.3	4.9	100.0(144)		1.56	
거주지역								
대도시	60.9	27.0	7.3	4.9	100.0(371)	3.26	1.56	1.00
중소도시	53.3	31.4	10.2	5.1	100.0(137)		1.67	
농어촌	56.0	28.0	8.0	8.0	100.0(25)		1.68	

주: # p<.10

〈부표 2-32〉 한국인의 특성별 노후대비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0	0.5	1.9	1.9	6.0	4.7	8.8	21.9	19.5	34.9	100.0(215)	6.97	8.33	0.31
여성	0.6	0.3	0.3	1.6	4.4	5.6	11.6	19.7	20.1	35.7	100.0(319)		8.41	
연령														
20대	0.0	0.8	1.6	1.2	6.2	7.4	11.9	18.5	18.9	33.3	100.0(243)	31.03	8.22	1.40
30대	1.2	0.0	0.0	1.8	3.0	4.2	10.7	26.2	16.7	36.3	100.0(168)		8.46	
40대	0.0	0.0	0.0	1.6	7.9	3.2	6.3	20.6	22.2	38.1	100.0(63)		8.56	
50대 이상	0.0	0.0	1.7	3.3	3.3	1.7	8.3	13.3	30.0	38.3	100.0(60)		8.63	
교육수준														
대졸 이하	0.0	0.5	1.0	1.8	4.9	5.9	9.8	18.9	19.9	37.2	100.0(387)	11.75	8.42	0.28
대학원 이상	1.4	0.0	0.7	1.4	5.6	3.5	11.8	25.7	19.4	30.6	100.0(144)		8.26	
거주지역														
대도시	0.0	0.3	1.1	1.6	5.7	5.7	9.4	22.4	19.7	34.2	100.0(371)	17.69	8.37	0.14
중소도시	1.5	0.7	0.0	1.5	3.6	4.4	13.9	15.3	21.2	38.0	100.0(137)		8.43	
농어촌	0.0	0.0	4.0	4.0	4.0	4.0	8.0	24.0	16.0	36.0	100.0(25)		8.24	

〈부표 2-33〉 한국인의 특성별 연금수혜비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평균	*F*
성별								
남성	25.6	45.6	14.0	14.9	100.0(215)	5.28	2.18	1.06
여성	20.7	42.3	21.0	16.0	100.0(319)		2.32	
연령								
20대	23.0	39.5	20.2	17.3	100.0(243)	13.92	2.32	3.11*
30대	25.0	45.8	16.7	12.5	100.0(168)		2.17	
40대	14.3	41.3	22.2	22.2	100.0(63)		2.52	
50대 이상	23.3	56.7	10.0	10.0	100.0(60)		2.07	
교육수준								
대졸 이하	24.0	42.6	17.3	16.0	100.0(387)	2.39	2.25	0.53
대학원 이상	18.8	45.8	20.8	14.6	100.0(144)		2.31	
거주지역								
대도시	21.6	44.2	17.8	16.4	100.0(371)	5.87	2.29	2.07
중소도시	23.4	40.9	21.2	14.6	100.0(137)		2.27	
농어촌	36.0	48.0	8.0	8.0	100.0(25)		1.88	

주: * p 〈.05

〈부표 2-34〉 한국인의 특성별 연금수혜비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5	0.9	3.3	2.8	9.8	7.0	16.3	19.5	25.1	14.9	100.0(215)	9.80	7.59	1.52
여성	0.9	0.9	1.6	1.6	6.9	11.6	16.3	23.8	20.1	16.3	100.0(319)		7.66	
연령														
20대	1.6	1.2	2.1	1.6	10.3	9.1	15.2	23.9	21.4	13.6	100.0(243)	26.60	7.49	2.42#
30대	0.0	0.6	3.0	1.2	5.4	11.9	17.9	19.0	22.6	18.5	100.0(168)		7.79	
40대	0.0	1.6	3.2	3.2	11.1	11.1	14.3	25.4	15.9	14.3	100.0(63)		7.37	
50대 이상	0.0	0.0	0.0	5.0	3.3	5.0	18.3	20.0	30.0	18.3	100.0(60)		8.08	
교육수준														
대졸 이하	0.8	0.5	2.3	2.1	8.8	7.0	16.5	22.2	22.7	17.1	100.0(387)	16.97*	7.72	0.28
대학원 이상	0.7	2.1	2.1	2.1	6.3	17.4	16.0	20.8	20.1	12.5	100.0(144)		7.40	
거주지역														
대도시	1.1	1.1	3.0	1.3	8.9	8.1	17.3	23.5	22.1	13.7	100.0(371)	17.57	7.55	1.04
중소도시	0.0	0.7	0.7	3.6	5.8	13.9	14.6	19.7	21.2	19.7	100.0(137)		7.78	
농어촌	0.0	0.0	0.0	4.0	8.0	12.0	12.0	16.0	28.0	20.0	100.0(25)		7.92	

주: # p<.10, * p 〈.05

〈부표 2-35〉 한국인의 특성별 요보호아동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평균	*F*
성별								
남성	12.1	20.5	51.2	16.3	100.0(215)	2.37	2.72	3.74#
여성	16.0	21.9	45.5	16.6	100.0(319)		2.63	
연령								
20대	16.9	25.5	39.1	18.5	100.0(243)	20.67	2.59	1.85
30대	13.1	17.3	57.7	11.9	100.0(168)		2.68	
40대	12.7	25.4	46.0	15.9	100.0(63)		2.65	
50대 이상	10.0	11.7	56.7	21.7	100.0(60)		2.90	
교육수준								
대졸 이하	13.2	23.3	45.2	18.3	100.0(387)	8.96*	2.69	0.00
대학원 이상	18.1	16.7	54.2	11.1	100.0(144)		2.58	
거주지역								
대도시	12.7	22.6	46.6	18.1	100.0(371)	11.02#	2.70	3.39*
중소도시	20.4	19.0	50.4	10.2	100.0(137)		2.50	
농어촌	8.0	16.0	52.0	24.0	100.0(25)		2.92	

주: * p 〈.05

〈부표 2-36〉 한국인의 특성별 요보호아동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9	1.9	3.7	4.2	13.5	14.0	16.7	24.7	13.0	7.4	100.0(215)	6.35	6.90	0.01
여성	0.6	0.9	4.7	3.1	10.3	14.4	18.5	20.7	15.4	11.3	100.0(319)		7.13	
연령														
20대	0.4	1.2	5.8	3.7	10.7	12.8	17.7	22.6	11.9	13.2	100.0(243)	33.92	7.09	0.41
30대	1.8	1.8	3.6	4.8	12.5	11.3	20.2	21.4	13.7	8.9	100.0(168)		6.91	
40대	0.0	0.0	3.2	1.6	12.7	19.0	17.5	15.9	25.4	4.8	100.0(63)		7.19	
50대 이상	0.0	1.7	1.7	1.7	11.7	23.3	11.7	30.0	15.0	3.3	100.0(60)		7.03	
교육수준														
대졸 이하	0.5	1.0	4.4	3.1	11.9	14.5	15.8	23.0	15.2	10.6	100.0(387)	7.94	7.12	0.01
대학원 이상	1.4	2.1	4.2	4.9	11.1	12.5	22.9	20.8	12.5	7.6	100.0(144)		6.84	
거주지역														
대도시	0.5	1.6	4.6	3.2	13.5	14.0	18.6	20.8	13.5	9.7	100.0(371)	17.05	6.96	1.39
중소도시	1.5	0.0	3.6	4.4	5.8	15.3	14.6	28.5	16.1	10.2	100.0(137)		7.28	
농어촌	0.0	4.0	4.0	4.0	16.0	12.0	20.0	12.0	20.0	8.0	100.0(25)		6.84	

〈부표 2-37〉 한국인의 특성별 장애인 출현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평균	*F*
성별								
남성	4.2	5.1	26.5	64.2	100.0(215)	2.55	3.51	1.51
여성	4.1	8.8	25.7	61.4	100.0(319)		3.45	
연령								
20대	5.8	6.6	30.0	57.6	100.0(243)	15.00#	3.40	2.30#
30대	2.4	7.7	19.0	70.8	100.0(168)		3.58	
40대	3.2	12.7	27.0	57.1	100.0(63)		3.38	
50대 이상	3.3	3.3	28.3	65.0	100.0(60)		3.55	
교육수준								
대졸 이하	4.4	6.2	29.2	60.2	100.0(387)	8.24*	3.45	0.00
대학원 이상	3.5	9.7	18.1	68.8	100.0(144)		3.52	
거주지역								
대도시	4.9	6.2	28.6	60.4	100.0(371)	10.63	3.44	0.65
중소도시	2.9	10.2	17.5	69.3	100.0(137)		3.53	
농어촌	0.0	8.0	32.0	60.0	100.0(25)		3.52	

주: # p<.10, * p 〈.05

〈부표 2-38〉 한국인의 특성별 장애인 출현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5.6	4.7	6.5	6.5	13.5	16.7	21.9	16.3	6.0	2.3	100.0(215)	18.79*	5.89	0.22
여성	1.6	1.6	9.4	11.3	12.5	12.2	22.9	17.2	7.2	4.1	100.0(319)		6.18	
연령														
20대	2.5	2.9	8.2	9.5	12.8	14.4	18.9	18.9	7.8	4.1	100.0(243)	22.71	6.16	1.45
30대	4.8	4.2	9.5	9.5	11.3	13.7	23.8	14.9	6.5	1.8	100.0(168)		5.81	
40대	1.6	0.0	9.5	6.3	17.5	11.1	22.2	19.0	6.3	6.3	100.0(63)		6.38	
50대 이상	3.3	1.7	3.3	11.7	13.3	16.7	33.3	11.7	3.3	1.7	100.0(60)		6.03	
교육수준														
대졸 이하	2.6	2.8	8.3	9.0	10.9	14.2	22.7	18.9	7.2	3.4	100.0(387)	9.61	6.18	0.09
대학원 이상	4.9	2.8	8.3	9.7	18.1	13.9	21.5	11.8	5.6	3.5	100.0(144)		5.78	
거주지역														
대도시	2.7	3.0	7.8	10.0	13.5	13.7	22.1	17.3	6.5	3.5	100.0(371)	11.47	6.08	0.13
중소도시	4.4	2.9	10.2	8.8	9.5	13.1	24.8	16.1	7.3	2.9	100.0(137)		5.99	
농어촌	4.0	0.0	4.0	4.0	24.0	24.0	12.0	16.0	8.0	4.0	100.0(25)		6.20	

주: * p 〈.05

〈부표 2-39〉 한국인의 특성별 평균수명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평균	*F*
성별											
남성	17.2	7.4	8.8	11.2	6.0	9.8	39.5	100.0(215)	8.07	4.69	0.09
여성	18.8	2.8	7.2	9.1	6.6	10.3	45.1	100.0(319)		4.93	
연령											
20대	13.6	2.5	8.2	10.7	6.6	13.6	44.9	100.0(243)	29.55*	5.14	3.23*
30대	20.8	7.7	10.7	7.7	4.8	8.3	39.9	100.0(168)		4.52	
40대	20.6	3.2	1.6	11.1	9.5	9.5	44.4	100.0(63)		4.92	
50대 이상	26.7	6.7	5.0	11.7	6.7	1.7	41.7	100.0(60)		4.37	
교육수준											
대졸 이하	16.3	5.4	8.0	10.1	6.7	10.6	42.9	100.0(387)	5.20	4.89	3.35#
대학원 이상	23.6	2.8	7.6	9.7	5.6	9.0	41.7	100.0(144)		4.65	
거주지역											
대도시	17.5	4.6	7.3	10.2	6.5	11.1	42.9	100.0(371)	6.55	4.88	0.48
중소도시	19.7	4.4	8.8	10.2	5.1	7.3	44.5	100.0(137)		4.77	
농어촌	20.0	8.0	12.0	4.0	12.0	12.0	32.0	100.0(25)		4.44	

주: # p<.10, * p 〈.05

〈부표 2-40〉 한국인의 특성별 평균수명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5.6	3.3	7.9	13.0	12.1	11.6	12.1	12.1	11.6	10.7	100.0(215)	12.69	6.11	2.77#
여성	2.8	3.4	5.3	14.4	19.7	11.6	12.5	11.3	6.6	12.2	100.0(319)		6.11	
연령														
20대	5.3	4.1	6.2	15.2	16.0	10.7	14.4	12.8	7.4	7.8	100.0(243)	30.86	5.85	2.16#
30대	2.4	1.8	9.5	10.7	19.6	11.9	10.1	10.1	8.3	15.5	100.0(168)		6.29	
40대	6.3	3.2	1.6	17.5	15.9	12.7	11.1	7.9	7.9	15.9	100.0(63)		6.14	
50대 이상	0.0	5.0	3.3	13.3	11.7	13.3	11.7	15.0	15.0	11.7	100.0(60)		6.65	
교육수준														
대졸 이하	4.1	2.6	5.9	15.0	14.7	12.1	12.4	13.2	8.8	11.1	100.0(387)	10.79	6.16	0.17
대학원 이상	3.5	5.6	6.9	11.1	21.5	9.7	12.5	7.6	8.3	13.2	100.0(144)		6.01	
거주지역														
대도시	4.9	3.8	6.7	13.5	16.2	11.6	12.1	11.9	8.9	10.5	100.0(371)	10.31	6.02	1.07
중소도시	2.2	2.2	6.6	14.6	17.5	11.7	12.4	11.7	6.6	14.6	100.0(137)		6.28	
농어촌	0.0	4.0	0.0	16.0	20.0	8.0	16.0	8.0	16.0	12.0	100.0(25)		6.60	

주: # p<.10

〈부표 2-41〉 한국인의 특성별 자살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평균	*F*
성별											
남성	26.0	19.1	16.3	13.5	11.6	11.2	2.3	100.0(215)	4.14	3.08	2.39
여성	26.6	22.6	17.6	13.5	11.0	6.6	2.2	100.0(319)		2.88	
연령											
20대	34.2	18.5	16.9	14.8	7.4	6.2	2.1	100.0(243)	32.28*	2.70	4.40**
30대	19.0	19.6	17.9	15.5	12.5	13.1	2.4	100.0(168)		3.32	
40대	22.2	27.0	17.5	6.3	17.5	6.3	3.2	100.0(63)		3.02	
50대 이상	20.0	30.0	15.0	10.0	16.7	6.7	1.7	100.0(60)		3.00	
교육수준											
대졸 이하	24.8	20.2	15.5	16.0	11.1	10.3	2.1	100.0(387)	16.54*	3.08	3.58#
대학원 이상	29.9	24.3	21.5	6.9	11.1	3.5	2.8	100.0(144)		2.67	
거주지역											
대도시	28.0	21.0	17.5	13.2	10.5	7.5	2.2	100.0(371)	11.48	2.88	1.64
중소도시	20.4	23.4	16.8	11.7	13.9	11.7	2.2	100.0(137)		3.19	
농어촌	36.0	12.0	12.0	24.0	8.0	4.0	4.0	100.0(25)		2.84	

주: # p<.10, * p 〈.05, ** p 〈.01

〈부표 2-42〉 한국인의 특성별 자살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1.4	0.9	1.4	4.2	8.8	9.8	15.3	20.5	14.0	23.7	100.0(215)	8.83	7.61	2.88#
여성	0.3	0.9	0.9	1.6	9.7	8.5	14.7	19.1	20.1	24.1	100.0(319)		7.89	
연령														
20대	0.4	0.8	0.4	2.1	8.6	8.2	13.2	16.5	18.1	31.7	100.0(243)	35.10	8.08	4.48**
30대	1.8	1.2	1.8	3.0	10.7	10.7	14.9	21.4	17.9	16.7	100.0(168)		7.42	
40대	0.0	1.6	0.0	1.6	6.3	11.1	20.6	19.0	14.3	25.4	100.0(63)		7.87	
50대 이상	0.0	0.0	3.3	5.0	11.7	5.0	16.7	28.3	18.3	11.7	100.0(60)		7.43	
교육수준														
대졸 이하	0.5	1.3	0.5	3.1	10.6	9.3	16.0	17.8	17.1	23.8	100.0(387)	14.81#	7.72	1.84
대학원 이상	1.4	0.0	2.8	1.4	6.3	8.3	12.5	25.0	18.8	23.6	100.0(144)		7.89	
거주지역														
대도시	0.5	1.3	0.8	2.7	9.7	8.6	15.4	17.8	16.2	27.0	100.0(371)	25.56	7.82	0.67
중소도시	1.5	0.0	1.5	2.2	10.2	8.8	13.9	25.5	22.6	13.9	100.0(137)		7.62	
농어촌	0.0	0.0	4.0	4.0	0.0	16.0	16.0	12.0	12.0	36.0	100.0(25)		8.00	

주: # p<.10, ** p 〈.01

〈부표 2-43〉 한국인의 특성별 청소년 자살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평균	*F*
성별											
남성	6.0	17.2	16.7	20.9	18.6	13.5	7.0	100.0(215)	3.20	3.97	0.02
여성	6.6	20.1	18.2	18.8	19.4	12.9	4.1	100.0(319)		3.79	
연령											
20대	7.0	25.1	18.9	17.7	16.0	11.5	3.7	100.0(243)	43.01**	3.60	8.10***
30대	5.4	11.3	11.9	20.8	28.0	14.9	7.7	100.0(168)		4.30	
40대	11.1	15.9	23.8	28.6	7.9	9.5	3.2	100.0(63)		3.48	
50대 이상	1.7	18.3	21.7	15.0	18.3	18.3	6.7	100.0(60)		4.12	
교육수준											
대졸 이하	6.5	19.9	16.5	17.6	19.9	12.9	6.7	100.0(387)	10.68#	3.90	5.16*
대학원 이상	6.3	16.0	20.1	25.0	17.4	13.9	1.4	100.0(144)		3.78	
거주지역											
대도시	7.5	19.1	16.2	18.1	19.7	13.7	5.7	100.0(371)	13.99	3.87	0.02
중소도시	4.4	16.8	23.4	21.9	16.8	11.7	5.1	100.0(137)		3.85	
농어촌	0.0	28.0	8.0	32.0	20.0	12.0	0.0	100.0(25)		3.80	

주: # p<.10, * p 〈.05, ** p 〈.01, *** p 〈.001

〈부표 2-44〉 한국인의 특성별 청소년 자살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1.4	1.4	3.3	6.0	10.2	14.9	23.3	12.6	14.0	13.0	100.0(215)	11.13	6.98	0.00
여성	0.6	1.3	2.8	4.1	10.0	13.2	16.6	19.7	19.1	12.5	100.0(319)		7.29	
연령														
20대	0.4	0.8	4.9	4.5	7.4	12.8	16.9	14.0	20.6	17.7	100.0(243)	50.93**	7.41	5.56**
30대	2.4	1.2	1.8	6.5	14.9	15.5	19.6	19.6	10.1	8.3	100.0(168)		6.73	
40대	0.0	0.0	0.0	3.2	7.9	11.1	22.2	19.0	25.4	11.1	100.0(63)		7.67	
50대 이상	0.0	5.0	1.7	3.3	10.0	16.7	25.0	18.3	13.3	6.7	100.0(60)		6.87	
교육수준														
대졸 이하	1.0	1.0	3.1	4.9	10.1	15.0	18.1	15.2	18.1	13.4	100.0(387)	8.15	7.18	1.52
대학원 이상	0.7	2.1	2.8	4.9	10.4	11.1	22.9	21.5	13.2	10.4	100.0(144)		7.07	
거주지역														
대도시	0.8	1.3	3.2	5.7	11.3	13.5	17.3	15.4	17.5	14.0	100.0(371)	18.08	7.15	0.32
중소도시	1.5	1.5	1.5	3.6	8.0	15.3	23.4	19.7	17.5	8.0	100.0(137)		7.15	
농어촌	0.0	0.0	8.0	0.0	4.0	12.0	24.0	24.0	8.0	20.0	100.0(25)		7.48	

주: ** p 〈.01

〈부표 2-45〉 한국인의 특성별 부정식품 적발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평균	*F*
성별											
남성	5.6	6.0	13.0	14.0	20.9	18.6	21.9	100.0(215)	6.45	4.82	0.01
여성	5.0	10.3	11.6	17.9	20.1	18.8	16.3	100.0(319)		4.59	
연령											
20대	2.9	10.3	13.2	16.5	21.0	18.1	18.1	100.0(243)	10.10	4.69	0.07
30대	7.1	8.3	9.5	17.3	20.2	19.0	18.5	100.0(168)		4.66	
40대	6.3	6.3	12.7	12.7	22.2	20.6	19.0	100.0(63)		4.76	
50대 이상	8.3	5.0	15.0	16.7	16.7	18.3	20.0	100.0(60)		4.63	
교육수준											
대졸 이하	5.7	9.8	14.5	15.8	18.3	17.8	18.1	100.0(387)	12.47#	4.57	10.37**
대학원 이상	4.2	5.6	6.3	17.4	26.4	20.1	20.1	100.0(144)		4.97	
거주지역											
대도시	4.6	7.3	11.3	17.3	20.2	19.9	19.4	100.0(371)	8.71	4.79	2.42#
중소도시	6.6	12.4	13.9	14.6	21.9	15.3	15.3	100.0(137)		4.40	
농어촌	8.0	8.0	16.0	12.0	16.0	16.0	24.0	100.0(25)		4.64	

주: # p<.10, ** p 〈.01

〈부표 2-46〉 한국인의 특성별 부정식품 적발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3.7	1.9	5.6	10.2	16.3	16.7	17.2	10.7	10.7	7.0	100.0(215)	9.56	6.19	0.31
여성	0.9	1.3	6.6	9.7	17.9	14.4	15.4	16.6	11.0	6.3	100.0(319)		6.40	
연령														
20대	2.1	1.2	6.6	10.3	15.6	14.4	15.6	15.6	13.6	4.9	100.0(243)	23.83	6.36	0.26
30대	2.4	1.2	7.1	9.5	20.8	16.1	13.7	11.3	10.1	7.7	100.0(168)		6.20	
40대	1.6	0.0	7.9	9.5	15.9	12.7	22.2	14.3	6.3	9.5	100.0(63)		6.41	
50대 이상	1.7	5.0	0.0	10.0	15.0	20.0	18.3	16.7	6.7	6.7	100.0(60)		6.35	
교육수준														
대졸 이하	1.8	1.0	5.9	9.8	16.0	15.2	14.5	14.5	13.4	7.8	100.0(387)	17.18*	6.48	2.94#
대학원 이상	2.8	2.8	6.9	10.4	20.8	16.0	19.4	13.2	4.2	3.5	100.0(144)		5.85	
거주지역														
대도시	2.4	1.6	6.2	10.5	17.8	15.6	16.2	14.3	9.7	5.7	100.0(371)	11.87	6.20	1.71
중소도시	1.5	1.5	5.8	7.3	14.6	16.1	16.8	15.3	12.4	8.8	100.0(137)		6.60	
농어촌	0.0	0.0	8.0	16.0	24.0	8.0	8.0	8.0	20.0	8.0	100.0(25)		6.36	

주: # p<.10, * p 〈.05

〈부표 2-47〉 한국인의 특성별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평균	*F*
성별											
남성	10.2	16.3	12.6	10.2	18.1	21.4	11.2	100.0(215)	6.40	4.19	0.86
여성	16.6	13.2	13.8	11.3	14.7	18.5	11.9	100.0(319)		3.97	
연령											
20대	11.5	11.1	14.0	10.3	20.6	22.2	10.3	100.0(243)	31.35*	4.25	3.19*
30대	16.1	22.0	15.5	9.5	9.5	13.7	13.7	100.0(168)		3.70	
40대	15.9	7.9	6.3	12.7	19.0	25.4	12.7	100.0(63)		4.38	
50대 이상	16.7	13.3	11.7	15.0	13.3	20.0	10.0	100.0(60)		3.95	
교육수준											
대졸 이하	13.4	14.2	12.7	11.6	17.1	18.3	12.7	100.0(387)	5.57	4.10	0.42
대학원 이상	15.3	15.3	15.3	8.3	13.2	23.6	9.0	100.0(144)		3.96	
거주지역											
대도시	12.7	14.0	15.1	10.5	17.0	19.4	11.3	100.0(371)	18.43	4.09	0.89
중소도시	16.1	15.3	10.9	13.9	15.3	18.2	10.2	100.0(137)		3.93	
농어촌	24.0	12.0	0.0	0.0	8.0	32.0	24.0	100.0(25)		4.48	

주: * p 〈.05

〈부표 2-48〉 한국인의 특성별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5	2.3	4.7	9.8	12.6	14.9	14.9	15.8	12.1	12.6	100.0(215)	5.24	6.75	0.33
여성	0.3	2.2	3.8	8.2	15.7	11.3	12.9	15.4	13.2	17.2	100.0(319)		6.98	
연령														
20대	0.4	2.1	4.9	10.7	14.4	12.3	15.6	16.0	8.6	14.8	100.0(243)	28.27	6.72	1.29
30대	0.0	3.6	3.6	6.5	11.3	11.9	11.3	18.5	16.7	16.7	100.0(168)		7.15	
40대	1.6	1.6	4.8	4.8	20.6	11.1	12.7	11.1	19.0	12.7	100.0(63)		6.84	
50대 이상	0.0	0.0	1.7	11.7	16.7	18.3	13.3	10.0	11.7	16.7	100.0(60)		6.90	
교육수준														
대졸 이하	0.3	2.6	4.4	8.8	14.7	12.1	12.9	15.2	12.7	16.3	100.0(387)	3.31	6.89	1.47
대학원 이상	0.7	1.4	3.5	9.0	13.9	14.6	14.6	16.7	13.2	12.5	100.0(144)		6.86	
거주지역														
대도시	0.5	2.4	4.6	8.4	13.5	12.7	14.8	16.2	12.9	14.0	100.0(371)	10.76	6.86	0.59
중소도시	0.0	1.5	3.6	8.8	15.3	13.1	12.4	14.6	11.7	19.0	100.0(137)		7.03	
농어촌	0.0	4.0	0.0	16.0	24.0	12.0	4.0	12.0	12.0	16.0	100.0(25)		6.56	

〈부표 2-49〉 한국인의 특성별 교통사고 사망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평균	*F*
성별											
남성	8.4	8.8	19.1	15.3	18.6	19.5	10.2	100.0(215)	10.23	4.27	0.28
여성	4.1	9.4	14.1	16.9	16.0	25.7	13.8	100.0(319)		4.64	
연령											
20대	7.0	7.4	13.6	18.9	15.6	21.4	16.0	100.0(243)	18.40	4.57	0.43
30대	6.0	10.1	16.7	13.7	19.6	24.4	9.5	100.0(168)		4.42	
40대	3.2	14.3	19.0	17.5	12.7	22.2	11.1	100.0(63)		4.33	
50대 이상	3.3	8.3	21.7	11.7	20.0	28.3	6.7	100.0(60)		4.48	
교육수준											
대졸 이하	6.2	8.0	17.3	17.3	18.1	22.2	10.9	100.0(387)	9.38	4.43	2.42
대학원 이상	4.9	12.5	12.5	13.9	13.9	25.7	16.7	100.0(144)		4.63	
거주지역											
대도시	7.3	8.9	16.7	16.2	16.7	21.6	12.7	100.0(371)	14.53	4.42	1.99
중소도시	2.9	9.5	10.9	17.5	18.2	28.5	12.4	100.0(137)		4.74	
농어촌	0.0	12.0	32.0	12.0	16.0	20.0	8.0	100.0(25)		4.24	

〈부표 2-50〉 한국인의 특성별 교통사고 사망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5	2.8	4.7	7.9	16.7	14.0	16.3	15.3	14.0	7.9	100.0(215)	3.09	6.60	0.28
여성	0.6	2.2	6.0	8.8	17.6	12.9	19.1	15.7	11.6	5.6	100.0(319)		6.43	
연령														
20대	0.8	3.7	4.9	9.1	15.2	11.5	18.1	17.3	13.6	5.8	100.0(243)	17.84	6.49	0.62
30대	0.6	1.2	5.4	7.7	19.0	17.3	17.9	11.9	12.5	6.5	100.0(168)		6.47	
40대	0.0	0.0	7.9	4.8	15.9	14.3	17.5	17.5	12.7	9.5	100.0(63)		6.79	
50대 이상	0.0	3.3	5.0	11.7	21.7	8.3	18.3	16.7	8.3	6.7	100.0(60)		6.30	
교육수준														
대졸 이하	0.3	2.8	3.4	9.3	17.1	11.4	18.3	17.6	12.9	7.0	100.0(387)	23.64**	6.62	0.00
대학원 이상	1.4	1.4	11.1	6.3	17.4	18.1	17.4	10.4	11.1	5.6	100.0(144)		6.18	
거주지역														
대도시	0.8	2.4	5.4	8.4	15.1	14.0	18.6	15.9	11.9	7.5	100.0(371)	24.16	6.54	1.98
중소도시	0.0	2.2	5.8	9.5	23.4	13.1	18.2	11.7	10.9	5.1	100.0(137)		6.26	
농어촌	0.0	4.0	4.0	4.0	16.0	4.0	8.0	28.0	32.0	0.0	100.0(25)		7.08	

주: ** $p < .01$

〈부표 2-51〉 한국인의 특성별 강력범죄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평균	*F*
성별											
남성	26.6	25.2	13.6	15.0	6.1	6.1	7.5	100.0(214)	7.87	2.97	0.19
여성	22.4	22.4	17.7	13.6	11.7	6.6	5.7	100.0(317)		3.12	
연령											
20대	24.1	26.1	15.4	11.6	12.0	6.6	4.1	100.0(241)	18.44	2.98	0.82
30대	25.6	20.8	17.9	16.7	5.4	6.0	7.7	100.0(168)		3.04	
40대	20.6	25.4	19.0	11.1	11.1	6.3	6.3	100.0(63)		3.11	
50대 이상	23.7	18.6	10.2	20.3	8.5	6.8	11.9	100.0(59)		3.39	
교육수준											
대졸 이하	27.3	23.1	15.6	12.2	8.3	7.5	6.0	100.0(385)	14.62*	2.98	0.50
대학원 이상	16.1	23.8	16.8	19.6	12.6	3.5	7.7	100.0(143)		3.30	
거주지역											
대도시	22.5	25.7	16.0	15.2	8.9	6.2	5.4	100.0(369)	13.41	3.03	1.00
중소도시	30.1	18.4	15.4	11.0	8.8	7.4	8.8	100.0(136)		3.07	
농어촌	12.0	20.0	20.0	16.0	20.0	4.0	8.0	100.0(25)		3.56	

주: * p 〈.05

〈부표 2-52〉 한국인의 특성별 강력범죄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9	0.9	1.4	5.6	3.3	8.9	17.3	17.3	18.2	26.2	100.0(214)	10.22	7.84	0.16
여성	0.6	1.3	1.9	2.8	7.9	10.1	12.6	16.7	21.1	24.9	100.0(317)		7.82	
연령														
20대	1.2	0.4	1.7	2.5	6.6	9.1	13.7	17.4	23.2	24.1	100.0(241)	35.03	7.90	2.88*
30대	0.0	1.2	1.8	6.0	3.6	10.1	17.3	14.3	20.2	25.6	100.0(168)		7.83	
40대	0.0	0.0	0.0	1.6	7.9	6.3	15.9	23.8	14.3	30.2	100.0(63)		8.16	
50대 이상	1.7	5.1	3.4	6.8	8.5	13.6	8.5	15.3	11.9	25.4	100.0(59)		7.15	
교육수준														
대졸 이하	1.0	1.3	1.8	3.1	5.7	7.8	12.7	16.4	23.1	27.0	100.0(385)	22.50**	7.95	0.01
대학원 이상	0.0	0.7	1.4	6.3	7.0	14.7	19.6	18.2	11.2	21.0	100.0(143)		7.47	
거주지역														
대도시	0.3	0.8	1.9	4.1	5.7	9.2	15.2	17.9	21.4	23.6	100.0(369)	18.41	7.85	0.49
중소도시	1.5	2.2	1.5	3.7	7.4	8.8	12.5	15.4	15.4	31.6	100.0(136)		7.81	
농어촌	4.0	0.0	0.0	4.0	4.0	20.0	16.0	12.0	24.0	16.0	100.0(25)		7.44	

주: * p 〈.05, ** p 〈.01

〈부표 2-53〉 한국인의 특성별 노사분규 발생건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평균	*F*
성별										
남성	40.5	33.0	13.0	6.0	4.2	3.3	100.0(215)	1.36	2.10	0.98
여성	38.9	34.2	15.4	6.0	3.4	2.2	100.0(319)		2.08	
연령										
20대	40.7	32.1	13.2	6.2	4.1	3.7	100.0(243)	9.77	2.12	1.54
30대	35.7	35.7	14.9	7.1	4.8	1.8	100.0(168)		2.15	
40대	39.7	31.7	17.5	4.8	3.2	3.2	100.0(63)		2.10	
50대 이상	45.0	36.7	15.0	3.3	0.0	0.0	100.0(60)		1.77	
교육수준										
대졸 이하	40.8	32.3	14.0	5.7	4.4	2.8	100.0(387)	3.13	2.09	2.21
대학원 이상	36.8	36.8	16.0	6.3	2.1	2.1	100.0(144)		2.06	
거주지역										
대도시	38.5	31.0	15.1	7.0	4.9	3.5	100.0(371)	22.47*	2.19	5.92**
중소도시	43.1	42.3	9.5	4.4	0.7	0.0	100.0(137)		1.77	
농어촌	36.0	28.0	28.0	0.0	4.0	4.0	100.0(25)		2.20	

주: * p 〈.05, ** p 〈.01

〈부표 2-54〉 한국인의 특성별 노사분규 발생건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2.8	0.9	1.4	4.7	4.2	6.0	14.0	16.3	20.5	29.3	100.0(215)	14.78#	7.90	2.10
여성	0.6	1.9	2.5	0.9	3.4	8.8	16.3	15.7	21.0	28.8	100.0(319)		8.03	
연령														
20대	0.4	2.1	2.1	2.1	2.9	7.4	17.7	14.4	21.0	30.0	100.0(243)	27.96	8.06	2.65*
30대	4.2	1.8	1.8	3.6	5.4	8.3	12.5	17.9	17.9	26.8	100.0(168)		7.63	
40대	0.0	0.0	3.2	1.6	3.2	9.5	19.0	11.1	20.6	31.7	100.0(63)		8.14	
50대 이상	0.0	0.0	1.7	1.7	3.3	5.0	10.0	21.7	28.3	28.3	100.0(60)		8.40	
교육수준														
대졸 이하	1.0	1.3	1.8	2.6	3.1	7.2	14.2	14.5	20.9	33.3	100.0(387)	17.28*	8.15	0.85
대학원 이상	2.8	2.1	2.8	2.1	5.6	9.0	17.4	20.1	20.8	17.4	100.0(144)		7.49	
거주지역														
대도시	1.6	1.6	2.7	2.4	4.6	7.8	16.4	15.6	19.7	27.5	100.0(371)	18.52	7.85	3.03*
중소도시	1.5	0.7	0.0	1.5	2.2	8.0	13.1	14.6	25.5	32.8	100.0(137)		8.35	
농어촌	0.0	4.0	4.0	8.0	0.0	4.0	12.0	24.0	12.0	32.0	100.0(25)		7.80	

주: # p<.10, * p 〈.05

〈부표 2-55〉 한국인의 특성별 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평균	F
성별										
남성	17.2	38.6	27.4	6.5	6.5	3.7	100.0(215)	2.57	2.58	0.02
여성	21.9	37.9	24.5	6.9	6.3	2.5	100.0(319)		2.45	
연령										
20대	18.1	37.4	27.2	8.6	5.3	3.3	100.0(243)	14.62	2.56	1.69
30대	17.3	39.3	27.4	4.2	7.7	4.2	100.0(168)		2.58	
40대	30.2	34.9	20.6	7.9	6.3	0.0	100.0(63)		2.25	
50대 이상	25.0	41.7	20.0	5.0	6.7	1.7	100.0(60)		2.32	
교육수준										
대졸 이하	19.1	39.8	25.1	8.0	4.7	3.4	100.0(387)	10.68#	2.49	0.69
대학원 이상	21.5	34.7	27.8	3.5	10.4	2.1	100.0(144)		2.53	
거주지역										
대도시	18.3	38.3	26.1	6.5	7.3	3.5	100.0(371)	17.85#	2.57	1.73
중소도시	22.6	37.2	28.5	5.1	4.4	2.2	100.0(137)		2.38	
농어촌	32.0	40.0	4.0	20.0	4.0	0.0	100.0(25)		2.24	

주: # p<.10

〈부표 2-56〉 한국인의 특성별 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1.9	2.3	1.9	1.4	9.3	7.9	13.5	22.8	18.1	20.9	100.0(215)	10.20	7.61	1.09
여성	0.6	1.9	2.2	1.3	5.6	12.5	16.0	17.9	22.3	19.7	100.0(319)		7.72	
연령														
20대	0.8	1.2	2.1	0.4	6.2	11.9	14.4	21.4	22.6	18.9	100.0(243)	32.04	7.79	2.87*
30대	2.4	4.8	2.4	3.0	8.9	9.5	14.9	14.9	17.9	21.4	100.0(168)		7.31	
40대	0.0	0.0	1.6	1.6	6.3	6.3	22.2	20.6	17.5	23.8	100.0(63)		7.97	
50대 이상	0.0	0.0	1.7	0.0	6.7	13.3	10.0	26.7	23.3	18.3	100.0(60)		7.95	
교육수준														
대졸 이하	1.0	1.8	1.8	0.8	5.4	9.3	14.7	21.2	22.2	21.7	100.0(387)	17.21*	7.86	4.61*
대학원 이상	1.4	2.8	2.8	2.8	11.8	13.9	16.0	16.7	16.0	16.0	100.0(144)		7.17	
거주지역														
대도시	1.1	2.4	2.2	1.3	7.0	11.1	15.9	20.5	19.7	18.9	100.0(371)	10.39	7.60	0.90
중소도시	1.5	0.7	2.2	1.5	8.0	10.2	12.4	16.1	24.8	22.6	100.0(137)		7.82	
농어촌	0.0	4.0	0.0	0.0	4.0	8.0	16.0	28.0	12.0	28.0	100.0(25)		8.00	

주: * p 〈.05

〈부표 2-57〉 한국인의 특성별 불법체류자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평균	*F*
성별										
남성	4.2	3.3	16.3	32.6	14.9	28.8	100.0(215)	1.46	4.37	0.01
여성	3.8	5.0	15.7	33.9	12.9	28.8	100.0(319)		4.34	
연령										
20대	5.3	5.3	14.0	36.2	11.9	27.2	100.0(243)	15.60	4.26	2.05
30대	4.2	3.6	17.9	32.7	16.1	25.6	100.0(168)		4.30	
40대	0.0	3.2	15.9	31.7	9.5	39.7	100.0(63)		4.67	
50대 이상	1.7	3.3	18.3	25.0	18.3	33.3	100.0(60)		4.55	
교육수준										
대졸 이하	4.7	3.9	15.8	33.1	14.2	28.4	100.0(387)	2.77#	4.34	0.17
대학원 이상	2.1	5.6	16.0	34.7	12.5	29.2	100.0(144)		4.38	
거주지역										
대도시	3.8	4.6	14.3	32.9	15.6	28.8	100.0(371)	10.41	4.39	0.62
중소도시	5.1	2.9	19.7	35.8	8.0	28.5	100.0(137)		4.24	
농어촌	0.0	8.0	20.0	24.0	16.0	32.0	100.0(25)		4.44	

주: # p<.10

〈부표 2-58〉 한국인의 특성별 불법체류자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2.3	7.4	6.5	11.6	20.5	15.8	19.1	7.0	6.0	3.7	100.0(215)	18.28*	5.61	0.40
여성	1.3	2.5	11.3	6.9	22.6	14.1	19.1	12.2	6.0	4.1	100.0(319)		5.91	
연령														
20대	1.2	3.3	7.8	7.0	23.9	14.8	18.9	9.9	8.6	4.5	100.0(243)	38.69#	6.02	1.94
30대	3.0	6.5	12.5	11.9	11.9	15.5	17.9	10.7	5.4	4.8	100.0(168)		5.60	
40대	0.0	4.8	7.9	12.7	31.7	12.7	15.9	11.1	1.6	1.6	100.0(63)		5.49	
50대 이상	1.7	3.3	8.3	3.3	30.0	15.0	26.7	8.3	1.7	1.7	100.0(60)		5.72	
교육수준														
대졸 이하	1.8	3.6	8.0	7.8	20.7	15.5	19.9	10.9	7.2	4.7	100.0(387)	14.26	5.98	0.34
대학원 이상	1.4	6.9	12.5	11.1	25.0	13.2	17.4	7.6	2.8	2.1	100.0(144)		5.30	
거주지역														
대도시	1.3	4.3	10.5	10.2	20.8	15.6	17.3	9.7	5.9	4.3	100.0(371)	24.25	5.75	0.79
중소도시	2.2	3.6	5.8	6.6	23.4	13.9	25.5	10.9	4.4	3.6	100.0(137)		5.96	
농어촌	4.0	12.0	12.0	0.0	28.0	8.0	8.0	12.0	16.0	0.0	100.0(25)		5.48	

주: # p<.10, * p 〈.05

〈부표 2-59〉 한국인의 특성별 우리나라 갈등비용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평균	*F*
성별										
남성	34.0	11.6	29.3	17.2	4.2	3.7	100.0(215)	5.89	2.57	0.08
여성	28.5	15.4	28.2	15.0	7.2	5.6	100.0(319)		2.74	
연령										
20대	31.3	15.2	26.3	13.6	8.6	4.9	100.0(243)	22.51#	2.68	0.69
30대	35.1	9.5	29.2	19.0	4.2	3.0	100.0(168)		2.57	
40대	23.8	22.2	28.6	12.7	4.8	7.9	100.0(63)		2.76	
50대 이상	23.3	11.7	36.7	20.0	1.7	6.7	100.0(60)		2.85	
교육수준										
대졸 이하	30.2	13.4	28.7	17.6	6.5	3.6	100.0(387)	7.90	2.67	0.34
대학원 이상	32.6	15.3	29.2	11.8	3.5	7.6	100.0(144)		2.61	
거주지역										
대도시	32.1	14.6	27.2	15.1	6.2	4.9	100.0(371)	5.77	2.63	0.72
중소도시	26.3	13.1	32.1	16.8	5.8	5.8	100.0(137)		2.80	
농어촌	32.0	8.0	32.0	24.0	4.0	0.0	100.0(25)		2.60	

주: # p<.10

〈부표 2-60〉 한국인의 특성별 우리나라 갈등비용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5	1.9	3.7	4.7	7.0	8.4	17.2	22.3	13.0	21.4	100.0(215)	6.26	7.49	0.35
여성	0.9	0.9	2.5	5.0	8.8	9.7	16.3	22.6	17.2	16.0	100.0(319)		7.42	
연령														
20대	0.8	1.6	1.2	4.9	8.6	8.6	14.0	19.8	20.6	19.8	100.0(243)	35.61	7.61	1.53
30대	1.2	1.8	4.2	4.8	6.5	10.7	22.0	20.8	8.9	19.0	100.0(168)		7.25	
40대	0.0	0.0	4.8	3.2	9.5	6.3	11.1	28.6	22.2	14.3	100.0(63)		7.62	
50대 이상	0.0	0.0	5.0	6.7	8.3	10.0	18.3	31.7	6.7	13.3	100.0(60)		7.18	
교육수준														
대졸 이하	0.3	1.0	3.1	3.4	7.2	9.6	17.8	22.2	16.8	18.6	100.0(387)	14.07	7.58	6.12*
대학원 이상	2.1	2.1	2.8	8.3	9.0	8.3	13.9	23.6	12.5	17.4	100.0(144)		7.15	
거주지역														
대도시	0.8	0.8	2.4	4.3	8.9	10.2	14.6	23.7	15.9	18.3	100.0(371)	21.86	7.51	1.19
중소도시	0.7	2.2	5.1	6.6	7.3	6.6	19.0	21.9	14.6	16.1	100.0(137)		7.23	
농어촌	0.0	4.0	0.0	4.0	0.0	8.0	36.0	8.0	16.0	24.0	100.0(25)		7.72	

주: * p 〈.05

〈부표 2-61〉 한국인의 특성별 마약 및 밀수사범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평균	*F*
성별										
남성	2.3	8.8	7.9	23.7	43.7	13.5	100.0(215)	7.83	4.38	0.03
여성	4.1	4.4	8.8	22.9	41.1	18.8	100.0(319)		4.49	
연령										
20대	3.3	5.8	9.9	19.8	42.4	18.9	100.0(243)	11.95	4.49	0.79
30대	4.2	8.3	7.1	23.2	42.3	14.9	100.0(168)		4.36	
40대	4.8	3.2	7.9	31.7	39.7	12.7	100.0(63)		4.37	
50대 이상	0.0	5.0	6.7	28.3	43.3	16.7	100.0(60)		4.60	
교육수준										
대졸 이하	3.1	5.9	9.3	20.7	42.4	18.6	100.0(387)	8.71	4.49	0.80
대학원 이상	3.5	6.9	5.6	29.9	42.4	11.8	100.0(144)		4.36	
거주지역										
대도시	4.3	7.0	10.0	23.7	39.6	15.4	100.0(371)	14.71	4.33	5.03**
중소도시	1.5	2.9	5.1	22.6	48.9	19.0	100.0(137)		4.72	
농어촌	0.0	12.0	4.0	20.0	40.0	24.0	100.0(25)		4.60	

주: ** p 〈.01

〈부표 2-62〉 한국인의 특성별 마약 및 밀수사범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4.7	6.0	9.3	9.8	16.7	15.8	18.6	12.6	6.0	0.5	100.0(215)	12.50	5.52	4.29*
여성	2.2	3.8	7.8	12.2	18.2	20.7	19.1	8.2	5.3	2.5	100.0(319)		5.69	
연령														
20대	3.3	3.3	7.8	11.1	16.9	17.3	18.9	11.9	7.4	2.1	100.0(243)	19.89	5.81	1.76
30대	3.6	6.5	10.7	9.5	19.6	20.2	16.1	7.7	4.2	1.8	100.0(168)		5.36	
40대	3.2	1.6	7.9	15.9	14.3	17.5	23.8	7.9	6.3	1.6	100.0(63)		5.73	
50대 이상	1.7	8.3	5.0	11.7	18.3	21.7	21.7	10.0	1.7	0.0	100.0(60)		5.48	
교육수준														
대졸 이하	2.3	5.4	7.8	9.8	17.3	20.4	17.3	10.9	7.0	1.8	100.0(387)	21.10*	5.74	0.00
대학원 이상	5.6	2.8	10.4	15.3	18.8	13.2	23.6	7.6	1.4	1.4	100.0(144)		5.29	
거주지역														
대도시	3.0	4.6	8.9	12.4	15.4	16.7	18.9	11.6	6.5	2.2	100.0(371)	25.66	5.70	0.86
중소도시	3.6	4.4	8.8	8.8	21.2	23.4	21.2	3.6	4.4	0.7	100.0(137)		5.44	
농어촌	4.0	8.0	0.0	8.0	28.0	24.0	8.0	20.0	0.0	0.0	100.0(25)		5.52	

주: * p 〈.05

〈부표 2-63〉 한국인의 특성별 도박사범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평균	*F*
성별										
남성	1.9	4.7	6.1	14.6	26.3	46.5	100.0(213)	2.75	4.98	0.07
여성	2.5	3.5	7.9	15.6	29.5	41.0	100.0(315)		4.89	
연령										
20대	0.8	4.6	10.0	16.2	27.4	41.1	100.0(241)	21.17	4.88	0.67
30대	3.6	3.6	3.6	13.9	25.3	50.0	100.0(166)		5.04	
40대	1.6	4.9	9.8	11.5	37.7	34.4	100.0(61)		4.82	
50대 이상	5.0	1.7	3.3	18.3	30.0	41.7	100.0(60)		4.92	
교육수준										
대졸 이하	2.1	4.7	7.6	15.4	27.9	42.4	100.0(384)	4.21	4.90	2.30
대학원 이상	2.8	1.4	5.7	14.2	29.8	46.1	100.0(141)		5.05	
거주지역										
대도시	2.7	4.9	7.6	15.3	26.4	43.1	100.0(367)	7.52	4.87	1.30
중소도시	1.5	1.5	5.2	15.6	32.6	43.7	100.0(135)		5.07	
농어촌	0.0	4.0	12.0	12.0	32.0	40.0	100.0(25)		4.92	

〈부표 2-64〉 한국인의 특성별 도박사범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6.6	8.0	14.1	9.4	20.2	11.3	16.0	8.5	4.7	1.4	100.0(213)	14.91#	5.07	3.51#
여성	3.2	5.7	9.5	9.5	23.8	17.8	12.4	12.7	4.8	0.6	100.0(315)		5.44	
연령														
20대	2.9	6.2	12.4	8.7	20.3	15.8	13.3	14.1	5.4	0.8	100.0(241)	27.88	5.46	2.41#
30대	6.6	9.0	10.8	10.8	24.7	15.1	10.2	8.4	3.0	1.2	100.0(166)		4.93	
40대	3.3	6.6	6.6	13.1	23.0	11.5	18.0	13.1	4.9	0.0	100.0(61)		5.48	
50대 이상	6.7	1.7	13.3	5.0	23.3	16.7	21.7	3.3	6.7	1.7	100.0(60)		5.42	
교육수준														
대졸 이하	3.9	6.5	11.2	9.4	20.3	14.6	14.3	13.0	5.7	1.0	100.0(384)	13.86	5.43	4.67*
대학원 이상	6.4	7.1	12.1	9.9	28.4	15.6	12.8	5.0	2.1	0.7	100.0(141)		4.87	
거주지역														
대도시	3.8	6.3	12.5	9.8	22.6	13.9	13.1	12.0	5.2	0.8	100.0(367)	20.70	5.32	0.15
중소도시	5.9	6.7	10.4	7.4	21.5	20.0	17.0	6.7	3.7	0.7	100.0(135)		5.21	
농어촌	8.0	12.0	0.0	16.0	20.0	8.0	8.0	20.0	4.0	4.0	100.0(25)		5.36	

주: # $p<.10$, * $p<.05$

〈부표 2-65〉 한국인의 특성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평균	*F*
성별												
남성	4.2	8.4	15.8	14.4	19.1	10.7	14.9	12.6	100.0(215)	21.02**	4.90	1.00
여성	9.4	15.4	16.9	11.0	17.2	13.5	11.0	5.6	100.0(319)		4.24	
연령												
20대	6.2	15.2	16.5	11.1	17.3	14.0	11.9	7.8	100.0(243)	16.83	4.47	0.50
30대	10.1	10.7	16.1	11.3	16.7	10.7	13.7	10.7	100.0(168)		4.54	
40대	6.3	12.7	14.3	20.6	20.6	9.5	12.7	3.2	100.0(63)		4.32	
50대 이상	5.0	6.7	20.0	11.7	21.7	13.3	11.7	10.0	100.0(60)		4.75	
교육수준												
대졸 이하	7.8	14.0	16.0	11.6	18.3	12.1	11.4	8.8	100.0(387)	6.25	4.45	1.05
대학원 이상	6.3	8.3	18.1	14.6	17.4	12.5	16.0	6.9	100.0(144)		4.65	
거주지역												
대도시	6.2	11.6	17.0	13.5	18.9	15.4	11.3	6.2	100.0(371)	30.68**	4.50	0.44
중소도시	9.5	16.1	13.9	10.9	17.5	5.1	14.6	12.4	100.0(137)		4.47	
농어촌	12.0	8.0	24.0	0.0	8.0	8.0	20.0	20.0	100.0(25)		4.88	

주: ** p 〈.01

〈부표 2-66〉 한국인의 특성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3.7	3.3	7.0	8.4	11.6	14.9	18.1	15.3	13.5	4.2	100.0(215)	25.19**	6.25	0.56
여성	1.3	2.5	3.8	5.0	11.0	13.8	12.5	21.3	15.7	13.2	100.0(319)		7.06	
연령														
20대	2.5	2.9	6.2	6.2	9.1	12.8	16.0	16.5	16.5	11.5	100.0(243)	27.64	6.81	0.54
30대	2.4	3.6	4.8	8.3	10.7	12.5	10.7	23.2	15.5	8.3	100.0(168)		6.69	
40대	0.0	1.6	1.6	4.8	12.7	20.6	19.0	23.8	9.5	6.3	100.0(63)		6.87	
50대 이상	3.3	1.7	5.0	3.3	20.0	18.3	16.7	11.7	11.7	8.3	100.0(60)		6.43	
교육수준														
대졸 이하	2.6	2.3	5.2	7.0	10.1	13.4	15.0	18.1	15.8	10.6	100.0(387)	6.94	6.79	0.99
대학원 이상	1.4	3.5	4.9	4.9	14.6	16.0	14.6	20.8	12.5	6.9	100.0(144)		6.62	
거주지역														
대도시	1.9	2.4	4.6	6.2	11.6	14.8	16.2	19.1	13.7	9.4	100.0(371)	11.93	6.77	0.12
중소도시	2.9	2.9	6.6	7.3	10.9	13.1	10.2	19.7	17.5	8.8	100.0(137)		6.66	
농어촌	4.0	8.0	4.0	4.0	8.0	12.0	20.0	8.0	16.0	16.0	100.0(25)		6.68	

주: ** p 〈.01

〈부표 2-67〉 한국인의 특성별 남녀 임금격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평균	*F*
성별												
남성	5.1	15.3	11.2	16.3	16.7	15.8	12.1	7.4	100.0(215)	20.37**	4.57	1.38
여성	11.3	17.2	17.2	19.1	13.2	10.7	8.2	3.1	100.0(319)		3.86	
연령												
20대	10.3	14.4	18.5	19.8	13.2	9.1	8.6	6.2	100.0(243)	21.83	4.04	0.91
30대	6.0	20.2	10.7	15.5	16.7	15.5	11.3	4.2	100.0(168)		4.29	
40대	11.1	17.5	14.3	14.3	17.5	15.9	6.3	3.2	100.0(63)		3.98	
50대 이상	8.3	13.3	11.7	21.7	11.7	16.7	13.3	3.3	100.0(60)		4.35	
교육수준												
대졸 이하	10.6	15.0	15.0	18.3	14.2	11.6	10.1	5.2	100.0(387)	9.87	4.12	0.59
대학원 이상	3.5	20.1	14.6	17.4	15.3	16.0	9.0	4.2	100.0(144)		4.26	
거주지역												
대도시	7.5	18.9	14.6	17.3	15.6	12.1	8.9	5.1	100.0(371)	16.20	4.12	0.58
중소도시	11.7	10.2	16.8	19.7	13.9	13.9	10.2	3.6	100.0(137)		4.15	
농어촌	12.0	16.0	4.0	20.0	4.0	16.0	20.0	8.0	100.0(25)		4.56	

주: ** p 〈.01

〈부표 2-68〉 한국인의 특성별 남녀 임금격차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2.3	6.0	4.2	5.6	9.8	12.1	22.3	17.2	13.5	7.0	100.0(215)	26.27**	6.56	1.49
여성	0.9	1.3	2.8	3.4	12.2	11.0	18.5	16.9	15.0	17.9	100.0(319)		7.32	
연령														
20대	1.2	4.1	3.7	2.9	10.3	10.7	21.0	14.8	15.6	15.6	100.0(243)	22.65	7.10	0.82
30대	2.4	2.4	3.6	5.4	12.5	10.1	15.5	21.4	14.9	11.9	100.0(168)		6.95	
40대	0.0	0.0	3.2	4.8	9.5	12.7	30.2	17.5	9.5	12.7	100.0(63)		7.16	
50대 이상	1.7	5.0	1.7	6.7	13.3	16.7	18.3	13.3	13.3	10.0	100.0(60)		6.65	
교육수준														
대졸 이하	1.6	3.6	3.1	3.9	11.6	10.1	20.9	15.8	14.2	15.2	100.0(387)	1044	7.05	0.48
대학원 이상	1.4	2.1	4.2	5.6	10.4	15.3	17.4	20.8	14.6	8.3	100.0(144)		6.87	
거주지역														
대도시	1.3	2.4	3.8	3.5	12.1	11.3	19.9	17.0	15.1	13.5	100.0(371)	16.83	7.06	0.42
중소도시	2.2	3.6	2.2	6.6	10.2	12.4	18.2	19.0	12.4	13.1	100.0(137)		6.91	
농어촌	0.0	12.0	4.0	4.0	4.0	8.0	32.0	8.0	12.0	16.0	100.0(25)		6.76	

주: ** p 〈.01

〈부표 2-69〉 한국인의 특성별 소득불평등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평균	*F*
성별												
남성	63.3	9.8	8.8	7.0	4.7	3.7	0.5	2.3	100.0(215)	10.31	2.05	1.33
여성	58.9	11.9	14.1	6.0	3.4	2.8	2.2	0.6	100.0(319)		2.03	
연령												
20대	59.3	11.5	10.3	8.6	4.1	3.3	2.1	0.8	100.0(243)	14.88	2.09	1.39
30대	57.7	10.7	14.9	5.4	3.6	4.2	1.2	2.4	100.0(168)		2.15	
40대	66.7	9.5	14.3	1.6	4.8	1.6	0.0	1.6	100.0(63)		1.81	
50대 이상	68.3	11.7	8.3	5.0	3.3	1.7	1.7	0.0	100.0(60)		1.75	
교육수준												
대졸 이하	57.6	11.9	13.2	6.7	4.7	3.1	1.8	1.0	100.0(387)	8.53	2.11	1.31
대학원 이상	68.8	9.0	9.0	4.9	2.1	3.5	0.7	2.1	100.0(144)		1.86	
거주지역												
대도시	62.5	10.8	11.1	5.9	3.8	2.7	1.6	1.6	100.0(371)	8.47	2.00	1.35
중소도시	57.7	11.7	14.6	7.3	3.6	3.6	0.7	0.7	100.0(137)		2.05	
농어촌	48.0	12.0	12.0	8.0	8.0	8.0	4.0	0.0	100.0(25)		2.56	

〈부표 2-70〉 한국인의 특성별 소득불평등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5	0.9	2.8	2.8	1.9	3.3	6.5	14.0	13.0	54.4	100.0(215)	6.48	8.69	5.21*
여성	0.3	0.3	2.2	0.9	0.6	4.4	6.9	15.4	15.0	53.9	100.0(319)		8.87	
연령														
20대	0.4	0.4	2.1	1.6	1.2	2.9	7.8	12.3	14.0	57.2	100.0(243)	29.25	8.89	0.80
30대	0.6	0.0	4.2	2.4	1.8	4.2	7.1	15.5	11.3	53.0	100.0(168)		8.62	
40대	0.0	1.6	1.6	0.0	0.0	3.2	6.3	15.9	25.4	46.0	100.0(63)		8.87	
50대 이상	0.0	1.7	0.0	1.7	0.0	8.3	1.7	21.7	11.7	53.3	100.0(60)		8.83	
교육수준														
대졸 이하	0.3	0.5	2.3	2.1	1.0	4.7	6.5	15.8	12.9	54.0	100.0(387)	5.98	8.77	0.55
대학원 이상	0.7	0.7	2.8	0.7	1.4	2.1	6.9	12.5	17.4	54.9	100.0(144)		8.86	
거주지역														
대도시	0.5	0.5	2.7	1.1	0.8	3.8	6.7	14.8	12.9	56.1	100.0(371)	17.77	8.84	0.73
중소도시	0.0	0.7	2.2	2.2	1.5	3.6	8.0	13.9	16.8	51.1	100.0(137)		8.75	
농어촌	0.0	0.0	0.0	8.0	4.0	8.0	0.0	20.0	20.0	40.0	100.0(25)		8.40	

주: * $p < .05$

〈부표 2-71〉 한국인의 특성별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평균	*F*
성별												
남성	7.9	17.7	16.3	14.9	14.9	14.9	8.4	5.1	100.0(215)	13.11	4.15	0.01
여성	5.6	13.2	10.3	20.1	17.6	12.9	11.0	9.4	100.0(319)		4.60	
연령												
20대	6.6	12.8	12.8	14.4	17.7	14.4	12.8	8.6	100.0(243)	19.81	4.61	1.66
30대	9.5	16.7	10.7	20.8	15.5	12.5	7.7	6.5	100.0(168)		4.17	
40대	1.6	15.9	17.5	22.2	14.3	11.1	11.1	6.3	100.0(63)		4.41	
50대 이상	3.3	18.3	13.3	20.0	16.7	16.7	3.3	8.3	100.0(60)		4.33	
교육수준												
대졸 이하	7.2	15.2	13.2	16.5	16.8	14.5	10.1	6.5	100.0(387)	6.29	4.36	0.00
대학원 이상	4.9	14.6	11.8	21.5	15.3	11.8	9.0	11.1	100.0(144)		4.55	
거주지역												
대도시	6.7	15.4	12.9	17.5	16.4	11.6	10.5	8.9	100.0(371)	8.43	4.43	0.12
중소도시	6.6	13.9	12.4	19.0	16.8	19.0	8.0	4.4	100.0(137)		4.36	
농어촌	4.0	16.0	12.0	20.0	12.0	16.0	12.0	8.0	100.0(25)		4.56	

〈부표 2-72〉 한국인의 특성별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9	1.9	4.2	7.4	11.6	10.2	16.7	21.4	14.9	10.7	100.0(215)	18.17*	6.96	1.13
여성	2.8	3.1	2.2	4.4	8.5	17.2	23.2	18.5	13.2	6.9	100.0(319)		6.77	
연령														
20대	1.6	2.9	2.9	5.3	10.3	15.6	21.0	17.7	14.4	8.2	100.0(243)	22.86	6.83	0.04
30대	1.2	3.6	4.2	7.7	8.3	11.9	18.5	20.2	12.5	11.9	100.0(168)		6.88	
40대	4.8	1.6	1.6	3.2	7.9	12.7	27.0	20.6	14.3	6.3	100.0(63)		6.87	
50대 이상	3.3	0.0	1.7	3.3	13.3	18.3	18.3	25.0	15.0	1.7	100.0(60)		6.78	
교육수준														
대졸 이하	2.1	2.6	2.6	6.2	9.3	14.0	19.1	19.1	15.2	9.8	100.0(387)	8.89	6.92	1.51
대학원 이상	2.1	2.1	4.2	4.2	10.4	16.0	25.0	20.8	10.4	4.9	100.0(144)		6.67	
거주지역														
대도시	2.4	3.0	3.8	5.4	8.6	14.6	19.7	18.9	15.1	8.6	100.0(371)	18.08	6.82	0.05
중소도시	0.7	2.2	0.0	6.6	12.4	16.1	22.6	21.9	9.5	8.0	100.0(137)		6.89	
농어촌	4.0	0.0	8.0	4.0	12.0	4.0	24.0	16.0	20.0	8.0	100.0(25)		6.84	

주: * p 〈.05

〈부표 2-73〉 한국인의 특성별 평균소득 75~150% 비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평균	F
성별												
남성	6.0	24.7	18.6	12.6	18.1	9.8	6.5	3.7	100.0(215)	6.42	3.86	0.01
여성	6.3	18.2	14.7	16.0	21.6	10.3	7.8	5.0	100.0(319)		4.16	
연령												
20대	7.0	21.8	12.3	15.2	20.6	10.3	7.8	4.9	100.0(243)	16.49	4.07	0.60
30대	6.5	20.2	19.6	13.1	19.6	11.9	7.1	1.8	100.0(168)		3.92	
40대	3.2	20.6	22.2	17.5	17.5	7.9	6.3	4.8	100.0(63)		3.98	
50대 이상	5.0	18.3	16.7	13.3	23.3	6.7	6.7	10.0	100.0(60)		4.28	
교육수준												
대졸 이하	7.0	19.6	16.0	15.0	19.9	10.3	8.0	4.1	100.0(387)	4.33	4.05	0.03
대학원 이상	4.2	24.3	16.7	13.2	21.5	9.0	5.6	5.6	100.0(144)		4.01	
거주지역												
대도시	6.7	22.6	14.8	14.8	18.3	9.4	8.1	5.1	100.0(371)	25.86*	4.02	4.85**
중소도시	5.1	19.0	21.2	15.3	21.9	10.2	5.8	1.5	100.0(137)		3.91	
농어촌	4.0	0.0	12.0	8.0	40.0	20.0	4.0	12.0	100.0(25)		5.16	

주: * p 〈.05, ** p 〈.01

〈부표 2-74〉 한국인의 특성별 평균소득 75~150% 비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9	0.5	1.9	4.2	14.9	10.7	17.7	20.5	16.7	12.1	100.0(215)	7.47	7.22	0.00
여성	1.6	1.3	2.5	5.0	9.1	14.4	17.9	22.3	15.7	10.3	100.0(319)		7.11	
연령														
20대	1.2	0.4	2.1	4.5	12.8	13.6	15.2	21.8	16.9	11.5	100.0(243)	26.09	7.20	0.43
30대	0.6	1.2	1.2	6.0	12.5	13.7	15.5	22.6	14.3	12.5	100.0(168)		7.18	
40대	1.6	1.6	3.2	3.2	9.5	9.5	20.6	25.4	14.3	11.1	100.0(63)		7.19	
50대 이상	3.3	1.7	5.0	3.3	5.0	11.7	31.7	13.3	20.0	5.0	100.0(60)		6.88	
교육수준														
대졸 이하	1.0	1.0	1.6	4.9	12.9	12.9	16.5	20.9	17.1	11.1	100.0(387)	9.57	7.17	0.07
대학원 이상	2.1	0.7	4.2	4.2	6.9	13.2	20.8	22.9	13.9	11.1	100.0(144)		7.12	
거주지역														
대도시	1.6	0.5	3.0	4.3	11.1	12.7	18.1	20.2	17.5	11.1	100.0(371)	27.48#	7.16	1.77
중소도시	0.7	2.2	0.7	5.8	8.0	13.1	17.5	26.3	13.9	11.7	100.0(137)		7.24	
농어촌	0.0	0.0	0.0	4.0	36.0	16.0	16.0	16.0	8.0	4.0	100.0(25)		6.44	

주: # p<.10

〈부표 2-75〉 한국인의 특성별 지역간 소득격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평균	F
성별												
남성	7.9	15.8	14.9	20.5	7.0	23.7	8.8	1.4	100.0(215)	7.40	4.16	0.49
여성	6.3	17.2	12.9	15.0	11.3	27.3	7.5	2.5	100.0(319)		4.32	
연령												
20대	8.6	17.7	13.6	16.0	9.5	26.3	6.2	2.1	100.0(243)	25.74	4.14	1.49
30대	6.5	13.7	14.3	19.6	11.9	26.2	6.0	1.8	100.0(168)		4.28	
40대	6.3	14.3	7.9	15.9	9.5	27.0	14.3	4.8	100.0(63)		4.70	
50대 이상	1.7	23.3	18.3	16.7	3.3	21.7	15.0	0.0	100.0(60)		4.22	
교육수준												
대졸 이하	7.0	16.0	12.7	17.8	8.8	27.9	8.3	1.6	100.0(387)	6.25	4.30	0.00
대학원 이상	6.9	18.8	16.0	16.0	11.1	20.8	6.9	3.5	100.0(144)		4.13	
거주지역												
대도시	7.0	15.1	15.4	17.8	10.0	25.3	7.3	2.2	100.0(371)	10.46	4.25	0.12
중소도시	7.3	19.7	8.0	17.5	8.8	27.0	9.5	2.2	100.0(137)		4.31	
농어촌	4.0	24.0	20.0	8.0	8.0	24.0	12.0	0.0	100.0(25)		4.12	

〈부표 2-76〉 한국인의 특성별 지역간 소득격차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1.4	1.4	1.9	8.4	13.0	11.2	18.6	18.1	14.0	12.1	100.0(215)	15.52#	6.97	0.65
여성	0.0	0.3	2.8	6.0	17.9	14.7	14.1	18.2	17.6	8.5	100.0(319)		6.97	
연령														
20대	0.4	0.8	1.6	8.2	12.8	12.8	13.2	20.6	17.3	12.3	100.0(243)	31.62	7.16	1.41
30대	1.2	0.0	4.2	5.4	17.9	12.5	18.5	18.5	12.5	9.5	100.0(168)		6.84	
40대	0.0	3.2	1.6	3.2	19.0	17.5	22.2	12.7	15.9	4.8	100.0(63)		6.71	
50대 이상	0.0	0.0	1.7	10.0	20.0	13.3	13.3	13.3	21.7	6.7	100.0(60)		6.87	
교육수준														
대졸 이하	0.3	0.8	2.6	7.2	16.0	14.2	16.0	17.3	16.0	9.6	100.0(387)	4.46	6.94	0.15
대학원 이상	1.4	0.7	2.1	5.6	16.0	11.1	15.3	20.1	16.7	11.1	100.0(144)		7.07	
거주지역														
대도시	0.5	0.8	2.4	7.0	15.9	13.5	15.6	18.3	15.1	10.8	100.0(371)	6.71	6.98	0.15
중소도시	0.7	0.7	2.9	7.3	14.6	13.1	18.2	16.1	18.2	8.0	100.0(137)		6.93	
농어촌	0.0	0.0	0.0	4.0	24.0	12.0	8.0	24.0	20.0	8.0	100.0(25)		7.16	

주: # $p<.10$

〈부표 2-77〉 한국인의 특성별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평균	*F*
성별												
남성	3.7	7.0	8.8	9.3	13.0	14.4	37.2	6.5	100.0(215)	4.02	5.46	2.41
여성	1.6	5.6	10.0	8.5	11.6	16.9	39.5	6.3	100.0(319)		5.63	
연령												
20대	1.2	4.9	10.7	9.5	11.9	14.4	38.7	8.6	100.0(243)	14.47	5.67	0.72
30대	3.0	7.1	8.3	8.9	11.9	14.3	41.1	5.4	100.0(168)		5.54	
40대	3.2	7.9	9.5	7.9	11.1	23.8	33.3	3.2	100.0(63)		5.37	
50대 이상	5.0	6.7	8.3	6.7	15.0	18.3	36.7	3.3	100.0(60)		5.38	
교육수준												
대졸 이하	1.8	6.7	9.0	9.3	12.9	13.7	39.8	6.7	100.0(387)	1072	5.59	0.03
대학원 이상	4.2	4.2	11.1	7.6	10.4	22.2	35.4	4.9	100.0(144)		5.49	
거주지역												
대도시	2.2	4.3	10.0	9.4	12.7	15.9	38.8	6.7	100.0(371)	32.71**	5.63	8.22***
중소도시	2.2	8.0	8.0	5.1	11.7	18.2	41.6	5.1	100.0(137)		5.63	
농어촌	8.0	24.0	12.0	20.0	8.0	4.0	16.0	8.0	100.0(25)		4.12	

주: ** p 〈.01, *** p 〈.001

〈부표 2-78〉 한국인의 특성별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4.2	2.3	8.8	14.0	13.5	16.3	17.2	11.2	6.5	6.0	100.0(215)	18.78*	5.85	8.86**
여성	0.6	2.2	5.3	16.9	16.3	21.6	13.2	14.7	6.0	3.1	100.0(319)		5.95	
연령														
20대	1.2	2.9	5.3	15.6	15.2	20.6	17.3	11.9	7.0	2.9	100.0(243)	27.26	5.93	0.96
30대	4.2	1.8	10.7	14.9	15.5	15.5	14.3	12.5	4.8	6.0	100.0(168)		5.72	
40대	1.6	1.6	4.8	11.1	15.9	23.8	12.7	17.5	7.9	3.2	100.0(63)		6.17	
50대 이상	0.0	1.7	3.3	23.3	13.3	21.7	8.3	16.7	5.0	6.7	100.0(60)		6.07	
교육수준														
대졸 이하	1.8	2.3	6.5	16.0	15.5	20.9	14.2	12.1	7.0	3.6	100.0(387)	6.68	5.89	1.19
대학원 이상	2.8	2.1	6.9	15.3	13.9	16.0	16.7	16.0	4.2	6.3	100.0(144)		5.99	
거주지역														
대도시	2.2	2.2	6.7	16.4	15.6	19.9	14.8	13.2	4.6	4.3	100.0(371)	24.43	5.84	6.36**
중소도시	2.2	2.9	8.0	15.3	14.6	18.2	14.6	13.9	8.0	2.2	100.0(137)		5.83	
농어촌	0.0	0.0	0.0	8.0	12.0	20.0	12.0	12.0	20.0	16.0	100.0(25)		7.32	

주: * p 〈.05, ** p 〈.01

〈부표 2-79〉 한국인의 특성별 영호남 지역격차 계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평균	*F*
성별												
남성	1.4	1.4	5.6	5.2	6.6	7.0	11.3	61.5	100.0(213)	4.18	6.88	7.10
여성	0.6	1.3	3.8	4.4	4.4	5.7	13.0	66.7	100.0(315)		7.13	
연령												
20대	0.8	1.7	5.5	5.5	5.9	8.4	11.8	60.5	100.0(238)	19.81	6.89	1.85
30대	0.0	0.6	5.4	5.4	4.2	4.8	12.0	67.7	100.0(167)		7.14	
40대	1.6	1.6	0.0	0.0	6.3	3.2	15.9	71.4	100.0(63)		7.38	
50대 이상	3.3	1.7	3.3	5.0	5.0	5.0	11.7	65.0	100.0(60)		6.93	
교육수준												
대졸 이하	1.0	1.6	5.0	4.7	4.7	6.8	10.5	65.7	100.0(382)	8.26	7.01	3.10#
대학원 이상	0.7	0.7	2.8	4.9	6.9	4.2	17.4	62.5	100.0(144)		7.11	
거주지역												
대도시	0.8	1.4	4.4	3.8	4.4	7.7	13.4	64.2	100.0(366)	32.48**	7.07	4.73**
중소도시	0.0	1.5	5.1	5.1	6.6	2.9	9.6	69.1	100.0(136)		7.10	
농어촌	8.0	0.0	4.0	16.0	12.0	4.0	12.0	44.0	100.0(25)		6.04	

주: # p<.10, ** p 〈.01

〈부표 2-80〉 한국인의 특성별 영호남 지역격차 계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10.8	10.3	20.2	10.8	17.4	8.0	9.9	7.5	1.9	3.3	100.0(213)	19.08*	4.49	3.87#
여성	3.8	9.2	22.5	12.1	15.9	14.3	10.8	7.3	3.2	1.0	100.0(315)		4.75	
연령														
20대	3.4	8.8	20.6	10.9	15.1	14.3	12.6	9.2	2.9	2.1	100.0(238)	34.11	4.97	3.85*
30대	12.0	12.6	19.2	12.6	15.6	11.4	8.4	4.2	2.4	1.8	100.0(167)		4.23	
40대	3.2	12.7	22.2	12.7	20.6	9.5	7.9	7.9	1.6	1.6	100.0(63)		4.56	
50대 이상	8.3	1.7	31.7	10.0	20.0	5.0	10.0	8.3	3.3	1.7	100.0(60)		4.60	
교육수준														
대졸 이하	7.1	8.9	23.0	11.0	15.7	12.8	8.6	8.1	2.9	1.8	100.0(382)	10.777	4.63	0.32
대학원 이상	5.6	11.8	18.1	12.5	18.8	9.0	15.3	4.9	2.1	2.1	100.0(144)		4.67	
거주지역														
대도시	6.3	9.6	22.1	11.7	16.7	12.0	9.6	6.8	3.3	1.9	100.0(366)	21.27	4.64	0.97
중소도시	8.8	9.6	22.1	8.8	15.4	13.2	11.8	8.8	0.7	0.7	100.0(136)		4.53	
농어촌	0.0	12.0	12.0	24.0	20.0	0.0	12.0	8.0	4.0	8.0	100.0(25)		5.20	

주: # p<.10, * p 〈.05

〈부표 2-81〉 한국인의 특성별 원유가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평균	*F*
성별												
남성	12.6	8.8	14.9	16.3	15.8	12.1	9.3	10.2	100.0(215)	1048	4.39	0.21
여성	10.7	17.2	17.2	11.9	14.4	9.4	10.0	9.1	100.0(319)		4.16	
연령												
20대	12.8	13.2	15.6	11.9	14.8	12.8	10.3	8.6	100.0(243)	13.42	4.26	0.03
30대	12.5	13.1	16.7	14.3	14.3	7.7	10.1	11.3	100.0(168)		4.25	
40대	9.5	17.5	14.3	11.1	15.9	12.7	9.5	9.5	100.0(63)		4.30	
50대 이상	5.0	15.0	20.0	21.7	16.7	6.7	6.7	8.3	100.0(60)		4.18	
교육수준												
대졸 이하	11.4	12.1	19.1	15.5	14.7	11.6	7.0	8.5	100.0(387)	27.64	4.16	10.30**
대학원 이상	11.8	18.1	9.0	8.3	16.0	7.6	17.4	11.8	100.0(144)		4.50	
거주지역												
대도시	11.3	12.4	15.6	14.6	15.6	10.2	10.2	10.0	100.0(371)	8.70	4.32	1.30
중소도시	11.7	17.5	16.1	11.7	13.9	11.7	8.0	9.5	100.0(137)		4.13	
농어촌	12.0	16.0	28.0	12.0	12.0	8.0	12.0	0.0	100.0(25)		3.68	

주: ** p 〈.01

〈부표 2-82〉 한국인의 특성별 원유가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0	0.9	3.3	5.6	9.8	12.6	18.6	19.1	14.0	16.3	100.0(215)	9.59	7.29	1.23
여성	0.3	0.9	2.8	5.6	7.8	12.5	13.8	14.7	21.6	19.7	100.0(319)		7.54	
연령														
20대	0.0	1.6	2.5	4.5	9.1	13.6	13.2	14.4	20.2	21.0	100.0(243)	33.42	7.54	0.39
30대	0.0	0.6	3.0	6.5	10.7	11.3	14.3	20.2	14.9	18.5	100.0(168)		7.38	
40대	1.6	0.0	3.2	6.3	4.8	15.9	17.5	12.7	25.4	12.7	100.0(63)		7.35	
50대 이상	0.0	0.0	5.0	6.7	5.0	8.3	28.3	18.3	15.0	13.3	100.0(60)		7.30	
교육수준														
대졸 이하	0.0	0.8	2.6	4.9	7.5	12.4	15.2	17.6	19.4	19.6	100.0(387)	10.66	7.59	1.06
대학원 이상	0.7	0.7	4.2	7.6	11.8	13.2	17.4	13.2	16.7	14.6	100.0(144)		7.06	
거주지역														
대도시	0.3	0.5	2.7	6.5	9.7	12.9	16.2	15.1	19.1	17.0	100.0(371)	16.53	7.37	1.37
중소도시	0.0	2.2	3.6	3.6	6.6	11.7	17.5	17.5	16.8	20.4	100.0(137)		7.51	
농어촌	0.0	0.0	4.0	4.0	4.0	12.0	0.0	28.0	20.0	28.0	100.0(25)		8.04	

〈부표 2-83〉 한국인의 특성별 소비자물가지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평균	*F*
성별												
남성	23.7	27.0	17.7	10.2	8.8	6.5	4.7	1.4	100.0(215)	9.51	2.99	1.22
여성	32.6	20.7	16.9	10.7	5.0	6.0	6.0	2.2	100.0(319)		2.87	
연령												
20대	29.6	25.5	15.6	9.5	4.5	7.4	5.3	2.5	100.0(243)	23.52	2.90	0.47
30대	26.8	22.6	17.9	10.7	10.1	5.4	5.4	1.2	100.0(168)		2.98	
40대	27.0	22.2	27.0	11.1	7.9	0.0	4.8	0.0	100.0(63)		2.70	
50대 이상	35.0	16.7	11.7	13.3	3.3	10.0	6.7	3.3	100.0(60)		3.07	
교육수준												
대졸 이하	29.2	24.5	17.1	9.8	7.0	5.7	5.2	1.6	100.0(387)	4.06	2.86	1.29
대학원 이상	27.8	19.4	18.1	12.5	5.6	7.6	6.3	2.8	100.0(144)		3.10	
거주지역												
대도시	28.8	24.3	17.5	9.4	5.7	7.3	4.9	2.2	100.0(371)	11.49	2.91	1.48
중소도시	27.7	19.0	17.5	13.9	8.8	4.4	7.3	1.5	100.0(137)		3.07	
농어촌	36.0	32.0	12.0	8.0	8.0	0.0	4.0	0.0	100.0(25)		2.36	

〈부표 2-84〉 한국인의 특성별 소비자물가지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0	0.5	0.0	2.8	5.1	5.1	13.0	20.5	20.9	32.1	100.0(215)	6.53	8.33	1.19
여성	0.6	0.3	1.3	3.1	4.4	4.7	10.0	17.9	21.3	36.4	100.0(319)		8.36	
연령														
20대	0.8	0.0	0.4	1.6	5.8	5.8	9.1	16.9	21.4	38.3	100.0(243)	24.63	8.46	1.07
30대	0.0	0.0	1.2	4.2	4.2	4.2	12.5	19.6	19.6	34.5	100.0(168)		8.33	
40대	0.0	1.6	0.0	4.8	1.6	3.2	11.1	23.8	25.4	28.6	100.0(63)		8.32	
50대 이상	0.0	1.7	1.7	3.3	5.0	5.0	16.7	20.0	20.0	26.7	100.0(60)		8.00	
교육수준														
대졸 이하	0.5	0.0	0.8	1.8	4.9	4.9	10.1	19.9	18.3	38.8	100.0(387)	28.33**	8.47	0.78
대학원 이상	0.0	1.4	0.7	6.3	4.2	4.9	14.6	16.7	28.5	22.9	100.0(144)		8.01	
거주지역														
대도시	0.5	0.3	0.5	2.4	4.6	4.6	11.3	18.6	23.7	33.4	100.0(371)	12.46	8.39	2.14
중소도시	0.0	0.7	1.5	5.1	5.1	5.8	11.7	20.4	14.6	35.0	100.0(137)		8.14	
농어촌	0.0	0.0	0.0	0.0	4.0	4.0	8.0	16.0	20.0	48.0	100.0(25)		8.88	

주: ** p 〈.01

〈부표 2-85〉 한국인의 특성별 신용불량자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평균	*F*
성별												
남성	3.7	14.0	13.0	11.2	13.0	15.3	11.6	18.1	100.0(215)	4.78	4.99	0.02
여성	5.6	9.7	14.7	12.5	13.2	14.4	9.1	20.7	100.0(319)		5.01	
연령												
20대	4.9	12.8	15.6	8.6	14.4	13.6	8.2	21.8	100.0(243)	25.80	4.98	0.67
30대	5.4	8.9	13.1	15.5	14.9	16.1	11.9	14.3	100.0(168)		4.93	
40대	4.8	9.5	9.5	17.5	3.2	19.0	7.9	28.6	100.0(63)		5.37	
50대 이상	3.3	15.0	15.0	10.0	13.3	11.7	15.0	16.7	100.0(60)		4.93	
교육수준												
대졸 이하	4.4	12.9	13.7	12.1	13.4	15.8	9.8	17.8	100.0(387)	8.49	4.93	1.31
대학원 이상	6.3	6.9	15.3	11.8	11.8	11.8	11.1	25.0	100.0(144)		5.21	
거주지역												
대도시	4.9	10.5	15.1	11.6	14.0	13.7	9.2	21.0	100.0(371)	8.82	5.02	0.04
중소도시	5.1	12.4	12.4	12.4	10.2	19.0	12.4	16.1	100.0(137)		4.97	
농어촌	4.0	16.0	8.0	16.0	16.0	8.0	12.0	20.0	100.0(25)		4.96	

〈부표 2-86〉 한국인의 특성별 신용불량자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1.9	1.9	7.9	7.4	14.4	11.2	17.2	14.0	13.5	10.7	100.0(215)	8.58	6.59	6.93**
여성	0.6	1.6	6.0	3.8	13.8	14.1	20.4	16.6	14.4	8.8	100.0(319)		6.83	
연령														
20대	1.2	0.8	4.9	6.2	16.0	10.3	18.1	14.8	15.6	11.9	100.0(243)	36.27	6.90	1.75
30대	0.0	1.2	7.7	5.4	11.3	17.3	20.8	13.7	12.5	10.1	100.0(168)		6.76	
40대	3.2	3.2	6.3	1.6	17.5	7.9	25.4	19.0	11.1	4.8	100.0(63)		6.48	
50대 이상	1.7	5.0	11.7	5.0	10.0	16.7	11.7	20.0	15.0	3.3	100.0(60)		6.27	
교육수준														
대졸 이하	1.0	1.3	5.7	5.2	14.2	11.6	19.6	15.0	15.0	11.4	100.0(387)	12.33	6.88	0.06
대학원 이상	1.4	2.8	9.7	5.6	13.9	16.7	17.4	16.7	11.1	4.9	100.0(144)		6.31	
거주지역														
대도시	1.1	1.6	6.2	4.6	14.0	14.3	19.7	14.6	14.3	9.7	100.0(371)	12.10	6.77	0.22
중소도시	1.5	1.5	8.8	5.8	13.1	10.9	19.7	16.8	13.9	8.0	100.0(137)		6.63	
농어촌	0.0	4.0	4.0	12.0	20.0	4.0	8.0	24.0	12.0	12.0	100.0(25)		6.68	

주: ** $p < .01$

〈부표 2-87〉 한국인의 특성별 경제성장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평균	*F*
성별												
남성	15.8	9.3	12.1	13.5	10.7	14.0	16.7	7.9	100.0(215)	11.55	4.42	0.26
여성	20.1	11.9	12.5	11.0	16.0	11.6	9.4	7.5	100.0(319)		4.01	
연령												
20대	19.8	10.7	14.0	12.3	14.0	9.9	11.1	8.2	100.0(243)	21.74	4.05	0.78
30대	18.5	8.9	12.5	16.1	11.3	13.7	12.5	6.5	100.0(168)		4.17	
40대	14.3	14.3	7.9	7.9	19.0	11.1	14.3	11.1	100.0(63)		4.49	
50대 이상	16.7	13.3	10.0	3.3	15.0	21.7	15.0	5.0	100.0(60)		4.37	
교육수준												
대졸 이하	18.1	9.8	12.1	12.9	14.7	12.9	11.6	7.8	100.0(387)	4.44	4.20	1.68
대학원 이상	19.4	13.9	11.8	9.7	11.1	11.8	14.6	7.6	100.0(144)		4.11	
거주지역												
대도시	19.7	11.6	11.6	11.9	12.9	11.1	13.2	8.1	100.0(371)	10.07	4.13	0.22
중소도시	16.8	8.8	13.1	11.7	17.5	14.6	10.9	6.6	100.0(137)		4.25	
농어촌	8.0	12.0	20.0	16.0	8.0	20.0	8.0	8.0	100.0(25)		4.36	

〈부표 2-88〉 한국인의 특성별 경제성장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5	1.4	3.7	5.1	11.6	16.7	15.3	17.2	13.0	15.3	100.0(215)	13.07	7.09	0.00
여성	0.6	2.2	2.2	3.4	8.5	11.0	14.1	17.6	21.3	19.1	100.0(319)		7.56	
연령														
20대	0.4	2.1	3.3	3.3	7.0	11.1	15.2	17.3	21.0	19.3	100.0(243)	26.13	7.56	1.95
30대	0.6	2.4	1.8	4.8	10.1	13.1	13.7	20.8	13.7	19.0	100.0(168)		7.35	
40대	1.6	0.0	4.8	4.8	9.5	17.5	17.5	12.7	19.0	12.7	100.0(63)		7.10	
50대 이상	0.0	1.7	1.7	5.0	20.0	18.3	11.7	13.3	16.7	11.7	100.0(60)		6.93	
교육수준														
대졸 이하	0.5	1.8	3.1	4.1	8.8	12.9	15.5	17.8	17.6	17.8	100.0(387)	3.20	7.39	0.31
대학원 이상	0.7	2.1	2.1	4.2	12.5	14.6	12.5	16.0	18.8	16.7	100.0(144)		7.28	
거주지역														
대도시	0.8	2.2	3.8	3.2	9.7	12.9	14.6	16.2	17.3	19.4	100.0(371)	17.78	7.36	0.02
중소도시	0.0	1.5	0.7	7.3	8.8	13.9	15.3	18.2	19.7	14.6	100.0(137)		7.38	
농어촌	0.0	0.0	0.0	0.0	16.0	16.0	12.0	28.0	20.0	8.0	100.0(25)		7.44	

〈부표 2-89〉 한국인의 특성별 환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평균	*F*
성별												
남성	7.4	11.2	11.6	13.5	14.9	19.1	14.9	7.4	100.0(215)	4.28	4.71	0.61
여성	5.0	9.1	12.5	16.3	15.4	15.7	16.6	9.4	100.0(319)		4.88	
연령												
20대	7.4	9.1	10.7	17.7	13.6	15.6	18.1	7.8	100.0(243)	19.01	4.79	0.28
30대	4.2	13.1	14.9	10.1	16.1	17.9	14.3	9.5	100.0(168)		4.79	
40대	6.3	6.3	11.1	17.5	23.8	17.5	11.1	6.3	100.0(63)		4.75	
50대 이상	5.0	8.3	11.7	16.7	10.0	20.0	16.7	11.7	100.0(60)		5.03	
교육수준												
대졸 이하	7.2	9.8	11.4	12.4	15.2	17.3	17.6	9.0	100.0(387)	14.22*	4.86	3.97*
대학원 이상	2.8	10.4	14.6	22.2	15.3	16.0	11.1	7.6	100.0(144)		4.67	
거주지역												
대도시	6.2	10.2	12.7	17.3	15.4	14.3	16.2	7.8	100.0(371)	13.86	4.72	1.36
중소도시	5.1	10.2	10.9	8.8	15.3	23.4	15.3	10.9	100.0(137)		5.05	
농어촌	8.0	4.0	12.0	20.0	12.0	24.0	12.0	8.0	100.0(25)		4.84	

주: * p 〈.05

〈부표 2-90〉 한국인의 특성별 환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0	1.4	4.7	8.8	8.4	14.0	24.2	14.9	11.6	12.1	100.0(215)	17.07*	6.92	0.01
여성	0.9	0.9	1.3	8.2	11.6	15.0	16.6	22.6	11.3	11.6	100.0(319)		7.02	
연령														
20대	0.0	2.1	2.5	7.8	9.9	15.6	17.7	17.7	11.9	14.8	100.0(243)	26.86	7.07	0.91
30대	1.2	0.6	3.0	7.7	8.9	14.3	21.4	21.4	11.9	9.5	100.0(168)		6.96	
40대	1.6	0.0	1.6	11.1	4.8	15.9	20.6	23.8	9.5	11.1	100.0(63)		7.02	
50대 이상	0.0	0.0	3.3	10.0	21.7	10.0	21.7	16.7	10.0	6.7	100.0(60)		6.60	
교육수준														
대졸 이하	0.3	1.6	2.3	9.6	10.9	13.2	18.9	18.6	11.4	13.4	100.0(387)	14.06	6.99	3.02#
대학원 이상	1.4	0.0	3.5	5.6	9.0	18.1	21.5	22.2	11.8	6.9	100.0(144)		6.92	
거주지역														
대도시	0.3	1.6	1.9	8.9	10.2	14.0	19.9	19.4	11.9	11.9	100.0(371)	13.02	7.00	0.42
중소도시	1.5	0.0	5.1	7.3	10.9	14.6	19.7	19.0	10.9	10.9	100.0(137)		6.86	
농어촌	0.0	0.0	0.0	8.0	8.0	24.0	16.0	20.0	8.0	16.0	100.0(25)		7.20	

주: # p<.10, * p 〈.05

〈부표 2-91〉 한국인의 특성별 외채비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평균	*F*
성별												
남성	5.1	7.4	9.8	13.5	13.5	15.3	17.7	17.7	100.0(215)	7.69	5.28	4.53*
여성	4.1	3.4	6.9	13.2	14.4	18.2	22.3	17.6	100.0(319)		5.62	
연령												
20대	4.1	7.4	7.4	14.8	11.9	17.3	16.9	20.2	100.0(243)	26.41	5.43	3.36*
30대	3.0	1.2	7.7	10.7	14.9	19.6	23.2	19.6	100.0(168)		5.83	
40대	7.9	4.8	9.5	15.9	14.3	14.3	22.2	11.1	100.0(63)		5.11	
50대 이상	6.7	6.7	10.0	11.7	20.0	11.7	25.0	8.3	100.0(60)		5.08	
교육수준												
대졸 이하	4.1	5.2	7.2	12.9	13.2	17.1	21.4	18.9	100.0(387)	3.97	5.57	0.00
대학원 이상	5.6	4.9	9.7	13.9	16.7	16.7	18.1	14.6	100.0(144)		5.26	
거주지역												
대도시	4.6	5.7	7.3	11.9	13.5	20.5	18.9	17.8	100.0(371)	21.52#	5.50	2.36#
중소도시	4.4	4.4	10.9	18.2	14.6	8.8	23.4	15.3	100.0(137)		5.31	
농어촌	4.0	0.0	4.0	4.0	20.0	12.0	28.0	28.0	100.0(25)		6.24	

주: * p 〈.05

〈부표 2-92〉 한국인의 특성별 외채비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1.4	0.5	10.2	7.4	12.1	16.3	21.9	13.5	7.9	8.8	100.0(215)	13.27	6.41	2.08
여성	0.6	0.9	6.0	9.1	14.7	17.6	18.8	18.2	10.0	4.1	100.0(319)		6.44	
연령														
20대	0.4	1.6	8.2	9.1	11.5	16.0	16.5	19.3	9.9	7.4	100.0(243)	45.33*	6.51	1.43
30대	1.2	0.0	10.7	6.5	16.7	14.9	27.4	11.9	7.7	3.0	100.0(168)		6.18	
40대	1.6	0.0	3.2	4.8	17.5	17.5	15.9	23.8	11.1	4.8	100.0(63)		6.71	
50대 이상	1.7	0.0	1.7	15.0	10.0	26.7	18.3	8.3	8.3	10.0	100.0(60)		6.47	
교육수준														
대졸 이하	1.0	1.0	7.8	8.5	14.2	18.3	18.1	15.0	9.6	6.5	100.0(387)	7.32	6.39	1.23
대학원 이상	0.7	0.0	7.6	8.3	12.5	13.9	25.7	18.1	8.3	4.9	100.0(144)		6.51	
거주지역														
대도시	1.3	1.1	7.5	9.2	14.6	16.2	19.4	14.8	10.0	5.9	100.0(371)	23.13	6.36	2.66#
중소도시	0.0	0.0	6.6	5.1	10.2	21.2	21.9	21.2	8.8	5.1	100.0(137)		6.71	
농어촌	0.0	0.0	16.0	16.0	20.0	8.0	20.0	8.0	0.0	12.0	100.0(25)		5.84	

주: # p<.10, * p 〈.05

〈부표 2-93〉 한국인의 특성별 가계 부채비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평균	*F*
성별												
남성	31.6	15.3	11.6	10.7	7.9	8.4	9.3	5.1	100.0(215)	14.60*	3.36	1.60
여성	20.1	20.4	8.8	15.0	11.9	10.7	9.1	4.1	100.0(319)		3.67	
연령												
20대	20.6	15.2	11.1	13.2	13.2	7.4	12.3	7.0	100.0(243)	28.54	3.90	3.95**
30대	28.0	23.2	7.1	14.9	7.1	10.7	6.0	3.0	100.0(168)		3.21	
40대	28.6	17.5	9.5	11.1	9.5	12.7	9.5	1.6	100.0(63)		3.40	
50대 이상	28.3	18.3	13.3	11.7	8.3	13.3	5.0	1.7	100.0(60)		3.22	
교육수준												
대졸 이하	24.3	18.6	9.8	13.4	10.3	8.0	10.9	4.7	100.0(387)	10.30	3.58	0.98
대학원 이상	25.7	18.1	10.4	13.2	10.4	14.6	4.2	3.5	100.0(144)		3.42	
거주지역												
대도시	23.5	16.2	10.5	14.3	11.1	9.4	10.2	4.9	100.0(371)	10.59	3.67	2.14
중소도시	27.7	24.8	8.8	10.2	8.0	10.2	6.6	3.6	100.0(137)		3.21	
농어촌	28.0	16.0	4.0	16.0	12.0	12.0	8.0	4.0	100.0(25)		3.56	

주: * p 〈.05, ** p 〈.01

〈부표 2-94〉 한국인의 특성별 가계 부채비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9	0.9	1.4	5.6	7.4	5.1	13.5	14.4	21.4	29.3	100.0(215)	14.01	7.93	2.83#
여성	0.0	0.0	1.3	5.0	7.5	9.7	13.8	20.4	17.9	24.5	100.0(319)		7.85	
연령														
20대	0.8	0.4	1.6	6.6	8.6	9.9	12.8	16.0	18.9	24.3	100.0(243)	17.91	7.66	1.94
30대	0.0	0.6	1.2	4.2	7.1	6.0	11.3	19.0	18.5	32.1	100.0(168)		8.12	
40대	0.0	0.0	0.0	4.8	6.3	4.8	20.6	20.6	22.2	20.6	100.0(63)		7.95	
50대 이상	0.0	0.0	1.7	3.3	5.0	8.3	16.7	20.0	20.0	25.0	100.0(60)		8.00	
교육수준														
대졸 이하	0.5	0.5	1.6	5.2	7.8	7.8	12.9	16.0	18.6	29.2	100.0(387)	9.76	7.90	5.54*
대학원 이상	0.0	0.0	0.7	4.9	6.9	8.3	16.0	22.9	20.8	19.4	100.0(144)		7.83	
거주지역														
대도시	0.3	0.5	0.8	5.7	8.1	7.5	14.3	18.3	19.9	24.5	100.0(371)	19.91	7.84	0.74
중소도시	0.7	0.0	2.2	4.4	6.6	8.0	8.8	19.7	18.2	31.4	100.0(137)		8.03	
농어촌	0.0	0.0	4.0	4.0	4.0	12.0	32.0	4.0	16.0	24.0	100.0(25)		7.60	

주: # p<.10, * p 〈.05

〈부표 2-95〉 한국인의 특성별 기업 부채비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평균	*F*
성별												
남성	0.0	7.0	9.3	11.7	15.4	9.3	15.0	32.2	100.0(214)	11.61	5.85	0.23
여성	1.9	7.5	10.4	9.4	9.7	14.2	17.6	29.2	100.0(318)		5.77	
연령												
20대	0.8	6.2	9.9	12.0	13.6	16.1	17.4	24.0	100.0(242)	24.67	5.69	0.74
30대	1.8	9.0	10.2	8.4	11.4	9.0	16.2	34.1	100.0(167)		5.81	
40대	1.6	7.9	11.1	7.9	6.3	12.7	20.6	31.7	100.0(63)		5.89	
50대 이상	0.0	6.7	8.3	11.7	13.3	5.0	10.0	45.0	100.0(60)		6.12	
교육수준												
대졸 이하	1.3	7.0	9.6	11.1	11.4	11.7	16.1	31.9	100.0(386)	3.49	5.83	0.14
대학원 이상	0.7	8.4	11.2	8.4	13.3	14.0	17.5	26.6	100.0(143)		5.70	
거주지역												
대도시	1.1	9.2	9.7	9.4	11.9	13.5	16.7	28.6	100.0(371)	12.31	5.72	0.96
중소도시	1.5	2.9	10.3	13.2	11.8	8.1	16.2	36.0	100.0(136)		6.00	
농어촌	0.0	4.2	12.5	8.3	12.5	16.7	16.7	29.2	100.0(24)		5.92	

〈부표 2-96〉 한국인의 특성별 기업 부채비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3.7	3.3	7.0	7.9	19.6	12.1	15.4	14.5	8.9	7.5	100.0(214)	8.82	6.13	0.55
여성	0.9	3.2	8.2	9.8	14.2	13.2	18.6	14.8	9.8	7.3	100.0(317)		6.31	
연령														
20대	1.2	3.3	6.2	9.9	16.5	13.2	15.3	16.9	9.1	8.3	100.0(242)	19.05	6.35	1.14
30대	3.0	3.0	9.6	7.8	14.4	14.4	18.0	12.0	10.2	7.8	100.0(167)		6.18	
40대	0.0	1.6	6.3	9.5	19.0	12.7	20.6	17.5	6.3	6.3	100.0(63)		6.37	
50대 이상	5.1	5.1	10.2	8.5	18.6	6.8	20.3	10.2	11.9	3.4	100.0(59)		5.78	
교육수준														
대졸 이하	2.8	2.8	8.8	8.8	16.1	11.4	16.8	15.0	8.5	8.8	100.0(386)	14.02	6.22	5.34*
대학원 이상	0.0	4.2	4.9	9.9	17.6	15.5	19.0	13.4	12.0	3.5	100.0(142)		6.27	
거주지역														
대도시	2.2	3.0	8.1	9.4	15.6	12.7	15.9	15.4	10.2	7.5	100.0(371)	23.59	6.26	0.23
중소도시	1.5	4.4	7.4	5.2	19.3	15.6	21.5	12.6	7.4	5.2	100.0(135)		6.13	
농어촌	4.2	0.0	4.2	25.0	12.5	0.0	16.7	12.5	8.3	16.7	100.0(24)		6.38	

주: * p 〈.05

〈부표 2-97〉 한국인의 특성별 투표율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평균	*F*
성별											
남성	18.1	9.8	16.3	16.7	18.1	11.6	9.3	100.0(215)	1.32	3.79	0.05
여성	17.2	10.0	18.2	17.9	16.0	10.0	10.7	100.0(319)		3.78	
연령											
20대	21.4	13.2	21.0	16.0	13.2	8.2	7.0	100.0(243)	31.68*	3.39	7.97***
30대	14.9	7.1	14.3	17.3	20.2	13.1	13.1	100.0(168)		4.13	
40대	9.5	9.5	11.1	17.5	19.0	17.5	15.9	100.0(63)		4.43	
50대 이상	18.3	5.0	18.3	23.3	20.0	6.7	8.3	100.0(60)		3.75	
교육수준											
대졸 이하	20.2	8.8	17.3	17.1	14.5	11.6	10.6	100.0(387)	13.68*	3.74	5.68*
대학원 이상	10.4	13.2	17.4	18.8	22.9	8.3	9.0	100.0(144)		3.92	
거주지역											
대도시	16.4	11.3	18.3	17.3	17.8	9.2	9.7	100.0(371)	10.28	3.75	0.20
중소도시	20.4	6.6	15.3	16.8	16.1	13.9	10.9	100.0(137)		3.87	
농어촌	20.0	8.0	16.0	24.0	4.0	16.0	12.0	100.0(25)		3.80	

주: * p 〈.05, *** p 〈.001

〈부표 2-98〉 한국인의 특성별 투표율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2.8	2.8	2.3	7.4	11.2	12.1	12.1	18.6	12.1	18.6	100.0(215)	5.62	7.02	3.52#
여성	1.3	1.3	2.2	8.8	10.3	12.2	16.0	20.1	11.9	16.0	100.0(319)		7.10	
연령														
20대	1.2	1.2	1.2	7.8	7.0	11.1	14.0	20.6	14.0	21.8	100.0(243)	32.22	7.47	5.33**
30대	2.4	1.8	3.6	7.7	15.5	9.5	14.9	19.0	9.5	16.1	100.0(168)		6.85	
40대	1.6	4.8	3.2	9.5	11.1	19.0	11.1	19.0	14.3	6.3	100.0(63)		6.51	
50대 이상	3.3	1.7	1.7	10.0	11.7	16.7	18.3	16.7	8.3	11.7	100.0(60)		6.63	
교육수준														
대졸 이하	2.1	1.3	1.8	8.0	10.6	10.3	14.0	19.9	12.4	19.6	100.0(387)	14.55	7.22	0.23
대학원 이상	1.4	3.5	3.5	9.0	11.1	16.7	16.0	18.1	11.1	9.7	100.0(144)		6.64	
거주지역														
대도시	2.2	2.2	1.6	6.2	11.1	10.8	16.2	21.6	12.1	16.2	100.0(371)	26.44#	7.13	0.79
중소도시	1.5	1.5	4.4	12.4	8.0	17.5	10.9	14.6	10.2	19.0	100.0(137)		6.88	
농어촌	0.0	0.0	0.0	16.0	16.0	4.0	8.0	16.0	20.0	20.0	100.0(25)		7.32	

주: # p<.10, ** p 〈.01

〈부표 2-99〉 한국인의 특성별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평균	*F*
성별											
남성	7.0	11.6	12.6	17.2	24.7	20.9	6.0	100.0(215)	2.87	4.28	0.93
여성	6.0	8.2	13.5	18.2	27.3	19.4	7.5	100.0(319)		4.41	
연령											
20대	7.4	9.1	16.0	15.2	25.1	19.3	7.8	100.0(243)	16.87	4.31	1.41
30대	3.6	10.1	10.1	19.6	26.2	21.4	8.9	100.0(168)		4.55	
40대	9.5	9.5	14.3	20.6	25.4	15.9	4.8	100.0(63)		4.10	
50대 이상	6.7	10.0	8.3	20.0	31.7	23.3	0.0	100.0(60)		4.30	
교육수준											
대졸 이하	6.7	11.1	13.2	16.0	27.1	19.1	6.7	100.0(387)	6.79	4.30	1.40
대학원 이상	5.6	5.6	13.2	21.5	23.6	22.9	7.6	100.0(144)		4.51	
거주지역											
대도시	8.1	10.8	13.2	17.3	24.0	19.1	7.5	100.0(371)	14.11	4.26	2.61#
중소도시	1.5	7.3	12.4	18.2	32.8	21.9	5.8	100.0(137)		4.63	
농어촌	8.0	4.0	16.0	24.0	24.0	20.0	4.0	100.0(25)		4.28	

주: # p<.10

〈부표 2-100〉 한국인의 특성별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4.2	2.3	5.1	3.7	14.9	16.7	17.7	15.8	7.0	12.6	100.0(215)	12.55	6.53	5.18*
여성	1.6	1.6	4.1	6.9	11.9	18.5	20.1	19.4	8.5	7.5	100.0(319)		6.62	
연령														
20대	2.5	1.6	3.3	5.8	13.2	14.4	19.3	18.1	10.7	11.1	100.0(243)	20.19	6.79	1.52
30대	3.0	1.8	7.1	5.4	13.1	20.8	17.3	18.5	4.8	8.3	100.0(168)		6.35	
40대	1.6	1.6	3.2	6.3	15.9	14.3	25.4	19.0	4.8	7.9	100.0(63)		6.57	
50대 이상	3.3	3.3	3.3	5.0	10.0	26.7	16.7	15.0	8.3	8.3	100.0(60)		6.45	
교육수준														
대졸 이하	3.1	1.0	3.4	5.2	13.2	17.1	17.3	19.6	8.8	11.4	100.0(387)	22.64**	6.75	0.82
대학원 이상	1.4	4.2	7.6	6.9	13.2	19.4	23.6	13.9	4.9	4.9	100.0(144)		6.12	
거주지역														
대도시	2.2	2.4	4.9	5.1	12.1	17.5	18.1	17.5	8.6	11.6	100.0(371)	19.19	6.68	2.77#
중소도시	4.4	0.7	4.4	6.6	16.1	17.5	22.6	17.5	6.6	3.6	100.0(137)		6.25	
농어촌	0.0	0.0	0.0	8.0	8.0	24.0	16.0	28.0	4.0	12.0	100.0(25)		7.08	

주: # p<.10, * p 〈.05, ** p 〈.01

〈부표 2-101〉 한국인의 특성별 세대별 정당득표집중률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평균	*F*
성별											
남성	1.4	6.0	8.4	13.5	20.0	27.4	23.3	100.0(215)	6.19	5.20	2.37
여성	1.6	2.8	7.5	16.9	20.4	31.7	19.1	100.0(319)		5.23	
연령											
20대	2.5	5.3	5.3	16.0	18.1	31.7	21.0	100.0(243)	15.26	5.21	0.68
30대	0.6	2.4	7.7	16.1	22.0	29.2	22.0	100.0(168)		5.32	
40대	1.6	3.2	14.3	15.9	22.2	23.8	19.0	100.0(63)		5.02	
50대 이상	0.0	5.0	11.7	11.7	21.7	31.7	18.3	100.0(60)		5.18	
교육수준											
대졸 이하	1.8	4.7	7.8	16.8	18.9	30.7	19.4	100.0(387)	6.27	5.16	0.76
대학원 이상	0.7	2.8	8.3	12.5	23.6	27.1	25.0	100.0(144)		5.37	
거주지역											
대도시	1.6	4.9	8.1	13.7	19.4	29.9	22.4	100.0(371)	12.17	5.24	0.22
중소도시	1.5	2.9	8.0	20.4	19.7	29.2	18.2	100.0(137)		5.15	
농어촌	0.0	0.0	4.0	16.0	36.0	36.0	8.0	100.0(25)		5.28	

〈부표 2-102〉 한국인의 특성별 세대별 정당득표집중률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5.6	4.7	5.6	7.9	20.0	13.0	20.0	13.0	7.9	2.3	100.0(215)	11.14	5.80	10.62**
여성	2.8	1.6	5.0	8.2	20.4	17.9	24.8	11.3	6.6	1.6	100.0(319)		6.01	
연령														
20대	2.1	2.9	4.1	9.5	19.8	15.6	21.8	12.8	9.1	2.5	100.0(243)	26.63	6.12	1.60
30대	6.5	3.6	6.0	8.9	19.6	13.7	20.2	12.5	7.1	1.8	100.0(168)		5.71	
40대	3.2	1.6	4.8	6.3	17.5	19.0	34.9	9.5	1.6	1.6	100.0(63)		5.98	
50대 이상	5.0	1.7	8.3	1.7	26.7	20.0	21.7	10.0	5.0	0.0	100.0(60)		5.70	
교육수준														
대졸 이하	3.4	2.8	4.1	7.2	20.7	15.5	22.0	14.2	8.3	1.8	100.0(387)	14.00	6.07	0.20
대학원 이상	5.6	2.8	7.6	10.4	18.8	17.4	25.0	6.3	4.2	2.1	100.0(144)		5.57	
거주지역														
대도시	3.2	3.5	4.9	8.9	20.5	15.4	22.4	11.9	7.0	2.4	100.0(371)	12.56	5.94	0.32
중소도시	6.6	0.7	6.6	6.6	19.0	16.1	24.8	11.7	7.3	0.7	100.0(137)		5.85	
농어촌	0.0	4.0	4.0	4.0	20.0	24.0	20.0	16.0	8.0	0.0	100.0(25)		6.20	

주: ** p 〈.01

〈부표 2-103〉 한국인의 특성별 국가기관별 신뢰지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평균	*F*
성별											
남성	7.9	18.6	17.7	23.3	14.0	14.0	4.7	100.0(215)	6.63	3.77	0.16
여성	5.6	20.7	25.1	20.1	11.3	11.6	5.6	100.0(319)		3.68	
연령											
20대	7.0	16.9	18.9	21.4	18.1	13.2	4.5	100.0(243)	20.56	3.84	1.00
30대	4.8	20.8	25.6	24.4	7.1	11.9	5.4	100.0(168)		3.65	
40대	7.9	23.8	23.8	17.5	7.9	12.7	6.3	100.0(63)		3.57	
50대 이상	8.3	25.0	23.3	16.7	8.3	11.7	6.7	100.0(60)		3.53	
교육수준											
대졸 이하	7.2	17.8	21.2	22.0	14.0	11.6	6.2	100.0(387)	10.18	3.77	0.16
대학원 이상	4.9	25.0	23.6	20.1	8.3	15.3	2.8	100.0(144)		3.59	
거주지역											
대도시	8.1	18.3	20.8	20.8	12.7	14.0	5.4	100.0(371)	10.00	3.75	0.30
중소도시	3.6	22.6	25.5	21.9	11.7	9.5	5.1	100.0(137)		3.64	
농어촌	0.0	28.0	24.0	24.0	12.0	8.0	4.0	100.0(25)		3.60	

〈부표 2-104〉 한국인의 특성별 국가기관별 신뢰지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9	2.3	2.3	3.7	9.3	13.5	17.7	16.3	20.5	13.5	100.0(215)	6.54	7.28	0.82
여성	1.3	0.6	1.6	5.3	8.5	13.2	16.0	21.6	20.1	11.9	100.0(319)		7.34	
연령														
20대	1.2	0.8	2.1	4.5	8.6	14.0	15.2	21.8	20.2	11.5	100.0(243)	25.50	7.32	0.36
30대	1.8	1.2	1.8	5.4	8.3	12.5	19.0	17.9	17.9	14.3	100.0(168)		7.27	
40대	0.0	0.0	1.6	0.0	11.1	19.0	14.3	20.6	19.0	14.3	100.0(63)		7.54	
50대 이상	0.0	5.0	1.7	8.3	8.3	6.7	18.3	13.3	28.3	10.0	100.0(60)		7.20	
교육수준														
대졸 이하	1.3	1.0	2.1	4.4	8.0	12.9	15.2	19.9	21.4	13.7	100.0(387)	8.29	7.41	0.82
대학원 이상	0.7	2.1	1.4	5.6	11.1	14.6	20.8	18.1	16.7	9.0	100.0(144)		7.05	
거주지역														
대도시	0.8	1.3	1.9	5.4	8.6	14.8	16.4	18.1	19.4	13.2	100.0(371)	22.15	7.29	0.23
중소도시	2.2	0.7	1.5	2.9	10.2	10.9	19.7	18.2	21.9	11.7	100.0(137)		7.34	
농어촌	0.0	4.0	4.0	4.0	4.0	4.0	4.0	44.0	24.0	8.0	100.0(25)		7.56	

〈부표 2-105〉 한국인의 특성별 부패인식지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평균	*F*
성별											
남성	19.5	26.5	20.5	9.8	12.1	9.3	2.3	100.0(215)	7.64	3.06	0.29
여성	21.9	30.4	18.2	9.7	8.8	10.7	0.3	100.0(319)		2.86	
연령											
20대	20.6	26.3	18.1	14.0	9.5	10.7	0.8	100.0(243)	26.40#	3.01	1.32
30대	21.4	33.9	21.4	5.4	7.7	9.5	0.6	100.0(168)		2.75	
40대	23.8	27.0	15.9	6.3	17.5	9.5	0.0	100.0(63)		2.95	
50대 이상	18.3	26.7	20.0	8.3	11.7	10.0	5.0	100.0(60)		3.18	
교육수준											
대졸 이하	20.2	28.7	19.6	10.3	10.9	8.8	1.6	100.0(387)	6.47	2.96	0.41
대학원 이상	23.6	29.2	18.1	7.6	8.3	13.2	0.0	100.0(144)		2.88	
거주지역											
대도시	21.3	27.5	18.6	11.6	10.5	9.7	0.8	100.0(371)	10.44	2.95	0.29
중소도시	21.2	31.4	19.7	6.6	8.8	10.9	1.5	100.0(137)		2.89	
농어촌	12.0	36.0	24.0	0.0	12.0	12.0	4.0	100.0(25)		3.16	

주: # p<.10

〈부표 2-106〉 한국인의 특성별 부패인식지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5	0.9	3.7	2.3	6.5	10.7	11.2	17.2	22.3	24.7	100.0(215)	8.33	7.83	0.07
여성	0.3	1.9	0.9	3.1	7.5	8.5	11.9	15.7	20.7	29.5	100.0(319)		7.97	
연령														
20대	0.4	2.1	0.4	2.5	7.4	9.1	13.2	16.5	20.2	28.4	100.0(243)	32.41	7.96	1.05
30대	0.0	1.8	4.2	2.4	4.8	8.3	10.1	13.1	24.4	31.0	100.0(168)		8.04	
40대	1.6	0.0	1.6	3.2	6.3	12.7	15.9	17.5	15.9	25.4	100.0(63)		7.75	
50대 이상	0.0	0.0	3.3	5.0	13.3	10.0	5.0	23.3	23.3	16.7	100.0(60)		7.55	
교육수준														
대졸 이하	0.3	1.3	1.6	3.1	7.2	8.0	10.9	16.3	21.2	30.2	100.0(387)	9.98	8.03	1.03
대학원 이상	0.7	2.1	3.5	2.1	6.9	12.5	13.2	16.7	22.2	20.1	100.0(144)		7.60	
거주지역														
대도시	0.3	1.3	2.4	3.2	6.5	9.2	11.9	17.0	22.4	25.9	100.0(371)	9.22	7.89	0.10
중소도시	0.7	1.5	1.5	1.5	9.5	10.2	11.7	14.6	17.5	31.4	100.0(137)		7.93	
농어촌	0.0	4.0	0.0	4.0	4.0	8.0	8.0	16.0	28.0	28.0	100.0(25)		8.08	

〈부표 2-107〉 한국인의 특성별 행정소송건수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평균	F
성별											
남성	1.4	5.1	10.2	9.8	8.8	15.8	48.8	100.0(215)	13.11*	5.62	14.65***
여성	0.6	1.3	6.3	11.0	12.9	14.1	53.9	100.0(319)		5.92	
연령											
20대	0.8	2.5	7.0	9.9	12.3	14.0	53.5	100.0(243)	11.99	5.86	1.27
30대	1.2	3.6	10.7	10.1	13.1	14.3	47.0	100.0(168)		5.61	
40대	0.0	1.6	6.3	12.7	7.9	20.6	50.8	100.0(63)		5.92	
50대 이상	1.7	3.3	5.0	11.7	5.0	13.3	60.0	100.0(60)		5.95	
교육수준											
대졸 이하	1.0	2.8	8.5	10.1	11.1	15.8	50.6	100.0(387)	2.16	5.77	0.21
대학원 이상	0.7	2.8	6.3	11.8	11.8	12.5	54.2	100.0(144)		5.85	
거주지역											
대도시	1.1	2.4	8.4	10.5	12.7	15.6	49.3	100.0(371)	9.59	5.75	1.07
중소도시	0.7	3.6	5.8	11.7	8.0	13.9	56.2	100.0(137)		5.89	
농어촌	0.0	0.0	12.0	4.0	8.0	8.0	68.0	100.0(25)		6.16	

주: * p 〈.05, *** p 〈.001

〈부표 2-108〉 한국인의 특성별 행정소송건수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6.5	4.2	7.4	13.5	19.5	14.9	15.3	10.7	3.7	4.2	100.0(215)	13.54	5.47	2.01
여성	4.1	3.8	9.7	16.9	20.4	15.4	14.7	7.2	6.9	0.9	100.0(319)		5.35	
연령														
20대	4.1	3.3	11.1	15.2	18.5	16.5	13.6	9.5	7.0	1.2	100.0(243)	32.60	5.42	1.76
30대	4.8	5.4	6.5	13.7	19.6	11.3	19.0	9.5	6.0	4.2	100.0(168)		5.61	
40대	4.8	6.3	7.9	12.7	23.8	20.6	14.3	6.3	3.2	0.0	100.0(63)		5.14	
50대 이상	10.0	0.0	6.7	25.0	23.3	15.0	10.0	5.0	1.7	3.3	100.0(60)		4.95	
교육수준														
대졸 이하	4.7	3.1	9.0	16.0	19.4	14.2	14.7	9.3	7.2	2.3	100.0(387)	11.82	5.50	1.45
대학원 이상	6.3	6.3	7.6	14.6	20.8	18.1	16.0	6.9	1.4	2.1	100.0(144)		5.13	
거주지역														
대도시	4.6	4.0	8.6	15.1	17.0	16.4	17.3	8.6	5.9	2.4	100.0(371)	20.24	5.50	1.61
중소도시	6.6	2.9	10.2	15.3	28.5	10.9	10.9	8.8	4.4	1.5	100.0(137)		5.13	
농어촌	4.0	8.0	4.0	24.0	20.0	20.0	4.0	4.0	8.0	4.0	100.0(25)		5.20	

〈부표 2-109〉 한국인의 특성별 정부신뢰도 지표의 우선순위 분포

(단위: %, 명)

지표	우선순위 분포							계(수)	χ^2	평균 우선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평균	*F*
성별											
남성	44.7	22.8	14.0	9.8	1.9	0.9	6.0	100.0(215)	10.13	2.28	4.66*
여성	47.0	26.6	11.3	6.6	4.1	1.9	2.5	100.0(319)		2.10	
연령											
20대	40.3	26.7	13.6	7.8	3.7	2.5	5.3	100.0(243)	16.48	2.37	2.38#
30대	53.6	22.6	9.5	7.1	3.0	0.6	3.6	100.0(168)		1.99	
40대	47.6	25.4	14.3	9.5	0.0	0.0	3.2	100.0(63)		2.02	
50대 이상	46.7	25.0	13.3	8.3	5.0	1.7	0.0	100.0(60)		2.05	
교육수준											
대졸 이하	42.9	26.4	12.1	8.0	3.9	1.8	4.9	100.0(387)	10.17	2.29	9.80**
대학원 이상	54.2	21.5	13.2	7.6	1.4	0.7	1.4	100.0(144)		1.88	
거주지역											
대도시	43.4	25.1	12.4	9.2	3.2	1.9	4.9	100.0(371)	11.00	2.29	3.78*
중소도시	51.1	25.5	13.1	4.4	2.9	0.7	2.2	100.0(137)		1.93	
농어촌	60.0	24.0	4.0	8.0	4.0	0.0	0.0	100.0(25)		1.72	

주: # p<.10, * p 〈.05, ** p 〈.01

〈부표 2-110〉 한국인의 특성별 정부신뢰도 지표의 영향도 분포

(단위: %, 명)

지표	영향도 분포										계(수)	χ^2	평균 영향도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F*
성별														
남성	0.0	0.9	2.8	1.9	3.7	6.0	10.2	14.0	20.0	40.5	100.0(215)	5.25	8.40	4.22*
여성	0.0	0.6	0.6	1.6	3.4	6.0	8.5	16.0	20.4	42.9	100.0(319)		8.62	
연령														
20대	0.0	0.4	2.1	2.5	3.3	8.2	9.5	13.6	19.8	40.7	100.0(243)	21.02	8.43	0.71
30대	0.0	1.8	1.2	0.6	4.2	2.4	8.9	14.9	19.6	46.4	100.0(168)		8.67	
40대	0.0	0.0	1.6	1.6	3.2	3.2	9.5	15.9	27.0	38.1	100.0(63)		8.63	
50대 이상	0.0	0.0	0.0	1.7	3.3	10.0	8.3	21.7	16.7	38.3	100.0(60)		8.48	
교육수준														
대졸 이하	0.0	0.5	1.8	2.3	3.6	5.7	9.3	13.2	21.4	42.1	100.0(387)	10.82	8.53	0.70
대학원 이상	0.0	1.4	0.7	0.0	3.5	6.9	9.0	20.8	16.7	41.0	100.0(144)		8.53	
거주지역														
대도시	0.0	1.1	1.3	2.2	3.8	6.2	10.8	15.6	18.9	40.2	100.0(371)	14.21	8.43	2.40#
중소도시	0.0	0.0	1.5	0.7	3.6	5.1	5.8	15.3	23.4	44.5	100.0(137)		8.75	
농어촌	0.0	0.0	4.0	0.0	0.0	8.0	4.0	4.0	24.0	56.0	100.0(25)		8.96	

주: # p<.10, * p 〈.05

〔부록 3〕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에 관한 조사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에 관한 조사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의 사회위기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사회위기지표개발에 대한 전문가 및 일반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의 사회위기지표를 개발하고 위기수준을 시계열적으로 측정하여 위기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사회위기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위기지표 개발과 우선순위 설정 등으로 귀중하게 활용될 것이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익명성이 보장되고, 통계자료로만 처리되오니, 모든 질문에 빠짐없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9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다음 연락처로 문의해 주십시오.

주 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번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서비스연구실

연구책임자: 김승권 선임연구위원 02)380-8212, 02) 384-8108 kimsk@kihasa.re.kr

	응답자 일반사항
성 별	☐ 남자 ☐ 여자
연 령	만 _____세
학 력	☐ 고졸 미만 ☐ 고졸 ☐ 대재 ☐ 대졸 ☐ 대학원 ☐ 대학원 이상(박사)
거주지역	☐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洞) ☐ 중소도시(9개도의 洞) ☐ 농어촌(읍·면)
연 락 처	(전화) _____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 다음은 한국의 사회위기에 영향을 주는 영역과 지표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표 1>~<표12>의 각각에 우선순위와 영향도를 기재해 주십시오.

<표 1> 한국 사회위기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영역으로 다음 제시된 영역 외에 다른 중요영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1개만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 영역이 어느 정도 중요하고 그 영향을 주는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순위 기재요령: 우선순위가 가장 높으면 `1, 우선순위가 낮을수록 번호가 높아지도록 기재해 주십시오(별도로 제시한 영역이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우선순위를 기재해 주십시오)

※ 영향도 기재요령: 사회위기에 미치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0~10에 해당하는 수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각 영역이 독립적으로 0~10까지의 영향도를 가짐)

0 1 2 3 4 5 6 7 8 9 10

영향이 작음 ←←←← →→→→ 영향이 큼

※ 주의 사항: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은 우선순위가 낮은 영역보다 영향도가 같거나 높아야 함

영향을 미치는 영역	우선순위	영향도 (0~10)
① **고용** (예시: 실업률, 청년실업률, 근로빈곤자수, 비정규직 비율)		
② **교육** (예시: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학원폭력률, 조기유학자수)		
③ **주거** (예시: 주거비 지출률, 자가 보유율, 전세비 증감률)		
④ **인구·가족** (예시: 총부양비, 고령화지수, 수도권 인구 집중도, 출산율)		
⑤ **복지** (예시: 노후대비율, 연금수혜비율, 요보호아동수, 장애인 출현율)		
⑥ **건강·안전** (예시: 평균수명,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부정식품 적발률, 법정 전염병 발생 현황, 교통사고사망률, 강력범죄율)		
⑦ **사회갈등·문화** (예시: 노사분규 발생건수, 파업 손실일수, 불법체류자수, 우리나라 갈등 비용, 마약 및 밀수사범수, 도박사범수)		
⑧ **불평등** (예시: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남녀 임금격차, 소득불평등, 중산층 귀속의식지수, 평균소득 75~150% 비율, 지역간 소득격차,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 영호남 지역격차 계수)		
⑨ **경제일반** (예시: 원유가, 소비자물가지수, 신용불량자율, 경제성장률, 환율, 외채비율, 가계 부채비율, 기업 부채비율)		
⑩ **정치 일반** (예시: 투표율, 지역별정당득표집중률, 세대별정당득표집중률, 국가기관별 신뢰지수, 부패인식지수, 행정소송건수, 정부 신뢰도)		
⑪ **기타 1** (**무엇**(구체적으로 기재): 영역명:_____ 예시: _____		

<표 2> **고용영역의 위기지표로 다음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중요 위기지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2개만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 지표가 어느 정도 중요하고 그 영향을 주는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순위 기재요령: 우선순위가 가장 높으면 `1, 우선순위가 낮을수록 번호가 높아지도록 기재해 주십시오(별도로 제시한 지표가 있다면 이를 포함하여 우선순위를 기재해 주십시오)

※ 영향도 기재요령: 사회위기에 미치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0~10에 해당하는 수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각 지표는 독립적으로 0~10까지의 영향도를 가짐)

0 1 2 3 4 5 6 7 8 9 10

영향이 작음 ←←←← →→→→ **영향이 큼**

※ 주의 사항: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은 우선순위가 낮은 영역보다 영향도가 같거나 높아야 함

영 역	사회위기에 미치는 지표	우선순위		영향도 (0~10)
① 고용(일자리)	①-1. 실업률			
	①-2. 청년실업률			
	①-3. 근로빈곤자(working poor) 수			
	①-4. 비정규직 비율			
	①-5. **기타 1 (무엇**(구체적으로 기재): _____)			
	①-6. **기타 2 (무엇**(구체적으로 기재): _____)			

<표 3> **교육영역의 위기지표로 다음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중요 위기지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2개만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 지표가 어느 정도 중요하고 그 영향을 주는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순위 및 영향도 기재요령: <표 2>와 동일

영 역	사회위기에 미치는 지표	우선순위		영향도 (0~10)
② 교육	②-1. 자녀 사교육비 지출률			
	②-2. 중·고등학교 중퇴 비율			
	②-3. 중·고등 학원폭력률(비행비율)			
	②-4. 조기유학자수			
	②-5. **기타 1 (무엇**(구체적으로 기재): _____)			
	②-6. **기타 2 (무엇**(구체적으로 기재): _____)			

<표 4> 주거영역의 위기지표로 다음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중요 위기지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2개만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 지표가 어느 정도 중요하고 그 영향을 주는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순위 기재요령: <표 2>와 동일

영 역	사회위기에 미치는 지표	우선순위		영향도 (0~10)
③ 주거	③-1. 주거비 지출률			
	③-2. 자가 보유율			
	③-3. 전세비 증감률			
	③-4. 기타 1 (무엇(구체적으로 기재): _____)			
	③-5. 기타 2 (무엇(구체적으로 기재): _____)			

<표 5> 인구·가족영역의 위기지표로 다음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중요 위기지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2개만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 지표가 어느 정도 중요하고 그 영향을 주는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순위 및 영향도 기재요령: <표 2>와 동일

영 역	사회위기에 미치는 지표	우선순위		영향도 (0~10)
④ 인구·가족	④-1. 총부양비			
	④-2. 고령화지수			
	④-3. 수도권 인구집중도			
	④-4. 출산율			
	④-5. 기타 1 (무엇(구체적으로 기재): _____)			
	④-6. 기타 2 (무엇(구체적으로 기재): _____)			

<표 6> 복지영역의 위기지표로 다음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중요 위기지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2개만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 지표가 어느 정도 중요하고 그 영향을 주는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순위 및 영향도 기재요령: <표 2>와 동일

영 역	사회위기에 미치는 지표	우선순위		영향도 (0~10)
⑤ 복지	⑤-1. 노후대비율			
	⑤-2. 연금수혜 비율			
	⑤-3. 요보호아동수			
	⑤-4. 장애인 출현율			
	⑤-5. 기타 1 (무엇(구체적으로 기재): _____)			
	⑤-6. 기타 2 (무엇(구체적으로 기재): _____)			

<표 7> 건강·안전영역의 위기지표로 다음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중요 위기지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2개만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 지표가 어느 정도 중요하고 그 영향을 주는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순위 및 영향도 기재요령: <표 2>와 동일

영 역	사회위기에 미치는 지표	우선순위		영향도 (0~10)
⑥ 건강·안전	⑥-1. 평균수명			
	⑥-2. 자살률			
	⑥-3. 청소년 자살률			
	⑥-4. 부정식품 적발률			
	⑥-5.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⑥-6. 교통사고사망률			
	⑥-7. 강력범죄율			
	⑥-8. 기타 1 (무엇(구체적으로 기재): _____)			
	⑥-9. 기타 2 (무엇(구체적으로 기재): _____)			

<표 8> 사회갈등·문화영역의 위기지표로 다음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중요 위기지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2개만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 지표가 어느 정도 중요하고 그 영향을 주는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순위 기재요령: <표 2>와 동일

영 역	사회위기에 미치는 지표	우선순위		영향도 (0~10)
⑦ 사회갈등·문화	⑦-1. 노사분규 발생건수			
	⑦-2. 파업으로 인한 손실일수			
	⑦-3. 불법체류자수			
	⑦-4. 우리나라 갈등비용			
	⑦-5. 마약 및 밀수사범수			
	⑦-6. 도박사범수			
	⑦-7. 기타 1 (무엇(구체적으로 기재): _____)			
	⑦-8. 기타 2 (무엇(구체적으로 기재): _____)			

<표 9> 불평등 영역의 위기지표로 다음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중요 위기지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2개만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 지표가 어느 정도 중요하고 그 영향을 주는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순위 기재요령: <표 2>와 동일

영 역	사회위기에 미치는 지표	우선순위		영향도 (0~10)
⑧ 불평등	⑧-1.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⑧-2. 남녀 임금격차			
	⑧-3. 소득불평등			
	⑧-4. 중산층 귀속의식 지수			
	⑧-5. 평균소득 75~150% 비율			
	⑧-6. 지역간 소득격차			
	⑧-7. 시·도별 재정자립도 격차			
	⑧-8. 영호남 지역격차 계수			
	⑧-9. 기타 1 (무엇(구체적으로 기재): _____)			
	⑧-10. 기타 2 (무엇(구체적으로 기재): _____)			

<표 10> 경제일반 영역의 위기지표로 다음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중요 위기지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2개만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 지표가 어느 정도 중요하고 그 영향을 주는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순위 기재요령: <표 2>와 동일

영 역	사회위기에 미치는 지표	우선순위		영향도 (0~10)
⑨ 경제일반	⑨-1. 원유가			
	⑨-2. 소비자물가지수			
	⑨-3. 신용불량자율			
	⑨-4. 경제성장률			
	⑨-5. 환율			
	⑨-6. 외채비율			
	⑨-7. 가계 부채비율			
	⑨-8. 기업 부채비율			
	⑨-9. 기타 1 (무엇(구체적으로 기재): _____)			
	⑨-10. 기타 2 (무엇(구체적으로 기재): _____)			

<표 11> 정치일반 영역의 위기지표로 다음 제시된 것 외에 다른 중요 위기지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다면 2개만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 지표가 어느 정도 중요하고 그 영향을 주는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순위 기재요령: <표 2>와 동일

영 역	사회위기에 미치는 지표	우선순위		영향도 (0~10)
⑩ 정치일반	⑩-1. 투표율			
	⑩-2.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⑩-3. 세대별 정당득표집중률			
	⑩-4. 국가기관별 신뢰지수			
	⑩-5. 부패인식지수			
	⑩-6. 행정소송건수			
	⑩-7. 정부신뢰도			
	⑩-8. 기타 1 (무엇(구체적으로 기재): _____)			
	⑩-9. 기타 2 (무엇(구체적으로 기재): _____)			

<표 12> 선생님께서 제시하신 영역이 있다면, 영역명을 기재하시고, 1~2개의 위기지표를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 지표가 어느 정도 중요하고 그 영향을 주는 수준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우선순위 기재요령: <표 2>와 동일

영 역	사회위기에 미치는 지표	우선순위		영향도 (0~10)
⑪ _____영역	⑪-1. 기타 1 (무엇(구체적으로 기재): _____)			
	⑪-2. 기타 2 (무엇(구체적으로 기재): _____)			

※ 제시한 지표가 2개보다 많으면 추가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 위에 제시된 한국 사회위기 영역과 지표에 대하여 주실 의견이 있으면 아래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영역의 통합 또는 삭제, 지표의 통합 또는 삭제, 기타 다양한 의견 등)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조사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재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234)

도서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신간 안내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9-01	의료서비스 질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 시스템 구축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9-02	고가의료장비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오영호	8,000
연구 2009-03	신의료기술의 패턴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제도의 발전방향 -의약품 허가제도와 약가제도를 중심으로-	박실비아	6,000
연구 2009-04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국민의료비 분석(1)	정영호	6,000
연구 2009-05	미충족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허순임	5,000
연구 2009-06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취약점 중점 관리방안 구축	정기혜	7,000
연구 2009-07	부문간 협력을 통한 비만의 예방관리체계의 구축 방안 -비만의 역학적 특성 분석과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부문간 협력체계의 탐색	김혜련	8,000
연구 2009-08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최은진	7,000
연구 2009-0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윤석명	미정
연구 2009-10	글로벌 금융위기상황하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	원종욱	8,000
연구 2009-11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 중심으로	신현웅	6,000
연구 2009-12	A study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health security system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홍석표	5,000
연구 2009-13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노대명	7,000
연구 2009-14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	여유진	8,000
연구 2009-15	저소득층 금융지원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김태완	6,000
연구 2009-16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	김승권	13,000
연구 2009-17	아동·청소년 복지수요에 근거한 복지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II: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연구 2009-1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경제위기 이후 가족생애주기별 위기유형을 중심으로	김유경	7,000
연구 2009-1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연계 동향 및 정책과제	윤상용	8,000
연구 2009-20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자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박세경	미정
연구 2009-21	사회복지부문별 정보화현황 및 정책적용방안	정영철	미정
연구 2009-22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일상생활기능의 자립향상을 중심으로	선우덕	7,000
연구 2009-23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 평가	정경희	6,000
연구 2009-24	보건복지가족부 웹사이트 통합·연계 및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09-25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09	장영식	9,000
연구 2009-26-1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이태진	10,000
연구 2009-26-2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9-26-3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노대명	미정
연구 2009-26-4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5	저소득층의 자산 실태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6	2009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9-27-1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홍석표	6,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9-28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정영호	미정
연구 2009-29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9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오영호	6,000
연구 2009-30-1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권 (총괄)	강은정	10,000
연구 2009-30-2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권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강은정	11,000
연구 2009-31-1	2009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9,000
연구 2009-3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7,000
연구 2009-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3차년도): 중앙재정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9-31-4	보육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최성은	미정
연구 2009-31-5	자활사업의 평가 연구: 정책설계와 정책효과 그리고 쟁점들	고경환	7,000
연구 2009-32-1	200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손창균	14,000
연구 2009-32-2	200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여유진	6,000
연구 2009-33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미정
연구 2009-34-1	다문화가족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삼식	5,000
연구 2009-34-2	육아지원 인프라의 양적·질적 수급 적정화 방안	신윤정	미정
연구 2009-34-3	장기요양등급외자 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오영희	6,000
연구 2009-34-4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이소정	미정
연구 2009-34-5	고령친화용품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수봉	미정
연구 2009-35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연희	6,000
연구 2009-36	2009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영철	7,000
연구 2008-01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과 정책과제	강은정	6,000
연구 2008-0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서미경	9,000
연구 2008-03	공공보건조직의 효율성 분석 및 운영 합리화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8-04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양 관련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모유수유 및 아동·청소년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김혜련	7,000
연구 2008-05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상영	6,000
연구 2008-06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강신욱	7,000
연구 2008-07	건강보험 지불제도와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의료공급자의 유인수요와의 연관성 파악	허순임	7,000
연구 2008-08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윤석명	7,000
연구 2008-09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	원종욱	7,000
연구 2008-10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안나	9,000
연구 2008-11	사회재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2008-12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노대명	6,000
연구 2008-13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김승권	10,000
연구 2008-14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김유경	15,000
연구 2008-15	아동·청소년복지 수요 추계 연구 Ⅰ	김미숙	8,000
연구 2008-16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박세경	6,000
연구 2008-17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이소정	8,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8-18-1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조건부 수급자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2008-1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법, 조직, 정보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8-18-3	2008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8-18-4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 Ⅱ	신영석	6,000
연구 2008-18-5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도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신현웅	5,000
연구 2008-18-6	서구 근로빈곤문제의 현황과 쟁점	노대명	6,000
연구 2008-19-1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기준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원종욱	6,000
연구 2008-19-2	한국의 복지 GNP	홍석표	5,000
연구 2008-20-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오영희	10,000
연구 2008-20-2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오영희	9,000
연구 2008-20-3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삼식	7,000
연구 2008-20-4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방안	신윤정	6,000
연구 2008-20-5	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선우덕	9,000
연구 2008-20-6	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기능 자립을 위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모형 개발	선우덕	5,000
연구 2008-20-7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산 활용방안	김수봉	미정
연구 2008-2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과 과제	정경희	6,000
연구 2008-21-1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5,000
연구 2008-21-2	2007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9,000
연구 2008-22-1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정영호	9,000
연구 2008-22-2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정영호	8,000
연구 2008-23-1-1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1-2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평가: 상담서비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8-23-2	사회재정평가지침-사례와 분류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3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남상호	5,000
연구 2008-23-4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최성은	6,000
연구 2008-23-5	복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가족부문 투자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6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2차년도)	고경환	5,000
연구 2008-23-7	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7,000
연구 2008-24-1	국립소록도병원의 만성병 관리체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5,000
연구 2008-24-2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7,000
연구 2008-24-3	KTX의 건강영향평가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김진현	6,000
연구 2008-24-4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6,000
연구 2008-25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1년차)	오영호	5,000
연구 2008-2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8,000
연구 2008-27-1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김승권	8,000
연구 2008-27-2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7-3	능동적 복지개념에 부합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신영석	6,000
연구 2008-27-4	능동적 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안	김승권	7,000
연구 2008-27-5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최은진	6,000